

# 남북대화 제11호

(1976. 3 ~ 1976. 11)

# < 목 차 >

제1부 평화와 통일에의 대도 .....	3
박대통령의 광복 31주년 경축사 .....	3
박외무의 6·23 평화통일외교선언 3주년 성명 .....	9
제2부 남북대화 소식 .....	12
1. 1976년의 남북대화 .....	12
<남북조절위원회> .....	14
가. 서울측, 남북한 고미술품 교환 또는 공동전시 제의 .....	14
나.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7·4 공동성명 4주년 성명 .....	15
<남북적십자회담> .....	17
가. 북적, 한적의 수석대표 면담제의 거부 .....	17
나.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의 경과 .....	19
제3부 그밖의 남북관계 소식 .....	26
북한판 도끼외교의 좌초 : .....	26
8.18 판문점의 살인만행 .....	26
계속되는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모국성묘 방문 .....	36
제4부 자 료 .....	39
<남북대화 주요일지 (1975~1976)> .....	39
<북한의 주요 정전협정 위반사건 일지> .....	45

## 제1부 평화와 통일에의 대도

### 박대통령의 광복 31주년 경축사

“한반도 문제해결은 당사자합의가 요청, 대화재개하고 조절위기능 정상화하자”

박대통령, 모든 나라에 북한설득 촉구

<다음은 1976년 8월 15일 광복절 제31주년을 맞이하여 발표된 박정희 대통령의 경축사전문이다.>

- 편집자

친애하는 남북의 5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 뜻깊은 광복 제31주년을 맞이하여 나는 동포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이날을 경축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온 겨레의 염원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북한공산집단에 대하여 허황되고 시대착오적인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깨끗이 버리고 하루빨리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상호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우리와 함께 기울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포 여러분!

돌이켜보면, 국토분단의 비극과 남북대결의 시련은 애당초 우리가 원해서 비롯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번영된 민주국가를 중흥시킬 책임과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오직 우리의 슬기와 자주적인 역량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우기 오늘의 세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각기 민족의 생존권과 국가이익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같은 생존경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복의 그 날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이 서로 총칼을 맞대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처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1년이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8·15광복 당시 태어난 해방동이는 어느덧 30대의 건장한 성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동안 국제정세도 크게 바뀌었고, 조국강산의 모습도 많이 변했으며 시대의 변천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양식도 달라졌습니다.

그 중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북한공산주의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낡은 교조주의와 이단적 광신에 사로 잡혀 북한동포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대해 해아릴 수 없는 온갖 만행과 침략도발을 자행해 왔고 지금도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일념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과 성의를 다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1970년 「8·15선언」을 통해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평화적인 남북경쟁을 촉구한 이래, 1971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고, 이듬해인 1972년에는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을 주도하여 처음으로 남북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 1973년에는 6·23평화통일외교정책을 중외에 선언함으로써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는가 하면, 1974년에는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했고, 이어서 불가침, 상호교류, 자유충선거 등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근래 우리가 우방과 더불어 거듭 제의한 바 있는 휴전직접당사자회의도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남북이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자면 대화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우리 동포끼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집단은 엉뚱하게도 소위 「남북연방제」니, 「대민족회의」니, 또는 「대미평화협정」 등 전혀 실현 불가능한 계약적 주장을 되풀이하여 대남적화진략을 위한 허위선전만을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의 첫걸음이 되는 남북대화마저도 일방적으로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대한 중상비방과 대남공작을 일층강화하고 남침지하땅굴을 파내려 왔는가 하면, 최근에도 우리의 군사시설과 방비태세를 정탐하기 위해 휴전선 이남으로 무장공비까지도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비무장지대내에서 우리측 초소에 대해 갑자기 집중사격을 가해 오는 도발적인 만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제의한 공동조사조차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금도 북한공산집단이 한반도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전쟁준비에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동포들은 그들의 어떤 책략이나 허위선전에도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북한동포들의 강렬한 욕구를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체제도 민족과 국가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 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중국에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배격받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지난 31년동안 남과 북은 서로 상반되는 이념과 이질적인 체제, 즉 남한에서는 민주개방체제를, 그리고 북한은 공산독재체제를 각기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과연 어느 체제가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고 민족의 전통을 지키며 항구적인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우월한 체제인가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났다고 나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간의 이념이나 체제경쟁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북한의 실정을 비교할 때 결판이 난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15 광복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전 근대적인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극히 빈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북한공산집단의 6·25 남침으로 그나마도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개방체제의 바탕 위에서 국민각자가 창의를 발휘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어제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오늘과 같은 번영의 터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1960년대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의 자립기반은 굳게 다져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는 그 동안 축적된 국력의 바탕 위에서 국민보건의료시책을 확대하고, 산간벽지와 낙도에 이르기까지 전화사업을 완결하는 등 도시와 농촌의 구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번영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증산·수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담담한 자립기반 위에서 국민소득 1,300불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들이 100년 이상 걸려 이룩한 근대사회를 우리는 20년 내지 30년으로 단축시켜서 건설할 수 있다는 부푼 기대와 밝은 전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이 보람찬 성과는, 오로지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살아야 하겠다는, 또 잘 살 수 있다는 범국민적인 자각과 의지의 소산이며,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 피와 땀의 결정이라고 믿고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참여하고 스스로 협조하고 분발하여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이 참다운 민주주의의 강점이고, 자유사회의 우월성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실정은 어떠한가 한 번 살펴 봅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동포들에게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거나, 마음대로 이사를 다닐 수 있는 자유조차 없으며, 종교는 물론 생각하는 자유조차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전통적인 가족제도마저 파괴함으로써 남북간의 민족적 이질화를 심화하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북한사회 그 어느 곳에서 유구한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제의한 성묘단의 상호방문을 통해서 생전에 단 한번만이라도 조상의 묘를 찾아보고 싶어하는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소망까지도 일축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몇 10년만에 처음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 재일동포들의 감격과 기쁨의 눈물 속에서 가족과 친지에 대한 인간의 정과 사랑이 그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으며, 인간성을 말살하는 북한공산집단의 비인도적인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온갖 허위선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경제가 파산지경에서 허덕이고, 따라서 외채상환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도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북한공산집단이 북한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외면하고 모든 경제력을 군비확장과 대남공작에 소비했다는 또 하나의 뚜렷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도 우리와의 평화공존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남침전쟁노선을 추구한다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파국을 자초하여 북한공산체제는 멀지 않은 장래에 결국 와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공산집단은 날로 크게 뻗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으로 보나 막강한 자주국방력과 철통같은 총력안보태세로 보나 그들이 꿈꾸는 전쟁모험주의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의 어떠한 문제도 직접 당사자간의 양해나 합의없이 해결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고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나는 일찌기 외국의 식민통치하에서 우리와 같은 경험을 가졌고, 오늘날에는 우리와 함께 평화공존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자력갱생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한반도문제를 남북당사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측에 대해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종용하고,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2, 3년 동안 북한공산집단의 격화된 침략도발과 세계적인 경제불황 등 내외로부터 밀어닥친 도전과 시련을 감연히 극복하면서 오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을 향한 이 보람찬 대행진을 잠시도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4, 5년이 우리가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터전을 굳게 다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내다 봅니다.

북한공산집단은 그들 내부의 심각한 권력투쟁과 경제위기를 일시적이거나 모면해보려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려 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또다시 남침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마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도전과 시련이 닥쳐 오더라도 우리가 지금처럼 굳게 뭉쳐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대처해 나간다면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전세계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국가발전과 인류의 행복증진에 기여할 견실한 가치관의 재정립, 그리고 근면 성실한 근로정신과 책임 협동에 바탕한 사회기강의 재건 등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전통을 오늘의 시대에 되살리는 새마을 운동과 깨끗하고 능률적인 국가운영이야말로 우리가 세계 속의 한국으로 응비할 수 있는 참다운 정신혁명운동이요, 국력배양을 촉진하는 활력소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유신의 참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찌기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한 원동력이 화랑정신에 있었다면, 우리가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추진력은 바로 새마을정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과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그 동안 함께 흘린 땀의 성과에 긍지를 갖고 밝은 내일을 내다보며, 유구한 민족사적 정통성의 바탕위에 찬연한 민족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계속 전진해 나아갑시다.



박외무의 6·23 평화통일외교선언 3주년 성명

“남북한은 이념·체제가 다른 이질사회, 통일은 대화로 상호신뢰를 회복해야”  
박외무, 대화재개 위한 제3국기여 촉구

<다음은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3주년을 맞이하여 1976년 6월 23일 박동진외무장관이 발표한 성명전문이다.> - 편집자

3년전 오늘 대한민국정부는 박정희대통령의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가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국의 통일문제와 국제관계에 관하여 새로운 정책을 선포한바 있다.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에서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이 5천만 한민족의 최고의 염원임을 강조하고 7·4 남북공동성명에 입각한 남북한간 대화를 성의와 인내로써 계속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이념과 체도를 초월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선린 우호관계 발전을 표명하여 모든 국가와의 문호개방정책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또한 한국의 평화통일은 남북한간에 우선 평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긴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호간 내정간섭이나 침략을 금해야 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통일 달성시까지의 잠정조치로 남북한이 다같이 「유엔」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조치까지도 수락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동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에서 7개항으로 요약된 새로운 외교정책은 오랫동안, 조금도 개선되지 못한 남북한관계와 한국에 관한 국제정세에 비추어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정책이며 이러한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은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일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부터 5년전 우리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성취를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남북대화에 착수한 이래 대한민국은 남북대화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하여 성심껏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북한은 7·4 공동성명정신을 외면한 채 1973년 8월에는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재연시켰다.

그 결과 남북한에 가로 놓인 중요문제는 해결전망이 흐려지고 한국통일문제를 토의하는 「유엔」 총회에서도 비생산적인 토의만이 거듭되었다.

본인은 특히 제30차 「유엔」 총회가 제2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된 「합의성명」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2개의 상호모순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 사실을 유감스럽게 상기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인은 향후 한반도문제에 관한 어떠한 국제적 논의에 있어서도 먼저 다음과 같은 한반도의 객관적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한 후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문제를 공정하게 논의하지 않는 한 분단된 조국에 현존하는 어떠한 문제의 해결에도 하등의 실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첫째 한반도에는 전쟁재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6·25 남침으로 무력통일을 기도하였다가 실패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여전히 군비증강에 열중하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화통일을 실현하려는 망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세에도 불구하고 1953년 종전이래 20년 이상 불안정하나마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왔으며 전쟁재발을 억제하여온 것은 1953년 7월 27일에 합의된 한국휴전 협정이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이며 이 휴전협정은 1954년 12월 11일에 채택된 제9차 「유엔」 총회 결의 811호로서도 대안에 합의없이 변경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과 그 동조자들이 아무런 대안에 사전합의함이 없이 현존휴전체제를 변경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한간의 전쟁재발의 억제장치를 대안도 없이 폐기하자는 주장이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구나 전후 한국문제에는 세계의 강대국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해 온 사실까지 참작할 때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작년 「유엔」 총회에서 휴전당사자회담을 제의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입각했던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과 북한은 불행히도 30년 이상의 한반도분단으로 인하여 일시에 하나로 융합될 수 없는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가지게 된 두 개의 이질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면서도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분단된 한반도에서 그간 북한에 수립된 공산정권은 모든 개인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하에 통제하고 사회 전체를 병영화하였으며 북한은 외부와의 교류를 극단으로 제한하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폐쇄적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1948년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에 의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5천만 전체 한민족의 3분의 2 이상을 포용하고 있는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이념과 개방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대조적인 여건하에서는 평화적 통일은 대화를 통하여 단계적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간 문호를 개방하여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회복시키는 가운데 점진적인 방법으로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혼란을 조성하거나 잘못하면 제2의 한국전을 유발할 우려까지 있는 급진적 해결을 피하면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7·4 공동성명정신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셋째, 한국통일문제는 과거 「유엔」을 중심으로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20년 이상 경주되었으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의 합의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남북한간의 관계나 주변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인 해결을 강요하는 방법은 남북

한간에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무력충돌의 위협마저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그 어느 일방이 수락할 수 없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결의는 결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이를 저해 할 것이며 나아가서 민족자결의 대원칙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통일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반도문제를 한민족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남북대화의 무조건 재개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그것만이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대화없이 는 문제의 검토도, 합의도, 해결도 발전될 수 없다.

본인은 이상에서 지적된 3가지의 한반도의 객관적 정세가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문제에 관한 필수적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엔」 총회이거나 비동맹회의이거나 어떠한 국제회의를 막론하고 한국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상의 세 가지 기본정세를 감안하여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의와 합의를 촉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어떠한 토의나 결의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장애가 되며 5천만 한민족의 염원을 저버리게 될 것임을 명백히 해 두는 바이다.

## 제2부 남북대화 소식

### 1. 1976년의 남북대화

#### <개 황>

1974년과 1975년에 이어 1976년에도 북한은 남북대화의 재개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그 결과 남북대화는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975년 봄 인지전의 종결과 때를 같이하여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마저 중단시킨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금년에도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어떠한 형태로도 정상화시키는 데 반대하고 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금년에도 실무회의가 2~3개월 간격으로 계속되어 도합 다섯차례 판문점에서 열렸고 또 제20차 실무회의가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북적)측은 본회담의 재개는 물론 본회담의 제의 예비토의마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금년에도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및 평화통일여건의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남북대화를 하루 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1월15일)과 「독매」(1월 26일), 「산경」(5월 30일)등 유력외지와 회견에 이어 8월 15일 광복절 제31주년 경축사(전문본책자 제1부 참조)를 통해 {한반도의 어떠한 문제도 직접 당사자간의 양해나 합의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고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하루 속히 정상화시키라}고 촉구하는 한편 {일찍이 외국의 식민통치하에서 우리와 같은 경험을 가졌고 오늘날에는 우리와 함께 평화공존의 이념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력갱생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북한을 설득하여 남북대화의 재개를 촉구하고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협조하라}고 요망했다.

남북조절위원회의 장기영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는 4월 18일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남북한 고미술품 및 고고학 학술자료 교환 또는 공동전시회」 개최를 제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북한측에 보냈으며 7월 3일에는 남북공동성명발표 4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북한측에게 {남북간의 모든 문제는 먼저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동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제기하고 토의하여 합의를 모색하자}고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측은 {언제 어디서나 정상화된 대화석상에서 남북간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이범석 한적회담 수석대표가 인도주재대사로 전임함에 따라 그 후임수석대표로 지연태씨가 3월 9일 부임한 것을 계기로 3월 31일 북적측에게 남북적 쌍방의 회담수석대표가 서울·평양·판문점 또는 기타 장소 가운데 북적이 동의하는 어느 곳에서나 면담을 갖고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의 타개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한적측은 또 그동안 속개된 네차례의 실무회의때마다 ① 서울에서 열릴 차례인 제8차 본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하며 ② 본회담의제 제1항({이산가족·친척의 주소와 생사의 확인 및 통보})의 시범사업으로 우선 ㉠ 이산 노부모들과 가족간의 주소·생사의 확인·통보와 면회 및 상호방문을 실현하

는 문제와 ㉔ 남북의 이상가족 상호간에 신정·구정·한식·추석 성묘방문의 교환을 허용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이같은 거듭되는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북한측은 우이독경식의 거부일변도의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측은 여전히 남북대화 재개의 선행조건으로 ① 대한민국이 반공정책을 버리고 그대신 용공(이른바 「연공」 정책을 채택하던가 아니면 ② 대한민국의 반공정부가 폭력에 의해 타도되고 그대신 용공정권(이른바 「인민정권」이 들어설 것을 요구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재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남북조절위원회를 무조건 재개하자는 대한민국의 거듭된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7.4 남북공동성명에 의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구성·발족된 동위원회는 {당국간에 국한된 기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면서 한반도의 정치현실을 도외시한 비현실적 발상인 이른바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고집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의 체결과 현존정전협정의 보완 또는 이를 보다 항구적인 조치로 대체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계당사국회의를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은 전체 한반도인구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참여를 배제하는 이른바 「미·북한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고 정전협정을 폐기시키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본회담을 하루속히 재개하고 의제항목에 대한 실질토의를 즉각 개시하자는 한적측의 주장에 대해 북적측은 엉뚱하게도 ① 대한민국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의 철회 ② 대한민국의 반공정책포기 ③ 주한미군의 철수가 적십자회담 정상화의 「선행조건」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은 3월 28일 일본의 월간시사지 「세계」의 편집장 安江良介와의 회견(전문 5월 14일 평양방송보도, 7월호 「세계」지 참조)에서 {「남조선」의 현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도 갖지 말고 철저히 고립시켜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남조선」에 「민주주의정권」이 서도록 해야 한다}고 방언함으로써 북한은 여전히 폭력과 무력에 의한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하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김일성은 {「남조선」의 현집권자들은 철저히 미중앙정보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3척 동자가 들어도 고지 들을 수 없는 망발을 하는가 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우리(북한)와 미국간의 문제이지 다른 어떤 사람과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변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통일문제에 대한 그의 「관」이 여전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도착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북한은 뿐만 아니라 8월 31일 동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군사분계선이북의 수역으로 표류한 대한민국의 어선 「신진」호를 포격·나포한 직후부터 서울·평양을 연결하는 남북직통전화의

운용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북한적십자회에 대해 인도적인 견지에서 동어선과 어부의 조속한 송환에 협력할 것을 요청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전화통지문」이 KBS 방송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사태를 야기시켰으며 남북직통전화의 정상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한적측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무런 이유의 제시도 없이 이를 회복시키지 않고 있다.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남북조절위원회>

##### 가. 서울측, 남북한 고미술품 교환 또는 공동전시 제의

<대한민국정부는 1976년 2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본의 경도, 복강, 동경 등지에서 「한국미술 5천년전」을 개최했다. 5천년의 역사를 관류한 한민족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술적 창조성이 담긴 이들 고미술품의 해외 나들이는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이르켜 전시회는 곳곳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한국미술 5천년전」에 즈음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장기영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는 4월 12일 김영주 평양측 공동위원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고 남북에 흩어진 고미술품의 교환 또는 공동전시회 개최를 제의했다. 다음은 동전화통지문 전문이다.> - 편집자

{귀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훌륭한 조상들은 5천년의 유구한 민족역사를 통하여 자랑스런 민족문화유산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들 문화유산들은 서울을 비롯한 경주, 김해, 공주, 부여 등 옛 도읍지 여러 곳에서 계속 출토되고 발굴되어 민족문화에 대한 우리의 긍지를 나날이 새롭게 해주고 있으며 박물관을 찾아 이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찬란했던 우리 옛 문화에 모두 찬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은 또한 해외 여러 나라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중 일부를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전시된 바 있거니와 이번에 또다시 「한국미술 5천년전」이 일본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도 계속 전시요청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인 것은 국토분단으로 말미암아 한 조상이 물려준 우리의 문화유산을 다같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북이 각각 따로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함께 볼 수 있게 한다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해외에 빛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전래의 민족정신에 근거한 통일바탕을 마련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 기회에 우리 민족의 긍지를 후대에 심어주고 그 슬기를 해외에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주선에 의하여 「남북 고미술품 및 고고학 자료」의 「교환전시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아울러 「공동전시회」도 쌍방이 합의하는 해외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주선하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입니다.

만약 귀측이 이 제의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중단되어 있는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열어 동 전시회 개최를 위한 원칙문제를 토의, 합의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쌍방의 전문실무자들에게 위임하여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긍정적 해답을 기대합니다.}

[평양측은 이상의 서울측 제의에 대해 회답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평양측은 4월 18일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대변인 명의의 장문의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측의 동 제의가 (마치도 대화에 성의라도 있는 듯이 가장함으로써 대화파탄의 책임을 모면하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내외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보려는 어리석은 기만극이며 가소로운 선전술책}이라고 악랄하게 이를 비난함으로써 이를 거부했다.]

나.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7·4 공동성명 4주년 성명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발표된 남북공동성명 4주년을 맞이함에 즈음하여 남북조절위원회 장기영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는 7월 3일 북한측이 남북공동성명 본래의 정신과 취지로 되돌아가 그들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놓고 있는 남북대화를 즉각 무조건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동성명의 전문이다> - 편집자

{오늘은 7·4남북공동성명발표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공동성명이 동시발표된 4년전의 오늘, 1972년 7월 4일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희구하는 남북의 5천만 민족과 전세계평화애호국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안겨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오늘, 당시의 희망과 기대는 실망으로 대치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남북공동성명발표 이전의 상태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사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동 성명에도 명백히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불신과 오해를 제거하며 상호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복원하고 나아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쌍방은 남북간의 제반문제를 개선해결하며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직접 당사쌍방인 남북간의 책임있는 대화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남북공동성명에서 이와같이 합의 발표한 책임있는 대화주무기구로서 1972년 11월에 역사적인 발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이 바야흐로 본궤도에 오르려 하자 1973년 8월 28일 돌연일방적으로 이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북한측의 이러한 처사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배신일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자주성, 평화적 해결을 기피하는 행위이며 7·4남북공동성명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북한측의 이러한 대화파괴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성실로써 민족적 양심에 입각한 북한측의 반성과 대화재개를 꾸준히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평양사이를 왕래하는 남북

조절위원회 본회의는 정상화되지 않았으나 부위원장회의라는 이름으로 판문점 접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부위원장회의 석상에서 우리가 거듭 촉구한 남북조절위원회 운영 정상화를 끝내 거부했으며 급기야는 작년 봄, 인도지나사태에 편승하여 무력도발행위를 격화시키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 부위원장회의마저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도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우리의 성실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도합 네차례에 걸쳐 평양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위원회 운영의 즉각 무조건 정상화를 촉구한바 있으며 그 밖에도 남북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남북 우편물 교환, 남북 고미술품 교환전시 또는 해외공동 전시회 개최를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작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발표 3주년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통일을 위해 남북대화가 부여받고 있는 막중한 역할을 누누히 강조한바 있으며 그밖의 여러 기회를 통하여서도 남북대화의 무조건 재개를 거듭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이러한 일관된 평화노력에 대하여 북한측은 오로지 부정일변도의 반응만을 보였습니다. 북한측은 그뿐 아니라 오히려 대화중단의 책임을 우리 측에게 전가하는가 하면 엉뚱하게도 소위 대미평화협정체결을 운운하면서 위장된 평화선전으로 국내외여론을 기만·농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남조선혁명」이라는 무모한 망상속에서 대한민국의 적화를 위한 온갖 도발과 음모를 다 꾸몄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지난 74년 조국광복 제29주년 기념식전에서의 저격사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잔인무도한 「테러」행위에 의한 우리사회의 혼란조성을 획책했고 이른바 4대군사노선의 강행에 의한 군비증강과 휴전선지하 땅굴 구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일촉즉발의 전쟁 도발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주한 UN군사령부의 대안없는 해체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와해시키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전쟁도발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과 계기를 조성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갈구해 마지 않는 남북 5천만 민족의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불순한 흥계가 주효할 가능성은 만의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3천 5백만 국민이 누리고 있는 평화와 안전, 자유와 번영의 기초를 위협하는 어떠한 음모도 단호히 분쇄할 수 있는 역량과 결의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무모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1천 5백만 동포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남북간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상태와 더욱 격화되고 있는 비생산적인 대결구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본인은 오늘 남북공동성명발표 4주년에 즈음하여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민족적 양심을 되찾고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으로 되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 합니다.

첫째로, 북한측은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적 불행을 또다시 초래하게 될 긴장조성과 무력도발 및 각종 민족자해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호응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북한측은 남북간의 대화 주무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의 무조건 정상화에 조속히 호응해야 합니다.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간의 제반문제는 그 어느 것이나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해결의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대화와 합의는 그것을 준수하고 실천을 책임질 수 있는 당국간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그 실효를 기대할 수 없으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를 발족시켰던 것입니다.

세째로, 북한측은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정상화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제기하고 토의하며 합의하는 성실한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회 합의된 대화기구를 부정하는 것은 남북간의 문제를 자주적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정상화된 대화석상에서 남북간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끝으로 남북대화가 하루 속히 정상화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인내와 성실로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배전의 이해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북한측은 7월 3일 이른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명의로 「연합성명」을 발표했다. 평양의 「중앙방송」을 통해 전문 보도된 동 「연합성명」에서 북한측은 북한은 {통일을 원하는} 반면 대한민국 「당국자」들은 「영구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독단적인 강변을 하면서 『이러한 근본입장과 자세의 차이 때문에』 쌍방간에는 『대화가 계속될래야 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태도가 여전히 대화재개에 대해서 부정적임을 명백히 했다. 동 「연합성명」에서 북한은 현안중인 남북조절위원회 재개문제에는 언급조차 없이 이른바 「대민족회의」 소집주장만을 되풀이 했는바 북한이 주장하는 「대민족회의」는 그 「선행조건」으로 대한민국의 「공산화」 또는 「준공산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그들의 관심이 남북한간의 대화가 아니라 이른바 「남조선혁명」, 즉 남한의 적화에 있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었다.]

#### <남북적십자회담>

가. 북적, 한적의 수석대표 면담제의 거부

대한적십자사는 이범석부총재가 인도주재대사로 임명되어 지난 1972년 남북적십자본회담 성립 이래 그가 줄곧 맡아 왔던 한적측 수석대표직을 떠나게 됨에 따라 1976년 3월 9일자로 외무부의 전실장이던 지연태대사를 한적 부총재로 임명하고 남북적십자회담 한적측 수석대표로 발령했다.

한적은 이러한 한적측 수석대표의 교체를 정돈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에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는 하나의 계기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연태 신임한적수석대표는 3월 31일 남북적십자 쌍방수석대표간의 면담을 요청하는 다음과 같

은 전화통지문을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북한적십자회측에 보냈다.

『귀하도 잘 아는 바와같이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지난 1973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제7차 본회의 이후 오늘까지 무려 2년 8개월동안이나 중단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판문점에서 진행중인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마저 본회담의제문제와 본회의 재개문제를 토의하고 있으나 계속 공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동안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하여 남북으로 흩어진 일천만 이산가족들을 하루속히 찾아주려는 남북적십자인들의 인도적 사명은 1971년의 첫접촉 이후 5년이 지난 오늘까지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남북적십자 쌍방 수석대표들 사이의 상면조차 지난 수년동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남북적십자회담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수석대표로 부임하여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을 하루속히 찾아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통감하는 동시에 남북간의 인도적 회담이 이처럼 오랫동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과 친척들을 조속히 찾아주는 문제는 일천만 이산가족들과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동시에 남북사이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허물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지름길이며 나아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의 이산가족문제는 순수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무조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인은 현재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실무회의와는 별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적십자 쌍방 수석대표들이 직접 면담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면담이 현재 진행중인 실무회의에서 의제토의를 촉진시키고 아울러 남북간의 인도적 회담을 조속히 정상화하는데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쌍방 수석대표간의 면담장소는 판문점이나 서울, 평양 또는 그밖에 어느 곳에서든지 쌍방이 합의하는 곳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귀하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적측은 4월 7일 한적측에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그들이 1973년 여름에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남북적십자본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근본원인』은 『「남조선」에서 인도주의회담의 근본사명과는 배치되게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면서 범죄적인 전쟁정책과 팃쇼화정책을 감행하고 있는데 있다』고 영똥한 비난을 하면서 지연태 한적신임수석대표가 제의한 쌍방 수석대표면담을 거부했다. 이 전화통지문에서 북적은 한적이 『그릇된 자세를 바로잡지 않는 한』 쌍방 수석대표들이 만난다고 해서 『문제는 풀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본회담을 하루 빨리 열고 이를 정상

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측이 전쟁정책과 팃쇼화정책을 그만 두고 두 개의 「조선」 정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혼동하고 적십자회담에 대해서는 인도적 의미 보다는 정치적 의미만을 부여하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 나.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의 경과

<남북적십자 쌍방은 1976년 2월 12일의 제15차실무회의에 이어 제16차(4월 10일), 제17차(6월 9일), 제18차(8월 20일), 제19차(10월 19일)실무회의를 관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었으며 제20차 회의를 12월 10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 몇차례의 실무회의에서 한적측은 ①제8차 서울 본회담의 무조건 속개와 ② 본회담의제에 대한 실질토의 즉각 착수, 그리고 ③민족고유의 명절을 이용한 성묘방문 교환과 노부모찾기 사업의 선착수 등 시범사업의 실시등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적측은 계속 『이산가족·친척의 인도적 고통은 통일이 달성되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을 앞세워 본회담의 재개나 본회담의제의 실질토의에 앞서 「선행조건」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법률적·사회적 조건환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토의하자는 엉뚱한 주장만을 고수했다. 이것은 결국 한적은 남북한간의 현존하는 법률적·정치적·사회적 차이를 초월, 순수한 인도적 견지에서 이산가족·친척들의 고통을 덜어 주자는 적십자 본연의 자세를 지키자는 입장인데 반하여 북적은 이산가족·친척의 인도적 고통을 핑계 삼아 대한민국의 공산화 여건을 성숙시켜 보겠다는 입장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쌍방간에는 본질적인 입장의 차이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동안 몇차례의 실무회담에서 있었던 쌍방의 발언을 통해 쌍방 주장의 차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편집자

#### 1)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격

한 적:

『조국이 분단된지 만 3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 흩어진 수많은 이산가족들과 친척들은 자기혈육을 한 강토안에 두고도 인위적 장벽 때문에 서로 상면조차 할 수 없는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정치사상이나 정치이론 또는 회담상대방에 대한 내정간섭적 선전첩선동 발언을 전개하는 논쟁터가 아니라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 문제는 그 역사적 발생원인으로 보나 당사자들의 엄청난 숫자로 보나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되며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미루어 둘 수도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그 자체가 곧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화해의 길을 터주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제17차실무회의에서의 김연주 교체수석대표 발언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의 기본목표와 임무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재회의 기쁨을 안겨주는 인도적 사업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이 자기 혈육과의 재회를 바라고 또 그들의 재회를 인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데는 그 어떠한 정치적 이념이나 체제도 이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의 문제를 다루는 남북조절위원회도 아니고 군사적 분쟁을 취급하는 군사정전위원회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은 인도주의문제를 다루는 이 적십자회담에서 정치적 비방중상을 일삼아서는 안되며 전쟁문제나 법률 또는 체제문제 등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제18차 실무회의에서 전과 동)

북 적:

『우리나라에서의 인도주의문제는 그 자체가 나라의 분열로부터 발생된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나라의 통일이 이룩됨으로써만 중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제16차실무회의에서의 「주창준」 부단장 발언에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인도적 사업을 원만히 실현하려 해도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정치적 장벽을 제거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시키는 것과 같은 보다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어야 하며 이러한 정치적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인도주의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제17차실무회의에서 전과 동)

## 2) 본회담재개문제

한 적:

『대한적십자사대표단은 합의사항에 따라 당연히 서울에서 개최기로 되어 있는 제8차 본회담에 대하여 이미 1973년 12월 19일, 1974년 4월 9일과 10일, 1974년 8월 30일, 1974년 11월 6일 그리고 1975년 9월 30일 서울과 10월 30일 평양 등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회담일자를 제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귀측이 제8차 본회담 개최일자를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다섯차례에 걸친 우리측의 제의가 모두 귀측의 불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볼 때 본회담의 중단은 전적으로 귀측 사정에 연유한 것이며 따라서 이제는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할 제8차 본회담개최일자를 귀측이 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제18차실무회의에서의 김연주교체수석대표 발언에서)

『귀측은 본회담 재개를 거부하는 구실로서 이른바 「분위기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치도 않은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700만의 시민이 자유롭게 생동하는 국제적인 도시로서 세계의 모든 자유시민들이 매년 수십만명씩 찾아오고 있으며 정치, 문화, 학술, 경제 등의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또 공산국가들과 비동맹국가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체제를 달리하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도 자유로이 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날 귀측 당국자들의 기만선전에 속아 대한민국을 반대하

던 조총련계 제일동포들까지도 수천명씩 자유롭게 와서 혈육의 정을 나누고 자유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제16차실무회의에서 전과 동)

『귀측 대표단도 지난 1972년과 1973년에 이미 세차례나 서울에 와서 회담을 원만히 진행시킨 경험을 가진 바와같이 서울의 분위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귀측 대표단이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제8차 본회담을 개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제17차실무회의에서 전과 동)

『귀측이 주장해온 이른바 「분위기론」과 「조건환경론」은 앞서도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그 허구성이 입증되었고 또 인도주의 적십자회담에서 논의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졌습니다.

만약 귀측이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법률적 문제들을 제기코자 한다면 인도주의 적십자회담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귀측이 중단시켜 놓고 있는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마땅히 그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남북간에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최근 조성되고 있는 극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회의장을 잘못 찾아 잘못된 의제를 제기함으로써 회담정상화를 계속 늦추어 나갈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제 등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할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제18차실무회의에서 전과 동)

북 적:

『나는 우리의 회담을 하루 속히 재개하고 정상화하여 인도주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귀측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귀측은 인도주의회담을 가로막는 기본요인인 남조선 당국자들의 민족분열영구화정책이 철회되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인도주의 적십자회담을 민족분열주의에 이용하려는 당국자들의 부당한 입장을 배격하고 이 회담을 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회담으로 되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측은 본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그 정상화를 위하여 남조선의 살벌한 공포 분위기를 가시고 좋은 회담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추구하는 반공파쇼정책을 연공정책으로 바꾸게 함으로써 민족적 단합과 화목의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민주구국선언 공개자를 포함하여 부당하게 체포구금된 민주인사들과 종교인, 학생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전쟁정책을 저지 파탄시키며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을 막으며 지금 동해에서 벌이고 있는 한미해군 공동수륙기동훈련을 당장 중지시키고 여기에 동원된 미제 침략 무력을 조선 경외로 추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에서의 전쟁의 항시적 근원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제16차실무회의에서의 「주창준」 부단장 발언에서)

『벌써 몇해째 본회담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파쇼」 탄압과 전쟁소동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회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과 관련됩니다.』(제17차실무회의에서 전과 동)

『귀측이 말하는 소위 제일교포 모국방문단이란 이미 세상에 폭로된 것처럼 남조선 당국자들이 총련의 애국활동을 방해하고 제일동포의 단결을 와해하며 소위 서울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모략 책동입니다. 귀측이 아무리 서울 분위기가 좋다한들 세상 누가 끝이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는 오직 민주주의가 교살되고 자유가 없고 「파쇼」가 횡행하는 그야말로 인간 생지옥인 것입니다.』(제18차실무회의에서 전과 동)

### 3) 본회담의제 토의문제

한 적: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또한 지난 1972년 10월 제3차 본회담 이래 본회담 의제 제1항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세계 모든 적십자들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적십자사 주관하의 심인의뢰서 교환방식을 제의하고 1천만 남북이산가족들의 생사, 소재 확인사업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우리의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전제조건을 내세워 의제의 실질적 토의를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남북적십자간에 합의해 놓은 다섯가지의 본회담 의제는 만1년만에 걸쳐 수십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귀측 동의하에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제를 결정한 사람들이 몇차례의 본회담까지 거치고 의제의 실질적 토의에 들어가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엉뚱한 정치적, 사회적 전제조건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귀측이 의제토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측의 태도가 이러함에도 우리 대표단은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의제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귀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회담에 돌파구를 열기 위한 시범적 사업의 하나로서 「성묘방문단의 상호교환」을 제의했으며 이 실무회의에 들어와서도 귀측이 능히 수락할 수 있는 긴급하고도 실현이 용이한 사업으로서 『노부모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의 우선실시와 『가족사진 교환』 만이라도 실시할 것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인도적 사업이며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기쁨을 안겨주는 실질적인 사업들인 것입니다.

1천만 이산가족들이 단기간내에 한꺼번에 다 오가지 못하더라도 1973년 7월 11일 제7차 본회담에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제의한 성묘방문단의 상호교환에 귀측이 동의했다라면 이미 3년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찾아 가족친척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부모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이 해결되었다라면 그동안에 이미 수많은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들의 생사조차 몰라 애태우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 가족사진의 교환만이라도 실시되었다라면 조석으로 그리운 얼굴을 들여다보며 다소나마 이산의 슬픔을 달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이 모든 합리적인 제안들을 오로지 「조건환경론」 한가지를 구실로 하여 거부해 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귀측이 신성한 인도주의회담을 다른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명백히 말하거니와 대한민국에는 인도적 사업을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3,500만 전국민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실시를 열렬히 지지 성원하고 있고 중단된 본회담이 하루빨리 서울에서 재개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또한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제16차실무회의에서의 김연주교체수석대표 발언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도적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1. 남북적십자 쌍방은 남북간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며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시범사업의 하나로서 "남북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을 상호 교류한다.
2. 이 성묘방문단의 교류사업은 매년 추석, 신정, 구정, 한식등 우리 민족의 명절을 기하여 실시한다.
3. 쌍방은 금년 추석을 기하여 제1차 "남북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의 상호교류를 실시하며 그 인원과 체류기간 및 기타 절차상의 문제들은 쌍방 협의하에 결정한다.

나는 귀측이 우리측의 이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 우선 금년 추석에 실시할 제1차 성묘 방문사업은 쌍방 각 500명 정도의 인원이 1주일 정도 체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제17차실무회의에서 전과 동)

『그러나 만약 귀측이 성묘방문단의 동시 상호교류를 실시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먼저 남에서부터 북으로 성묘방문단을 파견할 것을 추가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과 체류기간은 지난번 우리측 제의와 같이 남북 쌍방 각 500명, 1주일간으로 해도 좋고 또 귀측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제18차실무회의에서 전과 동)

『뿐만 아니라 우리측은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귀측의 서울방문 거부로 중단된 이후 지난 1974년 7월에 개최된 제1차 실무회의에서 이산가족들중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60세이상의 노부모들을 가진 가족들간의 주소확인과 서신교류, 판문점 상면과 상호방문을 실시해 보자는 「노부모 사업」을 제의한바 있습니다.』(제18차실무회의에서 전과 동)

북 적:

『당신이 늘어놓은 궤변들은 분열의 낫두리이며 전쟁의 낫두리이며 민족반역의 낫두리이며 죽은 반공광신자들의 혼을 부르는 망령의 낫두리입니다. 당신들의 낫두리는 이미 우리에게 의하여 전면적으로 논박되었고 그의 부당성과 반동성, 반인민적이며 민족반역적인 것으로 하여 세상에 나오자마자 우리 인민들과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의 한결 같은 배격을 받고 시체가 되어 버린지 오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제16차 실무회의에서의 「주창준」 부단장의 발언에서)

『귀측이 내놓은 이른바 문서교환 방식이나 의제에 없는 엉뚱한 문제들을 집요하게 들고 나온 사실들이 그것을 잘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문서교환 방식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영토가 크지 않아 하루나 이틀이면 남북의 임의의 지역에 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흩어진 겨레들은 남북의 장벽만 열리면 직접 제발로 가서 찾을 것을 요구하지, 앉아서 기약없는 문서장을 기다릴 사람은 없습니다.

더우기 우리가 대상하고 있는 가족, 친척들의 수가 천이나 만의 정도가 아니라 수백만 지어 그 이상을 헤아리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소식조사 의뢰서에 의거한다면 가족, 친척들의 내왕과 상봉, 제결합 같은 것은 고사하고 그들을 찾아내는데만 하더라도 10년이 걸릴지 백년이 걸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놓고보면 문서교환 놀음이라는 것은 겨레들의 운명을 문서장에 얽매어 놓고 희롱하면서 세월없이 시간을 끌려는 지연책동이며 본질에 있어서 그것을 현상유지나 하고 분열을 고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제18차실무회의에서 전과 동)

『지금 실무회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제의 예비적 토의 과정에서도 귀측은 쌍방이 합의한 의제를 제멋대로 죄버리고 의제의 어느 항목에도 없는 이른바 노부모 문제니, 가족사진 문제니, 성묘 방문단이니 하는 것을 아무 것이나 생각나는 대로 들고나와 이것부터 하자, 저것부터 하자고 하면서 의제토의를 가로막고 혼란과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제18차 실무회의에서 전과 동)



『의제 제1항을 해결하는 데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근본적이고도 원칙적인 의의를 가지는 조건환  
경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17차 실무회의에서 전과 동)

### 제3부 그밖의 남북관계 소식

북한판 도끼외교의 좌초 :

#### 8.18 판문점의 살인만행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 5명의 한국인노무자들이 10명의 유엔군경비병(미군장교2명, 한국군장교 1명, 미군사병 4명, 한국군사병 3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의 두 유엔군초소(제3초소와 제5초소)간의 시야를 차단하는 한 커다란 미류나무의 가지치기작업을 시작했다. 이 미류나무는 북한군의 공동경비구역 출입통로인 「돌아오지 않는 다리」 동쪽 유엔군측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여름철에는 이 나무의 무성한 가지와 나무잎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 동쪽 입구의 유엔군측 제3초소와 다른 유엔군측 초소간의 시야가 차단되어 때때로 동초소근무 유엔군경비병들이 북한군경비병들의 행패로 괴로움을 당해 왔었다. 군사분계선 남북의 직경 800m정도의 부채꼴 지역인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에는 유엔군이 군사분계선 북쪽 북한군측 지역에 한개의 유엔군초소도 설치하지 않은 반면 북한군은 동분계선 남쪽 유엔군측 지역에 4개의 초소와 2개의 도로차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지도참조)

10시 45분경 장교 2명을 포함한 17명의 북한군이 현장에 나타나 한동안 가지치기작업을 방관하다가 갑자기 동작업의 중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유엔군측이 이 요구를 묵살, 작업을 계속하자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 건너편 북한군 제4초소로부터 몽둥이로 무장한 15명의 병력을 추가로 현장에 불러 온 뒤 한 장교의 『죽여라』라는 구령과 함께 유엔군경비병들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들 북한경비병들은 한국인노무자들이 전지용으로 휴대했던 도끼를 탈취하여 폭행 흉기로 사용했으며 11시 5분경 유엔군경비병들과 노무자들이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났을 때는 이미 유엔군경비중대장 아더·G·보니파스대위(33세 뉴욕주 뉴버그출신)와 마크·T·바레트중위(24세 사우스·카롤라이나주 콜럼비아출신)이 현장에서 숨지고 그 밖에 한국군 장교 1명과 사병 4명, 미군사병 4명이 부상당하는 잔혹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이었다.(사진참조)

[정전협정은 물론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 안전수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인 이날의 사건 그 자체는 전혀 예측 못했던 일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이 사건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 발효된 이후 23년간에 걸쳐 공중, 해상, 지상에서 북한군이 저지른 34,755건의 협정위반사례(부록의 북한에 의한 주요 정전협정위반사건일지 참조)중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에 대한 북한측의 가장 난폭한 위반행위는 남북간의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의 북한군측 관할지역(폭 2km)을 불법적으로 완전히 군사요새화 하였을 뿐 아니라 폭 4km의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는 지하터널을 구축하여 비무장지대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놓았다는 사실이다.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비무장지대 내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자동화기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출입인원도 1,000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1967년이래 비무장지대 북한군측지역을 완전히 요새화시킴으로서 사실상 비무장지대군사분계선을 북방한계선으로 만들어 놓았는바 1975년 현재 확인된 동지역내의 북한군 군사시설 상황은 모두 265개의 요새화된 진지 구축과 76.2mm 야포 31문, 박격포 78문, 방사포 27문, 중대기관총 676정, 무반동총 450정, 척탄통

675정, 14.5mm 고사총 225정 및 무장병력 9,000명의 투입배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군 측은 1971년 7월 군정위제318차본회의에서 ①쌍방공동감시소조가 지역내의 무장인원과 요새화시설등을 조사하여 군정위에 보고하고 ②1개월이내에 조사보고된 모든 불법군사시설물을 제거하며 ③ 비무장지대 전역을 점진적으로 비무장화시키고 ④비무장지대내의 전투인원출입을 금지하고 그 대신 농민을 투입하여 동지역을 농토로 개간, 영농을 시키도록 하자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방안」을 제의한바 있으며 그 이후 군정위회의에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를 반복 제의, 북한측의 동의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①미제침략군의 철수와 ②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한국침입금지』 등 엉뚱한 주장을 내세워 유엔군측의 그러한 제의를 거부해 왔으며 1974년 11월과 1975년 3월 비무장지대내에 북한군이 구축한 지하터널이 유엔군측에 의하여 발견되었을때는 유엔군측의 공동감시소조에 의한 현장공동조사 제의마저 거부했다.

정전이래 쌍방경비병력들이 혼합공동경비임무를 수행해온 중립지대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서도 북한군측은 간헐적으로 끊임없이 유엔군경비병들을 괴롭히는 도발을 자행해 왔다. 최근의 사례로는 1975년 6월 30일 군정위제36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동안 회의장 바로 밖에서 경비임무에 임하고 있던 당시 유엔군공동경비구역사령관 다릴·헨더슨소령을 북한군경비병들과 「기자」들이 떼지어 공격, 땅에 넘어진 그를 구둑발로 짓밟아 중상을 입히고 실신하게 만든 만행을 들수 있다. (사진 참조) 8·18사건은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몽둥이는 물론 도끼로 유엔군경비병을 공격, 2명의 미군장교를 현장에서 즉사시키는 야만성을 보여 주었다는데서 온 세계로 하여금 북한군의 호전성과 잔학성에 전율을 느끼게 한 것이다.]

#### 김일성, 북한군에 전투태세 돌입명령

충격적인 8·18 도끼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실로 적반하장의 뻔뻔스러운 태도로 이 사건을 오히려 북한의 선전목적에 이용하려 들었다. 사건 발생직후 유엔군측이 아직 사건의 엄청난데 놀라고 있는 동안 북한은 오히려 먼저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군정위경비장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왔으며 이날 오후 5시에는 평양방송을 통해 이날의 사건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고 강변했다.

유엔군 측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북한측의 경비장교회의의 소집요구를 거부하고 군정위 제 379차본회의의 소집을 요구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오후 6시 25분 사건 전모를 내외에 발표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52분에는 군정위본회의의 소집을 촉구하는 유엔군사령관 리처드·G·스틸웰대장의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한미양국정부는 이 엄청난 사건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김동호 문공부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북한공산집단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대남침략도발에 광분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폭도들인가 하는 사실을 온 세계에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군은 사건 발생과 더불어 육, 해, 공 3군이 즉각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사건 발생 보도가 있는 직후 「워싱턴특별행동그룹」을 긴급 소집, 사건대책수립에 착수했으며 매사추세츠·시티에서 공화당 대통령후보 지명대회에 참석중이던 포드대통령과 워싱턴에 남아 있던 키신저국무장관은 8·18 사건은 『용납될 수 없는 계획된 살인만행』이라고 이를 규탄하는 한편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저야한다』고 미국의 단호한 응징 결의를 표명했다. 키신저장관은 사건 당일 워싱턴에서 주미중공대사 황진을 만나 이 사건처리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포드대통령은 전 주한미군에 예비경계령을 발령하는 한편 ① 일본 오키나와 주둔 팬텀 전폭기 1개대대 ② 미 아이다호주 주둔 F111전폭기 1개대대 ③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 1,800명이 한국으로 이동, ④ 괌도 주둔 B52중폭기 3기1개편대의 한반도상공비행(매일 1회) ⑤ 일본요코스카에 정박중이던 항모 미드웨이와 호위함정들의 동해진입 등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력시위를 지시했다.

북한은 마침내 유엔군측의 요구에 굴복, 군정위 제379차 본회의는 사건 다음날인 8월 19일 오후 4시 관문집 군정위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 마크·P·프루덴 미해군소장은 스틸웰 유엔군사령관이 북한군최고사령관 김일성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항의문을 북한군측에 구두로 전달했다.

『18일 까닭없는 심각한 적대행위가 북한 경비군의 주도에 의해 공동경비구역에서 UN사 경비군에 대해 자행되었다. 가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은 유엔사 경비장교 2명의 죽음을 가져온 북한군의 노골적이고도 악랄한 호전행위였다. 이 사건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전기구를 위태롭게 했을 뿐 아니라 정전협정에 관한 모든 국제적으로 승인된 약정과 함께 쌍방이 1953년 7월 합의한 공동경비구역의 중립성도 위배했다. 정전협정이 정식 조인된지 23년 동안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요원이 현장에서 야만적 행위에 의해 살해된 적은 이전에 없었다. 이것은 계획된 사태의 폭발이었다. 이것은 고의적인 유엔사요원의 살인행위였다. 희생된 유엔사요원은 귀측의 요원들이 흔히 수행하는 형태의 일상적인 관리기능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도끼, 곤봉을 휘두르는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공격당했다. 본관은 이와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귀측의 보장을 요청한다.』

그러나 북한군측 수석대표 한주경은 8·18 사건은 『정세를 고의로 긴장시키고 쌍방간에 무장충돌을 야기시키려는 미제침략자들의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으로 감행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도발』이라고 강변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최고사령관 김일성은 이날 군정위본회의가 아직 진행중인 오후5시를 기해 북한정규군과 「노동적위대」 및 「붉은 청년근위대」에 대해 「전투태세돌입」을 명령 (오후 5시 25분 평양방송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북한전역에서는 야간공습경보에 의한 등화관제를 실시하는 등 전쟁분위기를 대대적으로 고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북한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전쟁이 곧 일어난다』면서 출국을 요구했으며 북한을 방문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은 북한방문계획을 중지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이러한 북한지역 출입중지조치는 공산권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운동선수단은 비행기로 평양공항에 도착했으나 북한당국의 요청으로 타고 갔던 비행기로 되돌아 북한을 떠나야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외국사절단의 북한방문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사절단의 외국방문도 일체 중지시켰다. 북한당국은 북한 「정권」 창립기념일인 「9·9절」(9월 9일)행사도 일체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 사건의 배경-북한의 난폭한 비동맹외교

8·18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북한은 어째서 그렇듯 무모하고도 잔혹한 도끼살인만행을 저질러서 온 세계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의 잔인함에 대해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끼게 했는가. 북한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북한은 무엇을 계산했던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난 9월 22일 뉴욕에서 개막된 제31차유엔총회에 대비한 북한의 유엔외교와의 맥락속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의 제30차총회에서 유엔은 남북한 지지국가들간의 치열을 극했던 표의 공방전 끝에 한반도 문제에 관한 상반된 2개의 결의를 동시에 채택하는 이변을 기록한 바 있다. 제30차총회에서 유엔이 채택한 2개의 한반도문제에 관한 서방측 결의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가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조건으로 정전협정의 보완이나 보다 항구적인 대체방안의 마련을 위한 「관계당사국회의」를 촉구하는 것인 반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공산측 결의는 유엔군사령부의 대안 없는 해체와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철수 및 한국을 제외한 「미·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공산측 결의에 담겨진 북한의 입장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 그것은 ①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전체 한국민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한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②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남북간의 군사력균형을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파괴하며 ③ 아무런 대안없이 휴전협정을 폐기하여 한반도에서의 휴전상태를 보장하는 유일한 법적장치를 제거하는 한편 ④ 한반도 사태를 이른바 「민족내부문제」화 하여 외부의 간섭이 배제된 가운데 무력 또는 폭력에 의한 대남적화통일기도를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도에 비추어 볼 때 쌍방 결의안을 동시에 채택한 제30차유엔총회의 결정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제30차총회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유엔에서의 계속되는 한반도문제 토의는 아무런 실효도 없이 무의미하게 남북간의 긴장만을 격화시키는 비생산적인 대결이 아닐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반도문제에 관한 어떠한 해결방안도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쌍방간의 양해나 합의가 필수적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연초부터 1973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래 재개되지 않고 있는 남북대화의 무조건 재개를 요구하는 일방 남북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엔에서의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한국문제토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희망을 강력하게 표명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에서의 「불완전한 결과」를 보다 「완전한 결과」로 만들려는 집요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년초부터 8월까지 북한은 69개국의 182개대표단(이 가운데 말리, 베닌, 보츠와나, 말라가쉬, 파키스탄등 5개국은 국가원수)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147개대표단을 총82개국(이 가운데 20개대표단은 「정부고위급대표단으로 이들은 연92개국 방문)에 파견하면서 제31차 유엔총회에서 공산측 결의안의 「단독통과」를 위한 광적인 득표외교를 전개했다. 북한은 공산측 결의안의 지지표를 보다 많이 규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군이 북침을 계획하고 있어 한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모략선전을 감행했

다.

8월에 접어들어서 북한에게는 그들의 득표외교의 성과를 가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들이 「표발」으로 간주하는 비동맹정상회의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것이다. 콜롬보회의를 앞두고 북한은 『한반도에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긴장이 있고 또 미군이 북침을 기도하고 있다』는 그들의 모략선전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공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1975년 8월 리마비동맹외상회의에서 비동맹가입이 허용된 북한은 가입후 첫 정상회의인 콜롬보회의에 김일성이 직접 참석하여 대대적인 시위선전효과를 거두겠다는 암산하에 김일성의 회의참가를 위한 요란한 준비를 진행시켰다. 8월 5일 북한은 중동부전선의 한국군초소에 무반동포와 기관총 공격을 자행하고는 즉각 「외교부성명」을 발표, 이를 『한·미 양국군에 의한 도발』이라고 뒤집어씌우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고 아우성을 쳤다.

그러나 콜롬보정상회의를 노린 북한의 비동맹외교는 이미 장벽에 부딪치고 있었다. 다수의 비동맹국가들은 비현실적인 위기감을 조작, 급속성의 비명을 울리면서 비동맹국가들을 오도하여 북한판 피확성 전쟁외교의 둘러리로 삼으려는 북한의 조폭한 외교노력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김일성의 콜롬보회의참석은 좌절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대신 「정무원총리」 박성철과 「외상」 허담이 「만경봉호」를 숙소를 사용하는 120여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콜롬보회의에 참가했다.

예년의 북한은 쿠바, 알제리아등 과격한 국가들의 지원하에 비동맹회의로 하여금 북한의 입장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한반도관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하고 그 여세를 몰아 한반도문제에 관한 공산측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경우가 달라졌다. 이미 비동맹정상회의의 분위기에 이상이 생기고 있음을 감지한 북한은 이번에는 콜롬보회의가 개막하는 날인 8월 16일 과격하기 짝이 없는 내용의 공산측 결의안을 주유엔북한대표부가 직접 유엔사무국에 제출, 제31차 유엔총회의제로 접수시킴으로써 비동맹정상회의의 참가국들에게 북한이 「배수의 진」을 치고 동회의에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기도했다. 그러나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북한의 막바지 노력은 이미 고장이 날대로 나 있었다. 8월 16일 제출된 공산측 결의안의 최초 공동제안국은 제30차총회때의 35개국보다 11개국이나 적은 24개국에 불과했고 공산진영국가들 가운데서도 유고슬라비아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우방들은 공산측 결의안제출에 대한 대응조치로 8월 21일 별개의 한국문제 결의안을 공동제안했다.)

콜롬보회의에서는 몇몇 온건한 국가들이 한반도문제에 관한 중립적인 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북한의 독주에 썩기를 막았다. 많은 국가들은 회의 발언을 통해 한반도문제에 관해 당사쌍방중 어느 일방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비생산적인 결의를 채택하는 것보다는 남북한 쌍방에게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재개를 촉구할 것을 희망했다.

북한은 초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콜롬보 현지에서 북한의 회의 참가요원들은 기자실에 폐지어 다니면서 회의내용을 취재하는 한국 기자들에게 협박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 서방측 기자들의 기사작성과 송고활동을 방해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이와 함께 북한은 판문점에서 8·18사건을 도발했다. 콜롬보 회의에 참가중인 북한대표단은 즉각 8·18사건은 『미군이 일으킨 전쟁도발행위』라고 엉뚱하게 뒤집어씌우는 북한방송보도와 「중앙통신」 성명 및 김일성의 「전투태세 돌입명령」 내용을 회의참가국 대표들에게 배포하면서 한반도에서 그들이 조작한 「전쟁위

기」를 과장인식시키려고 광분했다. 북한의 8·18판문점 도끼살인만행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감」을 조작하고 이를 미끼로 하여 콜롬보회의로 하여금 북한의 미군철수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일련의 책동의 마지막 수단으로 감행된 것이다.

### 김일성의 「유감」 표명과 공산안의 자진철회

콜롬보비동맹정상회의는 폐막일을 8월 20일로 하루 늦추는 난항 끝에 비동맹 그룹의 「공동입장」을 반영하는 「정치선언」과 「경제선언」을 채택하고 회의를 끝냈다. 한반도문제는 회의를 난항케 한 주요쟁점의 하나였으나 결국 채택된 「정치선언」가운데 한반도관계부분은 북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 졌다. 그러나 「정치선언」의 이같은 한국관계부분에 대해서는 85개 참가국가운데 25개국이 이의를 제기, 그들의 지지유보의사를 기록에 남겼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 25개국은 주최국인 스리랑카를 비롯하여 인도, 말레이시아, 인니, 싱가포르, 말디브,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오만, 바레인, 시에라레온, 모리타니아, 라이베리아, 감비아, 자이레, 아이보리 코스트, 튀니지아, 케냐,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가봉, 페루, 알젠틴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의 공정하고도 정당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쌍방이 7·4남북공동성명에 입각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전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비동맹 정상회의의 이같은 결과는 콜롬보회의를 도약대로 삼아 여기서 압승을 거둔 여세를 몰아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토의에 임하려 했던 북한의 기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같은 사태발전은 제3차 총회에서 공산측결의안을 단독통과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수포화시켰으며 유엔총회에서 실제로 표대결이 강행될 경우 공산측 결의안에 대한 지지표는 작년총회때보다 감소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한이 저지른 8·18도끼살인만행에 대해서는 전세계여론이 입을 모아 성토·규탄해 마지 않았으며 정통한 관측통들은 소련과 중공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산권국가들도 8·18사건에서 북한이 보여준 호전성과잔인성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했다. 북한의 난폭한 비동맹외교는 마침내 난파하고 말았다.

북한은 그 자신의 전술을 스스로 반성하고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8월 21일 오전 7시 유엔군사령부는 B52, F111, F4, 헬리콥터·건설 등의 공중엄호하에 16명의 작업인원, 30명의 경무장경비병력, 60명의 비무장 한국군 특수전병력을 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에 투입, 8·18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문제의 미류나무 가지 3개를 절단하는 작전을 강행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한미양국의 결의를 분명히 했다. 판문점에 투입된 이들 병력은 북한군이 공동경비구역 유엔군측지역에 불법적으로 설치해놓은 2개의 도로차단시설도 제거했다. 작전당시 「돌아 오지 않는 다리」 건너편 북한군측 지역에는 2백여명의 북한군이 몰려 있었으나 유엔군의 단호한 기세앞에서 그들은 문제의 미류나무가지 절단작전을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었다.

미류나무가지 절단작전이 강행된 8월 21일 낮 12시 북한군최고사령관 김일성은 끝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8·18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스틸웰 유엔군사령관 앞으로 보내 왔다.

『오랫동안 판문점에서는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

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유감스럽다. 이러한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쌍방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귀측에 도발을 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우리측은 먼저 도발하지 않겠다. 그러나 도발이 발생하면 우리는 자위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김일성의 「유감」 표명으로 8·18사건은 수습단계에 접어 들었다. 8월 25일의 군정위 제380차 본회의에서 유엔군측은 『8·18사건 관련책임자의 처벌』을 북한측에 요구하는 한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 ① 공동경비구역안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과 ② 쌍방 경비요원간의 상호 접촉금지를 제의했다. 이에 대한 북한군측은 공동경비구역의 분할경비를 제의했으며 이에 따라 쌍방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도합 다섯차례의 군정위 비서장회의에서 「군정위본부구역, 군정위본부구역의 안전 및 군정위본부구역 수축에 관한 합의」에 대한 「보충합의」에 합의함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종결지었다. 이 「보충합의」에 따라 관문점공동경비구역은 군사분계선을 따라 유엔군측 지역과 북한군측 지역으로 분리되어 쌍방의 군사인원은 일체 상대측 지역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공동경비구역」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8·18사건은 이로써 수습되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습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비동맹외교의 난파와 8·18사건의 여파로 북한은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표대결에서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자신을 상실하고 있었다. 제31차 유엔총회 개막을 하루 앞둔 9월 21일 북한은 마침내 유엔에 제출했던 공산측결의안을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적진총퇴각을 단행했다. 북한판 도끼외교의 허무한 종장이었다. 한국과 그 우방들은 무익하고 비생산적인 한국문제토의는 지양한다는 본래의 기본방침에 따라 같은 날 그들이 내놓았던 별개의 한국문제 결의안을 철회했다. 이로써 제31차 유엔총회는 총회에서 한국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한지 28년만에 처음으로 한국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는 첫 유엔총회가 되었다.



계속되는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모국성묘 방문

줄 지은 인간의 행렬 1만명을 돌파, 망향의 귀심에 무너지는 기만의 장벽

60만 재일동포들 사이에 가로 놓인 눈에 안보이는 38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부의 인도적 결단에 의하여 1975년 추석을 기해 시작된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성묘방문사업은 해를 넘기고도 이에 참가하는 동포들이 계속 줄을 이어 현해탄위에 이들을 위한 인도의 가교가 가설된지 만 1년이 되는 금년 추석(9월 8일)까지 모두 1만명이상이 모국을 다녀 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조총련이라는 공산조직의 올라미에 얽매인 기만의 암흑생활을 박차고 오랜 세월동안 스스로 등을 지고 살아 온 핏줄의 고향을 되찾는 이들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은 작년 추석때의 2천여명, 금년 구정때의 3천여명에 이어 한식(4월 5일)에 1천 5백여명, 단오(6월 2일)에 5백여명, 추석(9월 8일)에 3천여명이 성묘귀향의 형식으로 인간회귀의 대열에 참가한 것이다. 60여만 재일동포들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아 민단계가 36만여명, 조총련계가 26만여명의 분포를 나타 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사업이 시작된 이래 만 1년동안에 매 26명중 1명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 모국을 다녀 간 셈이 된다.

#### 재일동포 모국방문 추진위원회」의 발족

모국성묘방문에 참가하는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서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기만선전에 속아 많은 재외동포들이 조국을 등지고 살아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을 광정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모국방문사업을 보다 항구적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움직임이 태동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1976년 3월 25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이호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일동포 모국방문 추진위원회」가 구성 발족되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23의 1)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추진위원회는 순수한 민간기구로 각계에서 답지하고 있는 성금을 기금으로 삼아 불우한 재일동포의 모국방문을 위한 재정지원을 베푸는 등 조총련계를 포함한 재일동포의 모국방문사업을 보다 적극화시키는데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추진위원회에는 권일(유정회 소속 국회의원·전재일거류민단장), 김윤덕(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박충훈(대한무역협회 회장), 조중훈(대한항공사 사장), 이항녕(홍익대학교 총장), 홍경모(한국방송공사 사장), 이봉래(대한예총 회장), 서영훈(한적사무총장), 홍성철(한국국제문화협회 회장), 김종규(서울신문사 사장)씨가 이사로, 박창원(유신고속사장), 차형근(변호사)씨가 감사로, 그리고 김남중(전남일보사장), 김상문(기아산업사장), 구자삼(삼룡관광사장), 임종협(이북5도민회장), 박금순(한국부인회장), 조인현(대한문협이사장), 배명준(남대문교회목사), 이천환(대한성공회주교)씨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 환향유혼의 안주처 「망향의 동산」 준공

정부는 재일동포를 비롯, 이역에서 세상을 떠나는 재외동포들의 유혼의 안주처로 충남천원군 성거면사방리에 「망향의 동산」을 조성하고 10월 2일 최규하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인사 및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과 위령탑제막 및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이 「망향의 동산」은 조총

런계 재일동포 모국방문사업의 본격화와 더불어 많은 동포들이 가족의 유골을 봉안하여 귀국하고 있는 것을 본 박정희대통령이 관계 당국에 지시, 금년 6월에 기공하여 10월 2일 우선 1단계 조성공사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망향의 동산」에 조성된 3만6천여평의 묘역은 「무궁화」, 「장미」, 「모란」의 3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모두 8천묘의 유골을 안장할 수 있는 공원묘지로 계획되고 있다. 이곳에는 또 합동장제장으로 쓰일 35평 규모의 귀정각도 이날 준공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높이 15m의 위령탑도 함께 제막되었다.

10월 2일의 준공과 동시에 「망향의 동산」에는 9월 30일 무연의 환향을 한 2백 12기의 재일동포유골이 1차로 안장되었다.

#### 동요하는 조총련, 방해공작에 광분

계속되는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방문사업은 대남적화전전략의 일환으로 조총련을 우회적인 대남공작의 중계기지로 사용하려는 북한의 기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 사업은 이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조총련 각급조직의 전·현직 간부들을 포함하여 이른바 열성맹원 가운데서 참가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총련은 조직관리면에서 심각한 동요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국을 다녀 가는 조총련계 동포들가운데는 조총련의 현금조직간부와 조총련계 각급학교의 교사, 조총련계의 유력상공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더우기 최근에는 특히 동포2세대들인 청소년들의 참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계 당국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1년동안 모국을 다녀 간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연령별 구성은 60세 이상이 23%, 50~59세가 28.6%, 40~49세가 19.6%, 30~39세가 15.3%, 20~29세가 10.1%, 20세이하가 3.4%로 나타났다.

모국방문 참가자의 증가로 말미암은 조총련 조직 동요는 9월 21일에 발생한 어당씨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총련의 심장부근처에까지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조총련은 날로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조총련계 동포들의 모국방문을 가로 막기 위한 각종 공작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심지어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조총련계 동포들을 납치·감금하는 광태마저 저질러 세론의 지탄을 받기에 이르고 있다.

조총련은 최근 조총련계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기관광, 집회등을 조직하여 성묘단참가를 가로 막고 성묘단참가가 예상되는 동포들에게는 이른바 「특별학습」을 실시하는등 갖가지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은 특히 동포1세보다 조총련계 각급학교와 「조선대학」 출신의 동포2세대들의 성묘방한 저지에 광분, 이들 학생들중 여학생들에게는 「검정 치마」와 「검정 저고리」만을 입게 하는가 하면 「조선대학」 학생들은 학교구내에 붙들어 두고 외출금지 조치를 취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갖가지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모국성묘 방문대열이 줄을 잇게 되자 조총련은 폭력행동대를 동원, 공항에서 모국방문 참가자들의 비행기 탑승을 가로 막는가 하면 때로는 강제로 납치하여 감금상태에 돌으로써 출발을 저지하는 행패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그 몇가지의 실례를 들자면 금년 4월 2일 오후 5시 30분 동경羽田발 KAL001기탑승을 대기중이던 허충선할머니(66세)

를 50여명의 조총련행동대원들이 공항건물밖으로 강제로 끌어 내리는 소동이 벌어진 끝에 허할머니가 출발을 포기한 사건이라든가, 9월 1일에 羽田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기옥현의 진상옥씨(31세)가 하루 전인 8월 31일 「송별연」을 이유로 조총련 「친구」들에게 끌려 나간뒤 5일간이나 감금상태아래 놓여져 결국 모국방문을 일단 포기한 사건들을 들수 있거니와 이에 이어 9월 2일에는 14세의 소녀인 강영희양 납치·감금사건, 9월 19일에는 어당씨 납치·감금사건이 발생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37년만에 고향과 고향에 살고있는 76세의 노모를 찾아 보기 위해 모국성묘방문에 참가한 강기병씨(54세, 조총련 중앙위원회 제일교포 권리옹호위원장·조총련공성현본부 총무부장)의 3남2녀 중 장녀인 강영희양(기옥현대궁 조선인초급중학 중급반 2학년)은 9월 2일 오후 3시 30분 가족들과 함께 羽田공항에서 비행기탑승 수속도중 강양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 2명에게 납치되어 공항에서 60km나 되는 강양의 학교로 끌려가서 감금상태에 놓여 졌다. 조총련의 이러한 납치소동이 그 자신의 모국방문을 저지하려는 음모임을 간파한 강씨는 다음 날인 9월 3일 다른 가족들과 모국방문을 결행했으며 이렇게 되자 조총련은 납치 24시간후에 강양을 집으로 돌려 보냈다. 강양은 9월 11일 혼자서 현해탄을 넘어 한국에 먼저나와 있는 가족들의 품에 안겼으며 성묘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강씨는 9월 21일 강양의 납치주범인 조총련의 배광재(28세, 강양의 학교인 대궁 조선인 초급중학교 초급부주임)를 「유괴 및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선대학교」 교수이며 「김일성대학」 명예부교수이자 조총련계 교재출판기관인 「시대사」의 부사장인 어당씨(57세)는 일본학계에서도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지리학자이면서 현직조총련중앙위원인 거물급의 조총련간부이다. 그러나 어씨는 1975년 북한을 방문, 북한의 실정을 목격한 뒤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전향을 결심했다. 어씨는 금년 9월초 그와 마찬가지로 조총련을 탈퇴한 제일동포들이 만든 조직인 「재일조선인민주화촉진연맹」의 오정태위원장을 통해 전향을 위한 준비를 진행시켰다. 어씨는 9월 15일 조총련에 중앙위원직 사퇴와 동조직이탈을 통고하는 한편 남동생 어영씨(47세, 외환은행사무합리화부차장)와 여동생 1명이 살고 있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여권수속을 시작했다. 어씨는 9월 18일 한국정부여권을 발급받고 9월 21일 羽田발 서울행 KAL기 탑승예약까지도 마쳤다. 그러나 조총련행동대원들은 하루뒤인 9월 18일밤 동경에 있는 한국음식점 「코리아·하우스」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는 어씨를 강제로 납치, 어씨의 자택으로 데려다가 엄중한 감시하에 전향변의를 강요하고 있다.

어씨의 자택감금은 납치로부터 20일이 지난 10월 10일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조총련은 북한에서 「부상」급의 고위직에 있는 어씨의 장인내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어씨의 전향변의를 강권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제4부 자 료

<남북대화 주요일지 (1975~1976)>

1975. 1. 6 남북조절위 평양측,  
평양측 부위원장 류장식을 조명일로 교체했음을 통고(직통전화)
1975. 1. 8 남북조절위 제9차 부위원장회의(판문각)
1975. 1. 14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다음 사항의 수락을 촉구  
①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② 휴전협정 효력존속 전제하의 유엔군사 해체  
③ 남북한 동시유엔 가입 또는 대한민국의 단독유엔가입 불반대  
④ 남북대화의 즉각 정상화
1975. 1. 24 남북적십자회담 제7차 실무회의
1975. 1. 24 남북조절위 서울측,  
북한측의 휴전선확성기 방송재개항의(직통전화)
1975. 1. 25 남북조절위 평양측,  
휴전선 확성기방송재개는 『남한측의 방송재개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강변(직통전화)
1975. 1. 25 남북조절위 서울측,  
휴전선 확성기방송재개에 재차항의(직통전화)
1975. 1. 28 남북조절위 서울측,  
북측이 휴전선 확성기방송을 다시 중지했다고 발표
1975. 2. 5 남북조절위 서울측,  
한국의 정규라디오·TV방송에 대한 북측의 전파방해항의(직통전화)
1975. 2. 7 남북조절위 평양측,  
한국의 라디오·TV방송에 대한 전파방해 사실부인(직통전화)
1975. 2. 17 남북조절위 평양측,  
동해 거진앞바다에서 한국경비정에 격침된 북한선박이 『표류중인 순찰선』이었다고 항의(직통전화)

1975. 2. 18 남북조절위 서울측,  
전기 선박이 동해 거진앞바다에서 검색에 불응 기관포사격을 가하면서 북상도주하다가 격침되었음을 통고(직통전화)
1975. 2. 27 남북조절위 평양측,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어선 침몰사건 항의(직통전화)
1975. 2. 27 남북조절위 서울측,  
문제의 어선은 한국해군작전수역에서 검색에 불응, 도주를 피하다가 한국해군함정에 충돌, 침몰했다고 통고
1975. 2. 28 남북적십자회담 제8차 실무회의
1975. 3. 14 남북조절위 제10차 부위원장회의
1975. 3. 24 철원동북방 1.3km 휴전선 비무장지대내 50m 지하에서 제2의 지하터널 발견
1975. 3. 26 남북적십자회담 제9차 실무회의
1975. 5. 8 남북적십자회담 제10차 실무회의
1975. 5. 29 남북조절위 평양측,  
제11차 부위원장회의(제10차 부위원장회의에서 5월 30일로 기히 합의) 무기연기를 통고(직통전화)
1975. 5. 29 남북조절위 서울측,  
제11차 부위원장회의 기합의대로 개최요구(직통전화)
1975. 5. 29 남북조절위 평양측,  
제11차 부위원장회의의 5월 30일개최 재차거부(직통전화)
1975. 5. 30 남북조절위 서울측,  
제11차 부위원장회의가 평양측의 불참으로 유산되었음을 비난하는 대변인 성명발표
1975. 6. 2 남북조절위 평양측,  
『대화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제11차 부위원장회의 연기한다』는 대변인성명 발표
1975. 6. 9 북적  
제11차 실무회의(제10차 실무회의에서 6월 12일로 기합의)를 7월 하순으로 연기할 것을 제의(직통전화)

1975. 6. 10 한적  
새로운 제11차 실무회의 일자제시를 요구(직통전화)
1975. 6. 11 북적  
『다음 회의일자는 형편따라 정하자』고 막연한 회답(직통전화)
1975. 7. 3 남북조절위 평양측 공동위원장 성명  
① 6·23선언은 민족분열선언이고 대화파기선언이다.  
② 대한민국이 반공정책 견지하는 한 남북대화는 불필요하다.  
③ 현 한국정부는 교체되어야 한다.  
④ 「대민족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1975. 7. 4 박대통령, 7·4남북공동성명발표 3주년에 즈음한 특별담화 발표  
① 북한은 침략전쟁준비를 중지하라.  
② 북한은 일체의 대남간첩침략행위 중지하고 국제사회에서 동족을 헐뜯는 민족자해행위를 중지하라.  
③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의 운영을 정상화하라.
1975. 7. 5 남북조절위 서울측,  
제11차 부위원장회의 7월 15일 개최제의(직통전화)
1975. 7. 9 남북조절위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 성명  
①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평양회의 8월 15일 이전 무조건 개최촉구  
② 조절위확대·개편을 포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재개되는 조절위원회에서 토의할 것을 제의
1975. 7. 10 한적  
제11차 실무회의 7월 25일 개최 제의(직통전화)
1975. 7. 14 북적  
제11차 실무회의일자를 7월 21일로 수정제의(직통전화)
1975. 7. 14 남북조절위 평양측,  
서울측의 제11차 부위원장회의 7월 15일 개최제의를 거부(직통전화)
1975. 7. 16 한적  
북적의 제11차 실무회의일자 수정제의에 동의(직통전화)
1975. 7. 21 남북적십자회담 제11차 실무회의

1975. 8. 8 남북조절위 서울측,  
제11차 부위원장회의 8월 25일 개최 제의(직통전화)
1975. 8. 22 남북적십자회담 제12차 실무회의
1975. 8. 25 남북조절위 서울측,  
평양측이 서울측의 남북조절위 제11차 부위원장회의 8월 25일 개최제의를 회답없이  
묵살했다고 발표.
1975. 10. 11 북적  
제13차 실무회의 10월23일 개최제의(직통전화)
1975. 10. 13 한적  
북적제의에 동의(직통전화)
1975. 10. 13 남북조절위 서울측,  
위원회운영 정상화방안 제의(직통전화)  
①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본회의 평양개최가 어렵다면 이를 판문점에서 열자.  
② 조절위 제4차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1차 부위원장회의 10월20일 개  
최하자.
1975. 10. 17 남북조절위 평양측,  
서울측 제의 거부(직통전화)
1975. 10. 23 남북적십자회담 제13차 실무회의
1975. 11. 28 남북적십자회담 제14차 실무회의
1976. 1. 26 남북조절위 서울측,  
남북조절위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 촉구
1976. 2. 10 남북조절위 서울측,  
최규하위원을 이용희위원으로 교체통고(직통전화)
1976. 2. 12 남북적십자회담 제15차 실무회의
1976. 3. 9 한적  
이범석수석대표가 지연태씨로 교체되었음을 통고(직통전화)
1976. 3. 31 한적  
판문점·서울·평양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쌍방 수석대표 면담제의(직통전화)

1976. 4. 7 북적  
한적의 수석대표 면담제의 거부(직통전화)
1976. 4. 10 남북적십자회담 제16차 실무회의
1976. 4. 12 남북조절위 서울측,  
남북고미술품·고고학자료 교환·공동전시 제의(직통전화)
1976. 4. 18 남북조절위 평양측,  
서울측 제의 거부(평양방송)
1976. 5. 13 한국 외무부장관성명  
① 한반도문제에 관한 당사자간 대화 촉구  
② 당사자 합의 없는 해결방법(「미·북한평화협정」 주장등)은 민족자결원칙에 위배됨을 지적.  
③ 북측의 휴전협정체제 와해기도 경고.
1976. 5. 27 남북조절위 서울측,  
북한측의 휴전선확성기방송부분재개(5월25일) 항의(직통전화)
1976. 6. 9 남북적십자회담 제17차 실무회의
1976. 7. 3 남북조절위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 7·4남북공동성명 4주년에 즈음한 성명  
① 남북조절위 운영 무조건 정상화 촉구  
②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해결촉구
1976. 7. 3 남북조절위 평양측, 「조국통일 민주주의진선」과 「연합성명」: 「대민족회의」 개최 주장
1976. 8. 15 박대통령 8·15경축사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의 어떠한 문제도 직접 당사자간의 합의나 양해 없이는 해결될수 없음을 깨닫고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고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라.』
- 1976 8. 16 북한, 공산측 유엔결의안 제출
8. 18 북한, 판문점도끼살인만행 자행
8. 20 남북적십자회담 제18차 실무회의
8. 21 한국의 우방국들, 별개의 한국문제 결의안 유엔에 제출



- 8. 21 김일성 8·18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 메시지 유엔군사령관에 전달
- 8. 30 동해에서 군사분계선 북방으로 표류한 어선 「신진호」 북한경비정들이 포격 끝에 나포
- 8. 30 북한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간의 남·북 직통전화의 신호호출에 응답치 않음으로써 동직통전화의 운용을 중단
- 9. 22 북한, 돌연 공산측 유엔결의안 철회
- 9. 22 한국의 우방들도 유엔결의안 철회
- 10. 19 남북적십자회담 제19차 실무회의

<북한의 주요 정전협정 위반사건 일지>

- 1953. 7. 27 정전협정 조인
- 1954. 8. 1 비무장지대서 북한군 미군 2명 살해
- 1955. 5. 10 북한, 조기잡이하던 우리 어선을 습격, 1척 침몰 4척 실종
- 1956. 11. 7 북한, 서해 상공서 야군기 2대 습격
- 1957. 5. 16 북한선박 연평도에서 한국어선 납치
- 1957. 7. 2 가평에서 북한 공작대 경찰과 교전
- 1958. 2. 16 KNA기 납북(3월6일 탑승자 36명중 26명 귀환)
- 1958. 4. 24 북한, 연평도에서 우리 어선 1척 납치
- 1958. 5. 8 서해안에서 무장간첩과 사격전
- 1958. 6. 16 동해안 저진리 해상에서 북한 함정과 포격전
- 1958. 9. 8 무장간첩 6명 출현, 해병대와 사격전
- 1958. 10. 6 인천 앞바다에서 무장간첩선을 나포
- 1958. 11. 7 북한, 어선 2척 어부 11명 납북
- 1958. 11. 18 경기도 제부도 근해에서 간첩선과 총격전, 장봉준경위피납
- 1958. 11. 25 동해에서 간첩선 나포
- 1958. 12. 6 동해에서 어선 7척, 어부 42명 납북
- 1959. 5. 30 산청군에 공비 3명 출현
- 1959. 7. 27 해군, 북한무장선 1척 격침
- 1959. 8. 19 서해에 북한 함정 불법납치
- 1959. 9. 5 휴전선 부근에 무장간첩 출현, 나뭇군 임상준 살해

1959. 9. 5 정읍에서 무장간첩 조경구 체포
1959. 11. 26 서해안에서 북한 간첩선 격침, 공작원 4명 생포
1960. 4. 30 동해안에 무장간첩 출현, 교전끝에 2명사살, 2명생포
1960. 5. 4 북한함정 3척 휴전선남방 2「마일」해상에서 우리 경비정을 포위 공격
1960. 7. 30 동해에서 공산군 어뢰정을 격침하고 공산군 수병 3명 체포
1960. 8. 24 연평도 서남방 해상에 북한 무장선 침입, 포격전끝에 격침
1960. 8. 26 경북봉화군 각화사에 무장공비 출현
1960. 9. 5 서울에 무장간첩 2명 출현
1961. 4. 7 동해에서 어선 6척 납북
1961. 4. 21 군산근방에서 「세이버」기 MIG기 3대로부터 피습
1961. 4. 22 판문점 북한경비병이 폐지어 통로를 지나가다가 그중 맨 나중에 따라가던 북한병 1명이 곁에 있던 「유엔」군측 경비병 「존클라크」1등병의 뺨을 치고 행패를 부려 양측 경비병 사이에 10분간 난투극
1961. 8. 28 북한군, 「유엔」군측 민정경찰초소 습격
1962. 3. 29 울산에서 간첩 상륙사건 발생
1962. 7. 7 동해에서 무장간첩선 격침
1962. 9. 5 분계선넘어 도전한 북한군 3명사살
1962. 9. 9 산청군에 무장괴한 출현하여 주민 4명 사살
1962. 11. 23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미군 2명 살상
1962. 12. 3 서해안에서 북한간첩 3명 사살
1962. 12. 23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함정과 교전, 아군 6명 사살

1963. 5. 17 「유엔」군 헬리콥터 북한에 피납
1963. 7. 29 휴전선 남방에서 북한군 공격으로 「유엔」군 3명 사상
1963. 7. 30 휴전선 남방에서 북한군 침입 총격전으로 쌍방 각각 3명 사상
1963. 8. 4 휴전선에서 북한군, 「유엔」군을 공격 2시간동안 교전
1963. 11. 13 북한군 휴전선에서 「유엔」군 공격 1명 사망 2명 중상
1964. 1. 14 한국공군 「제트」기, 서부 휴전선 상공에서 북한 대공포화에 맞아 추락
1964. 1. 25 판문점 관광객 최진영 피납
1964. 3. 20 북한, 백령도근해에서 어선 2척 납북
1964. 9. 19 양주군에 무장간첩 출현
1965. 3. 5 삼척해안 상륙하려던 무장간첩을 나포
1965. 4. 26 연평도 근해서 어선 제6 대영호납북
1965. 4. 27 동해안에서 북한 MIG기, 미기에 발포
1965. 7. 18 양주군 송추에 4인조 간첩단 출현
1965. 8. 22 외설악 중턱에서 무장 피한 5명이 민간인 4명 납치·난자
1965. 9. 27 안동에 무장간첩 출현(2명 살해·2명납치)
1965. 10. 11 문산에서 무장피한이 미군막사를 습격
1965. 10. 13 연천에서 피한이 국군 4명 살해
1965. 10. 24 양구에서 김두표중령 일가족 4명 피한에 피살
1965. 10. 25 인제에서 무장피한에 사병 1명 피살
1965. 10. 29 강화도앞바다에서 북한함정 습격으로 어부 109명 피납
1966. 5. 17 무장간첩 3명이 경남진양군에 출현

1966. 5. 24 강릉시내에 무장간첩 3명 출현
1966. 7. 29 북한 무장선(9척) 동해안에서 한국어선단 습격·해군 함정과 교전
1966. 8. 2 강원도 명주군에 무장간첩 3명이 출현, 1명 사살 2명 도주
1966. 11. 2 북한 공산군 비무장지대에서 수류탄공격(미군 등 7명 피살)
1966. 11. 22 북한 지상포대에서 동해 휴전선 남방의 명태잡이 어선단 포격
1966. 11. 29 북한함정 4척 동해 휴전선 근해에서 명태잡이 어선단을 포격, 1척(8명)을 납치
1966. 12. 27 북한군 군사분계선을 침입, 판문점 남방 「유엔」군 초소에 총격
1967. 1. 19 동해 휴전선 근해에서 어선 보호중이던 해군함정 「당포호」를 북한 지상포대에서 포격하여 격침
1967. 4. 10 중서부전선에서 북한군이 휴전선 침입, 교전끝에 3명 사살
1967. 4. 10 중동부전선에서 북한군 2명이 휴전선 침입, 1명 사살, 1명 체포
1967. 4. 13 화천북방에 60명내지 90명의 북한군 침입, 2시간 교전끝에 3명 사살
1967. 4. 14 서부전선 미군초소에 북한군 침입
1967. 4. 16 순위도 근해에 간첩선 출현, 9명 사살, 6명 도주
1967. 4. 28 서해에 침입한 북한 무장간첩선을 격침시키고 5명을 생포
1967. 5. 22 서부전선 미군막사 지역에서 북한군이 묻은 폭발물이 터져 2명 사망 69명 중경상
1967. 6. 23 임실에 간첩단 8명 출현, 교전끝에 3명 사살
1967. 6. 28 명주군 교하면에서 간첩 3명 사살
1967. 7. 1 중동부전선에서 무장괴한이 아군습격 7명 전사
1967. 7. 5 동부전선 전방초소에 북한군 20여명 내습, 아군 7명 전사, 11명 부상
1967. 7. 16 유엔군 전방 「병커」에 북한병 내습, 미병 3명 전사

1967. 8. 10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병이 미군 「트럭」 기습 공격, 전사 3명 중경상 17명
1967. 8. 28 북한군 서부전선 미공병대 기습
1967. 8. 29 서부전선에서 북한군이 묻은 지뢰에 미군 3명 사망, 4명 부상
1967. 9. 5 경기도 포천군내에서 무장간첩에 의해 경원선 폭파사건
1967. 9. 13 경기도 파주군내에서 무장간첩에 의해 미군 화물열차 폭발
1967. 11. 3 북한무장선 동해에서 우리 어선 2백척 기습총격 10척(60명)납북
1967. 11. 20 중부전선에 북한군 2개 분대 남침
1967. 12. 5 동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어부 공우영씨등 6명 사망, 8명 중상
1968. 1. 6 6~7일에 북한공산군 동해에서 어선 7척(어부 11명)납치
1968. 1. 11 북한군 속초근해에서 어선 3척 납북
1968. 1. 21 무장공비 31명 청와대습격코자 서울 청운동까지 침입(1월말까지 25명 사살, 1명 자폭, 1명 생포, 아방도 연대장 총경 등 전사, 민간인 5명 사망)
1968. 1. 23 미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동해 공해상에서 피납
1968. 2. 4 서부전선에 북한군 20여명 침입
1968. 4. 14 관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서 초소근무 교대자를 신고 「유엔」 군측 작전도로를 지나 가던 「유엔」 군 차량이 북한병의 공격을 받아, 탑승자 7명중, 미군 2명과 「카투사」 2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미군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북한측은 계획적으로 도로 양편에 북한병을 잠복시켰으며 대인지뢰를 매설했었다.
1968. 4. 14 북한군, 관문점 남쪽에서 「유엔」 군 「트럭」 기습 「카투사」 등 6명사상
1968. 4. 17 북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기습, 아군 5명 사상, 1명 실종
1968. 6. 17 연평도 근해에서 어선 5척(어부 44명)납치
1968. 8. 21 북한 무장간첩선을 서귀포에서 포착, 12명 사살, 2명 생포

1968. 8. 30 대간첩대책본부, 27~30일에 서부전선에서 공비 7명을 사살했으며 올해들어 156명을 사살 생포했다고 발표
1968. 9. 3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의 길에 떨어져 있는 북한병의 모자를 주워서, 이를 가까이에 있는 북한군초소에까지 찾아가 친절하게 전하려던 「유엔」군측 장교 3명이 북한병 20여명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대신 되려 돌팔매질과 주먹다짐을 받았다.
1968. 11. 4 대간첩대책본부, 1일과 3일에 서해안과 동해안 삼척및 울진지구에 수미상(후일100명 이상으로 판명)의 무장공비가 침투, 공비 11명을 사살, 아군도 4명(향군 첫 전사 1명 포함)전사했다고 발표
- 1968 11. 7 동해에서 북한정, 기관총 난사하며 어선 4척(어부 34명)을 납치
1968. 11. 8 동해에서 다시 북한함이 어선 7척(어부 52명)납치
1969. 3. 16 주문진에 무장공비출현, 경찰초소습격
1969. 3. 18 고무 「보트」로 해상 도주하던 공비사살, 시체9구 인양
1969. 4. 15 EC 121미해군 정찰기 동해에서 북한기에 의해 피격
1969. 6. 12 흑산도 앞바다에서 무장간첩선 나포
1969. 6. 14 전북 무안에서 무장공비 3명사살
1969. 6. 17 흑산도 북한무장간첩 잔당 6명사살
1969. 7. 30 판문점에서 북한경비병 40여명 행패, 「유엔」측 「애덤즈」소장에 주먹다짐
1969. 8. 17 미군 「헬리콥터」1대 서부전선에서 피격
1969. 9. 17 완도 남쪽에서 북한간첩선의 기습을 받고 우리경비정 침몰, 경관 등 7명 사망
1969. 9. 20 군산앞 오식도에서 무장간첩선 1척 나포, 공비 4명 사살
1969. 9. 24 흑산도 북방에서 북한 중무장간첩선 1척 격침
1969. 10. 14 흑산도 남쪽해상에서 북한 대형간첩선 격침
1970. 3. 23 경북 영덕에 수 미상의 북한 무장공비 침투, 2명 사살

1970. 4. 4 서해 격렬비도 앞바다에서 북한간첩선 격침, 15명 사살
1970. 4. 29 북한경비군 4~5명이 관문점 「유엔」 군측 기자실 부근에 침입 한국인 기자를 납치 하려다가 달려온 「유엔」 군 헌병들과 난투극
1970. 6. 5 연평도 서북방에서 해군함정(방송선)납북 (승무원 20명)
1970. 6. 22 서울에 무장공비 침입, 국립묘지 현충문에 폭발물 장치하려다가 실패, 1명 폭사, 2명 도주
1970. 6. 28 서해 군자만에서 무장간첩선 1척 나포, 간첩 6명 사살
1970. 7. 9 백령도 부근에서 어선 5척(어부 29명)납북
1970. 7. 28 동해 휴전선 남방 7 「마일」 해상에서 대형간첩선 1척 격침
1970. 10. 9 관문점에서 북한경비병난동으로 「유엔」 군 8명 부상
1970. 10. 10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중무장 간첩선 1척 격침, 공비 10여명 사살
1970. 10. 12 북한경비병과 노무자들이 군사정전위 본회의장 건물에 침입,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던 한국인 노무자와 「유엔」 군 헌병을 삼과 주먹으로 때려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힘.
1971. 1. 6 서해안 휴전선 남방에서 북한 경비정 우리어선에 기관포 사격, 1척 격침
1971. 5. 4 예비군을 가장한 무장간첩선이 인천에 상륙하려는것을 격퇴
1971. 5. 14 목호 동쪽 바다로 침투해오던 북한 무장간첩선 격침
1971. 6. 1 남해 해상에서 무장간첩선 격침, 우리 공군기 1대도 추락
1971. 9. 17 무장공비가 김포의 민가에 침입, 아군과 총격전, 2명 사살, 2명 도주
1972. 2. 4 대청도 서쪽 해상에서 북한함정이 우리어선 1척을 격침시키고 5척을 납북
1973. 3. 4 제주도 동쪽 3.5km에 위치한 우도에 무장간첩 2~3명이 출현, 해초건조장 경비원 1 명을 살해하고 도주
1973. 3. 7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업중이던 아군에 대해 북한군 불법사격, 국군 3명 사 상



1973. 4. 17 연천 서북방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하는 무장공비 2명을 사살
1973. 5. 5 완도군 동쪽 33km 떨어진 금당도에 북한 무장간첩 2명이 침투 주민 1명에게 관통상을 입히고 도주
1973. 11. 19 북한 해군 포함 1척이 새벽 백령도 동쪽의 우리 영해 침범
1973. 12. 1 북한은 군사정전위에서 우리의 서해 5도 수역을 북한 영해라고 주장
1973. 12. 10 북한 함정이 계속 3차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
1973. 12. 18 소청도 북쪽 해상에 포함 2척 침범
1974. 2. 15 북한함정 백령도서쪽 48km 공해상에서 한국어선 「수원」 32호등에 포함사격, 33호는 침몰, 32호는 납북
1974. 2. 16 경남통영 해안에 북한 무장공비 침투
1974. 3. 3 판문점을 시찰중인 「유엔」 군측 고위장성에게 북한병이 접근, 사진을 찍는것을 제지하자 부근에 있던 1백 20여명의 북한병이 집단적으로 몰려들어 행패를 부려 「유엔」 군측 경비병 4명이 부상, 「유엔」 군측 차량 4대 파손
1974. 4. 1 북한 해군함정 4척이 8일까지 4회에 걸쳐 서해 분계선 남쪽을 불법 월경하여 도발항해
1974. 5. 9 북한, 군사분계선 남쪽지역 상공을 비행중인 미군 「헬리콥터」에 포격
1974. 5. 21 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에 무장간첩 3명이 출현, 1명 사살, 2명 도주
1974. 5. 21 북한 해군함정 4척이 27일까지 4회에 걸쳐 서해 분계선 남쪽을 불법 월경하여 도발항해
1974. 6. 25 북한 해군함정 8척이 7월1일까지 7회에 걸쳐 서해분계선 남쪽을 불법 월경하여 도발항해
1974. 6. 28 북한 해군함정 3척이 어로 보호중인 우리 해경 소속 경비정 863호에 대하여 불법적인 공격을 감행
1974. 7. 2 북한 간첩선, 부산 송도 동남쪽 7 「마일」 해상에 침투, 우리 해군정이 추격 격침(우리 해군 1명이 전사, 3명 부상)

1974. 7. 18 김포 북쪽 우리 영공을 비행중인 KAL기에 북한 대공포 발사
1974. 7. 20 서해 군산앞 어청도 서쪽에 북한간첩선 침투, 공군 해군추격 3시간만에 격침
1974. 11. 15 북한,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쪽 1.1km 지점까지 지하 「콘크리트 터널」 구축(유엔군사발표)(20일 땅굴에서 폭발사고발생 김학철소령사망·미군장교 1명 실종)
1974. 12. 15 북한무장선 서해(인천서방 50마일)에서 암약하다 우리 해군이 발견 투항을 권고하자 자폭, 해군은 북한 무장선을 인천으로 예인
1975. 2. 15 강원도 거진 동쪽 3마일 해상에 북한무장간첩선이 어선을 가장하고 침범, 우리육·해·공군 합동작전을 펴고 격침 무장간첩 1명 생포
1975. 2. 26 북한선박 10척 백령도 서남쪽 23「마일」 지점에 침입, 1척 격침 9척 도주, 한편 북한 함과 「미그」기도 월경 도발하다 아군 경비정 출동으로 도주
1975. 3. 20 「유엔」군사, 북한 제2의 땅굴이 발견됐다고 판문점군사정전위에서 북한측에 항의
1975. 3. 21 북한으로부터 귀순한 김부성(북한노동당 연락부 7부소속 전투원 남파간첩 호송원)과 북한군 소위 유대윤등 2명이 땅굴은 전면전때 대량병력 투입, 대남간첩침투로, 공급로로 쓸 목적으로 뚫었다고 폭로
1975. 4. 29~5. 3 부산동래구 석담동 뒷산에 북한 무장간첩 2명 침투, 4일만에 모두 생포(4월 29일 부산에서 1명, 5월 3일 서울에서 1명)
1975. 6. 9 북한 「미그」 21기 2대가 백령도 상공을 불법침입, 선회비행한뒤 도주
6. 30 제364차 군사정전위 본회의장 밖에서 북한경비병 4~5명이 「유엔」군측 경비부사령관 「윌리엄·D·헨더슨」 소령에게 시비를 걸어 집단적으로 구타, 「헨더슨」 소령 중상
1975. 7. 12 북한선 1척이 서해 백령도 서북방 20「마일」까지 침범, 아군측이 경고사격을 가하자 북한 함정 5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서 호위 도주
1975. 8. 26 2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비무장지대 대성동 자유의마을 근처에 침입, 농민 김세유씨(23)를 납치
1975. 9. 11 북한 무장공비 수명이 전북고창군 상하면 해변에 출현, 교전끝에 1명을 사살하고 AK 자동소총 1정과 많은 실탄, 수류탄 1개, 무전기등을 노획

1975. 10. 6 전남신안군 대흑산도 서쪽 약20「마일」 해상에서 해안으로 접근중이던 북한 무장간첩선을 발견, 정선을 명했으나 불응하고 아군함정에 발포하여 해·공군 합동작전으로 격침
1976. 1. 23 2대의 북한 고속항공기가 서해 백령도 상공을 침범
1976. 4. 7 북한군 「탱크」 2대가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침범, 4시간동안 활동하다가 철수
1976. 6. 19 녹음기를 이용 아군측의 군사시설과 방위태세를 정찰하기 위해 3인조 무장공비를 중동부전선 아군지역에 침투시킴(3명 전원사살)
1976. 8. 5 북한,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아군초소에 약 10분간 2회에 걸쳐 포격
1976. 8. 18 북한경비병 약30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감독·경비하던 「유엔」 군측 경비병들에게 도끼와 곡괭이 등을 휘두르며, 덤벼들어 미군장교 2명이 무참히 살해되고 「카투사」 5명과 미군 4명등 「유엔」 군측 9명이 중경상

# 남북대화 제12호

(1976. 11 ~ 1977. 5)

# < 목 차 >

제1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	3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	3
제2부 남북대화 소식 .....	11
<남북조절위원회> .....	11
「남북 불가침협정체결 절차 토의하자」 서울 측, 조절위 조속 재개를 촉구 .....	11
이용희 위원 후임 김동조 특보임명 서울 측, 위원교체를 발표 .....	13
장기영 서울 측, 공동위원장대리 서거 .....	14
<남북적십자회담> .....	15
한적, 식량원조제의 수락을 북한측에 촉구 .....	15
제21차 실무회의의 경과 .....	20
제3부 그 밖의 남북관계 소식 .....	25
북한, 상투적인 위장평화공세를 재연 .....	25
<북한의 「남북정치협상」 제의 일지> .....	30
조총련계 재일동포, 한식맞아 모국성묘방문 .....	32

## 제1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북한에 식량원조 용의있다"

"남북한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

<박정희대통령은 197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막강한 국력배양을 바탕으로 5천만 동포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북대화의 정상화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측이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대화의 광장에 나와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대화재개를 거듭 촉구 하였다.

박대통령은 이어서 1월 12일 가진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공산집단은 우리가 제의한 남북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면서 「이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북한측에 대해 「미군철수가 전제되는 불가침협정체결을 위한 대화를 하자」고 말하고 「만약 서울이 회담장소로 부적당하다면 중간지점인 판문점이나 쌍방이 합의되는 장소에서 대화를 하자」고 제의했다.

또한 박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된 사실을 밝히고 「우리 정부는 순수한 인도적 입장에서 북한동포들을 위해 식량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북한측에서 받겠다면 우리에게 남아도는 쌀 1천 75만섬, 보리 1천 1백45만섬중에서 상당량을 원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중 남북대화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문> 지난해 북한은 유엔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갖가지의 추태를 부려 파국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외교는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주변 국가들의 국내 정세 변동으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해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교의 3대 기본 정책은 여러분이 잘 아실줄 압니다.

안보 외교, 경제 문화 외교, 통일 기반 조성 외교 이 세가지를 우리 정책의 3대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통일정책은 선평화, 후통일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몇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6·23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고, 또 하나는 1974년 8월 15일에 발표한 <평화 통일에 대한 3대 기본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남북 상호 불가침협정 제의>인데, 이것도 1974년 1월 연두 기자회견 때 바로 이 자

리에서 내가 발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과 기본 입장을 모든 나라들에게 널리 이해시키고 이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외교 활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과 원칙은 북한측에서 내놓은 것에 비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서 점차 그 이해와 지지도가 높아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측의 이 방안이 평화 지향적이라는 점 때문에 국제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측에서 들고 나온 통일 정책이라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허구에 가득찬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국제 사회에서 점차 그 설득력이 약화되고 지지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 문제를 다루는데 한국 대표는 참석시키지 않겠다든지, 한국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든지, 또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주한 미군을 무조건 철수해야 된다고 하든지, 또는 남북 연방제를 만들자든지 하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점차 국제 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31차 유엔 총회에서 그들이 먼저 냈던 결의안을 자진 철회해 간 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설득력이 점차 약화되고 지지도가 자꾸 떨어져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형세가 불리할 때에는 전술상 일시 후퇴하고 또 기회를 포착하면 반격하는 것이 상투 수단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철회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 제출하지 않으리라 예상하는 것은 우리의 속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이 또다시 도전해 오면 우리도 언제든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니뭐니해도 우리의 안보 외교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한·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와 상호 방위체제를 더욱더 긴밀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또한 한·일간의 기존 협력관계는 더욱더 돈독히 해 나감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앞으로 꾸준히 추구해 나갈 것이고, 기타 여러 우방제국들과 기존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공산권에 속하는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상호

문화 개방을 꾸준히 촉구해 나갈 것이고, 또한 제3세계 여러 나라와도 호혜 평등과 상호 협력에 바탕을 두고 관계개선과 경제기술 협력분야를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문> 북한은 작년도도 8·18도끼 만행 사건 등 극악 무도한 도발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이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우리의 안보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 8·18 만행 사건은 그들이 정치적인 어떤 선전 효과를 노려서 사전에 계획한 악질적인 만행이었다고 우리는 단정합니다. 이것으로 북한의 호전적이고도 야만적인 근성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들이 노리는 목적은 뻔한 것입니다.

국제 사회의 이목을 우리 한반도에다 집중시켜 세계여론을 현혹케 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돌리려고 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8·18사건 같은 것이 일어났느냐 하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즉 미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미군이 빨리 철수를 했더라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조성하려고 노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 한국이 지금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국력이 나날이 신장하는데 대한 그들의 초조감과 하나의 시기, 질투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방해해 보자는 것도 그들이 노렸던 목적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짓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결과는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는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 효과를 초래했으며, 결국 공산당들의 이 연극은 하나의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호전성과 비인간적인 야만성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지금까지 그들이 떠들어대던 평화 선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면이고 허위이고 허구라는 것이 폭로되었으며, 따라서 한반도정세에 대해서 그 동안 일부 외국 사람들 중에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 공산집단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과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족벌정치로 인한 내부권력투쟁이 지금 대단히 심각한 것 같고, 그들의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으며 외교적으로도 실패를 거듭한 것 등으로 그들은 지금 매우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사정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공산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일반대중의 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외신보도에 의하면 평양에는 1971년부터 매일 수 천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아방궁 같은 김일성궁전을 짓는다, 100만평 이상 되는 모스크바의 크레믈린 궁보다도 더 큰



무슨 궁을 짓는다고 하니 이래서야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없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강제 노동만 시키고 이런 궁전을 짓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자기 내부의 모순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그들 자신들도 모를 리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디에다 배출해야 하겠느냐, 그들이 엉뚱하게도 이런 것을 어떤 전쟁모험에다 호소해서 주민들의 불만, 또 자기 내부의 모순을 배출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특히 경계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무모한 불장난에 대비해서 우리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긴 안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역시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하는데, 대화를 하자고 하면 그 쪽에서는 언제나 무리한 난제를 들고 나와서 대화를 거절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반공법을 없애라느니, 국가 보안법을 없애라느니, 재판중에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라느니, 남한에 있는 미군을 즉각 철수하라느니.... 이처럼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결국 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와 요구 조건 가운데 가장 주요한 것은 남한에 있는 미군을 빨리 철수시키라는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북대화가 안되는 것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남북통일이 안 되는 것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대화와 통일에 대한 가장 큰 방해라는 것입니다. 속이 뻥히 들여다보이는 소리지요.

미군이 왜 이 땅에 와 있고, 왜 지금까지 돌아가지 않고 주둔하고 있느냐, 그들이 전쟁을 도발했기 때문에 미군이 이 땅에 왔습니다. 휴전하고 나서도 또 전쟁을 도발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 미군은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그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품고 있는 적화통일이라는 망상을 깨끗이 버리는 것이 근본문제입니다. 그 망상을 포기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미군철수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들의 의도를 한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새로운 제의를 또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에 제의한 바 있는 <남북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안>을 받아들이라, 이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 이 제의에 대해서 북한당국은 성의 있는 회답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남북 불가침협정 제의는 1974년 1월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연두기자회견에서 내가 제의했습니다.

그 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 번 이 제의를 되풀이 한 바 있지만, 북한측에서는 한결같이 여기에 대해서 거절해 왔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고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한 미군이 통일의 최대의 방해 요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제의하는 이 제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아마 남한에서 미군만 철수한다면 당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척척 간단히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들의 큰 오산이요 환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무슨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난 10여년 동안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가면서 그야말로 와신상담,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의 힘을 기르고 국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길 밖에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화통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이 사실만은 똑똑히 알고, 만의 일이라도 오산이 없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국군을 믿어 주시고 국민 모두가 확고부동한 신념과 자신과 의연한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 현재 남북 대화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계속 중단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남북대화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대화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평양과 서울 사이에 직통 전화가 한 선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작년 8·18판문점 사건 이후인지 언제인지 북쪽에서 끊어 버리고, 무슨 이유로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대화는 지금 실제 단절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열자고 몇 번 독촉을 했지만 저쪽에서는 잘 응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불응하면서도 가끔 똥딴지같이 한국은 빼놓고 미국과 직접 무슨 평화협상을 하자는 소리를 떠들고 나옵니다.

한국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사람끼리 앉아서 얘기하자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제3자와 얘기하겠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무슨 주체사상이 어떻고 자주성이 어떻고 늘 이렇게 떠드는데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사람과는 이야기 안하고 제3자하고 이야기하겠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주체사상 또는 자주성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미국도 여기에 응할 리가 없습니다. 한국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북한측과의 어떠한 대화 협상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속셈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면 미군을 내보내는 방법은 앞서 내가 제의한 남북 불가침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은 나가도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문제부터 먼저 다루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고, 대화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 사람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서울에 오는 것을 몹시 꺼려하는 모양인데, 공기가 나쁘니 뭐니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유일 것이고 서울에 오는 것이 만약에 싫고 서울이라는 장소가 부적당하다면 서울이 아니라도 좋다. 중간 지점인 판문점에서 해도 좋고 또 쌍방이 합의한 다른 어떤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요즘 북한 동포들은 우심한 식량난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영양 실조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차제에 인도적 견지에서 식량 원조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것은 또 남북대화의 재개를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외신 보도라든지, 또는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귀순한 귀순자의 진술, 또 북한을 최근에 다녀온 외국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는 모든 정치 문제를 떠나서 그야말로 순수한 인도적인 입장에서 북한동포들을 위한 식량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에 가족을 두고 월남해 온 동포여러분은 아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것을 찬성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도 북한동포들을 위해 원조할 수 있는 그만한 식량의 여유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도 아직까지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량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주곡인 쌀과 보리만은 그 동안에 우리의 증산정책이 성공해서 재작년부터 주곡은 완전히 자급자족이 되고 상당량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최근까지는 식량이 부족해서 그 동안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특히 미국의 식량원조에 우리가 크게 의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정부와 우리 농민들은 식량증산에 비상한 노력을 경주해서 신품질의 개발이라든지, 영농기술의 개선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식량 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 1975년부터 주곡인 쌀과 보리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우리 나라의 식량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5·16이 되기 전해인 1960년에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쌀의 총 생산량은 2천 130만석입니다. 평년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인 1975년에는 3천 200만석이 나와서 비로소 우리가 자급자족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3천 620만석을 생산해서 완전 자급자족을 하고도 약간의 여분이 생겼습니다. 3천 600만석이라는 것은 1960년의 2천 100만석에 비하면 약 58%, 거의 60%의 증산을 가져온 것입니다.

참고로 일제시대에 남북을 전부 합쳐서 그 때 생산된 통계 숫자를 보면 1천 500만석 내지 1천 800만석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는 국토의 절반인 남한에서만 일제시대에 남북 전체에서 생산된 양의 배를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 나라에서의 하나의 녹색혁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정부의 쌀 수급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작년에 우리가 먹고 남아서 넘어 온 쌀이 약 900만석, 금년에 우리가 생산한 것이 약 3천 600만석, 그래서 약 4천 500만석이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3천 300만석 정도를 소비하면 연말에 가서 남는 것이 쌀만도 1천 175만석이나 됩니다. 이것은 내년으로 다시 이월해야 됩니다.

이것은 쌀에 있어서의 여유라고 볼 수 있고, 보리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역시 작년에 우리가 소비하고 남아서 금년으로 이월되어 온 것이 1천 95만석, 작년에 우리가 생산한 것이 1천 300만석 그래서 2천 395만석 중에 역시 금년에 우리가 소비해야 할 양이 1천 250만석이니까 이것을 소비하고도 금년 말에 가서는 1천 145만석 정도가 여분이 생깁니다. 이것은 결국 내년으로 이월합니다.

즉 쌀이 1천 175만석, 보리가 1천 145만석, 도합 약 2천 300만석 정도가 금년 말에 가서 여분이 생겨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숫자는 우리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까지 전부 합친 숫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만 하더라도 쌀, 보리 합쳐서 약 1천 500만석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 우리는 식량 자급도에 있어서 약 80%인데 이것은 일본보다도 우리의 자급률이 더 높습니다.

이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측에서 받겠다고만 한다면 이 중에서 우리는 상당량을 원조로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가 잘 안가는 점이 있다면 우리가 알기에 북한에서는 지금 식량 소동이 나고 있지마는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쟁용 비축

식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우선 이것부터 풀어서 먼저 먹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식량 과동을 겪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북한이 지금 식량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의하는 식량원조를 북한당국에서 받겠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제2부 남북대화 소식

### <남북조절위원회>

「남북 불가침협정체결 절차 토의하자」 서울 측, 조절위 조속 재개를 촉구

남북조절위원회 장기영 서울 측 공동위원장대리는 1977년 1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의 추진절차 등 제반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평양 측에 촉구했다. 또한 장기영 공동위원장대리는 남북 직통전화를 조속히 재개통시킬 것도 요구했다.

장기영 공동위원장대리의 성명문 내용은 전문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일 연두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새 제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박대통령께서는 남북간의 보다 안정된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상호 불가침 협정의 체결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만약 북한측이 이를 수락, 불가침협정이 정식 체결된다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대통령께서는 말씀한 바와 같이 미군이 한국에 온 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6.25무력남침을 격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미군이 아직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계속되는 무력남침 기도를 저지, 봉쇄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본인은 지난 1974년 1월 18일 박대통령께서 남북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을 처음 제의했을 때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동 제의가 주한미군철수문제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 이상 이제는 북한측이 우리의 불가침협정체결제의를 거부할 구실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오늘 북한측에게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의 추진절차 등 제반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어 본인은 북한측에게 남북직통전화를 조속히 재개통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본인은 이상에서 밝힌 본인의 건설적인 제의에 대해 북한측으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회답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평양측은 이상의 장기영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의 제의에 대해 회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간접적인 반응의 표시로 2월 1일자 「평양방송」 보도에서 서울 측의 동 제의가 「남한당국의 분열주의적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방하고 평화통일실현을 위한 근본대책의 사전보장을 주장하는 등 현실을 외면하는 생트집을 되풀이하면서 그들의 거부태도를 명백히 했다.

이용희 위원 후임 김동조 특보임명 서울 측, 위원교체를 발표

남북조절위원회 장기영 공동위원장대리는 1977년 1월 28일 지난해 12월의 개각때 국토통일원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 서울 측 위원직을 사임한 이용희 위원의 후임으로 김동조 대통령특별보좌관을 임명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 측 위원으로 새로이 임명된 김동조씨 (1918년생)는 일본구주대학교를 졸업하고 1951년 이후 외교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일대사, 주미대사, 외무부장관을 역임한 뒤 1976년 대통령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우리 나라 외교에 많은 공적을 쌓은 중진이다.



## 장기영 서울 측, 공동위원장대리 서거

남북조절위원회 장기영 서울 측 공동위원장대리가 지난 4월 11일 상오 8시 10분 자택에서 심근경색증으로 향년 61세로 별세했다.

고 장기영 위원장대리는 서울 태생으로 선린상업을 졸업, 은행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디딘 후 1950년 한국은행 부총재, 1952년 조선일보사장, 1954년 한국일보창업, 1964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1967년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위원,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등 언론인, 체육인, 경제·정치인으로 많은 공적을 남겼다.

고 장기영 위원장대리는 197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공동위원장회의에 이후락 공동위원장의 보좌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으며 1972년 11월 30일 남북조절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됨에 따라 서울 측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이후 1973년 12월 3일 이후락 공동위원장의 위원장직 사임에 따라 별세하기까지 공동위원장대리로서 1973년 8월 28일 평양 측의 대화거부선언 이후 정체상태에 놓인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하여 헌신하여 왔다.

<남북적십자회담>

한적, 식량원조제의 수락을 북한측에 촉구

<대한적십자사 이호 총재는 1977년 1월 31일 박정희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에의 식량원조 제의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측이 우리 정부의 제의를 받아 들인다면 대한적십자사는 우리 정부의 위임을 받아 북한동포를 위한 식량원조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데 최 대한 봉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북한측이 인도적 입장에서 수락할 것을 촉구했다.

이호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담화문 내용은 전문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대한적십자사는 1971년 8월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성립된지 5년 반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간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은 본 회담이 중단 된지 3년반이 되도록 정상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실무회의마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본인은 동족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적십자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유감스런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본인은 그 동안에도 조총련계 제일 동포들의 모국 방문 등을 포함한 이산가족 찾기 사업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 거족적인 지지 속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마침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금년도 연두기자회견을 통하여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우리 정부가 모든 정치적 문제를 떠나 순수한 인도적 입장에서 북한동포들을 위한 식량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적십자의 기본사명이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여 인류를 재난으로부터 구호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인도주의의 구현에 있을진대 본인은 금번 박대통령의 북한동포들을 위한 식량원조 제의에 대하여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적 견지에서 이를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인은 북한측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우리 정부의 제의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는 바이며 아울러 북한측이 우리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대한적십자사는 우리 정부의 위임을 받아 북한동포들을 위한 식량원조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데 있어서 최대한 봉사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북한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북한측은 이러한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인도적 입장에서 식량원조 수락촉구」 담화에 회답을 보내오지 않았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식량원조 용의천명과 관련하여 「평양방송」의 2월 1일자 보도에서 「이는 반공소동의 일환인 동시에 남한의 심각한 식량위기를 은폐하며 군량미 비축을 위한 인민수탈을 강화하자는 책동의 산물」이라고 모략을 하며 또한 「지금 남한에서는 문전걸식하는 사람들의 대열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 「여기 저기서 사람들이 굶어죽는 참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등 허무맹랑하고 악랄한 욕설과 함께 오히려 대한민국의 식량사정을 왜곡·헛뜬음으로써 이에 대한 거부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면 지난 1월 12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모든 정치문제를 떠나서 북한동포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식량을 원조할 용의가 있다」고 한 박정희 대통령의 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입각한 제의를 외면하고 엉뚱하게도 대한민국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양 왜곡 포함하고 있는 오늘의 북한의 농업현황과 식량사정은 과연 어떠한가?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이나 또는 자유를 찾아 월남한 귀순자들의 진술과 외신보도를 종합하여 보면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식량의 자급도를 높이기 위하여 「알곡」 증산과 절약투쟁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노동에 의한 철저한 배급제도를 실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농경지의 부족, 비료 및 농약의 부족, 노동력의 부족, 영농기술의 미숙 등 제반여건으로 농업의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 지난 1946년 토지개혁을 단행한 이후 소위 「사회주의적 형태의 농업경영 체제」로 내세운 「협동농장」은 농민들의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착취하는 강제수용소로 전변함으로써 농민의 반항심을 높여 노동의욕을 감퇴시켜 생산저하의 악영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농경지의 실태를 보면 한반도 총면적의 55.4%를 차지하는 북한지역은 대부분 산악지대로서 면적 1천 2백 33만정보 가운데 77.5%인 9백 58만정보가 산악지대이고 농경지는 불과 17%인 2백9만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북한은 최근 수년동안 전 주민을 총동원, 「다락밭」 조성 등 개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전쟁준비에 광분하여 중공업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여 옴으로써 화학비료생산은 원시상태를 탈피하지 못하여 절대량의 부족과 적기공급의 불가능을 초래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여건 속에서 북한농업이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식량부족 현상을 누적시켜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로 북한은 소위 6개년 경제계획의 조기달성을 목표로 서구로부터 각종 대형 「플랜트」 도입에 힘써 온 반면 수출의 대종을 이루던 주요 광물들의 국제가가 하락으로 빛은 극심한 입초현상과 외화고갈에 따라 상당량의 쌀을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은 김일성이 1975년 1월의 소위 「농업열성자대회」에서 「한 알의 곡식이라도 아껴 전쟁을 대비한 식량비축에 힘쓸 것이며 올해는 꼭 1백 만 톤의 균량미를 비축하자」, 또는 「농업생산을 더 늘려야 식량예비를 더 많이 마련하여 통일의 대사면을 보다 준비있게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남침준비를 위한 식량비축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식량의 배급 및 수송체계의 불비와 혼란이 또한 식량폭동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는 북한의 지리적, 기상적 약조건에 설상가상으로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한 혹심한 냉해와 가뭄의 영향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온갖 허위통계숫자나 선전으로 그들의 비참상을 은폐하는 한편 갖가지 구호로 식량 수탈을 합리화하며 허기진 주민의 호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흥남항에 기항했다 돌아 온 서방측의 한 선원에 의하면 「배안에 이질이 생겨 환자를 현지 병원에 입원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 병원 간호원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염치 불구하고 환자가 먹다 남은 식사를 훔쳐먹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설마 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보니 의사들은 보리가 약간 섞인 옥수수밥을, 간호원들은 옥수수와 수수로 된밥을 먹고 있었으며 쌀알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어찌다가 일본의 친지들에게 전달된 북송교포의 편지는 한결같이 「목숨만이라도 붙어 있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생존권을 찾는 울부짖음으로 가득차 있는 실정인 것이다.

실례로 북한은 1972년부터 흉작으로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노동자, 사무원에 1일 600g씩 배급하던 식량을 1개월 중 4일분을 공제하여 26일분만을 지급, 성인 1일 배급량을 사실상 520g으로 줄여 버렸다.

이와 같이 양을 줄이는 동시에 지난해 9월 1일 부터는 종전 15일 배급을 1일 배급제로 바꾸어 직장에서의 출퇴근상황과 노동상태를 반영,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에는 배급을 주지 않으며 지각시에는 1회에 200g씩 감량한다는 것이다. (※표 참조)

<북한의 하루 식량배급 기준 표>

(76년말 현재)

대상	배급량	쌀 : 잡곡 비율
당 간부 및 고급관리	800g	10 : 0
군관 (장교)	600	4 : 6
사병	750	4 : 6
대학교원 및 광산노동자	700	5 : 5
중노동 및 광산노동자	700	3 : 7
일반노동자	600	3 : 7
사무원	600	3 : 7
대학생	500	3 : 7
중·고등학생	400	3 : 7
인민학생	300	3 : 7
부양가족	300	3 : 7
유아	100	3 : 7

※ ① 위의 표는 기준치이며 실제로는 1개월 분에서 4일분을 균량미로 공제하고 다시 1년분에서 1개월 분을 2중으로 공제한 경우가 많음.

② 쌀과 잡곡의 비율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실제로는 2:8의 비율로 배급한 예가 더 많음.

배급식량의 비율도 백미 2대 잡곡 8로 떨어져 북한동포들의 주식은 옥수수이고 부식은 간장, 된장, 소금 등 조미료를 주로 한 저칼로리의 조식이며 육류라고는 소위 그들의 「국경일」에만 소량 지급되어 영양상태가 형편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주민들은 소위 「천리마운동」, 「속도전」 등 김일성의 무력적화통일야욕을 위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더우이 식량부족으로 굶주림까지 겪친 나머지 주민의 60%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림으로써 영양소결핍증이라는 「펠라그라」 병 환자가 속출하며 신생아나 어린이들 중에는 기형아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귀순한 이홍보씨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이와 같이 허기에 지친 북한의 동포들에게 양곡을 원조함으로써 기아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한 박정희 대통령의 영단도 바로 이러한 상황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처참한 실정과는 달리 우리는 3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성과로 이제 는 중진권에서 선진권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어 식량사정만 보아도 주곡인 쌀·보리는 이미 1975년부터 자급목표를 달성하고 식량자급도는 80%나 되었으며 금년에는 쌀, 보리만도 약 2천 3백만섬이란 여분이 생기게 된 것이다.

농민들의 굳은 의지, 정부의 적절한 시책 및 과감한 투자로 종자개량, 비료·농약의 충분한 공급, 농업의 기계화촉진 등은 단당 생산량이 423kg으로 세계 수준으로 이끌어 올린 것이다.

그 결과로 작년의 심한 한해에도 우리는 쌀을 1975년도보다 11.7%나 많은 3천 6백여만섬을 생

산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측은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북한주민들을 위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강변을 중지하고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순수한 인도주의로 허심탄회하게 제의된 박대통령의 식량원조제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제21차 실무회의의 경과

「관문점 또는 제3의 장소에서라도 본 회담을 조속 재개하자」  
한적, 새해 첫 실무회의에서 회담진전을 촉구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들은 1977년 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5분까지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새해 들어 첫 본회담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새해 들어 첫 본회담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적십자사 대표들은 ①본회담의제 제1항을 전제조건없이 조속히 토의할 것과 만약 이에 호응할 수 없다면 시범사업으로서 「노부모사업」 「성묘방문단의 상호교류」 등의 실시문제를 우선 토의할 것 ②기존합의에 따라 서울에서의 제8차 본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과 굳이 거부한다면 잠정적으로 관문점이나 쌍방이 합의하는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고 ③ 남북직통전화와 관문점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 대표들은 여전히 이와 같은 제의에 관심조차 표시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문제들을 들고 나와 회담장을 정치선전무대로 만들고 회담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였으며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을 「민족분열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주한미군 철수 및 핵무기 제거, 반국가사범 석방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도주의 회담을 할 수 없다고 강변하며 본회담 재개와 의제토의를 거부했다.

쌍방은 다음 제22차 실무회의를 4월 28일에 열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제21차 회의에서 있었던 김연주 대한적십자사 교체수석대표의 발언내용이다>-편집자 주-

우리는 오늘 1977년의 새해를 맞이해서 남북적십자회담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다듬어 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측이 여러 차례 되풀이 강조한 바와 같이, 남북적십자회담의 기본목적은 남북의 1천만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길을 열어주는데에 있으며, 이와 같은 인도적 사업을 통해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숭고한 민족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남북적십자인들은 서로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야 하며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를 토대로 하여 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측은 이러한 정신자세로 회담에 임할 때 쌍방간에 존재하는 대립과 불신을 극복할 수 있으며, 상호이익의 공통점도 발견해 낼 수가 있고 남북간의 인위적 장벽도 평화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일찌기 「1천만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창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과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며, 우리측의 이와 같은 기본입장은 회담의 전과정을 통하여 시종 변함없이 견지되어 왔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함으로써 남북간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긴장과 대립을 완화하며 분단의 장벽을 평화적으로 제거하려는 우리측의 기본입장은 본회담 재개문제와 본회담 의제토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난 예비회담 과정에서 우리 대한적십자사대표단은, 남북적십자회담이 안고 있는 중대한 역사적 사명과 의의를 살리며,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본 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적십자인들은 4반세기 동안 남북을 갈라놓은 인위적 장벽을 뚫고 일곱차례에 걸쳐 「서울, 평양」을 왕래하면서 본 회담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남북적십자본회담이 중단되지 않고 그 동안에도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면 「서울, 평양」간의 「대화의 통로」는 지금쯤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의 통로」로 변모했을 것이며, 이 길은 머지않아 우리겨레 모두의 자유로운 남북왕래와 민족통일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애써 닦아놓은 「대화의 통로」를 왕래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 평양」간의 통로가 차단된 이후 남북대화는 계속 침체일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중단된 이후의 지난 3년간을 돌이켜 볼 때 남북간에는 그 어느 때 보다는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었으며 대화의 분위기 또한 대단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교착과 긴장고조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동족간의 불신과 반목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5천만 겨레가 염원하는 이 땅의 평화정착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회담 의제토의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도, 어디까지나 적십자인도주의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남북공동성명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의제토의과정에서, 남북의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바로 보고 공통점을 찾으며 이산가족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먼저 긴급한 문제와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토의 해결해 나감으로써 훌륭한 경험과 신뢰의 기반을 쌓아 나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고, 불신과 적대감정이 팽배한 오늘의 남북관계에서 볼 때,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것뿐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측은 바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산가족문제를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적이며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업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오래 전부터 제의한 바 있는 쌍방적십자주관하의 「이산가족 심인사업」을 비롯하여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재회사업」, 「이산가족 성묘방문단 교류사업」, 「이산가족 사진교환사업」 등은 모두가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긴급한 사업일 뿐 아니라, 남북의 상이한 체제나 조건,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실천가능한 인도적 사업들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인도적 사업들이 단계적, 점진적으로 실천된다면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더불어 남북간의 대립과 불신도 점차 가셔질 것이며, 인적, 물적교류가 확대됨에 따라서 결국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귀측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처럼 30년동안 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독일 국민들은 동서간에 서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있으면서도, 수천만에 달하는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처음 소수의 노인들로부터 시범적으로 착수한 「고향 및 가족방문사업」이 지금은 전체 독일 국민들의 자유왕래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배달민족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한 민족일진대 남들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래에 와서 우리 나라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의 문호개방정책을 선언한 이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중국과 소련 그리고 동구라과 공산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도 국내의 가족, 친척들과 자유로운 통신과 편지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제작년 추석명절부터 시작된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방문이 연일 확대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내에는 인도주의와 혈육의 정을 가로막는 그 어떤 조건환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으며, 오히려 그와 같은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얼마나 합심노력하고 있는가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귀측이 들고 나오는 이른바 「분위기론」이나 「조건환경론」은 아무런 근거도 설득력도 없는 주장으로써, 남북적십자본회담의 정상화와 본회담의제의 본격적 토의를 기피하기 위한 구실에 불가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또한 이 기회에 귀측이 지난 5년동안 순조롭게 운영되어온 「서울, 평양」 간의 남북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운동을 중단시키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그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고 있음을 재차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일반적 조류는 지난날의 냉전적 대결을 지양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문호개방과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은 동시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무모한 전쟁정책과 폭력노선을 배격하고 일체의 분쟁을 당사자간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해방을 맞이한지 30년이 지난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장벽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겨레와 혈육을 갈라놓은 인위적 장벽은 좀처럼 건히지 않고 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바와 같이 조국통일문제를 「자주, 평화, 민족단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한 「남북조절위원회」는 1973년 8월 이후, 3년이 넘도록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동안 남북간의 긴장상태는 더욱 격화일로에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개발과 창조와 건설을 위하여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는 이때에 오직 우리 민족만이 한 강토안에서 대화를 거부하면서 계속 적대적인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거슬리고 5천만 겨레의 소망을 외면하는 이와같은 사태의 악순환은 하루빨리 중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해방」이나 「혁명」이라는 미명아래 통일문제를 폭력과 전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며 세계적 조류에도 역행되는 것임을 명백히 해 두고자 합니다.

무모한 폭력주의는 시대착오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편도 자기체제를 남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또 「남북의 당사자가 직접 참가하지 않는 통일문제의 해결」이란 절대로 용납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생존하고 발전하며 번영하는 길은 서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에 대한 한결같은 국제여론은 하루속히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남북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통일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적십자들이 이와같은 평화정착과 조국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길은 우선 중단된 본회담을 하루속히 재개하고 본회담 의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북한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

나는 이상의 취지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첫째로, 본인은 본회담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토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본인은 아울러 만약 귀측이 본회담 의제 제1항의 무조건 조속토의에 호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선 시범사업으로서 「남북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의 상호교류」, 「노부모사업」 등을 실시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둘째로, 본인은 본회담 재개문제 있어서 이미 쌍방이 합의한대로 「서울에서의 제8차 본회담을 개최」 하는데 조속히 호응해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만약 귀측이 「서울회담개최」를 굳이 거부한다면 귀측 입장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본회담을 판문점 또는 기타 쌍방이 합의하는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과 같은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제안은 그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인도적 회담을 바로 잡고,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하루 빨리 재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이 기회를 빌어 작년 8월말 이후 정상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서울, 평양간의 남북 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킬 것을 다시 한번 귀측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금년이야말로 우리의 대화가 정상화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측의 정당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합니다.

### 제3부 그 밖의 남북관계 소식

북한, 상투적인 위장평화공세를 재연

※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속셈

북한은 지난 1월 25일 평양에서 소위 「정당·사회단체」 들을 동원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남조선 제정당·사회단체와 해외동포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과거에도 수없이 되풀이 해옴으로써 이미 그 저의와 허구성이 드러난 상투적인 이른바 「남북정치협상회의」 를 제의했다.

이번 북한의 제의는 지난 1월 12일 박정희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식량원조제의 등 일련의 제의에 몰린 나머지 교육지책으로 내어놓은 역선전에 불과한 위장 평화공세의 되풀이인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남북불가침협정과 같은 빈(공) 말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군은 무조건 철수되어야 한다」 는 판에 박은 주장으로 박대통령의 불가침협정체결 제의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으며, 둘째로 「지금까지의 남북대화를 통해서 더 얻어낼 것이 없다」 는 억지로 남북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본심을 드러냈고, 세째로 이번 제의의 대상을 한국정부 당국이 아니라 「남한의 제정당·사회단체 그리고 해외동포」 들로 규정하고 「남한이 반공정책을 포기한다면 남한측이 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는 농간으로 7·4공동성명의 정신을 위배하여 내정간섭을 일삼고 우리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키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제의는 그들의 이른바 「평화통일」 전략으로 내놓고 있는 「한국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통한 현정부의 도괴와 용공정권수립, 그리고 협상을 통한 적화통일」 이라는 「통일전선전략」 의 「패턴」 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대남전략 수행의 한 과정에 불과하며 이를 위한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들 제의의 내용을 보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것」 임을 전제로 ① 북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과의 대연합 ② 남북간 긴장상태 완화 및 핵전쟁 위협의 제거 ③ 민족적 대단결의 분위기 조성 ④ 각 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인민들로 구성된 「남북정치협상회의」 소집 등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제의내용의 허구성과 함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들의 저의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첫째로 「통일은 북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해 이룩될 수 있으며 사상과 정견·제도가 다르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단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역량의 연합은 「민족분열을 영구화하려는 책동을 짓부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유력한 추진력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북의 「사회주의역량」이란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을 의미하며 남의 「애국적 민주주의역량」이란 말할 것도 없이 반정부 내지는 반국가적인 세력,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동조하는 공산분자들의 세력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대연합」을 실현하자는 것은 먼저 「남한의 적화혁명」 다음에 「통일달성」이라는 오늘날까지 집요하게 그들이 기도하여 온 대남적화의 전략전술을 그대로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는 공산당조직이 있는 것처럼 허구적인 선전과 선동을 일삼음으로써 남한의 분열과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책동하는 한편 통일은 남한의 공산세력이 형성되었을 때 그들과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와같은 주장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이제까지 줄곧 대한민국정부가 「민족분열 책동」을 하고 있다고 왜곡 선전하면서 반정부적인 책동을 고무·찬양하여 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국민과 정부간의 이간과 대한민국정부의 타도를 획책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둘째로 「남조선에서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살인무기들은 즉각 철수되어야 하며 미국군대는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 또 「군비축소회담을 열도록 해당 군사당국에 요구할 것을 제의한다」며 「북과 남 사이에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자」 운운 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긴장고조는 북한의 김일성집단의 대남도발과 전쟁준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갖은 허위선전과 중상모략으로서 그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또 「핵전쟁 위협의 제거」 운운하면서 마치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이 존재하고 이 위협이 남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적반하장 격인 허위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함으로써 남한에다 힘의 공백을 가져오게 하려는 그들의 대남적화 야욕을 여실히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북한 김일성집단이 도발한 6.25동란이라는 무력남침을 저지하고 응징하기 위해 참전했던 것이며 휴전 후 24년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그들이 무력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휴전 후 3만5천건이 넘는 휴전협정 위반사건을 비롯하여 남침땅굴의 굴착, 8.18 판문점 도끼살인 만행사건 등 대남도발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도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고히 하여 북으로부터의 여하한 위협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으므로 미군의 철수가 마치 대남침공의 기회라도 되는 듯한 종래의 망상을 버리고 대한민국이 제안한 남북상호 불가침협정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한반도내의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정착에 이바지하는데 북한당국은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민족내부 불화의 근원을 없애고 민족적 대단결 분위기의 조성」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각 정당·사회단체·각계각층 인민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측이 떠들고 있는 「민족적 대단결의 분위기의 조성」이란 대한민국 내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자유활동보장, 투옥된 반국가사범들의 무조건 석방, 반공정책 중지, 등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에는 기본적인 자유는 물론 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심지어 휴식의 자유조차 없다.

뿐만 아니라 소위 「김일성 유일사상」을 떠벌리며 사상 유례없는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4중, 5중의 감시와 통제하에 북한주민을 가혹한 노동과 착취, 우상화 놀음에 동원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그에 빗나가면 무자비한 숙청을 일삼고 있다.

여기서 북한측이 반국가사범들을 석방하고 반공정책을 중지하라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과 공산분자들의 활동을 합법화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음흉한 흉계에서 나온 것이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관문점이나 그 밖의 합의되는 임의의 장소에서 위임된 연락대표들의 예비적 실무회의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은 새로운 제의인양 보이나 대한민국정부가 6.23선언을 취소하고 반공정책을 중지하고, 반국가사범들을 석방하고, 자주국방정책을 포기해야만 남북대화도 재개할 수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소위 「남북정치협상회의」에 대한민국정부대표가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은 대한민국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주장과 하등 다름이 없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는 1948년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제의하여 협상사기극을 벌린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칭만 분식시켜 사용해온 상투적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으로서 종전의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나 「대민족회의」 주장과 그 내용에 있어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남북정치협상」 제의 일지(※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대남위장 평화공세는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이 반복되어 왔다.

이와같은 위장평화공세는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시간을 얻기 위해 또 상대방이 회심을 하도록 하기 위해 평화적인 거짓 제안으로 현혹시킨 뒤에 이를 이용 전면공세로 상대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공산화하는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산화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공산화과정에서 이러한 위장평화공세전략이 예외없이 원용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는바 1975년 4월 인지반도 공산화 과정에서 더욱 역력히 실증되었다.

월맹공산주의자들은 「파리평화협상」이란 회담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전쟁 종식을 구실로 갖가지 위장 제안을 늘어놓았으나 거기에는 오직 미군의 철수축진과 월남군의 전력약화를 유도하는 주장에 일관하므로써 겉으로 평화지향적 노선임을 위장하였고 그 틈을 타서 재침준비와 전열정비를 진행, 소위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반정부 세력의 선동 및 월남정부의 무력화에 주력하는 등 궁극적인 월남 공산화 흉계를 진행시켰던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월맹측의 미군철수와 군사력 감축이라는 전력약화계략과 아울러 평화협상 제안이라는 양면적 전략이 바로

평화를 위장하고 무력으로 침공하는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서 오늘날 북한이 상호불가침협정을 거부하면서도 군비축소와 정치협상을 주장하는 양면전략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에 있어서도 북한의 대남위장 평화공세는 매우 다양하게 간단없이 전개되어 왔다.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인 6.25동란을 일으키기 직전인 1950년 6월 7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소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평화통일에 필요한 조건과 수단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 협의회를 갖자」고 제의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는가 하면 한때는 「남북의 국회를 무조건 통합하여 통일하자」는 주장을 함으로써 마치 「평화통일」을 위하여는 그들이 적극적인 양 선전공세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불과 수일만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달성하고자 우리 민족사에 씻지 못할 처참한 6.25동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953년의 휴전이후에도 북한공산주의자들은 4.19와 같은 우리의 정정이 혼란하였던 시기를 틈타 집요하게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여 옴으로써 호시탐탐 적화통일의 기회를 노려왔던 것이다.

지난 1975년 인지반도의 적화 직후 남한을 침공하려는 호전적 기세를 보인 김일성이 동년 5월 30일에는 「알제리」 정부 기관지 「엘·무자하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연방제」 실시를 주장했던 사실은 위장평화 공세를 실증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때 그때의 시세에 편승하여 교묘히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여 왔다.

그러한 그네들이 이번에 왜 또다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들추며 우리의 남북불가침협정체결 제의를 반대하는지 그 저의를 규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집약될 것이다.

첫째로 :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박대통령의 타당성 있는 제의에 대하여 이것이 미치는 대내외의 지지와 호응이 예견되자 상대적인 그들의 호전성을 은폐해 보려는 단막극적인 꾀변이었던 것이다.

둘째로 : 「대민족회의」, 「정치협상회의」,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등 이미 가공적이며 기만적인 것으로 드러난 일련의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한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판단을 오도해 보려는 간계임을 들어낸 것이다.

세째로 : “핵전쟁위험의 제거” 운운으로 한반도 긴장상태의 원인을 한국측에 전가시키며 북한 스스로는 「카터」 미대통령의 한반도평화정책에 영합하는 듯 위장하므로써 국제여론을 오도하려는 기도임을 들 수가 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반국가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사회혼란을 유발시킴으로써 국론의 분열, 국력의 분산으로 인한 약화를 노리는 술책인 것이다.

이와같이 북한의 최근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는 그 내용면에서 보아 종래의 위장제의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국내의 여론을 현혹시키는 효과를 노려 그 용어와 표현을 때와 장소에 따라 분식 또는 변조시키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남북대화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입장과 방침은 1970년 8월 15일 박정희대통령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구상선언, 1971년 8월 12일의 남북적십자회담제의에서 비롯한 남북대화의 추진, 1973년 6월 23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외교정책선언, 1974년 1월 18일의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제의, 1974년 8월 15일의 평화통일을 위한 3대 기본원칙 천명 그리고 지난 1월 12일 남북불가침협정체결을 전제한 주한미군 철수 불만대 등 일련의 평화지향정책에 바탕을 두므로써 우선 평화정착과 평화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와 협력관계를 점차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상호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그럼으로써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남북한은 일시에 융합될 수 없는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가진 두 개의 이질적인 존재이며 또한 한국의 통일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의 합의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지금과 같은 평화부정적 자세와 대화거부적 태도를 조속히 버리고 민족적 양심과 양식에 입각하여 대화의 광장으로 돌아와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며 이들 대화기구 안에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을 제기하고 논의하며 그 해결을 모색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남북정치협상」 제의 일지>

- ▲1948. 3. 25 「제26차 북조선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유엔」의 결의와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조선의 통일적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조선정당·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오는 4월 14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
- ▲1950. 6. 7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 확대회의, 평화통일의 모든 필요한 조건과 수속  
을 결정하기 위해 남북조선의 전정당·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해주시 또는 개성  
시에서 6월 15~17일에 걸쳐 소집할 것을 제의(남북협상의 대상으로부터 한국정  
부의 주요인사 등이 제외된 조건)
- ▲1954. 10. 30 「최고인민회의」 제1기 8차회의, 「최고인민회의」와 한국국회의 공동회의를 평  
양 또는 서울에서 연내 소집할 것을 호소(「통일문제」의 해결 위해)
- ▲1955. 3. 7 「조국전선 18차 중앙위」 성명, 남북협상회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통일이 지연된 모  
든 책임은 미국과 한국이 져야하며 한국당국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남북 협상  
의 길이 영원히 닫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 ▲1955. 8. 15 8·15해방 10주년 기념 김일성연설,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남북간에 무력불행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
- ▲1960. 4. 21 4·19혁명과 관련한 북한의 정당·사회단체지도자 연석회의, 통일문제해결을 위  
한 남북조선의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
- ▲1960. 11. 24 최원택 「최고인민회의」 의장, 남북협상회의를 판문점, 평양 또는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1962. 6. 20 「최고인민회의」 제2기 11차 회의, 민족장래문제에 대한 이해를 접근시키기 위해  
남북협상회의 개최를 제의
- ▲1963. 9. 8 북괴정권창건 15돌 기념 최용건연설, 남북협상과 남북합작을 추진할 것을 주장
- ▲1966. 9. 8 김광협(부수상), 통일문제토의를 위한 남북제정당·사회단체 합동회의 또는 기타  
형태의 남북합동회의를 제의
- ▲1969. 10. 8 북괴 24차 「유엔」 총회 「비망록」, 남북협상의 진행을 제의
- ▲1971. 4. 12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 회의에서의 외상 허담발언, 북의 통일방안을 협의키  
위해 각 정당·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남북정치  
협상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

- ▲1971. 8. 6 「시아누크」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의 김일성연설, 한국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제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를 표명
- ▲1972. 8. 19 북한 당·사회단체들, 남북한의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의 개최를 제의
- ▲1973. 4. 5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회의, 긴장상태완화·군사적 대치해소를 위한 군축을 제의 (5개항)
- ▲1973. 4. 16 「시아누크」 환영대회에서의 김일성연설, 각기 정당·사회단체대표 인사가 참가하는 남북정치협상회의의 소집을 주장
- ▲1973. 6. 23 「후사크」 환영대회에서의 김일성연설, 각계각층 인민과 각 정당·사회단체 등의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제의
- ▲1973. 7. 24 「조국전선」 29차 확대회의, 남한의 인민과 정당·사회단체들에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민족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
- ▲1975. 7. 3 남북조절위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의 7·4성명 3주년에 즈음한 성명,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지체없이 소집할 것을 주장
- ▲1976. 7. 3 「조국전선」의 7·4성명 4주년에 즈음한 성명, 남북정치협상회의의 소집을 주장
- ▲1977. 1. 9 김일성 「노작발표」 5돌 기념보고회의에서의 정준기보고 연설,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면 김일성이 제시한 남북정치협상을 관철하는데 한사람같이 나서야한다고 주장
- ▲1977. 1. 25 북한 당 및 사회단체 연석회의 북과 남의 제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 각층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정치협상회의의 소집을 제의

## 조총련계 재일동포, 한식맞아 모국성묘방문

감격과 회한이 교차되는 가운데 금년 한식(4월 6일)에도 지난 1975년 광복 30주년을 맞아 현해탄에 가설된 인도의 가교에는 망향의 대열이 줄을 이었다. 조총련의 갖은 기만과 협박의 장벽을 넘어 잃었던 고향을 되찾고 헤어졌던 가족, 친척들과 함께 모국에서 한식을 맞이하기 위한 조총련계 재일동포 1,800명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귀국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1975년 추석을 기점으로 조총련계 동포들로 하여금 기만의 암흑생활을 박차고 인간다운 생활을 되찾게 하여 주기 위한 인도적인 극적 조치를 취한 이래 모국을 다녀간 동포는 1만3천 여명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한식 성묘단은 대부분이 앞서 다녀간 동포들로부터 조국의 발전상과 모국방문의 소감을 듣고 조총련의 허위선전과 직접 확인, 비교하고자 찾아온 2세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마도 오랜 세월 등을 지고 살아온 고향을 되찾고 참된 조국의 따뜻한 품을 느낀 감회와 회한에 어린 육친의 정의 권유이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조국땅을 밟게된 깊은 감회속에 이들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은 새삼 조총련의 지난 거짓 선전에 속아 온 세월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 자라나는 그들의 자녀들은 처음으로 눈여겨 본 조국의 참 모습에 감동하며 밝은 조국의 앞날에 이바지 할 것을 굳게 다짐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국방문 기간 중 서울과 부산시내 관광과 함께 동작동 국군묘지, 아산 현충사, 포항 종합제철,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등을 시찰하는 한편, 「망향의 동산」에서 기념식수와 함께 유해의 합동 안장식을 갖고 고향을 찾아 성묘와 함께 오래동안 헤어져 살았던 고향의 가족, 친척, 친지들과 즐거운 재회를 가졌다.

### <잔악한 조총련의 북송만행상>

재일동포의 거주지선택이라는 미명아래 지난 1959년 11월 12일 북송이 시작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만 여명의 교포가 북송됨으로써 암흑의 북한땅으로 사라져 버렸다.

북한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송북되는 교포들의 이삿짐형식을 빌어 물자를 반입하려는 목적으로 북한은 조총련을 앞세워 선량한 우리 교포들에게 갖은 기만책과 유혹, 협박 등으로 강제북송의 마수를 뻗쳐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총련의 갖은 기만과 간교한 술책 속에서도 지난 3월 31일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함께 북송선을 타려던 재일교포 김미혜양(26세, 일본명 김미지자)이 북송자 합숙소에서 감시의 눈을 피해 출항직전에 극적으로 탈출을 하였다.

김양은 지난 3월 30일 입항하여 4월1일 하오5시 「니이가다」 항을 떠나는 북송선 「만경봉」 호로

아버지 김약한(66세)씨와 함께 강제북송될 예정이었으나 31일 밤 11시경 북송가족 집단수용소인 「니이가다」 시내의 호반호텔에서 아버지를 남겨둔 채 「셔츠」 바람에 「슬리퍼」를 끌고 「마지막으로 초밥을 사먹고 오겠다」고 속인 후 자유를 찾아 북한요원들의 감시망을 피해 극적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강제북송으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한 김미혜양은 4월 2일 상오 10시 일본 「매스콤」과의 기자회견에서 「집단수용소에 갈때까지 강제북송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힘으로써 북송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인도적 조치라는 조총련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다.

김양은 「소위 조총련의 귀향사업 사상 처음 있는 탈출사건에 큰 쇼크를 받은 조총련이 나에게 어떤 보복을 가해 올지 모르니 보호해 달라」고 말하고 「조총련 합숙소인 호반호텔은 마치 포로수용소와 같이 살벌한 분위기였으며 북송교포들은 4~5명 단위로 조를 만들어 조총련 청년대원들의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어 일단 합숙소에 발을 들여놓으면 꼼짝못하는 생지옥이다」고 폭로하였다.

한편 김양은 「지금까지 조총련 사람들과만 사귀어 왔기 때문에 모국 성묘단원이 이토록 많이 한국에 간 사실을 몰랐다」며 조국 대한민국의 참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양의 이와같은 모국방문 희망에 따라 제일교포 유지들의 주선으로 지난 4월 8일 김양은 그녀를 보호해 온 친구의 아버지 허인오(59세)씨와 함께 난생 처음으로 조국의 땅을 밟게 되었다.

“되찾은 자유……꿈만 같아”

<북송선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빼앗기고 북송직전에 필사적인 탈출에 성공함으로써 자유를 되찾은 김미혜양의 북송결심에서 탈출하기까지의 경위와 심경을 쓴 수기를 소개함으로써 편린이나마 조총련의 강제북송 만행상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한국일보에 제공된 김양의 수기이다.> —편집자 주—

<일본에서 태어나 3살 때 일본인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내가 왜 북한에 가야하는가?

우리 가족환경은 아주 복잡하다. 한국과 북한의 정세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때나마 북한에 가려고 결심한 내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북송선에 타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도 망치게된 것은 기적적인 일이었다.

일본인 어머니는 3살 때 아버지와 헤어져 나는 아버지 혼자 손에 키워졌다. 소학교는 일본학교를 다녔고 12살 때 동경다찌가와 입천(立川)시에 있는 조총련 중급학교에 들어가 1년동안 공부했다. 조총련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김일성만세」를 가르쳐 당황했었다.

아버지는 자신은 귀화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일본에서 살아가기 좋도록 12살때 어머니 호적에 입적시켜 아오끼미에꼬(青木美枝子)라는 일본이름을 갖게 됐다.

일본국적으로 조총련 학교에 다니자 주위에서는 이상하게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조총련적을 갖고 있었으나 별로 정치적 활동을 한일이 없었다. 나는 일본고교에 다니다 중퇴한 뒤 야간고교를 졸업하고 동경의 소도백화점에 취직했다.

아버지가 북한에 가려고 마음을 먹게된 것은 작년 10월 고혈압으로 쓰러져 입원한 뒤 건강이 나빠져 품팔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부터였다. 금년 1월에 들어와 다찌가와(立川)시의 조총련지부 사회부장 등 간부들이 찾아와 북한에 가면 일을 안하고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북송을 자꾸 권했다.

이같은 감언에 속아 북송에 솔깃해진 아버지는 네가 가지 않으면 혼자서는 못가겠다면서 함께 가길 원했다. 어렸을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나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같이 가려 했었다.

나는 조총련이나 북한사정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어 한국인 친구 3명에게 북한에 가게될 것 같다고 상의했다. 조총련간부들은 나에게 북한에 가면 인구가 적어서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인구가 부족한 북한에 가면 틀림없이 강제노동을 시킬 것이라며 북행을 만류했다.

내가 1년전부터 사귀 일본인 남자친구(시나리오 보조작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더니 그는 초조해 하면서 안갔으면 했다. 우유부단했던 나는 북송수속을 해도 내가 안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을 것으로 쉽게 생각했다. 10일전 동경도청 외사과에 가서 북송수속을 마쳤다. 수속이 끝나자 조총련에서는 1백만원이 넘는 돈을 대줘 아버지는 컬러TV 1대와 흑백TV 1대를 사고 팔목시계 16개도 장만했다. TV 1대는 북한에 가서 팔고 1대는 볼 생각이었으며 시계는 팔아서 생계에 보태 쓸 생각이었다.

조총련간부들은 북한에는 물자가 적으니 일용품이 많이 사가라고 권유했다.

지난달 29일 동경 「미다까」역에 집합했을 때부터 어쩌나 감시가 심한지 새삼 공포같은 것을 느꼈다. 조총련측은 우에노(上野)역에서 니이가타(新潟)까지 특급요금이 4천원이고 호텔비용이 1만 5천원 밖에 안되는데도 1인당 6만원씩을 거뒀다. 이에 나는 경비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인지 조총련측은 나를 이상하게 보고 더욱 감시를 했다.

29일 하오 5시경 니이가타(新潟)에 도착, 북송자 숙소인 호반호텔에 들어 갔더니 남녀별로 방을 나눠 아버지와도 헤어졌다. 보석류는 모두 뺏고 외부에 전화만 하려 해도 청년감시원이 입회했으며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북송자들은 대부분 체념한채 아무말 않고 그들 지시에 따랐다.

『일본땅인 니이가타(新潟)에서부터 이렇게 무섭게 감시하는데 북한에 가면 아버지와도 헤어져 강제노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있었다.

아버지를 복도에서 만나 『나는 못 가겠어요』 했더니 아버지는 『내 입장이 곤란해 진다. 단념해라』고 울면서 애원했다. 시간이 갈수록 감시는 심해져 호텔현관에 3명, 각층마다 3명, 뒷문에

2명의 감시원이 붙었다. 나는 6만원의 명세서를 요구했던 까닭에 정신이상자로 몰려 한층 더 감시를 받았다. 하도 화가나서 조총련 다찌가와(立川)시 사회부장에게 『당신네들이 정 그러면 나는 당신들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만들겠다』고 했더니 나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봤다.

탈출기회를 노리는데 31일 밤 9시부터 각 방별로 마지막 송별연이 벌어지게 됐다. 「탈출의 기회는 이때다」고 생각, 37~38세된 여자종업원에게 『잠깐 밖에 산보나 갔다가 오겠으니 택시를 불러 달라』고 했다. 종업원은 『정말로 괜찮겠느냐』고 말하면서 15분동안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택시를 호텔뒷문에 세우고 엔진을 끄지 않은채 대기해달라』고 부탁했다. 15분동안 차를 기다리면서 나는 TV를 보며 일부러 태연하게 굴었다. 뒷문쪽에서 차소리가 들리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짝 빠져 나갔다. 누구에게도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여름셔츠와 「블루진」 스커트 차림에 호텔 「게다」를 끌고 탈출했다.

택시를 탄뒤 운전사에게 미터기를 「공차」로 하고 무조건 달려 달라고 부탁한 뒤 「시트」에 몸을 깊이 묻었다. 한참 달리다가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 차에서 내린 뒤 동경의 친구 아버지인 허인오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허씨는 니이가타(新潟)에서 큰 「빠짱꼬」가게를 경영하는 전민단 단장 박수정씨 집에 가라고 친절히 알려 줬다.

박씨가게에 갔으나 마침 박씨가 없었다. 민단에도 갔지만 아무도 없어 다시 박씨가게에 가 박선생택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내가 일본에 계속 있게 되게 정말로 기쁘다. 내가 만약 북송됐더라면 틀림없이 강제노동을 하거나 정신병원에 수용될 것이다. 이제 자유로운 일본에서 내 의사에 따라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은 어렸을 적부터 나를 키워주신 몸이 약한 아버지의 안부다. 나 때문에 받을 고통을 생각하며 이틀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 <조총련, 동포2세 성묘방문 저지에 광분>

해를 거듭할수록 요원의 불길처럼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방문이 급격히 증가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특히 동포 2세인 청소년의 참가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자 이에 당황한 조총련은 결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더욱 극렬한 수법으로 협박, 감금, 납치하는 등 비인도적인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4세의 소녀인 강영희양을 납치함으로써 세인의 비난을 받았던 조총련은 이번에는 재일교포 한식성묘단으로 「신석」현 모국방문 추진위원장인 아버지 김승렬씨(52세, 경남 고성출신, 전 조총련계 조선인 상공회 신석현 부이사장)와 함께 모국을 방문하려던 김행강양(19세, 신석현육정 2의 723)을 떠나기 하루전날 또다시 납치하여 모국방문 방해책동을 벌였다.

조국의 참 모습도 보며 꿈에 그리던 고국의 친할머니와의 상봉의 꿈에 부푼 김양은 31일 하오

5시경 출국준비를 위해 집부근의 화장품상점에 「쇼팽」을 나갔다가 지난 3월에 졸업한 「자성」현 「수호 조선중·고급학교」 동창생 2명과 선배 1명 등 조총련의 행동대원들에 의해 「신석」현에서 약 350km나 떨어진 「동경」북방 근교로 강제로 끌려가 감금되었다. 조총련은 「한국에 가지 말라.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가족은 끝장이다」, 「한국에 가지 말라. 우리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하지 말고, 자유의사로 친구집에 놀러 갔다고 하라」는 등 갖은 협박을 한 후 그들의 납치사실이 보도되자 납치 2일만인 4월 2일 하오 4시경 김양을 집으로 돌려 보냈다.

김양은 4월 4일 하오 3시 40분 재일거류민단의 「신석」현 지방본부 단장인 이원세씨(69세)의 안내로 난생 처음 모국방문의 꿈을 실현하고 4월 2일 먼저 홀로 귀국하였던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겼으며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할머니와도 고향으로 내려가 상봉하였다.

“할머니 품처럼 포근한 조국”

<조총련의 악랄한 방해책동과 붉은 흉계를 뿌리치고 귀국한 재일동포 2세로부터 그들의 만행을 들어 본다. 다음은 경향신문에 게재된 김행강양의 공포의 48시간의 수기이다.>-편집자주-

나는 일본에서 2남 1녀중 장녀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지만 언제나 모국을 생각했고 혼자 남은 할머니를 꼭 한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었다. 다행히 아버지가 한식성묘단으로 모국을 찾는다가에 따라 가겠다고 몇시간이나 줄라 확답을 받고 그날밤 너무나 기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모국의 지도를 펴놓고 할머니(김유순씨, 80세,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가 살고 있는 곳을 가리키며 고향에 가게됐다고 어머니와 오빠(기영, 20), 동생(기흥, 15)에게 말하고 모두 함께 기뻐했다.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도 직장의 휴가나 학업을 마치면 모국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올해 학교를 졸업하고 쉬고있는 나를 먼저 데리고 간다고 말했다. 떠날날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날 31일 하오 5시쯤 나는 모국에 간다는 기쁨속에 할머니에게 무언가 작은 선물을 사고 싶어 어머니에게 말씀 드린 후 집부근의 백화점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집을 막 나오자마자 나는 지난 3월 함께 졸업한 조선중·고급학교(이바라켄미포시) 남자동창생 2명과 선배 1명 등 3명에게 둘러 싸였다. 할말이 있으니 인근 다방에서 차한잔만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직감으로 나의 모국방문을 막겠다는 것임을 알고, 싫다고 거절을 했다. 나의 아버지는 조총련계 상공인회 「니이가따」 부이사장으로 활약하다 지난해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모국을 방문한 후 「니이가따」의 모국방문 추진위원장직을 맡고있고, 어머니는 여성동맹원으로 조총련선전에 앞장서다 거류민단일을 맡고있기 때문에 조총련계 행동대가 늘 노리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다방에서 나는 급히 집에 전화를 걸었다. 옆에 붙어있는 동창생들 앞에서 나는 『한국에 갈 수 없게 됐어요』라고 떨리는 소리로 이쪽 사정을 알아듣도록 말했다. 『지금 어디냐?』 어머니의 다급한 소리에 미처 대답할 틈도 없이 수화기를 뺐졌다. 얼마 후 나를 끌고간자 중 1명이 『열차를 타고 「니이스」에 가서 할말을 다하고 집에 보내 주겠다』고 말했다. 하오 9시쯤 나는 양팔을 붙잡힌 채 강제로 열차에 올랐다. 그러나 10분이면 도착할 「니이스」를 그대로 지나쳐 밤새도록 차를 타고 갔다. 다음날인 1일 상오 6시쯤 내가 내린 곳

은 살고있는 집에서 350km나 떨어진 동경북쪽의 「도찌기」였다.

이들은 또다른 동창생 3명과 합세하여 그곳의 친구집에 나를 데려간 후 더욱 심한 감시를 했다.

이날부터 감금상태에서 나는 『한국에 가지말라. 우리들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은 좋지 않다』는 협박을 귀가 따갑게 들었다. 감시속에서 지루한 하루가 또 지났다. 다음날 새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나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통화가 시작될 순간 감시자에게 들려 『오늘밤까지 친구들 하고 함께 있겠다』는 말만을 하고 더 이상 소식을 알릴 수 없었다. 그들은 수화기를 뺏어 던져 버렸다.

그러나 얼마후 그들은 나의 납치사건이 소문이 났다며 얼마동안 의논 끝에 나에게로 다가 왔다. 『놓아줄테니 한국에는 가지말라. 납치당했다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말고 친구집에서 놀다 왔다고 말하라』는 것이 풀어주는 조건이었다. 그날 상오 8시쯤 나는 지긋지긋한 그집에서 풀려 났다.

나는 혼자서 「니이가따」행 열차를 타고 하오 4시쯤 집에 도착했다. 나는 집에서 걱정에 싸여 있다가 나를 맞아주는 어머니의 품에 뛰어들어 한없이 울었다.

나는 즉시 민단 「니이가따」현 지방본부 이원세단장(69)에게 연락, 곧바로 아버지의 뒤를 쫓아 모국방문길에 올랐다. 나는 끝내 그리던 고국땅을 밟았다. 먼저 와 계신 아버지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트랩을 내리는 나를 맞아 주었다. 나는 악몽에서 깨어난 양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국의 산천, 고속도로에 비치는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 아! 나는 정말 잘왔다고 생각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은 할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기만 하다.

고국의 동포들이 그동안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껴주신 만큼 일본에 돌아가 모국을 맘껏 자랑하고 나를 납치했던 그들에게도 악몽에서 깨어나도록 하겠다.



# **남북대화 제13호**

(1977. 5. ~ 1977. 7)

# < 목 차 >

제1부 평화적 통일의 의지 .....	5
박 외무장관의 6·23선언 4주년 성명 .....	5
제2부 남북대화소식 .....	7
<남북조절위원회> .....	7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 임명발표 .....	7
서울측, 7·4 공동성명 5주년에 즈음하여 성명발표 .....	8
<남북적십자회담> .....	10
제22차 실무회의 경과 .....	10
제3부 그 밖의 남북관계소식 .....	16
조총련계 제일동포, 단오절맞아 모국방문 .....	16
남북조절위 서울측, 7·4 공동성명 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	17
1. 남북공동성명의 의의 .....	19
2. 남북대화의 교착요인과 정상화요건 .....	42



平和統一의 象徴— 南北對話會談場

7·4南北共同聲明發表 5周年을 맞아 처음으로 公開된, 祖國의 平和의 統一을 爲한 國民的 興望과 意志의 象徴인 南北對話會談場의 모습.

이 會談場은 1973年 2月 15日 總 3億8千5百萬圓의 豫算으로 着工되어 北韓側이 一方의인 對話中斷을 宣言한지 1個月後인 1973年 9月 25日에 竣工되어 지난 4年餘동안 對話의 主人을 맞이하지 못한채 햇빛을 보지 못하였다.

3層 延 795坪의 이 會談場에는 南北調節委員會 會議室과 南北赤十字會談會議室 및 内外記者 送信室 등이 갖추어져 있다.

평화통일의 상징 - 남북대화 회담장

7·4남북공동성명발표 5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공개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민적 여망

과 의지의 상징인 남북대화회담장의 모습.

이 회담장은 1973년 2월 15일 총 3억 8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착공되어 북한측이 일방적인 대화 중단을 선언한지 1개월후인 1973년 9월 25일에 준공되어 지난 4년여 동안 대화의 주인을 맞이하지 못한채 햇볕을 보지 못하였다.

3층 연 795평의 이 회담장에는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실과 남북적십자회담 회의실 및 내외기자 송신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 제1부 평화적 통일의 의지

박 외무장관의 6·23선언 4주년 성명

「남북한 불가침 협정 체결을 촉구」  
「북한은 적화야욕 버리고 대화에 성의를」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1977년 6월 23일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4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은 통일에 관한 비현실적 망상을 일축하고 한민족의 행복과 안전에 불가결한 항구적 평화정착을 선행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제의한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을 진지하게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4주년을 맞이하여 박동진 외무장관이 발표한 성명전문이다-편집자주-

4년전 오늘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우리의 주변정세에 비추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조국통일 달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선언한 바 있다.

이 특별선언은 남북한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화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촉구하고 이를 위하여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이 특별외교정책 선언에 따라 지난 수년간 꾸준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이해와 이에 대한 지지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국력신장 및 평화외교는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국제적 인식을 급속히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막대한 외채를 안은채 각 방면에서 고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중남미와 중동지역에서 나타난 몇가지 외교적 실각사건이 입증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아직도 북한의 오산에 기인한 전쟁 재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 남북한은 30년 이상의 분단으로 일시에 하나로 융합되기 어려운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갖는 두 개의 이질적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2년 7·4공동성명에 입각한 남북문제의 대화가 북한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구체적인 진전을 전연 보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은 통일문제 처리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먼저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지나친 고집은 문제해결에 전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평화외교를 추구하면서 년평균 10%를 초과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뿐 아니라 밖으로는 아세아, 아중동, 중남미, 서구 등 무려 130여국과의 광범위한 교역망을 형성함으로써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힘찬 진전을 하고 있음은 국제사회가 널리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를 위요한 현재의 내외정세를 냉정히 검토하여 무엇보다도 그들의 폭력과 혁명에 의한 적화통일의 야욕이 한낱 백일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하며,

둘째, 국력에 있어 그들 자신은 날이 갈수록 한국에 뒤떨어져 간다는 엄숙한 현실과 북한의 독선적이고 경직된 외교자세는 공산권과 제3세계에서조차 빈축을 사고 있는 사실을 솔직히 인식하고 동족간의 조용한 대화의 재개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이념이 무엇이든 민족의 운명을 저버릴 수 없을진대 북한측은 통일에 관한 비현실적인 망상과 희망적 관측을 일축하고 온 한민족의 행복과 안전에 불가결한 항구적 평화정착을 선행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황당무계한 정치선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한 일차적 방안으로 우리가 제의한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를 촉구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한국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직접 당사자는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임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평화통일은 남북한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상호신뢰감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는 본격적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역시 우리의 상식이다. 또 주한미지상군 철수가 제2의 6·25 남침을 조장해서는 큰 잘못이다. 이러한 정신에서 본인은 오늘 박대통령각하의 6·23 외교정책선언에서 제시된 바와같이 상호내정불간섭과 상호불가침,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재개, 유엔가입, 문호개방 등의 제의를 북한당국에게 상기시키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 선언에 따라 현실에 착안한 평화외교를 계속 추진할 것과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통상의 확대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해서 건설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재천명하는 바이다.

## 제2부 남북대화소식

###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 임명발표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에 민관식박사 임명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1977년 5월 9일, 지난 4월 11일 별세한 고 장기영 부위원장 겸 공동위원장대리의 후임으로 민관식박사를 임명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신임 민관식 부위원장은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부위원장 겸 공동위원장 대리로 새로이 임명된 민관식박사(1918년생)는 1942년 일본 경도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에서 1963년 법학박사학위를, 1974년에는 미국 Findlay 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민 위원장대리는 1954년 정계에 투신한 이후 제3, 4, 5, 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964년부터 1971년까지는 대한체육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한국 체육발전에도 크게 공헌한 바가 있으며 제20대 문교부장관을 역임하였다.

주요저서로는 「미국의 입법과정」, 「방미기행 - 왜 그들은 잘 사나?」, 「낙제생」, 「끝없는 언덕」, 「한국교육의 개혁과 진로」, 「낙제생의 글과 그림」 등이 있다.

서울측, 7·4 공동성명 5주년에 즈음하여 성명발표

「남북대화의 조속재개를 거듭 촉구」  
「불가침협정 동의·직통전화 재개통도」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1977년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5주년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상호 불가침협정체결의 추진절차등 제반문제의 토의, ② 남북조절위원회의 조속한 재개, ③ 남북직통전화의 조속한 재개통 등을 북한측에 제의하고 이의 수락을 촉구했다. 다음은 동 성명의 전문이다 -편집자 주-

오늘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에 의하여 중단되고 있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아직도 정상화하지 못한 가운데 남북공동 성명 발표 5주년을 맞이 하였다.

북한측이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4년전이었으며 남북조절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판문점 부위원장회의 마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기 연기시키지도 벌써 2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통일을 갈구하는 5천만 겨레의 염원에 따라 성실과 인내로서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측에게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으로 되돌아 오고 대화재개에 호응해 올 것을 누누히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와같은 우리의 정당한 촉구를 계속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자행,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키는가 하면 1976년 8월에 이르러서는 남북직통전화마저 단절함으로써 쌍방간의 연락통로까지 완전히 두절시키고 말았다.

「남북간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 하는 것은 쌍방이 합의한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이며 5천만 민족의 한결같은 여망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단된 남북대화를 하루속히 정상화시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측이 무모한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고 쌍방간의 사회개방에 호응하며 불간섭, 불가침, 휴전협정 효력준수를 기본으로 하는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금년초에도 이미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제의한 바 있거니와 남북공동성명 발표 5주년을 기하여 다시 한번 평양측에게 다음과 같은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의 추진절차 등 제반문제를 토



의할 것을 거듭 제의한다.

둘째로, 우리는 이를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세째로, 우리는 작년 8월 이후 평양측이 두절시키고 있는 남북직통전화를 조속히 재개통시킬 것을 또다시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측이 최근 내외정세를 보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민족의 장래와 번영을 생각하는 입장에 서서 이상과 같은 우리의 재촉구에 긍정적 회답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남북적십자회담>

제22차 실무회의 경과

「판문점에서 적십자 본회담을 열자」  
한적, 본회담의 조속재개를 촉구

남북적십자회담 제22차 실무회의가 1977년 4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적십자사 대표들은 북한적십자회측에 대해 ①남북적십자 제8차 본회담을 판문점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②작년 8월말 이후 불통되고 있는 서울-평양간의 남북직통전화의 기능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며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 대표들은 이와 같은 한적측의 제의에 시종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도 대한민국내의 반국가사범들을 무조건 석방하고,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하고,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포기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종래의 정치적 중상비방만으로 일관하였다.

쌍방은 다음 제23차 실무회의를 7월 15일에 열기로 하였다.

다음은 이날 제22차 실무회의에서 있었던 김연주 대한적십자사 교체수석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편집자 주-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지난번 제21차 실무회의에서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는 이 회담을 진척시켜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하루빨리 재회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본회담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조속히 토의할 것, 만약 본회담 의제 제1항의 무조건 조속토의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선 시범사업으로서 「남북 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의 상호교류」, 「노부모 사업」 등을 실시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

둘째, 본회담 재개문제에 있어서 이미 쌍방이 합의한 대로 「서울에서의 제8차 본회담을 개최」하는데 조속히 호응해줄 것. 만약 서울회담 개최를 굳이 거부한다면 귀측 입장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본회담을 판문점 또는 기타 쌍방이 합의하는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할 것 등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본회담 때부터 주장해온 바와 같이 쌍방간에 합의된 5개항의 의제는 제1항부터 하나하나 토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귀측이 1973년 3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제 제1항의 실질적 토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우리 대표단은 의제 토의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시범적 사업으로서 「노부모 사업」, 「성묘방문단의 상호교류」, 「가족사진 교환」 등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이 같은 제안들은 귀측이 의제 제1항의 구체적 토의에 아직 응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고 또 실천이 용의한 시범적 사업부터

우선 토의 해결해 나감으로써 정채된 회담에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본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것은 쌍방의 합의사항이며, 뿐만아니라 제7차 본회담이 평양에서 폐막된 직후 우리는 제8차 본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서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본회담은 귀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1973년 7월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표단은 다섯 차례에 걸쳐 회담날짜까지 정하여 본회담의 서울 개최를 제의했으며 심지어 귀측으로 하여금 회담일자를 정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귀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당연히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할 제8차 본회담에 귀측이 응할 수 없다면 귀측 사정이 허락할 때까지 판문점이나 또는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장소에서 본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작년 8월말이후 정상운영이 중지되어 있는 서울·평양간의 남북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제안은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요구와 쌍방간의 합의사항에 부합될 뿐만아니라 귀측의 사정도 고려한 폭넓은 현실적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기쁨을 안겨주려는 동포애의 발로이며 정채된 우리의 대화를 정상화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부단하고 성실한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북한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대한적십자사는 1971년 8월 남북이산가족 찾기 사업을 제의한 이래 끊어진 혈육의 정을 이어 주기 위한 인도적 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 왔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이러한 인도적인 노력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커다란 지지와 성원을 받아 왔으며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멀리 소련, 중국, 동구라과 공산 국가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고국의 가족, 친지들과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로서 이산의 슬픔을 달래고 있으며 가족과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왕래할 수 없었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도 마음놓고 고국을 찾아 혈육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년 한식에만 해도 1,800명에 달하는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 찾아와 조국의 따스한 품에 안겨 헛되이 보낸 지난날을 후회했으며 그중에는 「죽어도 조국 땅에 묻히겠다」는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유골을 모시고 와서 「망향의 동산」에 안장한 이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조국을 찾은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수는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조국을 찾아 오는 것은 재일동포뿐이 아닙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본적을 제주도에도 두고 소련땅 「노릴스크」에 살고 있

는 우리 동포 장전두씨는 소련 여권을 가지고 지난 1월 30일 「에어로·플로트」 항공기로 「모스크바」를 떠나 일본을 경유, 2월 14일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38년만에 조국을 찾은 장전두씨는 47일간을 머물면서 어머니, 동생, 딸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 재회의 벽찬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의 모습을 본 84세의 노모는 두 팔을 벌려 아들을 열싸 안고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며 울음을 터뜨렸으며 60이 다된 아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불효를 빌면서 통곡하였습니다.

또한 조난당한 중국사람은 대한민국의 따뜻한 보호를 받은 후 송환되고 공해상에서 표류중이던 우리 어부들 역시 중국의 구호로서 무사히 귀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루마니아」 지진에는 한국민의 정성어린 구호금품이 전달되었고 「루마니아」는 적십자사 연맹을 통하여 감사의 뜻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조총련계 제일동포들이 자유로히 조국을 왕래하는 것은 어떠한 사상과 이념도 혈육의 정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소동포 장전두씨가 멀리 「모스크바」로부터 왔다 갈 수 있었던 것도 체제의 차이나 정치적 환경조건이 혈육의 정을 갈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과도 가족들의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와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로 부모, 형제의 생사조차 몰라 가슴 태우고 있는 곳은 먼 곳도 아니고 다른 민족끼리도 아닌 같은 땅, 같은 겨레인 남북한 뿐입니다.

이 민족적 불행의 원인은 바로 귀측이 적십자회담이 시작된지 만 6년이 가까워 오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인도주의와 동포애 그리고 혈육의 정의 숭고함을 도외시하고 있는데서 비롯 됩니다.

귀측은 의제의 실질적 토의가 시작된 제3차 본회의에서부터 의제도의 앞에 이른바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이라는 부당한 정치적 선결조건을 내세워 회담을 정체화시켰으며 나아가서 제7차 본회담 이후에는 「서울 분위기」가 어떻다는 당치도 않은 이유를 내세워 본회담의 개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측은 20여차례의 실무회의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통해서도 의제도의나 본회담 재개문제에는 성의도 보이지 않은채 적십자회담과는 관계도 없는 정치군사문제의 거론으로부터 심지어는 회담상대방에 대한 중상비방까지 서슴치 않음으로써 회담분위기마저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은 앞서의 조총련계 제일동포와 재소동포의 자유로운 모국방문 그리고 중국, 루마니아와의 인도적 유대의 실례에서 본 바와같이 어떠한 정치체제나 사상, 이념과 관계없이 이를 초월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신뢰의 우호적 분위기를 마련하고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날로 대립이 심화되고 긴장일로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남북관계도 바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쉽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이산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 하지 않는 귀측의 대화자세로

인한 것입니다.

서로 상이한 사상과 이념에서 산출된 정치체제나 사회제도를 시비하고 비난하면 할수록 그 대립은 격화될 뿐이며 반대로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한 인도적 문제를 차근 차근히 해결해 나가면서 대화와 교류의 폭을 넓힌다면 오늘과 같은 대립은 해소되고 민족적 동질성을 되찾을 수 있는 민족단결의 분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회담이 시작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귀측의 대화자세는 「회담앞에 난관」이라는 부당한 구실을 내세워 그 구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인도주의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십자 인도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자세입니다. 인류에게 고난이 있기에 적십자가 있는 것이며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차원을 초월하여 인류의 재해와 고난을 인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적십자입니다.

귀측은 언필칭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서 적십자회담에서의 이산가족 문제 토의를 한없이 지연시켜 나가고 있으며 대화 상대방을 비방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적 단결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간의 감정을 격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귀측이 정말 이땅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려 한다면 우선 이 적십자회담에서부터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중단시켜 놓고 인도적 문제를 토의하는 적십자회담에서 정치, 군사문제를 들고 나오며 서울에서 개최해야 할 적십자회담을 거부하고 평양에서 열어야 할 조절위원회도 거부하고 있는 귀측이 아무리 남북대화에 성의를 가진채 해도 내외의 여론을 기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족간의 대화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5천만 온겨레의 성실한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적 과제들을 제3자와 흥정하려는 태도는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잃은 자세이며 「민족분열책동」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북한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민족의 화목과 단결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어느 다른 누구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5,000만겨레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연한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태도와 겨레의 문제는 겨레와 더불어 해결하려는 자주적인 입장과 그리고 서로 차이점을 찾기에 앞서 공통점을 찾으려는 성실한 대화자세에서 만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를 부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차이점만을 추궁해 나간다면 긴장과 대립은 가중되고 민족단결이 아니라 민족분열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남북대화가 시작된지 6년이 되도록 적십자회담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실무회의에서 맴돌고 있으며 조절위원회는 회담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뜻을 모아 남북대화를 정상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남북대화의 정상화만이 오늘의 긴장과 대립을 해소

시키는 길이며 긴박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여 무거운 군비부담을 경제건설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길이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고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길입니다.

그러한 대화의 정상화는 먼저 이 적십자회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지난번 회의에서 의제토의와 본 회담 재개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내 놓았습니다.

의제토의는 제1항부터 하나하나 토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 실천이 용이한 시범적 사업부터 토의 해결할 수도 있으며 또 제8차 본회담은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하나 잠정적으로 판문점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열어도 좋다는 우리의 제안은 귀측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한 신축성 있는 것으로서 귀측이 정말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이후 기능을 잃고 있는 서울·평양간의 남북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귀측이 진정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에 귀를 기울인다면 귀측이 진정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바란다면 우리의 이 제안과 요구를 흔쾌히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제21차 실무회의에서 이미 제안한 바와같이 「제8차 본회담을 우선 판문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이 제의는

첫째, 이 실무회의가 만 3년이 다 되도록 20여 차례의 회의를 거듭 하였건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본회담을 재개하여 의제토의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기쁨을 안겨 주자는 것이며,

둘째,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그 자체로도 숭고하고 절실한 것이지만 남북의 긴장상태를 해소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본회담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고,

셋째, 쌍방이 합의한 제8차 본회담의 서울 개최를 귀측이 거부하고 있느니 만큼 귀측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안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측 제안이 합의되고 실천된다면 이는 정체되어 있는 적십자회담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과 남북간의 신뢰의 분위기조성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이 제의에 대하여 귀 대표단의 성의있는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 제3부 그 밖의 남북관계소식

#### 조총련계 제일동포, 단오절맞아 모국방문

끈질기고 악랄한 조총련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그리던 조국산하를 돌아보며 수십년을 헤어져 만나고 싶던 가족·친지들과의 해후를 갈망하는 500여명의 망향의 대열이 단오절(6월21일)을 맞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귀국하였다.

지난 4월의 한식성묘에 이어 이번 단오절 모국방문 동포들도 그동안 모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제1세 동포들로부터 조총련의 거짓 선전과는 다른 조국의 발전한 참 모습과 고국 동포들의 따뜻한 동포애를 전해 듣고 스스로 모국방문을 결심한 대부분 젊은 20대의 제2세 동포들이다.

조총련의 갖은 허위선전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모국을 찾는 동포의 수가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모국을 찾는 동포들이 제2세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공산조직의 올라미 속에서 지내온 기만의 암흑생활을 박차고 참다운 조국을 찾아 보고자 하는 동포의 열망이 점차 심화,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한편 그 어떤 정치적 장벽도 무너 뜨릴수 있는 「혈육의 정」의 강한 응결력을 실증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 모국방문단은 「망향의 동산」과 현충사, 포항, 울산, 경주 등을 둘러보는 산업 및 관광 시찰을 마친 뒤 각기 고향을 찾아 그림던 가족·친척들과 단오절을 함께 보냈다.



## 남북조절위 서울측, 7·4 공동성명 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으로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분단 사반세기만에 온 겨레의 벽찬 감격과 통일에 대한 드높은 열망 속에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어언 5주년을 맞이 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남북공동성명이야말로 적대적 남북관계를 대화와 교류로 개선하여 나가고 우리나라의 재통일을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룩해야 한다는 누구도 이견을 가질 수 없는 민족의 대헌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감명과 기대는 북한측의 무성의로 퇴색되어 왔고 남북대화는 지난 73년 8월 북한측의 일방적 대화중단선언으로 오늘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 속에서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지난 7월 1일 남북공동성명발표 5주년을 맞이 하여 북한측이 고의적으로 대화를 파탄시키고 위장평화공세에만 열중하며 국내외의 여론의 오도를 획책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남북대화의 경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함으로써 정책입안에 기여하는 한편 남북대화의 조속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키 위하여 남북공동성명발표 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남북대화를 위해 지난 73년에 새로 건축한 회담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산 3의 25)에서 개최하였다.

민관식 공동위원장대리는 이날 토론에 앞서 개회사(김동조위원장대독)에서 「7·4남북공동성명은 민족의 역사적 여망을 집약한 것이며 남북한 관계의 객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상극적인 사상, 체제 그리고 통일에 대한 대립된 가치관이 남북한관계를 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 위원장대리는 『평양측이 「대화」 보다는 「대결」을 「평화」 보다는 「폭력」을 「민족」 보다는 「사상」을 더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접근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관건은 평양측으로 하여금 「폭력혁명노선」을 포기케 하고 평화정착과 평화공존을 긍정케 하는 길이며 이 문제가 오늘날 남북한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약 300여명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룬 세미나에서는 주요논문으로 「남북공동성명의 의의」(구범모 의원), 「남북대화의 교착요인과 정상화 요건」(박봉식 서울대학교 교수), 「남북한 경제 교류 가능성」(정운학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선우휘 조선일보 주필)등이 발표되어 직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들 주요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북한측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 한반도의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북한측이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대 원칙으로 되돌아 올 때 우리 민족의 통일을 향한 서장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논문 가운데 구범모 박사의 「남북공동성명의 의의」와 박봉식교수의

「남북대화의 교착요인과 정상화 요건」 2편의 전문이다.

## 남북공동성명의 의의

구 범 모  
<정치학 박사:국회의원>

<구범모 박사는 본 논문에서 북한측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으로 되돌아와야 하며 그들이 적화망상을 버릴 때 비로소 그 구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주-

### 목 차

- 제1장 서론 : 문제의 제기
- 제2장 7·4남북공동성명의 배경
- 제3장 7·4남북공동성명의 의미
- 제4장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 제5장 남북한관계의 전망
- 제6장 결 론

### 제1장 서론 : 문제의 제기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열망에 반하여 미·소의 국제적 권력정치의 희생으로 한반도가 분단된지 벌써 30여년이 경과했다. 그 사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통일에 대한 높은 희망과 강렬한 의지를 간직한채, 「고르디어스의 매듭」(the Gordian knot)과 같은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강대국중심의 권력정치의 벽에 의해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남한적화의 망상에 젖어 있는 북한의 반민족적 폭력노선에 의해, 또는 그 양자의 결합에 의해 제약을 받아 왔다. 따라서 1960년대말까지 남북한관계는 약간의 장식품적 대화기를 제외하면 거의 전적으로 군사적 대결상태를 기조로 동결되어 왔다.

여기서 「군사적 대결상태」라고 할 때, 그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무력도발과 이에 대항하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위조처에 의해 어쩔수 없이 빚어진 한반도적 상황을 의미한다. 과연 1960년대 후반기의 남북한관계는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기습사건(1968년 1월), 미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1968년 1월), 북한 무장공비의 동해안침투사건(1968년 11월), 미해군 정찰기 EC-121피격사건(1969년 4월) 등에 표현된 바와 같은 전쟁 일보직전의 군사도발행위가 빚어낸 군사적 긴장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러한 군사적 대결관계를 일단 평화공존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우선 동족상잔의 전쟁도발을 방지하고 민족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취해졌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제의한 남북한 체제간의 「선의의 경쟁」이 바로 그것이다.

이 연설에서 박대통령은 북한이 대남전쟁도발행위와 무력적화통일 노선 및 대남폭력혁명노선을

포기한다면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북한에게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sup>1)</sup>

이 연설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의 바탕위에서 1971년 8월 12일 최두선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특별성명을 통해 『1천만 남북이산가족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의 소식을 알려주며 재회를 알선하는 「가족찾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했다. 이 제의는 확실히 얼어붙어 있던 남북한관계를 인도적인 차원에서부터 풀어나가려는 획기적인 시도로 풀이되었다.

북한은 이 제의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 가장 중요한 까닭은 미국과 중공간의 긴장완화에 있었다. 당시 20여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중공은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닉슨」(Richard M. Nixon) 미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중공간의 접근은 동북아의 국제적 긴장을 대내정치와 대남정책의 자산으로 활용하여 안으로는 폐쇄적 전체주의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폭력혁명노선을 추구하고 있던 북한에게 최소한 대남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은 1972년 5월 남북간의 고위비밀정치회담을 가져온 바탕이 되었으며, 이 고위정치회담은 마침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가져왔던 것이다. 자주와 평화 및 민족단결이라는 통일의 3원칙이 제시된 남북공동성명이야말로 통일을 열망하는 5천만 민족에 대한 남북정치 지도자의 엄숙한 서약문이었으며 남북대화가 진행되어야 할 궤도와 방향을 설정해 준 민족사의 새로운 이정표였던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7·4공동성명에 입각하여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다.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회의등 일련의 남북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정책과 행위의 규범으로 삼았던 것도 이 7·4공동성명이었다. 1974년 8월 15일 박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된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도 바로 이 7·4공동성명의 연장선 위에서 설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7·4공동성명의 내용과 정신을 왜곡하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언행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스스로의 대화의 통로인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자주」의 원칙에 반하여, 우리와는 대화를 끊고 우리 민족문제와는 무관한 국제회의로 끌고 가거나 또는 특정국가와의 회담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반자주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를 또 한차례의 전쟁을 치름이 없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의 원칙에 반하여, 비무장지대에 대남공격용 「터널」을 구축하고 비무장지역내에서 도끼로 미군을 살해하는 등 대소규모의 대남무력도발을 자행함으로써 반평화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민족단결」의 원칙에 반하여, 해외의 각종 회의와 「매스미디어」를 통해 우리를 근거없이 헐뜯는등 민족자해행위를 서슴치 않고 범함으로써 반민족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1) 국토통일원(편), 『평화통일의 의지:통일정책과 관련된 연설문을 중심으로(1970년 8월~1975년)』(서울:국토통일원, 1975), p.10.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주고 다음의 서로 관련되는 문제들을 다루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첫째, 북한이 그 내용과 정신을 왜곡하고 있으며 그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남북공동성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둘째,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남북공동성명과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셋째, 남북공동성명의 내용과 정신에 비추어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북한의 평화공세의 진의는 무엇인가?

넷째, 이러한 남북한통일정책의 비교에 비추어 우리는 남북한관계의 장래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인가? 남북불가침협정의 체결을 통한 남북한의 평화정착의 전망은 어떠한가?

## 제2장 7·4남북공동성명의 배경

7·4남북공동성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7·4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과정을 다음의 세 단계의 측면에서 살피기로 한다.

### 제1절 박대통령의 8·15선언

박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무장공비 남파 등의 모든 전쟁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점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또한 이를 행동으로 실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던 것이다.<sup>2)</sup>

그러면 이 역사적 8·15선언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① 전쟁재발의 방지와 ② 남북한 관계의 「선의를 경쟁」으로의 유도라는 두가지 점으로 집약된다.

#### I. 전쟁재발의 방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혁명론」과 「4대군사노선」을 표방하면서 대남 무력도발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 일본전의 긴장을 조성했다.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

2) Ibid p.135.

이, 북한무장공비의 청와대기습사건(1968년 1월), 미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1968년 1월),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년 11월), 미해군 정찰기 EC-121 피격사건(1969년 4월), 대한항공여객기납북사건(1969년 12월) 등등이 북한의 대남도발행위의 대표적 예들이다.<sup>3)</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우선시한 것은 전쟁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족적 당위성을 갖고 있는 전쟁재발방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열망은 8·15선언에서 박대통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국토통일이 아무리 절실한 우리 민족의 지상명령이라 하더라도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하여야 하겠고,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인내와 최대한의 양식을 발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긴장상태의 완화없이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보장하는 북한의 명확한 태도표시와 그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 II. 남북한 관계의 「선의의 경쟁」으로의 유도

1960년대에 있어서 남북한의 경제발전은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경제개발 7개년계획이 실패하여 3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음에 반해, 대한민국 정부는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남북한 경제개발경쟁에서 북한을 추월해낸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 자신감이 북한에 대한 「선의의 체제경쟁」 제안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하겠다.

### 제2절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공

8·15선언이 발표된 1년 뒤인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최두선총재의 특별성명을 통해 ①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② 이들의 소식을 알려주며 재회를 알선하고 ③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했다. 이 제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박대통령의 8·15선언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틀 뒤 북측은 우리의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이에 따른 남북적과전원의 접촉을 거쳐, 1971년 9월 20일부터 판문점에서 남북적예비회담이 열렸다. 이 예비회담은 1972년 8월 11일까지 계속되었으며, 남북한의 고위비밀정치회담을 가져온 직접적 통로가 되었다.

### 제3절 남북한 고위 비밀정치회담

1971년 11월 20일부터 72년 4월 26일까지 있는 남북적십자대표간의 비밀접촉에서 우리측은 남북고위정치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방문이 72년 5월 2일부터 사흘동안 이뤄졌다.

3) 이들 일련의 사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C.Koh, "The Pueblo Incident in Perspective," Asian Survey, Vol. IX, No.4(April. 1969), PP. 264-80.

이부장의 평양방문을 앞두고 박대통령은 통일문제가 다뤄져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고 이 원칙들을 평양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칙들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sup>4)</sup>

첫째,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남북이 4반세기 동안 상이한 제도 아래 놓여 있음을 감안하여 통일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셋째, 따라서 우선 남북적십자회담을 촉진시켜 가족찾기운동이라는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보도록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와 문화등 비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회담을 열기로 하며 최종단계로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남북간 정치회담을 갖기로 한다.

넷째, 이를 위해 남북간의 분위기를 가능한 한 호전시킴이 긴급하므로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이 진행 또는 계속되고 있는 동안

- ① 비현실적인 일방적 통일방안의 대외선전적 제안을 지양하고
- ② 남북간 상호중상 및 비방을 지양하며
- ③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임을 막론하고 무력적 행동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처사를 일절 하지 않는다.

김영주 노동당조직지도부장 그리고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이부장은 박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원칙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북한측은 이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다만 우리측의 단계적 통일론에 대해 북한측은 일거해결론을 내세웠던 것이다. 즉, 인도적 및 비정치적 문제의 해결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적 문제의 해결로 그 차원을 높여가며 점진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자는 우리측의 주장에 대해, 북한측은 정치협상을 우선시하고 정치협상만 이뤄지면 가족찾기운동이나 물적 교류등은 『저절로 풀린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sup>5)</sup> 이러한 점들은 박성철 북한부수상의 서울방문(1972년 5월 29일~6월 1일)과 이에 따른 박대통령의 접견에서도 되풀이 되었다.<sup>6)</sup> 특히 이 접견에서 남·북공동성명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다음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앞서 지적한 박대통령의 통일원칙이 이 남북공동성명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공동성명은 우리정부의 주도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장 7·4 남북공동성명의 의미

4)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특수출장허가원」(1972년 4월 24일)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특수지역 출장에 관한 훈령」(1972년 4월 26일), PP. 1-3.

5) 「평양회담 쌍방 발언 비교」(1972년 5월 2일~5월 5일), 공판인쇄물.

6) 「서울회담 쌍방 발언비교」(1972년 5월 2일~5월 5일) 공판인쇄물.

7·4남북공동성명의 첫 항은 우선 통일에 관한 3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1절 자주적 원칙

통일 3대 원칙의 제1원칙은 자주적 원칙이다. 한민족의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한민족의 주체적 역량으로 민족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자주적 원칙, 민족자결의 원칙, 또는 당사자해결의 원칙은 바로 우리 정부가 지지하고 표방하는 원칙이다. 뒤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 자주적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는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교착되어 있는 남북대화의 재개와 휴전당사자 회담을 제창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 자주적 원칙 자체를 곡해할 뿐만 아니라 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일체의 외국군대를 「외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군은 남북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것 또는 더 정확히는 북한의 재침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통일의 「자주적인 해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유엔」결의에 따라 「유엔」군이 이 땅에 주둔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명백해진다.<sup>7)</sup> 미군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 아무런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며, 북한의 남침에 대한 억제기능을 갖고 있다.<sup>8)</sup>

그런데도 만일 북한측이 한국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오직 「유엔」군 또는 미군의 철수만이 자주적인 해결의 전제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측이 주장하는 자주적인 해결에는 무력에 의한 해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당연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sup>9)</sup> 사실 북한은 무력적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의 조성을 위해 「자주적 해결」이라는 미명아래 「유엔」군 철수 또는 미군철수를 주장해온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관심이 무력적화통일에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필칭 「자주성」을 되풀이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첫걸음이 되는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7) 이 결의안의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United Nations, Bulletin, August 1, 1950, P.94.

8) Pyong-choon Hahm, "From A Client-State to An Ally: U.S. Korean Relations,"

Journal of Korean Affairs, Vol. 1. III No. 3(October, 1973), P.39.

9) 이와 비슷한 논리전개에 대해서는 김삼규, "재외국민의 입장에서 본 민족적 화해촉진 방안," 『통일정책 제1권 제3호』(1975년 10월), p.83.



『멀리 제3국에 돌아다니면서 거짓선전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비방·중상을 일삼고 있다.』<sup>10)</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일본과 협력관계를 맺어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도 중·소와 동맹관계를 맺고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바꿔 말하면 남북이 다같이 형식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굳이 북한의 표현을 빌면 「외세」와 관련을 맺고 있고 「외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민족의 통일문제를 이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느냐 아니면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석하려 하느냐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여 남북대화의 재개와 휴전 당사자회담을 제의하고 있음에 반해, 북한은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이른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음, 「통일의 자주적 해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북한 5천만 동포의 주권행사에 의한 해결 즉 자유스러운 민주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정부의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의 제3항은 바로 이러한 해석에 바탕을 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 제2절 평화의 원칙

통일 3대 원칙의 제2원칙은 평화의 원칙이다. 여기서 잠시 평화의 개념을 정의해 보기로 한다.<sup>11)</sup>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국제관계에 있어서 평화라고 할 때, 그것은 「전쟁 또는 적대행위가 없거나 중지되어 있는 것(freedom from, or cessation of, war or hostilities)」을 의미한다. 평화에 대한 소련의 공식해석도 이와 비슷하다. 『「러시아」 현대문학사전』은 평화를 「인민과 국가간에 있어서 전쟁과 무력충돌의 결여(absence of war or armed conflict between peoples or states)」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정의만을 놓고 볼 때 서방과 공산진영 사이에는 평화에 대해 같은 관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서방과 공산진영의 평화관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서방에서 평화라고 할 때, 그것은 『「옥스포드」 영어사전』의 정의처럼 소극적 의미로서만 쓰이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것을 달성하겠다는 적극적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서방에서는 평화라는 말 다음에 번영이라든가 친선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발전이라는 소극적 의미의 단어가 뒤따른다. 즉 평화라고 할 때 거기에는 선의가 전제되어 있다.

공산진영의 경우는 다르다. 공산주의자들에게 평화는 「전쟁과 무력충돌의 결여」라는 소극적

10) 박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3주년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국토통일원(편), 『평화통일의 의지』, PP.29-30.

11) 다음의 논의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P.H.Vigor, The Soviet View of War, Peace and Neutrality(London:Routledge&Kegan Paul, 1975)

의미로서 일단 충분하다. 그뿐 아니라 평화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체제가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믿으며 또 공산주의 국가는 그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평화를 말할 때, 그것은 소극적 의미의 평화에 서방에 대한 악의를 합친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평화정책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들은 「무력충돌을 회피하는 정책」 또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위한 정책」 또는 그 양자가 합쳐진 정책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평화와 선의」라는 뜻에서 그 술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평화통일에 대한 남북한 접근방법을 비교하기로 한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초는 평화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평화라 할 때, 그것은 「남북간에 전쟁 또는 적대행위가 없거나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개념과, 그 상태를 바탕으로 남북간에 『친선과 협력 및 발전을 추구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개념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것이다. 평화개념에 대한 이러한 인식위에서, 우리는 남북간에 「전쟁 또는 적대행위가 없거나 중지되어 있는 상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북한불가침협정의 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 그 바탕 위에서 남북간에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의 제1원칙(『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은 전자의 구체적 표현이며, 제2원칙(『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은 후자의 구체적 표현이다.

우리의 이러한 자세에 반하여 북한은 통일문제를 기본적으로 혁명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평화통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판이하다. 그러면 북한은 통일의 문제를 혁명의 시각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김일성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과 남한 및 세계에 있어서 3중혁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sup>12)</sup> 북한에 있어서의 혁명은 북한에 「강력한 혁명기지」의 건설, 즉 그들의 경제 및 군사력의 증강과 김일성 유일사상 독재체제의 공고화를 의미한다. 남한에 있어서의 혁명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김은 남한의 노동자와 농민 및 「진보적 지식인」이 중핵이 되고 대다수의 인민들이 참여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정당을 조직하고 이 정당이 미군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역설했다. 세계에 있어서의 혁명은 위의 두가지 혁명과 연결되어 있다. 즉 한반도에 있어서의 혁명의 「주요장애」인 「미제」를 축출하는 것은 오직 모든 사회주의국가와 세계의 「피압박인민」의 통일전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일성의 「조선혁명론」은 북한이 평소에 주장해온 「평화통일론」과는 이론적 모순관계에 있다.<sup>13)</sup> 왜냐하면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이란 먼저 남한에서 공산당이 주도하고 노동자와 농

12) 김일성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르함」(Ali Archan)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연설의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uche!: The Speeches and Writings of Kim Il Sung, Foreword by Eldridge Cleaver, Edited And Introduced by Li Yuk-sa(New York:Grossman Publishers, 1972) PP.21-64.

13) 이러한 모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는 논문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민이 주축이 되는 이른바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일어나 「노동계급의 이익에 일치하는」 혁명정권을 수립한 다음, 이 혁명정권과 북한이 합작하여 통일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평화통일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평화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7·4공동성명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도 이러한 통일방식을 재확인함으로써, 그들이 남북대화에 임하는 진의가 평화통일의 촉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방법에 의한 적화통일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이렇듯 북한이 평화통일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혁명의 방법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는데, 혁명의 방법에 의한 통일이란 폭력의 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만큼, 어떤 면으로 보아도 평화통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남북한불가침협정 제의를 거부하는 저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제3절 민족대단결의 원칙

통일 3대 원칙의 제3원칙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우리 민족은 약간의 외세지배시기를 제외하면 통일신라이후 약 1천3백년간 동일성을 견지해 왔다. 어느 한 논자의 표현을 빌면 『우리 민족은 역사, 언어, 혈연, 문화의 공동성에 입각하여 한반도를 무대로 성장해온 기간을 통산하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기 힘들만큼 장구한 세월동안 민족의 동질성, 국가적 동일성을 유지해온 것이다.』<sup>14)</sup> 따라서 우리는 분단을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 민족의 대단결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가족찾기운동」을 북한에 제의하고, 「소비에트」정치체제와 「마르크스·레닌」주의속에 이질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에게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요구하며,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모국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대단결의 전제가 되어 있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라는 어구에 특히 유의하기 않으면 안된다.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의 뜻은 사상과 이념의 자유는 원래 기본적인 인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갖든지 그것은 그 개인의 자유라는 관념에서 상호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다. 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의 뜻은, 해방이후 남북분단의 역사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제도의 상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한민족의 최대의 이익인 통일을 위해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이다.<sup>15)</sup>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라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때, 그것은 자연히 「내정의 상호불가침원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정부가 「내정불간섭원칙」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우리의 이러한 자세는 1972년 9월 제1차 적십자회담에 참석차 평양을 다녀

---

Young C.Kim, "North Korea's Reunification Policy:A Magnificent Obsession?"

Journal of Korean Affairs, Vol, III No.4(January, 1974) PP.20-21.

14) 이영일, "한국통일추진의 근거." 『제1회 한국정치학회·재북미한국정치학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1975년, P.567.

15) 이와 비슷한 논리전개에 대해서는, 김삼규, "재외국민의 입장에서 본 민족적 화해촉진 방안" P.85.

은 뒤 마련된 이범석 수석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한적대표단이 북한주민의 가슴속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의 대표단이 그같은 일을 시도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답변하면서 『우리 누구도 북적대표들이 서울에 와서 공산주의 바람을 이 땅에 불어넣을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공산주의의 씨를 그들 땅에 뿌리게 함시다. 우리는 자유의 나무를 여기 한국에 심을 것입니다』라는 이대표의 발언은 남과 북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우선 인정하고 자기체제의 번영과 발전을 토대로 민족의 대단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처럼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라는 구절에 충실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은 이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남북대화의 「분위기 조성」이란 명분아래, 우리에게 「모든 사회적·정치적·법률적 장애를 제거할 것」을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국내법인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용공정책의 채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1977년 1월 25일 북한의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는 『민족내부불화의 근원을 없애고 민족적 대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①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 ② 투옥된 애국적 인민들과 민주인사를 무조건 석방할 것 ③ 반공정책을 중지할 것』 등 우리의 국내형편을 곡해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sup>16)</sup>

북한은 민족의 대단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산주의의 민족이론 그 자체가 민족의 대단결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주민에 대한 공산주의적 정치사상훈련을 통해 『우리는 계급적 존재이기에 앞서 민족으로 다같이 하나』라는 민족의식을 배격해 왔다. 그 대신 『우리는 민족으로 하나인 것이 아니라 계급으로 하나』라는 공산주의의 계급사상을 민족의식의 상위개념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즉 계급의식이 민족의식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sup>17)</sup>

이처럼 계급의식이 민족의식을 초월해 있을 때, 그들에게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부르조아」 계급의 타도가 우선적인 것이며, 따라서 남한인구의 대부분은 대단결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등장된다. 민족을 이처럼 타도의 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타도의 객체로서의 「부르조아」 계급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통일정책은 민족분열적인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론컨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것은, 남북한의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민주주의적 방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미 「자주의 원칙」에 대한 분석에서 제시되었듯, 남북한 전체주민에 의한 자유총선거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의 제3항이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해석의 바탕 위에서 민족대단결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16) 1977년 1월 25일 평양방송

17) 김창순, “「정치협상」제의의 전술적 의미,” 『북한』, 제63호(1977년 3월), PP.43-44.

## 제4장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우리 통일정책의 정당성과 북한 통일  
방안의 허구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7·4남북공동성명의 배경과 그 의미를 염두에 두고 본장에서는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주로 7·4 성명이 발표된 이후 남북한이 제안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그러나 전장과의 연관성을 위해 7·4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그 비교분석의 준거들로 삼았다.

### 제1절 북한의 통일방안과 허구성

민족의 통일문제가 미해결의 장으로 남는 주요원인은 북한의 통일방안 즉 대남적화전전략에 있다.<sup>18)</sup> 그들의 통일방안은 한반도의 분단현실속에서 민족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또는 합리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대남공산화 전략은 크게 나누어 간접침략과 직접침략의 양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간접침략은 대한민국 내부에서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유발시키기 위한 대남심리전, 남북 대화의 악용, 공작원의 침투, 국제선전전, 대「유엔」전략 등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대남적화전전략을 의미한다. 그들이 내어놓은 통일방안도 대남심리전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그 제안행위 자체도 이 유형에 속할 것이다. 이에 대해 직접침략은 물론 대남무력 공격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면 안될 점은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대남적화전전략의 궁극적인 수단은 군사력의 사용이라는 것이다. 「게릴라」전과 정치심리전을 위주로 했던 월남의 공산주의자들이 1973년 「파리」평화협정에 따라 연합군이 월남으로부터 철수하자 전면군사공격을 감행하여 30여년간 계속된 월남전쟁을 불과 50일만에 종결짓는 수법을 김일성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월남공산화 과정을 한반도에서 재현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컨대, 북한의 통일전략은 결국 대한민국 내부의 사회·정치 질서를 혼란시키고, 국제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킴과 동시에 외교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하거나 아니면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여 무력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일시에 전한반도를 공산화 하겠다는 것이다.<sup>19)</sup>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무엇인가? 1970년 11월에 열린 북한의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남

18) 북한의 대남전략은 여러 문헌에서 잘 분석되고 있거니와, 본고에서 주로 참조된 것은 다음과 같다.  
B.C.Koh,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9), Ch.4;  
Hak-joon Kim, The Unification Policy of South and North Korea, 1948~1976: A Comparative Stud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7), PP.207-226

19)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소(편), 『민주통일-』(1976), P.346 또한 Byung Suk Min, "A Study of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Hostility or Rapproachment?," Report: The First Joint Conference of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d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tists in North America(Seoul, 1975), PP.276-80.

조선혁명』의 당면과제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 규정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 혁명전선은 북한의 대남정책의 기본이 되었다.<sup>20)</sup> 그리고 북한노동당의 간행물인 『1970년 11월 2일 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따르면,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목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① 반미제국주의운동, 반 「파쇼」 및 민주화투쟁, 반봉건투쟁
- ② 민족해방혁명
- ③ 지주, 매관자본자, 반동관료배 타도를 위한 노동자계급, 농민계급, 진보적인 청년 및 학생, 일부애국적 군인, 민족자본가, 소 「부르조아」 계급간의 동맹에 의한 인민정권 수립
- ④ 지하당의 조직 강화 혁명역량의 강화
- ⑤ 폭력혁명에 의한 남조선정권의 타도
- ⑥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과 비합법 및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등 모든투쟁을 동원하여 혁명완수
- ⑦ 남조선혁명의 지원

요약컨대,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대한민국내의 노동자와 농민 및 민족 「부르조아」등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반정부적 사회계급에게 정치심리전을 전개하여 이 계층을 자극·선동시킴으로써 반정부폭동을 유발, 기존정부를 도괴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인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성숙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각 사회계층의 『통일전선』 형성으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먼저 실현시켜야 한다는 단계적 혁명론을 채택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최근 실효를 거둔 대표적 실례는 물론 월남전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월남전쟁 수행과정에서 1960년 이른바 『민족해방전선』의 조직, 1968년 구정공세 이후의 『민족민주평화세력 연합』의 조직, 그리고 『제3세력』의 형성 등 통일전선전략에 성공함으로써 1975년 4월 전면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물론 이와같은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반불식민해방투쟁으로 성장한 월남국민의식숙의 전쟁관, 「게릴라」전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작전지리적인 여건 국민의 80% 이상을 점하는 불교세력의 「카톨릭」세력 중심의 집권층에 대한 반기 등 월남 특유의 역사와 군사 및 정치배경이 전제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여건 아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심리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sup>21)</sup>

20) 1960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81개국 공산당대회에서 후진제국의 공산주의 운동과 관련된 현 단계의 상황을 민족민주주의혁명이라고 결론지은 것에 뒤이어 1961년 9월 북한 노동당은 그의 제4차 당 대회에서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970년 11월의 노동당 제5차 당 대회에서는 다시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지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내용상에 있어서의 하등의 차이점이 없다. 이 양자의 비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류세희, “북한의 인민혁명전략의 대남한 적용 가능성 진단, 『통일정책』, 제1권 제2호(1975년 6월), PP.197-199.

이같은 월남유형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기대하는 김일성의 대남적화 통일전략은 한마디로 망상이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심리적 동요를 일으킴으로써 가능한 정치심리전인데,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만한 아무런 여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의 대남적용 가능성을 진단한 한 논문에 의하면,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대처할 수 있는 남한의 강점으로 강력한 반공의식, 강력한 행정력, 국방력, 경제발전, 지역의 협조성을 지적하고 있다.<sup>2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의식한 정치심리전 상의 수단으로서 통일정책을 악용함으로써 분단국 현실에서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즉시통일론 또는 일거 해결론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연방제』, 『대민족회의』 및 『정치협상회의』, 대미 『평화협정』 및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하의 「유엔」 가입 등 북한의 이른바 통일방안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기본입장은 대남심리전을 의식한 즉시통일론이다. 다음에서 이 제안들의 허구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 I. 남북연방제안<sup>23)</sup>

북한은 1960년이래 통일방안의 하나로 남북연방제를 제의했으며 이 제의는 1973년 이른바 김일성의 5대통일강령 속에서 되풀이 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연방의 국호와 연방제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만 막연하게 언급했을 뿐 구체적 조건이나 내용, 예컨대 중앙정부의 형태나 지분국과의 권력 배분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설명도 없는 것이다.

원래 연방제라는 것은 동일한 국가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우와 같이 이념과 체제가 완전히 다르고 상호간에 극도의 불신과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아래서는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제와 이념이 상이한 여건하에서 연방제가 성립한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 제의하고 있는 연방제안은 연방을 형성하여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는 구실을 내세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술책이며 또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의 경우에는 연방제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면서 단지 선전술책으로 그것을 이용하려는 데 저의가 있는 것이다.

21)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소(편), 『민주통일』, P.347.

22) 류세희, “북한의 인민혁명전략의 대남한 적용 가능성 진단,” p.210-214.

23) 북한의 연방제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노동신문』, 1960년 8월 16일: The People's Korea, June 27, 1973.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연방제안이란 것은 남북한간의 공존과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우리 정부의 기본 통일방안을 거부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다.<sup>24)</sup>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의 연방제보다 우리 정부의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안이 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 II. 대민족회의와 정치협상안

북한은 또한 이른바 5대 강령중의 하나로서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대민족회의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 천명에 이르는 남북한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각기 엄선한 소수의 대표에 의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나 남북적십자회담 조차도 교착상태에 빠뜨린 그들이 수 천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일종의 군중대회와 같은 회의에서 고도의 합리성과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는 통일문제를 타결짓자고 하는 것은 북한의 저의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통일 「아랍」 공화국, 서인도제도연방, 「유럽」 공동체 등을 비교분석하여 통합이론을 정립한 「에트지오니」(Amitai Etzioni)교수는 『통합을 추진하는 「엘리트」 단위가 적을수록 통합은 성공하기 쉽다』<sup>25)</sup>고 결론지은 바 있다.

즉 통합을 추진하는 담당체는 통합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힘을 갖고 있는 소규모의 기관이어야 하며, 그 기관의 수가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이론에 비추어도, 북한의 대민족회의안은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대민족회의안이란 것은 현재의 남북대화가 그들의 대남폭력혁명 전략에 오히려 불리함을 깨닫고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마저 유명무실하게 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군중집회를 통해 미군철수안을 들고 나와 정치적 선전에 이용하고 한국의 각계각층을 선동하여 정치적 혼란을 조성해 보려는 것이다.

## III. 대미 『평화협정』 체결안

북한은 또한 그들의 통일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른바 대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24) 북한 연방제안에 대한 비판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Pyong-choon Hahm, "Federalism: A Means for the National Reunification of Korea,"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VIII No.4 (December, 1970), P.352; 강영훈, "북한평화통일정책의 이론과 실제: 연방제 개념을 중심으로," 경남대학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북한평화통일 정책평가 「세미나」의 논문, 1977년 6월.

25) Amitai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PP.93-94.



바 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불침범 약속, 무력통일의 위험성 제거, 남한의 전쟁도발과 인민탄압의 불비호, 자주·평화통일의 비방해.

둘째,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무기·장비·군수물자의 반입 중지.

셋째, 외군은 「유엔」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단기간내 전무기 지참 철군.

넷째, 철군 후 남한의 외군기지화 불가<sup>26)</sup>

그런데 이 대미 『평화협정』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다.<sup>27)</sup>

첫째, 『평화협정』의 일반적 이론과 개념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평화협정』은 대체로 교전당사자간에 전쟁을 종결짓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어지는 협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교전관계를 평화관계로 회복 또는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국가간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비춰 볼 때, 앞에 열거된 조항의 어느 것에도 전쟁처리에 대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휴전협정에 대체될 수 있는 순수한 개념의 평화협정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국제간 협약에서 요구되는 내용상의 균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조항은 거의가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한국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셋째, 군축협정안이라고 부를 만큼 주로 군비관계 항목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제1항만이 평화(불가침과 무력충돌 위협의 제거)협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다른 항은 모두가 군사력의 감축 또는 동결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사실 북한의 『평화협정』안을 서구식의 평화협정 개념 또는 평화조약 개념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원천적인 오류일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의 평화협정관은 서구식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에게 평화협정이란 「레닌」의 제7차 소련공산당대회(1918년)에서의 표현을 빌면 『힘을 얻는 수단이다』(“A peace treaty is a means of gathering strength”)

소련이 1918년 독일과 체결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이 바로 그 예이다. 「레닌」은 결코 이 조약으로서 독일과의 전쟁이 영구히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26) 북한이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의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한 것은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의 결의가 처음이다.

27) 민병천, “북한의 대미접근과 평화공세,” 『북한』, 46호(1975년 10월), PP.77-78, 박재규, “북한의 대미평화협정체결 제의의 저의,” 경남대학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북한통일정책평가 「세미나」의 논문, 1977년 6월.

그는 그가 독일에게 양보한 것은 「러시아」의 힘이 강해지는 순간 반드시 되찾아질 것이며 또 되찾아져야 한다고 언제나 믿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그의 표현을 빌면 『숨쉴 여유』가 필요했고 따라서 독일이 요구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조약체결에 응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련이 힘을 회복하는 한 전쟁은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닌」에게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평화란 『두 개의 전쟁(즉 종결지어지고 있는 전쟁과 앞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도발할 전쟁:필자주) 사이의 잠정적이며 불안정한 휴전』일 뿐이다.<sup>28)</sup>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에도 이러한 측면이 강하게 깔려 있다. 북한에게 대미 『평화협정』은 북한의 대남무력공격을 억제해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에 대한 지원역량을 줄임으로써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붕괴시키고 우리의 안보태세를 와해시킨 다음 또 하나의 전쟁을 도발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다. 결론컨대,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제의인 남북상호 불가침협정의 체결을 거부하고 대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집요하게 들고 나오는 것은 현행 휴전협정을 사문화시켜 그들의 기본목표인 무력에 의한 공산화통일의 기회를 만들자는 데 그 저의가 있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그들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들고 나오는 모든 제안들은 남북한관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남북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도외시한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모든 주장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다. 그들의 제안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등 3대 원칙의 어느 하나에도 일치하는 것이 없음이 확실하며, 오히려 한반도의 적화야욕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와 기만에 찬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 제2절 한국정부의 통일정책과 정당성

### I. 제안들의 개괄

7·4 남북공동성명을 유도·발표하고 아울러 남북조절위원회를 개최시킴에 성공했던 한국정부는 그 1년 뒤인 1973년 6월 23일 먼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민족의 지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되고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도 반대하지 않으며, 이와 함께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공산권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상호 문호의 개방을 천명했던 7개항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하여, 평화통일의 선행조건으로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조건을 밝혔다.<sup>29)</sup> 이어 1974년 1월 18일에는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의 평화정착을 위해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면 남북한이 서로 절대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하고, 서로 내정간섭을 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현행 휴전협정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할 것 등을 명시했던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의 체결을 제의함으로써 남북한의 평화공존관계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28) Vigor, The Soviet View of War, Peace and Neutrality, PP.170-173.

29) 국토통일원(편), 『평화통일의 의지』, PP.16-18.

제시했던 것이다.<sup>30)</sup>

이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천명된 바 있는 우리 한국의 기본입장은 1974년 8월 15일 박대통령이 다시 광복절경축사를 통해 내외에 선언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었다. 첫째 불가침협정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둘째 남북대화의 성실한 진행과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간의 상호문호개방 및 신뢰의 회복, 셋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따른 통일의 표현이 그것이다.

이 3단계 평화통일기본원칙이야말로 한반도의 분단현실 속에서 조국을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며 민족의 대단결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인 것이다.<sup>31)</sup> 다음에서 이 3대 원칙에 따른 구체적 통일정책의 논리를 추적하기로 한다.

## II.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의 논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제1단계는 한반도의 평화정착단계이다. 한반도에서 6·25 동란과 같은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이 재현된다면 조국의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므로 전쟁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며 전쟁재발의 방지와 조국의 통일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선 평화정착·후 통일」의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월즈」(Kenneth N.Waltz)교수는 『평화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제목적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평화가 추구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32)</sup> 그러나 비록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하더라도, 「에트지오니」교수의 표현을 빌릴 것도 없이, 『평화란 제세력, 제제도 및 제개인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sup>33)</sup>이지 어느 일방만의 노력으로 또 단일방법에 의해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의 남북한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남북간의 갈등은 전쟁정책과 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자세로 인해 극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른바 「리차드슨」의 상호적대감의 증가과정(The Richardson Process of Mutually Increasing Hostility)이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30) Ibid, PP.19-22.

31) 이 3대 원칙을 각 원칙별로 분석한 논문에 다음이 있다. 김영준, “평화 삼원칙의 분석과 전망,” 『세대』, 135호(1974년 10월), PP.160-169, 김학준, “자유총선거실시와 남북문제,” 『세대』, 135호(1974년 10월), PP.170-179;이기탁, “평화통일원칙과 「유엔」 회,” 『세대』, 135호(1974년 10월), PP.180-187.

32)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1954), P.2.

33) Amitai Etzioni, The Hard Way to Peace: A New Strategy (New York:Collier Books, 1962), p.12.

34) Kenneth E. Boulding, Conflict and Defense: A General Theo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p.143; L.F. Richardson, Arms and Insecurity(Chicago: Quadrangle Books, 1960)

즉 북한이 군비를 강화하고 동원체제를 갖추면 갖추수록 한국측도 대응해서 군비를 상대적으로 강화하고 또한 동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호간의 자극은 상승되어 폭력에 의한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를 억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데, 그것이 바로 「남북한불가침협정」의 체결안이다. 평화협정이 전후처리조치라는데 반하여 불가침협정은 전후예방조치이며 특히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실감을 가진 당사자 사이에서 맺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호간 무력행사를 포기할 것을 중요한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불가침협정은 공존의 논리에 입각한 당사자 사이의 약속인 것이다.<sup>35)</sup>

이러한 일반론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남북한불가침협정」의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기로 한다.<sup>36)</sup>

첫째의 무력불침략은 불가침협정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내용이다. 그것은 남북간에 개재하는 과제와 현안문제 또는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무력행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의 내정불간섭은 군사적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을 더 많이 지니는 것으로서 평화공존을 현실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은 우리의 내정에 일일이 간섭하려는 태도를 보여, 내란·폭동·혁명·파업을 선동하고 교사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서로 중상·비방을 중지하고」를 약속했으며, 1972년 11월 2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에서 중상·비방을 11월 11일부터 중지할 것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뒤에 북한측의 위약으로 그러한 심리전적 내정간섭이 재개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의 내용인 휴전협정의 효력존속은 남북관계와 침략의 설정기준으로서 휴전선을 정하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휴전협정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전쟁재발의 위험성을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억제하는 필요한 조건이 된다. 휴전협정이 유지될 때 비로소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의 요인을 제거하고 전쟁재발의 실질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간의 무력불침략이나 내정간섭도 휴전협정의 효력이 존속될 때 가능하고 보장된다. 휴전선은 비록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현실적인 의미에서 남북한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경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남북한불가침협정은 휴전효력존속을 그 내용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전쟁을 예방한다는 미래보장적 성격을 확고히 하고 있음은 물론 과거에 있었던 6·25 동란에 대한 청산까지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불가침협정안은 과거 처리적인 평화협정적 성격과 전쟁예방의 미래지향적 불가침협정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35) 민병천, “남북한상호불가침협정의 논리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 제3권 제1호(1977년 봄), pp.61-62.

36) Ibid, pp.65-66

한편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 북한공산집단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민족분단 고정화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조국통일이 실현되면 단일가입으로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조국의 분단문제와는 별개 차원의 문제이다.

분단국가의 유엔동시가입은 상호 국제평화질서의 수락을 의미함으로 평화협정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분단국문제의 해결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시도한 이른바 「분단국가 일반이론」에서는 분단국가의 유엔동시가입을 불가결의 요소로 주장하고 있다.<sup>37)</sup>

다음 한국의 제2단계의 통일정책은 남북한간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교류」는 남북한간에 물질·인적·기타 모든 유형의 「컴뮤니케이션」을 의미하며 「협력」은 이와 같은 교류가 공동기관구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교류와 협력의 실현은 남북한평화공존관계의 구체적 표현이며, 남북한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킴으로서 민족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인 것이다. 남북간에 인도적·경제적·사회적인 교류와 협력이 실현된다면 비록 통일정부는 수립되지 않았을지언정 사실상 통일된 상태와 유사한 상황이 조성되어 분단으로 부터 오는 민족적 고통은 현저히 경감될 것이며, 「완성된 상태로서의 통일」은 비록 아닐지언정 계속 진행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점진적으로 실현되어가는 것이다.

남북한간에 단일정부를 수립하는 의미의 통일은 사실상 어려움으로 「되기 어려운 통일」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되는 의미의 통일」을 먼저 실현하자는 것이 한국의 통일정책이다.

「오슬로」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의 「요한 갈통」(Johan Galtung)교수는 국가기능을 국방과 재정 및 외교 등 「상부구조」와 기타 비정치적·사회문화적 분야의 하부구조로 구분하고, 분단국가통일의 단계적 실현방안으로서 하부구조간에 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이 이론을 남북한관계에 적용시켜 한국의 통일도 「두 개의 존재에서 하나의 존재로의 도약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개의 단계가 개입되어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sup>38)</sup>

이처럼 남북한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실현되면 북한은 우리 체제 쪽으로 수감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가 교류접근하면 우세한 자본주의체제로 수감화되는 경향이 동·서 체제 접근과정에서 이미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폐쇄적 북한사회체제는 이미 전반적으로 한계점에 봉착하여 전근대적인 유일사상체제나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는 개혁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7) 김준희, “분단국가일반이론에서 본 한국통일문제의 법적 성격, 『통일정책』, 제1권 제2호(1975년 여름), pp.85-115.

38) Johan Galtung, “Divided Nations as a Process: One State, Two States, and In-between: The Case of Korea,”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Kyoto, August 14-17, 1972, p.5.

공산중주국가인 중·소가 이미 대서방접근을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른바 김일성유일사상체제는 수정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경제는 대서방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체제간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어 북한사회체제와 대한민국사회체제간에 수감화가 이뤄져 민족적 동질성이 회복된다면 그때 제3단계의 통일정책으로서 남북한국민의 자유·민주충선을 실시하여 단일정부를 수립하고 민족적 영원인 통일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 제5장 남북한관계의 전망

### -남북한 평화정착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단국의 평화적 통일이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달성, 즉 분단된 쌍방간에 어느 일방이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흡수, 병합하려는 방식이 철저히 배제되고 쌍방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단 문제를 해소하고 통일을 이룩함을 말한다.

따라서 평화통일의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타방을 정복하는 통일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이 폭력이나 무력이 철저히 배제된 평화통일은 객관적인 현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쌍방간의 대화와 협상에 의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쌍방에 공동이익을 줄 수 있는 평화적 방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통일문제는 『남북한 쌍방의 체제가 공감하는 선에서 일용 서로의 국가방위에 민감한 반응을 안겨주지 않는 선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sup>39)</sup> 또한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한의 당사자가 전쟁을 방지하고, 서로 침략을 하지 않으며 평화공존을 실효적으로 영위해 가겠다는 합의와 남북관계의 현실적인 조정이 선결조건』<sup>40)</sup> 이므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전쟁재발의 가능성이 최대한 억제되어 남북한이 상당한 기간동안 평화공존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한국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것이 남북한불가침협정의 체결을 통한 평화정착이다. 그러나 전장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북한노동당의 존립이유인 「남조선해방」의 명분이 약화를 의미하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은 끝끝내 평화정착의 거부로 일관할 것인가? 다음에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남북한관계를 전망하기로 한다.<sup>41)</sup>

39) 이동복, “협상이론에서 본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의 의의,” 『통일정책』, 제3권 제1호(1977년 봄) p.74.

40) 윤환태,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제시의 합리성,” 『통일정책』, 제2권 제2호(1976년) p.50.

41) 여기서 필자는 주로 다음의 연구에 의존했다. 박봉식, “평화정착방식에 관한 남북한의 태도평가,” 『통일정책』, 제3권 제1호(1977년), pp.52-53 및 pp.57-59.

한국정부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주변강대국의 동북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정책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주변강대국에 의해서도 대체로 지지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태도를 본다. 「키신저」(Henry A. Kissinger) 전 국무장관은 1975년 9월 제30차 「유엔」 총회에서 휴전당사자 회의를 제안하였고 1976년 7월 22일 다시 남북한과 미·중공 4자 회담을 제안함으로써 우리의 「6·23 외교특별선언」의 국제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특히 76년 7월의 연설<sup>42)</sup>에서 『한반도의 휴전유지를 위해 휴전협정에 대가되는 보다 영속적인 법적 구조를 만들어 아세아의 긴장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남북한관계를 보다 확실히 국제법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카터」 행정부가 발족한 이후에 미국의 책임있는 정책수립가에 의해서 휴전당사자회담안이 공식으로 거론된 일은 없다. 오히려 「카터」 행정부는 기존하는 한미관계는 유지하되 북한을 일단 독립변수로 취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43)</sup>

77년 2월 북한 등 14개 잠재적 적대국 또는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의 원칙을 발표했으며 3월에 와서는 미국인의 북한지역 여행금지해제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북한의 대미단독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동석하는 경우 대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도 종래 미국이 제의했던 4자 회담안의 것과 방식이 다르다.

이러한 「카터」 행정부의 움직임에 북한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북한은 「카터」 행정부의 등장을 바라보면서 1976년 12월 중순이후 미국에 대한 호칭을 종전까지의 「미제」, 「미제침략군」 등으로부터 「미국」, 「미합중국」, 「미군」 등으로 바꿨다. 그리고 1977년 1월 27일 김일성은 일본의 구노(구야츄치)의원과의 대담에서 『「카터」의 주한미군철수의 공약은 바람직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2월에는 그 동안 김일성이 「파키스탄」 대통령 「부토」를 통해 「카터」와의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끝으로 77년 3월 18일 조총련부위원장 이계백은 시기적으로 미국의 월맹자문사절단이 「하노이」에 도착한 다음날을 택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서 이계백은 『미국은 대한정책을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하고, 미·북한간에는 공적인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는데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는다. 우리는 최종적인 평화조약의 체결, 미군철수 그리고 양국민민간의 관계개선을 포함하는 모든 현안을 토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미·북한관계는 상당한 질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은 남북한관계가 정상화되어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정책에 입각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은 대북한 관계개선의 전제로서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6·23 외교선언」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42) "Proposal of Secretary of State Henry Kissinger for Four-Power Korean Conference, July 22, 1976," Korean Unification: Source Materials with an Introduction(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7), pp.416-418.

43) 이하 「카터」 행정부의 발족이후 미·북한관계의 전개양상에 대해서는, 박봉식 「미·북한관계의 전망」 제3회 통일논단주제논문(1977년 5월 26일), pp.2-8참조.

그러나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의 체결이 남북한관계의 정상화를 수반하거나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결시키는 문제이며 그 뒤 남북한간의 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주한미지상군의 철수와 더불어 휴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로서의 한국의 지위와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없이 현재의 휴전협정을 유지하는 것도 여기에 손을 대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북한과의 접근에서 남북한관계의 정상화를 선행 또는 병행조건으로 강력히 제시하는 경우, 또 중·소의 한국정부에 대한 호혜적 교차승인을 강력히 제시하는 경우, 미·북한간의 관계개선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한국정부를 부인하는 입장과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대남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한, 미·북한의 관계개선에는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소련의 입장은 어떠한가?<sup>44)</sup>

소련이 아직도 제2차 대전에 의한 영토변경의 현상유지를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는 아세아 집단안 전보장론을 아세아정책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면, 일단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74년 12월 4일 소련의 「말리크」대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미국에게도 평화협정을 제의하고 남북조절위원회에서도 「평화협정」을 제의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것이 아세아 집단안보와 한국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리고 1976년 8월의 「관문점 도끼살해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비동맹정상회의에서도 소련은 회의 그 자체는 크게 취급했으나 북한측 결의안은 별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1977년 1월 하순 북한 수상 박성철의 방소의 경우 「코시긴」수상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운위한 사실에서 소련이 남북한의 평화정착에 관심이 있다는 심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중공의 태도를 살펴기로 한다.<sup>45)</sup>

1971년 8월 당시 중공 수상 주은래는 「뉴욕 타임즈」지 「레스턴」(James Reston)과의 회견에서 남북간의 「화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다가 1975년 5월 김일성의 방중 당시 발표된 북한·중공간의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을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공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거의 동맹수준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미국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안에 동조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벤스」(Cyrus Vance) 미국 무장관의 방중 당시 한반도문제가 어떻게 거론·처리될 것인지 우리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결론컨대, 미국과 중공 및 소련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아세아의 평화에 기여하고 미·소의 「테탕트」나 미·중공 「테탕트」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중·소 대

44) 박봉식, “평화정착방식에 관한 남북한의 태도평가,” p.58; 김학준, “소련의 대한정책논의,” 『서울평론』, 제98호(1975년 10월 2일), pp.10-15.

45)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서울:박영사, 1975), pp.215-218.



립으로 중·소가 모두 북한에게 긴장완화의 로선으로 적극 나오도록 압력을 넣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정부의 평화정착안은 결국 국제적으로 수락되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 역시 이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제6장 결 론

민족의 통일은 우리에게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대한민국 3천 5백만, 북한의 1천 5백만의 부지런하고 우수한 단일민족이 통일을 이룩하여 생기차게 국내외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아세아의 어느 나라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통일은 또 하나의 동족상잔이라는 값비싼 전쟁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뤄야 할 초미지급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여기에 통일을 위한 「일세대희생론」이 거부되어야 할 이론적 근거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관계와 민족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평화에 의해 규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통일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에 의해 성취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모두 통일에 굳은 의지를 견지하고 슬기와 용기를 다해서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보장화와 상호신뢰의 회복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엄숙히 선언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북한이 이 출발점으로 되돌아 올 때 민족의 통일을 향한 서장은 열릴 것이다.

박 봉 식  
<서울대학교 교수>

<박봉식 교수는 본 논문에서 북한측은 남북대화를 그들이 말하는 소위 「3대 혁명역량」 등 「남조선에서의 혁명역량강화」를 지원해주는 방도로 생각했으며, 남북접촉으로 그들의 체제의 열세가 노출되자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북한측이 전쟁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대화의 광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편집자 주-

1. 남과 북에서 본 대화

정치의 세계에 있어서 용어는 그 세계의 성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대화」란 용어가 갖는 의미, 내용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대화」를 「남북한간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sup>46)</sup>으로 보는데 대하여 북한은 이를 「민주기지」노선과 그 노선의 전개인 「3대 혁명역량」전략에 따르는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sup>47)</sup>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려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보는 대로 남쪽에서는 그 상대인 북의 존재를 일단 인정하는 데 대하여 북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상대인 남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론에 입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남북간 「대화」가 격지 않으면 안될 운명적인 난관의 근원이었다고 하겠다.

「평화」, 「자유」, 「민주」, 「통일」 등의 용어의 경우도 같다. 남북간의 문제에서는 특히 북쪽에서 많이 쓰는 이들 단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의미내용을 달리한다는 것은 흔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통일」이란 용어를 보자. 우리는 「통일」이라고 할 때 남북한으로 갈라진 민족이 같이 살 수 있으면 그것을 통일된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북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 드리고 있지 않다. 「조국통일 문제는 북과 남으로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남반부에 세워진 미제의 식민통치를 청산하고 전국토의 완전해방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민족해방 혁명의 성격을 띠는 것」<sup>48)</sup>이라고 하여 남한의 현 체제의 파괴 위에 북한체제가 남북한 모두를 지배하는 상태를 통일이라 한다.

46) 「평화통일의 대도」-박정희대통령연설문선집(대통령비서실, 1976. 3)중 「남북간 선의의 경쟁을 제의한다」(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의 한구절 특히 p.21

47) 북한전서(사단법인 극동문제연구소, 1974) 하권 p.29 김일성의 1965년 4월 14일 「알리아르함」사회과학원(인도네시아)에서 행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어서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제하의 연설, 북한전서(사단법인 극동문제연구소, 1974) 하권 p. 29

48)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노동당의 방침과 생활력” 노동당정책사강좌 제1권-김일성방송대학강의록-(극동문제연구소, 1974), p. 228

그리고 「남북연방제」의 경우도 이 용어의 일반론적 해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으며 북에서는 바로 이러한 경향을 이용하고 있다. 북측에서 쓰는 「남북연방제」란 남북한의 현상에 있어서 그들의 「통일」개념에 관련된 즉 그들이 말하는 「통일」로 가는 과도적 형태로서 쓰고 있으며 달리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즉 「남북연방제」는 결코 두 제도의 공존을 유지하거나 분열을 고착시키는 그런 국가제도가 아니라<sup>49)</sup> 북측에서 말하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잠정적인 상태이며 잠정적이기 때문에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여 북측에서 요구하는 「연방제」란 임의의 연방제가 아니라 그들의 적화통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연방이지 이것을 불가능케 하는 것은 이론상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서의 연방의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들이 거부하는 것이 되고 있다. 예컨대 그들이 남북 조절위원회의 운영을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그 동안 짧은 그리고 제한적인 접촉이었으나 우리의 경험은 그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면 용어일 수록 그 정치적 요구가 강렬하고 동시에 정치적 의미내용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절감케 한다.

## 2.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정책에 있어서 남북대화

먼저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첫째로, 우리의 통일정책이 한반도정치 이중구조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민족주의를 신장시켜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실적인 것인가의 관점,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이 통일을 향한 민족의 의지를 충족시켜주는 방안인가의 문제의식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먼저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의 현실성이 문제이다. 먼저 평화통일정책의 골자를 정리해 본다.

우리의 통일정책을 한 마디로 말하면 남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전제로 하는 평화공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의 토대 위에 공존과 평화통일의 정책은 우리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과 1974년 8월 박대통령의 광복절경축사에서 밝힌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으로 집약될 수 있다.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은 남북한간의 평화정착과 공존을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에 역점이 주어져 있으며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남북한간의 존재양식의 기본으로서 상호불가침 협정과 남북대화와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남북간 상호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통일의 방법으로서 남북한간 자유총선거를 제의하고 있다.

---

49) 상동, p. 273

이러한 평화통일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면 첫째로, 평화정착을 통하여 동족상잔의 재연을 막고, 둘째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적 단일체 의식과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셋째로, 한반도정치의 이중구조 속에서 통일의 현실적인 기회를 조성한다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통일정책에 있어서 남북대화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점을 다시 보면 한반도정치가 기본적으로 38도선 설치에서 상징되는 열강정치와 남북한간의 적대적 존재의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본다면 우리의 평화통일의 장래는 열강정치의 후퇴 과정과 적대적 남북한관계가 공존적 남북한관계로 변전하는 과정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남북한간의 적대성은 때로는 열강정치의 이해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견제되어 온 면이 있으며 또 열강정치가 한반도에서 고정되는 경우 한민족의 정치는 제한될 것이며 남북한간에 적대성을 방치한 채 또는 적대관계의 활성화를 고취하면서 열강의 정치가 일방적으로 후퇴하는 경우 동족상잔은 재연될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남북한간 적대성이 잠재화하고 평화공존의 관계가 성장하는 것과 시기를 같이 해서 열강정치가 상대적으로 후퇴해 주는 경우 대화와 교류를 통한 한민족의 정치는 그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반도정치의 이중구조와 그 현실에서 본다면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을 토대로 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공존은 전쟁을 피하고자 한다면 달리 방도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한반도에 걸치고 있는 열강의 정치가 남북한간에 평화공존의 기반이 준비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중·소 대립과 미·중공관계의 변화 그리고 주한미지상군의 철수 등은 한반도정치의 기본적인 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열강의 정책이 현상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열강의 정책의 유동성에 따라 한반도정치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할 남북한이 스스로 민족의 실체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며 열강정책의 유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민족적 자율의 영역과 자주의 입장을 유지 확보 발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강국정치의 동요에 의하거나 남북한간의 대결에 의하거나 남북한간의 전쟁은 새로운 형태의 열강정치를 한반도에 자초하거나 민족의 실체가 파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면 평화정착과 평화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은 한반도정치의 이중구조의 성격에서나 남북한관계의 현실에서나 가장 현실적이며 다른 대안이 없는 정책이라 하겠다.

다음 두 번째 문제인 평화정착의 방안이 민족적 통일외지 추구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것이냐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 현실성의 국면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답이 나와 있지만 평화정착이 민족통일의 가장 빠른 길은 아니지만 민족의 파멸을 자초하지 않는 방향에서 있을 수 있는 최선의 길

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서 평화정착을 남북한관계의 정체화로 받아들여 이것을 분단의 영속화라고 북쪽에서는 비난하고 있으나 이것은 평화정착 위에 있을 대화와 교류라는 현상을 거부하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평화정착은 결코 분단의 영속화나 민족분열의 고정화일 수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로서 증명된다.

첫째로, 예컨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 하더라도 분단이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며, 둘째로, 평화정착 위에 대화와 교류를 발전시킨다면 남북한간에 실로 「다이나믹」한 민족적 차원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첫째, 북쪽에서 우리의 「6·23 외교정책선언」을 민족분열노선이라고 반대하고 있으나 유엔에 동시가입한다는 사실은 분단의 고정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리아」와 「에집트」간 통일아랍공화국을 발족시켰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이것은 진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북쪽에서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유엔에 동시가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동시가입 후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유엔 회원국이 축복을 받으며 통일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평화정착이 민족의 통일의지의 정체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평화정착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의미하며 평화공존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경쟁적 공존을 의미한다. 즉 남북관계에 있어서 불가침협정이 체결되고 쌍방이 여기에 성실하다면 군사적인 측면은 안정이 이루어져 평화가 정착되겠지만 그 이외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평화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상한다. 이 평화적 경쟁은 때로는 선의를 결한 경쟁으로 가열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것이 도를 지나치면 불가침협정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까지도 예상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평화적 선의의 경쟁에서 패배를 의식하는 측이 먼저 총칼을 들게 될 경우도 예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이 평화정착이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을 저지하는 점 즉 군사적인 면에서는 남북한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이 이외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국면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상 민족의 단일체의식을 최대한으로 고양시키고 정치이외의 거의 모든 면 즉 문화·경제·인적교류에 있어서 민족적 차원에서는 단일국가인 것이나 거의 다름 없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영토적 정치적 단일화의 실현만은 뒤로 미루어 두고 여타의 모든 국면에서 단일화 즉 통일의 실현을 평화정착의 테두리 내에서 이룩할 수 있다는 이론은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남북한간에 민족의식이 강렬해 지는 경우 교류와 협력이 자기편에 불리하다고 해서 다시 총칼을 드는 편은 민족에 대한 반역이라고 규탄받을 정도로 이미 군사·정치이외의 국면에서 민족의 단일체의식이 형성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무력으로 이미 제도화되다시피한 교류와 협력을 단절시키려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평화정착은 대화와 교류와 협력의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쟁적 공존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분단의 고정화나 민족통일의 발전에 정체를 가져 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평화통일노선의 추구가 민족적 자율성을 넓혀주게 되는 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남북간의 평화정착은 먼저 열강정치와 현상유지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평화정착과 평화공존은 열강정치와 한반도에서의 존재이유를 희박하게 할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한반도에서 열강정치의 현상유지적 대치상태를 후퇴시키는 동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평화정착을 통한 대화와 교류와 협력의 제도화는 그 만큼 민족통일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서 민족적 자주와 자율의 영역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 3. 북한의 통일정책에 있어서 남북대화

전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남북대화란 있을 수 있는 남북한간 평화적 접촉의 모든 국면을 총칭하는 뜻으로 쓴다.

북한의 통일정책에 있어서 남북대화의 위치는 모두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는 「민주기지」 노선과 「3대 혁명역량」론에서 그리고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를 기해 더욱 명백히 된 남한에 있어서 소위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과 관련된다.

1965년 4월 「알리아르함」사회과학원에서의 연설에서 김일성은 「현 단계에 있어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의 탄압으로부터 혁명세력을 보존함과 동시에 이를 끊임없이 축적하고 성장시켜 닥쳐올 혁명적 대사업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1968년 10월의 북한방송해설은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은 남조선에서 혁명을 전제로 하는 통일」이라 하였고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 자체내의 모순에 의해서 생길 것이며 그것을 완수하는 것은 남조선인민들 자신에 달려 있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을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로 대치할 수 없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북반부 인민들이 대신하여 수행할 수 없다. 남조선혁명이 따로 제기되는 만큼 그것을 조국통일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sup>50)</sup>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남조선혁명」이란 남한에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론은 노동당 제5차 당 대회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즉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적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 자신의 투쟁이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혁명투쟁에 의해서만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 자체가 주동이 되어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물론 남한내의 혁명투쟁이 북한이 북한의 혁명기지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남반부인민들은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으며 북반부의 위대한 혁명기지를 가지고 있다」 「북반부인민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sup>51)</sup>고 하여 북의 혁명기지의 지원을 받는 남한내에 있어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명백히 하고 있다.

50) 상계, 북한전서 하권, p. 32

51) 상동

이러한 전략적 자세하에 「김일성 동지께서는 1970년에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우리 나라 안팎에 정세를 전면적으로 헤아리시고 조국통일의 획기적인 방안들을 또 다시 내놓으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 우리 당의 방침은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여기서 구체적인 안으로 제의된 것이 197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 회의에서의 허담의 보고로서 소위 「8개항 통일방안」으로 제의되었고 동년 8월 6일 「시아누크」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의 김일성연설에서 「남조선위정자들이 우리 8개 항목 평화통일방안을 접수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은 딴 문제로 치더라도 그들이 참말로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무엇 때문에 남·북이 접촉하고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 하겠는가」라고 하여 「남조선위정자」를 협상의 상대로 운위함으로써 박대통령의 1970년 8월 광복절기념사 이래의 우리의 대화와 협상 호소에 호응하는 태도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허담의 8개 항목제안이나 김일성의 상기연설의 내용은 그들 말대로 1970년에 들어서면서 전개된 국제정치의 변화 즉 미·중공간 새로운 관계설정이라는 새로운 긴장완화의 분위기에 호응하면서<sup>52)</sup> 적화통일의 선행조건으로서 「남조선혁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서 생기는 「인민민주주의정권」이 북한의 주도하에 협작을 실시하고 연방제를 실시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이 북한의 당면한 통일정책이며 여기에 남북대화가 기여해야 한다.

#### 4. 북한의 대남전략으로서의 남북대화

이 항목에서는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태도를 중심으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의 통일정책 및 대남전략을 보기로 한다.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북측의 전략적인 태도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간에 헤어져 있는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전략적 태도가 쉽게 노출되며 그들의 전략을 은폐하기가 비교적 곤란한 것 같다.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나타난 북측의 대남전략은 그들이 인도주의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남북적십자회담의 예비회담 과정에서 북측은 본 회담의 의제로서 「가족찾기 운동」의 범위에 친우를 포함시키고자 한 점이다. 1971년 9월 20일에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열렸을 때 북측에서는 본회담의제로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남북으로 흩어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호상방문을 실시하는 문제

52) 1971년 8월 6일 김일성연설을 북측은 역사적 연설이라고 하고 「당시 우리나라의 국내외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했다.」고 하고 있다. 상계 노동당정책사강좌 제2권, p.260

둘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간의 자유로운 서신왕래를 실시하는 문제

셋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주고 상봉을 마련해 주는 문제」<sup>53)</sup>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의한 본래의 취지나 국제적십자 심인사업의 관례에 비추어서 「친우」까지 그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북적측 적십자사업의 개념과는 관계가 먼 「친우」문제로 예비회담을 6개월이상 지연시켰던 것이다.

둘째로 적십자회담 대표들의 자세문제이다. 제2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마치고 서울에서 돌아간 김태희 북적대표단장은 1972년 9월 16일 평양에서 내외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울시민을 비롯한 우리와 만난 모든 남조선인민들은 한결같이 수령에 대한 경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우리들을 한낱 적십자대표로서가 아니라 수령께서 친히 보내준 통일의 사절로 따듯이 맞이하여 주었으며 이르는 곳마다 열렬히 환영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대로 그들은 「적십자대표로서가 아니라……(김일성이 보낸)통일의 사절」로 자처하고 있으며 1천만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온 적십자인으로서 자세는 처음부터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산가족 문제는 염두에도 없었던 것이다.

셋째로 회담에 있어서 그들이 제의한 소위 선행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1972년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북적측은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1. 남한에서 모든 법률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고 당사자들과 협조자들이 민주주의적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
2. 쌍방이 적당한 적십자 요해 해설인원을 각각 상대방 현지에 파견할 것.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의 범위는 본인의 호소에 따라 정하며 그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방도는 본인의 민주주의적 요구와 자유로운 사상표시에 따라 정하게 할 것.
4.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한 곳에 「적십자대표부」들을 각각 설치할 것」<sup>54)</sup>

53) 이산가족백서(대한적십자사, 1976), p. 278

54) 상계 이산가족백서 p. 317 및 박봉식 「남북적십자회담의 경과와 현상」, 통일정책(평화통일연구소 계간), 1975년 4월호, p. 239



이러한 북적측의 제안은 의제의 구체적인 토의와는 관계없는 것이며 사회적, 정치적 여건이나 분위기의 조성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인도주의 사업인 적십자사업은 교전당사자간에도 실시되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적, 법률적 여건조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특히 법률적 조건으로서 반공법등의 폐지를 요구하고 사회적 장애 제거로 반공정책, 반공교육, 반공활동과 선전의 포기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한다는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73년 5월 9~10일 서울서 열린 제6차 본회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조건 개선에 관한 4개항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서 ① 반공법, 국가보안법 및 현행반공법규를 철폐할 것. ② 반공활동의 금지 및 반공단체의 해산. ③ 사업참여자, 협조자 관계자에게 모든 활동의 자유권의 보장 및 휴대품의 불가침권 부여. ④ 정당, 사회단체 공공기관 및 개인의 협조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sup>55)</sup>

이러한 내용으로까지 발전하면 이미 이것은 적십자회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본래의 사명인 인도주의문제를 사멸시켜 버리려는 기도였다.

특히 1973년 7월 11~12일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본회담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반공법, 국가보안법 철폐, 반공단체해산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남북적십자 대표단이 채택하자고 제의하기에 이르렀다.<sup>56)</sup>

둘째로 「적십자 요해 해설위원」을 상대방의 현지에 파견하자고 한 문제이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제3차 본회담에서 제기하였고 1973년 5월 9~10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 북적대표단은 이산가족의 주소와 생사를 확인하자는 의제 제1항 사업은 뒤로 미루어 두고 적십자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아래 소위 「새로운 제안」이라고 하면서 「요해해설위원」을 각 리, 동단위에 한 사람씩 서로 파견할 것을 제의하고 이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통행 등 모든 활동의 자유, 그들의 인신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권을 요구하였다.<sup>57)</sup>

「요해해설인원」을 리, 동단위에 한사람씩이면 한국에서만도 약 33,000명이 되며 이들에게 언론, 집회의 자유, 소지품의 불가침권 등의 요구는 반공법등 폐지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 가족과 친척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서 본인의 호소에 따르자는 것과 가족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방도는 당사자가 직접 상대측지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알아내며 알리는 것을 기본방도로 하자고 한 문제이다.<sup>58)</sup>

---

55) 상동 p. 239

56) 상계 북한전서 하권 p. 141

57) 상동 p. 140

58) 상동 p. 140

이것도 제6차 본회담에서 제기된 문제이나 「자유왕래」의 문제는 예비회담때부터 제의해 온 문제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의 호소와 더불어 적십자사에 의한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점을 거부하고 있으며 또 본인이 상대방지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등은 표현은 좋으나 상대방지역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상태이기에 적십자사업의 존재이유가 있었고 적십자회담이 열렸던 것이다. 북한지역은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극심한 주민이동으로 인하여 본인은 20여년전의 고향에 「자유롭게」 간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안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북측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적측에서 이러한 일을 서로 상대방의 적십자가 맡아서 하자는 것인데 북측은 적십자의 개입을 거부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가족과 친척의 생사와 주소를 찾도록 하자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주장을 하여오고 있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예는 문제로서 지적됨직한 일의 전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들 예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 같이 남북회담은 처음부터 한반도의 당국자를 회담의 당사자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출발되고 북측에서도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왔던 것인데 회담의 과정에서 회담상태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거나 공동화해 버리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적십자회담의 상대인 한국적십자가 그들이 주장하는 반공법등 폐지요구에 동조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인도주의는 조국통일이며 통일로써 완전히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적십자는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바쳐야 한다.」<sup>59)</sup>고 하여 그들은 처음부터 적십자회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1973년 7월 13일 김태희기자회견) 즉 남한에 소위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음을 스스로 명백히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남북대화를 「적화통일」이라는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점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북한 사회개방과 인적, 물적 교류의 점진적 확대에 의한 남북간의 불신해소, 신뢰회복, 민족동질성의 복원을 강조하는 서울측 주장과는 달리 평양측은 새로운 무력남침의 기반 조성을 위한 군사문제 우선 해결론을 들고 나왔다.

북한은 1960년대초부터 10년 이래 「4대군사노선」을 강행하여 무력공격을 개시할 이른바 「결정적 시기」를 노리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주한미군철수, 무기반입금지, 쌍방 10만 이하의 감군 등을 요구해 왔다.

이상에서 보면 북측은 남북대화의 상대로 남한의 당국자를 수락한 다음 대화의 실시과정을 통하여 대화상대자를 무장해제 또는 체제해제를 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대화에 나오으로써 미·중공관계의 변화라는 정세변화에 호응하면서 그들의 전래의 노선인 남한에서 「인민혁

59) 상계 「이산가족백서」 pp. 351~352

명역량」을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키워보려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과 환경의 조성은 적십자 인도주의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조선혁명」을 위한 조건, 환경조성이었던 것이다.

## 5. 남북대화 교착의 내외적 요인

남북대화는 1973년 8월 28일 소위 「김영주성명」으로 단절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김영주성명의 내용은 그 말미에서 우리의 「6·23외교정책선언」을 명백히 「두 개의 조선노선」이라고 공격하고 이것이 「7·4공동성명」의 원칙에 위반되며 따라서 「민족분열의 고정화를 반대하고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본다.

여기서 명백히 되고 있는 것은 대화의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대화의 진행자체가 그리고 현남북한 당국자가 대화의 상대자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외적으로 남북한 공존의 기정사실화를 의미하고 여기에 맞추어 아측의 「6·23외교정책선언」은 남북대화를 배경으로 유엔동시가입을 가능케 할 분위기가 급격히 조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러한 분위기는 1973년 11월 제28차 유엔총회에서 남북대화의 재개를 촉구하는 콘센서스 스테이트먼트(Consensus Statement)가 채택된 사실에서도 남북대화에 대한 세계여론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측은 대화의 개시후 얼마 안되어 대화의 방식이나 상대의 성격으로 보아 그들의 대남 전략 즉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에서 혁명역량을 기른다는 것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대화를 단절시킬 기회와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를 제거할 수 있고 대화의 과정에서 남한체제를 혁명역량강화를 위한 합법적인 조건과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러한 기대는 비교적 쉽게 무산되고 오히려 그들 전략의 기본을 망치는 남북한 공존이 국제사회의 인식에서 현실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북측은 대화를 더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진행되고 있던 남북대화는 적십자회담은 처음부터 그들이 인도주의사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남북조절위원회의 성격은 구경에 가서는 그들이 오래동안 주장해 오던 남북연방제 제안의 기반을 제거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대로 남북한 당국자간의 대화는 공존을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조속히 중지되어야만 했다.

오늘날까지 적십자회담이 실무회의로나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적십자사간의 접촉은 정부간의 접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적십자간의 접촉이기 때문에 완전단절의 호소력이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둘째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거나 필요할지도 모를 대화재개의 통로를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소위 「김영주성명」 이전에 있었던 북한측의 남북대화 중단기도를 봄으로서 남북대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밝혀보고자 한다.

1973년 4월 6일 「시하누크」 환영대회연설에서 김일성은 「본래 공존이란 각이한 사회 정치제도를 가진 다른 민족들 간에 제기되는 문제이며 한 민족안에 공존을 적용시킨다면 결국 분열을 영구화하는 것밖에 안된다」 라고 하여 남북대화의 계속이 남북한 공존체제로 연결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대화의 방법으로서는 남북조절위원회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으로 그들 전략의 기저를 제거하게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조절위의 기능을 중지시키거나 마비시킬 방도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만일 현재의 남북대화가 잘 진척되지 않는다면 북과 남의 당국자들 사이에서만 시야비야하는 것보다 남북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재 남북조절위원회의 사업에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각층인사들을 참가시켜 그 폭을 넓히든지 또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은 남북조절위원회 사업대로 진행하고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각계각층인사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자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3일 「체코」의 「후사크」 당수를 맞는 자리에서 「남북대화는 잘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통일의 앞길에 큰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고 전제하고 「남북대화가 남북 당국자들 사이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민족적 범위에서 벌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정치협상이나 대민족회의는 그들 말대로 남북한 각계각층의 인사와 단체들로 구성될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북한간의 구별의식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남과 북을 독자적인 정치단위로 하여 1대1의 동등한 입장에서 구성되는 남북조절위원회와는 구성원리를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일종의 북한측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이론의 적용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대화의 전면적인 거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아직 대화가 형식적으로 진행중이던 1973년 8월 4일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동시에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수석자문위원)인 윤기북이가 일본 기자클럽주최 만찬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조선의 유일 합법정부이며, 남조선 당국은 괴뢰정권이다」 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끝으로 주목할 점은 전기한 「시아누크」 환영대회에서의 김일성연설에서 「공존은 상이한 민족간의 문제」 60)라고 한 점이다. 시기적으로 1973년 1월 하순 월남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미군이 6개월내 월남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다는 사실, 평화협상과정에서 「티우」 정부의 입장이 무시되었던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이는 북한측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의 계속이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한국측 정책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대화를 단절하고 대남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하노이」 정권이 달성한 전략적 성공을 본

60) 이상 제인용은 상동 pp. 355~357

따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이 이외에도 제한적이거나 북한사회가 공개된다든지 북측요원이 남한의 실상을 목격하게 된 일들이 그들 체제에 위협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는 처음부터 있었다. 예비회담과정에서 적십자본회담을 판문점에서 그리고 비공개로 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고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가며 개최하자는 아측제안을 수락하는데 주저하였던<sup>61)</sup> 사실에서도 그들은 서울과 평양을 내왕하면서 접촉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모험이었다.

이상에서 보면 김대중사건은 남북대화의 개시로 디렘마에 빠진 북한측의 난처한 입장을 구해내는 구실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 6. 남북대화에서 대미평화협정 제안으로

북한측이 남북대화에서 탈출하여 대미평화조약제안으로 비약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남북대화가 그들의 대남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대미평화조약의 제의에서 대표되는 북괴전략의 변경은 먼저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불충분하나마 설명해 준다고 생각한 것 같으며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도이며 설혹 「미군철수를 실현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실로 하여 미국과의 접촉을 성립시킬 수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공이 그러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적어도 경제적 유대를 성립시켜 남북간에 현격한 격차가 난 경제성장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방향전환은 북한측으로는 대남전략을 내포한 채 보다 광범한 대외정책의 영역을 확대한 셈이 된다.

북측은 그동안 여러가지 대남제안에서 남·북한간의 평화조약을 제안하였고 1973년의 유엔총회 때 까지만도 주한미군철수와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유엔군사의 해체 주장이었다.

그러나 1974년 3월 25일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미·북한간에 평화조약체결을 포함하는 현안해결을 위해 대화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였는데 평화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미·북한 쌍방은 서로 침략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무력충돌의 모든 위협을 제거한다.……미국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둘째 쌍방은 무력증강을 중지하며 모든 무기를 한국에 반입하지 않는다.

---

61) 상동, pp. 278~281

세계 한국의 외군은 유엔군의 깃발을 벗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모든 무기를 가지고 철수한다.

네째 외국이 철수한 후 한국은 외국을 위한 군사 또는 작전기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1974년의 제29차 유엔총회에서는 북측의 외군철수 결의안이 부결되고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휴전협정 당사자이니까 미·북한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위 제3세계 여러나라들의 표를 얻어 그들의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우리측 결의안과 함께 통과시켰다.<sup>62)</sup>

북측은 오래 동안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남·북한의 관계를 월남형으로 전개시키려 해 왔고 월남에서 미국이 화평을 하자 이 월남화평방식이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것은 대미평화 공세를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월남전쟁에 패한 미국은 아세아에서 전의를 상실했다고 보며 1973년 10월의 석유파동으로 자본주의경제가 세계적인 대동요를 일으켰으며 미국과 일본에서 「닉슨」과 「전중」의 정변은 1974년의 해가 북측에게 유리한 정세의 조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남북대화의 단절을 적기에 단행하였다고 본 것 같다.

그리고 1975년 2월 18일에서 3월 4일간에 열린 공업부문 열성자대회에서의 연설에서 「전반적 국제정세는 머지 않은 앞날에 혁명적 대사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든지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모두 우리혁명에 이용하여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sup>63)</sup>고 하였다.

이것은 1967년에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자」고 했던 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로 맞이한다」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북측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물러나면 남북한의 통일은 「민족내부의 문제」로 되며 이렇게 되면 이미 1971년의 「9·25교시」로 시작된 땅굴공사의 완성과 시기를 마추어 적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것이다.

북측의 대미평화공세는 1976년 한해 침체한 편이었다. 동년 8월에 열린 비동맹제국정상회의의 불만족스러운 운영과 8·18사건에 이어 1976년 9월 21일 북측은 그들이 제31차 유엔총회에 제의하려던 결의안을 철회하고 말았다.

그러나 북측으로서는 뜻하지 않게 「카터」 미국정부의 등장으로 새로운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 같다.

62) A/10191, August 8, 1975 Annex II, pp.1~2 "The Memorandum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August 17, 1975.

63) 김태서 "4대군사노선강행과 혁명전쟁전략," 북한(북한문제연구소), 1975년 10월호, pp. 136~144

그 이유는 첫째로 미국이 스스로 미지상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였고 둘째로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특히 1977년 6월 11일 미국무성 「워렌크리토퍼」 수석차관은 「로스엔젤레스」의 「옥시덴탈」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북한, 중국, 월남, 「쿠바」, 「이락」, 「몽고」 등 10여개국과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현재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모든 정부들은 미·월남수교 과정을 「모든 국가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려는 「카터」 대통령의 메시지로 받아드려야 한다.64)」 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북한측의 대표적인 반응으로서 1977년 3월 17일 조총련부위원장 이계백의 미국신문기자와의 회견내용을 들 수 있겠다. 그는 「카터」가 발표한 북한을 포함한 미국과의 미수교제국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금지를 해제한 며칠 뒤며 또 공산월남으로 향한 미국사절단이 하노이에 도착하기 바로 전일을 택한 이날 「미국행정부가 그의 한국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하고 『우리 주석 김일성은 「카터」 정부가 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철수하겠다고 한 공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카터」 대통령은 정의의 사나이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과 북한은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철군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을 붙이지 않는다. 우리는 최종적인 평화협정, 철군 그리고 양국 인민간의 관계개선을 포함하는 모든 현안문제를 토의하기를 제안한다.65)」고 하였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을 북한이 어떻게 처리하며 이를 대남전략에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두고 볼일이다.

1976년 12월이래 북한은 미국과 미군에 대한 호칭에 적대성을 배제하려 해왔다. 그러나 미지상군 철수가 그들이 원하는 미군철수에 미흡한 탓인지 다시 종래의 용어를 쓰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수교의 제의가 있는 이 마당에 북한은 자세를 정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말하는 대북한관계 정상화와 북한이 원하는 소위 대미단독평화조약체결이 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다를 것은 분명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북괴간 수교가 이루어 지지 않을 리는 없다.

미국정부의 남한으로 부터의 지상병력철수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정책은 북한으로서는 그들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 경제적 난관해소의 가능성증대 그리고 대남전략의 승리로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측은 1977년 1월 25일 평양에서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에 조성된 영구분열과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제31차 유엔 총회에 제의하였던 결의안의 제목과 비슷함) 「통일을 지향하는 북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의 대연합」을 위하여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열자고 제의하고 있다.

64) 도하일간지 1977년 6월 13일자

65) Andrew H. Malcolm, "North Korean Aide suggests Normalizing Ties with U.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19~20, 1977.

여기서 보면 미국 신정부의 대북한접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남전략을 수정하여 중단된 대화의 광장에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것 같다.

## 7.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하여

남북대화의 재개와 정상화는 북한측에서 대남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적 공존의 광장에 나와 선의의 경쟁에 응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버리고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노선 즉 남북한관계의 해결은 남북한 당사자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외면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한반도문제는 대한민국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서 해결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평화조약 운운으로 미국과 접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의 깨우침이 빠를 수도 있을 것이고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는 북한이 한국을 영원히 외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지상군의 철수는 휴전협정의 존속여부에 관계없이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에 있어서 한국의 지위의 향상을 의미하며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의 한국의 입장이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전쟁을 하던 평화를 하던 한국을 상대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을 크게 수정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다만 가능한 일은 미국의 대한방위조약의 확실성을 천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구두로는 이를 천명하더라도 평양에 미국대사가 주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행동으로 대한공약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재개가능성은 미국이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며 북한이 우리와 전쟁을 하지 못할 처지가 되어 평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어떠한 환상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측은 미국과의 접촉 성공을 서방측으로부터 재정 기술 등 경제적 측면에서 우선 이용하여 우리와의 경제 및 군사기술면에서 경쟁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측의 자세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역량이 북한의 그것을 압도하여 여기에 도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거나 아니면 또 한번 대화를 대남전략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남북대화에 나설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측과의 수교과정에서 북측을 설득한다면 대남전략의 변형된 방법과 구실로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러한 경우 이제 다시는 남의 농업과 북의 공업의 합작 운운을 할 수 없을 것이고 한국의 군수 산업을 겨냥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정치적으로는 체제약화를 위한 국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 예상된다.

대화재개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 없으며 난공불락의 자세와 대의명분에 입각한 원칙을 고수하며 「평화통일의 대도」를 지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 남북대화 제14호

(1977. 7 ~ 1977. 10)

# < 목 차 >

제1부 평화정착의 길 .....	3
박대통령의 광복절 제32주년 경축사 .....	3
제2부 남북대화 소식 .....	8
<남북조질위원회> .....	8
서울측, 북한의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성명발표 .....	8
<남북적십자회담> .....	15
제23차 실무회의 경과 .....	15
대한적십자사총재, 「8·12남북적십자회담 제의」 6주년맞아 답화발표 .....	22
제3부 기타 남북관계 소식 .....	24
1. 남북직통전화 불통 1년 .....	24
2. 남북대화의 진로 .....	31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 .....	32
남북한 경제교류의 가능성 .....	46

## 제1부 평화정착의 길

박대통령의 광복절 제32주년 경축사

「남북통일은 자유총선거로」  
「우선 대화와 교류의 확대를」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제32주년을 맞아 경축사에서 「자주통일의 길은 남북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중국에는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조국통일의 바탕은 평화이며 평화의 보장은 바로 국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제32주년 광복절 경축사의 전문이다. -편집자 주-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광복 32주년을 맞이하여 나는 국민여러분과 더불어 감격 어린 이날을 진심으로 경축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우리와 함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개발도상국가들은 너나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모색과 노력을 거듭하는 동안 허다한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민족은 광복과 더불어 국토분단의 비극을 강요당했고 설상가상으로 6·25 공산침략이 빚은 그 엄청난 참화를 입었는가 하면 그 후에도 끊임없는 전쟁재발의 위험속에서 사회적 혼란과 빈곤의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는 민족적인 각성과 자립의지를 일깨우고 불사조처럼 일어나서 불과 15~6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입니다.

중화학공업건설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획기적인 수출증대를 가져왔고 새마을운동과 영농의 근대화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면모를 일신시켰는가 하면 주곡의 자급자족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고속도로망의 건설로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좁히는 등 근대산업국가로서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사의 자랑스러운 주체로서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이 이루지 못했던 근대화 작업을 그것도 남북대결이라는 준엄한 여건속에서 지금 우리 세대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나는 국민여러분과 더불어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더욱 굳게 단결하고 더욱 부지런히 땀흘려 일해서 국력배양을 가속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우리의 당면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터전위에 타에 시범이 될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민족사적 정통성의 바탕위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자주국방력을 확보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그 속에서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존립할 수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땅에 전쟁재발을 막고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를 조직하였고 방위산업의 육성을 비롯하여 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는등 군·관·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북한공산집단이 함부로 넘보지 못할 막강한 자위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미 그들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4~5년이면 군사면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능히 제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총력안보태세를 견지하고 방위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여 자주국방태세완비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당면과제는 자립경제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는 지난 세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그동안 다져진 자립기반위에서 금년부터 제4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우리 경제의 자주성장 구조를 굳히고 사회개발을 촉진하며 기술혁신과 능력향상에 치중하여 우리 경제를 선진 산업국가 대열로 끌어올리는데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입증된 우리경제의 저력으로 보나 또 우리 국민의 슬기와 의지로 보아 제4차 5개년계획목표는 훌륭히 앞당겨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제1차 년도인 금년에 우리는 대망의 백억불 수출을 기필코 달성하여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며 중화학공업건설을 촉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플랜트」 등 자본재의 수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호제도와 의료보험제도 등의 실시는 사회복지를 우리 실정에 알맞게 확충해 나가는데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난번 국제 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선진 여러나라와 겨루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다시한번 전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전망은 매우 밝기때문에 제4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80년대 초에 가면 우리가 추정하는 1인당 국민총생산 1,500불과 수출 2백억불을 훨씬 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나는 내다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산업은 선진공업형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경제자립을 완전히 이루게 될 것이며 평화와 번영의 탄탄한 바탕위에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행복을 누리며 고루 잘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기회있을 때마다 앞으로 4~5년간이 온 국민의 숙원인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단결된 힘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주·자립의 시대를 앞당겨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나는 작년 이 식전에서 남북간의 이념과 체제경쟁은 이미 결판이 났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북한의 실정으로 볼 때 북한공산집단이 우리와의 평화공존을 거부하고 남침전쟁노선을 계속 추구한다면 멀지않은 장래에 파국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수년동안 극도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동포들은 내 집과 내 농토를 가질 기본적 자유마저 빼앗기고 심지어 결혼연령까지 제한된데다가 광신적 우상숭배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권침해와 억압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북한동포들이 땀흘려 일할리없고 삶의 의욕과 희망을 가질리 만무합니다.

이처럼 북한공산집단은 평화를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우리 민족문화의 본류를 거역하는 이단집단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무모한 장난도 유구한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민족문화의 연면성을 결코 파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북한동포들이 겪고 있는 비인간적인 참상에 대해 같은 핏줄을 나눈 동포로서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며 국민여러분과 더불어 통일조국의 염원을 새롭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조국통일의 바탕은 평화이며 평화의 보장책은 바로 국력입니다.

또한 자주통일의 길은 남북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상호신뢰

를 회복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중국에는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정치의 일반적 추세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공산국가들도 공허한 이념투쟁보다는 경제건설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북한공산집단만은 이같은 시대조류에 역행하여 남북대화를 계속 거부하며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하고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는 우리의 제의마저도 끝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가증스럽게도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공해상에 소위 「군사경계선」이라는 것을 자의로 설정하여 또 하나의 도전을 가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허망된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간악한 도발도 우리는 초전에 격멸 응징하고야 말 것이며 우리의 국력이 어느 모로나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는 날 북한공산집단은 시대착오적인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마침내는 남북대화에 응해 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점을 앞당기기 위하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과 활력에 넘친 시대에 살면서 와신상담 땀흘려 일하고 또 일하고 있습니다.

일찌기 우리 선조들은 무수한 국난을 끈질긴 의지로 이겨내고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 왔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내외의 시련도 이를 조상이 물려준 구국의지로 극복하고 총화단결된 힘으로 국력을 반석과 같이 다져 후손에게 길이 영광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줄기찬 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숭고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사생활 각방면에서 능률의 극대화와 국력의 조직화를 행동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은 바로 우리의 정신혁명, 경제건설, 민주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며 후손에게 떳떳이 물려줄 민족정기의 유산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책임으로 나라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3천6백만의 진군이 계속되는 한 막강한 국력에 뒷받침된 평화와 번영속에 통일의 여명은 밝아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민족중흥의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자랑스러운 세대임을 명심하고 맡은바 직분에 더욱 성실과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이것이 8·15해방의 감격을 국가건설에 생산적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세대의 책무이자 보람입니다.



## 제2부 남북대화 소식

###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북한의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성명 발표

『조절위 개최하여 「2백해리」 토의하자』 서울측, 직통전화 재개통도 촉구

남북조절위원회 민관식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는 지난 7월 22일 오전 10시 평양측이 이른바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키로한 문제와 관련하여 KBS방송을 통한 대북성명을 발표하고 이 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의견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부위원장회의를 판문점에서 늦어도 7월말 이전에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또한 민 위원장대리는 평양측에 의해 운용이 중단되고 있는 남북직통전화를 즉시 개통시켜 원활한 절차협약에 호응하라고 아울러 촉구하는 한편 평양측이 이와 같은 평화적이며 건설적인 제의를 외면하고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분규를 야기시킬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평양측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민관식 공동위원장대리의 성명문 내용은 전문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지난 7월 15일 우리 정부는 평양측이 이른바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키로 하였다는 7월 1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우리 어민들의 조업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남북한간에 새로운 분규를 야기시킬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1953년 휴전 이래 한반도에서 유지되어 온 현상에 변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휴전선에 인접한 동해와 서해상에서의 고의적인 도발로 인하여 우리의 선량한 어민의 안전조업이 방해받을 때는 우리측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본인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남북한 인접 수역에서의 어로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어로한계선을 설정, 조업토록 우리 어민을 지도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아울러 향후 휴전선에 인접한 동·서해상에서의 평양측의 고의적 도발로 인하여 야기될지도 모르는 사태에 중대한 관심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은 7·4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남북간의 의견차이를 해소하고 이들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절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의하는 바이다.

첫째, 이들 문제와 관련한 남북간의 의견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둘째, 남북조절위원회 개최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부위원장회의를 관문점에서 늦어도 7월말 이전에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셋째, 평양측에 의해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남북직통전화를 즉시 개통시켜 원활한 절차 협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본인은 이상 제의에 대하여 평양측의 긍정적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아울러 만약 평양측이 우리의 이와같은 평화적이며 건설적인 제의를 외면하고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분규를 야기시킬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평양측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해 두는 바이다.

이와같은 서울측의 제의에 대하여 평양측은 7월 25일자 「평양방송」 보도를 통하여 그들의 일방적인 「2백해리 경제수역」 설정이 민족자주권의 정당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이견차이의 해소를 위한 조절위원회 개최는 괴이한 행위라고 운운하며 오히려 「6·23선언철회」, 「전쟁정책 중지」, 「반국가사범의 석방」 등 종래의 상투적인 비난으로 일관함으로써 거부태세를 명백히 했다.

더우기 북한의 「정무원 총리」 박성철은 지난 8월 9일 평양을 방문한 「사용투메 프린시페」 정부 사절단을 위한 환영연에서 남한의 영세어민들이 그들의 이른바 경제수역안에 들어와서 평화로이 어로하는 것을 「동포애적 입장」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 「지난 시기에 남한어민들이 북한수역에 와서 어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가증스러운 기만선전을 늘어놓았다.

북한측은 동서해 휴전선의 연장선 부근 뿐만 아니라 그 남쪽에서 조업중이던 우리 어선과 어부들까지 마구 납치했으며 1954년부터 지금까지 납북해간 어선과 어부는 모두 4백49척, 3천4백87명에 이르고 있는 이중 32척, 4백5명이 아직도 북한에 억류된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보다 인도적이라는 인상을 주므로써 한국의 영세어민들의 심리적 동요를 유발코자 하는 간계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측은 「2백해리 경제수역」을 1977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는데 이어 여기에 덧붙여 소위 「해상군사경계선」이라는 것을 설정, 이를 8월 1일부터 함께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소위 「인민군최고사령부」의 발표를 보도한 평양방송에 따르면 『「군사경계선」은 동해에서는 영해기선으로부터 50마일로 하며, 서해에서는 2백마일 경제수역을 경계선으로 한다. 「군사경계선」구역의 수상, 수중, 공중에 있어서 외국인, 외국군용합선, 외국군용기의 행동을 금지하며 민간선박 민간항공기는 북한당국의 사전합의 또는 승인아래서만 군사경계선구역내에서 항해 및 비행을 할 수가 있다. 군사경계선내의 수상 수중 공중에서 민간선박 민간항공기에 의한 군사적 목적을 갖는 행동과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군사수역선포는 긴장상태가 접속되고 있는 동서해상의 휴전선 인접수역에

서 그들의 애매한 「2백해리」 설정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무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도발의사의 표시이며 호전성을 다시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북한측의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관해 기본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 기구를 통한 협의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이어 이 문제 토의를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자세인 것이다.

북한측의 「2백해리」 및 「군사수역」 설정은 일본을 향한 정치·경제적인 접근속셈과 휴전선 인접 동서해상에서 분쟁의 소지를 마련, 이를 현상변경을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이 강하게 풍기고 있다.

북한측은 이제까지 대외적으로 영해를 선포한 일이 없다. 다만 1968년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 호 납치사건 때 「영해 3마일」을 침범했다고 주장했고, 1975년 9월 서해북단에서 일본 어선 「쇼세이 마루」 호를 습격하고 「영해 12마일」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덧붙여 「50마일 안정경비수역」이라는 것이 있다고 밝힌 일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서해휴전선 연장선 부근의 5도 주변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때때로 주장했고 1973년에는 무력으로 이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측의 단호한 대결로 후퇴했었다.

서해 5도는 휴전이후 24년간 휴전협정 제2호 13항에 규정된 대로 유엔군사령관관할하에 섬(5도)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고유영해와 통로도 확보되어 왔다. 유엔군사령관은 휴전과 함께 작전 명령으로 서해 5도와 북한지역간의 중간선을 해상군사북방한계선으로 설정, 이 지역을 보호하고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막아왔다. 그런데 북한측이 「2백해리 경제수역」에 군사경계선까지 설정한 것은 틈만 있으면 분쟁과 긴장을 야기시켜 휴전체제라는 현상을 타파·변경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한국정부의 관련성명자료

<외무부 대변인 성명>

(1977. 7. 15)

1. 북한당국은 7월 1일 소위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성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2.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이와 같은 기도는 한반도 주변수역 특히 인접해상에서 생업을 위하여 어로에 종사하여 온 우리 어민들의 조업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남북한 간에 새로운 분규를 야기시킬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1953년의 휴전이후 한반도에서 유지되어왔던 현상에 변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2백해리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성명을 인정할 수 없다.

3. 우리 정부는 남북한 인접수역에서 어로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어로한계선을 설정하여 조업토록 우리 어민을 지도하여 왔다. 휴전선에 인접한 동해와 서해의 해상에서 북한의 고의적인 도발로 인하여 우리의 선량한 어민의 안전조업을 북한측이 방해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 어민의 안전과 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4. 이 문제에 관하여서 만약 남북한간에 의견차이가 있다면 우리측으로서는 7·4남북공동성명정신에 입각하여 기존의 남북간 대화기구를 통하여 상호협의를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5. 따라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와 같은 평화적이며 건설적인 입장을 무시하고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분규를 야기시킬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북한측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대변인(문화공보부장관)성명>

(1977. 8. 1)

1.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15일 북한측이 소위 「2백해리 경제수역」이라는 것을 설정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이것이 조성할 각종 분쟁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대화기구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한 바 있었다.
2.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의 이같은 평화적이며 건설적인 제의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오는 8월 1일에 이르러서는 소위 「군사경계선」이라는 것을 또다시 설정한다는 보도마저 내기에 이르렀다.
3. 이것은 1953년의 휴전 이래 한반도에서 유지되어 왔던 현상에 변동을 초래하고 또 특히 휴전선에 인접된 동해 및 서해의 수역에 있어 우리 어민들의 조업안전과 우리 선박들의 안전항행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그들의 소위 「2백해리 경제수역」이나 또는 소위 「군사경계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다시 명백히 밝혀 두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현행 휴전체제와 이에 따르는 제반 관례를 계속 준수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이다.

한편 우리는 북한측에 대하여 이른바 「2백해리 경제수역」이나 또는 소위 「군사경계선」이라는 것등을 획책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는 도발적 행위를 포기하고 현행 휴전체제와 이의 관례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4. 만일 북괴가 이를 거부하고 도발적인 사태를 조성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이 져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문화공보부 대변인 성명>

(1977. 8. 10)

북괴의 박성철은 지난 9일 소위 한 만찬회에서의 연설이라는 것을 통해 북괴는 한국 어부들의 소위 북괴 경제수역안에서의 어로작업을 허용해 왔다고 발언함으로써 또 하나의 기만선전을 기도하였다.

이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북괴의 침략적인 소위 「군사경계선」의 설정을 맹렬히 비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기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면해 보려는 유치하고 부질없는 상투적 기만선전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북괴가 진실로 자유로운 어로작업을 허용한다면 오늘 이 시각 현재 북괴가 강제억류하고 있는 한국의 민간어선 32척과 어부 405명을 무조건 즉각 송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전조업문제에 관하여 기존의 대화기구를 통하여 상호협의하자는 우리의 제의를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괴에게 다시한번 백마디의 거짓 선전보다 하나의 성실한 행위를 촉구하는 바이다.

<북괴의 주요 해상도발 일지>

(1955~1976)

- ▲1955. 5. 10 조기잡이 어선 피격 1척 침몰, 4척 실종.
- ▲1956. 11. 7 서해상공에서 아군기 2대 습격.
- ▲1957. 5. 16 북괴선박, 연평도 어선 남북.
- ▲1958. 4. 24 연평도서 어선 1척 납북.
- ▲1959. 8. 19 서해에 북괴함정 불법납침.
- ▲1960. 8. 24 연평도 근해에 북괴무장선 침입, 우리함정이 포격전끝에 격침.
- ▲1962. 12. 23 연평도 북방 6마일 해상에서 유엔군측 초계정이 북괴함정에 피격, 유엔군 3명전사, 3명부상.
- ▲1964. 3. 24 백령도 근해에서 어선 2척 납북.

- ▲1965. 4. 26 연평도 근해에서 어선 대영호 납북.
- ▲1965. 10. 29 강화앞바다에서 북괴함정 어부 109명 납북.
- ▲1966. 1. 26 동해 대진항 북쪽 휴전선 남방에서 명태잡이 어선 5척 피습, 동명호 영풍호 납북.
- ▲1966. 11. 24 동해 수원단 남방에서 명태잡이 어선 3백여척 피습.
- ▲1967. 11. 3 동해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어선 3백여척 피습 5척 납북.
- ▲1967. 12. 25 동해휴전선 남방 5마일 해상에서 명태잡이 어선 보수호(5톤) 등 5척 선원 30명 태운채 납북.
- ▲1968. 1. 4 동해휴전선 부근에서 명태잡이 어선 홍익호(6톤), 복인호(6톤) 선원 14명 태운채 납북.
- ▲1968. 1. 6 동해 어로저지선 남쪽에서 명태잡이 어선 신광호(8톤) 등 5척 선원 34명 태운채 납북.
- ▲1968. 6. 17 서해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조기잡이 어선 양성호(14.8톤) 등 5척 선원 44명을 태운채 납북.
- ▲1968. 10. 30 동해 어로저지선 남쪽 해상에서 명태잡이 어선 길성호(9.2톤) 등 7척 선원 53명 태운채 납북.
- ▲1968. 11. 7 동해 어로저지선 근해에서 명태잡이 어선 준호(33톤) 등 4척 선원 32명 태운채 납북.
- ▲1968. 11. 8 동해 어로저지선 근해에서 명태잡이 어선 10척 선원 72명 태운채 납북.
- ▲1970. 6. 5 연평도 서북방의 공해상에서 해군방송선 1척이 북괴의 고속포함 2척의 기습 사격을 받고 침몰.
- ▲1970. 7. 9 백령도 근해에서 어선 5척 선원 29명 태운채 납북.
- ▲1971. 1. 6 백령도 근해에서 조종중이던 제 37, 38 회영호에 북괴함정 3척이 접근사격, 37회영호는 화염에 싸이고 38회영호는 추격을 당하면서 납하.
- ▲1971. 8. 31 동해 어로저지선 근해에서 탁성호(19.6톤) 선원 30명 태운채 납북.
- ▲1972. 2. 4 서해 대청도 서쪽 40마일 어로저지선 남방 공해상에서 어로중이던 우리 어선 10

척이 피습, 1척침몰, 35, 36 안영호 등 5척 남북 근해 경비 해군함정이 제1삼양호 등 4척을 인천으로 인도 귀항.

▲1973. 7. 27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생선운반선 1척이 피습침몰.

▲1973. 10. 23 북괴함정이 고의적으로 6백여회 월선 및 접촉수역을 침범하는 서해사태 유발.

▲1973. 11. 19 서해의 대청, 소청, 연평 근해에서 북괴 함정, 경비정 6차례 9척 우리 영해침범.

▲1973. 11. 28 북괴 경비정 2척이 서해 소청도 근해에서 1척이 3백야드 근해까지 접근.

▲1973. 12. 1 북괴, 군사정전위 304, 306차 본회의에서 서해의 백령도 주변 등 서해 5도 수역을 영해로 주장.

▲1973. 12. 7 서해의 연평, 대청, 백령 근해에 북괴 함정, 경비정 11차례 10여척 침범.

▲1974. 2. 15 서해 백령도 서쪽 공해상에서 북괴 함정이 수원 32호(84.4톤)를 격침하고 수원 33호(84.4톤)는 선원 14명 태운채 남북.

▲1974. 4. 9 북괴 함정 6척, 6차례나 서해 분계선 남쪽 도발 항해(7월 1일까지 도발항해 계속

▲1975. 2. 26 북괴 선박 10척이 소청도 서쪽 우리 해역을 침범. 북괴 함정, 미그기도 월경.

▲1975. 3. 24 북괴기 30대 백령도 주변상공 위협 비행, 이중 6대는 우리 작전해역 상공 깊숙이 침범.

▲1975. 6. 9 미그 21기 2대 백령도 상공침범, 선회비행.

▲1975. 7. 12 북괴함정 1척, 백령도 서북방 침입, 우리측의 경고사격에 북괴함정 5척이 한계선 침범 호위도주.

▲1976. 1. 23 북괴기 2대 백령도상공 침범.

▲1976. 2. 27 북괴 고속전투기 2대 백령도 상공 침범.

<남북적십자회담>

제23차 실무회의 경과

「추석성묘방문단 교류하자」한적, 본회담 조속재개도 촉구

대한적십자사대표들은 1977년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7분까지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에서 북측측에 대해 ①남북적십자 제8차 본회담을 판문점에서 조속히 개최할 것과 ②작년 8월 이후 북한측에 의해 중단된 「서울·평양」간의 직통전화선과 판문점내 쌍방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 대표들은 대한적십자사측의 제안들에 대하여는 관심을 표시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민족분열책동」이며, 「동포애와 인도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비방으로 일관하였다.

다음 제24차 실무회의는 대한적십자사측이 8월 25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적십자회측이 이를 거부하고 10월 14일에 열 것을 수정제의하여 옴으로써 1977년 10월 14일에 열리게 되었다.

다음은 이날 제23차 회의에서의 대한적십자사 김연주 교체수석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편집자 주-

우리는 오늘 제23차 실무회의를 갖게되며 금년에 들어와서 세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지난번 제22차 실무회의에서 장기간 교착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정상화하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하루 속히 재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구체적이고도 성의있는 방안을 내놓고 귀측의 동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는 먼저 본회담 재개문제에 있어서 제8차 본회담은 쌍방이 합의한 대로 당연히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하지만 귀측이 이를 계속 받아 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8차 본회담을 우선 판문점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제의는 남북적십자 실무회의가 만 3년동안 20여차례의 회의를 거듭하였건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선 중단된 본회담을 무조건 열어놓고 의제토의를 진전시킴으로써 교착된 회담에 돌파구를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본회담 의제의 예비적 토의에 있어서도 우리측은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토의 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만약 귀측이 의제 제1항을 조속히 토의할 수 없다면 우선 시범적 사업으로서 『남북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의 상호교류』나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재회문제』를 실시해 보자고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또 지난해 8월이후 그 기능을 잃고 있는 「서울·평양」간의 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귀측에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측 주장은 이 실무회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며 또 귀측이 성의만 보인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정제된 우리의 대화를 정상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밑거름이 되려는 우리측의 성실한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회의에서 우리측의 합리적인 방안들이 진지하게 토의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문제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의 입장을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북한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만 4년동안이나 중단되고 있는 본회의를 조속히 재개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한다는 것은 이미 쌍방간에 엄숙히 합의한 것이므로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이 합의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만큼 제8차 본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기 때문에 귀측은 제8차 본회담의 서울 개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측은 다섯차례에 걸쳐 회담날짜까지 명시하여 본회담의 서울 개최를 제의하였고 심지어 귀측으로 하여금 회담일자를 정하도록 몇차례 종용하기도 했으나 귀측은 한번도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측은 부득이 귀 대표단이 서울에 올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귀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판문점 또는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장소에서 본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고 또 지난번 제22차 실무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8차 본회담을 우선 판문점에서 조속한 시일안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중단된 본회담을 하루속히 재개하려는 일념에서 항상 문제해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우리측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입장과는 달리 귀측은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본회담을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본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측에 전가하고 인도주의 회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른바 「분위기문제」, 「조건환경문제」같은 여러가지 선결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회담 재개문제는 결코 귀측이 내세우고 있는 바와같은 「정치적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문제이며 이는 5천만 동포가 다 알고 있고 전세계가 알고 있으며 귀측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본회담 재개문제는 결국 귀측이 오늘의 남북관계를 진정한 대화의 관계로 발전시킬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며 1천만 이산가족들과 5천만 동포들에게 엄숙히 공약한대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재회의 길을 열어 줄 인도주의적 성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귀측이 진심으로 인도주의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고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할 성의가 있다면 본회담을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여러가지 정치적 조건을 내세워 본회담재개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적십자회담과 인도주의사업은 정치적 상황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극복하려는 숭고한 정신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적십자회담의 정상화는 무엇보다도 귀측이 숭고한 인도주의정신을 명심하고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지키며 동포애와 인도주의정신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4년동안의 대화의 교착상태는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되며 오히려 남북간의 상호불신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남북대화가 바로 이와같은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는데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귀측은 더이상 대화재개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이 실무회의에서부터라도 불필요한 정치선전과 중상비방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귀측은 우선 이곳 판문점에서나마 빠른 시일안에 제8차 본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다음 본회담 의제토의에 있어서도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입장은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들의 재회를 하루속히 실현시키자는 것이며 이와같은 사업은 어디까지나 남북의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인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쌍방이 합의한 다섯개 의제를 순서에 따라 하나 하나 토의 해결하자는 방안을 내 놓았으며 또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긴급한 문제와 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적 사업 방안도 여러차례 제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제3차 본회담에서 제의한 「심인의뢰서교환방식」은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려내며 알리는 문제』를 먼저 쌍방 적십자사가 주관하여 추진하자는 현실적인 사업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후에 우리측이 내놓은 『노부모문제의 해결』과 『남북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의 상호 교류사업』등도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할 긴급한 문제일뿐 아니라 교착된 회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획기적이며 시범적인 사업 방안들입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은 모두가 쌍방이 합의한 다섯개 의제 속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인도적 사업들이며 이산가족 당사자들도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쌍방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실천가능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긴급하고도 실천 가능한 인도적 사업들은 아직도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산가족 당사자들과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본회담 의제토의가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귀측이 이른바 「조건환경론」과 같은 정치적 선결조건을 앞세워 회담 상대방을 중상비방하고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외면하려는데 있습니다.

제작년 추석부터 시작된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방문 행렬이 해가 바뀔수록 더욱 불어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정치적 선결조건을 앞세워 대화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는 귀측의 주장이 얼

마나 부당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측도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이들 조총련계 제일동포들은 모두가 지난날에는 우리와는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던 사람들이며 본의아니게 고향과 혈육을 멀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동포들의 과거를 일체 불문에 붙이고 오직 동포애와 인도주의정신으로 그들을 따뜻이 맞이하고 있으며 수십년만에 조국과 고향을 찾고 그리운 혈육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금년에도 지난 구정과 한식에 이어 또다시 「5월 단오」를 기해 수천명이 고국을 다녀갔으며 그들의 모국방문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 불어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또한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으로 모든 나라와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우편, 통신망을 유지하고 경제, 사회, 문화분야에서 널리 교류를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련과 중공을 비롯한 공산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고국의 가족 친척들과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동포는 이제 수만리 고국땅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귀측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같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우리 동포 장전두씨는 금년 초에 소련 여권을 가지고 「모스크바」와 일본을 경유해서 지난 2월 14일 고국 대한민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조국이 해방된 뒤 수십년동안이나 고향과 혈육을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소련정부의 인도적인 조치로 38년만에 고향인 제주도에 살고 있는 노모와 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와 정치사상을 달리하고 있는 조총련계 제일동포들도 고향땅을 찾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으며 멀리 소련땅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고향과 혈육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바야흐로 우리는 이제 세계의 모든 곳을 다 오갈 수 있고 또 편지 연락도 할 수 있는 가깝고 개방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오직 한군데 남북의 인위적 장벽만은 아직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벽은 한 나라 한 강토안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일시적인 장벽으로서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의 인도적 대화는 바로 이 장벽을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 할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 쌍방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기로 엄숙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귀측의 회담자세와 태도를 보면 이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대화의 정도와 목적에서 너무나 이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귀측은 우리의 인도주의 회담의 참뜻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귀측은 우리측과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 주자고 합의해 놓고서도 이제와서는 『통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면서 본회담 재개를 거부하고 의제토의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귀

측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적십자회담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입니다.

귀측은 또 쌍방이 합의해서 마련한 「서울·평양」간의 직통전화와 「관문점연락사무소」의 기능까지 일방적으로 마비시켜 놓고 있으며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복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 귀측은 이 실무회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본회담 재개문제」나 「본회담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선전으로 대화 상대방을 증상비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해외동포들의 모국방문 사업까지도 「민족분열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의 합의사항을 어기므로써 상호 신뢰관계를 저해하고 서로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차이점을 시비하며 갈라진 혈육의 문제보다도 정치선전이나 하면서 회담을 형식적으로 이끌어 가자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귀측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발전적 변화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성장을 똑바로 보고 5천만 우리겨레의 소망과 전세계 여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국제사회는 「헬싱키 선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서가 이념적 대결과 전쟁을 배격하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각국이 개방과 교류를 통하여 서로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전반적 조류와는 반대로 지금의 남북관계는 위급하고도 비정상적인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정세는 좀처럼 개선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찍이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노선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왔습니다.

귀측이 진정으로 남북대화의 정상화를 바라고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른바 「적화통일」이라는 망상과 낡은 폭력주의를 버리고 「7·4남북공동성명」을 충실히 지키며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며 자주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귀측은 「남북상호불가침 협정체결」에 동의하고 남북한의 상호 사회개방과 교류 및 협력관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우리는 얼마전에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5주년을 보냈고 또 내달이면 대한적십자사가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제창한 「8·12제의」 여섯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북조절위원회회의와 남북적십자회담이 교착된 이후의 지난 기간을 돌이켜 볼 때 남북간에는 그 어느때 보다도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대화의 교착과 긴장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동족간의 불신과 반목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으며 5천만 겨레가 염원하는 이땅의 평화정착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한없이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회담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고 동포애와 인도주의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하루속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대한적십자사가 제창한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찾기운동」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서 현실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민족적인 사업이며 지금까지 우리측이 내놓은 여러가지 사업방안들은 귀측에서 성의만 보인다면 언제든지 실현될 수 있는 인도적 사업들입니다.

나는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주장과 제안들이 진지하게 토의되기를 바라면서 지난번 회의때에 우리측이 내놓은 제안들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귀측의 성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8차 본회담은 쌍방이 합의한 대로 서울에서 당연히 개최되어야 하지만 귀측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귀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제8차 본회담을 판문점에서 조속한 시일안에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이 제안은 「서울·평양」왕래의 길이 4년동안이나 막혀 있는 현 상황에서 본회담 재개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본회담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조속히 토의해야 합니다. 만약 귀측이 의제 제1항의 구체적 토의에 응할 수 없다면 우선 시범적 사업으로써 「남북이산가족 성묘방문단 교류」와 「노부모 상봉」과 같은 인도적 사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러한 시범적 사업들은 남북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귀측이 이같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우선 우리측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긴급한 인도적 사업들이 금년 추석 명절에는 반드시 실현되어 이산가족 당사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동시에 남북적십자회담에도 새로운 전진적 돌파구가 열리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해 8월이후 귀측에 의해서 중단상태에 있는 「서울·평양」간의 직통전화선과 판문점내 쌍방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킬 것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귀측은 그동안 남북간의 연락수단의 마비상태가 남북대화에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왔으며 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켰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며 우리의 요구를 지체없이 받아 들여야 합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제안들이 합의되고 실천된다면 이는 정체되어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1천만 이산가족문제의 해결과 민족적 신뢰의 분위기 조성에도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측 제안과 요구사항에 대한 귀측의 성의있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대한적십자사총재, 「8·12남북적십자회담 제의」 6주년맞아 담화발표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를 촉구-한적, 남북이산가족 해결에 최선다짐

대한적십자사 이호 총재는 1977년 8월 12일 「8.12 남북적십자회담제의」 6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적십자회측은 동포애와 적십자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조속한 정상화에 호응해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1천만 남북이산가족들을 찾아주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인내와 성실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5천만 민족 앞에 다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이호 총재의 담화문 전문이다.

- 편집자 주 -

오늘 우리들은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지 어언 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남북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창한 것은 조국 분단 4반세기동안 1천만 이산가족들은 물론 5천만 민족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던 혈육들간의 재회의 기쁨을 실현시켜 주자는 숭고한 인도주의정신의 발로였으며 나아가서는 이와같은 인도적 회담을 통하여 남북간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해 보려는 일념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적십자회담은 1973년 7월 이래 서울·평양사이를 오가면서 개최하던 본회담이 중단된 채로 있으며 그후 4년동안 판문점에서 6차례의 대표회의와 23차례의 실무회의를 거듭하면서 대화정상화를 위한 적지않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제토의의 실질적 진전은 물론 본 회담 정상화마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실로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문제에 있어서 북한적십자회측이 서울에서의 제8차 본 회담 개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판문점이나 기타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장소에서라도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의제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하여서는 「추석성묘단의 상호교환」, 「노부모사업의 우선 실시」, 「가족사진의 교환」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제의함으로써 우리측의 성의와 노력을 행동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방문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공을 비롯한 여러 공산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들도 대한민국내에 있는 가족, 친척들과 서신교환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혈육의 정을 이어주는 인도주의 사업이 이념과 체제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여 능히 실현될 수 있고 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남북간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1천만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 작업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1974년 7월 이후 판문점에서 3년이상 남북적십자 실무회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남북이산가족찾기 사업에서 아무런 구체적 진전도 없었음을 상기하면서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조속한 재개야말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남북대화의 정상화의 첩경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남북적십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동족간의 인도적 문제를 동족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내외에 실증하고 또 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적십자 회담을 제의 한지 6개월을 맞이한 오늘 본인은 북한적십자회측이 동포애와 적십자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적십자 본 회담의 조속한 정상화에 호응해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1천만 남북 이산가족들을 찾아주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인내와 성실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5천만 민족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지난 6년간 남북적십자회담과 인도주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여러분과 정부당국, 관계인사 그리고 국내외의 언론기관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배전의 격려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 제3부 기타 남북관계 소식

#### 1. 남북직통전화 불통 1년

남북분단 4반세기만에 대화가 성립됨으로써 남북간의 불의의 돌발적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남북간의 의사를 상호 소통하는 수시 연락통로로서 긴요한 역할을 해오던 남북직통전화가 북측의 일방적인 단절 처사로 그 기능을 상실한지 지난 8월 30일로 꼭 1년이 되었다.

서울측은 그후 수 차례에 걸쳐 직통전화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했으나 북측의 무성의로 아직껏 아무런 진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직통전화는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1971. 9. 20)에서 남북적십자 쌍방이 판문점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 각각 상설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연락사무소간에 직통전화 2회선을 가설키로한 합의에 따라 동년 9월 22일에 처음 설치되었다.

그후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간의 정치적 대화문제가 대두되어 고위층의 평양방문을 위한 쌍방 실무자의 비밀접촉에서 우리측은 북측에 대해 서울·평양간의 직통전화가설을 제의하였으며 쌍방 합의에 따라 72년 4월 29일에는 서울·평양간을 잇는 역사적인 남북직통전화 비공개리에 개통됐다.

곧이어 평양을 방문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은 김일성과 만나는 자리에서 『남북간에 예기치 않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남북간 수시 대화통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 직통전화의 공식화를 제의, 김일성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와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공식화되었던 것이다.

그후 남북을 잇는 연락통로는 남북적십자 중앙기관간 2회선, 남북적십자회담용 통신망 18회선, 판문점의 연락사무소간의 2회선과 남북조절위원회간의 1회선을 포함하여 모두 23회선의 통신선을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남북직통전화는 남북간의 회담개최에 따른 그때그때의 절차협이나 남북고위층(이후락·박성철)의 비밀교환방문의 실현과 7·4남북공동성명발표에 크게 공헌하였고 특히 휴전선에서의 총격사건, 동서해에서의 어부 및 어선납북사건 등 남북간의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현상 악화를 예방키 위한 협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그 운용에 있어서는 「남북직통전화가설 및 운용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평양간 직통전화는 매일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4시- 8시 사이에 운용돼왔고 적십자 중앙기관간 직통전화(서울-평양)는 매일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4시-6시 사이에, 판문점의 「자유의 집」과 「판문각」간의 직통전화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 오후 4시 사이에 운용되어 왔다.

단절 이전까지의 그동안의 실무를 보면 남북간의 통화수는 시험 통화 5,637회(조절위: 1,108회, 적십자: 1,850동, 판문점 연락사무소: 2,679회), 본통화 1,051회(조절위: 238회, 적십자: 45회, 판문점 연락사무소: 768회) 이외에 서울과 평양에서 조절위원회나 적십자 회담이 열릴 때는 보도용으로 크게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대화 중단선언으로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뒤에도 계속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분단 4반세기만에 역사적인 개통을 보았던 남북직통전화는 1976년 8월 18일 소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직후인 1976년 8월 30일 북한이 동해에서 자유로이 어로중인 우리측 어선 제3신진호를 납북해감에 따라 이의 송환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적측이 전화통지문을 발송코자 하였지만 북적측은 이의 접수를 거부하였으며 이때부터 남북직통전화 총 23회선을 모두 단절해 버린 것이다.

그후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성명 및 남북적십자실무회의를 통하여 여러차례 직통 전화의 정상운영의 회복을 촉구해 왔으나 아무런 회답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남북직통전화 단절 1년을 맞아 북한측의 일방적인 단절처사를 규탄하며 조속한 정상 운영을 촉구한 주요 일간신문의 1977년 8월 31일자 사설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조선일보>

「대화 통로」를 회복하라  
- 직통전화거부 1년에 북에 촉구한다 -

1.

남북직통전화는 북측의 이유없는 일방적인 통화거부로 중단된지 30일로 만 1년이 됐다. 북측은 작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직후 이유없이 남북직통전화의 교신을 거부하고 이를 중단 시킨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판문점도끼사건 직후인 작년 8월 30일 북한집단은 동해에서 자유어로 중이던 우리 어선 제3신진호를 불법 납북해 갔다. 대한적십자사측에서는 이를 협의키 위해 북측에 즉각 전화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은 이에 아무런 이유도 제시함이 없이 전화 교신을 거부함으로써 한적에서는 부득이 방송을 통한 송환교섭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후 우리측은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성명으로, 또 판문점에서 이어지고 있는 남북 적십자 실무회의를 통해 줄곧 남북직통전화의 기능회복을 북측에 촉구했고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그럴때마다 북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판전을 피우면서 우리측 촉구를 극력 회피만 해오고 있다.

남북직통전화는 분단 4반세기만에 1971년 9월 22일 처음으로 개통됐다. 우리측의 「8·12제의」로 실현된 71년 9월 20일의 남북적십자예비회담 제1차 회의에서 쌍방은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 각각 상설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이 연락사무소간에 직통전화 2회선을 가설할것에

합의함으로써, 남북직통전화의 역사적인 개설을 보았던 것이다. 그후 72년 4월 29일에는 우리측 제의로 다시 서울-평양간을 잇는 본격적인 직통전화까지 비공개로 개설됐고, 평양을 방문한 이후 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남북간에 예기치않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남북간 수시대화 통로의 필요성」을 김일성에게 강조, 합의함으로써 서울-평양간 남북직통전화의 공식화가 「7·4 남북공동성명」과 함께 공개됐던 것이다.

## 2.

그후 적십자 분회담에 대비하여 1972년 8월 25일에는 남북적십자중앙기관간 직통전화를 비롯한 18회선의 회담용 통신망도 개설되어 총 23회선의 남북간 직통전화가 그 기능을 유지해 왔다. 남북 직통전화 가설 운용에 관한 남북간 합의에서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기타 남북간에 제기되는 문제 및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를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 하기 위하여 서울-평양간 직통전화를 설치운용한다」고 못박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남북직통전화는 남북회담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활용 외에도 특히 휴전선에서 충격 사건, 동-서에서 어부 및 어선납북사건 등 남북간의 예기치않은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긴급한 협의통로로 중요한 구실을 담당해 왔다. 뿐만 아니라, 남북적십자 중앙기관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서 유효조항을 보면 「본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폐기,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고 상호 합의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호 어선납북의 남북간의 긴급사태를 협의하기 위한 한적측의 직통전화 교신 요청에 북측은 그 합의까지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이후 직통전화 중단상태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북측은 간신히 이어지고 는 판문점 적십자실무회의 개최마저도, 그 회수를 점차 줄 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도 보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대화의 상설통로인 직통 전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1년이나 방치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와 이는 무관하지 않은 의도인 것인가. 우리는 그들로서도 유익했으면 했지, 결코 유해할 것이 없는 남북직통전화를 민족의 염원의 한 가닥으로서도 조속히 회복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방적이고도 무성의한 그들의 태도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빚을 것인지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 <한국일보>

#### 남북직통전화 단절 1년 - 평화통일 원한다면 대화를 이으라 -

회담용을 포함하면 모두 23회선이나 되는 남북직통전화는 병어리와 귀머거리로 변한지 어제로 꼭 1년이 된다. 잘못해서 병어리나 귀머거리가 된 것은 물론 아니다.

평양 집단이 작년 8월 30일부터 한쪽 전화통 입을 꼭 봉해버리고 선을 딱 끊은데서 갑자기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8·18사건으로 내외의 공박이 그들을 몰아치니까 못된 심술을 부린게 바로 이 직통전화의 절단이었다.

심통이 나서 그런 것이니 그들로서 정당한 단절사유를 내세울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유는 감감소식이고 우리측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은 없다.

제개를 한 1년 동안 요구했는데 역시 전혀 노·코멘트-마치 단식투쟁이나 묵비권 행사 같은 비문명적 대응을 그들은 회담장에서 계속 고집하는 중이다.

어떤 배경에서 온 것인지는 묻지 않아도 갑자생이다. 연락도 대화도 사업도 통일도 다 싫다는 것이다. 실력은 풀리고 이로는 달리고, 그래서 종전처럼 전화질이나 계속하면 아무래도 남한측에 말려들 뿐 아니라 대남폭력적화혁명의 꿈은 물거품으로 될 것이 뻔하니 아예 전화통을 깨버려야겠다는 망나니 심사를 부린 것이다.

그 때문에 끊어진 판문점 연락사무소간의 직통전화는 모든 회담절차와 실무진행을 협의하는 「채널」이다. 수시연락을 하다시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서울-평양간을 잇는 남북한 중앙기관 사이의 두 회선은 적십자회담과 그에 따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케 한다는 시설 목적을 갖고 있다.

같은 구간의 조절위용 직통선은 좀더 차원 높은 가설목적을 품은 것이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기타 남북간에 제기되는 문제 및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를 직접·신속·정확히 처리」케 한다는 민족적 염원과 과제를 걸어둔 것이다.

직통전화의 일방적인 절단은 이 거룩한 뜻과 목적을 모두 이장시킨 망발이라는데서 그들의 죄상을 사무치게 새기며 규탄과 통분을 금치 못하게 하는 바 크다.

뜻과 목적이 이처럼 비상한 것이기에 그 가설 및 운용에 관한 상호 합의서에는 일방적인 조치를 못하도록 「쌍방의 합의」를 폐기요건으로 정해 놓았다. 또 서울-평양간 한 4년간의 운용실적을 보아도 시험통화까지 합쳐 조절위원은 1천3백여회, 적십자용은 근 2천회에 달하는 빈도를 보여왔다.

이제 작년 어제부터 이 실적은 「무」를 기록하고 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한번도 안 했다. 그리고 보니 앞에 말한대로 연락이나 대화, 사업, 통일은 하기 싫다는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음과 동시에 불의의 사태나 돌발적인 충돌사건 같은 것을 이성적으로 불끄며 처리하려는 의사마저 없다는 점을 또한 짚게 암시하고 있다.

이 실태를 뒤집어 풀이하면 충돌이나 돌발사태의 발생을 불사하고 평화의 정착이나 평화적 통일을 증진시킬 의사보다 오히려 도발·분쟁을 촉발시키려는 흉계마저 숨은 것 같은 적극적인 해석으로 연역될 법하다.

바로 이 초점을 경계·규탄하면서 평양집단의 개과를 여기 촉구해 두고 싶다. 이른바 그들이 말

하는 「자주적 통일·평화통일」에 대한 성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끼리 가장 평화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말을 나누게 하는 직통전화기능은 냉큼 회복시켜야 옳다. 북한측의 맹성과 사과를 기다린다.

#### <경향신문>

#### 남북 「통신」 거부 1년

역사적인 남북적화담 개시와 함께 5년여 동안 대화에 활용된 남북직통전화가 지난해 8·18 도끼 살인만행 직후 북한측에 의해 끊긴채 어언 1년이 지났다.

76년 8월 30일 한적측은 긴급 전화통지문을 보내기 위해 북적에 신호를 보냈으나 그들은 필기 도구를 준비하겠으니 잠시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를 남긴 후부터 영영 불통되고 있다.

당시 한적은 북한 경비정이 불법 납치해간 제3신진호의 송환교섭을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한의 까닭없는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우리측은 방송망을 통해 통지문을 보내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실무회의 이외에는 대화의 길이 막혀 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임시 방안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73년 김영주의 터무니없는 이른바 8·28성명으로 모처럼의 남북대화를 끊은 것도 북한측이요, 작년이래 직통전화를 사전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것도 북한였음은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남북대화를 적화통일 전략수행을 위해 이로운 때에만 응하는 체하고 통일전선 형성목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것을 내외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남북직통전화운용은 교환문서에 「쌍방향의에 따라 폐기 수정 또는 보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수 차례에 걸친 정상화 촉구를 묵살한채 1년째 고의적으로 단절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이 남북 대화에 얼마나 무성의한가를 입증하고 있다.

더우기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해오던 남북적 실무회담마저 그들의 기피적인 태도로 점차 접촉의 빈도가 줄고 있으니 북한이 또 어떤 음모와 도발을 자행할지 모를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간의 직통전화개설은 관문점연락사무소 설치와 함께 적십자회담에서 이룩한 특기할 만한 성과로서 분단 4반세기만에 71년 9월 22일 처음으로 개통을 보았던 것이다.

이 직통전화는 남북간이 수시로 서로의 의사를 교환할 수 있게한 소중한 통로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남북간에 뜻하지 않은 돌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면에서나 실무절차 협의를 위해 그 필요성이 절대적인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사실 남북직통전화는 그 동안 휴전선에서의 총격사건, 동서해 공해상에서 있었던 어선납북사건

등 남북간에 예기치 않던 불상사가 발생할 때마다 사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통로로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해왔다.

이같이 소중한 대화통로를 단절하는 것은 북한측이 남북간 합의사항을 유린하는 행위일뿐 더러은 세계에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며 이로 인해 남북간에는 새로운 오해와 불신, 대립과 충돌마저 초래할 우려가 없지도 않다.

다른 모든 사례는 접어두고라도 최근 북한이 갑자기 열을 올리고 있는 대남비방, 허위선전과 해외에서의 반한활동 선동, 그리고 잇단 재외동포의 납치극 등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하루빨리 관문점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남북직통전화를 회복시켜 만일의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는데 성의를 보여주기 바라며 민족의 여망을 풀기위해 지체없이 대화를 정당화하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 <동아일보>

#### 북한의 국제 납치 소동

북한공산집단은 지난 7월 백건우씨 일가족 납치 미수사건보다 앞서 「이라크」에서도 김창제 코우치를 납치하려다가 실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북한 요원들이 「유고슬라비아」에서 백씨 가족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월말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북한 요원들은 7월 중순 「리비아」에 탁구 코우치로 가있는 김창제씨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납치하려다 긴급 출동한 「이라크」 경찰과 「리비아」 팀 임원들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친 것이다. 만약 「이라크」 경찰당국과 「리비아」 팀 임원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김씨는 평양으로 끌려가서 이른바 「의거월북」이라는 이름아래 허위선전의 도구로 내들렸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마약과 금제품의 밀수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북한이 납치를 일삼는다고 해서 놀라울 것은 없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생태가 그들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실지로 그들은 간첩을 납파하여 무고한 백성을 은밀히 끌여가고 해상에서 공공연히 어선들을 납치하여가는 만행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여왔다. 문제는 이같은 만행의 무대가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영토 안에 거주하는 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그 나라법의 규제를 받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상호간의 탈법 행위라 할지라도 사사로운 분쟁일 수 없고, 그 나라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법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궤변과 위장으로 법망을 피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당해 국가의 법에 저촉되어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오 국제 여론의 압력에 굴복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앉아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우선 국제 여론을 환기하여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폭로해야 하겠고 「유우엔」의 해당 기구에 호소하여 기본 인권을 유린하는 이 같은 행위의 방지와 제재를 요구해야 하겠다. 또 가능한 모든 외교 통로를 통하여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할 것은 북한이 1년간에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남북직통전화의 재개통 문제다. 국내문제는 차치하고 해외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들의 만행이 평양의 지령에 의한 것인만큼 근원적인 대책은 평양과 서울간의 의사소통과 화해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행위로 보아 당장 이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전화라도 다시 개통하여 가부간에 대화로 의사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총화를 교환하는 전장에서도 적과 적 사이에는 의사 소통의 수단이 있게 마련인데 걸핏하면 「동족」을 쳐드는 북한이 전화선마저 끊어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북한은 대화의 길을 복구하자라는 우리의 제의에 응해야 할 것이다.

## 남북대화의 진로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지난 7월 1일 7·4 남북공동성명발표 5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측이 고의적으로 대화를 파탄시키고 위장 평화공세에만 열중하며 국내외의 여론의 오도를 획책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남·북 대화의 경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함으로써 정책입안에 기여하는 한편 남·북 대화의 조속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키 위하여 남북공동성명발표 5주년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은 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논문 가운데 조선일보 선우휘 주필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와 극동문제연구소 정운학 연구위원의 「남·북 경제교류의 가능성」 2편의 전문이다.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

선우휘  
(조선일보 주필)

### 서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고 할 때 벌써 분단된 국토 위의 분할 격리된 민족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전 분야에 있어서 이미 상당히 이질화되었고 또 계속 이질화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단일민족이 지금처럼 이질화한 때도 드물다. 신라통일 이전의 삼국정립 시대만 하더라도 존립과 생활의 공통분모는 지금 남북한이 갖는 문화적 공통분모보다 훨씬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당시의 사회구성은 그 밀도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희박했다는 점은 고려에 넣어야 한다.

남북한 이질화의 결정적 요인은 북한이 사상 유례없이 치밀하게 구성된 혁명적 사상체계인 「맑시즘」을 받아 들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북한의 「맑시즘」이 정통적인 것이냐, 이단적인 것이냐 또는 옳게 받아들였느냐, 잘못 받아들였느냐는 점은 우선 문제에서 제외한다. 남북한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맑시즘」의 기존 질서에 대한 부정성 또는 보수적 사관에 대한 혁명적 사관의 사상적 체질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상체계로 성격 지어진 북한을 그들의 문맥에서 고찰하는 한 민족적 동질성의 추구는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질화만이 드러남으로써 거의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민족적 동질성 바로 그 자체가 대부분 북한이 부정코자 하는 거역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동질성을 생각할 때에 간신히 찾아지는 계기는 7·4남북공동성명이다.

그런데 7·4남북공동성명이란 그 문장은 한가지이면서 그 해석은 두 가지일 수 있는 표리부동하고 모순당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벌써 남북한의 이질화 그 대립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 비극성은 각도를 달리하면 희극성이다.

북한은 7·4공동성명에 표시된 정신이나 내용이 조금도 그들이 설정한 혁명 노선에 위배되는 것도 상치되는 것도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또한 7·4공동성명에 표시된 정신이나 내용이 결코 북한의 혁명 노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민족의 정통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 문맥에서 그들을 크게 포용하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통일을 가상할 때 가장 분명한 것은 혁명이나 전쟁의 방법으로서의 남한의 강요에 의한 북한의 순종이며 또 거꾸로 북한의 강요에 의한 남한의 순종이다. 그럴 경우 이질화에 대한 동질성 회복도 강요될 것인만큼 실제적 방법 외에는 별달리 고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동질성에 관한 연구 고찰할 상황은 다음 두 가지 경우로서

- ① 7·4공동성명에 따른 통일을 행한 대화의 기간 중 단계적으로 어떤 교류를 통하여 이질화를 막고 동질성을 회복하느냐 하는 작업에 필요한 것이며,
- ② 평화적 통일이 달성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질화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동질성을 회복할 것이냐 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볼 때 두 가지 경우가 다 모범으로 삼거나 참고로 할 역사적인 선례는 거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텍스트」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에 제시가 아니라,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참고 삼을 수 있는 주관적인 의견 뿐이다.

또한 이 의견은 전기①의 상황보다는 ②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동시에 그를 위하여 우리가 평소 유의하고 우리의 사회에서 부단히 신장시켜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본 론

## 1. 종교에 관하여

지금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헌법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종교가 철저히 말살되어 신앙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다.

기독교 교회 건물은 파괴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며 불교사찰은 별로 보수도 않는 상태에서 고적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10수년 전까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은 소수 신자들이 묘지를 찾아가서 예배를 본다는 초기 기독교의 「카타콤베」(지하묘지)에 예배를 방불케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으나, 수년전 남하한 가장이 남기고 간 성경책을 유품처럼 간직하고 있던 황해도 모처의 부인과 그 딸이 그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함경도 오지의 수용소에 옮겨졌다는 귀순자의 증언으로 미루어 신앙의 자취조차 찾아 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신앙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북한지역에 결코 적지는 않을 것이다.

공산지역의 소련이나 동구 각국의 종교현상을 볼 때 동방 회랍 정교는 공산당에 의한 제약을 받고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전시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교회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신자도 결코 적은 수효는 아니며 또 정치와 생활에 시달릴수록 인간의 본능적인 신앙욕구는 오히려 인간으로 하

여금 종교 지향적으로 만든다는 경향으로 볼 때 전기 의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북한 주민에의 종교의 침투력은 놀라울 것이 예상된다.

신생 「이스라엘」의 법률적 구심력이 유대교의 신앙에 있으며 많은 이민족의 피가 혼합되어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서도 종교에 귀일함으로써 동질성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인도 또한 종족마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서 인도인으로서의 동질성을 인식하는데 힌두교라는 종교가 큰 역할을 한 사실은 우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더욱 일단 종교를 버리고 유물적인 인생관으로 살던 인간이 없는 절망 속에서 웬만큼 물질적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오히려 목마르게 신앙을 찾는 경향으로 보아서도 또 억압받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그 삶을 자위하고 광명을 찾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때, 앞으로 북한 주민의 종교에 대한 욕구의 비중은 클 것이다.

종교를 부정한 북한당국이 인간의 종교 지향성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 경향을 악용한 사실은 김일성의 이상화에서 찾아진다.

추리를 허용한다면 김일성의 초상화와 동상은 성서와 불상에 비길 수 있는데, 김일성 동상에 금박을 입힌 것은 불상의 금박에 통하는 것이며, 「김일성 아버지 수령」이란 칭호는 기독교의 「하나님 아버지」를 도용한 것임이 분명하다.

김일성의 신격화·개인숭배는 물론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경향성이 저차원에서나마 인간의 종교 지향성·신앙성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가 허용되는 날 상당다수의 주민은 강제로 신격화된 인간이 있는 대상을 버리고 종교의 신격에 진정한 신앙의 대상을 돌릴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을까 한다.

## 2. 문중 종족에 관하여

북한에 호적제도가 없다. 종래의 호적제도를 철폐하고 인구파악상 직계존속의 제한된 기록밖에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종래의 호적제도는 봉건적 잔재의식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김일성의 족벌정치는 특수 현상인 듯 하나 엄연한 사실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를 자처하는 그가 연이은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믿을 것은 역시 혈연, 친척이라는 것을 실감한 때문이다.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 당원들에 있어서도 어떤 요직에 사람을 천거하거나 쓰게 되는 경우 은근히 혈연·친척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인데, 그것 역시 만일의 경우 그만큼 신뢰도가 남보다 높다는 것이 그 까닭이라고 한다.

그러나 혈연·친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문중의식은 배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오랜동안 유교도덕으로 살아왔고 풍수학의 지배를 받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문중의식은 영국의 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구제도의 영향은 백년이 간다」는데 해당하는 의식구조가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전기 의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는 문중의 족보를 정리함에 있어서 북한지역에서 살고 있는 혈연을 가급적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북한에 있어서 가족제도가 붕괴된지는 이미 오래다.

부자간, 모녀간의 애정은 「푸치 부르」의 감정으로 평가되고, 한 가족의 단락하는 기회가 적으며 식생활마저 노동의 능률을 위하여 「밥공장」에 의지하는 것으로서, 가족간 신뢰도가 당성에 의하여 여지없이 손상되고 있다. 부자간에서도 권장되고 있는 사상성 고발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부자간, 모녀간의 애정은 결코 「푸치 부르」의 감정이 아니라 천륜이며, 인륜인 것이다.

물론, 우리는 북한과 같은 제도적인 강요에서가 아니라 서구의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 핵가족이 운위되고는 있지만, 북한의 붕괴된 가족에 비기면 그 인간적인 점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게다가 우리의 미풍을 되살리는 이른바 「역수직화」의 방안으로 「효」가 권장되고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의 교육의 중심덕목이 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서구 자본주의의 돌연변이적 사생자가 공산주의인만큼, 서구의 핵가족과 공산사회의 비인간화한 가족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전통적인 수직화 문화현상으로서의 동양적 가족제도가 거기 내포된 결함도 없지않아 일시 외래적인 서구의 수평문화 현상에 의하여 교란되기는 하였으나 이제 역수직화 현상을 일으켜 그 바람직한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다는 「효」의 현대적 의미의 부활은 당연한 덕목의 회복이며 전기 의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게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믿어진다.

### 3. 역사에 관하여

북한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는 당사로서 그 이전의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당사의 전사로서 유물사관에 의하여 그 좁은 각도에서 계급 투쟁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신비로운 색채나 민족성이 지니는 슬기는 말살되고 있다. 또한 인간적인 슬픔도 인생의 무상도 찾아 볼 수 없다.

투쟁만이 있지 거래의 융합은 없으며, 사건만이 있지 인간은 없는데 오로지 두드러지게 묘사된 인물은 김일성 한명 뿐이다.

이른바 「전사」에서 계급투쟁으로 해석되어 평가된 역사상의 인물들도 모두가 김일성의 출현을 위한 「안내자」에 지나지 않는 비중으로 다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다루어진 역사를 배우는 북한 주민이 불행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역사의 기록이 언젠가는 공정한 역사의 심판에 의하여 버려지리라는 것은 또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터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통호이며 공정하고 다기다양한 역사에의 접근방법과 기록이 전기 의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눈을 뜨게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 4. 말과 글에 관하여

대립 투쟁의 상황에서나 대화의 상황에서나 전기 의 상황에서나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없이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느다란 한줄기 맥락이 있다면 실로 그것은 우리의 "말"이며 우리의 "문자"이다.

수천 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중화사상의 중국의 주변국가로서 끝내 우리 말과 우리 글과 우리 풍속과 우리의 문화를 지켜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우리 민족이 그만큼 개성적인 민족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을 고수 상용하여 왔고 또 세종대왕 치하에서 우리의 한글을 창제하여 우리의 글로서 써온 까닭에 우리는 그 많은 중국의 주변민족들처럼 중국화되지 않고 우리의 얼을 지켜 독립된 문화민족으로써의 체통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에서 쓰이고 있는 말은 우리말인 까닭에 같고, 쓰여지고 있는 문자는 우리 글인 까닭에 역시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말과 글에도 이질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례를 들면 "동무"라는 말은 가장 정서적인 우리 말로써 정다운 친구의 뜻인데 해방 후 공산당이 그 말을 「러시아」어의 「따와라시치」 즉 동지를 정치 용어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예전처럼 정서적으로만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한자용어에 있어서도 북한은 "상호"를 "호상"이라는 등 중국식 용어를 따르고 있으며, 특히 정치화된 용어는 전혀 그 뜻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조직"이라는 용어 같은 경우 남녀간의 연애편상에 사용하는 등은 그 일례이며, 더 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떤 용어의 개념과 해석이다.

앞서 지적한 7·4공동성명의 비극성이나 희극성이 바로 그 점을 뜻하는 것이다. 거기 표시된 이른바 "조국통일원칙"에 있어서 그 1항.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경우

북한측이 생각하는 외세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지 소련이나 중공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소련과 중공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적지아니 방황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그들이 말하는 "주체사상"에 한하여 소련도 중공도 고려의 대상이기는 하나 7·4공동성명에 있어서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소련과 중공은 같은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동지요 혈맹의 형제국이지 "외세"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외세의 간섭은 미 제국주의의 간섭을 뜻하는 것이며 소련과 중공의 간섭은 동지국, 혈맹 형제국으로서의 우선의 표현일 뿐이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경우.

북한은 혁명적 수단을 무력행사로 생각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남조선혁명조선"을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 틀림이 없다.

만약 "남조선혁명노선"에 있어서의 "혁명"현상이 무력을 사용하고 아무리 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한이 있어도 북한에 있어서 역시 그것은 평화적 방법인 것이다.

국전지이 벌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북한은 그것을 결코 무력행사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는 「조지·오웰」이 그의 소설 "1984년"에서 「아이로니컬」하게 표현한 전체주의국가의 용어의 도착을 상기하게 된다. -전쟁은 평화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경우

북한은 초월하여야 할 사상과 이념, 제도에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이념, 공산주의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제 3항에서 지적된 사상과 이념과 제도는 우리의 민주주의 사상과 자유의 이념, 그리고 자본주의 제도에 국한되는 것으로 북한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북한을 불신하고 7·4남북공동성명의 의의를 손상하는 것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나 만약 북한이 제3항에 명시된 사상, 이념, 제도에 공산주의 그것마저 인정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들 자신이 북한자체의 존재의의와 존재가치를 그 근거로부터 부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견해는 성립 불가능한 것이다.

공산주의의 사상체계에서 이미 민족은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밝혀진지 오래다. 그러므로 북한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한 그들이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할리는 만무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 7·4남북공동성명의 짝막한 원칙만 뜯어보아도 같은 말, 같은 용어이면서 그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거기 담긴 내용이 얼마나 엉뚱하냐를 알 수 있는 만큼 이제 정치이념을 달리한 남·북한은 비록 같은 문자를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어사용에 있어서 놀라운 이질화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태초에 말이 있었느니라”는 것으로서 인간의 말은 얼이며 곧 행동이며 행동은 곧 얼이며 말이라고 할 때 남·북한에서 이처럼 같은 말이 다르게 써지고 있는 만큼 분단 대립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가 이질화하는 것은 북한에서 언어가 정치 「이데올로기」의 표현에 치우침으로써 언어 본질을 갖는 아름다움과 참뜻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 본연의 미와 의의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언어를 정치 「이데올로기」의 노예의 차원에서 끄집어내어 정서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말과 우리 글에 있어서의 남·북한의 동질성은 회복될 것이다.

남·북 적십자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을 때 회담을 끝내고 판문점을 거쳐 북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요원들이 「버스」 차 중에서 우리의 안내장이 “동심초”노래를 들려주자 평소는 사사건건 빈정대던 그들이면서 일순 숙연해지더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동심초”노래는 우리 가곡 중에서도 명곡으로 손꼽히는 것으로서 그 「멜로디」도 감명을 주었겠지만 역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가 담은 뜻이 그들로 하여금 잠시나마 정치적인 심정을 정서적인 차원으로 높이게 했을 것이 분명하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 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한갓 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정치적인 폭풍이 소용돌이치는 도가니 속에서 정서적인 것은 맥을 못쓴다. 그러나 정치의 「메카니즘」의 질식 상태를 타파하고 거기 청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은 언제나 정서적인 공감과 그 공감에서 생기는 힘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이 세찬 하늬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햇빛이라는 우화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을는지 모른다.

한글맞춤법에 있어서도 남·북한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체 그 근간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한자사용 문제도 우리 안에서조차 이견이 있는 만큼 차이점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 5. 문학예술에 관하여

북한의 문학은 소련의 사회주의 「리어리즘」을 답습한다고는 하지만 그와는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어쩌면 중공의 그것에 가까운데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창작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다.

우리의 문학창작이 어디까지나 개인의 개성적 재능의 소산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작가는 자기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는데 비하여 북한의 작품 제작은 "작가는 공동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시모노프」)는 것으로서 여러 명의 합작 또는 직장단위의 합작을 권장하고 있으며 한사람의 재능등단보다는 인민대중이 다수 참가하는데 더 뜻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다수참가에 의한 개성의 경시는 작품을 무성격한 것으로 만들어 결국 하나의 문제를 형상화하는 작품은 하나의 작품으로 죽하게 되는 만큼 문학의 다양성은 없어지고 결국 문학활동은 관료화로 인한 형해화에 그치고 마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문학창조를 부인하게 된다.

또한 문학의 정치에의 예측은 북한의 경우 「스탈린」을 찬양하는데 여념이 없던 한때의 소련 문학의 어용화를 훨씬 넘어서서 모든 인간의 삶의 부조리와 갈등은 김일성 사상에 의하여 진행되는 천편일률적인 결말을 자아내고 있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그토록 안이한 공식에 의하여 제작되고 있는 것이다.

미술은 무대기술도 음악도 영화도 김일성 개인숭배 「리어리즘」에 머무르고 있다.

창의 경우 북한은 「리어리즘」을 잘못 적용하여 보통사람이 보통목소리로 가창하듯이 부드럽게 하고 있는데 얼핏 생각하면 그럴듯하기도 하나 창이 갖는 한국인의 "한"은 피나는 수련으로 후천적으로 얻어진 그 독특한 탁청 즉 「허스키보이스」로서가 아니고는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저차원의 「리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인민대중에 대한 직선적인 이해를 위한 것으로서 계몽문학, 선전선동예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한 문학예술 상황 속에서 해방 후 1947년을 전후하여 월북하였거나 6·25당시 인민군 후퇴와 함께 북으로 간 문학예술인은 지금 그 활동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으며 간신히 음악작곡부문에서 김순남 단 한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첫째, 6·25종전 직후 남한의 혁명상황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어 남로당의 박헌영 일파가 숙청되었을 때 월북한 문학예술인들의 거의가 숙청된데 있으며 둘째는 남한에서 키워진 문학예술적인 감각과 정서로서는 북한의 모진 정치상황에 견디어 낼 수 없었다는 남한출신 문학예



술인의 체질과 생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문학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의 동질성을 찾으려면 문학에 있어서 소설은 어떠한 소설이며 시는 어떠한 시로 일컬어진다는 것, 영화는 「필름」을 사용하고 영사기로 영사하며 어떠한 남녀 배우가 연기하고 「스토리」가 있다는 것, 무대예술에는 무대를 사용하여 소도구가 갖추어지고 역시 배우들이 연기한다는 것, 미술에 있어서는 「페인트」와 화필을 써서 색채와 형태를 표현한다는 것.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같다는 것 뿐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상황만 변화하면 그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 위에서 문학예술의 질적 변화는 결코 지난사는 아닌 것이므로 전기 제2항의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이 할 일은 정치성을 배제한 문학예술 본연의 주체적 풍토를 확고히 다져두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목적에 위한 문학예술은 그 목적이 살아질 때 살아진 목적과 함께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의 귀결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학예술이 전통문화를 소중히 다루는 바탕 위에서 다양한 형식을 아낌없이 받아들여 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민족적 특성을 살리면서 민족적인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 틀림없다.

세계 제2차 대전의 태평양전쟁에 있어서 영국군과 일본군이 동남아 지역에서 전쟁중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 있어서 국민학교 시절에 배운 영국의 몇 가지 민요가 인간으로서의 정감의 동질성을 발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 남·북한의 자라는 어린이들이 어느 교육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같은 민요를 공간을 초월하여 배워 부르고 있는지, 그 점에서 장차 우리 겨레가 정감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은 열쇠를 찾을 듯 싶으나 그 점 확실한 것을 알 길이 막연하다.

만약 북한이 우리 고유의 민요,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일절 배격하여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감의 분야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인이나 일본인과의 사이에 동질적인 것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민족적으로는 한심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가능한 정보의 「테두리」 안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민속의 분야에 있어서는 거기 부여되는 뜻이야 어떠한 남·북한 공히 상당한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고 있는 듯하다.

민속이 갖는 민족동질성의 영향력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인 만큼 그것은 환영할 현상이라 할 것이다.

문학예술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민족적인 거대한 「드라마」로서 겨레의 각계각층에게 영적인 감명을 줄 수 있는 문학적 작품의 출현이다.

그 창조는 폐쇄된 북한에서 보다 훨씬 어찌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4남북공동성명에 표현된 제3항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문학작품이 나올 때 그 감명은 심정적으로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대단결"을 가능케하는 큰 촉진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모세」의 십계명이나, 「괴히테」의 "독일국민에게 고한다."는 영향력에 버금갈 수 있는 민족적 대단결을 촉구함에 있어서 영감적인 충격을 주는 거대한 「드라마」의 문학작품의 창조가 간절히 기다려지는 것이다.

## 6. 풍속에 관하여

적십자회담으로 인한 수차의 남·북왕래가 은연중 남·북한에 풍속적 경쟁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측 요원들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회를 거듭 할수록 적어도 우리 요원들의 시야 속에 비치는 남한여인들의 의상은 색채어리게 그리고 양장으로 변해갔다는 것이며 그와 같은 변화에 대하여 북한측 요원들은 은근히 우리측 요원의 반응을 떠보더라는 것이다.

우리측 요원에게 지정된 숙소의 조도에 있어서도 왕골돛자리가 「카페트」로 변하고 일제냉장고의 「싸이즈」도 점차 커져갔다고 하며 북한측 요원들의 팔목에 일제히 「오메가」시계가 가져졌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들의 풍속적인 경쟁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소비성 물품에 대한 북한측의 관심을 공산주의자로서의 금욕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오늘날 세계의 대세는 어느 국민을 막론하고 풍속적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때로 그것은 정치적 성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경향이다.

우리의 풍속상황을 일별하더라도 「프랑스」 「파리」의 「모드」는 한 달이 못 가서 벌써 서울시 명동에 출현하는 것이 예사이며 「부르진」은 어떤 유행성질환 어떤 선동적 정치파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남녀 양성, 모발형, 눈썹의 화장법, 굽이 높은 신발, 여성의 양말, 「팬티」의 풍속적 변화와 만연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아마 정치행동을 금지할 수 있는 정부도 오늘날 이른바 각종 「테러」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막아낼 힘은 좀처럼 갖지 못할 것이다.

소련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반체제적, 반정부적, 정치행동이지만 그보다 소련당국이 골치꺼리로 삼기에 이른 것은 서구사회로부터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풍속의 유행현상이라고 한다.

물론 그 점에 있어서 북한은 중공과 더불어 쇄국적인 거부반응을 일으켜 철저히 풍속적 변화를

단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성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북한은 몹시 엄격하다. 성적 문란에 대한 도덕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보다는 사회통제를 위한 규율이 성적 문란으로 말미암아 이완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 까닭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간본능으로서의 성의 도덕이나 규율에 의한 강요로서 보다는 자제에 의한 절제가 인간성에 맞는다고 볼 때 세계적인 성혁명의 추세에서 중공이나 북한의 철의 규율에 의한 성의 통제는 갈수록 더 지탱하기 어려운 과제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한다.

북한에 비할 때 우리의 성의 상황은 문란할만큼 자유로운 것이다. 그래서 현대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걱정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나 6·25전란으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히 따져보면 성의 자유가 병행하여 성에 따른 자제가 도덕적 미덕으로 신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경제성장의 한 단계인 이 3~4년이 지나면 자유로운 인격에 의한 성도덕은 굳건히 확립될 것으로 믿어진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성적 풍속은 북한의 통제 필요상 규제한 성적 풍속보다 탄력있는 건전성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

「매스미디어」의 현대적 총아인 「라디오」와 「텔레비죤」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거기 작용하는 상업성은 오히려 관료적 통제보다 더 건실한 것이며 인간성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한 풍속상의 동질성 회복에 있어서도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접근함으로써 동질화할 것이냐는 것은 스스로 명백한 것이다.

## 결론

앞서 서론에서 다짐한 바와 같이 이 「텍스트」는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과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참고 삼을 수 있는 극히 막연한 주관적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여상의 빈약한 고찰에 있어서 통감되는 것은 동질성을 고찰하려 할수록 남·북한의 각 분야에 걸친 이질화만이 드러나는 안타까움이며 앞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 하는 절망감이다.

그러한 안타까움과 절망감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7·4남북공동성명에 다짐한 정신을 저버리고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있으며, 세계정세의 추이를 악용하여 남조선혁명노선의 미몽과 무력에 의한 공산통일의 모험을 버리지 않고 전쟁과 혁명의 수단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위구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남조선혁명노선의 혁명수단도, 무력에 의한 공산통일의 전쟁수단도 두려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막아낼만큼 우리의 국내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대공적 국민의 단결은 공고하다. 또한 공산통일의 전쟁수단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어 있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 철저해

질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북한의 미몽과 모험이 6·25로 생긴 남·북간의 적대감을 더욱더 고조시킨 것과 7·4남북공동성명에 다짐한 평화적 통일 달성의 날이 더욱더 멀어져 가는 것이라는 바로 그 점에 있다. 따라서 이질화의 진행은 더욱더 가속화함으로써 동질성의 회복은 거의 절망적인 것으로서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그 과제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민족의 이름 아래 북한에게 강요하여야 할 것은 빨리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의 장소로 나타나라는 것이어야 한다.

앞서 밝힌 바처럼 애초부터 북한은 7·4공동성명에 신을 두지 않고 전술적으로 응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7·4공동성명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은 민족통합의 이정표 구실을 하는 것이며, 대화 없는 대립보다는 대화 있는 대립이 더 바람직스럽고 어떤 성질의 접촉도 통일을 내다볼 때 유효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7·4공동성명에 다짐한 원칙과 정신을 내세워 북한이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고 대화를 재개할 것을 요청해야 하지만 그와 명분과 심정적 차원을 떠나 전술적으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소로 끄집어 내어야 한다. 북한이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유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공동성명에 명시된 원칙에 비추어 분명하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한데는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화를 위한 접촉과 왕래와 건문을 통하여 극히 미세한 분야에서나마 그들이 우리의 「페이스」에 동질화 되는 것에 경악한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쟁도 대화도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택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력의 강요에 의하지 않은 평화로운 상황에서의 남·북접촉과 대화에 있어서의 동질성 회복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페이스」에 북한의 동질화를 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인류역사상의 정치적 이단으로서 그 위력이 언젠가 쇠퇴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정통에의 복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그 「도그마」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단은 언제나 쟁권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통을 타도함으로써 스스로 정통의 궤도에 진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의 이름 아래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사상과 이념체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다짐이 공산주의의 포기로 실현된다고 할 때 그것을 용납할 리는 만무하며, 그럴 때 그들이 내세우는 구호는 <전쟁은 평화다>라는 것일 것이 뻔하며, 그 수단방법에 있어서 승산이 서면 6·25의 재판을 서슴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의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번영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도저히 전쟁의 모험으로 공산화할 수 없다는 체관을 갖게 하면 비로소 북한은 대화의 장소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안보와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하여 미국에게 바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군사동맹국인 소련과 중공에 대하여 북한에게 무력에 의한 공산통일의 전제수단을 포기하도록 권고케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래도 북한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소련도 중공도 결코 북한에 무력행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내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북한은 실망할 것이다.

우리가 민족적 차원에 서서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것은 바로 북한이 실망하는 일이다. 민족화합을 해치는 공산주의 정치 「이데올로기」에도 실망하고 소련이나 중공의 동지적 동맹국에도 실망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북한이 그로써 환골탈퇴되는 것을 바라서라기 보다 그렇게 될 때에야 북한은 민족적 양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남조선혁명노선이나 전쟁의 모험을 포기케 하는 것도 미국으로 하여금 소련과 중공에 대한 견제작용을 하고 한반도사태 불개입의 보장을 받아내게 하는 것도 오로지 그것은 우리가 국민적으로 단결하고 정신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해 지느냐, 앓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을 실망케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 민족통일을 달성케 하는데 이로운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민족의 동질성은 서서히 회복될 것이 틀림없다. 그럼으로써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민족은 민족적인 자신 즉 민족의 진정한 주체성을 민족적 긍지로써 갖게 될 것이다.

물론 통일은 정서적인 회귀, 종교적인 기원이나 지상도면적인 설계로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30년간에 걸쳐 이룩한 우리의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나 사회질서와 북한의 30년간에 걸쳐 이룩한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나 사회질서와는 쉽사리 융합될 수 없는 너무나 상처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남·북 양체제가 일거에 변증법적 지양을 이룬다는 것은 기적으로서 그런 기적을 다른 나라에 앞서서 이룩하리라는 자신과 자부를 우리는 갖지 못한다. 갖는다면 그것은 과대망상에 속한다. 그러나 통일은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외세의 개입없는 (선의의 개입은 생각할 수 있으나 환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남·북한의 대화와 평화상태의 유지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남·북한의 양립은 보장된 것이며 그와 같은 양립상태는 서서히 남·북한의 동질화를 회복하면서 급기야는 평화적 민족통일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민족적으로 생각할 때 민족이 양분하여 이질화 과정을 30년이나 밟게된 것은 오늘날 당하고 있는 민족적 비극은 아니다. 또한 그 비극의 종식을 위하여 서둘러 충격적인 방법을 쓸 필요도 없고 써서도 안된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나라를 상실한 기간이 36년인데 그 동안 국토가 양단되어 가족이 이산한 것은 아니다. 그 동안 민족이 이질화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또 그 시기에 가졌던 동질성이란 전적으로 억압하의 식민지 노예의 동질성으로서 그 가치를 논할 수도 없다. 한말에도 분단은 되지 않았으면서도 사대사상으로 인한 이질화가 진행되던 끝에 급기야 일본에 의하여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긴 것이다. 국토분단과 그로 말미암은 남·북의 대립을 민족적 동질성의 견지에서 규정짓는다면, 남·북한 공히 분단과 대립을 민족의 불행으로서가 아니라 섭리가 이 민족에게 준 일대 시련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질화의 진행을 막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은 빠를 것이며 평화적 통일도 그만큼 빨리 성취될 것이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동질성 회복은 커녕 이질화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또 어떤 민족의 파국적 비극을 맞을는지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 30년간 그 이전의 백년에 해당할 수 있는 질량의 숭한 과제를 치루며 환멸하고 좌절하는 과정을 거쳐 그와 같은 경험을 불행의 비극이라는 패배적인 인식을 거부하고 민족에게 주어진 섭리에 의한 시련으로 신념하기에 이르렀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공산주의를 신봉함으로써 역사를 선취한 것으로 착각한 북한에는 그런 귀중한 심정적 경험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환멸을 환멸로 받아들이지 않고 좌절로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공산주의적 종말관을 믿어 살벌한 적의만 돋우어 광신적으로 자본주의사회 다음에 필연적으로 공산주의사회가 온다는 「맑스」의 예언만 확신하고 있

는 품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또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기대를 걸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설혹 그것이 한낱 환상에 그친다 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고려사항으로 간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은 곧 성취의 설계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고려함에 있어서 미리 분명히 다짐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원칙과 신념에 추호도 동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란 그 성격상 심정적인 것인 까닭에 정서가 지나친 나머지 감상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첫째의 경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서두르는 나머지 원칙과 신념에 변경, 동요를 일으키면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 위험성이 없지 않은 것이며, 둘째의 경우 동질성 회복에 있어서의 감상으로 말미암은 관대성은 일종의 송양지인으로서 역시 심정적으로 북한 「페이스」에 말려들므로써 결과적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반민족적 공산화로 동질화하게 될 것은 결코 기우만이 아니다. 「인테리켄처」일수록 그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이 끝내 한반도 공산화의 망상과 집착을 버리지 않고 동질성 회복을 혁명의 저해요소로 간주하고 계속 이질화를 밀고 나간다면 이질화하는 끝장까지 냉철히 지켜보는 이성을 간직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운동의 이치는 끝장까지 가야할 것은 끝장까지 가고야마는 것이며, 또 끝장에 도달하면 그때는 역으로 돌아오게 마련인데 그러면 그 운동은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질화의 회귀는 곧 동질성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동질성 회복에 초조할 것은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원칙과 신념에 따라 우리의 길을 갈 뿐이다. 그러나 동질성 회복에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남북한 경제교류의 가능성

정운학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1. 서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5년이 흘렀다. 「자유·평화·민족대동단결」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던 우리의 노력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대화중단으로 모처럼 마련된 평화통일의 가능성에 암영을 던져 주고 있다.

대화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측의 기본요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기반으로 한 공산화통일이 아니면 적어도 북한공산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의 보장이었다.

통일이전의 남·북간 접근단계에서 대화 자체가 이미 후자의 보장을 전제로 하여 가능한 것이며 만약 전자의 경우를 상정했다면 그것은 대화 이전의 대립관계의 연장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대화에 임하는 북한측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의 회복이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실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영역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 분단의 요인이 정치·군사적 대립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남·북간의 경제교류 실현이 어떠한 이해득실에 의하여 지연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명함으로써 남·북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경제교류의 의의와 배경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범위는 광공업, 농림수산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포괄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순수한 교역에서부터 노동력, 자본, 기술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 부문을 포함한 전면적인 협력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주체가 되는 경제인사의 왕래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추진 수단으로서 상설 또는 비상설기구의 설치 또는 교환이 뒤따르게 되며 아울러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회계·금융 그리고 기본적 협약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먼저 남·북한 사이에는 서로의 사회를 개방해야 된다는 원칙적 문제에 동의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현실적인 경제실리를 상수로 하며 경제교류는 남·북한간의 관계개선과 함수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하게 된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의 하나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또는 경제협작이 갖는 의의는 비정치적 연계강화를 모색하는 초보적 단계의 시도라는 관점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누적된 상호 불신의 뿌리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되며 따라서 성실하고도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화쌍방은 어떤 경우라도 어느 일방의 정치이념이나 제도를 타방에 강요하거나 타방의 대내적 사정에 대하여 간섭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 단계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접근문제와 대화쌍방의 내정문제를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합단계에서 채택될 정치이론이나 통일한국에 정착시킬 제도문제는 주민들의 정치 선택적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간의 순수한 경제교류 실현은 한반도 분단의 결정적 요인, 즉 정치·군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되며 이 교류과정을 통하여 남·북간의 불신과 그릇된 인식을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나아가 민족통합단계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절대권력에 의한 강제적 선택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각성을 기반으로 한 자의적 선택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이처럼 경제적 교류영역은 남·북간의 초기접근에서부터 통합에 이르기까지 적대적 불신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현 한반도 정세하에서는 정치·군사·문화적 영역에서 타개하기 어려운 제반 문제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남·북한 사이의 경제교류는 어느 쪽이 무엇을 얼마만큼 주고 그 반대급부로 또 얼마만큼 받았는가 하는 타산보다는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동영역에서의 교류과정을 통해서 남·북한 상호간의 접근노력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했는가 하는데서 선차적인 의의를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통일지향적 입장에서 서로가 노력한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며 또한 현실 타개가 어려운 여타영역의 문제를 간접적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경제교류도 할 수 없다」는 종속적 의미에서의 기피적 명분을 분명히 배제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남·북한간의 대화가 정체되고 이에 따라 실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영역에서의 교류마저도 완벽하리 만큼 거부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대립된 두 실체간의 접촉과 교류는 궁극적으로 융합 또는 병존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는 것이며 현실적 대립보다는 병존(과도적이거나 영속적이거나 간에) 더 나아가 병존보다는 융합의 순차적인 필요로부터 제기된다. 때문에 접촉·교류의 시발은 융합을 긍정하는데서 비롯된다.

만약 극단적인 대립상황에서 전면적 융합상황으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현상적 조건(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을 무로 환원시키거나 무력적 승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될 때 현존하는 두 정치실체간의 접촉교류는 불필요한 것으로 되며 또한 그 의의도 상실하게 된다.

반면 두 실체의 대립상황을 평화적인 방법에 의존할 경우 앞서 언급된 현상적 조건의 점진적 개



선이 요구되며 대립된 두 정치실체간의 가능한 이해를 토대로 할 때 남북은 서로가 실리적인 융합으로 접근될 수 있다.

이상 두 가지의 접근방식 가운데서 적어도 대화에 의한 접근을 기본으로 할 때는 무력적 승부나 현상적 조건을 무로 환원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착상은 비현실적이며 융합 부정적 입장을 반증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해결의 현실적 요구는 남·북한 당국이 두 개의 정치실체를 통한 성실한 대화와 교류,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의 교류를 촉진시키면서 실리를 바탕으로 한 평화정착에 관심을 돌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북한 당국이 이러한 점진적 융합방식에 공감할 때 경제교류의 초기단계에서 가중된 정치·군사적 제약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그 교류범위와 내용도 확대·강화될 것이 명백하다.

환언하면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데 진력하면서 경제실리적 입장에서 사심없는 교류에 능동적으로 임할 기본적 자세가 설정되면

- ① 광공업, 농림수산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에 주안을 두고
- ② 물자의 교역으로부터 인력, 자본, 기술 등 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관계를 확대시킬 수도 있고
- ③ 남·북경제권 상호간의 지역적 분업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보완적 역할이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정착과 점진적 접근방식에 따른 선의의 경제발전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대치된 남북상황을 융합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구상으로 된다.

그러나 현재 남북대화 과정에서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대화에 대한 남·북간 인식상 차이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는 데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즉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자유·평화·민족대동단결」의 조국통일 원칙에 대하여 남·북한 당국은 각각 합의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구체적 문제를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쌍방간의 공식적인 협의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동기구를 통하여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적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나 경제·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실현하고 남·북한이 힘을 합쳐할 수 있는 모든 사업 그리고 군사적 또는 외교적 현안문제를 협의결정하며 그 실현을 보장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이에 기초하여 남북조절위원회는 남북한이 각각 합의한 최상급 조절기관이 된 것이며 대화의 유일한 창구로 되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남북조절위원회 이외에 제정당·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되

는 정치협상회의를 제시함으로써 전자의 기능을 약화시키려 했으며 또한 남·북한간의 관계개선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제시로 일관했다.

즉, 한국측이 우선 국민적 감정, 국민적 상식에 입각한 신임과 신뢰의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에 대해 북한측은 한반도 전반에 걸친 제 문제를 일괄논의하자는 태도를 견지했다. 그리하여 한국측이 일차적으로 경제·문화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 구체적 절차문제를 제기한데 반하여 북한측은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다방면적 합작과 실현을 위한 5개 분과위원회의 동시 설치문제를 내놓고 맞섬으로써 대화쌍방의 관계개선을 위한 부분적인 실적의 축적 가능성마저도 배제하는데 주력했다.

환언하면 남·북한간의 제반 교류문제는 정치협상이 실현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존하는 남·북한간의 대립상황을 일거에 융합의 상황으로 비약시키겠다는 의도를 반영시킨 것이다. 남·북한에 현존하는 두 개의 정치실체간에 합의된 최고 조절기구를 가지고도 남북이 서로 이해접근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과연 남북정치협상회의의 실효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한 마디로 이러한 북한측의 관점은 현실 부정적 입장에서 논리를 비약시키고 있는 것이며 은폐된 정치·군사적 목적이 아니면 대내외 사정 때문에 실리적인 남·북간의 접근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북한측의 기본입장으로 인하여 그들이 전술적으로 수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은 일관된 논리가 결여되고 있다. 즉 북한측이 제시한 남북연방제와 현행 대화체제는 그 운용형태면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북한측의 주장에 따르면 남북연방제란 통일이전의 과도적 조치로써 남북한에 현존하는 두 개의 정부를 그대로 두고 쌍방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통하여 민족 공동 관심사를 공동적으로 협의결정하고 남·북의 두 정부로 하여금 실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시해야 할 문제는 과도적 조치가 갖는 구체적 내용이다. 즉 일정기간의 현상인정을 시인하되 언제까지 이 과도적 조치가 적용되느냐에 대하여 명백한 해명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과도적 조치의 기간은 남북간의 어떤 노력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한 토대 위에서 쌍방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와 「7·4남북공동성명」을 기초로 조직된 「남북조절위원회」 사이에 어떠한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가.

만약 그 기능상의 차이가 없다면 북한측이 제시한 남북연방제는 현행 대화체제의 내용에다 남북연방제라는 이름을 붙인 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측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이는 외형상 대화를 통하여 민족내부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북한측의 이중전략을 가능케 하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화를 악용한데서부터 문제의 핵심이 풀려진 다.

환언하면 북한측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분위기를 역용하여 그들이 일관하게 주장해온 한국 내에서의 소위 「인민민주주의혁명」기반을 형성하는데 주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실현함에 있어서 폭력사용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력적 승부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북한측은 한반도 통일의 실현가능한 방책은 궁극적으로 전쟁이며 그 이외의 어떠한 방식도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서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측이 선의의 경제 경쟁을 토대로 남·북한간의 교류접촉 특히 경제교류까지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검토를 요한다.

### 3. 경제교류에 대한 이해득실

#### 가. 북한의 교류제의 연혁과 특징

북한측이 최초로 제반 교류 특히 경제교류문제를 제기한 것은 휴전협정 체결 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치회담에서 비롯된다. 당시 동회의에 참석한 남일(북한외무상)은 남·북한간의 경제 및 문화적 교류 즉 남·북간의 통상, 재정, 회계, 운수, 경계선 설정관계, 통행, 서신 그리고 과학 기술 교류 등 제문제들을 설정·발전시킬 대책들을 즉시 취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 후 「8·15해방 15주년 전야제」에서 제시한 김일성의 「남북연방제」 제안을 모태로 하여 보다 구체화되었다.

북한측이 제시한 남북연방제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한반도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시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임을 전제로 하고

첫째, 만일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접수할 수 없다면 우선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적 대책으로서 남북연방제를 실시할 것이며,

둘째, 남북연방제까지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남·북한의 실업계대표들로 구성되는 순전한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여 물자교역, 경제건설, 상호협조 및 원조를 실현하며,

셋째, 이를 위해 평양이나 또는 판문점에서 이상의 제문제를 협의할 것 등이다.

그리고 동시에 따라서는 통일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순전한 남·북간의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여 정치문제와는 관계없이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만이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①교역을 위한 연합상공회의의 조직 ②서울-원산간, 신의주-부산간 직통여객열차의 운행 ③북한지역의 남포, 청진, 홍남과 남한지역의 인천, 목포, 군산 등 항구의 개방 ④평양-서울간 직통회선구성, 그리고 ⑤이러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판문점, 평양 또는 서울에서 남·북한대표들이 모여 회담할 것 등 적극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측의 이러한 적극적 제의는 예외없이 남북정치협상이나 연방제와 같은 전제조건이 뒤따르고 있으며 제기된 시기도 몇 가지 유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그 특성은 ①한국의 강력한 대북한 불승인정책이 대내외적으로 주효했거나 ②한국사회의 정

정이 불안정했던 시기, 환언하면 북한측의 무력남침으로 인하여 남·북간에 극한적인 적대관계가 설정되었으며 이 결과 대북한 불승인 강경책 일변도로 치닫던 50년대 중반기 그리고 한국에서의 「4·19혁명」 직후, 「5·16혁명」 이후 민정이양 시기등 정국의 혼란이 조성되었던 기간에 예외없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측이 이러한 시기를 적극적인 공세적 시기로 선택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타산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

첫째, 50년대에 있어서는 불법 남침으로 남·북한간에는 불상용의 적대감정이 고조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이 대북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측의 교류·협상제외에 응할 리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있다는 것을 의식화하려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접촉·교류와는 무관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한국 지도부 또는 한국의 제반정책을 반민족적인 것으로 규정비방 함으로써 한국측이 동의할 수 없도록 제외내용을 구성하고 남·북한간의 접촉·교류가 실현될 수 없도록 조건을 설정하고 있음이 또한 특징이다.

둘째, 60년대에 있어서 북한측이 적극적인 접촉·교류를 제기한 것은 한국정정의 불안정에 따라 정권당사자의 약체화 그리고 사회저변에 팽배했던 평화통일 「무드」를 최대한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전선을 통한 협상전략으로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의의를 부여한 것이며 역시 비정치적 접근·교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남·북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러한 북한측의 기본적 입장은 남북대화의 개화기인 1970년대에 들어와 직접 남·북이 대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취하여 온 일련의 실천적 행동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한국측 입장과 항상 정반대에 서서 한반도문제의 일괄적 타결을 대전제로 제시하고 적은 분야에서나마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엿보이면 현안문제 해결을 기피하는 방편으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측의 행태에서 볼 때 적대적 감정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의 이해와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비정치적 경제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제시하면서도 실천단계에서는 이를 기피하며 보다 차원높은 분야의 합의를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간의 경제실리적 교류실현은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군사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는 타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언하면 남·북간의 어떠한 이해노력도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정치·군사적 목적과 실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교류가 주는 충격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의 정치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위협부담을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나. 경제교류와 사회적 개방

경제교류가 지닌 특성은 남·북한이 서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현실적 명분으로 공감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나 이의 실천과정에서 볼 때 물자, 인원, 기술 등 유형, 무형의 실체가 서로 교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서로 사회를 개방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실현된다 할지라도 사회의 개방문제는 남북이 처한 각자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일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점진적이든 전면적이든 사회의 개방작업은 진행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외부의 입김이 안으로 스며들게 됨으로써 오는 충격을 예상해야 된다.

더우기 남과 북 사이에는 30여 년 동안 극단적인 적대적 감정으로 대립되어 왔으면서도 언젠가는 통일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지배하고 있다.

남과 북은 서로 상이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적대적 대치관계에 놓여 있다는 정치·군사적 조건 때문에 완전히 차단되어 왔으며 따라서 그 제도적 우열을 견주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는 기존적인 인식을 전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데 위협적 요인으로 된다.

특히 사회적 특성이 개방적이냐 또는 폐쇄적이냐에 따라 위협의 정도는 서로 다르다. 개방적인 사회체제에 있어서는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지식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으로 충격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있으나 폐쇄적 사회체제에 있어서는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지식에 대하여 베타적 입장을 취하게 되나 비교할 수 있는 눈이 트임으로써 기존의 인식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될 때 오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진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간의 경제적 교류실현에 대한 이해타산은 남북한의 사회체제상 특성, 즉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한국사회의 개방성간의 대립 속에 상이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북한은 공산사회의 공통적 속성에 따라 강력한 통합권력을 동원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해 왔으며 북한주민들이 외부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

북한주민들에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치신념화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정치선택의 자유를 뿌리채 말살해 왔으며 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 제도로 인식시켜 왔다.

이와 함께 한국은 제국주의 식민지정책 하에서 인간생지옥으로 설명되어 왔고 이로부터 북한주민들에게 민족해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고취하여 왔다.

보다 잘 살겠다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물질적 자극에 앞서 정치도덕적 자극

이 우선한다는 가치관을 주입시켜 왔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맑스·레닌」주의의 사관에 복종하며 공산혁명의 당위성을 인식시킴으로 궁극적으로 북한에 도입된 공산주의 체제를 옹호유지하며 나아가 한반도전역에 걸쳐 공산주의 제도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현재 북한내부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갈등과 모순이 사회저변에까지 깊숙히 퍼져가고 있다.

먼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통치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타도했던 반「맑스·레닌」주의 계층이 아직도 잠재적 세력으로 뿌리를 박고 있으며 이러한 저항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전복된 착취계급의 자녀분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그들은 자기의 옛주인을 되찾으려고 집착하고 있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다.

개인의 사적 소유가 전폐된 상태 하에서 요령주의와 태만 그리고 형식주의 경향이 새로운 풍조로 등장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회의가 번져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가 점차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더욱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우기 억제된 소비생활은 공산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인식시킴에 있어서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활이 향상되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구체적 현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긴장조성이 필요악으로 되는 것이지만 남북간의 대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평화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촉진제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실현은 남북한의 경제경쟁을 실감 있게 의식시켜 주게 될 것이며 특히 경제인사의 교류가 본격화될 때 어느 제도가 보다 잘 살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생활경쟁이 현실적 문제로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실현은 남과 북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실리적 측면과 반대로 북한주민들에게 남과 북의 생활실태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던져주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기존인식의 전도는 정치선택적 안목을 넓혀주는 결과가 되므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정치적 제약에 묶일 수 밖에 없다.

더우기 지난 시기 남북적십자회담이나 조절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극히 제한된 인사가 서로 교류됨으로써 북한측이 입은 충격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아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의 경제교류 실현은 사회적 개방을 요구하거나 남북한간의 경제경쟁이나 생활경쟁이 결코 체제의 경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 때문에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정치생명으로 하는 정치 사상적 통일과 단결이 강력히 요구되었으며 이 요구의 충족도가 경제교류를 유보하는 기간의 폭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경제교류 실현의 제약성과 관련하여 대화 기간 중 북한측은 공산주의체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강구해 왔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정치권력의 측면에서 김일성을 핵으로 하는 절대권위를 형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정치작업을 진행시킨 점이다.

즉 북한측은 1972년 12월 헌법을 채택·공포함으로써 권력의 상징인 국가주석제도를 새로이 정착시켰으며 당·정 연합체제를 통하여 정치·경제·사회·군사적으로 일사불란한 정책협약과 그 추진이 가능한 토대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북한측의 헌법정비작업은 남·북한간의 경제·문화교류 또는 정치적 접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적 기반이 결코 동요 내지는 와해될 수 없다는 정치적 조건을 헌법으로 재확인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구헌법이 북한지역의 수도를 서울로 정하고 통일실현 이전까지의 임시수도로 평양을 지정한데 반해 신헌법에서는 평양을 수도로 확정하고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김일성의 절대권위를 바탕으로 한 혁명의 계속적인 추구를 위해 새로운 권력구조의 재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따른 반체제적 성향을 억제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로부터 북한지역 내부에서의 계급교양강화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의 당위성을 「혁명이 진진하고 혁명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조건에서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은데 반해 세대는 바뀌고 있다」는 데서 중요하고도 긴절한 것으로 제기하고 있다.

남·북한 상호간의 대화가 비록 정체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진전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교류실현이 안고 올 인식상의 괴리는 북한사회를 지탱해 온 가설을 뒤엎을 위협으로 된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곧 북한 지도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따른 신격화 작업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김일성의 지시는 곧 법률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절대성·무조건성을 강요하는 사상전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조치는 남·북한간의 실리적 경제분야를 비롯해서 제분야에서의 교류가 촉진될 경우 사회적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에 대응하여 폐쇄적 특성이 지닌 결정적 위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초작업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북한간의 교류실현이 안고 올 충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측의 대화에 임하는 기본입장이 상호신뢰의 회복과 이해증진 노력에 앞서 다분히 한국

의 개방적 사회 특성을 이용하여 통일전선형성에 따른 「인민민주주의」 혁명수행 또는 궁극적으로 무력적 승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한 이러한 기도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한 소지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어느 일방이 타방에 대해 그들의 정치현상과 제도를 강요할 수 없다는 대화의 조건에 기초하여 타방지역에서의 정치목적적 활동을 배제하는 것이 남·북한간의 교류증대를 실현함에 있어 보다 크게 기여할 것은 명백하다.

이상과 같이 남·북한간의 경제를 비롯한 제반 교류 실현은 서로의 사회를 개방해야 한다는 부차적 요구로 인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며 특히 북한 사회의 폐쇄적 성격은 그 충격과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경제교류 실현이 주는 실리와 사회개방으로 겪어야 할 손실을 정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 실리는 정치적 제약에 의해 유보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경제교류 목적과 인식상 대립

대화 전 과정에 걸쳐 한국측은 남과 북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간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실리에 공감의 바탕을 둔 경제교류가 현안의 최적 대상 영역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북간의 제반 문제는 정치협상이 실현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진다는 입장에 서서 제분야의 교류는 전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속 의미로 국한시켜 왔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사회의 개방적 특성과 정치적 자유보장 기반을 십분 활용하여 그들의 통일전선 형성에 유리한 바탕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협상전략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방편으로서 경제교류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연유한 것이다.

때문에 한국측은 북한의 이중적 전략노선을 봉쇄하기 위하여 사회적 총화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통일전선 형성의 바탕을 제거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무력적 승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비현실적 관점의 수정을 요구하는 방편으로써 실리 위주의 경제교류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된 것이다.

이 결과 경제교류가 지닌 목적에 대해 남과 북은 서로 대립된 관점을 설정하게 된다. 즉 한국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실현은 경제 실리에 바탕을 두고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며 이것은 곧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관건이라는데 반해, 북한측은 그 교류실현은 남·북한 사이의 협상전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써 통일전선 형성의 기반 또는 무력적 승부가 가능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수단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맞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남과 북의 관점은 경제교류를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서로의 합의를 지연시켜 주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경제교류는 남과 북이 각기 지니고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토대로 하여 추진되는 것이라고 볼 때 직접·간접으로 경제발전 경쟁을 수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남과 북의 판이한 경제 현실은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서로 대립되고 있다.

1970년대 전반기는 한편으로 남·북한간의 대화가 싹트고 이를 통해 상호접근을 시도했던 시기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의 경제경쟁을 총결산하는 시기로 특징지워진다.

동시기에 있어서 북한측이 추진했던 6개년 경제계획과 한국의 제3차 5개년경제발전계획이 그 최종 목표년도를 공히 1976년으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북한은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추진했던 7개년 경제계획(1961~1970년까지 3년간 연장)을 1970년에 매듭짓고 6개년 경제계획에 돌입했던 것이나 기간중 북한의 경제발전 방식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말하자면 북한 노동당 내부에서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그 경제성장은 3~4%, 잘해야 6~7% 밖에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1962년이후 추진한 군사력 증강정책은 경제발전 속도를 현격히 둔화시켰으며 이에 더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 내부에서 중공과 소련의 대립은 북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권내지원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켜 놓았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북한측은 자체내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공업과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는데 진력하면서 이른바 「사상·문화·기술」을 표방하는 3대혁명소조를 각 생산단위에 대거 파견하여 생산활동을 지휘·감독케 하는 등 안간힘을 썼으나 결국 1970년대 전반기에 추진했던 6개년 경제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한편 한국은 「고도성장의 실현과 공업화」에 기초를 두었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1970년대 전반기에 걸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추진했다. 결과 1971~1975년 기간중 년평균 9.8%의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했다.

이와같이 1970년대 전반의 남·북 경제발전 경쟁에서의 승패가 명백해짐으로써 그 제도의 우열을 실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동기간에 있어서 북한의 6개년 경제계획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우선 대내적으로 계획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해 놓음으로써 무리를 자초했다는 점, 물질적 자극에 선행하여 정치·도덕적 자극만을 강조하는 교조적 경제발전 방식이 생산자들의 증산의욕을 결정적으로 감퇴시킨점,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 편중 정책으로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된 점, 엄격한 계획경제가 지닌 경직성 때문에 전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점, 무자비한 생산경쟁 방식의 도입에 따른 노동능률의 격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외적 요인으로서 중공·소련의 지원부실, 1973년이후 국제적 자원파동과 경제불황의 영향증대, 북한 수출 대중품의 가격 하락과 무역화물 수송력의 절대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남·북한간의 대화가 추진되고 이에 따른 경제교류 실현이 현안문제로 제기되었던 1970년대 전반기에 있어서 북한의 경제기반은 최대수난의 시기였으며 특히 1973년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과탄에 직면했던 북한측이 남·북한간의 경제발전 경쟁을 의식한 경제교류 실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바로 이러한 북한측 사정을 고려해 볼때 남·북한 상호간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실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교류의 당위성을 외면하고 한반도 문제해결에 관련된 제요소의 일괄적인 처리를 내세우고 급기야 대화를 파탄으로 몰고 갔던 북한측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

이로부터 남·북한간의 신뢰회복과 이해증진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지향적인 현실적 방안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북한측이 그러한 당위성을 인정하는 문제와 이를 실천하는 문제는 별개 목적에 의해 처리하여 왔다는 점과 현안문제를 외면하는 방편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를 내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반적 성향을 뚜렷이 해주고 있다.

#### 라. 권내 외교상의 문제

북한측은 한반도문제는 민족 내부문제로서 외세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소·일의 주변국가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전혀 배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통일전략은 중·소·북한을 축으로 하는 북방 삼각관계와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남방 삼각관계의 대칭상황에서 상상되어지고 있다.

1970년대 전반기에 추진된 남·북한 상호간의 대화실현도 북방 삼각관계의 교호작용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4대주변국가들은 각기 자국에 대항하는 여타 제국의 연합진선 형성 가능성이나 어느 한 나라도 아세아 지역에서의 세력권 확장을 위한 독주를 경계하고 있는 점에서 한반도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다.

이러한 주변4대국의 상관관계에서 중공과 소련은 공히 「맑스·레닌」주의를 기본으로 한 국제공산주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원천적인 민족상호간의 이해 대립관계에 놓여 있으며 특히 대중공 포위를 의식한 소련의 아세아집단안보 구상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중공의 반패권투쟁이 국제사회에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공·소련간의 갈등과 대립은 곧 북방 삼각관계에 있어서 북한측의 외교·군사·정치·경제면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소 쌍방의 이 영향력은 곧 남방 삼각관계에 대한 발언권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기도 한다.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중·소의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겪어야 했던 시련은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니와 1970년대에 들어와 한반도문제가 남·북 대화체제를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 반드시 중·소 쌍방의 이해와 일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말하자면 한반도에서의 대화자체는 공동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어느쪽의 후견하에 추진되느냐에 따라 그 이해는 상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대화는 미·중공 접근과 더불어 성숙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북한측의 대화에 임하는 기본태도는 중공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며 이로 인하여 남북한의 대화과정에서 소련의 불만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1973년 8월 북한측의 일방적인 대화거부 태도는 무엇인가, 북방 삼각관계에서 그 요인의 하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즉 1973년 2월 당시의 미 국무장관 「키신저」의 중공방문을 전후한 북방 삼각관계에서의 동향은 미·중공세의 남북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북한측이 제시한 남북대화의 중단이유가 너무도 허황되다는데서 더욱 그러하다.

그 당시의 일련의 동향을 살펴보면 당시의 「키신저」미 국무장관 북경 방문을 전후해서 북한 외무상 허담은 북경을 방문했으며 「키신저」의 북경 체류 기간중 「파키스탄」을 김일성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허담이 평양으로 귀환한 후 1주일 후에는 당 국제부장 김동규가 「모스크바」를 향발했으며 허담도 역시 같은 날 소련, 「체코」, 「알제리」, 「모리타니아」 방문길에 올랐다.

이러한 외교행각을 놓고 볼때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활동축은 「중공—파키스탄—미국」, 그리고 「소련—체코—알제리—미국」이라는 2개의 통로를 중심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허담의 외교행각에서 밝혀진 일련의 언동은 북경과 「체코」의 경우 다소 상이한 여운을 풍겨주고 있는데 눈길을 돌릴 수 있다.

즉 허담의 중공방문 환영연(2. 9오후)에서 행한 연설에서 통일을 위한 앞길에 새로운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으며 미국은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체코」공동 「컴뮤니케」(3. 2)에서는 북한의 평화통일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7·4남북공동성명을 방해하는 일련의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행각이 있는 지 5개월 후인 8월 28일 북한측 조절위원장 김영주의 성명을 통하여 남북대화는 좌초하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남·북한의 대화, 그리고 이에 뿌리를 둔 경제교류는 그것이 반드시 남·북한간의 사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4대국 특히 북방 삼각관계의 이해관계도 동시적으로 일단은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 4. 경제교류의 가능성 검토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실은 남과 북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통일지향적인 남북 융합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방책으로 된다.

그러나 경제교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남·북한간의 선의의 경제발전경쟁 그리고 생활경쟁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측이 실현 가능한 비정치적인 경제접근마저도 경계하고 있는 이유가 사회적 개방에서 오는 정치적 충격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측은 남·북화해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충격과를 최소한 억제하는 측면에서 북한측이 이를 수락할 수 있도록 가능한 양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와 반면 북한측이 경제교류의 순수성을 넘어서서 친일전선 형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나 무력적 승부에 기초를 둔 군사적 목적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역용하려는 기도를 포기토록 하기 위해서 한국의 정치·경제 및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북한측이 궤도를 수정하도록 인내성있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입장에서 한국은 남·북간의 경제교류 추진방식에서 북한의 현실에 맞도록 양해하는 문제와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측에 대해 무엇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군사력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강력한 경제적 기반은 경제실리를 기본으로 한 경제교류를 주도함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사실 1970년대 전반기의 경제발전계획의 총결산은 한국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어 고도성장을 이룩한데 반해 북한의 6개년경제계획은 실패로 인한 중단과 더불어 1976~1977년을 조정기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있다.

이 결과 1971~1975년 기간중 한국의 경제성장이 년평균 9.8%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반면 북한은 전반적으로 6%수준을 맴돌면서 1973~1975년 기간의 경제수난을 극복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상이한 현실은 경제경쟁의 총결산을 매듭진 1976년에 있어서 GNP의 경우 한국은 북한의 3.4배, 1인당 GNP는 한국이 북한의 452불보다 246불이 많은 698불로 나타나고 있어 압도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주요제품에 대한 1976년도 생산실적도 석탄, 선철, 화학비료 등 3개제품을 제외하고 그외 약 3.3배 강수준으로 한국이 앞지르고 있다.

한편 무역규모에 있어서 북한은 1971년의 10억불 수준에서 1976년의 15억불로 약 1.5배가 증가

한데 비해 한국은 1970년의 약 35억불 수준에서 약 169억불로 거의 4.8배로 증가되었다.

또한 수출에 있어서 한국은 1971년에 10억 7,000만불 수준에서 1976년에 약 81억불로 거의 7.5배가 증가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1971년에 3억불 수준에서 7억불 수준으로 약 2.3배 정도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남북한 주요 물량지표 비교

구분		단위	1970 년	1975 년	1976 년	1976년말현재 남북대비
전력 (발전량)	한	억KWH	91.72	198.37	231.0	1.08
	북	"	165.00	212.98	213.10	
석탄	한	만톤	1,239.0	1,759.5	1,640.1	0.39
	북	"	2,750.0	3,830.0	4,250.0	
석유 (처리능력)	한	"	882	1,514	1,832	18.32
	북	"	—	97	100	
선철	한	"	1.9	118	198.0	0.69
	북	"	202.8	285.7	285.7	
철강	한	"	48.0	230	344.9	1.00
	북	"	220.0	243.1	344.8	
자동차	한	대	29,147	36,264	49,095	4.09 ※북한, 1975년수준
	북	"	9,000	12,000		
화학비료	한	만톤	127.7	181.2	187.8	0.68
	북	"	150	250	275.5	
시멘트	한	"	578.2	1,198	1,278	2.05
	북	"	400	575	625	
직물	한	억m	6.01	15.71	17.43	3.56
	북	"	4.00	4.7	4.9	
곡물 (정곡)	한	만톤	694.2	767.2	820.6	1.52
	북	"	347.9	521.0	539.0	

이러한 남·북한간의 경제현실은 1970년대 전반기의 경제발전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1970년대 후반의 제2단계 경제발전 경쟁에서 계속 앞지를 수있는 기본역량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경제력은 「선의의 경쟁」을 바탕으로한 남북간의 경제적 접근을 주도할 수 있는 저력으로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1970년대 후반의 남·북한 경제발전 경쟁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북한 무역규모

단위 : 100만불

구분	년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수출	남	835	1,068	1,624	3,225	4,460	5,081	8,115
	북	331	314	364	512	772	696	728	
수입	남	1,984	2,394	2,522	4,240	6,852	7,274	8,774	
	북	398	690	625	749	1,196	928	800	
계	남	2,819	3,462	4,146	7,465	11,312	12,355	16,889	
	북	729	1,004	989	1,261	1,968	1,624	1,528	

현재 나타난 남·북간의 경제계획 지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제4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은 1977년~1981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북한의 신7개년 경제계획은 1978년~1984년으로되어 있다.

차기 계획기간중 목표년도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

구분	기준	한국(1981년)	북괴(1984년)
기간		1977~1981(5년)	1978~1984(7년)
강철	능력	1,150만톤	1,200만톤(700~800만톤)
유색금속	생산	36.5만톤	100만톤
석탄	"	2,400.0만톤	1억톤(7~8천만톤)
전력	"	434억KWH	500억KWH(600억KWH)
시멘트	능력	1,966만톤	2,000만톤(1,200~1,300만톤)
기계가공품	생산량	44억불	500만톤
화학비료	능력	313.1만톤	500만톤
수산물	생산량	356.2만톤	500만톤
알곡	"	983.8만톤(정곡)	1,000만톤(조곡)
간척지개간			10만정보

주 : ① 한국의 유색금속은 동광석, 연광, 아연광의 총 집계액임. ② 북한 ( )내는 수정치  
 자료 : 한국은 경제기획원간 1977~1981년 주요 경제지표

대체로 동계획 기간의 주요경제 지표면에서 한국의 1981년도 수준은 북한의 1984년도 수준과 같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면에서 비교해 볼때 한국은 1976년도에 168억 9천만불 수준에서 1981년에는 391억불 수준으로 그 무역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반면 북한은 1971~1976년 기간중 년평균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할 때 1976년의 15억불 수준에서 1981년에는 34억불 수준으로 증대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북한보다 11.6배의 강세에 놓이게 된다.

남북한 무역규모 전망

단위 : 100만불

구분 \ 년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수출	한국	8,115	10,000	11,970	14,519	17,292	20,242
	북한	728	846	983	1,142	1,327	1,542
수입	한국	8,774	10,133	11,975	14,043	16,345	18,873
	북한	800	943	1,112	1,311	1,546	1,823
합계	한국	16,889	20,244	23,945	28,562	33,637	39,115
	북한	1,528	1,789	2,095	2,453	2,873	3,365

한편 수출규모면으로 축소시켜 살펴볼 때 1981년에 한국이 202억불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15억불 수준으로서 한국은 북한보다 13배로 우위에 서게 된다.

이처럼 1970년대 후반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력은 보다 큰 역량으로 강화될 것이 전망되며 이것은 곧 선의의 경쟁을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막강한 경제력을 토대로 하여 남·북간의 경제적 접근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북한은 전체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통제경제하의 경제활동기반을 형성하고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토대 위에서 공기업의 생산경쟁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북한에 있어서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가격은 장기경제계획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문제도 북한의 경제계획과 정책방향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와 함께 고려될 사항은 북한의 경제는 사회주의진영의 국제분업화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시장에 의존하면서 여타 자본주의 시장은 부차적이며 보완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엄격한 구상무역 체제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것, 많이 요구되는 것은 자체로 생산 공급하며 적게 요구되는 것, 모자라는 것, 생산할 수 없는 것은 타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형태는 정부가 유일적으로 장악 관리하며 인민경제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단기 및 장기 통상협정이 수반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수출입의 규모와 그 상품의 구성이 사전에 규정되고 인민경제의 다른 계획보다 앞서서 무역계획이 수립되며 수출에 앞서서 수입계획이 우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게 된다.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북한측이 장기 경제계획에 따른 수입 요인이 어떤 것인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므로 현지에서 시장조사는 질적으로 유효한 접근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먼저 북한측이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분업화 실상 그리고 북한의 장기경제계획의 수입수요를 고려하면서 북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대상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대체로 1970~1975년 기간중 남·북한의 수출입상품 구조적 측면에서 절대 교환 가능한 품목은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극히 제한성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물물교역의 일정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 품종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교환 가능한 절대품목

한 국	북 한
석유제품, 화학제품, 고무제품, 「타이어」 및 「쥬브」, 전기기구, 식물성 유지, 공구류, 지류, 재봉기, 피혁제품, 기타 일용품 및 식료품	철광석, 선철, 강철, 기타 비철금속류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도 북한지역에는 자유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 상품의 교류가 실현된다기 보다는 일정기간의 약정된 범위 안에서 계획적으로 교류가 추진될 것으로 본다.

또한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실현함에 있어서 앞으로 개척해야 할 분야는 아주 넓다. 적어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이 서로 선의의 경제발전 경쟁을 통하여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대전제하에서 보면, 먼저

- ① 남·북한이 각각 도입하고 있는 선진 산업기술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남·북한간의 지역적 분업을 일면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한국의 풍부한 인력자원을 토대로 하여 한반도 전역에 걸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남·북이 서로 확보하고 있는 독자적 시장권을 대상으로 3각무역 체제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으며
- ⑤ 특히 이러한 일련의 교류확대 과정에서 단절된 육로를 재개설함으로써 국토의 분단을 부분적으로나마 연결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동해, 남해, 서해를 연결하는 해상수송을 일층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될때 북한으로서는 현재 직면한 수송상의 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도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간의 경제교류 또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연구과제가 남아 있다.

## 5. 결 론

대립된 두 정치실체를 융합으로 비약시키기 위해서는 현상조건을 대립 이전의 원점으로 환원시키거나 무력적 승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적어도 남북한이 각기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원칙에 공감한다면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대립된 현상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융합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볼때 접촉과 교류의 필요성은 통일지향적 의지의 표현으로 되며 평화의 정착은 이러한 통일이지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현실적인 분단이 정치, 군사적 대립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면 이러한 대립을 해소하는 노력은 비정치적 연계를 강화하려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때 실리를 바탕으로 한 남·북간의 경제적 접근은 상호 이해와 신뢰회복을 위한 계기 조성 뿐만 아니라 대립상황을 평화적 융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북한측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문제를 통일의 선제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왜곡하고 모처럼 마련한 남·북간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실현 가능한 경제적 접근의 길마저 완전히 봉쇄하고 말았다.

이러한 태도로 보아 북한측이 대화에 응한 것은 남·북한간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전선기반의 조성이나 또는 궁극적으로 무력적 승부가 가능한 여건 조성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임을 명백히 해준다.

따라서 평화나 대화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정치 또는 군사적 목적에 종속될때 남·북간의 경제 교류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경제교류를 기피하게 된 기본입장에 는 이것이 주는 그들 나름대로의 손익계산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측이 경제교류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 검토해 보면

첫째, 남·북간의 경제교류 실현은 현실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경제적 실리가 정치적 목적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

둘째, 한국사회의 개방성을 이용하여 이른바 공사혁명기반을 조성코자 시도했던 당초의 전략목적

은 대화 진행 과정에서 한국의 대내적 정비로 인해 그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었다는 점,

셋째, 한국의 경제력을 과소평가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대화 기간중 북한 경제사정의 악화 등 제반 현실을 비교 평가할때 남·북한 경제발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재인식했다는 점,

넷째, 북한 사회의 폐쇄적 특성 때문에 경제교류 과정에서 가해질 충격은 경제적 실리보다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태롭게 할 정치적 위협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다섯째, 남·북한간의 대화 체제가 「미·중공」 세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문제에 대한 소련의 소외의식을 자극함으로써 간접적인 견제력이 작용했을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남·북한간의 경제적 접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공산화 전략이 수정되도록 유도할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문제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고려할 때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떤 영역으로부터의 접근 가능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경제 실리를 택한 여타지역에서의 접근은 남·북한에 대하여 보다 큰 양보와 이해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대내외 정세는 실리를 바탕으로 한 남·북간의 경제적 접근을 촉진시킬 만큼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다고 그 실현을 위한 노력마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 **남북대화 제15호**

(1977. 10 ~ 1977. 12)

# < 목 차 >

제1부 평화적 통일에의 지향 .....	3
<박대통령, 「르·몽드」 지 회견> .....	3
제2부 남북대화 소식 .....	21
<남북적십자회담> .....	21
제24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경과 .....	21
제3부 그밖의 남북관계 소식 .....	28
1.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성묘방문 .....	28
2. 재이북 부조 합동경모대회 개최 .....	30
3. 남북한 이질화 심포지움 개최 .....	33
남북한 이질화 현황 .....	34

## 제1부 평화적 통일에의 지향

<박대통령, 「르·몽드」지 회견>

『남북한의 공존은 독일방식이 적합』

평화통일기본원칙

1.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2. 상호문화개방·교류협력 실천
3.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10월 19일자 불란서의 권위지 「르·몽드」에 전문 게재된 동지 주필과의 회견에서 『한반도의 무력통일은 절대반대이며 장기적으로는 평화통일이 기필코 달성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남북한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양독간의 해결방식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천명했다.

박대통령은 「르·몽드」지의 「앙드레·퐁테느」주필과의 회견에서 통일에 이르는 3개 기본원칙으로서 ①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은 상호 불가침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② 남북한은 서로 문호를 개방하여 상호 신뢰의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이 관점에서 남북대화는 성실성을 가지고 속개돼야 하며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③ 이런 기반이 구축되면 통일은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로 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대화의 재개를 북한측에 촉구하며 『북한은 남북한대화의 재개를 요구하는 국제여론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줄 뻔히 알면서 미국과의 회담을 제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남북한은 유엔 동시가입을 통하여 현상유지의 기반 위에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르·몽드」지와 회견내용 전문이다>—편집자 주

<문 1> 대통령각하, 본인은 각하의 최대관심사가 한국통일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하께서는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설사 통일의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종일관된 신념이다.

문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공산집단이 무력적화통일의 기본노선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데 있으며 그들이 이를 변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볼때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가 어느 때가 될런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토통일을 결코 단념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더욱 커지면 북한공산집단이 무력에 의한 통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무력적화통일의 기본정책을 불가피하게 수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 2> 최근 허담 북한외상의 「뉴욕」 방문, 「봉고」 가봉대통령과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을 통한 북한측의 대미 직접접촉 제의 등은 북한측의 정책수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답> 나는 그와같은 북한측의 일련의 움직임이 그들의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우리는 1972년에 시작되었던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해 왔으나 그들은 계속 이를 거부해 왔다.

그들이 같은 민족인 우리와의 대화재개를 거부하면서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동족끼리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평화노선으로의 정책수정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도 북한과 단독으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그들도 알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평화를 원하는 건설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의 저의는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직접교섭하려는 것으로 그 동기가 불순한 것이다.

왜 남북간에 동족끼리 대화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의 수작의 저의는 두가지라고 본다.

첫째, 월맹이 월남을 따돌리고 미국과 협상함으로써 월남 전역을 공산화했던 이른바 「베트남」 방식을 한국문제에도 적용해 보려는 것이다.

둘째, 남북대화가 중단된 채 우리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왜 대화를 안하느냐는 국제여론의 압력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참가없이 북한과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와 같은 제의를 해 놓고 미국이 응하지 않아서 대화가 안된다고 핑계를 댈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문 3>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남북관계만큼 악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랍—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양자관계가 긴장되고 있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한 데 남북한관계의 해결에 있어서도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지도자들과 만날수록 북한측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답>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문제 직접 당사자인 4자회담을 제안한 것인데 북한측은 그것은 안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빼고 미국하고만 회담을 하자는 것이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문 4> 장기적으로 볼때 한국의 평화통일의 전망을 밝게 하는 다른 요인은 어떠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답>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들이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조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때를 기다리며 국력배양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일 평화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남북이 서로 그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방침이다.

남북한은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남북한의 평화공존은 평화통일을 가져오는 첩경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 기회에 나는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문 5> 귀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방안을 제의하셨는데 북한측의 수락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한간에는 인구차가 크기때문에 그와같은 방법은 북한으로서는 불리할 것이고 나아가서 북한체제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그들으로써는 항복과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요?

<답> 우리의 평화통일 방안은 그동안 몇차례 제의해 왔지만 북한측이 응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락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우리의 평화통일 방안은 북한측의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북한은 무슨 제안이든 그들에게 불리하면 이유를 붙여 반대한다.

북한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무력과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은 그런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싫으면 당분간 현상유지로 통일의 여건이 성숙될때까지 평화공존하자는 것인데 이것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서독은 이미 이 방식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통일하자는데 북한측이 거부하고 북한측의 방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국 전쟁이나 아니면 통일의 여건 성숙을 기다리면서 평화공존하느냐의 두가지 방법 밖에 없다.

우리의 입장은 동족간의 전쟁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야 한다는 것이고 남북한이 현상태로 평화공존하면서 「유우엔」에도 함께 가입하고 전쟁을 하지 말고 통일에의 여건이 성숙될 시기를 기다려 보자는 것이다.

결코 1950년의 6·25동란과 같은 북한의 무력남침은 또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다.

<문 6> 한국은 북한과 비교하여 2배의 인구나 아세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으며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북한 자신이 재건한 도시들을 파괴로 이끌 것이 분명한 도발을 왜 감행할 것이라고 우려하십니까?

<답>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나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무력적화통일을 위하여 지난 20여년간 전쟁준비에 전념해 왔으며 전쟁준비를 완료했고 또 그러한 능력도 있다고 본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들도 파괴될 것이 뻔한데 어째서 시대착오적인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은 벌써 여러차례 대남도발을 자행해 오고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침략을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고 만일의 사태를 우려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선의 국가안보는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와 같은 무모한 짓을 획책하는 자들이 바로 북한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통거리가 아닐 수 없다.

<문 7> 귀하께서는 주한 미 지상군의 점진적인 철수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반도 상황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카터」 미국대통령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현단계에서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는 현명한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주한 미군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는 동북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깨뜨리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문 8> 한국에는 일부 반대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그 중에는 반대파 인사들도 들어 있습니다.

일부 서구언론, 특히 미국의 일부 언론은 한국의 소위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가끔 비난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그러한 조치가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하여 한국의 자유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신데 각하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국내 일부인사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서구의 일부 언론이 소위 인권문제를 운위하고 있으나 이것은 인권문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현행 국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다.

어느 나라나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때에는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우리 나라도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민족 전체의 생존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결코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나라들에도 있으며 예컨대 귀국에서도 「알제리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드골」 당시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국민의 기본권일부를 제한했던 일이 있지 않은가.

그 당시에 아무도 인권침해 운운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문 9> 각하께서는 「워싱턴」에서 귀국정부를 향해 야기되고 있는 몇몇 미국인들의 부패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이 사건에 우리 한국인이 관련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박동선이라는 사람은 재미 한국교포인데 미곡 중개상으로서 몇몇 미국 정계인사들과 거래가 있었고 그것이 말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

일부에서는 마치 그가 한국정부에 고용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는 우리정부에 고용된 적이 없는 사람이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수사당국 및 의회의 조사가 빨리 흑백을 가려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문 10> 한국의 경제와 사회는 북한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바탕 위에서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달성될 경우 각하께서는 이 현실이 어떻게 되리라고 상상하십니까?

각하께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구조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남북한은 체제와 사회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늦어질수록 남북간의 이질화가 심화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문화적 바탕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동질화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과거에 삼국으로 분열된 시대가 있었다. 약 7백년이 걸려 삼국통일이 이룩되었는데 통일 후에 우리 민족은 하나로 단합되어 같은 민족으로 동질화 될 수 있었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룩되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며 능률과 협동에 이바지하는 우리 나라의 체제와 제도는 우월성을 가지며 또 이는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민족의 동질화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문 11> 각하께서는 서구 특히 불란서와 정치, 경제, 문화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현재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귀국에게는 불란서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답> 서구의 여러 나라들 특히 귀국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교류를 증진하고 싶다.

서구의 좋은 문물은 얼마든지 받아들여 우리 나라의 문화와 발전에 기여하기를 우리 정부와 국민은 원하고 있다. 귀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우리 나라도 약 5천년의 긴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온 전통문화를 가진 민족국가이다.

양국간에 서로 이질적인 면도 있겠으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좋은 점을 채택, 수용한다면 상호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귀국이 이룩한 문화 전통의 좋은 점을 많이 배우고 싶다.

<문 12> 만약 불란서가 북한정권을 승인하기로 결정한다면 각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답> 불란서는 6·25동란 당시 파병하여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북한공산침략자들과 싸운 참전국이다.

그러한 불란서가 우방인 한국에 불리한 그와 같은 일은 안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불란서 정부가 결정할 일이겠지만 나는 이 기회에 1973년에 밝힌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재 강조하고자 한다.

이 선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공산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했었다.

그런데 그후 우리 우방중의 몇몇 나라들은 북한과 수교를 했으나 반면에 중·소를 비롯하여 어떤 공산국가도 한국에 대해 문호를 열지 않았다.

자유국가들은 북한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는데 공산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문호를 폐쇄하고 있는 것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의 기본정신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의 참전맹방들은 공산국가들이 우리에게 대해 문호를 개방할 때까지는 일방적이고 성급한 조치를 안해 주었으면 좋겠다.

<문 13> 저렴한 한국 공산품의 수출확대가 언젠가는 서구와 상업전쟁을 유발할 것이라고는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답> 우리 나라는 개발도상국가로서 비교적 저렴한 경공업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 중화학공업과 기계공업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점차 우리 나라의 중화학제품과 기계류의 수출이 증대될 것이며 그 결과 저렴한 경공업 제품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서구 고도 공업국가들과의 상업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염려하지 않는다.

<문14> 각하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업적은 무엇입니까?

각하께서 당면하신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답> 내가 한일 가운데 크게 자랑스러운 업적이란 없다.

다만 나는 나에게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여 일해 왔을 뿐이다.

가장 어려운 당면문제라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을 빨리 성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인내와 노력으로써 국력신장에 매진하는 것 뿐이다.

<문 15> 각하께서는 아시아의 장래 특히 한국의 장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 아시아의 장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한국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 국민은 근면하고 자유정신에 충만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욕에 불타고 있으며 평화통일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고 확신한다.

<이상과 같은 박대통령의 「르·몽드」 지와의 회견에 대하여 국내 주요일간지들은 다음과 같은 논지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 편집자 주

<조선일보(1977. 10. 20)>

#### 통한원칙과 저해요인

- 박대통령의 견해와 통일원의 분석을 보고 -

#### 1

작금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두 가지 주목할만한 관점이 공표되었다. 그 하나는 18일 박대통령이 프랑스의 「르·몽드」 지 주필 「퐁텐느」 지와의 회견내용이요, 다른 하나는 18~19일에 국토통일원 주최로 열린 「남북한이질화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에 즈음하여 동원이 발표한 남북이질화의 현황이다. 통일원 주최의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박대통령과의 회견내용이 발표됨으로써 우리는 통일문제를 관할하는 정부의 시각이 어떤가를 보다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박대통령의 「르·몽드」 지와의 회견 내용중 통일문제에 관한 내용은 지금까지 왕왕 피력되어 온 것이므로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는 남북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남북한이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일이고, 둘째는 쌍방이 경계선을 개방하는 일, 즉 문호를 개방하여 피차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셋째는 남북한의 도착인구 비례에 의한 공정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일이다.

이상은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상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인데, 그 전제로서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남북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는 남북은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하고, 그 범형으로서는 양독간의 문제해결방식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물론 남북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 될 수 없다는 솔직한 전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원칙들은 김일성이 완강히 반대해온데서 통일문제는 해결에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 2

그런데 김일성은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정부의 그러한 원칙들을 반대하면서 통일에의 접근을 막아왔는가. 그 저해 요인을 제시한 것이 바로 통일원의 남북한 이질화의 분석이다. 이 분석은 분단 30년 동안에 남북한이 어느정도까지 이질화되고 있는가를 이념과 제도, 전통문화,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극히 구체적으로 현황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통일원장관은 어떻게 하면 동질화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의 민족적 과제로서 제시하였다. 「남북한이질화문제심포지엄」은 이러한 과제를 풀어보려는 모색노력이다.

무릇 어떠한 정치체제도 그 본질은 정치권력, 경제, 사회제도, 지배적 「이데올로기」, 국민대중의 생활방식의 성격 등에 의하여 형성된다. 통일원의 분석은 이 모든 면에서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 어디까지 이질화가 심화되었는가를 명석하게 제시하고, 그 궁극적 원인을 김일성의 1인 독재에서 찾음으로써 통일문제가 민족적인 요청이나 국민적인 희망과는 달리, 사실은 상당한 난관에 빠져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조속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듣기에 우울하고 그 전망이 어두워 보일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통일을 원하면 원할수록, 그리고 그 길을 실천적으로 탐색하면 할수록, 이질화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모색 방법이 뜻하지 않게 한낱 감상 또는 환상으로 될 수 있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고 말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뜻에서 이번에 제시된 통일원의 분석작업은 통일문제에의 현실적 접근을 위해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통일원의 분석이 밝힌 대로 북한은 김일성 개인숭배에 의하여 지배되는 하나의 전체주의사회며, 공산주의라고는 하지만 그의 독재권력을 강화-영구화하는 방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독특히 변형돼왔다. 그리고 우리 현대사가 그의 가계를 영광화하기 위해 크게 왜곡 날조되고 세계관, 가치관 문예가 그의 요구대로 바뀌었으며, 심지어는 언어마저 우리와는 놀랄 만큼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생활의 형식과 내용, 가정생활의 향상, 전통문화의 관습이 놀랄만큼 변질되고 있음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 3

남북한은 유럽과는 달리 장구한 역사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단일민족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김일성은 「스탈린」의 구분법을 글자 그대로 답습하여 민족을 「부르좌」 민족과 사회주의민족으로 나누고 이것을 이 나라에다 적용하고 있다. 그는 북한내의 동포들을 우리와는 다른 사회주의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 강조해왔다. 그들은 언필칭 민족문화를 내세우면서도 훌륭한 민족적 문화 유산과 전통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소위 「복고주의」라고 하면서 계속 반대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사회에 새말이 생긴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평화니 자유니 민족이니 하는 동일한 글자의 용어들이 우리와는 정반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렇게 사용하도록 강요해왔다. 김일성의 독재체제와 사회의 편제화를 더 강화하기 위하여 준엄한 사상, 문화적 통제를 날이 갈수록 더욱 죄고 있으며, 김일성이 제멋대로 해석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이외의 일체의 사상과 문화를 봉건사상, 자본주의사상, 썩어빠진 「양키」문화라고 하면서 지식인과 대

중의 창조적인 사고를 모든 방법으로 억제해왔다.

「온 사회의 혁명화」나 「노동계급화」라는 이름에서 김일성은 전 북한동포를 제 모습대로 바꾸려하며,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명령한다. 「오웰」의 동물공화국을 방불케 하고 있는 그가 통일을 위해 자유선거를 수락할 까닭이 없다. 자기가 내세운 단일후보에 대한 1백% 투표에 1백% 찬성을 가장 진보한 민주주의라고 자랑하는 북한에는 도시 자유선거라는 것이 있는 적이 없다. 통일될 때까지 만이라도 남북한이 평화공존을 하고 불가침협정을 맺자는 제의를 그가 계속 반대해 왔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김일성이 평화공존과 불가침협정을 극력 반대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도 민족의 보편적 요망을 거역할 수가 없어 전술상 평화통일이란 말을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의 목적이 영똥하게도 딴 곳에 있으므로 그가 말하는 평화통일의 의미도 우리의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답답한 정황 속에서 평화로운 민족통합의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민족적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멀고 어려워도 우리 민족은 지혜를 결집하고 의지를 강화하면서 그것을 탐색해 나가야 한다. 김일성 일파가 우리 민족의 대표가 아닌한 우리는 그 때문에 통일문제를 단념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일보(1977. 10. 20)>

#### 기본목표는 평화통일

- 박대통령의 「르·몽드」지 회견담 -

프랑스의 권위지 「르·몽드」는 18일자 일면에 박정희 대통령과 장시간에 걸쳐 대담한 「앙드레·퐁텐」주필의 회견기를 크게 보도하였다.

박대통령과 「퐁텐」씨의 일문일답 내용은 한국의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인권문제와 주한미군철수결정, 한국의 대미, 대서구 관계를 포함한 외교환경, 아시아와 한국의 장래 등 중요하고 광범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다루었다.

앞서 「르·몽드」지는 「퐁텐」주필의 북한방문기도 취급한바 있거니와 현재 한국인구의 3분의2 이상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 이 나라 전통문화의 단절없는 보존이 남녘에 확인되는 만큼 한국문제를 고찰, 전망함에 있어서는 남쪽이 우월하며 그 비중이 더 크다는 점에 깊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퐁텐」씨는 또 북한여행시의 이른바 「잘 짜여진 안내관광」과는 판이하게 그의 남한여행 및 각계 인사들과의 의견교환이 보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웠음을 회고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나아가서 박대통령의 「르·몽드」지 회견 내용은 그것이 집약적인 형태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내외인사들의 환경상정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박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물어온데 대해 북한측의 무력적화야욕이 구태의연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비판시 않는다고 밝혔다. 으뜸가는 고무적 요인으로서 한국의 국력이 계속 신장되고 있음을 들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북한로 하여금 무력통일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할 것임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의 장애요인이라고 간주되는 남북 이질화 문제에 관해서는 비록 남과 북의 경제·사회적 기반에 커다란 차이가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인종적, 문화적 단일성으로 하여 통일 후의 동질화 문제는 낙관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사회통념을 대변한 것으로 우리의 당위이며 또한 가능성이다.

한국의 통일기본원칙에 관해서는 ① 평화의 확고한 구축을 위한 남북한 불가침 협정 ② 남북대화 와 교류의 진전을 포함한 상호문호개방 ③ 인구비례 자유총선거 실시를 설명하였다. 이것 역시 한국에서의 국민적 합의를 말할 수 있다. 우리측은 인구가 많다고 하여 북한측에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독 방식을 상기할 수 있는 평화공존을 선행시키는 통일접근의 합리적 방안을 내어놓고 있을 따름이다.

질문은 또 한반도 정세 특히 북한생리를 잘 모르는 일부 외국인사들의 안이한 헤이심리를 반영한 흔적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북한측이 벌이고 있는 위장평화공세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북한이 동족간의 대화를 외면하고 「대미 직접협상」을 운위하는 위협스러운 저의가 「베트남 방식」의 재연을 노리는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북한이 이른바 「전쟁준비 완료」를 호언했을 뿐더러 「전쟁을 기도할 힘이 있다」는 국면에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다.

한·미간의 몇 가지 현안에 관하여 우선 박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결정을 현명한 정책이 아님을 비판하였다. 주한미군의 존재의의는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전을 위한 균형유지에 관련 있는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다는 점을 일깨웠다.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권리의 약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소신을 부연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서구의 여러 나라 특히 프랑스와의 보다 긴밀한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유지할 바라는 적극적인 희망을 피력하였는데 전적으로 동감해마지 않는다. 특히 프랑스로 말하면 한국전쟁 당시의 참전우방국이기도 하므로 공산권이 한국과 수교하지 않는한 일방적으로 북한과 수교하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한국민의 공통적 심정이다.

끝으로 박대통령은 아시아 특히 한국의 장래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한국의 내일이 더 큰 번영을 가져오리라는 낙관을 표명하였다. 한국인의 근면성과 자주정신, 그리고 번영에의 의지가 그 논거이다. 물론 한국인은 국제정세의 추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며 민감한 국민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찬란한 문화창조와 우량한 국제적 심성으로 정평있는 「프랑스」 국민에 대한 한국인의 우호와 존중의 뜻을 재확인하고 싶다.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녕 「프랑스」의 명참한 지성에 바라고 싶은 바는 정확한 실정과약과 공정한 사리판단 뿐이다. 한·불 양국민간의 긴밀한 우호적 유대의 유지와 발전을 염원해 마지않는다.



<경향신문(1977. 10. 20)>

## 평화통일의 의지와 조건

- 박정희대통령의 「르·몽드」지 회견기를 보고 -

박정희대통령의 「르·몽드」지와 회견내용은 한반도 평화통일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우리의 공감을 사고도 남음이 있다.

즉 박대통령은 남북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통일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남북은 공존해야하고, 공존모델로서 양독방식이 적합하다고 언명했다. 이는 통일접근의 한 과정으로서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인 것이다.

새삼 말할 나위도 없이 5천만 한민족의 공통된 염원은 민족의 재결합, 즉 통일이다. 이것은 지난 32년 분단의 역경에서도 그러했지만 장래에 있어서도 변할 수 없는 대명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 하더라도 무력으로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달성하려고 해도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와 그 전단계로서 불가침협정 체결 및 상호 문호개방 등 통일 3대 원칙을 이미 제시했었다. 이것은 통일은 민족지상과제이지만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밑에서 그 기반으로 평화정착과 남북사이에 가장 해결하기 쉬운 손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자는 것이다.

평화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쟁재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선평화 후통일」방안으로 제시한 무력행사나 내정불간섭 원칙은 바로 이러한 평화공존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일련의 방안이라 하겠다.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문제만해도 그것이 분단을 영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하나의 과도적 조치로서 제의한 것인데도 북한은 이를 민족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하면서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문제가 오랜 분단의 결과에서 빚은 사상·체제의 이질화로 상호 불신과 오해의 해소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평화공존 질서 아래 상호 대화와 인적 또는 물적교류와 협력사업의 확대로 통일기반을 점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양독간의 해결방식」역시 통일국가의 수립이전에도 분리되었던 동족끼리 서로 만나 평화공존을 이룩하고 교류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민족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허나 우리의 통일 노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정착방안이 이같이 현실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것임에도 북한은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적화통일획책에 광분하고 있다. 북한은 안으로 전쟁준

비에 혈안이 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위장평화공세를 취하고 이제는 우리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제의하는 등 이중성을 드러내고 기만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호전성에 대비하는 길은 오직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국민적 단결로 국력을 배양하고 자위능력을 향상하는 것 뿐이다.

박정희대통령은 『최선의 국가안보는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거니와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전쟁망상을 포기케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역량을 강화하여 다원화한 국제환경에서 주체적인 힘을 발휘하는 일이다. 국민각자가 더욱 시국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소이다.

<동아일보(1977. 10. 20)>

### 심각한 민족의 이질화현상

남북이 분단된지 32년에 북한공산집단은 사상과 이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민족고유의 전통과 문화예술 및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동질성을 파괴하여 민족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박정희대통령은 「프랑스」의 「르·몽드」지 18일자에 보도된 동지 「퐁텐」 주필과의 회견에서 『남북한은 체제와 사회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늦어질수록 남북간의 이질화가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천명하였다. 남북한간의 이질화현상의 구체적인 예는 같은 날 통일원에서 열린 남북이질화문제 「심포지엄」에서 상세하게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이용희통일원장관은 『남북의 이질화는 평화통일에 심각한 난관으로 등장, 통일후에 까지도 진정한 의미의 민족적 융합을 가로막는 내부적 문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서를 막론하고 수많은 약소민족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소멸하거나 분산되고만 비운을 겪었지만 우리민족이 오늘까지 주변강대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우리가 고유의 민족성을 보존했기 때문이다. 민족성이란 우리가 5천년의 역사를 통해 역사 언어 전통 문화 그리고 생활감정을 같이해온 민족의 동질성과 그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집단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한반도의 공산주의혁명이라는 기본목표아래 같은 민족간의 계급투쟁을 주장하여 민족관을 유물사관으로 개조해 놓았으며 북한사회를 전체주의적인 공산전체조직사회로 만들어 놓았다. 북한은 또 민족사를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개작하고 김일성의 소위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것처럼 꾸몄다.

더우기 용서받지 못할 그들의 죄악은 김일성의 일인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지한 수법으로 역사를 날조한 일이다.

몇 가지 두드러진 예만 들어본다면 이조말 병인양요 때 미국상선 「샤만」호를 격침한 것이 김일성의 조부 김응우였다고 했고 3·1운동은 김일성의 부 김형직이 주도했다는 것이며 8·15해방

이 우리민족의 독립투쟁과 연합군의 승리에서 얻어진 결과인데도 이를 김일성의 항일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인간의 순수한 감정과 사상을 전달하는 언어마저 이른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규정하여 표준어를 소위 「문화어」라 하고 우리 고유의 언어체계를 파괴했다. 그들은 또 우리 민족문화와 예술의 순수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모든 문화와 예술을 공산주의의 도구로 전락시킨 반문명적 폭거를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그 동안 북한사회를 어떻게 변질시켰는가는 관혼상제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도 각자의 소속단체나 직장의 세포위원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작년 6월부터는 결혼연령을 남자32세 여자 2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장례식 역시 1 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제일은 고인의 생존시 혁명업적에 대한 비판의 기회로만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민족이질화의 현상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하나 이번 통일원 「심포지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북한집단의 남침야욕 때문에 평화통일의 길이 먼 우리에게 더욱 통일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막는 길은 박대통령도 밝혔듯 남북이 평화정착의 바탕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길 이외에는 없다.

공산주의의 원조인 「마르크스」가 탄생한 독일에서조차 동·서독이 인적 물적교류를 증가시키고 있고 미술, 음악 등 예술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의 진운을 북한집단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일성집단의 남침야욕 포기가 선결문제이지마는 우리 정부도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민족동질성 회복방안을 다각도로 수립해 두기를 바란다.

<신아일보(1977. 10. 20)>

#### 박대통령의 「르·몽드」 회견

박정희대통령의 「르·몽드」지 회견내용이 공개되었다. 통일전망, 북한의 대미접촉, 남북대화, 주한미군철수, 인권문제, 남·북한의 이질화현상, 한·불 관계 등 광범하고도 차원높은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설명됐다는 점에서 동지의 독자는 물론 우리 자신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먼저 박대통령은 남북통일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이에 이르는 3개 기본 원칙으로서 ① 남·북한불가침협정 ② 경계선 개방 ③ 남·북한 자유선거를 제시한 것은 새삼 주목할 일이다.

이점에 있어 무력적화통일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의 기본노선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며 비록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긴 안목에서 볼 때 궁극적인 평화통일은 가능하다고 보는 자신있는 전망을 토대로 하여 합리적이며 설득력있는 방안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미접근시도에 관해서는 월맹과 미국과의 직접협상이 베트남의 공산화를 성공시킨 실례를 들면서 북한도 그러한 전술을 답습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매우 적절히 그리고 간결하게 답변한데 대해 깊은 공감을 갖게된다.

그리고 동·서독관계와 같은 평화공존을 이룩하는 가운데 남·북한이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전쟁을 하지 말고 통일에의 여건이 성숙될 시기를 기다려 보자는 정부의 입장은 세계만방에 뒤흔어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평화 지향적 자세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철수는 적어도 현 단계에선 현명한 정책이 아니라고 전제, 미군의 한반도주둔은 한국만을 위협이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자체의 국가이익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간에 시끄러운 비판을 받고있는 「카터」 미국 정부가 누구보다도 먼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한간의 동질화문제에 있어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며 능률과 협동에 이바지하는 우리나라의 체제와 제도는 우월성을 가지며 또 이는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과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민족의 동질화문제에 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우월한 제반제도는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에 걸쳐 폭넓게 보장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싶다.

「르·몽드」지의 「앙드레 폰텐느」 편집국장은 그의 직업언론인으로서의 식견과 사명감뿐만 아니라 예리한 판단력과 국제정세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하여 정평이 붙은 사람이다. 더우기 북한의 실정을 몇달전에 먼저 본다음 우리나라를 찾아 편견없이 비교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만큼 그의 박대통령과의 회견기사는 더 한층 높은 비중을 갖는 것 같다.

<중앙일보(1977. 10. 20)>

#### 평화통일의 민족적 열원

박대통령은 본지초청으로 내한했던 「프랑스」 「르·몽드」지 「폰텐」 주필과의 회견에서 평화통일과 번영의 미래에 대한 신념을 표명했다.

한반도 통일방식으로 박대통령은 북한이 기도하는 「베트남」 방식을 배격하고, 독일방식이 적합함을 강조했다. 전쟁정책과 혁명노선이 아니라 평화로운 공존과 교류,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실현원칙으로 박대통령은 다시 한번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미 3년전에 선명된 이 3대기본원칙은 불가침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정착,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문호개방과 신뢰회복, 인구비례의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분단의 현실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가져오려면 그 외에 다른 길은 있을 것 같지 않다.

우선 북한이 고집하고 있는 「베트남」 방식을 검토해 보자. 이는 결국 혁명과 전쟁을 통한 해결 방식으로, 물리적인 통일을 실현시킬 수는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보다시피 거의 한 세대가 절멸의 위험에 겪어야 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조성된 민족동질성의 파괴와 증오심은 후대까지 전승되고 말 위험이 있다.

그러한 반인간적, 반민족적인 우행은 6·25한번으로도 지긋지긋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평화통일의 길뿐이다.

평화란 원래 모든 세력·제도·개인의 통합에서 생기는 것이지, 어느 일방만의 노력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 남북한간의 관계는 북한의 전쟁정책과 혁명노선에 의해 상호 적대감이 증폭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북한의 전쟁준비 강화가 우리측이 대응태세를 유발하고, 그러한 상호자극의 상승이 폭력에 의한 충돌가능성을 높인다. 당연히 이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불가침협정은 바로 그 묘방이라 할 수 있다.

평화협정이 전쟁의 사후처리 조치라면, 불가침 협정은 미래지향적인 전쟁의 사전예방조치인 것이다. 계약당사자의 무력포기 내지는 불행사 의지가 그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평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남북한간에는 본격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인도·경제·사회적 교류와 협력이 실현되고 나면, 비록 통일정부가 수립되지 않더라도 분단으로부터 오는 민족적 고통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재 동·서독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도 바로 이 길이다.

이 방식에 대해선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리느니, 분단의 영구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느니 하는 비난도 일부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한 세대이상을 분단상태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도 언제 통일이 될지 막연한 형편이다.

상이한 두 체제를 평화적으로 결합시키는 대역사는 아마 장구한 시일이 걸릴는지 모른다.

그러나 남북한이 처음부터 전쟁이 아니라 이 오랜 기다림의 길을 택했다라면 지금쯤은 통일의 전망이 눈앞에 다가왔을지도 모를 일이 아니겠는가.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민족은 이 끈기 있게 노력하고 기다리는 길을 택해

야만 한다.

우리의 평화통일 열망은 3대기본원칙을 통해 이미 누차 천명된 만큼, 이제 남은건 북한측이 민족의 양심으로 돌아오는 일 뿐이다.

## 제2부 남북대화 소식

### <남북적십자회담>

#### 제24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경과

『이산가족 재회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한적, 신정에 성묘단 교류실현을 제의

<제24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가 1977년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①판문점에서의 제8차 본회담 조속개최 ②본회담 의제의 무조건 토의 ③남북 직통전화의 정상화 등을 북한적십자회측에 다시 촉구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시범적 사업으로 우선 「남북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의 상호교류」와 「노부모사업」을 오는 신정에는 반드시 실현하여 인도적 회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제의하고 『노부모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 사업을 통해 남북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적십자회 대표단은 본회담재개나 본회담의제토의 등에는 언급하지 않고 주한미군철수 반공정책 및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철폐, 반국가사범석방 등 구태의연한 정치선전으로 일관했고 엉뚱하게 한·일대륙붕협정을 폐기하라는 등 억지를 부렸다.

쌍방은 다음 제25차 실무회의를 오는 12월 9일에 열리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제24차 실무회의에서 있었던 김연주 대한적십자사 교체수석대표의 발언내용이다.>  
-편집자 주-

우리는 오늘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만 석달만에 제24차 실무회의를 갖게 됩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지난 7월 15일에 있는 제23차 실무회의에서 만4년이 가깝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는 본회담을 하루속히 재개하고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두가지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고 귀측의 호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본회담 재개문제에서 제8차 본회담이 쌍방간의 합의사항에 따라 당연히 서울에서 열려야 하지만 귀측이 서울에 올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귀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8차 본회담을 이곳 판문점에서 빠른 시일안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본 회담의 의제토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의제 제1항에서부터 5항에 이르는 모든 인도주의 사업을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토의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약에 귀측이 의제 5개항에 대한 실질적 토의를 전반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우선 1천만 이산가족문제 중에서도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상봉」과 「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의 남북교류」 등과 같은 시급하고도 실천용이한 문제부터 시범적으로 착수하자는 제의도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이와같은 제의들은 우리 실무회의가 채택한 두가지 의제 즉 「본회담 재개문제」와 「본회담의제의 예비적 토의」라는 두가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로써 벌써 오래전에 실현되었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귀측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쌍방은 지금으로부터 3년전, 이 실무회의를 출발시키면서 중단된 본회담을 하루속히 재개하고 본회담의제에 대한 예비적 토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실무회의에서 해결할 중요한 과제는 먼저 『제8차 본회담을 언제, 어디서 개최하느냐?』하는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1천만 이산가족들의 생사, 소재확인」을 비롯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상호방문」등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를 실무적 차원에서 토의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같이 회의목적과 토의할 의제를 명백히 정해놓은 이상 서로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정해놓은 의제를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토의 해결하는데 전념하는 것이 대화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대화의 정도에서 이탈하여 회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불필요한 논쟁만을 일삼고 또 일방통행식 발언으로 회의를 진행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대화는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원칙한 대화는 문제의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난관을 조성하고 상호간의 대립과 불신을 조성시킴으로써 마침내는 대화를 파탄상태로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남북적십자인들의 인도적 대화가 이러한 무의미한 대화로 전락되지 않도록 온갖 지혜와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북한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남북적십자회담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회담자세를 깊이 반성함으로써 교착된 남북적십자회담을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하겠습니까.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회담초기부터 시종일관 주장하고 강조하여 온 바와 같이 우리의 인도적 회담은 무엇보다도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길을 열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동시에 이와 같은 인도적 사업을 통해서 남·북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숭고한 민족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쌍방이 냉철한 현실감각을 가지고 남·북의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는 허심탄회한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남북이 단절되어 있고 정치사상과 제도가 상이한 환경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되찾기 위한 대화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 그 성과가 단기간에 이루어지



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과 대립점을 초월하는 대국적인 자세로 인내성있게 대화를 추진하여 나간다면 남·북간의 오랜 단절과 대립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대국적인 회담자세야말로 우리의 대화를 가능케 해주는 「출발점」이요 「공통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쌍방은 지금으로부터 6년전에 바로 이와 같은 「출발점」과 「공통점」으로 해서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인도주의 회담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발당시 우리는 모두가 오랜 단절끝에 이루어진 접촉과 대화를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이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치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기로 다짐했고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길을 열어주는 인도주의 사업에 전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주장을 강요하거나 상대방 내부 일을 간섭하지 않는 아량과 인내성을 발휘함으로써 대화의 전망을 밝게 해 주었습니다.

나는 바로 이러한 자세로써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인도주의 사업을 실현시키고 오늘의 단절된 남북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개선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측의 회담자세는 1973년 8월 28일 이른바 「회담중단성명」을 발표한 이후부터 인도주의 회담의 정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다 덮어두기로 하더라도 최근에 와서 이 실무회의가 해결해야 할 「본회담 재개문제」와 「본회담 의제의 예비적 토의」에 대해서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대화 상대방을 중상비방하는 정치선전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적십자회담의 기본 취지와 목적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나는 귀측의 이와 같은 자세가 하루속히 시정되고 회담의 정도를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8차 본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사실 본회담 재개문제는 귀측이 받아 들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하등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또 장시간의 토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 제8차 본회담은 쌍방이 합의한대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귀측이 한사코 서울에 오는 것을 거부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측은 할 수 없이 귀측 입장을 고려하여 제8차 본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이곳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측이 판문점에서 제8차 본회담을 열자고 주장하는 이상 귀측은 우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렇지 못할때 본회담 재개문제에 대한 귀측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측이 진심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을 정상화하고 1천만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할 의사를 가졌다면 제8차 본회담의 판문점 개최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회담 의제의 예비적 토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측이 내놓은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토의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이미 제3차 본회담때에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의 쌍방 적십자인들이 주관하는 「이산가족 심인사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귀측이 정치적 선결조건을 앞세우면서 토의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의 그러한 부당한 선결조건들이 철회됨으로써 우리 측이 내놓은 사업방안이 하루속히 토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실무회의가 시작된 이후 오늘까지 교착된 회담의 돌파구를 열고 이산가족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긴급한 사업방안과 시범적인 사업방안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본회담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를 계속 기피하는 귀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1천만 이산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긴급한 문제로 제기되는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상봉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또 비교적 실천이 용이한 시범적 사업으로써 「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의 상호교류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1천만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하루 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업들이며 쌍방이 합의한 본회담 의제 전체 속에 포괄된 인도주의사업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예상외로 지연되고 있는 우리의 인도주의사업에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고 또 풍부한 경험요소를 더하여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도적 사업들은 처음에는 소규모의 시범적 사업으로 출발하여 점차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 전체의 자유로운 왕래로까지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남북왕래는 동시에 남북의 단결과 대립을 극복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는 이땅에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즉 우리의 인도주의사업은 곧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지름길이요 밑거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도주의사업에는 무엇보다도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오직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귀중히 여기는 인도주의정신이 요구됩니다.

귀측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분단되고 수백만의 이산가족들이 동서로 갈라져 살고 있는 독일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서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상호방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60세이상의 고령자를 뽑아서 연말 성탄절을 기해 고향과 가족을 방문토록 허용하는 시범적인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고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한 그들의 고향방문사업은 이제 해마다 3백만명 이상의 동·서독 사람들이 분단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수천년동안 배달겨레의 순수성과 통일성을 지켜온 슬기로운 민족으로써 세계 어느나라 사람보다도 평화와 단결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평화와 단결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다른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성공시킨 인도주의사업을 아직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 서로 편지왕래는 고사하고 부모, 자식간에 생사여부조차 알 수 없는 오늘의 단결상태는 하루속히 타개해야 합니다.

북한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의 전반적 조류는 과거의 이념적이며 배타적인 대결관계를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각국이 개방과 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력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찌기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내외에 선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 공존노선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으로 해서 비록 사상과 제도를 달리 하는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세계의 어디에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세계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우편, 통신망을 개설하고 경제, 문화, 체육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8월말 현재로 중국, 소련, 「유고슬라비아」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주고 받은 우편물의 수는 무려 2만9천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귀측도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소련땅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 장전두라는 사람은 금년 초에 소련여권을 소지하고 38년만에 조국을 찾아와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노모와 딸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년전 8월 한가위에 시작된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방문은 이제 1만5천명을 넘었으며 지금 그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혈육을 만나는 일은 마치 이웃 마을을 찾듯이 빈번하고 자유로워 졌습니다.

지난달 추석에도 2천 5백여명이 고향을 방문하여 수십년만에 혈육을 만나고 조상의 무덤을 찾아 성묘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곳을 다 오갈 수 있고 통신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가깝고 개방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남북을 막아 놓은 인위적 장벽만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인도주의정신과 동포애를 발휘하고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기만 한다면 남북간의 인위적 장벽은 쉽게 극복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예비회담과 본회담과정에서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였으며 또 7·4남북공동성명도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 다섯돌을 보냈고 또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한지는 벌써 7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대화는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으며 제8차 본회담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고 본회담 의제는 제1차 조차 토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의 교착상태는 그간의 사태발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남북간의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킴으로써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과 같은 대화의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타개하고 남북의 긴장과 대립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담초기의 허심탄회한 마음 가짐으로 돌아가 남북적십자회담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대화를 이끌어 가야합니다. 그리고 제8차 본회담을 하루속히 재개하며 본회담 의제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토의 해결함으로써 실무회의가 맡고 있는 두가지 과제를 완결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제24차 실무회의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그 동안 여러차례 주장하여 온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진지하게 토의됨으로써 오랫동안 교착된 남북적십자회담에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조속한 시일안에 제8차 본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합니다. 제8차 본회담은 쌍방이 합의한대로 서울에서 당연히 개최되어야 하지만 귀측이 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는 부득이 제8차 본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자는 방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주장은 「서울·평양」왕래의 길이 만 4년이상 막혀있는 상황에서 본회담 재개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둘째,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본회담 의제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구체적으로 토의, 해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측이 제3차 본회담에서 제의한 바 있는 「쌍방 적십자사 주관하의 심인사업방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귀측이 의제 제1항에 대한 구체적 의제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우선 시범적 사업으로써 「남북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의 상호교류」와 「노부모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사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시범적 사업들은 남북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만일 귀측이 이를 당장 실시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우리측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긴급한 인도적 사업들이 돌아오는 신정에는 반드시 실현되어 이산가족 당사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동시에 우리의 인도적 회담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작년 8월부터 계속 마비상태에 놓여있는 「서울·평양」간의 직통전화와 판문점내 쌍방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할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귀측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남북간의 연락수단은 우리 쌍방이 회담초기에 서로 합의해서 공동으로 설치한 것이며 약5~6년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쌍방에게 유익하게 이

용되어 왔습니다.

귀측은 이 두 가지 연락수단이 마비됨으로써 그 동안 우리 쌍방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을 자아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를 하루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측의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귀측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제3부 그밖의 남북관계 소식

#### 1.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성묘방문

30여년간 조국의 품을 떠났던 조총련계 재일동포 2천 3백명이 금년 추석(9월 27일)을 맞아 지난 75년에 재일동포 모국방문사업이 시작된 이래 최대의 규모로 9일 17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귀국하였다.

망향의 세월 속에 백발이 되어 돌아온 동포들, 말로만 들던 부모의 고향땅을 처음 밟아본 2·3세대들 모두 깊은 감격에 젖을 뿐이었다.

#### "47년만의 성묘"

22세의 청년으로 부모곁을 떠났던 아들이 거의 반세기만에 69세의 노인이 되어 회한의 귀향을 하였다.

재일동포 김만용씨(69세, 일본 대판부 지전시 본부정 589:경남 김해출신)는 47년만에 함께 귀국한 여동생 김수남씨(57세, 일본 대판 정서빈천구 대화전 4의 213)와 부모의 묘소 앞에서 오랜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머리는 벗겨지고 이마에는 객지생활의 괴로움을 나타내듯 깊은 주름이 패인 이젠 노인이 되어 버린 김씨였다.

일제때인 47년전에 가난을 견디지 못해 정든 고향과 부모의 슬하를 떠나 도일했던 김만용씨는 조총련의 감언이설에 속아 조총련에 가담했었기 때문에 해방후에도 귀향이 어려웠던 것이다.

김씨는 최근야 그동안 조총련에 적을 두고 깊은 관계를 가져오다 몇해전에 그들의 거짓 선전에 속아왔음을 깨닫고 전향한 여동생 수남씨의 설득으로 민단에 전향했던 것이다.

조총련의 온갖 기만의 암흑생활을 헤어나 조국과 고향을 되찾은 김씨 남매는 47년만의 성묘길에 올라 부모님 묘소에 뒤늦은 잔을 올리며 지하의 양친 앞에 조총련의 허물을 벗고 "속죄의 여생"을 다짐하였다.

#### "31년만의 벽찬 한가위"

실로 31년만에 꿈에 그리던 가족들과 함께 맞는 한가위.

인생의 절반 이상을 타국에서 보내고 육순의 나이로 돌아온 조국, 그 조국의 품에서 맞은 한가위는 너무나도 가슴벽찬 명절이었다.

제일동포 추석성묘단과 함께 귀국한 김용수씨(59세, 일본 신사현 삼도군 여관정)는 아들 김칭길씨(36세, 서울 성북구 길음동 510의 96)집에서 어느새 반백으로 변한 부인 배임호씨(52세), 아들, 딸, 며느리, 손자에 둘러싸여 벽찬 추석을 맞았다.

해방을 전후하여 가족과 생이별이 되어 버렸던 김씨는 북송선 「만경봉」 호의 거점 니이가다(신사) 교포사회의 실력자로서 조총련 창건이후 20여년간이나 몸담아 오며 중책을 역임한 골수 멤버이기도 하였다.

김씨는 『한국은 반공국가여서 가기만 하면 당신이 조총련인걸 알기 때문에 당장 옥살이를 한다』는 조총련의 선전에 몇번이나 다짐했던 모국방문 길을 눈물로 포기하여 왔으며 『이제와서 보니 완전히 안심이 된다』며 흐뭇한 감회 속에 "내조국"을 만끽하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조총련의 악랄한 간계에 속아 때로는 진정한 조국을 배반하기도 했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온 국민의 환영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이제는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늦게나마 조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다짐했다.

## 2. 재이북 부조 합동경모대회 개최

### 「북녘하늘에 망향의 분향 재배」

통한의 국토분단 4반세기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건너 산넘어 지척이 정든 고향임에도 이내 가지 못하고 이북땅이 마주 보이는 남북분단선인 임진강변에서 재이북 선조에게 제례드리며 또한 살아있어야 할 형제자매, 친척, 친지들의 안녕과 무고할 것을 가슴깊이 아로 새기며 조용히 묵념드리며 가슴 속에 맺힌 눈물로 시름을 달래는 실향민들의 망향제인 재이북 부조 합동경모대회가 1977년 9월 27일 (추석) 하오 1시에 임진강변의 임진각 앞 광장에서 통일경모회(회장: 오훈철) 주최로 열렸다

추석명절을 맞이해도 고향을 찾아갈 길이 막힌 월남 실향민들은 북녘하늘을 바라보며 조상 경모와 망향의 정을 달랬다.

이날 2천여명의 이북출신 실향민들이 참석하여 광장에 마련된 제단에 분향, 경모의 묵념, 배례를 올린후 『명절때 만이라도 고향에 찾아가 부모형제를 만나고 조상 산소에 성묘라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북한동포에게 보냈다.

<다음에 실향민들의 망향의 슬픔이 어린 이희승 대회장의 대회사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귀빈 여러분,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북땅에 남겨둔 조상들과 부모형제들에게 애타는 경모의 정을 함께 표하고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국분단과 동족상잔의 와중에서 우리들이 공산치하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대한의 품에 안긴지도 어느덧 30여 성상의 세월이 흘러 버렸습니다. 참으로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번이라도 그리운 고향엘 다녀오거나 헤어진 부모형제들을 만나 볼길 없는 참으로 통한이 맺힌 세월이었습니다.

후조도 철따라 제고장의 옛길을 찾아 가거던 하물며 북녘하늘만 바라보면 그리운 고향엘 찾아갈 수 없는 실향민의 심정을 어찌 말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표 한장이면 세계의 어느 구석에도 소식을 전할 수 있거든 하물며 지척에 둔 부모형제들이 생사조차 알길이 없는 이산가족의 비애와 고통을 어찌 이루 다 헤아릴 길이 있겠습니까?

옛부터 온 겨레가 전통적으로 지켜 내려오는 설날이나 추석날을 맞이할 적마다 우리들은 조상들이 고히 잠들어 계신 고향의 산하를 그리워하며 몸부림치고 산소를 찾아 성묘조차 드리지 못하는 서글픈 심정을 달래볼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에 우리들은 국토분단의 엄연한 현실 속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조상님들에게 성묘의 예를 갖추지 못했고 부모님들에 대한 문후를 결해온 죄지은 심정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건한 경



의와 효성의 일단을 표하기 위하여 이 대회를 갖게된 것입니다.

오늘 모처럼 마련된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다같이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자세를 참되게 가다듬어 평소에 다하지 못했던 정성을 기울여 부조 경모하고 혈육에 대한 그리움과 쌓였던 향수를 모두어 북녘하늘에까지 메아리 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들이 겪고 있는 비애와 고통, 그리움과 서글픔은 분명히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 이룩되지 못한데서 유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북한공산당의 정체와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 이지만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는듯 하였을 때에는 그래도 행어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걸어 보았던 것이 우리 공통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측했던 바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은 5천만 민족의 간절한 여망을 배반하고 남북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적인 견지에서 내놓은 추석성묘단의 교환 방문 제의와 남북으로 흩어진 노부모들을 설날에 판문점에서 상봉시켜 주자는 제안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들이 입버릇처럼 제의해 왔던 서신교류마저도 모조리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의 적화라는 그들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비인도적 폭력이나 만행을 서슴치 않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이기에 그들은 당초부터 남북대화를 남북적화의 수단으로 악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배신이며 이때에 우리가 떠 한번 겪어야 했던 아픔과 허탈과 좌절감은 그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북한공산당은 민족고유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미풍양속을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새삼스러이 북한공산주의자에게서 인도주의의 조상숭배니 민족적 양심을 찾으려 한다는 것은 마치 연목구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들은 조국분단 현장의 쓰라림을 맛본 희생자들이며 북한의 생지옥을 몸소 체험했던 산 증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남달리 조국의 통일을 열망하고 있으며 열망하고 있는 그만큼 통일을 앞당겨 성취해야 할 책무와 사명감 또한 귀중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오늘의 이 대회는 이런 식의 경모대회를 하루속히 끝장내도 될 수 있도록 통일의 결의를 굳게 다짐하자는데 또 다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의 바탕 위에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평화통일 삼대기본 원칙」을 내외에 천명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반민족적인 폭력혁명노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일의 제반여건을 능동적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의 기반 위에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국력 배양에 온 국민의 총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러한 정부시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이 감히 넘나볼 수 없는 튼튼한 안보태세와 국민총화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 3. 남북한 이질화 심포지움 개최

#### 『겨레의 혈맥 끊는 북한의 남북이질화 책동』

남북분단 32년! 이같은 분단의 한 세대를 거치면서도 민족적 숙원인 평화통일의 전망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남북한간에는 이념, 제도, 전통문화와 생활양식 등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가 점차 심화되어 가고만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대한민국은 지난 1970년 8월 15일 박정희대통령이 남북한의 선의의 경쟁을 제의한 것을 비롯하여 1972년 평화통일의 대원칙을 내외에 선포한 7·4남북공동성명을 주도하였으며 또한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선언에 이어 1974년에는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와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천명하는 등 민족통일을 위하여 온갖 노력과 성의를 경주하여 왔다.

또한 지난 1971년에는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찾기운동 제의로 대화와 인도주의 사업 추진을 통하여 상호 신뢰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써 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인도적 사업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는 성의를 보이지않고 외면하면서 엉뚱하게도 미국과 협상을 추구하기에 급급하고 우리의 유엔 동시가입제의와 6·23선언을 민족분열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생떼를 쓰며 거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북한측은 우리와 합의한 7·4성명의 통일 3대 원칙을 왜곡 변질시켜 소위 자주원칙은 주한미군철수로, 평화원칙은 남한만의 군비축소로,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은 반공체제의 포기로 악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온갖 부문에 민족의 이질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질화의 폭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치밀하고도 의도적인 이질화정책으로 더욱 심화되고 넓어지고 있으며 결국은 통일을 저해하는 내재적 제약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금반 국토통일원은 이와 같은 남북한의 이질화의 실상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77년 10월 18일부터 2일간 「남북이질화문제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30여년간의 남북한의 단절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민족관, 역사, 언어, 문화예술, 교육, 종교, 의식구조, 가치관, 개인생활 등 전분야에 이질화가 점차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어 정치적인 단일체의 형성에 앞서서 민족의 이질화 극복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이 국토통일원의 「남북한 이질화 현황」 보고에서 밝혀졌다.

국토통일원은 이 보고에서 『분단의 그날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숙원은 변치않았지만 북한공산집단에 의한 남북한간의 갈등과 민족이질화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우리의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는 강대국이 관여하는 외적 요소보다도 현재 휴전선 이북에서의 민족이질화라는 내재적 요소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따라서 이같은 통일의 내재적 제약요소인 남북이질화의 실상을 하루빨리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안출하는 노력이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북한을 가로막은 마지막 철의 장막의 제거는 우리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통일을 지양하고 평화정책의 바탕 위에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평화통일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주제논문으로써 「전통과 정치체제」(차기벽 성균관대학교 교수), 「민족동질성과 이질화」(손제석 서울대학교 교수), 「문화와 성격구조」(고영복 서울대학교 교수), 「이질화극복과 민족주의」(황성모 충남대학교 교수)의 4편이 발표 토론되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이 발표한 「남북한 이질화 현황」의 내용이다.> -편집자 주-

## 남북한 이질화 현황

### - 목 차 -

#### 서 언

1. 이념과 제도의 측면
  - 가. 정치면
  - 나. 경제면
  - 다. 사회면
2. 전통문화의 측면
  - 가. 민족관
  - 나. 역사
  - 다. 언어
  - 라. 문화, 예술
3. 생활양식의 측면
  - 가. 교육
  - 나. 의식구조 및 가치관
  - 다. 종교
  - 라. 개인과 가정생활
  - 마. 사회생활 및 생활양식

#### 결 어

#### <서 언>

우리 민족은 원래 같은 언어, 동일문화, 동일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살아왔습니다마는,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동서세계의 「이데올로기」 적 분극화 과정에서, 국제권력 정치상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북한공산집단의 반민족적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것이다.

분단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숙원은 변하지 않았지만, 북한공산집단에 의한 남북한간의 갈등과 민족이질화는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오늘의 시점을 기준으로 내외여건을 살피건대, 우리의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는 강대국이 관여하는 외적요소 보다는 현재 휴전선 이북에서 민족이질화라는 내재적 요소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후의 정세를 전망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의 통일문제의 해결은 강대국의 관여보다는 우리의 민족적 자주성의 비중이 한층 더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른바 4강 중심에서 점차 남북한 당사자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는 남북한의 동포가 같은 민족이라는 전제에서 통일을 추구하고 있건마는, 만일 민족이질화의 현상태가 장기간 방치된다면, 통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통일의 내재적 제약요소인 남북이질화의 실상을 하루빨리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안출하는 노력이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등이다.

## 1. 이념과 제도의 측면

### 가. 정치면

먼저 이념과 제도의 측면에서 정치면을 볼 것 같으면, 북괴는 그들의 최고지도이념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 헌법 4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 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로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북괴의 정치이념은 당규약 전문이나 헌법 5조의 규정처럼 북한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완수와 전한반도에서 공산주의혁명의 완수를 들고 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하여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내세우고 있어 동족간의 적대계급과의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의 주체는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 「인테리」에 국한시키고 있으며, 그들이 보는 국가관은 김일성의 주장처럼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당의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전취물이라고 하여 소위 그들의 조작된 혁명전통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헌법질서는 초헌법적 위치에 있는 당규약의 종속규범에 불과한 것이고, 김일성 교시의 절대성을 무조건 강요하여 사문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나. 경제면

다음 경제면을 볼 것 같으면 우선 공산주의 경제이념이 다 그러하듯이 북한도 「맑스·레닌」의 교리에 따른 사회주의 경제원리를 내세우고 있으며 경제에 있어서도 주체사상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생산수단을 국유화 또는 협동단체의 소유로 규정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은 이미 지난 50년대 후반에 「이용」 「제한」 「개조」의 3단계 기만전술로써 완전히 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통질서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 계획생산과 공급을 통해 주민의 통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귀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재산권까지도 정권기관의 장악하에 두어 주민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개권이나 전통적 생활태도는 완전히 말살되고 말았다.

## 다. 사회면

정치, 경제적인 이념과 제도상의 차이는,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선 모든 개체의 활동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구호는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있다. 한편 헌법 11조에서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데, 사회제도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라는 전체주의적 집단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지역을 하나의 조직사회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사회생활면에서, 모든 주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는 것이 혁명적 기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가 무시되고 전체 속에 매몰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본성마저 획일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염원과 창의와 개성과 능력이 무시된 집단주의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였다.

## 2. 전통문화의 측면

### 가. 민족관

우리민족은 5천년의 역사, 언어, 전통, 문화, 그리고 생활감정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민족개념을 무시하고, 「부르조야」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북한은 민족주의에 대하여 계급적 이익을 전 민족적 이익으로 가장하여 내세우는 자본가계급의 사상으로 단정하는 사회주의 민족개념을 내세워 여타 계급은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노동계급이 주권자이어야 하며 생산수단이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경제적 기반이 같아야 하며 정치적 이념이 같아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민족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국가구성요소로서 국민 대신에 인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 역시 사회주의혁명의 원동력이라고 규정한 점에서 우리의 국민개념과는 근본적으로 판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현재에 와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프로레타리아」 사회 계급으로서 민족성원임을 규정하면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것처럼 지칭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역사

(사 관)

오늘날 남북한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역사관도 다를 수 밖에 없지만 북한의 경우 여타 공산권제국에 비해 민족사에 대해서도 훼손의 폭이 넓고 깊다.

그러나 분단된 우리의 입장으로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발전해야 함을 역사의 주요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경우는 5천년의 민족 역사를 유물사관의 입장으로 부회시켜 마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투쟁사가 전부인 것처럼 편찬하고 있다.

왕조사를 거부함은 물론 역사의 주체를 무산계급과 인민대중에 국한시킴으로써 역사과정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바로 북한이 그들 공산체제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역사를 날조하고 있는 것이며 더우기 근대사와 현대사 부분에서는 김일성 1인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그 내용을 왜곡 날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민족사에 대한 큰 모독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역사해석의 특징)

그러면 같은 민족을 이민족시하는 북한의 입장이 역사속에 그들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북한의 경우 유물사관적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해방이후 북한의 사가들 사이에 역사정리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던 것이다.

특히 우리의 역사를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원시공동사회, 중세봉건사회, 근세자본주의사회, 현대공산주의사회로 구분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1949년에 우선 우리 역사를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4단계로 나누었으나 그후 고대노예사회의 규정에 대해서 논란이 빚어졌다.

따라서 「맑스」의 5단계 경제발전사를 중심으로 볼 때 우리 역사도 노예사회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결국 고대 노예사회의 단계가 설정되어 조선통사의 개정판부터 삽입하기에 이르렀으며 북한은 그들 평양정권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구려시대를 부각시키게 되었고 노동자, 농민의 계급투쟁사를 강조하기 위해 왕조사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으며 김일성 체제의 유지명목을 합리화하고 김일성 가계의 행적을 날조하기 위해 김일성 빨치산 투쟁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국사체계 변천과정)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의 역사를 유물사관적 입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과정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 같으면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역사를 유물사관 이론으로 풀이해야 할 필요성과 그들 공산정권의 합리화를 위해서 한국공산당사 중심의 역사가 필요했는데 소련의 “볼셰비키” 당사를 중심으로 모방한 것이 바로 1949년의 소위 조선민족투쟁사였다.

다음에 전체 민족역사를 유물사관의 입장으로 편찬한 것이 소위 조선통사 상권이었고, 여기에서는 민족사를 유물사관으로 뒤바꾸어 놓았을 뿐 확실한 사관정립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라영의 “조선민역 해방투쟁사”가 김일성 항일투쟁을 크게 묘사하게 되자 그것이 당역사노선으로 채택되어 근세사, 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통사가 1958년에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역사시대 구분에 이론이 분분하여 결국 당역사 연구소의 방침에 따라 고대노예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되어 1962년에 조선통사 상하권이 정사로 확정되어 그들의 유물사관적 입장이 고착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의 국사 날조사례)

그러면, 우리의 민족사가 이처럼 왜곡되고 변질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의 날조사례를 몇가지 열거하여 본다.

이조말 병인양요때 미국의 상선 「샤만」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올때 평양관찰사 주도하에 이를 격퇴시켰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나, 오늘날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화와 관련해서 그 조부 김응우가 주도해서 「샤만」호를 격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3·1독립운동 역시 우리는 민족대표 각계각층 33인이 주동이 되어 독립선언문을 작성 낭독하고 세계 만방에 선포한 순수한 항일민족운동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난 동기조차 소련의 10월혁명의 영향에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 이끌었다는 국민회를 조작하여 3·1운동을 촉진시킨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상해임시정부는 3·1운동이후 애국지사들이 망명하여 세운 임시정부라는 사실도 부정하고, 그것이 인민을 배신한 조작된 단체라고 규정한 점은 항일민족투쟁의 주요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8·15해방에 대한 해석도 엄연히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과 연합군의 승리에서 얻어진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항일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1950년대는 소련을 해방의 은인이라고 역사책에 기록했으나 1970년대는 이를 회수해서 김일성의 우상화와 관련시켜 8·15해방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으로 얻어진 소산이라고 규정한 점은 그들의 역사날조가 얼마나 조직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 언어

(언어의 개념과 표준어)

우리는 언어를 음성 또는 문자로써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보고 서울에서 현대 중류계층이 사용하고 있는 말을 표준말로 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인간의 순수한 감정과 사상을 전달하는 언어마저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어의 정의마저 부정하고 소위 “문화어”라고 하여 김일성의 주체적 언어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당정책에 의해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인민



의 규범이 되는 문화적인 말을 그들의 표준어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언어가 자연적 추세에 따라 관습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에 의해 개혁되고 있으며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정책시달이 바로 북한의 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언어정책의 변천과정)

북한의 언어정책의 변천과정을 보면 1949년 9월부터 이미 한글 전용을 실시, 확대 보급하였으며 1954년 9월에는 소위 “조선어철자법”을 제정하였는바 그 특징은 1933년 이래 시행되어 오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완전히 폐기하고 두음법칙을 무시하고 자모의 수효도 24개자모를 부정하고 40개 자모를 주장한데 있다.

1966년에 “조선말 규범집”을 편찬하고 문화어를 함경도 중심말에서 평양말 중심으로 확정하였으며 1968년 9월에는 소위 “사회주의이념과 부합되는 언어의 보급”에 역점을 두고 현대조선말 사전을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언어정책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북한 언어의 특징은 김일성 교시와 찬양언사가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전투적이고 혁명적 구호적인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의 언어이질화의 상황)

그러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을 몇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먼저 오늘날 형태는 다르고 뜻은 같은 단어로서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질서하다”는 말을 북한에서는 “무연하다”라고 하고 전시물을 “직관물”, “술선수범”을 “이신작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대로 형태는 같으면서 뜻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서 아버지라고 할 때 남한에서는 친 부모를 말하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가리키고 있으며 “아가씨”란 말을 보면 남한에서는 처녀들의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봉건사회의 잔재 용어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빨치산”이란 말을 우리는 공산계털라를 뜻하지만 북한에서는 혁명적 영웅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라. 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보면 북한은 우리의 오천년역사에 걸친 민족문화와 예술의 순수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들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우리의 전통적 문화예술을 말살하고 말았다.

즉, 북한의 헌법 37조에 의하면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5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고 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만 민족의 문화와 예술이 존재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 (현대문화·예술관)

이와 같이 북한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문화와 예술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문화·예술은 계급성을 띄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만을 의식적으로 미화하여 강제노동을 합리화시키고 있으며 당성을 강조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에 충실히 따르도록 표현하고 있으며 사상성을 강조하여 노동계급의 사상교양에 기여하게 하고 있으며 인민성을 강조하여 그녀들이 말하는 인민의 혁명사상과 투쟁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곧바로 그들의 문화·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 (고전 평가)

이 같은 그들의 문화·예술관은 우리의 고전문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계급투쟁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홍부전」을 착취계급과 인민간의 대립투쟁이라고 해석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보급시키고 있으며 인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홍길동전」을 마치 봉건적 신분제도에 반대하는 농민의 봉기를 묘사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고전과 소설도 임의로 선택하여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입장에 따라 변조 해석하고 있는데 「레미제라블」 등의 보급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 (북한의 문학사조 변천과정)

북한의 문화·예술의 사조의 변천과정을 보면 해방 초기에는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 사상성을 기본지침으로 하였으나 6·25동란 기간중에는 소위 전쟁문학이라 하여 투쟁성, 혁명성을 강조하였고 6·25동란 이후의 195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자유주의문학의 침투에 반대하여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한편 1956년의 당 제3차대회를 계기로 하여 현장 작품활동의 지침을 제시하고 묘사문학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1960년대초에 들어오면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천리마정신」의 구현으로서 경제적 선동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김일성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혁명전통의 형상화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 (음악·무용)

음악과 무용도 민족적 형식을 모방하는 척 하면서 사회주의사상성을 강조하여 억세고 살기등등한 가사와 곡조의 노래에 투쟁적이고 집단적인 무용만을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40년대와 1950년대까지는 소련식의 모방이 많았고 1960년대 이후로는 중공식의 모방이 많았다. 따라서

우리 민족 전래의 우아하고 흥겨운 음악이나 무용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문화재 인식)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수천년 전부터 이룩한 유교, 불교문화와 근세이후의 기독교문화를 부정하고 말살시켰으며 계급성을 띠지 않은 즉, 인간과 인간의 갈등을 묘사하지 않은 문화를 부정하며 그들 공산주의혁명에 이익이 될 만한 것만 앞세우고 이에 더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김일성 위상화에 필요한 유적들을 문화재로 선정 보관하고 있다.

(문화유산 분류)

따라서 고대의 역사적 유물은 박물관 또는 현지에 두고 있으면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관람용으로 하고 있으며 근세의 유물은 혁명과 관련된 것만을 전시하고 현대의 유물로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관련되었다는 것만 골라서 문화재로 채택하여 성역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주요 문화재)

예를 들면 김일성 생가지역 일대를 성역화하고 백두산 일대를 김일성 혁명 근거지라고 지정하였으며, 신천과 해주의 혁명박물관에는 6·25전쟁의 참상을 수록하고 있고 김일성 가계를 위상화하여 김일성의 전처인 김정숙 등의 묘지를 혁명열사릉이라고 성역화 한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 3. 생활양식의 측면

#### 가. 교육

(이 념 · 목 표)

남북한 생활양식의 이질화 측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먼저 남과 북에 있어 교육이 어떠한 이념과 목표하에서 실시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오늘날 한국은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어디까지나 전인적 인간의 양성에 두고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며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고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교육은 순수성과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다라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북한에서는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공산주의적 인간형성에 두고 공산주의 사상과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하여 당과 전체를 위하여 복무하며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데 있으므로 교육의 순수성과 창의성이 완전히 말살되고 말았다.

(북한의 교육정책 변천과정)

이 결과 현재 북한에는 참다운 의미의 교육은 완전히 소멸되고 오직 김일성 주체사상의 선전이나 위상화를 위한 교육만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이같은 상황은 북한의 교육정책 과정을 보더라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제1차 헌법을 채택하면서 초등교육 의무제를 실시하였고 1952년 3월 내각 결정 18호에 의하여 학생의무노동제를 실시하였다.

1953년 8월에는 전국 교육자들에 호소문을 보내어 「맑스」·「레닌」주의의 교양교육에 중점을 두게 하고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주의적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되도록 하였으며 196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공산주의 사상교육에 치중하는 한편 당적 사상체계의 확립과 혁명전통과의 결합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 후 1960년대 중반부터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에 치중하여 청산리정신과 그 방법의 관철 그리고 김일성의 항일 혁명전통을 몸소 체득케하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교육의 실태)

이와 같은 북한교육의 특징은 현재 모든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첫째로 김일성의 우상화이다.

즉, “우리들이 언제나 보고 싶은 원수님” ……

“학습반실에는 원수님의 초상화를 모셔놓고”, 등으로 우상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로는 반미, 반일 투쟁의식의 고취이다.

“미제가 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의 보람은 없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일제와 싸우는 길 뿐이다” 등을 볼 수가 있다.

세째로는 당과 조국과 전체주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당과 조국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다” “생명보다 인민과 조국이 더 귀중하다” 등이며,

네째로는 북한의 우월성과 사회주의 조국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공납금도 등록금도 안내는 새 학교”, “우리들 앞에는 꽃동산 공화국의 품이 기다리고 있다” 등이 그것이다.

다섯째로는, 혁명전통과 혁명정신의 함양이다.

“혁명정신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보천보로 떠나다.”

“항일 무장투쟁의 혁명정신을 계승해서 승리하자”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북한의 교육은 오직 김일성의 우상화와 유일사상체계의 교양을 위한 교육이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로운 탐구나 인격도야는 전연 말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남북한 국어교과서 내용 비교)

이와 같은 북한의 교과서 내용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국어 교과서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한국의 국민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2권의 교과서를 훑어 본 결과 역사적 인물 등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이순신장군이 36번, 세종대왕이 32번, 신사임당이 17번 등이 나오고 있으며 외국 인명도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할 인물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는데 예컨대 만종을 그린 「밀레」가 34번 등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인민학교의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국어교과서 5권을 훑어 본 결과 역사적 인물은 전혀 없고 고작 김일성이 744번,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한 무슨무슨 「놈」이란 말이 287번, 사회주의가 270번, 미제, 미국놈이 13번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외국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은 제2세의 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내용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의식구조 및 가치관

(개 념)

우선 인간의식에 관한 정의의 남북간 차이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는 인간의식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인간의 의식이야말로 물질적 제조건을 초월한 독립적 주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변증법적 또는 역사적 유물론”이란 책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식을 단순히 물질의 반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창조성, 능동성이 결여된 인간을 형성시킨 결과 오직 혁명적인 공산주의 인간형을 만들기 위한 투쟁만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

(세계관)

세계관에 있어서도 북한에서는 과학적인 유물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관념론적 세계관이란 착취계급의 이익에 부합되게 창조한 반동적 세계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오직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신봉케하여 수령에 충성하는 인생관 공산주의 혁명의 세계관, 적화통일의 혁명관을 부식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치관)

가치관은 인생을 보는 눈도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주인공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실천하는 주체물로 미화하여 공산혁명과 김일성 사상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완전히 부정하고, 집단적 전체주의 사고양식에 물들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 있다.

#### (의식구조)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북한주민의 의식 구조는 그들 공산주의적 도덕관념을 확립시켜 투쟁적, 혁명적, 광신적, 행동특수성을 형성하였고 배타적인 사고가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히고 말았다.

#### (전통사상)

전통적 관념면에서 40대 이상인 소위 구 세대들의 경로사상이나 경조사상을 보면 아직도 전통 질서를 존중하여 조상을 숭배하는 경향이 남아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협동의식이 잠재화되고 있으므로 인보사상에 입각한 상부상조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연로한 분들을 존경한다기 보다는 혁명적 동지로서 보고 있으며 인보사상면에서는 독자적으로 자기 중심주의적이고 경조 사상면에서는 조상 경배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김일성만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소유권)

북한에서는 헌법에 의해 재산권을 완전 박탈하였는데 1946년에 20개 정강발표에 따라 주요한 재산들을 국유화 시켰고 1946년 3월에는 토지개혁법령을 만들어 몰수하였으며 1946년 8월에는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였다.

또한 소유권에 대하여는 1946년 10월에는 개인 소유재산에 대해서 일부제한을 하다가 1954년 3월 내각 결정40호에 의하여 농업을 협동화 시킴으로써 1958년에 이르러 개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말살되었다.

1972년 개정된 헌법 22조의 규정에서는 “개인 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소비를 위한 소유이다”라고 함으로써 배급제에 의한 공급 이외에는 소유물이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 (소유권 개념)

이상과 같은 재산권 박탈과 관련해서 북한의 세대별 소유권에 대한 관념을 보면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해방전 세대로서의 4대 이상은 소유 의식면에서 아직도 개인소유 의욕이 잔존하고 있으며 관리 의식면에서도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해방이후 세대인 30세 이하의 주민들은 소유의식 면에서도 공유재산의식이 강하며, 관리의식면에서는 능동적인 관리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종 교

##### (기본입장)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헌법이 제정될 때,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여 왔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16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종교를 유물론적 입장에서 부정하여 왔고 그들은 구 헌법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치 않다가 신 헌법에서는 소련헌법을 모방,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면서 반종교의 자유도 있다고 함으로써 실제로는 종교 반대운동을 본격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정치용어사전에서 북반부에서는 이미 종교가 없어졌으나 남반부에서는 계속 남아 있어서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독교 연맹, 불교도 연맹과 같은 위장종교단체를 두어 대외선전에 활용하고 한국의 종교인을 대상으로 통일전선 형성을 획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북한의 신앙체계 말살과정)

그러면 북한이 신앙체계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말살하였는가를 검토하여 보겠다.

북괴는 소련군의 점령하에서 1946년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하여 종교계 소유의 산림토지 등을 무상으로 몰수했으며 이어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재단을 해체 국유화하였고 북한 정권이 들어선 이후 그들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해 버리고 말았다.

6·25동란 중에 파괴된 주요 사찰은 일부 복구하기도 했으나 여타의 교회와 사찰은 완전히 철거하고 말았다. 그리고 1958년까지 종교인에 대한 숙청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도 당 집중지도사업을 통해 종교인에게 복잡한 계층이라는 굴레를 씌워 감시와 박해의 대상으로 삼아 오고 있다.

##### (종교실태)

남북한의 현재의 종교실태를 보면 한국은 현재 불교, 기독교, 유교 등 10여 개의 현대종교가 포교되고 있으며 문공부 통계에 의하면 1976년 말 현재 종교인수만 해도 2,000만 명이 넘고 있으며 사찰, 교회 등도 2만 6천여 개소로 종교재산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지역에서는 전술한 바대로 이미 종교가 없어졌으며, 남아 있는 종교관계 시설물도 사찰은 당 간부 휴양소로 교회는 탁아소와 협동농장의 창고로 개수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라. 개인과 가정생활

(개권의 부정·가정 파괴)

북한은 1946년 6월에 이미 탁아소 규정을 제정해 놓고 생후 1개월부터 만3세까지의 어린이들을 탁아소에서 집단 양육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1950년 3월에는 내각 결정 72호를 공포해서 전주민에 대한 노동기준량을 설정함으로써 의무 노력동원을 강제화하였고 1953년 8월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주민의 직장이동 금지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고 1958년 7월에는 김일성이 현지 지도를 통해 5호 담당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개인생활과 개인사상 동태를 감시하는 조치가 취해짐으로 해서 개인의 권리는 완전히 부정되고 말았다.

또한 북한이 가정을 파괴시킨 과정을 그 사례별로 살펴보면 1946년 7월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여 여성 노동을 강요함과 아울러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위치는 점차로 이탈되어 갔고 1948년 9월에는 우리 고유의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대신해서 개인단위의 공민증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가문을 단절함으로써 가족개념을 없애 버렸으며 1976년 4월에는 소위 “주체형”의 인간양성을 한다는 구실로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제정하여서 생후의 영아때부터 탁아소에서 집단수용하여 김일성을 아버지로 알게 하는 교육을 조건반사적인 훈련을 통하여 주입시킴으로써 개성을 중요시하는 인간사회를 부정하면서 소위 붉은 전사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주조함으로써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개권리가 전통적인 가정은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실 태)

현재 북한에서의 개인권보장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개인은 오직 투쟁과 혁명의 도구로서 집단 예측하의 개인활동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도 전통적 윤리관을 봉건적 잔재로 혈육의 애정을 자본주의 잔재로 단정함으로써 가정이 노동생산의 단위라고 헌법 63조에 규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세포단위로서 각종 구성원간의 상호 감시체제를 확립해 놓고 매가정의 자율적 분위기를 파괴하고 말았다.

마. 사회생활 및 생활양식

(세계조치)

먼저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북한집단의 통제조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북한은 그들의 헌법 10조에 명시한 대로 “프로레타리아” 계급 노선에 따라 계급 독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성원으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 자유민을 인정치 않고 있다.

그들은 반사회주의적 정당이나 사회단체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 발표한 바 있으며 집단주의적인 지도방식에 의거하여 각개인은 각종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집단 조직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하며 자기 판단이나 집단토론 및 집단 결정원칙을 적



용하는 등 제반 통제조치에 따라 개인을 집단에 예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 주민 전원을 계층별로 성분을 분류하고 그 성분에 따라 통제와 대우를 하기 위하여 1958년 5월에는 소위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성분을 조사한 바가 있으며 1966년 4월부터 1969년 3월까지 주민 재등록사업을 실시하여 북한 주민을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한 군중이라고 하는 적대계층으로 3대별하여 주민의 성분을 완전히 분류하여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5호 담당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민을 상호 감시하였고 정치보위부라고 하는 사찰기구를 더욱 강화하여 복잡한 군중은 물론 전주민에 대한 감시 통제체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 (주민생활)

이러한 통제하에서 각계층별로 대우를 받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형편을 살펴보면 계층별 생활조건이 각기 다르다고 보겠으나 그 대체적인 형편을 보면 먼저 의류생산이 단일체계화되어 의류는 계층별로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에게는 제복화된 흰저고리와 검정치마가 남성에게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레닌복과 레닌모가 그 대종을 이루고 있다.

곡물의 배급제와 양권제도를 전 도시 주민에게 적용하여 밥 공장에서 아침 저녁을 받아먹는 식생활이 강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조치에 따라 명절이나 제사시에도 친척의 방문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파괴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라 해석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감시와 통제위주의 집단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집단주택에 입주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여 생활공간이 강제적으로 제한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 (관혼상제)

북한은 전통적인 관혼상제 양식을 완전히 말살하였다고 보겠다. 1955년에서 1960년 사이에 관혼상제 간소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의식을 사회적 요식행위에 그치게 하였는데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례는 우리 사회처럼 남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속단체나 직장의 세포당 위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혼 자체를 붉은 혁명 가정의 탄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결혼연령까지도 당에서 임의로 통제하고 있는데 1976년 7월 정무원 결정에 의하여 결혼연령을 철저히 제한하여 남자는 32세, 여자는 28세가 넘어야 결혼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당원과 비당원의 결혼은 엄격한 신분상의 구분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장례, 제례에 대하여 보면 북한에 있어서의 장례는 원칙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이용 가치가 다한 노동력의 소진한 물체를 처리하는 절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인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기 보다는 하나의 주검을 매장하는 사무적인 일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의례절차도 극히 간소화하여 1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도회지의 경우엔 편의협동조합에서 경영하는 장례부가 제공하는 공동묘지에 운추, 매장하거나 화장해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제례에 있어서도 전통적 제례는 미신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조상 숭배를 복고주의적 병폐라

고 비판하기 때문에 거의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고인의 제일은 해마다 고인의 생존시 혁명업적에 대한 비판의 기회로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명절)

명절 역시 북한에서는 세시풍속 자체를 배격하는 입장인데 설날과 추석한식절에 행하는 차례와 성묘는 허례와 낭비로 간주하고 일체 인정하지 않는 실정임에 반하여 현재 북한에서 지켜지고 있는 명절이란 전통적 명절로서의 민족고유의 명절이 아닌 공산주의 사상고취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새로운 명절로 지정되어 성대히 축하되고 있다.

예컨대 사회주의 명절로서는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공휴일로 하여 각종 축하행사와 선물보내기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5월 1일을 국제노동절로 9월 9일을 북한정권 창건일로 10월 10일을 노동당 창건일로 정하여 요란한 기념행사와 경축놀음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이 등장한 명절은 북한주민에겐 모처럼 노역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평시 구하기 힘든 음료와 육류까지 배급되는 관계로 다른 어떤 명절보다 더 기대되는 하나의 명절아닌 명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어>

이상으로 남북한 이질화 실태에 관하여 우리는 이념과 제도, 전통, 문화 측면 그리고 생활 양식 순으로 각각 검토하여 보았다.

이제 분단 30년이 경과하면서 남북한간의 이질화가 이같이 심각한 상황에서 통일문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 정치적 통합으로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통일의 한 과정으로서의 남북한의 이같은 이질화문제를 우선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2차대전이 남긴 동서간의 철의 장막은 세계도처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제 미·소간에도 미·중공간에도 또한 중부 유럽의 동서간에도 철의 장막은 없어졌다.

오직 지구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철의 장막이 한반도에 걸쳐 있고 이 철의 장막의 제거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와 같은 이질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통일을 지양하고 평화정착의 바탕위에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평화통일을 추구해 가는데 있다.

# **남북대화 제16호**

(1977. 12 ~ 1978. 4)

# < 목 차 >

제1부 평화정착과 통일의 의지 .....	3
1. 박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 .....	3
2. 박대통령, 「후지(부사)」 T·V 특별회견 .....	7
제2부 남북대화 소식 .....	14
<남북조절위원회> .....	14
서울측, 대화 정상화 촉구 성명발표 .....	14
<남북적십자회담> .....	27
제25차 실무회의경과 .....	27
제3부 그밖의 남북관계소식 .....	32
1. 조총련계 제일동포, 구정맞아 모국방문 .....	32
2. 북한, 적화망상 선전을 재연 .....	33
3. 남북한 이질화 「심포지움」 주제논문 .....	39
● 전통과 정치체제 .....	40
● 민족동질성과 이질화문제 .....	48
● 문화와 성격구조의 이질화 .....	53
● 이질화의 극복과 민족주의 .....	62

## 제1부 평화정착과 통일의 의지

### 1. 박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

『통일의 방침은 선평화·후통일』, 『대화를 통한 교류확대와 문호개방』

<박정희대통령은 1978년 1월 18일 새해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에 대한 기본방침은 통일을 위한 모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남북이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공존을 해 나가는 『선평화·후통일』 즉, 먼저 평화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대화를 해야되며 이 대화를 통해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문호를 점차 개방하여 민족 동질성을 되찾아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중 남북대화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문> 지금 북한 군대는 우리의 꾸준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동족인 우리와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등 엉뚱한 책동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어떠한 새로운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지금 당장 한반도의 긴장완화나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구상이라든지 묘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6·25동란이 휴전되고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4반세기가 흘렀습니다.

6·25전쟁을 경험해 본 우리로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동족상잔의 비극을 또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통일이 좀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고 또한 우리의 신념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무모한 도발, 불법적인 만행을 참아 가면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던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본정책이라고 할까, 기본방침은 늘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위한 모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남북이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공존을 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경제를 건설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

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잘 살도록 한 다음에 통일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면 그 때 가서 통일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성숙되지 않았는데 무리해서 하면 반드시 충돌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희생이 생기고... 그래서 통일에 대한 우리의 방침은 역시 「선평화·후 통일」입니다.

평화정착이 선행조건인 것입니다. 평화정착이 되지 않으면 통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의해서 무력으로 싸워서 어느 쪽이 결판을 낸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역시 평화가 정착한 연후라야만 통일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역시 남북이 싫든 좋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쉬운 문제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감으로써 여러 분야에 있어서 남북이 서로 교류도 확대해 나가고 문호도 점차 개방해 나가자는 것이며 어느 시기에 가서는 남북이 아주 완전히 개방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더 잘되어 나감으로써 그 동안 쌓이고 쌓인 남북간의 불신도 점점 해소 되고 같은 민족끼리의 동질성을 하나 하나 되찾아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치적인 통합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때를 보아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오히려 가장 빠른 첩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선 쉬운 문제, 남북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서로 만나게 할 것, 그것이 안되면 편지라도 할 것, 그것도 안되면 서로 사진이라도 보낼 것, 또 가능하면 추석이나 명절에 성묘라도 갈 수 있게 하는 것 등인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있는 조총련 동포들도 여기까지 데려다가 성묘하고 가족, 친척 찾아 보고 무사히 다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휴전선 하나만 건너면 남북 어디에나 서로 오갈 수 있는 그 문제하나도 지금 저쪽에서는 듣지를 않습니다.

불가침협정을 맺자, 유엔에 같이 들어가자, 남북교류를 하자 등 여러 가지를 수없이 제의해 보았지만 북에서는 전부 거절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는 우리하고 대화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또 앞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하고는 이제 대화도 안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

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집단이 왜 이런 태도로 나오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기본 철학이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철학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피하자 동족상잔은 있을 수 없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다루어 나가자 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주의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무력적화 통일을 기회만 있으면 강행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괜히 대화한다고 나와 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데 그것은 국제적으로 전연 대화를 안하겠다는가, 대화가 완전히 깨졌다고 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뒤집어 쓸까봐 국제여론이 두려워 나오기는 나오는데 전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늘 똥단지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러한 허황된 망상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기 전에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봅니다.

대화에도 잘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늘 대화를 하자고 중용하고 있는데 국제여론을 무시 못해서 어느 때는 응하는 체하고 대화에 나올지도 모르지만 늘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아무 성과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망상과 허황된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국력입니다. 우리의 국력이 저 사람들 보다도 엄청나게 커서 현격한 차이가 벌어져서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꺾거나 뒤집어 엎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라야만 이 사람들은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공산당이래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약하다 싶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냥 짓밟고 먹으려 하고 자기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할 때는 협상하자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산당의 그런 전법을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힘을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압도하도록 우리의 국력이 우월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는 벌써 승부가 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현재도 경제적으로 남북을 비교하면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적어도 10년 내지 15년은 앞서 있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10년 내지 15년은 뒤떨어져 있습니다.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대국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벌써 승부가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군사적인 능력인데 군사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는 남북이 그저 비등 비등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쟁을 피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전쟁을 해도 이길 자신이나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체념하도록 만들자면 우리가 저 사람들 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며 1980년대 초에 들어가면 그런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국력배양에 앞으로도 전력을 경주해 나가는 길만이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북대화를 단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중용하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생각을 뜯어 고치기 전에는 대화에 잘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대화를 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단념을 하고 대화에 응해 올 시기가 나는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있으리라고 한번 기대를 걸어 봅니다.



## 2. 박대통령, 「후지(부사)」 T·V 특별회견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선결문제』

『남북대화 무조건 재개해야』

<박정희대통령은 1977년 12월 23일 일본 「후지(富士)」 T·V의 시까나이·노부다까(鹿内信隆) 회장과와의 단독회견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될 선결문제는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라고 말하고 『남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모두 분단된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해야 되겠다는 염원은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통일은 아직도 요원한 문제이며 따라서 우선 당장 해야될 문제는 지금 남북간에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이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고 이를위해 꼭 필요한 것은 남북이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대화의 무조건 재개를 북한측에 촉구하며 『상대방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밀어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것은 대화를 안하겠다는 것이고 무성의한 것이며 또 무력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내가 김일성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자 그건 실제로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고 실효도 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고 무력으로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대화를 해봤자 그것은 전부가 가면이고 위장이며 위장전술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후지(富士)」 T·V와의 회견내용중 남북 대화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문>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에 있어 남북간의 대화가 선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남북대화의 전제가 될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하와 김일성간의 회담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선결문제가 뭐냐하면 나는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라고 말하고 싶다.

남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모두 분단된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통일에 대한 염원은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통일은 아직도 요원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선 당장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지금 남북간에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이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역시 남북이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제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대화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남북간에 몇번 대화가 있다가 지금 중

단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시 재개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북대화를 재개하자고 하면 북쪽에서는 언제든지 전제조건을 들고 나온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난제를 들이대는 것이다.

예를들면, 현 한국정부와는 대화를 안하겠다. 현 정권이 물러나고 다른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대화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또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국내법 몇 가지를 철폐하라고 한다. 반공법, 국가보안법등을 철폐하라, 또 반공법, 국가보안법, 또는 긴급조치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석방하라는 등의 요구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같은 요구를 내미는 셈인데 그것은 결국 그들이 대화를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그래서 이와같이 남북대화에 있어서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대화를 안하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대화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니시어티브」를 취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도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니시어티브」를 취해 왔다고 생각한다.

회장께서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70년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날 처음으로 내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 서로 전쟁은 포기하자, 그리고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이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제안을 한 일이 있고, 그 뒤 1971년 8월에는 1천만명에 이르는 남북의 이산가족들을 재결합시키기 위해서 적십자회담을 열어 보자는 제안을 했고, 1972년에 와서는 남북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7·4공동성명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생겨서 그동안 몇번 대화가 있었지만 이런것도 우리측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취해서 추진되어온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후 그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973년 8월에 와서 갑자기 대화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는 통고를 해 왔다.

그리고나서 사실상 지금 대화는 중단상태에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을 재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북쪽에 종용을 하고 있지만, 그런 종용을 할 때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전제조건을 붙이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대화가 안되는 것이다.

판문점에서 실무적인 접촉이 몇번 있었지만, 북한이 내거는 그러한 조건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거꾸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김일성 정권은 물러나고 다른 정권이

나와라, 또 북한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탄압을 받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전부를 철폐하라, 공산주의에 반대하다가 지금 숙청되었거나 투옥되어 있는 많은 민족진영 인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석방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받아들일겠느냐? 우리는 이런 소리를 해본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병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앉아 있다.

그러니 결국은 상대방이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밀어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것은 대화를 안하겠다는 것이고 무성의한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그외에도 그들을 대화의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적인 통일은 먼 장래에 된다 하더라도 남북이 우선 같은 동족끼리니까 완전히 문호를 개방해 보자, 또 비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도 쉬운것부터 점진적으로 해보자, 또한 남북에는 언제든지 전쟁재발의 위험이 감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연에 막기위해서는 남북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 통일에 대한 모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엔에 같이 가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등 건설적인 제안들을 여러번 해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언제든지 “노” 였다.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제의를 거부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대화가 중단된 이후에 그들은 이남에 대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도발행위를 감행해 왔다.

예를들면 한국 서해안에 있는 북한에 근접한 서해 5도에 대해서 무력위협을 한다든지, 또는 1974년 8월 15일에는 테러범을 보내 가지고 대통령 암살을 위한 테러를 한다든지, 작년 8월 18일에는 다 아는 바와 같이 판문점에서 도끼만행사건을 저지른다든지, 또 그동안에 무장간첩을 여러번 이남에다 파견을 한다든지, 또한 금년에 들어와서는 공해상에 국제관례에도 없는 군사경계선이라는 것을 쳐서 대남 도전적인 행위를 취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대화가 중단된 이후에 일어난 도발행위 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 있어서 북한이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고치지않고 그와같은 행동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김일성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자 그건 실제로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고 실효도 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먼저 근본태도를 바꾸라 이것이다. 무력으로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대화해 봤자 그것은 전부 가면이고, 위장이며 위장전술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문> 북한은 미국과 직접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한국의 기본적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그것도 또 하나의 「년센스」이다. 남북간에 분단된 민족이 우선 함께 이야기를 하자는데 대해서 같은 민족인 우리와는 이야기를 안하겠다고 우리는 따돌려 놓고 태평양 건너 미국하고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근본적으로 반대이며, 또 그건 실현성도 없을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 또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국정부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성의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성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자들의 새로운 저의와 음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하고 있다.

한국을 따돌려놓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마치 「베트남」 전쟁때 「하노이」가 「사이공」 정부를 따돌려놓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해서 결국은 월남전체를 공산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러한 수법을 노리고 있는 것이며, 소위 「베트남」 방식으로 한반도문제를 자기들 뜻대로 요리해 보자는 저의가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이고, 미국정부도 그러한 북한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대표가 같이 참석하지 않는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개선, 그리고 소련, 중공과 한국간의 관계개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일본등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교차승인 방식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또 일본과 북한간의 금후의 관계개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휴전협정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유엔군측과 공산측 사이에 체결된 휴전협정인데 그 휴전협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현재 판문점 부근에 와 있다. 이것은 유엔에서 파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제적인 보장의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여하한 형태의 국제적 보장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선행되어야 할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여 남북간에 가로놓여 있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어떤 합의를 봐야 된다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이 합의사항을 보장케하고 또 이것을 준수하게끔 서로 공동의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국제적 보장이라면 실효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남북간의 어떤 기본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없는 국제적 보장이란 것은 실효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문제 뿐만 아니라 요즈음 중동에서 논란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런 원칙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합의하에 공산측이 제안한 제의가 있는

데 그것은 휴전 당사자 4자회담을 열자는 것이었다. 휴전 당사자라는 것은 우리측에서 한국과 미국, 공산측에서 북한과 중공, 4자가 모여 앉아서 남북한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공산측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런 회담이 설령 개최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노리는 문제는 우선 남북간에 가로놓여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몇가지 합의를 우리가 서로 모색해 보자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회장께서 말씀하신 「크로스」 승인이라는 것,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교차승인 방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크로스」 승인이라든지 교차승인이라든지 하는 용어는 안썼지만 1973년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6·23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러한 구절이 들어있다.

한국은 호혜평등 원칙하에 공산국가들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겠다. 그대신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하라. 이것은 6·23선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한가지 중요한 항목인데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문호를 개방할테니까 중공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기타 공산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하라는 뜻이다.

만약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어 중공, 소련이 한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일본이나 미국이 북한에게 문호를 열고 수교하는데 대해서도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가 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그때 교차승인이라는 용어는 안썼지만 그 취지에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이 나간후에 결과적으로 우리 자유진영 국가들중에는 이 선언의 취지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북한과 수교를 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공산국가들은 그동안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결국 6·23선언으로 북한은 덕을 보고 우리 한국은 손해를 보게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앞으로도 우리 한국의 주요 우방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지금 북한과 수교를 안하고 있는 우방들은 호혜평등 및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산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기전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또는 성급하게 그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지금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이 남한과 국교를 맺고 있으니 북한과도 수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일부 여론이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만일 일본이 북한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든지, 수교를 하는 경우 중공, 소련 등이 한국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수교를 하겠다는 전제라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보장이 없는한, 일본만 일방적으로 북한과 수교를 해 버린다면 결국은 북한만 그만

큼 지위가 향상되고 우리 한국은 그만큼 입장이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고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우방국가들은 이점을 특별히 고려해서 너무 성급한 조치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문>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남북한이 직접 대화를 해서 평화의 길을 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종교적 대립과 30년간의 전쟁으로 인한 원한을 넘어서 「이스라엘」에 들어감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각하께서도 남북의 직접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어떤 극적인 조치를 취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 우리는 1972년에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았다. 그때 7·4남북공동성명이 나오기전에 막후로 저쪽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내가 데리고 있던 중앙정보부장을 평양까지 비밀리에 집어 넣었다.

그때는 상당한 위험이 수반하는 것이었다. 중앙정보부장은 사실 공산당을 잡는 기관이다. 그를 저쪽 호랑이 굴에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때 우리는 북한측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 대화를 할 뜻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모험을 한 것이며, 그뒤에 공동성명이 나오고 남북조절위원회가 생겨서 대화도 몇번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들의 저의가 탄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전쟁을 막고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민족적인 양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적화통일을 하는 하나의 수단방법으로 대화를 이용해 보자는 저의를 가지고 대화에 응했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그 증거가 몇가지 있는데, 나를 테러하기 위해서 문세광이란 자를 여기에 보낸 북한의 그 지령이 언제 나갔느냐하면 남북대화가 시작된 뒤에 나갔다는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휴전선에 땅굴을 뚫은 것도 남북대화가 시작된 그 무렵에 지시해서 그때부터 뚫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기술자들의 판단이다.

또 그 뒤에 저쪽에서 넘어온 귀순병이라든지, 귀순한 간첩들의 진술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겉으로는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해 놓고는 뒷전으로는 테러범을 보내고, 땅굴을 파고, 전쟁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들이 겉으로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요즘 중동문제에 있어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적지에 뛰어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그동안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어떤 막후의 교섭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사다트」 대통령이 적지에 뛰어 들어간 것도 뭔가 상대방에 대한 성의, 「이스라엘」도 전쟁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다는 성의, 양국간에 서로 이해관

계는 대립이 되어 있더라도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측의 성의라고 할까, 그 무엇을 자기 나름대로는 간직했기 때문에 그런 모험도 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그 내막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추측이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도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72년 그런 모험을 해봤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안이상 또 그런 무모한 모험을 경솔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제2부 남북대화 소식

###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화 정상화 촉구 성명발표

『남북의 자원·기술·지혜의 공동활용을』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을』

서울측, 조절위 무조건 재개촉구

남북조절위원회 민관식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는 지난 3월 3일 오전 10시 KBS방송을 통해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에게 보내는 성명을 발표하고 ①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평화문제를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교류등 당면문제들을 토의, 해결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무조건 조속히 재개할 것. ②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직통전화를 즉각 개통시키고 곧 부위원장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다.

민 위원장대리는 『비록 지금은 조국분단의 비극에 처해 있으나 남북대화가 정상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며 교류와 협력관계가 증진된다면 우리 민족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과 지혜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무궁한 민족번영의 앞날을 기약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위원장대리는 『북한측이 남북대화를 중단시키지 않고 그동안 공존공영의 민족적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을 우리와 함께 해왔다면 오늘 한반도에는 이미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관계는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상기시키는 한편 『오늘이라도 대화장 밖이 아니라 대화장안에서 남북간의 제반현안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의해결해야 한다』며 남북조절위원회의 무조건 조속재개를 촉구했다.

민 위원장대리의 성명문 내용은 전문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우리측은 오랜기간 중단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대화를 하루속히 정상화할 것을 누누히 강조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귀측의 긍정적 호응이 있기를 여러차례 촉구하였습니다.

남북간에 누적되고 있는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화가 정상화 되어야 하며 정상화된 대화석상에서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당면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래 금일에 이르기까지 무려 5년이 다 되어가도록 우리측의 대화정상화 촉구를 외면함으로써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한 남북간의 제 합의사항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귀측은 그동안 외교적, 군사적 대결정책을 강행하여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모든 선전매체들을 동원, 투쟁과 폭력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의 분열과 이질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귀측이 만일 남북대화를 중단시키지 않고 그동안 공존공영의 민족적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을 우리와 함께 해왔다면 오늘 한반도에는 이미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관계는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뜻에서 지난 5년 동안의 남북대화의 중단은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그만큼 뒤로 미루어 놓은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곧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하며 대화장 밖이 아니라 대화장안에서 남북간의 제반 현안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의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화된 대화석상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상호 사회를 개방하여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제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공통점을 찾아 교류와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국제조류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여 서로 평화를 존중하고 교류와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민족번영과 세계평화를 추구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조국분단의 비극에 처해 있으나 남북대화가 정상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며 교류와 협력관계가 증진된다면 유구한 역사와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과 지혜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무궁한 민족번영의 앞날을 기약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도 그만큼 앞당겨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인은 이와같은 신념에서 현재 중단되고 있는 남북대화가 새해에는 무조건 조속히 재개되어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평화문제를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류 등 당면문제들을 토의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무조건 조속히 재개할 것.

둘째,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직통전화를 즉각 개통시키고 곧 부위원장회의를 소집할 것.

본인은 이상과 같은 우리측 제의에 대하여 귀측의 긍정적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성명은 남북대화의 즉각적인 재개 촉구와 그 대화의 테두리 안에서 추구되어야 할 새로운 차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를 「교류와 협력시대」로 전환시킬 것을 제의함으로써 지금까지 남북한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이라는 현실적 제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한 상호간의 실리추구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다.

오늘날 세계각국이 사상이나 이념, 체제를 초월하여 서로 평화를 존중하고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같이 대화를 통하여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방안을 모색하고 한편 장기적 안목에서 「쌍방의 자원, 기술, 지혜의 공동활용」을 제기하여 남북간의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현실적이고도 적극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현실은 대외부채의 지불연기로 심각한 외화부족을 겪는 가운데 군수산업치중의 불균형적인 구조적 모순으로 빚어진 낙후된 경제의 건설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으로써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이 자원과 기술, 지혜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낙후된 기술, 부족한 자본, 기타 모든 경제적 취약점으로 경제적 곤궁에서 허덕이는 북한동포들을 구하는 인도적 조치로 존중될 수 있으려니와 더 나아가서 남북간의 동질성회복과 궁극적 통일에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와같은 서울측의 현실적 제의를 여전히 묵살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73년 8월 28일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의 일방적인 거부성명으로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후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서울측의 노력으로 1975년 3월까지 10차례의 부위원장회의가 그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이 역시 이렇다할 명백한 이유없는 평양측의 불응으로 중단되고 말았고 급기야는 1976년 8월 30일 평양측은 유일한 남북연락선인 직통전화마저 단절시키고 말았다.

서울측은 1975년 3월 14일 조절위원회 제10차 부위원장회의를 끝으로 조절위원회의 문이 닫힌 후 지금까지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두 20여차례나 대화재개를 촉구해 왔으나 번번히 거부되었다.

북한측은 대한민국의 대화재개요구에 대해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철폐등 이른바 선행요건을 구실로 「전쟁준비책동」이나 「대화의 반민족적 목적 이용」 운운하는등 황당무계한 생트집을 하면서 「대민족회의」나 「정치협상회의」, 「고려연방제」 등을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이 적십자회담을 통해 노부모 상봉, 서신교환등 손쉽고 실현가능성 있는 비정치적 당면 문제부터 풀어나가자는 방침을 굳히고 우선 공존을 위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불가침협정체결 촉구등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북한측은 이를 외면하고 적화통일의 음모만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조절위원회 서울측의 대화재개촉구 성명에 대한 주요일간의 사실을 전재한다> -편집자 주-

남북대화 즉각 재개 옹하라

- 「자원·기술·지혜함께 활용」 제의 획기적이다-

남북조절위 민관식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는 3일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평화문제를 비롯한 경제·사회·문화·체육 교류 등 당면문제들을 토의,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무조건 조속히 재개할 것을 평양측에 제의했다.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직통전화를 즉각 개통시키고 곧 부위원장회의를 소집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남북조절위 서울측의 이번 제의는 우선 그것이 올해들어 최초로 평양측을 향해 남북조절위원회를 정상화하도록 공식적으로 촉구한 내용이라는 점에는 큰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위원장대리도 그 성명에서 지적했듯이 그동안 우리쪽은 오랜기간 중단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대화를 하루속히 정상화할 것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평양측이 호응하기를 거듭 촉구해 왔다.

그러나 평양측은 지난 1973년 터무니 없는 이른바 8·28성명을 발표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시킨 이후 5년째에 접어든 지금까지 우리측의 그와 같은 대화정상화 촉구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1976년의 8·18도끼 살인만행직후 남북 직통전화마저 일방적으로 끊어버린채 갖가지 도전행위를 일삼으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만약 평양측이 남북대화를 중단시키지 않고 우리와 함께 민족적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을 계속 했더라면 지금과는 남북관계가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이 올해에는 이땅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발전을 위한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여 대화에 호응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

평양측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남북문제는 대화의 길밖에 달리 해결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평화지향적인 노력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코자 한다.

그런데 우리측의 이번 성명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대화를 통한 협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 위원장대리는 그 성명을 통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과 지혜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무궁한 민족번영의 앞날을 기약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 평양측의 그 어떤 대화기피 핑계도 성립될 수 없다는 뚜렷한 명분일뿐더러 확고부동한 평화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작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식량원조를 제의한적도 있었지만, 실제 이번 협력제의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동포들을 도우려는 동족끼리의 상호정신발로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평양측은 부질없는 옹고집만 부리지 말고 우리의 선의의 이 제의를 받아들여 주민들의 생활을 보살피야 한다고 촉구한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바로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으로서 남북은 당초 대화를 시작했을 때 쌍방이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민족의 명운을 드높일 것을 약속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평양측은 서명의 잉크도 채 마르기전부터 7·4성명을 헌신짝 같이 짓밟기 시작하여 협력하기는 커녕 온갖 도발과 모략을 일삼아 민족의 체면을 손상시켜 왔다.

평양측이 민족의 염원을 외면하고 대화를 기피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는 물론 불문가지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남북대화조차 적화통일의 전략전술로 악용하기 위해 호응하는 체했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내부적인 갖가지 취약점이 드러나는등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방적으로 대화의 통로를 끊어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무력수단으로 북한이 소위 적화통일의 야욕을 채울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간지 오래다.

북한은 더 이상 반민족적 배신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엄숙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한번 경고해 둔다.

-경향신문(1978. 3. 4)-

### 북한은 남북대화에 응하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 민관식씨는 3일 방송을 통하여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조절위의 무조건 재개를 평양측에 촉구하였다.

민위원장대리의 대북성명은 남북의 자원과 기술과 지혜를 함께 활용하자고 제의하고 구체적으로 2개항을 제안했는데 하나는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평화문제를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교류등 당면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남북조절위를 무조건 조속히 재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절위의 재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직통전화를 즉각 개통시키고 곧 부위원장회의를 소집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조절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지도 5년이 되었다. 남북조절위는 1973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회의를 고비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졌다가 그해 8월 28일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의 일방적 성명으로 지금까지 중단되고 말았다. 김의 주장은 김대중씨 사건을 구실삼아 이후락공동위원장과는 더 이상 남북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생트집이었다.

남북대화에 김씨사건을 관련시킨것도 앞뒤가 맞지않는 생떼였지마는 그후 우리측 노력으로 조절

위의 재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부위원장회의가 그해 말에 2차에 걸쳐 열렸으나 북한측은 계속 우리측의 6·23평화통일선언의 취소와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자 석방 및 정당, 사회단체대표로 조절위를 개편하자는 엉뚱한 주장을 내세워 조절위재개를 거부한채 오늘에 이르렀다.

북한은 그후 현재까지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대화의 중단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남북한 군축소 회담개최나 남북정치협상이니 하는 되지도 않을 선전만 일삼아 왔다. 가소로운 것은 북한이 남북 정치회담을 남북의 제정당, 사회단체간에 하자고 말하고 남북정치협상문제는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국민들의 「반정부투쟁」 여하에 달렸다고 선동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이간시키려는 잠꼬대 같은 책동을 벌이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남북간에 대화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데 불과하다. 북한이 이같은 정책을 현재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카아터」 행정부가 혹시라도 저들과 단독으로 접촉해 줄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카아터」 행정부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어떤 형태의 대화도 북한측과 하지 않겠다고 누차 언명했다. 북한 김일성은 아마 현재도 제삼국을 통하여 「워싱턴」에 추파를 보내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런 헛된 망상은 하루속히 버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남북한관계는 언젠가는 대화재개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한 점진적이고 평화적 통일의 길을 수락하는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경우일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월남화를 노려 월맹이 과거에 밟은 방법을 따르려 하고 있으나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 강력한 공업사회로 성장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그런 망상을 일찍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주민들을 덜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아랍」과 「이스라엘」 같이 서로 원수처럼 대립된 두 민족이 평화를 찾기 위해 대화를 하고 있는 마당에 같은 민족인 남북한끼리 대화가 안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민족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현실을 바로 보기를 촉구해 둔다.

-동아일보(1978. 3. 4)-

### 남북한 공존과 협력의 광장

-평양측은 현실을 더 이상 외면말라-

남북조절위 민관식 서울측공동위원장대리는 3일 남북대화의 재개에 평양측이 조건없이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북대화가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그리고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5년가까이나 중단되고 있을까. 우리는 대화가 중단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기에 앞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남북한관계의 성격이다. 남북한은 사상과 이념 및 체제가 상극적으로 대

립되고 있어 이러한 관계는 서로의 통일가치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고, 어느쪽의 주도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를 서로가 사활의 문제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를 에워싼 강대국들 권력정치의 역학관계는 우리나라 통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타율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바로 이같은 주객관적 요인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며 7·4남북공동성명과 그에 따른 남북대화는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재인식케 했다고 하겠다.

요컨대 남북관계의 성격으로 미루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협상에 의한 통일이란 가까운 시일안에 불가능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다면 좋은 싫든 평화적 공존관계를 서로가 다같이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민족이질화의 극복이라든가 또는 가치관의 조화를 시도하는 등의 노력으로 통일문제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불가침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제의와 또한 남북한의 동시「유엔」가입 및 남북한에 대한 서방 공산양측의 교차승인안등은 남북한관계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데서 나온 발상인 것이다.

한편 남북한간의 평화적 공존은 서로의 협력이 그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협력이 있어야 남북한관계가 바람직하게 개선되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적 공존은 평화통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한간에는 평화적 공존가운데서도 통일문제의 주도권을 에워싼 경쟁은 불가피할 것인만큼 그 협력은 국제관계의 선린과는 달리 특수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어느 한쪽도 정치외적 수단 즉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통일을 꾀하지 않게 된다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광장은 좁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어느 한쪽의 이익이 곧 다른 한쪽의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평화적 공존이 부인되고 있는 가운데서의 극단적 대결의식이 빚어내는 사고방식이다. 서로가 서로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 평화적 관계에서는 서로가 다같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의 분야는 얼마든지 찾아낼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관계가 그 본보기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부터라도 남북한간에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예컨대 국제시세가 폭락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수지에 중압을 가하고 있는 그들의 광물자원을 우리가 사줄 수 있고, 대신 북한측이 필요한 자본재등을 우리로부터 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남북조절위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가 이번 성명에서 남북대화를 하루 빨리 재개하여 남북한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과 지혜를 함께 활용하자고 평양측에 촉구한 것은 남북한관계의 현실적 요청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설득력을 가진 것이다. 평양측이 적화통일과 같은 망상만 버린다면 이같은 우리측의 제의에 그들이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신문(1978. 3. 4)-

#### 남·북의 교류와 협력

—북한의 성실한 반응을 촉구한다—

민관식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는 3일 상오 KBS방송망을 통해 남북간의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 문제 등 당면문제를 토의·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어 온 남북조절위를 무조건 조속히 재개할 것과 남북직통전화를 즉각 개통시키고 곧 부위원장회의를 소집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 위원장대리는 또 남북이 상호 사회를 개방하여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제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공통점을 찾아 교류와 협력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및 기술과 지혜를 함께 활용, 무궁한 민족번영의 앞날을 기약하는데 이바지 함으로써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대리의 이러한 성명은 그동안 남·북한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이라는 우리정부의 현실적 제의에 한걸음 더 나아가 남·북한상호간의 실리추구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의로 평가해 마땅하다. 특히 남·북한 상호간의 자원과 기술의 활용이라는 실리를 전제로 남북조절위의 재개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제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리라 여겨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고 남북 사이의 경제력 격차면에서도 한국은 북한을 3배 이상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북한의 낙후된 기술, 부족한 자본 그 밖의 모든 경제적 취약점으로 미루어볼때 우리의 발전된 기술과 두뇌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능히 경제적으로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길이 없지도 않을 것이며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면 북한동포들을 경제적 곤궁에서 구출하는 인도적 조치로 존중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갖고 있는 자원을 우리가 공동으로 활용한다면 비싼 외화를 들여 외국에서 수입해 오지 않고도 유용하게 쓸 수 있어 남·북한 모두 득이 될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경제, 사회, 문화, 체육교류 등 손쉽고 실현가능성 있는 비정치적 당면문제들을 북한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길만이 북한이 살아남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상호이익과 실리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타당한 이 제의마저 거부하고 계속 남북분단의 영구화, 전쟁준비책동 이른바 대민족회의니 정치협상회의니 반공법 철폐등만 고집한다는 것은 아예 대화를 앞장서는 생트집에 불과할 뿐이다.

남·북이 대화를 통해 민족의 문제를 협의하자는 기본적인 자세에서부터 가장 실현가능한 체육, 문화, 경제교류가 트인다면 폭넓은 상호이해와 협력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바라는 「선평화·후통일」의 분위기도 성숙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북한당국은 이번이야말로 거부할 명분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우리측 제의를 조건없이 즉각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직통전화의 개통, 우선 부위원장끼리라도 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있는 제의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거듭 북한의 성실한 반응 있기를 촉구한다.

—신아일보(1978. 3. 4)—

## 교류·협력의 새 시대 열자

### —조절위 서울측 성명에 평양측은 답하라—

평양측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는 어제 남북조절위 민관식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가 조절위 본회의의 무조건 재개와 그를 협의키 위한 직통전화의 즉각 개통 및 부위원장회의 소집을 「김영주」평양측 위원장에게 촉구한 성명을 대하면서 먼저 이런 딱한 자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근 5년간 그들의 회답은 시종 「노」였기 때문이다. 대화를 위한 평양측의 조그마한 성실성은 이른바 김의 8·28성명 이후 계속 상실돼왔다. 작년만해도 3차례씩이나 서울측이 공동위원장성명으로 조절위와 직통전화 기능의 정상화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식 회답성명조차 발표 않은채 그저 방송을 통한 간접거부반응만 간신히 보였었다.

말하자면 정면응답이나 제의수락을 마다는 것으로서 이미 주형화한 것이 평양측이라하여 잘못은 아니다. 못난이라고나 할까, 영원한 대면도피자라고나 할까.

민 위원장대리는 그들을 다시한번 부른 것이다. 서울측의 험다운 아량이요 자세다. 성명내용 또한 단지 회의나 전화의 복구만을 바란게 아니었다.

그 회의를 다시 열어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문제를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교류 등을 토의,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또 민족적 입장에서 『쌍방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술·지혜를 함께 활용』하여 무궁한 번영의 앞날을 기약하자는 희망도 곁들여졌다.

지난날의 회의속개 제안이라해서 구체적인 토의안건 같은 것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불가침협정 체결절차문제」를 협의하자거나 혹은 북한이 선포한 이른바 「2백해리 경제수역」 설정문제를 논의하자는 주문도 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성명의 근본은 정치문제보다 오히려 「교류와 협력의 새시대」를 남북동족간에 개척할 것을 조명하고 있는데서 차원높은 한 전환성이 있을 법하다. 그 교류관계가 상호의 개방된 사회까지 확대되면 동질성의 회복→평화통일의 기반구현으로 승화될 것은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여기 이번 성명이 가지는 바 뜻의 다채로움이 있어 보인다. 대화와 7·4정신 그리고 그간 합의 사항에 대한 서울측의 변함없는 성실성이 잘 돋보일 뿐 아니라 남북민족 사이의 공동실리와 복지를 바라보는 새 장질이 선명해진 것이다.

이는 말할것도 없이 우리 이상의 한단계 발전임과 동시에 국력의 뒷받침과 자신감의 약동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극심한 곤경속을 헤매는 북한측에 우리 경제력, 기술력, 두뇌의 지원이 있으면 필시 그들의 소생은 빨라질 것이다. 남북간의 경제자원이 서로 교류될 경우 민족의 번영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사회, 문화, 체육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한데 이제껏 평양집단은 이를 옹고집처럼 거절해 왔다. 그들의 일관된 대결·대적책략으로 인하여 우리의 민족적 에너지와 부가 얼마나 밖으로 소진되어 갔는지 평양 우두머리들은 뼈아픈 반성을 꼭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뿐 아니다. 벌써부터 대화의 탁자로 나와서 그런 공통이점을 찾으면서 남북협력관계를 설계했다면 5천만은 필경 지금보다 훨씬 운택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성명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땅 한반도에는 오늘날 『이미 평화가 정착되고』 참다운 『교류, 협력의 시대』를 확실히 구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제의 「3·3성명」은 1978년의 첫 대화 체근이자 민족전쟁의 푸른 설계를 엄숙히 한 번 더 권고한 것이다. 평양측은 못된 거부증세로 경화됨이 없이 이 신선한 제의앞에 고개를 숙일줄 알아야 할 일이다.

—한국일보(1978. 3. 4)—

#### 민족공동이익의 추구

—조절위, 대화촉구의 절실한 의미—

#### 1

민관식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는 3일 방송을 통해, 「대화장막이 아니라 대화장안에서 남북간의 제반 현안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의해결」하기 위해,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조절위원회를 재개할 것을 평양측에 촉구했다.

민 위원장대리는 이 촉구에서 구체적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평화문제를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교류등 당면문제들을 토의해결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무조건 조속히 재개하고, 이에 앞서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직통전화를 즉각 개통시키고, 곧 부위원장회의를 소집하는데 호응하라고 평양측에 절실하게 요구했다.

아는 바와 같이 남북조절위의 기능은, 대화 1년만인 1973년 8월 28일,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의 일방적인 거부성명으로 중단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후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우리측 노력으로 1975년 3월까지, 판문점에서 10차의 부위원장회의가 열렸으나, 이역시 이렇다할 명백한 이유의 제시없는 평양측의 불응으로 중단되고 말았고,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도발 사건 직후에는, 평양측에 의해 갑자기 남북직통전화마저 끊김으로써 대화단절 5년째에 이르렀다.

대화 및 통신 접촉까지 끊어버린 평양측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의 진전은 결코 그들의 속셈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을 것이며, 그들이 진정으로 5천만 단일민족의 공동의 번영을 원한다면, 민 위원장대리가 지적했듯이 남북간의 문제는 대화장 밖에서의 물리적 힘으로써가 아니라 반드시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으로 모색되고 해결돼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조절위 발족을 가능케한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의 합의정신대로, 남북이 약속과 신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첫째 관건이다. 공동성명에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며」 이와같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측은 오늘까지 「사상—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 민족의 접근을 위해 어떤 건설적인 제안이며 태도를 보여 왔던가. 대화중단의 어불성설의 이유에서부터 대화 재개의 조건에 이르기까지 남한측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단 한가지라도 있었던가. 7·4공동성명의 서명과 함께 땅굴을 파기 시작한 그들의 양태를 들추지 않는다해도, 민족적 접근과 단합을 거부하는, 따라서 대화를 거부하는, 속셈을 따로 가진 평양측의 강변과 억지와 독선은 이제 너무나도 명명백백해져 버렸다.

민 위원장대리는 대화재개 촉구에서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과 지혜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무궁한 민족번영의 앞날을 기약」 하자고 강조하고 다짐하고 있다. 이 다짐 속에 7·4성명에 위배되는 어떠한 요소나 조항이 들어 있는가.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하지 말라는 요구가 들어있는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는가. 거기에는 글자 그대로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해서 민족의 공동이익을 추구하자는 절실한 민족적 호소가 담겨져 있을 뿐이다.

가령 지금 남북간에 강요되고 있는 엄청난 군사비지출이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해 어떠한 부담이 되고 있는가. 그 자원과 정력을 민족공동의 경제발전을 위해 돌리도록 하자는 것이 한결같은 민족적 기대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6·25의 망상」이 민족적 위기의식에서 깨끗이 지워져야 하고, 그것은 당연히 평양측에 의해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민족간에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에의 접근을 위해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대화를 거부함은 그와 같은 민족적 기대를 거부하는 「망상」을 고집하겠다는 입증이 될 따름이다. 역사의 진운은, 그러나 그 「망상」의 실현을 결코 허용치 않은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조선일보(1978. 3. 5)—

### 남북대화 중단 5년

평양측이 일방적으로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한지도 벌써 5년이 가까와 오고 있다. 그 동안의 과정은 계속적인 대화 「채널」의 축소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10차에 걸쳐 명백이나마 유지했던 남북조절위 부위원장회의도 이미 만 3년간 중단상태에 있으며 남북간의 직통전화도 두절된지도 1년반이 되었다.

이제 남은 남북간의 대화 「채널」은 어쩌다 한 번씩 열리는 남북적십자 실무회의가 있을 뿐이

다.

남북한의 분위기도 북측의 계속되는 호전적인 전쟁정책으로 인해 남북대화 이전의 경화된 상태로 되돌아 간지 이미 오래다.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는 남북대화를 운위한다는것 조차가 오히려 감상적으로 들릴 정도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우리민족이 절멸의 참화없이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선 비록 지금은 비현실적으로 보일망정 대화 이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대화를 외면하더라도 우리는 대화에 대한 기대를 결코 저버릴 수 없다.

조절위의 무조건 재개와 남북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구한 지난 3일의 민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의 성명은 이러한 기대의 표현인 것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부각되었던 남북한간의 공개된 중요 견해차이의 하나는 「일거의 해결」과 「점진적인 해결」의 대립이었다.

북측은 그동안 남북한간에 심화되어 온 차이점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정치·군사적인 문제의 우선해결을 고집했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우선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통일을 이룩해 나가자고 설득했다.

이러한 우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거부하고 남북대화를 중단시켜 결국 얻은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 결과는 남북관계를 대화 이전의 대결상태로 되돌려 우리민족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전쟁준비에 소모시켰을 뿐이다.

만일 저들이 그때 남북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교류와 협력에 동참했다라면 지금쯤 남북간에는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의 시대가 열렸을 지도 모른다.

결국 남북대화의 중단은 민족 「에너지」의 소모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지체만을 초래하고 말았다.

대화의 중단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민족의 이질화와 상호 불신을 심화시켜 평화통일의 길은 누적적으로 멀어지고 말 것이다.

남북한의 대화를 재개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하게되면 자체만으로도 상호간에 큰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대치상태에서 오는 상호간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민족 「에너지」를 건설과 번영을 위해

쓸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남북 대화와 교류의 이점을 헤아리자면 끝이 없다.

이러한 민족번영의 길을 무작정 외면하다간 현세대가 역사의 지탄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북한측이 미망에서 깨어나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한 민족번영의 길로 되돌아 오기를 다시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소이다.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비관적이라 하더라도 결코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끈기있게 기다릴 것이다.

—중앙일보(1978. 3. 6)—

<남북적십자회담>

제25차 실무회의경과

『인도주의회담이야말로 평화통일의 시금석』 한적, 본회담 조속재개를 재촉구

<제25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가 1977년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남북간의 인도주의회담이야말로 평화통일의 시금석이며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관건임을 강조하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7·4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로써 조성된 남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대한적십자사의 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한번 명백히 밝혔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① 제8차 본회담을 조속한 시일내에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 ② 「노부모 사업」, 「성묘방문단의 상호교류」, 「가족사진교환」 등의 시범적 사업부터 우선 착수하여 인도적 회담의 의제토의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 ③ 남북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 할 것 등을 북한적십자회측에 다시 촉구했다.

이에 대하여 북한적십자회 대표단은 본회담 개최, 본회담 의제토의 및 남북직통전화 재개문제 등에 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주한미군 철수, 한일간의 제협정 폐기, 반국가사범들의 무조건 석방, 자주국방정책 강화 중지 및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취소등 종전의 정치적 비방, 중상만을 거듭하였다.

쌍방은 제26차 실무회의를 1978년 3월 20일에 개최키로 하였다. 다음은 이날 제25차 실무회의에서 있었던 대한적십자사 김연주 교체수석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오늘로서 우리는 제25차 실무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만 해도 우리들은 이미 네차례의 회의를 거듭하였건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또 한 해를 보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들은 서로가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남북의 5천만 온 겨레는 하루속히 이 회담이 성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것을 바라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1년 8월에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은 마련된 의제 제1항의 토의조차 못하고 있으며 서울과 평양 사이를 일곱번이나 내왕했던 본회담마저 중단된채 판문점의 이 가건물 안에서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흩어져 생사조차 모르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고 서로

만나게 하며 함께 살게 해주는 것은 사상이나 체제나 정치적 조건 이전의 인간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대한적십자사는 남북간의 두터운 장벽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이산가족찾기사업을 제의한 것이었으며 귀 적십자회 또한 이에 호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담이 시작된 이래 우리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적십자 인도주의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정성과 노력은 전 회담기간을 통해서 뿐 아니라 금년에 열린 네번의 실무회의 기록만 보아도 역연합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올해 첫 회의인 제21차 실무회의에서 제8차 본회담은 상호 합의에 따라 당연히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하나 귀측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판문점이나 기타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또한 의제 토의에 있어서도 합의된 다섯가지 의제중 당연히 제1항부터 토의해 나가야겠지만 의제의 실질적 토의에 응해 나서지 않고 있는 귀측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가지 시범적 사업부터 먼저 착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노부모사업, 남북성묘방문단 상호교류, 가족사진 교환 등은 모두 이산가족들이 한결같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시급한 문제들이며 귀측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이 사업들은 언제나 착수할 수 있는 실천용이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이와같은 합리적인 제안들은 지난 네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그 중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남북의 이산가족들과 온 겨레에게는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977년의 마지막 달에 열린 오늘의 실무회의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어떻게 하면 이 회담을 바로 잡아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기쁨을 안겨주고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전만을 거둬두고 있는 이 적십자회담을 바로 잡기 위하여 우리 서로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투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같은 적십자인으로서 이 회담장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어느 일방의 이념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회담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회담과정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과연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투철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해결해야 할 이산가족문제는 제쳐 놓고 인도주의회담에 정치, 군사문제들을 개입시킴으로써

회담을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았는가, 회담상대방을 비방, 중상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회담의 분위기를 악화시키지는 않았는가, 법률적 사회적 전제조건들을 내세워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지는 않았는가 등등입니다.

그동안 귀측은 말로는 『인도주의회담 앞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적십자회담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여러번 되풀이해 왔으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도주의회담 앞에 계속 난관만을 더 조성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간 일은 덮어 두더라도 귀측은 최근에 와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가 해결해야 할 본연의 사명 즉 「본회담 재개문제」와 「본회담 의제의 예비적 토의」에 대해서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신성한 회담장에서 대화상대방을 공공연하게 중상, 비방하는 정치 선전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6·23선언 및 불가침조약 철회, 미군철수 및 한·일대륙붕협정 폐기, 무력증강 및 무기반입중지등과 같은 정치, 외교, 군사문제들을 들고 나와 그것을 마치도 적십자회담에서의 「제안」인양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귀측의 불성실한 회담자세에 대해 과거 여러차례에 걸쳐 시정하도록 주의를 환기한 바 있습니다.

귀측이 만약 정치, 외교, 군사, 사회 등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광범위한 문제들을 제안하고 토의하기를 원한다면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여야 하며 정상화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얼마든지 정치, 외교, 군사문제들을 거론하며 토론하고 제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마땅히 정상화해야 할 남북조절위는 정상화하지 않고 지난 1975년 이래 2년이 넘도록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개최를 무기연기상태로 지속해 오고 있으며 그 반면 엉뚱하게도 적십자 회담장에서 정치, 외교, 군사문제들을 거론함으로써 인도주의회담마저 그 진전을 가로막는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30여년간 각기 다른 이념과 체제속에 살아온 남북이 인도주의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장에서 서로가 다른 이념과 체제로 인하여 비롯된 정치, 군사, 사회문제들을 거론한다면 인도주의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찾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남북간의 긴장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적십자정신과 동포애로써 우선 인도적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간다면 남북간에는 민족의 동질성이 되살아 나고 불신과 오해를 신뢰와 이해로 바꾸어 긴장과 대립을 해소하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정치, 군사, 사회 등의 문제도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주 앉은 이 회담이 적십자 인도주의 회담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임무가 1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풀어주는 데 있는만큼 이 회담장에는 이산가족 찾기문제 이외의 잡다한 문제를 끌어 들이지 말아야 하며 이제부터라도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투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북한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우리의 인도주의 회답이야말로 평화통일의 시금석이며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관건입니다.

우리 남북적십자인들이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7·4남북공동성명정신에 따라 이 회답을 타결할때 그 동안에 누적된 남북간의 불신과 오해는 사라지고 화목과 신뢰를 찾아 복된 민족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적십자회답이 계속 교착되고 신성한 인도적 문제의 토의에서 비방중상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이 회답은 남북간의 거리를 좁히자는 것이 아니라 민족분열을 조장하게 될 뿐입니다.

대화의 단절은 불신을 낳고 불신으로 인하여 긴장이 고조되면 결국 충돌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의 남북관계는 남북조절위원회가 이유없이 중단되고 인도적 회답마저 교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긴장과 대립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경제건설에 쓰여야 할 방대한 국력이 비생산적인 대결에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개발과 창조와 건설을 위하여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하물며 수천년간을 적대관계속에 살아온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조차 대화를 통한 공존이 논의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한 강토안에 사는 같은 겨레인 우리들 만이 계속 대결의 장벽을 쌓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한반도에 대한 한결같은 국제여론은 하루속히 긴장을 완화하여 남북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통일을 모색하라는 것이며 이 여론에는 비동맹국가들은 물론 공산국가들조차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우리나라와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연간 수만톤의 우편물이 교환되고 있고 학술, 체육, 문화등 관계인사의 왕래는 물론 근자에는 소련,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우리나라 정부인사가 입국하는 등 교류의 문은 확대되고 있는 것이며 그 폭은 앞으로 더욱 넓혀질 것입니다.

또한 귀측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모국을 방문하여 그리운 부모, 형제, 자매들과 재회의 기쁨을 누린 바 있으며 이들 모국방문 동포들의 수는 이미 1만5천명을 넘었으며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조류에 역행하여 민족내부문제를 외부로 끌고 나가는 일은 부질없는 낭비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모독하는 자해행위일 뿐입니다.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7·4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고 이로써 조성된 남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시종일관한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지나간 회담의 전기간을 통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오직 인내와 성실로써 회담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이상과 같은 회담자세에 입각하여 다시한번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귀측의 수락이 있기를 재촉구코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8차 본회담을 조속한 시일내에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제의합니다.

귀측이 제8차 본회담의 서울 개최라는 「합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현상황에서는 이를 판문점에서 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둘째, 시급하고 실천이 용이한 인도적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할 것을 제의합니다.

귀측이 합의된 의제의 실질적 토의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노부모사업, 성묘방문단의 상호교류, 가족사진교환 등의 시범적 사업부터 우선 착수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의 기대에 보답하고 의제토의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셋째, 남북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작년 8월이후 1년이 넘도록 귀측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북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처사는 대화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담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귀측이 진정 인도주의회담을 정상화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남북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서부터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올해의 마지막 달에 열린 오늘 회의에서 귀측이 우리의 제안과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는 바이며 아울러 밝아오는 새해 1978년에는 본회담이 재개되고 의제 토의에 결실을 맺음으로써 남북의 이산가족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제3부 그밖의 남북관계소식

#### 1. 조총련계 재일동포, 구정맞아 모국방문

조총련의 끈질긴 갖은 협박과 소위 「활동가 학습회」라는 것을 지부단위로 열게 하는 등 광분한 모국방문저지, 방해공작을 뿌리치고 금년에도 구정(2월 4일)을 맞아 4백명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 꿈속에 그리던 조국을 찾아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20~40년만에 망향의 한을 풀었다.

이번 구정성묘단원들은 그동안 모국을 방문했던 동포들로부터 조국의 발전된 참 모습을 전해 듣고 자발적으로 모국방문을 결심한 동경, 횡빈, 관동, 대판, 북강, 명고옥지역 출신의 조총련계 상공인과 조선인고교 및 조선대학 출신인 30대의 젊은 2세들이었다.

지난 1975년에 재일동포 추석성묘단 귀국으로 시작된 재일동포의 모국방문자수는 이번 구정성묘단 일행 4백명을 합하여 1만6천명에 달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미 모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동포들로부터 직접 이 땅의 자랑스런 발전상을 전해 듣고 스스로 모국방문길에 오른 2세 동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같은 사실은 조총련계 동포방문사업이 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 확대되었음을 여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 2. 북한, 적화망상 선전을 재연

『통일의 필수선행 요건은 평화정착』  
정부, 북한의 「비망록」 내용을 반박

<북한은 지난 2월 1일 그들 외교부의 이름으로 돌연 「비망록」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평화 외교정책을 한반도의 분단 영구화라고 왜곡선전하며 국제여론을 오도하려는 상투적인 위장평화 선전책동을 재연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1978년 2월 7일 외무부의 유엔관계 당무자를 통하여 북한이 유엔동시가입 및 남북한교차승인, 불가침협정체결 등 한국의 제의를 분단의 영구화기도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표본이며 북한정책의 표리부동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실례』라고 반박하고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과도조치로서 남북한이 다같이 또는 가입을 원하는 한쪽만이라도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선행하는 필수적 요건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을 분단 기도라고 비난하는 것은 평화정착에 대한 그들의 무성의를 드러내고 적화통일 망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1978년 2월 1일자 북한 「비망록」에 대한 외무부의 유엔관계 당국자의 반박논평 내용이다>-편집자 주

북한은 1978년 2월 1일 소위 그들의 비망록을 발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외교정책을 한반도의 분단 영구화라고 또 다시 왜곡선전하면서 국제여론을 오도하려는 책동을 되풀이 하였다.

신년초부터 북한이 진부한 주장을 내세워 새삼스럽게 떠들어대는 이유는 첫째, 최근 2~3년간 그들의 국내 경제파탄으로 누적된 외채, 세계도처에서의 외교관 밀수사건 추태와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구축한 남침용 지하땅굴 탄로, 관문점에서의 비무장 국연군장교 도끼살해만행, 남북대화의 재개거부 등으로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경향이 점고되는 것을 은폐하려는데 저의가 있고, 둘째로는 우리의 평화실리외교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많은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대한 초조감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회고할 때 북한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첫째로, 통일자주정부 수립을 목적으로한 1947년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남북총선거를 반대하고 소위 평양공산정권을 수립하여 오늘날 분단의 계기를 만든 것도 바로 북한이고, 둘째, 1950년에 표면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정치협상을 제의하면서 실제로는 6·25 무력남침으로 3년간의 동족상쟁을 야기시켜 국연군의 한국과견을 자초한 것도 바로 북한이었고, 세째, 국제긴장완화의 대국적 추세에 따라 남북대화를 시작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여 19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1973년 8월 28일 하등의 이유도 없이 일방적인 대화중단을 선언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 것도 북한이며, 네째, 구호로 남북통일을 외치면서 유엔전문기구를 포함한 각종 국제기구에 적극 가입함으로써 2개의 한국을 조성하여 실제로는 조국분단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구한 것도 북한이며, 다섯째로, 특히 1973년 이후 대한민국이 국교를 이미 수립한 국가와 별도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그들 자신의 독

자적인 존재를 내세움으로서 통일을 말로만 외치고 그 결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남북통일의 조기 실현에 대한 회의를 가중시킨 것도 다름아닌 북한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북한은 1949년, 1951년 양차에 걸쳐 그와 동맹관계에 있는 소련을 통해서 독자적 유엔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바 한반도가 분단된지 불과 4~5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당시에는 남북사회의 이질적 요소가 현재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은 그들이 그때부터 한반도 분단정책을 추구하여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이 2월 1일자 「비망록」을 통하여 우리의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에서 제창한 현실적인 정책을 분단영구화 기도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가 당착의 표본이고 북한정책의 표리부동성을 여실히 들어내는 실례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선행하는 필수적 요건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다. 이러한 평화정착을 실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우리가 제의한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북한이 한반도 분단 기도라고 비난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그들의 무성의를 노정하고 적화통일의 망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7·4공동성명에 따라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계속되었다면 우리가 희망하는대로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분위기와 여건조성이 그간 상당히 진전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끊임없는 대화재개 제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남북한의 분단이 독일의 경우와는 그 배경은 비록 다르다 하지만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정세하에서는 남북한의 유엔가입 필요성과 합리성이 가일층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이다.

우리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이러한 변화를 예견한 것이다.

평화적인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과도조치로서 남북한이 다같이 또는 가입을 원하는 한쪽만이라도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149개 타회원과 함께 세계평화와 인류복지향상을 위하여 공헌하는 길이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금반 북한이 발표한 소위 「비망록」은 한국문제해결에 하등의 현실적 기여를 할만한 내용이 없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다음은 북한측이 발표한 「비망록」의 위장평화선전 내용과 그 저의를 규탄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북한측의 성의를 촉구한 주요 일간신문의 사설을 전재한다>-편집자 주

#### 북한의 적화망상

—이른바 「비망록」 발표의 저의를 규탄한다—

북한이 최근 우리의 평화외교 정책을 왜곡선전하고 국제여론을 오도하려고 획책하는 일련의 공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난 1일 돌연 비망록이란 것을 발표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안과 미·일·소·중공 등 주변 4개국에 의한 교차승인문제를 『민족분단을 영구화하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북한은 소·중공 등을 염두에 두고 어떤 나라이든 한국과 관계를 개선해서는 안된다는 경고까지 곁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억지 주장은 북한이 해마다 유엔총회와 비동맹회의를 의식하고 상투적으로 떠벌리는 진부한 대외위장선전 공세의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당선전기관이나 방송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발표 형식의 비망록을 통해 공식 태도를 밝혔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안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부인하는 긴장된 상황에서 통일이 달성될때까지의 과도적 조치로 한반도에 우선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제의를 북한이 민족분열을 고정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평화정착에 뜻이 없다는 증거다.

조국통일이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 하더라도 무력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와 교류등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유엔동시가입이나 불가침협정체결 제의등은 매우 현실적이며 타당한 해결방안이 아닐 수 없다.

주변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문제 역시 남북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한 통일접근방안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합리적인 제의를 북한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북한의 대남적화전전략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한국내에 반정부 세력을 부식하고 국제적으로는 한국을 고립화시켜 유사시 한국에 대한 서방측의 지지를 철회 또는 약화시키는 전술로, 궁극적으로 무력과 폭력에 의해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으로는 혁명적 통일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제의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이나 6·23외교선언을 거부하며 터무니 없는 연방제등 구호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한 위장평화선전의 이면에는 북한만이 통일문제에 열의를 갖고 있고 마치 한국은 성의가 없는 것처럼 오도하기 위한 대외심리전의 흥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겠다.

북한이 우리의 평화외교정책을 민족분열을 영속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등 진부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평화외교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는데 대한 초조감 때문이며 지난 2, 3년간의 외교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6·23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으로 밝혀진 우리의 평화정책 제의는 국제적으로 널리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 북한 위장평화외교의 허구성은 점점 그 마각이 드러나 비동맹국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빈번한 대남 군사도발, 판문점에서의 비인도적 만행, 남북대화 거부등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큰 요인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혁명전략을 소·중공등 공산강국이 경쟁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련 고위사절단이 지난달 평양을 다녀간데 이어 중공은 6일 당기관지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통일정책을 비난하는 공식태도를 밝혔다. 이러한 중·소 양국의 태도는 한반도문제 해결을 더욱 지연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금후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함은 재언할 필요도 없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정책방안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통일은 무력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경향신문 (1978. 2. 8)—

#### 북한의 선전과 능동적 대처

외무부는 2월 7일 유우엔 관계당국자의 이름으로 발표한 북한의 소위 「비망록」에 대한 반박 논평을 통해 김일성집단의 표리부동성을 지적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거듭 촉구하였다.

북한외교부는 지난 2월 1일자로 발표한 소위 「비망록」에서 한·미·일 3국이 한반도분단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일·중·소 등 한반도주변 4개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 제안을 한반도의 분단을 합법화하려는 편법이라고 생떼를 썼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조금도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마는 보통 유우엔 총회를 앞두고 발표해오던 「비망록」이라는 것을 금년따라 이 시기에 발표한 데는 그들 나름대로 저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속셈은 「카아터」 미국 행정부의 주한 미지상군 철수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철군반대론을 의식하여 분단영구화 운운함으로써 철군지지 여론을 일으키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북한이 이 「비망록」에서 「카아터」 행정부를 지칭하여 동행정부 역시 한반도의 「영구분할」이라는 그동안의 미국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워싱턴」으로부터의 일부 보도가 「카아터」 행정부는 철군계획을 멀지 않아 『조용히 포기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듯이 당초의 「카아터」 행정부의 철군계획에 적지 않은 변동 내지 신축성이 예상되고 있는데 북한이 조바심을 품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철군의 보완책으로 한국군의 장비보강을 선행시키겠다는 미행정부의 의도가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자 「카아터」 대통령

의 철군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던 평양집단의 실망은 적지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돌연 「비망록」이라는 것을 발표한 또 다른 속셈은 철군계획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한·일협력강화, 일본내 보수진영에 의한 방위강화론 대두 및 한국의 비동맹외교강화 등에 당황하여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선전을 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소위 「비망록」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이른바 「고려연방공화국」과 같은 단일국호하의 「유우엔」가입이라는 술책이 국제사회에서 먹혀들어갈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처럼 유치하고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상식은 「유우엔」의 보편성의 원칙이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남북통일 때까지의 과도조치로서의 동시가입이며 동시가입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장애가 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과거 「유엔」에 나란히 의석을 갖고 있던 「이집트」와 「시리아」가 1958년부터 1961년 사이에 통합한 선례가 있는 것을 보아도 유우엔 의석과 통일문제는 관련이 없다.

도대체 민족보다는 소위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 단결을 부르짖어 온 공산주의자들이 민족통일 운운하는 것부터가 남한적화를 위한 하나의 외교적 전략전술임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우선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부터 해야할 것이다. 대화를 거부하고 「유엔」 동시가입도 반대하면서 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무력적화통일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정부가 때를 놓치지 않고 북한의 허위선전을 반박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나 한가지 유의할 것은 앞으로 보다 더 능동적인 대북한 외교공세를 벌여야 한다는 점이다. 피동적으로 북한을 반박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계속 내놓는 부단한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 선전에는 선전으로 대항하는 방법을 써야할 것이다.

—동아일보 (1978년 2월 8일)—

#### 남북한관계와 중·소

—돼지에 끌려 다니는 사자가 되지 않길—

지난 1일 북한은 때아니게 장문의 「정부비망록」을 발표했다. 그 요지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한에 대한 서방, 공산양측의 교차승인을 절대로 반대한다는 것이며 또한 여기서 분명히 중공과 소련을 의중에 두고 어떤 나라이든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이와같은 주장은 평화적 남북한관계의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한에 대한 교차승인안이 국제적으로 널리 긍정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위기의식을 감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남북한관계의 존재양식을 에워싸고 북한과 중·소간에 이견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 것이다.

중공과 소련은 화해하기 어려운 사상적 및 국가적 분쟁관계에 있고 그 이해관계가 국제관계에

반영되지 마련이지만 한반도문제에 관한한 남북한간에 전쟁이 재발되지 않고 평화적 남북한관계가 확보되기를 양국이 다같이 바라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과 각각 군맹관계에 있는 중·소가 미국과의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남침을 꿈꾸고 있는 김정일집단의 모험주의에 대해서 중·소가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다같이 견제하고 또 타일러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중·소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모두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김일성집단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관계에 대한 김일성집단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중·소는 그것이 그들의 정책과 어긋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막에서는 어떻게 공개적으로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채 덮어 놓고 옳다고 두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 북한의 「정부비망록」에 대해서도 중공과 소련은 각각 그것을 인용보도함으로써 지지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소련의 고위사절단이 평양을 다녀간 이후 중·소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북한의 이른바 통일제안을 지지한다고 되풀이해서 확인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중·소가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에워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제안에 대한 중·소의 지지는 그것이 그들의 정책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문제는 일단 덮어둔채 서로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 당기기 위해 선심공세를 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1973년 8월이후 중·소는 서로 한국과의 접촉을 금기사항으로 못박아 놓고 어느 한 쪽이 한국과 접촉하는 듯한 징후가 나타나기만 하면 다른 한쪽이 그것을 비난하곤 했던 것이다.

중·소양국은 앞산에 가려있는 뒷산을 미처 보지못한 나머지 한마리의 돼지에 몇마리의 사자들이 끌려 다녔다는 우화를 상기시키는 꼴이 되었다고도 느껴지는 것이다. 국토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평화적 남북한관계의 확립을 반대하는 북한의 통일제안이 남북한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막고 한반도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중·소라고 해서 모를리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중·소양국에 대하여 대북한 관계를 넓은 국제관계의 시야와 차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김일성집단의 처사에 대해서 비호하지 말고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고 권고해두고 싶은 것이다.

-서울신문(1978年 2月 6日)-



### 3. 남북한 이질화 「심포지움」 주제논문

<다음에 남북한의 이질화의 실상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모색을 위하여 국토통일원이 1977년 10월 18일 부터 2일간 개최한 「남북한 이질화 문제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평화통일의 내재적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각부문별 주제논문을 전재한다>

-편집자주-

● 전통과 정치체제  
-이질화의 정치적 측면-

차기벽  
<문박 · 성균관대학교 교수>

목 차

- I. 서언
- II. 이론적 틀
- III. 「모방」 기
- IV. 「독자적인 길 추구」 기
- V. 결언

I. 서언

요즈음 세삼 관심이 일기 시작하고 있는 남북이질화의 문제는 한반도를 에워싼 내외정세변동에 대한 새로운 자각에 기인한다. 원래 남북이질화문제의 제기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전제로 하거니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점차 외재적 요인보다 내재적 요인에 더 달리게 되고 있는 것 같다. 주변 4강은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려 들고 있는데 도리어 지난 30년간에 걸쳐서 각기의 세력기반을 굳혀 온 두개의 이질적인 「정치세력」이 한반도 안에서 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한반도의 재통일문제는 주변 4강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국제정치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두 이질세력간의 문제, 곧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날로 도를 더해 가고 있는 남북간의 이질화의 심화현상은 평화통일을 가로 막는 크나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이토록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남북이질화의 문제는 그러나 분단전의 한국사회, 현재의 남한사회 그리고 평화적으로 재통일된 조국상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여기서는 평화적으로 재통일된 조국상, 즉 국제적으로는 주변 4강과 비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국내적으로는 자유로운 복지사회를 이룩한 조국상을 머리에 두고서 남북이질화의 문제를 고찰하되, 전통에 대한 태도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누는 이론적 틀에 의거하여 남북의 두 정치체제를 「모방」의 단계와 「독자적인 길을 추구하는」 단계로 나누어서 검토하기로 한다. 그러면 전통에 대한 태도에 따른 이론적 틀이란 무엇인가 부터 제시하기로 하나, 전통의 문제는 역사재창조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이론적 틀을 제시할 때 역사재창조에 관해서도 부연해 두기로 한다.

II. 이론적 틀

민주주의적인 근대국가를 이룩하려 하건 공산주의적인 근대국가를 이룩하려 하건 간에 신생국가는 근대국가형성이라는 의미에서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신생국가의 근대화는 과거의 전통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에 따라 두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서 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근대화를 과거와의 단절로 보는 경우인데, 이는 그것이 서구화적인 근대화건 공산화적인 근대화건 간에 신생국가가 비판없이 외국의 발전모형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과거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는 외래적 요소와 토착적 요소의 종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모형을 창조해 내는 경우를 말한다.

성공할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 더 많을까?

Chester Bowles는 「발전을 위한 방법론」을 논한 끝에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깨끗이 정리된 어떠한 이념속에서 찾으려는 신생국가는 거의 실패하고 말것』이라고 말하고는 고전적인 자본주의나 정통적인 공산주의는 다같이 『복잡한 현세계와는 크게 거리가 먼』만큼 신생국가는 제각기 경험과 전통에 의거해서 국가발전이라는 거창한 과제를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려 받은 전통이나 놓여 있는 상황이 다른 이상 신생국가의 근대화는 단지 선진국가의 그것 뿐 아니라 다른 신생국가의 그것과도 형태나 진로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생국가는 제각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국의 전통에 의거해서 독자적인 근대화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며, 실제로 근자에는 주체성의 회복과 전통의 재발견을 위한 노력이 신생국가의 공통현상으로 되고 있다.

사실 남한과 북한도 각기의 근대화과정에 있어서 「전통과의 단절」=「모방」단계에서 「전통의 연속성 인정」=「독자적인 길 추구」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독자적인 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통의 재발견이 필요하고 전통을 재발견하려면 역사의 재창조가 요청된다.

우리는 흔히들 「현재는 과거의 소산」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거꾸로 「과거는 현재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확실히 과거는 현재속에 살아남아 의식·무의식 중에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나, 반면 우리는 현재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과거의 역사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과거에 투사하려 들며 앞으로 창조하려는 것을 지난날에서 발견하려 할 때 우리는 이를 「역사의 재창조」라 부른다. 역사의 재창조를 통해 발생한 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크게 전진시킨 사례를 많이 본다.

이 역사재창조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 다름아닌 전통의 문제이다. 전통은 과거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념과 관행을 말하는데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치나 관행은 그대로 보전되어야 하는가 수정되어야 하는가? 이 점에서 우리는 19세기의 중국과 명치시대의 일본과의 차이를 본다.

많은 중국지도자들은 예전의 관행에 어긋나는 혁신에 적대적이었는데 대하여 일본인들은 근대화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적합하도록 자기들의 과거를 재해석하려고 애썼다.

사실 일본근대화에 원동력을 제공한 천황제 국가체제의 정신적 토대인 「가축국가」관은 일본

고래의 전통에 의거하는 반면에 명치이후에 새로 발명되기도 한 것이다.

확실히 일본은 전통을 재창조함으로써 근대화를 촉진한 전형적인 나라이지만, 반면 전통의 재창조는 일본을 총과탄의 길로 몰아 넣고 말았다. 전통 내지 역사의 재창조에는 위험부담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 III. 「모방」기

구미자본주의의 물결이 세차게 밀려오던 구한말, 외세의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위정척사운동, 개화운동 및 동학운동은 을사보호조약 후에는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두 갈래로 통합되었고 이는 다시 3·1운동시에 하나의 운동으로 통합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러시아혁명의 영향 아래 점차 좌우로 분열된 민족운동은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의 갈등속에서 좌우합작의 모색과 그 좌절을 되풀이 해 오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불행히도 한국은 주로 타력에 의해서 해방된데다가 미·소냉전으로 말미암아 조국은 양단되니 독립운동 내의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은 남북으로 갈라서서 각기 자기의 길을 걷게 되었다. 즉 남한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모델로 삼고, 북한에서는 소련식 공산주의를 모델로 삼아 근대국가형성을 꾀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한의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1. 남한의 경우

남한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하게된 이유로서는 2차대전 종결당시의 시대적 풍조와 일제통치에 대한 반발로서 한국인이 지니게 된 친서구적 정향을 들 수 있지만, 보다 현실적 이유는 뭐니 뭐니해도 미군정실시와 서구식 민주교육을 받은 민간인 지식인들이 주로 정국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하겠다.

일찌기 John Morley는 『과국을 면하는 최선의 기회를 가진 국민은 . . . 너무 급격하게 과거의 일체의 전통과 절연함이 없이 현재의 희망을 가장 자유롭게 신장하는 길을 발견하는 국민』이라고 창과한 바 있다. 그러나 신생국가의 서구화된 엘리트들은 서구문명에 현혹된 나머지 서구선진제국의 역사적 특수성이 침투해 있는 「보편적 이념」을 그대로 순수하게 「보편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자국의 역사적 특수성의 산물인 전통문화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남한의 정치엘리트들의 경우도 이 예외는 아니어서 그들은 6·25의 폐허속에서도 우리의 정치전통과는 접목하기 어려운 서구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이식하려 했었다. 그러나 남한에 이식한 서구식 민주주의는 좀처럼 정착하지 못한 채 전통을 거둬들었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한 마디로 민주주의의 정착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채 그 제도만을 급격하게 도입한데 있다고 본다. 사실 남한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을만한 정치문화도, 사회경제적 기반도 그리고 특히 자치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의회나 선거나 하는 민주주의의 제도만을 급격하게 도입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카리스마적인 1인독재 아니면 무정부적인 혼란으로 귀착되었고, 마침내는 신생국가의 공통현상인 군사혁명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 2. 북한의 경우

북한에서 소련식 공산주의를 모델로 하여 공산체제를 구축하게 된 근본이유는 소군정의 북한 소비에트화 정책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소비에트화는 동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도식, 즉 소련에 망명하여 정치훈련을 받은 지도자의 수입, 양성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체제구축, 인민민주주의에 의거하는 연립정부 수립과 공산당의 궁극적인 권력장악이라는 도식을 따르고 있다.

위와같이 도식에 따라 공산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북한의 사상적 기조로 된 것은 스탈린에 의해서 재해석된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있어서는 세계적화의 사상은 있었으나 소련이 세계 적화운동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더구나 다른 공산국가를 소련의 주권에 예속시키려는 사상은 뚜렷하지가 않았다.

그러나 스탈린은 「짜르」시대의 침략적 민족주의를 재생시켜 세계의 모든 공산당을 소련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고, 소련당과 타국의 모든 공산당간의 주종관계를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스탈린치하의 소련의 공산당은 대내적인 면에서 1인독재체제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원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주장했는데 마르크스를 추종한 레닌은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공산당독재로 변질시켰다.

이러한 공산당독재는 스탈린시대에 이르러 스탈린개인의 독재이론으로 비약했지만 그것은 개인의 이상화를 권력장치의 기본으로 삼던 비인도적인 공포와 폭력의 정치였다.

이와같은 스탈린주의를 기조로 삼았기 때문에 소비에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스스로를 소련에 완전히 예속시키는 한편 김일성을 소스탈린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지령을 받은 것이다.

김일성은 소스탈린으로 되기 위해 피의 숙청에 착수하는 한편 소련의 위성국화를 피하기 위해 「위대한 소련 군대가 지어 준 유리한 조건」을 국민에게 상기시키는 동시에 「위대한 스탈린 동지의 전지전능」을 구가하였다.

기본적으로 스탈린체제를 모방하여 구축한 김일성의 초기 공산체제는 단지 우리 민족의 정치전통과 어긋날 뿐 아니라 민족적 자주성의 흔적조차 찾아 볼 길 없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의 역사의식은 민족전통의 부정을 일삼아 공산화 이전의 모든 민족사적 유산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반면에 소련을 조국으로 섬김으로써 문화적인 자기부정에 빠져 있었다.

## IV. 「독자적인 길 추구」기

1950년대의 한 중간을 고비로 하여 전후사는 제2기에 들어섰다. 자기진영에 대한 미·소 양국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냉전의 양상은 크게 변모하여 국제권력중심이 다원화하였고,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보다도 국가이익에 치중하는 신민족주의가 신구,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서 대두하였다.

그러나 동서냉전은 단지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을 가져 온데 그치지 않고 동족상잔이라는 기막힌 비극마저 치루게 했던 만큼, 미·중공간에 냉전이 국지적 열전을 수반하면서 도리어 격화되고 있던 아시아 정세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는 신민족주의가 좀처럼 일어날 수 없었다.

그렇지만 1950년대말에 이르러 신생제국에 도입한 서구식 민주주의의 퇴화현상이 급속히 변저가자 서구문명의 상징은 의회에서 용광로와 강철공장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1960년대초에는 중·소분쟁이 표면화되었고 이어 1960년말에는 미·중공접근이 시도되니 사태는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남한의 경우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 1. 남한의 경우

5·16군사혁명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가장 이목을 끈 점은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하며 민족주의적 성향을 뚜렷이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치아래 자유진영의 국제적 사명을 우위에 두고 우리민족의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홀히 해온데 대한 반성을 의미한다. 이같은 우리민족의 자각현상, 즉 주체의식의 발견은 곧 실용적인 국가이익의 추구하고 근대화, 특히 경제건설의 추진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국제정치의 다원화에 따르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동요로 인하여 「이데올로기」대신에 실용적인 국가이익의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그 정열이 식어가는 반면에 미·중공간에는 도리어 냉전이 격화되고 있던 당시의 아시아정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주의는 후면으로 물러서고 그 대신 근대화의 슬로건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국의 근대화」란 기치아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연달아 수행되어 공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모하는 한편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으니,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에는 값비싼 대가가 치뤄졌다. 원래 5·16후에 추진된 산업화는 내재적인 발전요소들의 흡수, 동원보다는 외자도입에 의거하는 대기업위주의 외향적 산업화였기 때문에 안으로는 산업간 및 계층간에 격차가 벌어졌고 밖으로는 경제적인 대외의존도가 높아졌다.

일국의 효과적인 산업화는 국민전체의 자발적인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므로, 우리의 산업화는 국민의 단합을 위해 국민적 일체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해야 하지만, 민족적 주체성 확립의 필요는 국가안보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중공 접근에 따르는 해빙무드는 한반도에도 밀려와 일시나마 남북대화의 길을 트기도 했으나, 북으로부터의 공산위협은 조금도 늦춰지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대중공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하고 있으니 싫건 좋건 자력안보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길은, 망각되었거나 왜곡된 민족적 전통을 바르게 되찾음으로써 민족적 긍지와 자신을 회복하는 일이다.

전통에서의 탈피를 근대화로 보던 종래의 접근법에 반대하며 전통의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적인 추세이거나, 우세한 외래문화에 압도당하여 자아를 상실한 채 정신적인 대외 의뢰심만 높아가게 하고 있던 이 땅에서도 근자에는 민족적 주체성 확립을 위한 전통문화 보전책이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는가 하면 학문적으로도 전통연구가 성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전통의 문제는 혹은 민족성의 문제로서 혹은 가치관이나 의식구조의 문제로서 연구된 결과 한국전통의 특색이나 장단점이 깊이 있게 규명되고 있는 동시에 그 단점 극복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사대주의나 당쟁과 같은 특정사실에 대한 재해석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국가방위의 민족적 전통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이용은 요컨대 민족적 주체성에 의거하여 독자적인 근대화의 길을 걷기위한 것이지만, 국내외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길을 추구하게 된 남한정부는 마침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이른바 유신체제 확립을 위한 개헌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개헌작업과 발맞춘 체제강화를 위한 조치이거나, 유신체제 확립후 남한정부는 국방력 강화와 경제건설에 일로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 2.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 당의 「이데올로기」에서 주체를 확립할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논하기 시작한 것은 스탈린이 사망한 2년후인 1955년 12월부터였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식선언, 이른바 「자주노선」 선언을 한 것은 중·소간의 「이데올로기」 분쟁이 두나라를 결정적으로 분열시키고난 뒤인 1966년 8월이었다.

일찌기 「티토」의 이탈로 급이 가기 시작한 국제공산주의는 역사적인 중·소분쟁으로 인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테두리 안에서나마 내부분열이 촉진되었는데, 이 현상을 양호민 교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즉 『스탈린 이후 공산주의라고 하는 세속적 교회도 단일적 교의가 깨어짐으로써 그 중앙집권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또는 재해석된)교의 위에 자체의 교회를 세우려 하게 되었다』고.

이같은 시대적 추세에 따라 자신의 독자적 교의(이데올로기)와 교회(당) 그리고 교권(정치권력)을 추구해 온 것이 바로 김일성의 「주체」의 확립과정이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내외학자들 간에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일부 외국 학자들은 그것을 저항적 민족주의의 한형태로 해석한다. 그들은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운운하기 시작한 것은 1956년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연설과 중·소분쟁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1955년 말임을 그논거로 내세운다. 다른 학자들은 밖으로는 중·소분쟁이라는 공산권내의 변화에 적응하고 안으로는 김일성 권력체제를 확립·유지하려는 동기와 관련시켜 그 성격을 규정한다.

사실 북한의 경우 대외적 자주성의 요구는 대내적 독재의 강화와 병행해왔다. 김일성이 대중·소관계에서 대소 사회주의국가들의 「완전한 평등」과 내정불간섭 및 「호상존중」을 주장하면서 자주노선을 추구해 온 과정은 당내의 반대파나 불만분자들을 「수정주의자」나 「교조주의자」나 하는 낙인을 찍어 규탄 숙청하면서 1인독재체제를 굳혀온 과정과 일치한다.

대내적인 면에서 보면, 원래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내세운 것은 그런 기치하에 연안파 등 반김세력을 숙청하는 한편 흐루시초프에 의한 반스탈린운동의 파급을 막음으로써 자기의 「스탈리니스트」적 독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소련의 군사적·경제적 원조의 삭감내지 중단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김일성은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주체사상내지 자주노선의 정신적 기반으로 「자력갱생의 혁신정신」을 강조하며 「친리마운동」이나 「청산리운동」이나 하는 대중노선정책을 추진하는 반면에 「인문·사회과학의 국사화」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북한이 추구해 온 기본목표는 「사회주의국가건설」과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일성은 경제적·군사적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북한전역을 이른바 「혁명적 민주기지」로 만들기 위한 요새화계획을 추진해 왔다. 북한의 대내적 목표는 남한의 적화라는 대외적 혁명목표와 밀접한 관련하에 추구되어 온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기본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전통이나 유산은 철저히 파괴하는 반면에 1인공산독재체제의 정당화 근거를 찾거나, 그런 독재체제의 강화·유지를 위한 개인우상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대대적으로 변조·개작하고 있다.

공산주의체제하에서는 선전이나 교육을 통한 정치사회화가 각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니와,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자주노선을 「유일사상」이라는 이름아래 모든 주민이나 학생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자기들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히면서 「주체사상」을 내세운(제4조) 이른바 「사회주의헌법」을 1972년말에 제정하여 체제강화를 일단락지은 북한은 김대중사건을 트집잡아 남북대화를 실질적으로 중단하고는 국방력 강화와 경제건설을 위해 강행군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강행군에서 생기는 희생, 마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상의 조치로서 북한은 김일성을 개인숭배에서 절대적 신격화로, 민족적 지도자에서 세계적 지도자로 높이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 V. 결론

이상의 고찰로서 우리는 남북 두 사회가 다같이 「독자적인 길 추구」기에 와서는 전통이용 내지 역사재창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결론삼아 평화적으로 재통일된 조국상에 비추어서 각기의 역사재창조의 실태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두 사회에 있어서의 국사관을 살필 필요가 있다.

박성봉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해방후 남한의 국사학계는 『민족주의사학·사회경제사학·실증사학등 여러 경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거보를 내딛는 것은 사실이나』 대개 『개별적 연구에 치중하여 독자적 체계의 새시대, 새민족사학은 그 기본적 방향이 바야흐로 모색되는 단계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근대화과정에 있어서 전통이용이 다방면으로 강구되고 있기는 하나, 뚜렷한 사관에 의거해서 체계적으로 역사가 재창조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이룩하려면 평화적으로 재통일된 조국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역사가 재창조되어야 하며, 또한 단기적 목표인 안보와 장기적 목표인 통일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북한의 경우를 보면, 북한역사학이 갖는 특성과 제약을 뚜렷이 알 수 있는데, 즉 북한에서는 『역사해석권은 당이 장악하고 현재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과거의 역사가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물사관에 억지로 뜯어 맞추기 위해 우리의 역사가 계급투쟁사로 왜곡되고 있으며, 또한 김일성이 개인우상화를 위해 우리의 항일독립투쟁사가 근원적으로 변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주체성이란 김일성 개인의 주체성이고 창조적 적용이란 김일성 개인의 창조적(임기응변, 임기변통)적용을 의미할 뿐이다.』

그런가 하면 가족의 기능이 극소화되고 협동농장·기업소 등 집단생활적 기능이 극대화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가족중심문화가 완전히 파괴되려하고 있는 반면에 김일성 개인의 가족만이 부각되고, 극단적인 족벌정치가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단절 현상은 가족제도의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종교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정 북한이 남북통일을 원한다면 현재의 필요에만 의거해서 역사를 재창조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필요, 즉 평화적인 조국통일에 비추어 역사가 재창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민족동질성과 이질화문제

손제석

<정박 · 서울대학교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민족의 본질과 매개요소
- III. 민족관의차이
- IV. 이질화 실태
- V. 결론

I. 서론

민족이란 영원 불변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 겨레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단일민족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타의에 의한 국토분단으로 인해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서 살고 있지만 민족의식에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그토록 기대를 걸었던 남북대화는 북한의 일방적인 거부로 그 문이 닫히고 말았다. 그리고 지난 30여년 동안 휴전선 이북에서 의도적으로 진행되어 온 민족이질화 현상은 우리의 통일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론문에서는 민족개념의 핵심을 단일체의식으로 규정하고 민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 말하자면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단일의식을 매개한 제특징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분단 이후 북한사회에서 어떻게 변질 말살되고 있는가를 살펴 본 다음 민족이질화가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민족의 본질과 매개요소

1. 민족개념

민족에 대한 개념규정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단일체의식으로 결합된 인간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민족의식은 내 민족이라는 귀속감과 동포애를 수반하며, 동시에 나와 남을 구별하고 내민족을 우선시키는 태도를 낳는다.

이러한 민족개념 또는 민족주의가 근대 서유럽에서 등장하여 20세기의 반식민운동을 계기로 급기야 범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와같은 의미의 민족이 현실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형성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종래의 통설은 객관설과 주관설이라는 두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지는데, 객관설은 언

어, 지역, 역사, 풍습, 혈연 등 객관적 특징을 들어 설명하려 한데 반해, 주관설은 얼, 의지, 감정 등 주관적 요소를 중시한다.

이 양설은 각기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령 민족의식이나 민족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는 민족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나 결코 객관적 환경조건과 무관할 수 없고, 역으로 자주 논급되는 언어, 역사 따위의 객관적 요소만 하더라도 그것이 민족의식을 고양할 수는 있어도 민족의 결정적 특징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를 끄는 새로운 접근방법은 민족현상을 이른바 「사회커뮤니케이션」(social communication)이라는 과정과 연결시키는 이론이다.

「사회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은 주로 「카알. W. 도이취」의 제저술에서 다듬어진 것인데, 그 대전제는 간단하다. 즉 민족은 원래 독특한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사회학습과 관습형성이란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학습과 관습형성은 무역, 여행, 통신 등 빈번하고 지속적인 「사회커뮤니케이션」망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말하자면 단일 「사회커뮤니케이션」망이 민족형성의 터전이라는 견해이다.

「도이취」의 견해는 「H. 코온」을 비롯한 종래의 민족주의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부합되는 면이 있다. 18세기 서유럽에서 등장한 민족의식은 중세이래의 지속적인 정치지배위에서 안착하였으나, 중·동유럽에서와 같이 정치적 전통과 결부되지 못한 민족의식은 불안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리고 「K.뢰벤슈타인」같은 사람은 『과거에는 민족이 국가를 형성했으나 오늘날에는 국가가 민족을 형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 2. 매개요소

민족이 일정한 객관적 조건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존재가 민족자신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의식되는 경우에 비로소 민족이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단일체의식을 민족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언어, 역사 등 객관적 특징은 이의 매개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고유의 언어, 유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나누어 가진 단일민족이면서도 오늘날 북한사회는 심한 이질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민족의 이러한 제특징이 북한사회에서 왜곡 말살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 III. 민족관의 차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민족관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민족을 논할 때 피와 역사, 그리고 얼(정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그들은 스타린의

민족관, 즉 민족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함께 나타난 역사적 산물이며 부르조아민족은 자본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소멸한다는 계급종속의 개념에 원칙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민족내의 부르조아지 지배와 착취를 옹호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는 어긋나게 자기민족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를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우리 민족문제에 있어서 표면상으로는 민족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있어서는 남한에서 자본주의가 소멸되지 않는 한 북한의 「사회주의민족」과 남한의 「부르조아 민족」이란 이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하겠다.

그런데 민족관에 관한 공산주의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북한의 주관적 여건에 따른 특수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스탈린의 부르조아지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의 유형적 구분, 이에 따른 「민족해방투쟁」의 지원, 동구제국의 「민족공산주의」 주장, 중·소분쟁 등 객관적 상황변화와 그리고 중립세력의 영향력 증대, 항일투쟁을 비롯한 한민족의 강렬한 민족의식 등을 등한시할 수 없는 주관적 여건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분쟁은 북한의 독자성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으며, 이른바 「주체사상」이라든가 「유일사상체계」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 IV. 이질화 실태

##### 1. 언어

유럽민족주의의 전성기에는 언어가 다른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었다. 그러나 언어는 몇가지 이유에서 민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일반적인 실정이다.

우선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언어가 정치에 영향을 주듯이 정치가 또한 언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4개어를 사용하면서도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고 있고, 영어는 6개 주권국민의 공용어이며, 스페인어는 20개민족의 언어인 것이다.

이것은 다른 민족의 실정이고, 그러면 우리 민족의 경우는 어떠한가.

수천년의 역사속에서 단일언어로 지켜온 우리 말이 분단이후 불과 30년동안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이질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음운체계와 문법체계에는 현저한 이질화가 보이지 않지만, 어휘체계, 문체론적 면에서는 상당한 이질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언어전문가의 연구결과이다.

이 현상은 일반적인 언어변화원리에 따랐다고 보다는 북한의 치밀하고 의도적이며 정치적인 언어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김일성은 우리 표준어를 철폐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문화어」라는 것을 이에 대체, 『핏줄이 같고 한영토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여 민족의 영구분열을 기도하고 있다.

## 2. 역사

「J.S.밀」의 말을 빌릴것 같으면, 『민족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가장 강렬한 원칙은 정치적 내력의 확인, 민족사의 소유와 이에 따른 공동회고, 과거의 동일동작과 연결된 집단적 궁지와 굴욕, 환희와 유감 등이다』. 「E.르낭」은 민족의 「얼」을 형성하는 두가지 본질적 요인의 하나는 「풍부한 추억의 유산」, 「영광과 비분의 유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의 남북한동포는 역사적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영광과 비분을 다같이 느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북한에서 진행된 우리 역사의 엄청난 변조사태 때문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사를 최근세 이후는 김일성가계의 혁명 전통화 및 김일성의 혁명 투쟁사로, 그 이전은 유물사관으로 날조·왜곡하여 북한주민들에게 강제적인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민족이질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3. 민족문화유산

유구한 역사의 문화전통은 우리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김일성은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은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본질에 근거한 요구이며, 합법칙적인 요구에 따라 문화를 건설하려고 하면 타국 타민족의 문화유산이 아니고 자국 자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민족적 형성에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대전제 때문에 사실상 전통단절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령 우리 민족의 전통적 명절인 8월 추석은 그들에게는 명절이 아니며, 오히려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날을 연중 최대명절로 최고 있고, 북한의 고적유물은 대부분 폐허화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반면 백두산 일대에는 김일성의 항일투쟁 유적물이라는 것을 날조해 놓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풍습, 그리고 기존가치관이 공산주의체제 밑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 V.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남북한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이질화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았다. 그리고 이질화의 책임이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명분상 통일을 내걸고 있을 따름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이민족정착을 추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북한의 배타적 사회커뮤니케이션권, 절대지배권, 비교적 안정된 정치 단위등은 별개의 이질민족 형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내부의 정세변화와 국제정치적 전기에 의해서 북한이 언젠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정책을 받아 들일 것으로 기대하나, 그시기가 어느 때인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도, 실망해서도 안될 줄 안다. 「J.J. 루소」는 이렇게 말한바 있다. 『국가(Commonwealth)창건자는 한 세기를 노력해야 하고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또 한 세기를 걸려야 한다』.

● 문화와 성격구조의 이질화

고영복

<사회학박사·서울대학교 교수>

목차

- I. 문화적 이질화의 요인
- II. 문화적 이질화의 양상
- III. 사회화와 성격구조

I. 문화적 이질화의 요인

문화란 일반적으로 생활방식을 총칭하는 말이므로 그것이 포함하는 사항은 매우 광범하고 다양하다. 관례적으로는 문화란 정치, 경제, 사회구조와 구별되는 생활방식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전자는 광의의 문화개념이고 후자는 협의의 문화개념이다. 그러나 어느쪽의 개념이든 문화는 특정 사회나 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생활방식을 가르킨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다만 광의의 경우는 사회전반에 침투하고 있는 포괄적인 생활방식이고 협의의 경우는 사회의 특정기능을 기준으로 하여보게 된다.

남북한의 문화하면 흔히 남북한주민들의 생활방식 즉 사고, 감정, 행동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각기의 사회단위속에 보이는 생활양식의 이질적 특색은 모두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저한다.

원래 동일민족에게는 동질의 문화가 있을 뿐이다. 언어가 같고 같은 사고방식 비슷한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주민들은 해방진후까지는 동일한 민족문화를 가지고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의 동질성과 연대성이 있었다. 그러나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은 정치적 단위를 달리하고 경제체제를 달리하는 유리된 생활권을 형성케함으로써 이질의 문화를 부식시켜 놓고 민족의 동질성을 파괴하여 놓고 있다. 이렇게 같았던 하나의 문화를 두개로 갈라 놓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갖도록 강요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로 외래문화의 지배를 들수 있다. 8·15후 남북한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는 남한에는 미국문화가 침투하고 북한에는 소련문화가 지배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는 독립에의 집착은 강했지만 일제식민지하에서 일본문화에 의한 무자비한 민족문화의 약체화로 문화적 주체성을 견지하지 못했고 해방후 물밀듯이 들어닥친 외래문화를 취사선택할 분별력과 예지를 잃게 하였다. 남북한 공히 외래문화의 수용은 그것이 응당 겪는 재래문화의 충돌없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재래문화에 심각한 해체나 재구성의 계기를 부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문화에 외래문화를 뒤덮어 씌우는 문화적 난맥상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남한에서는 미국적인 자유민주주의적 문화를 이상시하게 되고 북한에서는 소련적인 공산주의문화를 절대시하는 풍조를 자아내고 말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작금에 와서 남북한에서 모두 시정되는 징조가 보이지만 그래도 일단 정착한 문화적 영향을 근거로부터 뿌리 뽑는다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다.

둘째로 정치권력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 남북한에서의 독자적인 건국과 그리고 6·25동란은 남한에서는 우파정치세력을 그리고 북한에서는 좌파정치세력을 집결하는 양분현상을 빚어내어 상호간의 정치적 면역성을 길러내지 못하고 남북의 적대관계는 정치권력의 격렬한 양극화와 첨예화된 투쟁을 초래하였으며 북한의 적화정책에 대해 남한에서는 반공정책으로 맞서는 극단적인 상극과 대립의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이렇게 타협하기 어려운 정도로 양극화된 정치세력의 분화는 대립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지배속에서 생활문화의 차이를 심화시켰고 각기 다른 사상체계를 갖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세째로 상이한 경제체제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남한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원칙하에 부분적으로 통제되고 계획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였고 북한에서는 토지와 산업의 국유화 개인상공업자의 철폐 집단농장화등 급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혁명하였고 전국민은 조직적으로 급조시켜 버렸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차이는 주민들의 생활감과 가치지향을 각기 다르게 유도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개인의 책임아래 경제생활이 영위되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경제생활을 책임지는 전혀 이질적인 생활풍토를 자아내고 있다. 특질적 생활의 충족을 위해서 경제구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은 결국 경제구조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환경에의 동조를 반복하다 보면 인간의 본성은 각기 다른 것으로 굳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네째로 상이한 사회구조의 특징을 들 수 있다. 남한의 사회구조는 개방적 계층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의 사회구조는 의도적으로 통제된 신분제적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계층상승의 통로는 당성과 투쟁경력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고위간부당원, 기본계급, 잡다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계층서열이 제도화되어 있고 직장에서의 지위는 바로 계층적 지위와 동일시된다. 남한의 계층구조와 굳이 비교한다면 상층이 정치적 고위간부와 당원이며 중층이 기본계급이고 하층이 잡다한 계층이 될 것이다. 남한에서의 계층적 위신 부여의 근원은 주로 경제적 지위인데 반하여 북한에서의 그것은 오직 정치적 지위만이 된다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계층적 구조화의 양상보다는 계급구성의 특이한 차이에서 찾아진다. 북한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자본가계급이 남한에서는 중요한 중·상층의 계급요원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한 부분인 노동계급을 지배계급으로 밀어 올려 놓고 있다. 북한에서는 중간계급을 모두 노동계급화하는 계급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중간계급이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을 상호 견제하고 조정하는 중심세력이 되고 있다. 남북한의 대립은 사회구조적으로 보면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대립이며 중간계급의 복지사회적 지향과 노동계급의 공산사회적 지향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계급의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북한사회의 생활상과 상이한 계급문화의 공존을 용인하면서도 중간계급의 문화가 생활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남한의 사회생활의 차이는 문화적 이질화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문화적 활동과 장치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모든 「매스·미디어」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 잡지는 물론이고 출판이나 학술서적은 통제된다. 매스컴의 독점은 체제유지에 해로운 정보원을 차단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반대적 태도 발생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매스·미디어의 사적소유가 허용되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기능도 남북의 그것과 다르며 집단적 선전자, 집단적 선동자, 집단적 조직자로 일관하고 있다.



문학이나 예술도 북한에서는 사상교육을 위해 총동원된다. 이른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형식은 민족적이며 내용은 사회주의적」인 작품만을 허용하며 문예활동에 있어도 당성, 인민성, 계급성이 강조되고 예술성보다 사상성이 중요시된다.

작품의 테마도 당에 의해 지정받고 투쟁적인 문예작품의 계획적 생산을 하고 있다. 공산주의적 문화이외의 문화가 싹틀 여지를 말살하고 전주민의 사고방식을 획일화하는 강력한 문화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로 사회화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에서의 사회화는 계획적 사회화, 시범적 사회화, 집단적 사회화, 일면적 사회화의 방식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다. 가정에서의 사회화와 조직에서의 사회화가 철저히 통제된 일관성을 갖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입한다. 각종 교양회, 사상검토회, 비판회 등으로 사상주입효과는 보강되며 실천을 통한 인간혁신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청소년층에게 대단히 강력한 위력을 나타내어 전혀 다른 인간유형을 양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 II. 문화적 이질화의 양상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는 구조적 제도적으로 이미 고착되어 있다. 그와 같은 전제적 조건들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문화적 이질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보아 삼십년간의 분단이 과연 어느 만큼의 문화적 이질화를 가져 왔는가에는 많은 검토를 요하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왜냐하면 민족문화는 장구한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고 사회적으로 응결된 초유기체적 존재임으로 독자적인 외재성과 구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문화는 흔히 보편문화로 이해되고 있다. 민족성원 공통의 생활방식을 말한다. 우리민족은 언어, 의식주, 민화, 민역, 살림이나 육아방식, 효관념, 가족간의 친밀한 유대 관혼상축 명절에 대한 관례 등에서 공통의 보편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의 남북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북한에서도 민족문화의 형식은 거부하지 않는다. 남북한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더라도 외관에서 벌써 동족임을 알아 볼 수 있고 의사소통이 자유롭다. 다만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장벽만 허물 수 있다면 같은 민족임을 상호확인할 수 있는데 어려움은 없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는 특수문화로서의 분화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문제가 많다. 원래 특수문화는 동일사회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분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남북한은 정치적 장벽으로 인해 두개의 사회가 독립해서 개별의 단위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두개의 사회를 초월하는 보편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 보편문화는 과거의 것으로 그치고 있고 현재의 시점에서는 남북한의 특수문화를 포괄할 힘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수문화에 의해서 잠식되고 변질되려 하고 있다. 이것을 막을 힘을 보편문화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편문화를 그대로 두고 특수문화로서 남북의 문화가 발전할 가능성은 적다. 북한에서는 각기 다른 중심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자유민주주의문화와 공산주의문화로 요약된

다. 이 양개의 문화는 공통적인 요소보다는 상극적인 요소가 많다. 공산주의문화는 자유민주주의 문화를 말살하려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문화는 공산주의 문화를 파괴적인 것으로 위협시한다. 이와 같은 대립상은 극한적인 상황에서 민족문화를 주변문화로 격하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남북주민간의 적대감과 증오감을 그 명분으로서 상이한 문화적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하위의 특수문화를 권장하고 있다. 남성문화와 여성문화, 노인문화와 청소년문화, 농촌문화와 도시문화, 상층문화와 하층문화 그리고 다양한 직업적인 문화가 분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문화는 단일의 문화로 획일화시켜 놓고 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동질의 문화로 생활할 것을 강요하고 같은 사상, 같은 이념, 같은 행동방식이 공산주의적 미덕으로 찬양된다. 뿐만 아니라 이 질의 문화가 발붙일 곳을 철저히 봉쇄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사회단위로 볼 때 보편문화와 특수문화가 구별되지 않고 분산할 가능성이 짙은 것이고 또 문화정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남한에서는 독자적인 보편문화를 정립해 가면서 그 밑에 특수문화를 발전시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에는 머지 않아서 서로 다른 보편문화가 별개로 독립하여 전혀 상이한 양측의 민족문화가 확립 고착될 비극을 낳을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언어도 완전히 방언화하고 민간인의 생활관습도 전혀 다르게 변모하게 되고 통일의 염원도 희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서구의 중립적인 사회과학자 중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동일방향으로 수렴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복지사회적 지향은 자본주의적 사회주의를 낳을 것이고 공산주의사회에서의 자유화경향은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로 변용될 것으로 내다 본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앞서 있고 실현성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아무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라 하더라도 어느 것이 기간이 되느냐에 따라 여전히 이질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조직인은 비슷한 사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회과학자도 있다. 즉 타자지향형이고 자동인간형적 공통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동질의 조직인적 성격구조를 발견할 수 있겠으나 사회구조가 다른 상황에서의 조직인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제약을 돌이켜 보면 이 논리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자본주의가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가 극도로 발달하게 되면 사회적 성격의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는 낭만적인 꿈에 지나지 않는다. 설사 실현성이 있다 하더라도 머나먼 훗날의 이야기이고 현실의 인간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가 어렵다. 문화적 공동성을 내세운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민족적 특수성에 따라 전개방식이 다르고 대립조차 보이는 현상은 민족이라는 생활단위가 궁극적인 문화의 준거기준이 될 것을 믿게 한다.

남북한도 민족적 동질성을 견지할 때만이 타협이 가능하고 통일도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의 문화적 이질화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화는 구조적 분화형식에 따라 이념문화, 행동문화, 용구문화로 삼분될 수가 있다. 이념문화는

사회성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지향의 문화이고 행동문화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규범이나 관습의 문화이다. 그리고 용구문화는 생활용품, 시설 등의 생활수단에 관련된 문화이다. 이와같이 문화를 삼분류하고 보면 남북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질화는 이념문화에서 발족된다.

북한의 이념문화는 「맑스·레닌」주의의 김일성적 해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유일사상, 주체사상, 집단주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의 혁명노선은 남한의 근대화사상, 복지사회관,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 점진적 개량주의와 매우 대조적이다. 북한에서는 집단목표의 쟁취가 중요시되는데 반하여 남한에서는 개인의 번영과 행복이 중요시된다.

북한의 혁명노선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한에서는 유신체제를 여기에 덧붙이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이념문화에서의 차이는 타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 속에서도 공통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곧 민족주의화의 경향이다. 물론 쌍방에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문화유산의 애호, 민족적 긍지의 제고, 주체적 역량의 양양, 한국적 준거기준의 확립 등에서 공통의 바탕을 발견할 수가 있다.

행동문화에서의 유사점은 더욱 많다. 전원적 정감, 공동체적 유대, 가정에서의 전통적 인간관계, 상부상조의 관습, 서열주의, 대인적 정의성, 귀속성 등에서는 남북이 모두 재래적인 한국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그것이 다만 집단주의적 조직생활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고 남한에서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활용되고 있는 차이를 발견할 뿐이다.

용구문화에 있어서는 남북한 공히 현대적 기계문명의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 기술이나 기계는 초이데올로기적인 것이어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용구문화의 차이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생산양식의 차이를 제외하고서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의 것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고 북한의 것이 남한에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민족적 본질을 구현하는 의식주의 절대적 형식이 바뀌지 않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적다. 김치와 온돌과 한복은 한국 고유의 것이며 그것은 민족이 생존하는 한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면 남북한사회의 체계적 폐쇄성은 표층문화에서 이질화를 진행시키고 있으나 심층문화에서는 변용이 적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말투, 인간관계, 민속 등에서 표층적 변화는 일어나고 있으나 심층적인 변화에는 아직 시일이 남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의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 동질성이 어느 시기까지 지속될 것인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 III. 사회화와 성격구조

문화는 사회화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주입된다. 그러므로 문화적 이질화는 개인의 「퍼스널리티」 구조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격구조의 차이는 남북한의 청소년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화는 일차적으로 가족·친우·이웃이 담당한다. 남북한의 가족은 각기 다른 사회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사회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양육방식이다. 남한의 가족은 구미식 사회화의 방식을 한편으로 도입하면서도 재래식 양육방식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혼합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삼강오륜식 전통적 규범은 온존하면서도 그것을 근대적 성격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성향을 띄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폐쇄성과 근대적 개방성을 종합·지양하는 성격형을 지향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도 재래적 유제를 완전히 불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회생활에서 아직도 가족적 배경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폐쇄성이 상존하지만 그것을 집합체적 규범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집단주의적 심성으로 변형시켜 가고 있다.

남한의 경우 전통성이나 근대적 개방성이 모두 가족 생활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만 북한의 경우는 전통성은 집단주의적 심성과 결부되어 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성향은 어린이들의 동료집단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인간형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남한의 경우 동료집단에서는 자기들 나름의 세계에서 적응도가 높은 아이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경우는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혁명적 투쟁심이 강인한 자가 중심인물이 되도록 유도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용의 「매스·미디어」나 교육용구의 내용 속에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청소년들은 서로 사귀기가 쉽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기준은 깊숙이 감추고 있고 기대하는 보수를 상호교환하는 가운데 친숙해지고 일체감이 심화된다.

북한의 청소년은 특정의 공식적 기준에 일치하는 경우에만 접촉이 가능하다. 사귀기 전에 우선 기준에 맞느냐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진다. 친우간의 관계는 사회화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 문제점은 남한의 경우는 어린이 세계와 어른의 세계가 다를 수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동일하도록 의식적으로 조작된다. 남한에서는 동료집단 특히 학생집단의 독자적 기능이 있으며 그것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 청년문화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어린이는 조직화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은 그것이 자의에 맡겨져 있다. 즉 북한은 어릴 적부터 조직생활에의 훈련이 철저히 주입되고 있으며 집단압력을 통해 인간성이 특정의 방향으로 구조되어 나간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집단압력을 자발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하나는 사회우위의 조직지향형으로, 하나는 개인중심의 내적지향형을 제각기 이상형으로 바라면서 굳어져 가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사회화의 과정에서 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과대하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화과정에서는 가족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남한에서 가족의 기대를 어겼을 적에는 제재받지만 북한에서는

가족보다는 사회의 기대를 어기는 편이 제재를 강력하게 받는다. 이러한 특성은 그대로 「퍼스널리티」 구조에 반영하여 북한형은 「퍼스널리티」의 표면이 경고한데 반하여 남한형은 유연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형은 공통적 측면이 많은데 비하여 남한형은 개별적 측면이 차지하는 영역이 넓다 하겠다. 공통적인 측면은 표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북한형은 공통한 영역도 견고하고 남한형은 공통한 영역이 유연하다.

남북한의 청소년의 사회적 성격의 중핵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재래적인 한국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비중의 차는 있지만 가족이나 마을이 양체제에서 전통적 특성을 지닌 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한 것은 사람의 성격의 주변부이다. 물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성장해온 젊은 세대들에게는 상당한 정도까지 심층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말하면 남한형은 「재래적 성격+내적 지향형」이고 북한형은 「재래적 성격+조직지향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한에서의 재래적 성격은 규범지향성으로 나타나고 내적지향성은 가치지향성으로 나타난다. 이 양자의 불일치는 불가피하게 이원성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재래적 성격이나 조직지향이 모두 규범지향적이다. 따라서 다원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남북한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양식을 규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흔히 한국적 인간관계는 종적 인간관계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남북한에 공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성격의 변화로 말미암아 남한에서는 종적 인간관계의 범위가 축소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북한에서는 조직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종적 인간관계가 전화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어느 쪽에나 문제가 있다. 남한은 인간관계 그 자체가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모호해지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특정의 목표를 위해 인간관계가 수단으로 경시되는 폐단이 있다.

남한에서는 정서적 충족이 상당히 중시되는 편이다. 따라서 인정 사정이 통할 수 있다. 이것은 능률저해의 한 요인으로 되어 있지만 한편으론 사회적 연대성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가족적 분위기, 인간적 이해, 정서적 유대 등은 남한에서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격이 특성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드디어 그러한 것은 개인주의적 잔재로 규탄되고 사회주의를 위해 철저히 목적합리적인 행동만이 용인된다. 행동의 단위나 내용이 규격화되고 제도화된 틀을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적 능률을 올렸을 때만이 정서적 충족이 보상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북한형은 제도지향형이고 남한형은 인간지향형인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가치지향을 보면 남한에서는 인간적 보편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유나 민주가 중요시되지만 북한에서는 사회적 보편성에 입각하여 평등이나 협동이 궁극적 가치로 설정된다. 남한에서는 사유재산의 축적이 성공의 척도로 되어 있지만 북한에서는 사회의 공동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인간이 사회적 인정의 근거가 된다.

남한에서는 내집단적 경쟁심이 권장되고 양양되지만 북한에서는 외집단적 경쟁심이 강력히 조장된다. 개인적 경쟁심의 강조는 남한에서 때로는 개인적 이기주의자를 산출시키지만 외집단적 경쟁심의 강조는 맹목적 동조주의자를 배출시킨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남북한은 개인능률 지향과 집단능률 지향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표명해도 무방할 것 같다.

남한에서는 개인적 낭비를 허용하면서도 그 희생의 대가로 창의성을 기약해 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계획의 차질로 인한 사회적 낭비는 허용되지만 개인적 낭비는 전혀 용납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철두철미한 미래지향적 인생관을 고취하여 현재의 희생을 감수하도록 종용하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현재와 미래가 직결하는 조화를 추구한다.

말하자면 현재의 향상을 근거로 하는 미래에의 희망과 안정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심리관과 북한의 심리관에도 두드러진 차이점이 보인다. 남한에서는 유전과 환경과 적응의 과정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환경·유전·훈련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훈련 특히 자기훈련이 지나치리만큼 강조된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에서는 철저히 인간심리를 길들이는 작업이 중요한 과업으로 되어 있다. 토론회나 자기비판은 모두가 집단효과를 이용한 인간개조의 방안인 것이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교육은 북한의 사회구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구조와 일치하는 사회적 성격은 사회주의적 계획과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변수인 것이다.

북한사람의 욕구불만은 과도한 훈련과정의 파생물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사람의 욕구불만은 그 해소의 메커니즘을 일차적으로 재훈련의 노력 속에서 찾게한다. 따라서 의식성, 의무감 등이 극도로 강조된다. 그러면서 욕구불만으로 야기되는 감정적 불안은 반사회주의적인 "적"을 향해 표출시키는 통로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조국애, 당에의 헌신, 영웅적 용맹심 등이 동기화의 요인으로 이상시되고 있다.

북한사람의 자기통제의 메커니즘은 낙후성에 대한 수치감이나, 이 수치감은 동료들의 눈을 무서워 하게 한다. 따라서 극도의 경계심이 자기보호의 메커니즘으로 등장한다. 행동이나 가치의 기준을 자기 내면에서 찾지 않고 외재적인 당의 노선이나 권력의 향방에서 찾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간여를 기피하고 사태의 추이에 민감하게 외관상의 적응을 하고 내심은 공백으로 두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공식의 자기세계를 만들어 그것을 채우게 된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는 자기안전주의가 유일의 처세기준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된다. 어제까지는 찬양된 혁명지도자이었고 영웅이었던 자도 일조일석에 "인민의 적"이 되고 반당분자가 되고 정치의 양상이 변화무쌍하므로 당연히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오로지 정치적 변화의 향방에 대한 관심만이 예민해지고 위험을 면하기 위한 동조방식이 발달한다. 표면으론 권력에 충실하는 척하면서도 내면적으론 정치로부터 거리를 유지

한다. 그리하여 체제지향적 동조주의만이 남는다. 그리하여 형식주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가식주의, 과시주의, 허위보고, 책임전가 등의 병폐를 안게 된다.

이에 반하여 남한에서는 환경에 대한 부단한 시행착오적 학습을 통한 직접적인 적응방식이 추구된다. 적응에 실패한 욕구불만은 다양한 자기해소의 메커니즘을 통해 재적응의 준비상태를 마련한다. 그러면서 욕구수준을 점차로 조정시켜 나간다. 따라서 남한의 욕구수준은 환경이 부여하는 제반의 보수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시장지향적 적응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남한에서의 욕구불만은 상승된 욕구수준이 충족을 얻지 못하는 환경적 세계의 불비된 조건에서 온다. 말하자면 기대수준과 현실적 충족과의 거리에서 파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욕구불만은 욕구수준의 재조정을 요구하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게 한다.

남한에서는 기회포착의 계기를 놓치는 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기통제의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지위상실의 불안감으로 스스로를 조정한다. 따라서 자기과시의 기회를 심분 활용하려 한다.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보수를 얻어내는 방법이 동원된다.

이와 같은 인간유형의 차이는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 인간유형의 차이가 또한 문화구조를 달리하는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이질화의 극복과 민족주의

황성모

(사회학박사, 충남대학교교수)

### 목 차

- I. 서 언
- II. 이질화의 사회학적 실태(북한)
- III. 민족주의적 극복 가능성

#### I. 서 언

6. 25전쟁동안 파괴된 서울과 평양의 모습을 신문에서나 뉴스영화에서 볼 때만 해도 이 두개의 도시는 남북의 차를 들어낸다고 보다는 한민족의 하나의 역사 속에서 성장해온 두 개의 도시의 무참한 모습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1972년 가을 남북적십자 대표단들이 서울과 평양을 상호방문할 때 보도된 평양의 모습은 그것이 얼마나 서울과는 다른 도시로 변모하였는가를 실감케 하였다. 오히려 평양이 한반도에 실존하는 도시라는데는 다소간 위화감을 가지지 않고서는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이북의 모습이 단면적으로 들어 날 때마다 그 위화감은 거리감으로 변하였다. 평양 거리의 모습, 어린이 행렬, 부녀자의 옷차림, 한적한 자동차의 왕래, 간판이 눈에 띄지 않는 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깡마른 얼굴들, 긴장한 동작들은 이북이라는 곳이 과연 남쪽하고는 다른 세계이구나 함을 느끼게 하였다.

한반도 북역에 우리와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청각적으로 감지되었을 때 그것은 과거 30년 동안 강조되어 오던 「이데올로기」 대립의 현실적 결과요, 남북열전의 적나라한 유산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면서도 결국 그것은 외적으로 민족이 분단된 순간부터 이 순간을 우리들은 천진하게도 "해방"이라 불렀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한 남북이 제각기 다른 해답을 내 놓았다는 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그 과제란 무엇이었던가. "해방"이 주어진 것이었던 만큼 과제도 "해방자"가 주게 마련이었다. 세계2차대전이 「이데올로기」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승자가 준 그 과제도 「이데올로기」 적일 수 밖에 없었다. 한민족으로서는 그 과제를 거부한 아무런 정치적 이유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였다는 것도 현실이었다. 그러기에 그 과제를 풀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 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던 일을 해야 하는 과제였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 과제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정치적 독립과 사회 경제적 근대화라는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었다. 이것은 현대국가로서 성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여건이라 함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그것은 "38선"을 경계로 하는 남북이 공통으로 가지는 과제였다. 그러나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은 이 공통과제를 양분하였다. 남이나 북이나 다같이 제각기의 "해방자"가 규정해 주는



방법론에 따라서 이 양분된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1948년 서울과 평양에서 거의 동시에 이 과제수행의 역할담당자가 나타난 것이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때 그 역할담당자는 반드시 민족주의적이며 민주적인 정치 성격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1차적인 통치권 승인은 워싱턴이나 모스크바에서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의 존속은 대국의 대리인으로서의 능력만이 보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들은 동시에 과제수행자라는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권담당자로서는 주어진 방법론에 따라서 우선 사회경제적 근대화를 추진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정치적 독립은 2차적인 과제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회경제적 근대화의 방법과 성과는 정치적 독립의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뚜렷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한 세계적 해빙무드는 이 전망을 현실로 바꾸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남북이 과거 30년간 제각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비록 방법론에는 차가 있었다고 하여도 어떻게 하나의 민족에서 두개의 사회가 발전하였는가와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사회학자에게는 큰 관심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과정의 소용돌이 속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고통은 결국 민족의 분단과 분열을 체험하는 고통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쨌든 1945년까지 하나의 사회였던 것이 두개의 사회로 찢라지는 고통이었다. 구한말의 사회구조를 기본적으로 지니면서 일제지배를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회가 두개의 사회로 분열했던 것은 미·소의 대립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따지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개의 사회가 제각기의 발전을 해온 과정-이질화과정-이 여하히 새로운 접근 가능한 사회분야를 내포하면서 변화하고 있는가, 또 어떠한 분야가 정치적 대립의 지양과 더불어 소멸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분석이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문제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정치적 문제이기 보다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하나의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제3자도 그 역할수행에서 대역을 맡을 수는 없는 것이다.

## II. 이질화의 사회학적 실태(북한)

1945년 이후의 북한의 사회변화과정을 이질화과정이라고 본다면 이때의 사회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우선 네가지로 볼 수 있다. 그것들은 아래와 같다.

1. 사회관계의 변화
2. 새로운 지도층의 형성

### 3. 사회가치관 (정치이데올로기)설정

#### 4. 정치 중심부의 구축

그러나 이것만으로 북한사회 변화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컨대 6. 25전후를 통해서 주민들의 대량남하가 북한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북한사회가 전통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북한주민들이 소련진주군의 생활양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가 또는 전쟁때 중공군의 존재가 북한주민들에게 어떠한 문화이식현상을 일으키게 했는가? 하는 따위의 문제들은 북한사회변화를 이해하는데 흥미있는 측면이면서도 북한사회변화의 주도적 요인은 되지 못한다.

#### 1. 사회관계의 변화

소련군의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김일성이가 정권기관을 형성한 것은 1946년 2월 8일이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그것이였고 김일성이가 위원장이 된 것은 당시의 객관정세의 귀결이였다.

그런데 김일성 자신은 이 위원회의 당면과제는 『인민의 적인 친일파, 또는 반민주주의 분자들과의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여 반동세력을 소탕할 것과 지주를 청산하고 그들로 부터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sup>1)</sup> 하는데 있다고 선언하였다는 점은 그후의 북한사회변화의 준거를 제시해주는 뜻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연설은 바로 현실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한달도 되지 못한 동년 3월 3일 재소집된 「북조선농민대회」에서 토지개혁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되고 지주토지의 무상몰수, 빈농민에 대한 무상분배, 지주에 대한 농민의 부채말소, 관개시설, 산림 등을 무상몰수하여 국유화할것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sup>2)</sup> 반면에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서는 몰수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학교, 과학연구회 병원소유지,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소유자 및 그 가족이 소유한 토지, 민족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와 그 가족이 소유한 토지』라고 규정하였다.<sup>3)</sup>

일견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이 토지몰수규정들은 일면 토지계급의 물질적 토대를 박탈하고 농민계급을 북한정권에 접근시키고 동시에 친북한정권에게 계속 물질적 토대를 보장하므로써 바람직하지 않는 생산관계의 전도와 바람직스러운 사회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북조선공산당」이 사회관계재정립의 전략본부가 되고 있었지마는 구체적인 정책은 1. 노동계급의 지원강화, 2. 고농. 빈농에 의거하며, 3. 중농과는 동맹하고, 4. 부농은 고립시키고, 5. 지주가 반항할 때는 이를 분쇄한다는데서 나타나고 있다.<sup>4)</sup> 그러나 5~9명으로 구성되는 「농촌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기존사회관계 해체와 재편성의 핵심체가 되었다. 12,000여개에

1) 「북조선민주주의 각정당사회단체행정국·인민위원회대표회담협의회」에 대한 그의 「목전 조선정치형세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조직문제에 관한 보고」 연설,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1권 1949년판 p.8 김남식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 (I)」 아세아연구 제14권 3호, 1971. p.99에서 재인용

2) 「조선노동당, 역사교재(정당사)」, 1964. p.161 참조

3) 「토지개혁법령」 제12조. 또 「민주주의민족전선」간 「조선해방 1년사」 1946. p.434에 의하면 각 분야의 좌익분자 일반이 토지몰수에서 면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4) 「조선노동당, 역사교재(정당사), 1964. p.162 참조

이른 「농촌위원회」는 실제로 9만여명의 과거의 소작인<sup>5)</sup>이 지주와 부농을 계급적으로 <독재>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불과 20일만에 북한의 총 경지면적중 52%가 몰수된 것이다. 그것은 지주소유 총토지 면적 80%가 몰수되었음을 말한다(중농과 부농의 일부 토지도 지주지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동시에 고용농호의 65%가 토지를 분배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sup>6)</sup> 중요한 사실은 고용농호중 나머지 35%는 계속 농촌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농업에서부터 떠나서 권력기관으로 진출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역사에 없었던 수직적 계급이동이다. 동시에 가족을 포함한 지주계급출신 약 35만명이 생존의 물질적 토대를 잃고 『반혁명적 계층』으로 전락했다.<sup>7)</sup>

지주계급의 숙청에 이어 바로 김일성은 『아직도 제국주의적 착취제도의 잔재와 일제가 부식한 봉건적 착취관계의 잔재들이 완전히 숙청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노동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물질적 생활수준을 제고향상 시킴으로서 제국주의·식민지적 착취의 잔재를 근멸』할 것을 역설했다.<sup>8)</sup> 이 역설은 바로 그로부터 4일 후가 되는 1946년 6월 24일 「북조선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으로 구체적 규정으로 공포되었으나 그것은 그 당시 북한소재의 산업기업소 중의 95~97%(투자액)가 일본소유였다.<sup>9)</sup>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생산관계의 재편성에 주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가장 현재한 「반동계급」이라고 보여지는 산업자본가계층을 정치영향권에서 소외시키려는 저의가 더욱 뚜렷했다. 이미 1, 034개의 중요산업·운수·통신·은행등 중요기관들이 「국유화」된지 반년이 지난 그 때였던 만큼 그것은 계급투쟁강화라는 정치적 의미가 주도적인 것이었다. 「북조선노동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족과 조국을 반역하는 반동의 경제적 토대를 박탈하였고 주도적인 노동계급의 정치적 열성을 제고시켰으며 생산의욕을 고도로 앙양시켰다』고 하는데서 솔직하게 표현되고 있다.<sup>10)</sup>

이상과 같은 생산관계 및 사회관계의 재편성을 「반제·반봉건 민주혁명」(1946초~46년말)이라고 하였다. 토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1949년말까지는 산물부내에서 사회주의 경제형태로 경리되는 것이 90.7%로 늘어나고 반면에 소상품경제형태 또는 사 자본주의경제형태는 9.3%로 줄어들었다.<sup>11)</sup>

「민주혁명」은 북한사회의 과거를 송두리채 뒤엎었다. 농촌구조의 전통적 형태는 붕괴되었고 새로히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은 다음에 다가올 농업집단화를 위해서 평준화되었을 뿐이다. 이 격변하는 사회과정 속에 도시가족은 물론이고 두메산골의 농가까지도 휩쓸려 들어 갔다. 어떠한 잔재부분도 허용되지 않았다. "양반"이나 지주 대신에 "동무"가 등장하여 이 변화는 더욱 과격하게 추진되었다. 북조선공산당은 이것을 「민주혁명」이라고 하였지만 그의 내용은 토지의 전체주의적 근대화였다. 전통을 대체하는 것이 근대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봉건적·식민지적 사회구조를 평준화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무래도 전체주의적

5) 「조선중앙연감」 1950. p.198 이후 참조

6) 「민주주의 민족전선」 간, 「조선해방 1년사」 1946. p.436

7)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2권 1946. p.122 참조

8) 1946년 6월 2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확대대회에서의 연설

9) 김남식, 상계논문. p.108

10)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1권. p.112

11) 「조선노동당 역사교재」(정당사). 1964. P.217 참조

근대화일 수 밖에 없다.

전체주의적 근대화가 사회의 모든 부분을 수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는 "전통의 고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수준화가 극단의 형태를 취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1958년에 이미 전경작지가 농업집단화로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삼형태의 협동화가 100% 실현되었으며<sup>12)</sup> 같은 해 소상품 자본주의형태나 개인상업이 북한땅에서 모습을 감추었다는<sup>13)</sup>에서 알 수 있다. 말하자면 1958년은 「사회주의기초」가 완성된 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전체주의적 근대화의 기초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의미는 이 근대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은 단순히 조직과 동일시되는 존재 즉 "동무"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지 시민으로서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데 있다.

한국의 전통적 사회는 정치적·생산적 기준에서만 평가되는 하나의 다른 사회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분명히 하나의 능력사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능력과 현대성(Modernity)은 반전통적인 것의 속성이다. 이에 비하면 자유의 개념은 반전통적인 것의 내인적 속성이 아닐 수도 있다. 북한사회의 변화는 전체주의적 근대화를 해가면서도 자유를 구조적으로 배제해간 전형적인 형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그러한 근대화의 특징은 우선 갈등을 사회의 전분야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배당(조선노동당)의 권력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이론이 이것을 합리화하고 있지만 그것은 당이 모든 결정을 독점하고 당만이 결정을 실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조장하며 여하한 반대도 탄압하고 당만이 절대적으로 지배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민주혁명」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은 이제 당의 배타적 통제 밑에서 그 주형은 굳어만 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북한사회의 특징은 당을 핵심으로 하는 지배층의 성격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200만의 당원을 자랑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구성원의 사회학적 특징은 그들 개개인의 역사적 배경(전통의 영향)에서 이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정치·경제적 지배층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는 데 있다. 그들은 예외없이 당의 기준에 복종하는 사람들로서만 구성되고 있다. 「새로운 계급」 「새로운 엘리트」로 등장한 그들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당과 당의 정권기관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정치적 획일성의 사회적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배층의 정치적 획일성 그 자체가 사회구조의 안정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외형상의 획일성이 내적 유대와 내용적(생활양식·사고방식) 공통성으로 충만될 때 전체주의적 지배는 위협과 강제적 방법을 지양할 수 있는 것이다.

상당한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는 표현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화의 표현이 아니고 권위주의적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근대화의 필연의 결과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점은 다소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에서 전개되어 온 바와 같은 전체주의적 근대화과정에서는 정치적·생산적 목적합리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그 반면에 전통에서부터의 과격한(혁명적) 비약은 근대적 합리적 사고방식의 발달을 수반할 수 없게 하였고 억압하였기

12) 「북한총감」 1968. P.349 및 340

13) 「조선중앙연감」 1959. P.324 및 335

때문에 인간의 심리부분에서는 전통적 영역이 그대로 잔류해온 것이다. 그것은 전체주의적 지배의 안정성에서 권력과 권위를 동일시하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작용하게 하는 온상이 된다. 정치통제조직의 관점에서는 이 점은 유효한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마는 바로 그 점이 전체주의적 근대화를 중세화하는 원점이 된다는 사실은 북한의 정치·사회발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준거가 되는 것이다.

널리 알려지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통치는 김일성의 독점적 주권적 결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마는 그의 권력은 각종의 기능분자의 위계질서를 통해서 집행된다. 이 새로운 위계질서의 기능은 형태로서는 근대적 합리성의 산물이지만 그 기능은 한국적, 전통적 전체지배를 연장 확대하는 방향에서 작용하고 있다. "동지"와 "동무"라는 말의 사용에 있어서 문맥적 구별은 전통적 위계질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sup>14)</sup> 결국 북한사회의 변화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을 통해서 전통과는 단절되면서 전체사회를 「전체주의적 내용을 담은 현대적 형태」<sup>15)</sup>로 바꾸어 놓은 것이지만 김일성의 유일적 지배의 계속은 그것을 보수화한 나머지 오히려 전체주의적 내용을 담은 권위주의적 형태로 전화해가는 뚜렷한 경향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 2. 새로운 지도층의 형성

1945년 10월 10일~13일 사이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열띤 논쟁 속에서 억지로 설치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단절된 김일성 주도하에 공산당을 새로이 만들겠다는 것은 소련군 당국의 의사였다. 그것은 38선 북쪽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남한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새로운 정치적 에리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후의 북한사회변화와 남한사회변화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분기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부르조아 혁명단계」라고 하면서 제정당, 사회단체들이 공산당과 더불어 등장하였기 때문에 북한에도 복수정당제도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곧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1947년 8월 29일 신민·공산 양당이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이 출현할 때 증명되었다. 우여곡절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결국 소련군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북조선노동당은 그 후에 남로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권까지도 가지게 된 것이다. 북로당을 만든 정치적 의도는 동당창립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보고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인민 앞에 제기되고 있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과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근로대중의 통일적 참모부, 근로인민의 유일한 전투적 전위부대를 공고히 하는 일이다. 이 문제는 노동당을 창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sup>16)</sup>

노동당창립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에리트의 통일화는 북한사회에서의 새로운 정치계급형성의 제일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북한사회의 특징을 규정짓는 일은 노동당의 통제에 의해서 사회의 모든 분야의 지도집단들이 노동당과 동일체가 되는 제이보에서부터 시작된다. 생산수단과 분배가 국가통제에 들어가고 행정과 군통솔도 당에 귀속되고 교육제도, 법제의

14) Horst Kurnizky, Chollima Korea: Ein Besuch im Jahre 23, in: Kursbuch 30, pp. 93~4

15) R. Dahrendorf가 동독사회변화를 분석한 결론에서 한 말이다. 그의 논문 Die beiden Deutschlan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in Gesellschaft und Demokratie in Deutschland, 1965 Munchen, P.461

16) 김일성, 「勤勞大衆の統一的黨を創立するために」, 김일성선집 제1권 (신일본사판) p.66

개편도 당의 통제 밑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에서 노동당통제하에 들어가는 데 대한 반항은 종교세력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난 지가 오래다. 당통제에 대한 사회집단의 반항이 줄어들면 들수록 신입당원의 수는 늘어가는 것이었다. 당권의 유일성이 확립되면 될수록 새로운 정치계급의 형성이 사회 각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동안 김일성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하는간에 이 새로운 정치계급은 김일성을 복종한다는 한가지 점에서는 정치적 확실성을 유지해 왔다. 말할 것도 없이 김일성에 대한 복종이 확립될 때까지는 무수한 숙청이 단행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많은 에리트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에리트가 등장하였지만은 그때마다 그것은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수반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김일성의 입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배층 속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오로지 김일성의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사회에서도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적 변화에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수 있는 기술엘리트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정치계급이 가지는 특징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 특징이라 함은 김일성 개인에 대한 충성이라기보다는 전체주의적 근대화과정 속에서 가져야 하는 출세심, 능력(기술적, 이데올로기적) 만능주의, 국가에 대한 신뢰감, 시장합리성보다는 계획합리성에 대한 믿음없이 새로운 정치계급의 멤버가 될 수 없는 것이다.<sup>17)</sup> 이러한 특징은 결정적으로 북한의 정치체가 남한의 그것과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특징은 더 나아가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 실증되던 안되던 간에 김일성 「이데올로기」라는 상품만으로서 전체주민이 따르고 모방해야 하는 하나의 주형(Stereotype)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주형은 내적갈등(숙청)을 극복하는 기준이 되며 그것은 권력투쟁의 범주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미 정치계급내에서는 하나의 부동한 기준이 생긴 것이다.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토론할 수 있고 이 기준을 범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만이 정치계급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북한의 30년 역사 속에서 「민중기지론」, 「사대군사노선」, 「인민민주주의혁명」 등 여러 가지의 정책변화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모두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논리라는 이유에서 사회학적 소재가 되기 어렵다. 북한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는 간접적이고 다분히 호소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8)</sup>

### 3. 사회가치관 (정치이데올로기) 설정

북한사회의 특권계급의 형성이 당이데올로기의 직접적 산물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또 이데올로기는 전체주의사회에서는 인간들이 대상에 대한 인식론적 근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다는 주어진 조건을 「스테레오·타입」적으로 정식화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기에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현실에 대한 관념구성만을 조장하는 나머지 단순한 주장으로 끝나는 일이 많다. (허위의식)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17) R. Dahrendorf는 이 점에 관해서 동독에는 <현대적 비자유>(eine moderne Illiberalita't)라고 하고 있다. 상계서, p.458

18) 이 점에 관해서 Ch. Lutz는 <무내용 공식>(Leerformel)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의 논문 Theorie totalit r verfasster Gesellschaft. in: Studien und Materialien Zur Soziologie der DDR. K In 1964. pp.34~8 참조

탄압을 수반하든지 설득에 의해서든지간에 내적갈등을 극복하는 기준이 된다. 때문에 권력의 소유자는 언제나 자기가 제기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토론의 중심적 과제가 되며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실제에 있어서 구속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은 조직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지마는 그 조직의 활소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사회적 규범이 인간의 생활사회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이념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가 규범 대신에 정점이 된다. 그 정점에 동의하던 반대하던간에 그것으로서 인간은 자기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계급에게 (전체 사회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김일성사상이 그들의 방향설정의 정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한가지의 조건 밑에서 즉 김일성사상을 사회주의 건설과 동일시하는 한에 있어서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정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가 인간 속에 있는 개별성·분산성·자율성·이기성을 부정하고 집단성과 조직성과 연대성에 입각하는 철학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건설이라는 목표는 계획합리성을 믿는 사고방식의 소산일 수밖에 없다. 김일성은 「민주개혁」에서 그것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그러나 일단 계획이 서게 되면 그 계획의 약점은 더 좋은 계획으로서 대체할 수 있다. 「천리마운동」이 이데올로기적 외장을 띄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경제계획의 약점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이었고 「청산리방법」이나 「대안관리체제」나 「삼대혁명소조 운동」 또한 이 기능을 극대화하는 뜻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경제계획의 약점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 각종 <운동>들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성이 강조될 때는 이미 발표한 계획달성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나 계획전문가등용의 필요성이 정치적으로 해독작용을 한다고 판단될 때 라는 사실이다.

「사상혁명」을 강조하고,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 것을 역설하는 것은 당초의 주장이나 계획에 모종의 장애요소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따지고 보면 당의 결정 김일성의 의지 자체가 모순이었던 것이지만 그것을 새로운 정점제시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형식으로 해결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북한사람들의 태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심히 교란하는데 작용한다.

이 교란작용은 철저한 것이어서 사적 영역을 전연 남기지 않는다. 사적 영역이 교란되는 정도에 반비례해서 사회적 (공적)영역에의 참여가 강요되는 것이다.

인민반 회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의 회의에 참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의 토론회에서 자기를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영역은 조직의 영역이며 그것은 개인의 자발적 발전에 이바지하기보다는 개인을 통제하는 영역이다. 결국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 밑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정점에 따라 평준화되게 마련인 것이다. 정점의 작용이 가족의 전통적 역할을 사회적 영역으로 전가시키며(탁아소제도 등) 국가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남겨두지 않는 이유가 된다. 이 정점은 북한사회변화가 역사적 연속성에서 단절되는 기점이요 남한사회변화와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정표가 된다.

#### 4. 정치중심부의 구축

외국군대에 의한 38선 획정은 지리적으로 북한지역을 남한지역에서 분리하였지마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설정이 정치적 중심지를 평양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관계의 변화, 새로운 지도층의 형성, 사회가치관(정치이데올로기)협정 등 일련의 사회통합과정의 방향제시(정점)는 평양에서 내려 왔다.

사실상 농업의 협동화, 개인상업의 소멸이 완성된 1958년에 북한사회의 기본구조가 확립되었지만은 바로 그 시점이 북한사회가 남한사회와는 결정적으로 그리고 종극적으로 이질적인 사회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의 북한사회변화의 여러 측면은 첨가하면 할수록 남한사회와는 다른 본질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정치적 중심지가 평양으로 되고 평양에 정착하고 있는 김일성이가 「이데올로기」의 정점이 되어 언어까지도 평양방언을 "문화어"라 하여 서울말에서 구별하였다.

인간의 평준화를 수반하는 근대화, 사회적 (조직적)영역의 확대, 당의 통제하에서 진행되는 토론, 수령과 당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전체주의는 당초에 외국에 의해서 분리된 지리적 공간 속에 정치적 중심부를 구축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바지하였다. 1972년 12월 27일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30년간의 사회변화(이질화)의 총결산이었다.

### III. 민족주의적 극복의 가능성

남북사회가 분단후 30년동안 서로 방향과 방법을 달리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은 국제관계면에서나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나 사관적으로나 문화인류적으로나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 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이질화의 실질적 내용은 정치적 동기에서 일어난 사회해체와 재편성의 결과로 구성되게 된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학적 분석이 이 차를 밝혀 낼 수 있는 가능한 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로서의 사회차는 사회학적 연구방법에서 파악된다고는 하지만 그 차를 어떻게 서로 접근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그러기에 이질화극복이라는 문제 자체가 정치적 문제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형식논리적으로 말하면 원래 남북이질화 과정은 냉전체제라는 국제역학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남북동질화 또는 남북의 사회적 거리의 단축을 위한 원리로서는 탈국제역학의 이론으로서의 민족주의가 등장할만도 하다. 사실상 하나의 민족이었던 것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부터 그 갈등과 대립은 비유를 찾을 수 없을만큼 극단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서로 민족통일을 부르짖어 왔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말이다. 그러나 사회학적 사실로서는 어느 쪽도 민족주의적이었다고 할 수 없었다. 이데올로기가 그의 <무내용정식>성을 -이것을 우리들은 명분이라고 하고 있다.- 가장 전형적으로 과시한 곳이 바로 한반도 전역이 아니었던가. 다만 착색만 달랐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남북의 차는 심각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민족을 찾는 빈도가 많아지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또한 민족주의를 의식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때의 민족주의(예컨대 통일)란 자기의 현실 정치적 피구속성에서부터 제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치구호를 위한 민족주의가 민족통일을 위한 것이 아님을 노동당의 거듭



되는 대남정책 결정내용에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정치적 피구속성을 떠나서 남북의 사회적 거리, 사회적 위화, 구성적 차를 사회학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정치적 의지(통일) 결정에 앞서서 밝혀져야 할 문제로서 제기된다. 그러나 이질화에 대한 사회학적 평가가 성립되더라도 정치적 의지결정이 그것을 결정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면 그때의 민족주의란 여전히 냉전체제의 영향영역에서 벗어난 정치의지형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명심해 두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면 북한의 이질화과정이 어느 정도로 이질화에 대해서 면역성을 보지하게 되었는가를 추정적으로 진단하는데서 실마리를 찾아보자.

우리들이 북한사회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네가지의 요인(측면)이 상호연관적 작용으로서 북한지역에 하나의 자율적인 정체를 구성해 냈다고 봤다. 그러나 그 분석과정에서 두가지의 개연성에 입각한 두가지의 시사를 얻었다. 그것은 첫째, 북한사회가 <사회주의건설>을 통해서 그 자체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지만은 과연 그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가? 둘째, 반면에 북한사회의 이질화 과정에서도 아직도 구성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사회영역이 있다면 어떠한 영역인가?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통일이라는 미래설정에 대해서 적극적 의미가 있을 것인가?

재론의 여지도 없이 김일성이나 노동당이 어떠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의 사회적 문맥은 그때마다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면 질수록 북한사회는 전통에서부터 격리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 영역이 동시에 그리고 동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변화의 층이라고 할까 변화의 형태라고 할까(이러한 사회적 사실을 설명하는 개념은 아직까지 필자로서는 정립하기는 어렵다) 하여간 동일한 과정 속에서 두 개의 층별적, 형태적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하나의 층에서는 전체주의적 근대화가 완벽하게 수행되었다. 주체사상으로 전체사회를 일색화하겠다는 영역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의 정점에 접근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그 나름대로의 구조들이 생긴다. 이 구조들은 이질화된 영역이면서도 동시에 통일에 대해서는 사회학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전체주의적이고 따라서 자유의 구조를 배제하면서도 전통에 입각한 권위주의적 포장을 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층에서는 전체주의적 근대화의 결과로서 여하간에 강제적으로 모든 인간이 전통에서 분리되어 평균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당에 의해서 주어진 사회생활의 규범에 따라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권계급에로의 상승기회도 동등하게 주어지고 있다. 분명히 사회적 차원에서 나타내는 전체주의적 근대화의 긍정적 측면이다. 그 이유는 통일이라는 미래상 속에서도 신분적, 전통적 사회적 불평등구조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의 층의 작용이 북한사회를 하나의 독자적인 사회로 만들어 낸 것이다. 독자적인 사회란 단순한 지도층의 교체로서 기존사회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것은 비록 시작에

서는 소련군의 작품이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소련군의 렛렘이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북한사회가 자유선거를 통해서 남한사회와 합칠 때 많은 변화에 직면하면서도 골격부분에서 상당한 잔기를 남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러면 문제는 어떠한 영역이 통일될 때에도 비교적으로 불변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영역이 급속한 자변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노동당이 구성해 놓은 정치적 지도층이 몰락할 가능성은 11년제 의무교육 제도가 소멸하는 가능성보다 더 확실하다. 동시에 완벽하게 국유화 또는 집단화된 모든 생산수단과 교환제도는 상당한 부분이 헤이되어 개인경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도시나 농촌주민들의 사회생활양식이 1945년 이전의 그것으로 환원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더 큰 것이다. 또 북한주민들이 경제계획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벗어나는 속도는 서로 토론하는 습성을 포기하는 속도보다는 느릴 것이 충분히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들의 정확성은 북한사회의 전체주의적 근대화의 실질적 추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 영역이 철저히 전체주의적 내용으로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통일을 계기로 해서도 그 <근대적 사회형태>는 존속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 <근대적 사회형태>를 우리의 평화통일 구상속에 어떻게 흡수하는가에 있는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지만 이 점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 줄 것은 틀림없다.

우리들이 이러한 사회학적 분석평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유보조건하에서 한 일이다. 즉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밑에서 한 분석이란 말이다.

외양적, 정치적 공세나 군사적 공격은 하루 아침에 남한사회의 사회적 문맥을 뒤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사회변화의 내인적 분석에서 해답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만큼 통일이라는 민족(주의)적 과제는 사회학적 분석을 정치적 결정의 필수준거로 삼아야 할 당연성이 제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남북대화 제17호

(1978. 4 ~ 1978. 7)

# < 목 차 >

제1부 평화 정착의 현실적 접근 노력 .....	3
<박대통령, 6·23 5주년 특별담화> .....	3
제2부 남북대화 소식 .....	20
<남북적십자 회담> .....	20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유산 .....	20
민족적 차원에서 조건없는 대화와 교류를 .....	31
제3부 그밖의 남북관계소식 .....	38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 .....	38

## 제1부 평화 정착의 현실적 접근 노력

<박대통령, 6·23 5주년 특별담화>

『남북한 민간경제협력기구』 구성제의  
박대통령, 「6·23선언」 5주년 특별담화

<박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5주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측에 대해 남북간의 교역, 기술협력, 자본협력의 길을 트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민간경제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관계각료회의를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또한 「이 제의가 실현될 경우 남북동포의 복리증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북한당국이 허심탄회하게 이에 응해 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적십자회담·남북조절위원회 등 기존 대화기구의 무조건 재개와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에 응하여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공존공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도 북한측에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6·23선언」 5주년을 맞은 특별담화 전문이다.>

-편집자 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가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내외에 천명한지 오늘로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6·23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대화를 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남북동포의 복지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하나하나 착실히 다져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와같은 일념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70년 남북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한 8·15선언을 비롯하여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고 이어서 1972년에는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1974년 1월, 6·23선언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나는 북한측에게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한 바 있고 그해 8월에는 상호불가침, 교류와 협력, 궁극적인 자유총선거를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공산집단은 우리의 이같은 평화제의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5천만 겨레의 여망이 담긴 남북대화마저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근래에 와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대화는 외면한채 소위 「대미협상」을 들고 나오는 등 엉뚱한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저의는 아직도 무력적화통일에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조국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은 남북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해 나가면서 쉽고 실제적인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6·23선언에서 통일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남북이 같이 「유엔」에 가입할 것을 제의했으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도 국가간에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치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여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넓혀나가는 것이 일방적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북한측에 대해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깨끗이 버리고 하루빨리 기존 대화기구의 무조건 재개와 상호불가침협정체결에 응하여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공존공영을 위한 노력을 우리와 함께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같은 피를 나눈 동족으로서 5천만 동포의 복리와 민족사의 장래를 내다 볼 때 우선 남북간의 교역, 기술협력, 자본협력의 길을 트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민간경제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의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관계각료회의를 가질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의 이 제의가 실현될 경우 남북동포의 복리증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북한당국이 허심탄회하게 이에 응해올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

번영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목표이자 5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남을 헤치면서 국력배양에 총력을 경주해 왔고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갖은 노

력을 기울여 온 것도 오직 이 과업을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절실한 민족적 숙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땅에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남북은 다같이 민족의 소명앞에 겸허한 자세로 이 어두운 구름을 제거하는데 힘을 합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앞에 어떤 난관과 도전이 있다해도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자 말겠다는 우리 국민의 굳은 의지가 있고 단결이 있는 한 반드시 평화통일의 길은 열리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대도를 힘차게 매진해 나갑시다.

이와같이 6·23선언 5주년을 맞아 박정희대통령이 특별담화로 북한측에게 새로운 제의를 한 것은 7·4남북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합의사항의 구현과 대화의 정상화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제의해 온 여러가지 평화통일노력을 현실에 맞게 보다 발전적으로 구체화시킨 적극적인 노력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지난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인 8·15선언을 통하여 북한공산집단에게 『더 이상 무고한 북한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 이래 1971년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발표를 통한 남북회담의 주도, 1973년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1974년의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제의 및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 등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공산집단은 이같은 우리의 평화통일제의를 한결같이 거부해 왔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5천만 겨레의 염원이 담긴 남북대화마저도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한반도에는 북한공산집단의 남북대화 거부와 무력적화통일정책 추구로 인한 긴장과 전쟁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5천만 동포의 복리증진과 공동번영을 누리기 위한 남북간의 협력증진책으로서 발표된 이번 제의는 평화통일의 성취를 위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대화의 촉구인 동시에 온겨레의 복지와 번영을 촉구하는 동족애의 발로인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국가간의 분쟁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정치이념이나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넓혀나가는 것이 일반적 추세로 되어 있는 바 이번 제의는 이와같은 국제사회의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가장 현실적인 제안인 것이라 하겠다.

특히 우리가 남북교역을 제의한 것은 남북동포의 복리를 증진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서로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는데 있으며, 북한측이 이를 받아 들인다면 첫째로 남북간의 교역등 경제협력

을 위해 남북한의 대표가 대좌함으로써 중단되었던 남북대화가 재개되며 둘째로는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통해 5천만 민족 전체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기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동포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은 민족의 동질성을 되찾고 상호신뢰를 회복케 하는데 다시없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교역대상품목은 앞으로 북한측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여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가 구성되면 그 곳에서 진지하게 논의·결정되겠지만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쌀생산에 있어서 자급자족하고도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편리하고 안락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갖가지 훌륭한 공산품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무연탄, 철광같은 지하자원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형편에 있지만 북한은 이러한 지하자원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이처럼 쌀을 비롯한 우리의 풍부하고도 훌륭한 공산품 등과 무연탄, 철광 등을 상호 교역한다면 남북동포의 복리증진과 생활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협력이나 자본협력 역시, 남북동포의 복리를 증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세계수준에 도달한 우리의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여 북한동포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장을 세우고 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북한동포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자본협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이 북한동포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해 어떠한 공장을 세울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차관을 제공하는 등의 자본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협력과 자본협력은 남북간에 대화와 신뢰의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의를 통해 정부가 북한측에 교역과 기술 및 자본협력을 하자고 제의한 것도 어디까지나 같은 피를 나눈 동족으로서의 민족적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것이지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협력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측에 민간경제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간 경제협력촉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각료회의를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북한당국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민족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 또는 협의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5천만 민족 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를 협의, 해결할 용의까지도 있음을 밝힌 것으로 우리의 적극적이며 성의 있는 태도의 표명인 것이다.

또한 이번 제의는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민간협의기구」와 남북조절위원회 등 기존의



남북대화기구와는 상충내지 배반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공존 내지 병행적인 성격의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제의는 남북조절위원회 등 이미 남북간에 합의한 대화기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측이 남북조절위원회 등 기존 대화기구의 재개와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경제협의기구나 관계각료회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북한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해 보자는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우리의 대북한 협의자세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지난 1970년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한 평화구상으로 남북간의 선의의 경쟁, 즉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을 제의한지 8년이 지난 오늘의 남북한 경제현황은 어떠한가?

오늘날 북한의 경제실태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살펴보면 해방이후 30여년간에 걸친 남북한간의 경제경쟁도 지난 1969년을 분기점으로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따라 그 양상이 뒤바뀌어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68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1인당 GNP(국민소득)는 한국을 한발 앞서 왔으나 한국의 1, 2차 경제계획이 성공리에 추진됨에 따라 1969년부터는 우리가 오히려 앞서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력격차는 3차5개년계획이 시작됐던 1972년부터 현저히 벌어지기 시작, 1976년말 우리의 1인당 GNP는 7백달러에 달해 북한의 3백63달러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GNP의 경우 지난 1967년에 한국이 42.4억달러로 북한의 21.1억달러의 2배를 약간 상회했으나 10년이 지난 1976년에는 250.7억달러 대 58.1억달러로 약 4.3배나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본적인 식생활의 경우만 하더라도 북한의 전체 곡물생산량 중 쌀의 비중은 40%에 불과하며 옥수수 55%, 기타 잡곡이 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주곡의 완전자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77년에는 북한에 식량원조를 제의했고 식량이 부족한 일부 우방국가에 수출까지 했다.

한편 북한은 1946년에 토지개혁을 공포하고 협동농장을 주축으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적 집단농업경영체제를 확립, 농업생산에 주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추진된 7개년계획기간 중 기본건설 투자액 107억원의 19.7%인 29억원을 농림, 수산부문에 투입했으면서도 GNP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의 비중은 5%에 불과했고 1970년대에 실시된 새로운 6개년계획기간 중에도 농업부문에 전체 투자액의 20% 이상을 투입했으나 농업생산액 비중은 역시 5% 정도에 불과했다.

1976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북한은 농업생산기반에서부터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경지면적은 224만1천ha로서 전 국토의 24.1%를 차지하고 있으나 북한은 207만1천ha로 우리보다 7.5% 낮은 16.6%의 경지율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논과 밭의 비율은 우리가 논 126만3천ha, 밭 97만8천ha인데 비해 북한은 우리와 반대로 밭 137만4천ha, 논 69만7천ha로 우리가 북한보다 1.8배가 넓은 논을 확보하고 있다.

이밖에 영농기술도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10a당 생산량이 벼의 경우 평균 5백kg을 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3백60kg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광공업면에 있어서도 1945년 남북한이 분단될 당시만하여도 중공업의 기반이 되는 철광석은 90%이상, 무연탄은 87%, 유연탄은 98%가 북한에 몰려 있는 상태였으며 풍부한 수자원과 더불어 전력생산도 북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지하자원과 동력자원의 편제로 1960년대까지 북한은 우리에게 비해 금속공업면에서 우위를 견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방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의욕적인 고도성장이 추진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 우리는 중공업면에서도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일국의 국력과 공업화 수준의 척도가 되는 철강생산의 경우 1976년에 우리가 453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게 되는데 비해 북한은 280만톤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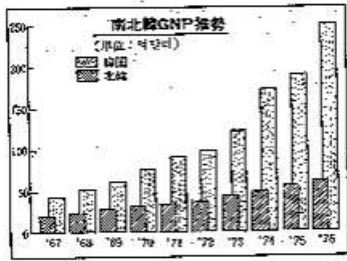
또한 무역수지면에서도 북한은 1970년대부터 무역적자와 외채로 허덕이고 있어 1976년 우리의 수출입이 165억달러 규모인데 비해 북한은 불과 15억달러로 비교도 안될 정도인 것이다.

이같은 남북한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이 기적의 성장을 이룬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경제는 GNP의 15%가 넘는 과중한 군사비부담, 군수산업에의 집중투자로 인한 타산업간의 불균형 초래, 수용능력을 무시한 무절제한 외자도입 등 침체요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소비재까지 수입을 개방하게 된 수준으로 성장할 때 북한은 주요 소비물자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맞고 있을 정도로 오늘의 남북한은 심한 경제력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주요지표(1976년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A)	북 한 (B)	B/A(%)
인 구	천인	35,860	16,006	44.6
인구증가율	%	1.64	2.4	146.3
국 토 면 적	km <sup>2</sup>	98,477	122,370	124.3
G N P	억불	251	58.1	23.1
1인당 GNP	불	700	263	37.6
군사비부담율	%	5.3	14.9	281.1
투 자 율	%	25.0	35~40	140~160
성 장 율	%	15.5	4~5	25.8~32.3

자료=한국 : 경제기획원통계국, 북한 : 국토통일원



이처럼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격차 속에서 그동안 이룩해 놓은 경제발전을 토대로 동포에 로써 북한주민들의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우리의 인도적 제의마저 북한당국은 정면으로 거부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당기관지 「로동신문」의 논설과 이를 인용한 「평양방송」 보도 등을 통해 박대통령의 이번 제의에 대하여 「우스꽝스러운 정치만화」 운운하며 비방하고 한국의 6·23선언 자체를 「취소하라」고 주장, 남북간의 교류와 이를 기초로 한 한반도 평화통일추구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5천만 남북동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외면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측이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대화에 다시 응하고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를 받아 들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기다릴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력의 기틀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북한측이 우리의 이번 새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다시 촉구하는 것이다.

<다음은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5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현실적 접근방안을 제시한 박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한 국내 주요 일간지의 사설이다> -편집자 주-

### 5천만민생의 복지부터

#### 박대통령담화는 평화통일염원의 실천이다

박정희대통령의 6·23평화통일외교선언 5주년을 맞았다.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조국평화통일의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남북의 5천만동포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민족적 염원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박대통령은 이 6·23선언을 더욱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킨 방안으로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을 내외에 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공산집단은 겨우 열렸던 남북대화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고 직통전화마저 불통케 했음은 물론 평화통일 외교선언정신을 왜곡, 민족분단운운의 모함을 서슴치 않았다.

#### 불신의 벽부터 없애자

북한공산집단측이 입으로, 겉으로 아무리 평화를 위장한다해도 그들의 저의는 아직도 무력적화통일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뻔히 드러난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의 염원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다.

그리고 조국통일이 아무리 급하고 사무친 염원일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 방법에 의해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움직일 수 없는 신념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 왔듯이 평화통일을 할 때까지는 먼저 남북간에 쌓인 불신의 벽부터 허물고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등 하기 쉬운 일부터 한가지씩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가는게 그 지름길이라는데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 남북간의 교역의 길 트자

그런 뜻에서 박정희대통령이 6·23선언 5주년에 즈음해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측에 남북간의 교역과 기술협력, 그리고 자본협력의 길을 트자고 한 제의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정착 노력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대영단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동안 7·4공동성명에서 남북대화와 함께 교류에 합의했고 그에 따라서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어서 6·23선언과 불가침협정제의에서도 상호교류를 촉구하고 노부모방문, 성묘단과 스포츠·학술 등 각종교류를 제의하고 박대통령은 1977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식량부족으로 시달리는 북한측에 식량원조를 할 용의가 있음도 표명했었음을 상기한다.

그러나 이번의 경제교류제의는 그동안 각종 교류제의나 원조용의표명보다 좀더 구체화된 것이고, 더구나 그것이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발전된 것임이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경제교류와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구성,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관계각료회의까지도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은 매우 실질적이고 신축성있으면서 중요한 제의라고 믿는다.

#### 교역못할 까닭없다

여기서 교역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예컨대 우리의 식량, 공산품과 북의 철광석, 석탄 등을 바꾼다든지 기술이나 자본협력 등 5천만민족 전체의 생활과 복지·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6·23선언으로 세계적으로 문을 열고 실제 비적성공산권과 교역의 길을 트고 있다. 또 북한측도 일본이나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과 교역하거나 기술·자본협력을 원하고 있음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핏줄 동포끼리 교역하고 협력하지 못할 까닭은 없는 것이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연방제나 대민족회의나 허황한 선전에만 골몰하지 말고 손쉽고 긴요한 교류·협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선 그들의 민생부터 해결해야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북한측은 박대통령의 이번 제의에 허심탄회하게 호응할 것을 충심으로 촉구하는 것이다.

-경향신문(1978. 6. 23)-

### 남북경협기구의 구상

박정희대통령은 23일 남북간의 교역, 기술협력 및 자본협력의 길을 틀 것과 이를 위해 쌍방의 민간경제 대표가 참여하는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6·23평화통일외교선언 5주년을 맞아 발표된 특별담화를 통해 박대통령은 북한당국이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고 남북간의 긴장완화 공존공영을 위한 노력을 함께 벌일 것을 촉구하고, 경제협력을 위해 민간기구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관계각료회의를 가질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1970년 박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남북간의 선의의 경쟁을 제의한 것을 시발점으로, 1971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고 이어 1972년에는 7·4남북공동성명을 거쳐 남북대화의 문을 열었다. 또한 1973년에는 6·23선언을 발표했으며 1974년에는 남북상호불가침조약체결을 제의했고 그해 8월에는 상호불가침, 교류와 협력, 자유총선거를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최근들어서는 1976년 4월 남북고미술품 교환전시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며 1977년 1월에는 대북한식량원조를 제의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1973년 8월 억지구실로 남북조절위를 중단시킨 이래 계속 대남무력적화를 위한 갖은 책동을 부리는 한편 우리측의 정당한 제안을 모조리 거부해 왔다. 「카아터」미국 행정부가 들어서서 주한 미 지상군철수방침을 밝힌 다음부터 국제정세에 대한 그릇된 망상에 사로잡혀 대미직접협상의 길을 트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북한은 입으로는 평화를 운운하면서 실지로는 무력적화통일야욕을 버리지 않고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만약 그들이 말하는대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할 의사가 있다면 우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상호신뢰가 가능하도록 대화와 교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제를 초월하여 상호 이득이 되고 5천만 민족전체의 복리에 이바지 할 경제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첫 단계인 줄 안다.

박대통령은 교역 기술협력 및 자본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북한측의 반

응이 있는 다음에 나올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측의 식량 및 공산품과 북한측의 철광석, 무연탄 등 적당한 품목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또한 협의기구로서 박대통령은 민간기구와 필요하다면 관계각료회담도 제의했는데 그 취지는 민간차원이든 정부차원이든 관계없이 협의창구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우리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북한당국이 이같은 진지한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시하겠지마는 그들이 되풀이하는 평화선전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이 제안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양측의 성의있는 회답을 기대하는 바이다.

-동아일보(1978. 6. 24)-

### 남북 경제협력의 새 제의

#### 문제해결을 위한 진실성과 성의

박정희대통령은 6·23 평화통일외교선언 다섯 돌에 즈음한 특별담화에서 남북간의 교역·기술 협력과 자본협력의 길을 트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민간경제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계각료회의를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남북간의 긴장이 7·4남북 공동성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이라고 하겠다.

남북의 서로 다른 사상과 사회체제는 통일문제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만큼 빠른 통일이 민족의 가장 절실한 염원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또 지난 30여년의 분단사가 그 점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논하기 이전에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남북은 다같이 노력해야 하며 통일될 때까지는 좋든 싫든 남북은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객관적 요청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쪽이 이러한 명제를 저버린채 통일문제의 성급한 해결을 들고 나온다면 바로 그것이 남북관계가 긴장되는 요인으로 되게 마련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촉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우리측의 이번 제안도 평화적 남북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서로에게 전쟁의 위협이 없는 가운데 서로간에 협조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역사적 안목으로 통일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데 참뜻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남북관계의 성격에 비추어 경제분야를 비롯한 남북간의 비정치적 교류와 협력까지도 서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평가하기 마련인만큼 서로의 사상과 체제에 다같이 위협이 가해지지 않아야만 그 교류와 협력의 광장이 열릴 수 있는데 유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남북교류와 협력 등을 어떤 쪽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 꾀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경계를 불러 일으킬 뿐 동의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의를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이거나 허구적인 협력제안은 서로의 선전전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 남북관계의 개선에는 유해무익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우리측의 이번 제안에 담겨 있는 진실성과 성의는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것은 북한공산집단이 무력통일의 야욕을 버리고 남북간 선의의 경쟁에 의한 평화통일에 응하라고 호소한 8·15선언, 7·4남북공동성명,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남북불가침협정의 제의, 평화통일 3대원칙 등과 맥락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제의를 남북관계의 현실정에 맞춰 보다 구체화시켰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제안은 서로가 동의하기 쉽고 공동이익을 도모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 예시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평양측이 남북의 경제협력에 성의를 나타낸다면 이밖에도 여러 분야 및 여러 방법과 형태의 협력을 쌍방의 토의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평양측에 남북간의 긴장을 풀고 평화적 관계를 확보하고자하는 우리측의 제의를 깊이 음미함으로써 긍정적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싶은 것이다. 그들이 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면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평화의 가능성과 전쟁의 위험을 모두 안고 있는 유동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물론 이 가운데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위태세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우리측의 새로운 제의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전기로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걸고 평양측의 반응을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신문(1978. 6. 24)-

## 남북대화와 경제협력

### 6·23특별담화가 의미하는 것

박정희대통령은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5주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관계각료회담을 가질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발전적으로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는 이 6·23특별담화는 7·4남북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계속 구현하고 북한의 일방적 대화거부로 인해 중단된 남북대화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표시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고 그 구체적 제의에 있어 남북간의 교역, 기술, 자본협력의 길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려는 성의와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남북조절위나 남북적십자회담과 같은 기존의 대화창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뚜렷이 나타나 있고 민간기구내지 각료회의 등과 같은 여러개의 대화창구를 폭넓게 개방하고 있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의하고 있는 남북한 평화정착에 관한 실질적 방안제시와 함께 5천만동포의 민생을 안정시켜 평화와 복지와 번영의 남북공존체제로의 발전을 회귀하고 있음을 강력히 천명한 셈이다.

사실 남북간의 교역이나 기술 또는 자본협력의 문제는 찾아보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더구나 한반도문제 해결의 현실적 요구는 남북한 두 개의 정치실체를 그대로 인정한채 성실한

대화와 교류 특히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교류를 촉진시키면서 실리를 바탕으로 한 평화정착에 관심을 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한이 상호신뢰를 회복하는데 진력하면서 서로가 사심없는 경제적 교류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우선은 광공업, 농림, 수산 등 경제전반에 걸친 협력에서부터 물자의 교역, 인력, 자본, 기술 등 제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관계를 확대시켜 나갈 그 실리는 결과적으로 남북한 동포의 민생안정에 직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6. 23특별담화의 참뜻이 엿보인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이런 남북사이의 경제교류가 그들의 일관된 정치, 군사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가나 경제교류가 그들의 이런 정치, 군사 목적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또 경제교류가 구체화할 경우 남북한의 사회체제가 갖는 특성, 특히 북한의 지나친 폐쇄성과 한국사회의 개방성 간에 상당히 거리가 있고 북한으로서는 우리의 개방성이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위협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지금까지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남북한 동포가 같은 단일민족이라는 점을 중시 한다면 동족끼리의 교역에 서로가 협력 못할 까닭도 없고 북한으로서는 다른 자유국가나 비동맹 국가와의 기술교역 내지는 자본협력의 길을 트고 있는 만큼 한 핏줄을 나눈 동족사이의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일이다.

북한 당국이 진정 남북의 평화공존을 원한다면 우선 우리가 제의한 민생안정을 위한 경제교류의 구체적 제의에 허심탄회하게 호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당장이라도 그 실현을 위한 민간경제 협력기구의 구성에 동의해 오는 것이 남북대화의 재개, 구체적 남북공존체제의 발전적 장래를 돕는 길이 될 것이다.

- 신아일보 (1978. 6. 24) -

####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박대통령, 「6·23 특별담화」를 보고

(1)

박정희대통령은 23일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5주년을 맞아 북한측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제의를 했다.

박대통령은 오늘날 국가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치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여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넓혀가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을 지적하고 북한측에 대해 무력 적화통일의 망상을 깨끗이 버리고 하루 빨리 기존 대화기구의 무조건 재개와 상호불가침 협정 체결에 응하여,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공존공영을 위한 노력을 우리와 함께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같은 피를 나눈 동족으로서, 5천만동포의 복리와 민족사의 장래를 내다 볼 때 우선 남북간의 교역, 기술협력, 자본협력의 길을 트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민간경제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



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의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관계 각료 회의를 가질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6·23선언」 5주년에 즈음한 특별담화에서 북한측에 제의하고, 이를 남북동포와 국민 앞에 공개했다.

70년대에 비롯된 조국 평화통일을 지향한 남북 상호접근과 민족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이땅에 통일의 기반이 되는 평화조건을 자리잡게 하자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또 한번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형태로 남북의 동포 앞에 제기된 것이다.

(2)

박대통령의 이와같은 제의는 73년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구체적으로 진일보 시킨 것이 된다.

잘 알듯이 「6·23선언」은 제2차대전 이후의 냉전기를 거쳐 평화공존기로 들어선 국제조류에 적응하여 한반도에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남북간에 새로운 질서를 마련함으로써 조국평화통일의 길을 다지기 위한 시급하고도 절실한 민족적 과제를 천명한 것이었다. 더 좀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조국통일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대화를 하고, 교류와 협력을 하고, 남북동포의 복지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나라의 평화통일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자는 것이 바로 「6·23 선언」의 기본 정신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6·23선언」을 전후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70년의 「8·15평화통일 구상선언」, 다음해 71년의 「8·12이산가족 찾기제외」, 72년의 「7·4남북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이끈 남북대화, 그리고 73년의 「6·23선언」, 다시 74년의 「남북상호불가침 협정 체결제외」 및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 등으로, 평화적인 남북관계 수립을 위해 계속 노력과 성의를 저버리지 않았다.

뿐만이 아니라, 77년에는 북한측이 73년 소위 「8·28성명」이라는 것으로 끊어버린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 그들이 오기를 꺼리는 서울이 아닌 판문점 또는 제3의 장소에서라도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고,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식량원조를 할 용의가 있음도 밝히기까지 했다.

(3)

이번 박대통령의 「6·23경제협력제외」는 이와 같은 우리의 부단한 성의와 노력 위에 세워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 남북은, 그리고 5천만 민족은 오늘의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제각기 민족을 단위로 민족의 실리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수 천년 적대관계에 있어 온 아랍과 이스라엘 마저도, 각자의 민족이익을 위해 총뿌리 대신 대화와 협상으로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분단의 나라이면서 동·서독은 비록 통

일은 먼 이상에 두고라도, 현실적으로 평화적인 공존과 광범위한 교류를 통해 또한 민족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 같은 민족으로 총뿌리를 겨누고 극한적인 불신과 적대관계를 일삼고 있는 것은 오직 한반도의 한민족뿐이다. 이는 자칫하면 민족의 변영이 아니라 민족이 더불어 멸망할 수 있는 엄청난 비극적 관계이다. 남북은 민족적 자학과 자해를 일삼고 있는 이 비극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비극에서 벗어나는 길을 민족공동의 노력으로 찾고 뚫어야 한다. 남북은 6년전 하나의 민족으로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선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할 것을 7.4공동성명을 통해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그 실천을 위해 곧 남북간의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해서 우선적으로 한 민족으로서의 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신뢰속에 각종 교류를 함으로써 그것을 촉진하고, 다시 남북동포의 복리증진을 공동의 노력으로 가속화시킴으로써, 더욱 그 성과를 구체적이고도 부푼 것으로 다져가야 한다. 그것만이 민족지상의 과업인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다.

박대통령의 「6·23경제협력 제의」는 바야흐로 그 실현을 염원하고 촉구하는 시대적 요청의 표현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이 제의에 민족적 양식으로써 긍정적으로 응함으로써, 민족사의 새 장을 공동의 노력으로 여는 공지를 함께 할 것을 절실히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의 재개는 불가피한 것이 된다.

-조선일보 (1978. 6. 24)-

#### 남북간의 경제협력

박정희 대통령은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제5주년을 맞아 남북한 관계에 관해 또 하나의 획기적 「이니셔티브」를 취했다.

남북한간에 교역·기술협력·자본협력의 길을 트고 이의 추진을 위해 쌍방민간경제계 대표로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의한 것이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관계 각료회의를 가질 용의까지 표명했다.

이번의 「6·23담화」는 지난 70년의 8·15선언과 7·4공동성명, 6·23선언, 평화통일 3대원칙 표명등을 통해 천명된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발전적으로 구체화한 조치다.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접근방식은 우선 손쉬운 문제부터 해결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축적하여 그를 바탕으로 정치, 군사적인 근본문제의 해결에 나서자는 것이다.

#### 점진적 통일에의 접근

바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식이다. 이산가족의 재결합이란 인도문제가 남북대화의 발단

으로 제기되었던 것도 이런 점진적 해결이란 기본방식의 일환으로서였다.

이산가족 문제와 이번 경제협력 촉진제와는 모두 우선 인간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족의 이산에서 오는 인간적인 고통과 5천만 동포의 생활수준이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로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인간의 생활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면 이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박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제의의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상호간의 불신 해소→민족의 동질성회복 →평화통일의 성취란 긴 여정의 단서가 제공된다는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

경제협력이란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간에는 서로 보완될만한 여지가 상당히 있다.

원래 남북한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상호 의존적인 체제였었다. 지하자원과 전력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은 공업지대로 개발되었고, 경지가 많은 남한지역은 농업 및 경공업 지역이었다.

따라서 국토의 분단은 남북에 파행적 경제권을 형성시켰으나, 지난 30여 년간 각각 자립적인 경제단위를 지향함에 따라 의존여지가 대폭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 폭넓은 교역대상품목

그러나 지금도 비교우위에 입각한 보완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 상호 이익을 꾀할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

우선 남북간의 교역은 수송비가 적게 들어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 비해 조건이 좋다.

교역품으로는 우리의 직물류·신발류·전기기구·의약품·석유제품·종이 등의 공산품과 북한의 무연탄·철광석·아연 등의 광산물이 당장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이다.

또 기술·자본의 협력에 있어서도 금강산·백두산 등의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민생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생산부문이라든가, 그 대상을 찾으려고 들면 개발여지는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경제협력이 민생부문에 국한될 수밖에 없겠지만, 서로 불신만 해소되면 대상을 여타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6·23담화」가 경제협력의 추진을 위해 민간기구의 구성제에 함께 각료회의를 열 용의까지 밝힌 점에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우리측의 성의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의 실만 거둘 수 있다면 협의창구에 구애되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신축성 있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정치이념이나 사회체제를 초월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넓혀가는 추세에 있다.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서로간의 일상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협력마저 마다할 이유는 결코 없는 것이다.

#### 대화재개의 계기로

더구나 이를 위한 남북한 대표의 대좌가 중단되었던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자연스러운 계기로 뒀에 있어서라.

만일 이번 제의마저 북한측이 외면한다면 이는 5천만 민족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동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제의는 설혹 일방에 의해 단기적으로 외면된다 해서 끝까지 외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측의 단기적인 반응이 어떻든 우리로서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니셔티브」를 계속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경제협력 제의에 대한 북한측의 현실감각 회복과 긍정적인 반응을 기다려 보고자 한다.

-중앙일보 (1978. 6. 24) -

#### 남북경제협력의 당위성

##### 공동번영을 위해 북한은 호응하라

우리 시대의 오늘의 좌표는 전쟁위기의 먹구름에도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평화정착을 통한 통일 접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으로 풀이된다. 그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솔직하고 착잡한 정세판단이다.

민족적 양식으로 말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남북간의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긴장 완화를 거쳐 민족적 대가정의 부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것은 기적을 기다릴 것도 없이 우리가 스스로 서로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우선 쌍방이 무력사용 기도를 포기하고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발전시키면 된다. 그럼에도 남북대화마저 일방적으로 중단된채 남북조절위와 적십자회담이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어느 일방에 의해서건 한자리에 모여 앉는 기연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5천만의 소리 없는 소리이며 줄기찬 염원이었던 것이다.

때마침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5주년에 즈음한 박대통령의 특별담화가 발표되었다. 북한

측에 대해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고 기존대화기구의 무조건재개와 상호불가침협정체결에 응할 것과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공존공영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것만에 그치지 않았다. 새 제의의 골자는 남북간의 교역, 기술협력, 자본협력의 길을 트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①쌍방의 민간경제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간 경제협력추진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 ②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관계각료회의를 가질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새 제의의 특징은 73년의 6·23선언이 유엔 동시가입과 공산권에 대한 상호주의 문호개방등 외교정책의 차원이던 것과 대조할 적에 이번에는 남북에 걸친 민생안정과 직결된 경제적 차원의 것이라는 데 있다. 정치적 말썽 보다도 「쉽고 실제적인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는 현실적인 접근자세가 뚜렷하다.

회고하면 33년전 38선이라고 이름하는 국토 양단선이 타율적으로 그어졌을 적에 당장 문제가 된 것중의 하나는 동일 경제권의 인공적 단절로 말미암은 민생 위협이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그 부조리의 자율적 시정이 현실적 일정에 올라야 하리라고 전망되었던 것이다. 지금이 바로 남북간 경제협력추진을 동족끼리 이룩할 시기라고 본다. 양지역의 경제협력은 틀림없이 남북동포들의 유무상통과 복지향상, 상호 신뢰속의 번영, 나아가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보dana은 조건 형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생각컨데 정치적 고집이나 야망등은 선량한 대다수 우리 겨레의 민생안정과 진정한 염원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북한측이 민족본연의 결백한 양심과 허심한 자세를 되찾아 남북경제협력 제의에 쾌히 호응할 것을 촉구하여 마지않는다. 또 그것이 북녘 동포들을 포함한 5천만의 한결같은 갈망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한국일보 (1978. 6. 24)-

## 제2부 남북대화 소식

### <남북적십자 회담>

####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유산

##### 북적,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마저 거부

북한적십자회측은 지난 3월 20일 상오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기로 합의된 제26차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고를 대한적십자사측에 함으로써 유산시켰다.

북한적십자회측은 회의개최를 하루 앞둔 3월 19일 오후 7시 「평양방송」을 통해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7일 사이에 실시된 한미연합작전훈련인 「티임 스피리트78」 작전이 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 남북관계를 극도로 침체화시키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이런 형편에서의 회담개최는 적십자정신에 어긋난다」는 등 생떼를 쓰며 이 훈련을 구실로 돌연이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의 방송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측에 보내왔다.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는 3월 20일 오전 8시 KBS방송을 통하여 북한적십자회측에 1천만 이산가족들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대한적십자 대표단은 예정대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 <대한 적십자사 대북 통지문>

1. 귀 적십자회측은 1978년 3월 19일 오후 7시 「평양방송」을 통하여 최근에 실시된 한미연합작전 훈련을 구실로 1978년 3월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기로 쌍방이 합의한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통고하였습니다.
2. 우리는 한미연합작전 훈련이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연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귀 적십자회의 이와 같은 부당한 회의연기 통고는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처사인 동시에 승고한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과 1천만 이산가족들의 염원마저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3. 따라서 대한적십자사는 쌍방이 이미 합의한 대로 금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예정대로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에 참석할 것임을 통고하는 바이며 동시에 귀측 대표단도 동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김연주 교체수석대표를 비롯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장소인 판문

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나가 북한적십자회 대표단의 참석을 기다렸으나 회의개최 예정시간인 오전 10시가 넘도록 북적측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는 끝내 유산되고 말았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정주년 대변인은 상오 10시 20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북한적십자회측이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마저 거부하는 것은 1천만 이산가족의 염원을 외면하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처사임을 지적, 조속한 회의 재개를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 <대한적십자사 대변인 성명>

1. 북한적십자회측은 1978년 3월 19일 오후 7시 「평양방송」을 통하여 1978년 3월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기로 쌍방이 합의한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에 대하여 최근에 실시된 한미연합작전 훈련을 구실삼아 동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1978년 3월 20일 오전 8시에 북한적십자회측에 대하여 당치도 않는 구실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연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 쌍방합의에 따라 동 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고하고 오늘 이곳 판문점 회의장까지 나왔으나 북적측은 끝내 동회의에 참석치 않았다.
3. 북한적십자회측의 대화 거부적 태도는 남북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7. 4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1천만 이산가족과 5천만 거래의 염원은 물론 조국의 평화통일 노력에도 역행되는 일로써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4. 북한적십자회측이 지난 회담과정을 통하여 소위 「서울의 분위기」를 구실삼아 본회담을 중단시켰고 또 소위 「정치적 선결조건」을 내세워 본회담 의제의 실질적 토의를 거부하여 왔을 뿐 아니라 남북직통전화를 단절시켰으며 더욱이 이번에 또다시 엉뚱한 구실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마저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그들이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 줄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5. 만일 남북간에 문제가 있다면 대화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간의 평화적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이처럼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마저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남북간의 긴장을 고의적으로 고조시키고 동족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6. 북한적십자회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이 지니고 있는 막중한 임무와 5천만 동포들의 염원에 부응하여 적십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하루속히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개최에 응해 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평화를 부정한다면 이는 민족적 과오를 저지르는 처사로써 북한측은 그로 말미암아 파생될 모든 사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7.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와 남북간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인내와 성의를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1971년 8월 12일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가족과 친척들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제의에 북한측이 호응함으로써 시작된 남북대화는 지난 73년 8월 북한측의 일방적인 대화중단 선언으로 말미암아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 본 회담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지고 말았으며 75년 5월 29일에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정상화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어 오던 부위원장회의를 무기 연기시켰으며 잇달아 지난 76년의 8·18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이후 남북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중단한데 이어 이번에 북한적십자회측이 남북간의 유일한 대화통로로 남아 가냘픈 명맥을 이어 오던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마저 일방적으로 연기, 남북대화의 전도에 암운을 던짐으로써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재결합을 고대하던 일류의 희망마저도 유린당한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과 5천만 겨레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실무회의를 통해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순수한 동포애와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8차 본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꾸준히 제의해 왔고 서울이 어렵다면 판문점에서라도 열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측은 본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소위 「반공법 폐지」 및 「무력증강중지」, 「반국가사범 석방」 및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취소」 등 엉뚱한 구실을 붙여 이를 회피해 왔다. 이것이 이른바 그들이 내세우는 「조건환경론」으로 한국의 반공법·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반공단체를 해체하며 반공정책 및 반공교육을 중지하라는 말도 안되는 내부간섭적인 정치적 요구조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측은 한국에서는 6·23선언이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고 서신교환은 물론 학술·체육·연예 등의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74년 추석때부터 시작된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 방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들어 북한적십자회측이 내세우고 있는 소위 「조건환경론」은 남북대화를 추진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요인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

또한 본회담의제의 예비적 토의에 있어서도 대한적십자사측은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토의 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만약 북한적십자회측이 의제 제1항을 조속히 토의할 수 없다면 우선 시범적 사업으로서 『남북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의 상호교류』나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재회문제』, 『이산가족들의 사진교환』 등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고 남북의 상이한 체제나 조건, 환경에 구둑됨이 없이 언제든지 실천가능한 인도적 사업들을 우선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측은 인도적인 회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른바 「분위기 문제」·「조건환경문제」같은 여러 가지 선결조건들을 내세우며 정치선전만으로 일관하면서 남북대화의 진전을 견제하였다.

<다음은 이산가족의 염원에 역행하는 북한적십자회측의 실무회의 거부처사를 규탄하며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 국내주요 일간지의 사실을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 남북적 실무회의 거부 속셈

북한은 남북간 유일의 창구마저 막을 것인가

쌍방 합의 아래 20일 상호 관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는 북적측이 최근 실시된 한·미 연합작전 훈련을 트집잡아 일방적으로 연기한다는 방송통지문을 보내옴으로써 결국 유산되고 말았다.

한적대표단은 북적측에 대해서 당치도 않은 트집으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연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통고하고 회의장에 나갔으나 북적측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남북간의 유일한 대화창구가 되었던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의 앞날마저 불길한 암운 속에 빠지게 됨으로써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돌이켜 보면 평양측은 지난 73년 남북조절위를 이룬바 8·28김영주성명을 발표하여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후 그 정상화를 위해 열린 조절위 부위원장회의 역시 75년 5월 30일 제11차 회의를 이번처럼 하루 앞두고 연기한다고 발표하고는 지금까지 정상화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난 76년 8월 이룬바 도끼 살인만행을 저지른 직후 남북직통전화조차 일방적으로 끊어버려 부득이 방송을 통해 통지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북적측의 이번 실무회의 연기통보는 남북간의 대화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태도 표시로 매우 중시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이를 계기로 모든 대화의 통로를 무기한 단절한 채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북적측이 한·미연합작전 훈련을 트집잡아 쌍방간에 합의된 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의사가 없음을 말해주는 비인도적이고 반민족적 횡포라 보고, 규탄해 마지않는다.

이번 「팀 스피리트78」 훈련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남침시에 대비한 방어훈련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은 남북대화화 교류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과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우리 제의에는 외면하고 무력적화통일의 기본전략에 따라 갖가지 도발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는 자위력의 점검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불가침 협정 체결 등 우리의 평화노력에 응함으로써 쌍방간에 군사적 긴장이 풀린다면

그런 군사작전훈련은 필요없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상의 문제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적십자회담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다른 차원의 성격인데도 그것을 내세워 적십자 실무회의를 연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설사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대화를 연기하거나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북간의 평화적 대화를 통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동족끼리의 바람직한 자세요 7·4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차도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동족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남북간의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무력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북한이 이른바 적화통일의 망상을 채울 수 있을 시기는 지나간지 이미 오래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해 두고자 한다. 동시에 북적측은 더 이상 인도주의와 민족적 양심을 외면하지 말고 그나마 늦기 전에 적십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5천만 동포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전쟁노선을 강화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사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한편 이런 매일수룩 한적측은 인내와 성의를 다해서 1천만 이산가족의 숙원을 풀고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넓히려는 숭고한 사업에 계속 분발해 줄 것을 우리는 당부하고 싶다.

우리가 국민총화를 바탕으로 지금처럼 국력배양에 힘쓰면서 끈기 있게 대화를 모색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의 이같은 인도주의와 평화정착 노력에 결국 호응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1978. 3. 21) -

#### 어불성설의 북한 구실

북한적십자회측이 20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되었던 남북적십자실무자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남북접촉의 마지막 창구역할을 하여 오던 실무회담조차 단절되고 말았다.

72년 7월 4일 통칭 7·4공동성명에서 남북한이 『평화통일 원칙에 합의하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약속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반공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당치도 않은 내정간섭을 시도하다가 1년후인 78년 8월 한국의 국내 문제를 트집으로 내세워 남북조절위원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리하여 잠사나마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대를 걸었던 온 민족의 희망은 무산되고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는 비정치적인 인도주의 사업만이라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제거하는 갖가지 사업을 제안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러한 제의도 국내정치환경개선 운운하는 엉뚱한 요구로 외면되었고 76년 8월의 도끼 살인만행을 계기로 북한은 남북간의 비상전화마저 끊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남은 대화의 창구인 적십자실무회담마저 봉쇄하고 만 것이다.

생트집은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술책이거니와 이번에도 엉뚱하게 한·미합동군사 훈련인 「팀 스피리트 78」이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군사훈련과 적십자회담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러면 북한군은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서방측의 「나토」 군사동맹과 공산측의 「바르샤바」 군사동맹간에는 끊임없는 접촉과 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측에서 기동훈련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고 있어도 이에 상관없이 상호간에 각종 회담과 접촉을 서슴치 않는 것이다.

생트집을 일삼는 북한자체도 소련 및 중공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끊임없이 비공개적인 군사훈련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그들은 휴전선일대에 군비를 증강하고 은밀히 땅굴들을 파고 파괴분자들을 남파하고 있다. 자기들은 자행자지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훈련조차 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어불성설의 유치한 억지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대화의 계속에 노력하는 것은 오직 민족의 평화통일을 바라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의 진의와 저력을 오판하지 말라

-동아일보 (1978. 3. 21)-

### 남북적회담 중단될 수 없다

북은 정세의 흐름을 바르게 판단해야

20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되어 있었던 남북적십자회담 제26차 실무회의는 북한적십자회측이 무기연기 한다고 통고해 움으로써 유산되고 말았다.

북적측은 회의개최 15시간을 앞두고 평양방송을 통해 「팀 스피리트78」 한·미연합작전 훈련이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 남북관계를 극도로 첨예화시키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이러한 형편에서의 회의개최는 적십자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함으로써 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것이다.』

우선 북한적십자회가 남북적 실무회의를 연기한다고 하며 들고 있는 그 같은 이유가 과연 납득할 수 있을만한 것이냐는 것이다. 한적대변인 성명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치도 않은 구실에 지나지 않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만일 남북적간에 문제가 있다면 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작전 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그동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연일 제멋대로의 논리로 이를 비난해 왔었다. 그러나 이 훈련 때문에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풀어주기 위한 남북적회의를 연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누가 보든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도리어 남북적회의를 그들의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하고 있는 속셈을 드러냈을 뿐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는 하등의 성의도 갖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묻거니 그들은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2년 전의 8·18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을 비롯하여 그들은 우리측에게 참기 어려운 도발을 잇따라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그 때문에 남북적회의를 연기하자고 제의한 적이 없는 것이다.

어떻든 우리는 이번 남북적실무회의를 연기한다고 갑자기 통보해온 북적측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깊이 구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75년 5월 30일에 열기로 되어있던 제11차 남북조절위 부위원장회의를 평양측이 하루 앞두고 무기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해 온 사실과 그 후 이 회의가 우리측의 거듭된 재개촉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에도 그들은 무기연기의 이유를 남한내의 「반공소동」이니 뭐니 하고 들었던 것이다. 그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들은 남북적 실무회의마저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무기연기한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남북대화는 남북적 실무회의로 그 명맥을 간신히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만일 정말로 평양측이 남북적 실무회의까지 중단시킬 생각이라면 대화가 전면적으로 끊어지는 책임을 그들이 져야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앞서 대화의 중단이 그들에게도 이롭지 못하다고 타이르지 않을 수 없다. 평양측이 남북조절위의회의뿐만 아니라 남북적 본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재개를 거부해 오고 있는 것은 남북대화가 적화통일의 계약에 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해하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반대한 것이 평양측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는 것이다. 전쟁준비로 인한 힘에 겨운 군사비의 부담은 북한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었고 이것이 그들의 정치적 위기로 반영되고 있는 사실은 이제 감출 수 없는 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적화통일의 길을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파괴와 우리나라 정국의 혼란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으며 남북대화를 이같은 목적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정세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면 시대착오적인 환상에서 깨어나리라고 믿는다.

평양측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거부하는데서가 아니라 그에 호응하는데서 그들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더욱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 실무회의마저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우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거듭 타일러 주고 싶은 것이다.

-서울신문 (1978. 3. 21)-

#### 남북대화통로의 단절위기

20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적십자회담 제26차 실무회의가 북적측의 일방적 연기로 유산됨으로써 유일한 남북대화 통로마저 완전히 단절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변인 성명에 의하면 북한이 적십자실무회의 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한 이유는

「팀 스피리트78」한·미연합작전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의 방송, 신문 등 각종 어용선전기관들이 「팀 스피리트78」을 맹렬히 공격, 비난해 오더니 순수한 남북적십자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화마저 일방적으로 거절해 버린 것이다. 정말 「당치도 않은 구실」이라 아니할 수 없고 북한이 고의적인 대화기피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게 됐다. 이 사실은 특히 지난 73년 8월 28일 소위 「김영주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선언을 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지게 한 이후 한가닥 대화의 통로였던 적십자 실무회의마저 기피함으로써 남북대화를 아예 단절해 버리겠다는 의도로 지탄되며 5천만 민족의 한결같은 열원이었던 남북이산 가족의 상봉 재결합을 고의적으로 막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한적측이 꾸준한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남북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해 왔던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북적측이 본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소위 반공법 폐기와 이른바 반국가사범의 즉각 석방 반공단체 해체 등을 주장하며 이 남북적십자회담을 정치적으로 호도해 왔던데 반해 현실타당한 서신 교환, 학술, 체육, 연예 등의 교류까지를 제의했던 한적측 자세는 천양지차가 있었다.

매우 허구적이고 정치적이며 부당한 요구만 앞세웠던 북한측 태도는 한마디로 무성의했고 대화중단의 의사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더구나 2개월 평균 1회 정도 열려오던 실무회의마저 작년 4월 제22차 실무회의 이후부터 3개월에 1회 정도 개최할 것을 고집, 회담에 대한 무성의를 노골적으로 표시했고 엉뚱한 구실을 붙여 다시 약속된 실무회의마저 거부한 것은 북한이 얼마나 무책임하며 신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북한의 일방적 대화거부는 그 자체가 비인도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북한의 그릇된 정략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팀 스피리트78」을 구실 삼아 실무회의까지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복잡 미묘한 대내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비동맹외교에 대한 실패, 김정일 재기불능설, 격심한 경제파탄, 주민불만의 고조 등 안팎으로 불어닥친 시련과 견잡을 수 없는 대내 혼란을 감내하기 힘든 북한권력층의 초조와 불안이 대화중단을 불가피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남북대화중단은 명맥만이라도 이어오던 대화통로의 봉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국제여론의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거듭 국제조류에 역행하는 북한의 고립자초로 직결될 것이며 남북의 평화정착을 어렵게 하는 망동이며 자승자박의 함정을 파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북괴에 거듭 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망동이 중대한 민족적 과오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과생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스스로 5천만 민족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삼가야 마땅할 것이다.

-신아일보 (1978. 3. 21)-

## 남북간의 새 국면

### 남북적 실무회의를 기피하는 북의 작태

남북간에 더 한층 긴장을 고조시킬 조짐을 북한측이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관문점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제26차 남북적십자실무회의가 북한적십자회측의 돌연하고도 일방적인 불참으로 유회되고 말았다. 금년 들어 첫 번째가 될 20일의 26차 실무회의 개최는 지난 연말 열린 29차 실무회의에서의 쌍방 합의 사항이었다.

대한적십자측 발표에 따르면, 북측은 19일 오후 7시 평양방송을 통해 제26차 남북적십자실무회의를 최근에 실시된 한·미연합작전훈련을 이유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방송 통지문을 한적측에 보내왔다. 이에 한적측은 20일 오전 8시, 북측에 동 회의는 쌍방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개최돼야 한다는 것을 역시 방송통지문으로 통고하고, 예정시간에 회의장에 나갔음에도 북적측은 불참했다.

식언을 상투적으로 하고 합의사항을 밥먹듯이 유린하는 북한 집단의 생리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는 남북관계를 새로운 심각한 국면으로 진일보시키는 조짐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북적의 독선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1971년의 예비회담을 거쳐 1972년의 7·4 공동성명으로 본격화한 남북대화는, 1년 후인 1973년 김영주의 일방적인 8·28 성명이라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대화중단이라는 중대시련에 직면했다. 조절위원회의 중단과 함께 1973년 7월 평양에서의 7차 본 회담에 이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적십자 8차 본 회담 역시 북적의 이른바 「서울 분위기」론 등의 핑계를 내세운 거부로 계속 중단상태에 있고, 조절위 부위원장회의 또한 1975년 5월 30일 제11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북한측의 갑작스런 무기연기 통고 하나로 중단돼 버렸으며, 그리고 이번 26차 남북적십자실무회의도 개최를 하루 앞둔 북적의 연기통고로 유회되고 말았다. 이것이 북적의 자의에 의해 조절위 부위원장회의의 전철을 밟게 될 경우 남북접촉은 완전히 단절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북측은 1976년 8·18 도끼사건 이후, 남북직통전화마저 끊어버렸으며, 지난 3일 민관식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의 민족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속한 대화재개 촉구에도 이렇다 할 아무런 공식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20일의 남북적십자실무회의만해도 한적측의 사전통고가 있었고 한적측 대표단은 회의장에 나가 대기했음에도 북적측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음으로써 유회시키고 말았다.

도대체 북측은 남북관계를 어떠한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것인가. 적십자회의에서는 당연히 인도적인 문제 외에는 거론이 허용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가령 백걸음을 양보해서 그들이 따질 것이 있다 해도, 한적측 대변인이 성명에서 지적했듯이 그것은 마땅히 남북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길이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통로인 남북적십자실무회의마저 기피하는 그들 북측의 속셈은 과연 무엇인가.

남북적십자실무회의가 조절위 부위원장 회의의 전철을 밟아 북의 일방적인 기피-거부로 사실상 단절된다면 남북관계는 완전히 대화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며, 고조되고 격화된 긴장상태는 오히려 지난날을 훨씬 지나치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을 북은 어떻게 질 것인가.

대한적십자대표단은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해도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와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인내와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것은 5천만 민족의 당부이고 염원이다. 한적측의 성의에 우리는 절실한 민족적 기대와 성원을 보내면서 북측의 반응을 주시한

다.

-조선일보(1978. 3. 21)-

### 대화봉쇄는 평화의 적

북적은 실무회의 속개의 성의를 보이라

한가닥 대화창구의 마지막 촛불마저 끄려는지 북한측은 20일 열리려던 남북적 제26차 실무회의를 무작정 연기, 보이코트하였다.

합의된 회의일정을 불과 10여 시간 앞두고 최근 실시된 「팀 스피리트 78」 한·미연합작전훈련을 구실로 내세우면서 북적이름의 방송통지문을 발한 후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해 버린 것이다.

못된 북괴집단의 심술이자 속셈이 뻔한 대화매장 술책일시 분명하다. 군사연습으로 말하면 대화 시작 이래 그들도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그들이 대화에 호응한 71년만 해도 바로 그해 3월 우리 측이 「프리덤 볼트」 한·미연합공수기동연습을 실시한 연후였다.

따라서 「팀 스피리트 78」 때문에 급이 낮은 적십자실무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씨가 먹히지 않는 거짓 구실에 불과하며 이번 불참은 대화를 시종 그 무슨 「혁명의 도구」로 삼으려던 환상이 캄캄해진 데서 오는 불평발작증임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평양측이 그간 회담채널을 계속 내리썩으면서 단점의 길로 몰아온 작태는 세상이 다 안다. 이른바 김영주의 8·28 성명(73년) 이래 남북조절위와 그 부위원장회의, 적십자 본 회담, 서울-평양간의 직통전화 및 판문점 연락사무소 기능 등을 모조리 제멋대로 봉쇄 또는 소멸시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문에다 「무기연기」의 팻말을 내붙였다. 표현은 「연기」지만 이제까지의 저들 수법으로 보면 「기약 없는 폐쇄」로 되고 말 우려가 크다.

그들의 이런 대화거부는 우선 그간의 합의사항과 적십자인도주의 및 7·4 공동성명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천만 이산가족에 대한 무지한 배신이자 폭행인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5천만 겨레의 숙원과 인류의 여망을 완전히 저버린 소행임에 틀림없다.

대화소멸 이후에는 어찌자는 것일까. 회담거부 자체로 그들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지금까지 대화가 지속되었더라면 한반도의 분위기는 좀더 따사로운 「평화의 봄」을 맞았을 것이다. 북한의 그 거부누적으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근자에 날로 냉동화해 가고 있을 따름이다.

줄여 말하면 그들의 대화봉쇄는 곧 평화거부를 의미한다. 우리처럼 30여 년간이나 분단적대해 온 처지에서 남북관계를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로 이끄는 오직 하나의 기초수단이 대화에 있음은 어린아이들까지의 상식선이다.

남북의 겨레나 세계 평화애호가들 대부분이 아직도 대화속개를 한결처럼 주문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고 한적과 서울측이 그를 위해 그간 온갖 적극성과 성실성 인내성을 다 보인 아랑 또한 평화를 위한 그 상식에 보다 충실키 위해서였다.

평화를 심는 대화조차 마다는 북한집단의 처사를 평화증진 노력으로 볼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떠드는 「평화옹호」이니 「평화적 통일」이니 하는 것이 말짱 헛것임은 이 한 이치만으로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물며 그들의 평화관념이 근본적으로 전쟁 일반을 무가치하거나 반대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진보적인 전쟁은 해야 한다는 식의 호전성을 내포한 점을 감안하면 대화파탄 이면에서 북괴가 꿈꾸는 것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소위 「혁명」과 「해방」을 위한 전쟁의 불장난-바로 이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지금도 케케묵은 선 혁명(전쟁) 후 평화의 사고방식을 포기치 않고 있다. 시기가 됐다고만 보면 행동화시킬 위험성을 언제나 지닌 집단이다.

올해는 우리의 선거연차이다. 또 요즘의 국제정세는 미·소간의 냉대경향을 비롯하여 긴장의 고개가 쳐들리는 일면마저 도처에서 보인다. 분쟁·대립상이 중동과 아프리카대륙이나 해양이권속에서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호전주의자들은 이런 내외현실을 포착하면서 남한을 한 번 흔들어 보았으면 하는 과욕-남북적십자실무회의의 중단은 그에 사로잡힌 한 신호적 표상이기도 쉽다.

한적은 이미 대변인 발표로써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와 남북간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인내와 성의를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하였다.

상응한 대답과 수정을 평양측은 의당 보여야 한다. 그를 채찍질하는 우리 모두의 단호한 결의와 태세는 더욱 확고해져야 하겠다.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가세 또한 틀림없이 따라 올 것으로 우리는 믿어 마지 않는다.

-한국일보(1978. 3. 21)-



## 민족적 차원에서 조건없는 대화와 교류를

전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78년 3월 20일 개최기로 남북적십자 쌍방이 합의하였던 제26차 남북적십자 실무회의가 북적측의 일방적인 통고로 유산되고 말았다.

제26차 실무회의가 유산됨으로써 비록 북한적십자회측에 전달되지 못했으나 남북으로 흩어져 다시 만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들의 한맺힌 염원에 부응하고자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1978년 3월 20일 북한적십자회 대표단에게 남북적십자간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기를 촉구하려던 뜨거운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절규를 여기에 소개하며 북적측이 지체없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촉구한다. -편집자 주-

오늘 우리는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나 제26차 실무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열고 중단된 본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와 본 회담 의제의 예비적 토의를 거듭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와 같은 과제들을 하나도 풀지 못한 채 지난 한해를 넘겼습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찾아주는 인도주의 사업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했던 우리가 회담을 시작한지 만 7년이 다 되도록 이처럼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을 낭비한 것은 실로 남북의 5천만 동포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오늘의 세계는 전쟁과 파괴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시대이며 폐쇄와 고립의 시대가 아니라 교류와 협력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사상과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인도주의의 문제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에 이르는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촉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존공영의 시대에 유독 우리 나라에서만은 같은 겨레가 아직도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관계의 증진은 커녕, 인도주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유구한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민족적 긍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끊어진 남북간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며 사상과 이념을 위하여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을 희생시켜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우리는 오늘 1978년의 새해 첫 번째 실무회의를 맞이하면서 지난날 남북적십자들이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서울과 평양 사이의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은 그 감격적인 시기를 함께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시 남북의 5천만 동포 앞에 공약한 적십자인도주의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상기하고 적십자 인도주의 회담에서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이 자리에서 재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단된 남북적십자 본 회담을 무조건 하루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1973년 8월 28일 귀측의 이른바 「대화중단 성명」 이후 단절된 남북적십자 본 회담은 벌써 6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평양」간의 왕래의 길도 차단되고 남북의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적십자 실무회의가 위임받은 첫째 임무는 중단된 본 회담을 재개하고 「서울·평양」간의 통로를 다시 터놓으므로써 남북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이 실무회의가 열린 첫날부터 제8차 본 회담을 쌍방이 합의한 대로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인 회담날짜까지 제의하고 본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그때마다 『서울의 분위기가 어떻다』는 등의 구실로 우리측 제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제8차 본 회담의 개최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 우리측은 귀측이 서울에 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곳 판문점이나 기타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장소에서라도 본 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우리의 이와 같은 성의있는 제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명백한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써 본 회담 재개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귀측의 불성실한 회담자세는 적십자 인도주의회담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들과 5천만 겨레의 소망을 저버리는 것이며 동시에 이 땅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그만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사실 본 회담 재개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또 장시간의 토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쌍방이 합의하고 겨레 앞에 맹세한 엄숙한 약속을 다만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이며 오직 귀측이 적십자 인도주의회담을 정상화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서로를 신뢰하는 바탕위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남북쌍방이 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곧 5천만 거래앞에 약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시종일관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제8차 본회담은 쌍방이 합의한 대로 당연히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본회담 개최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귀측의 태도로 말미암아 남북적십자회담이 무기한 중단되고 있는 사태를 지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해에 이곳 판문점에서라도 우선 제8차 본회담을 열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측의 이와 같은 제의는 귀측이 서울에 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려하여 본회담 장소문제에 관한 당초의 합의사항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중단된 본회담을 하루속히 재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남북적십자회담 정상화를 진실로 바라고 있고 또 진정, 남북간의 인도주의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다면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에서 제8차 본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본회담 의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토의, 해결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을 찾아주는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본회담 의제토의에 대한 우리측의 기본입장은 어디까지나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요구에 맞게 긴급한 문제와 실천이 용이한 사업부터 해결함으로써 인도주의사업을 잠정적으로 확대,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회담에서 함께 연구하고 토의해서 만들어 놓은 본회담의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매우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 대표단은 제3차 본회담부터 본격적인 의제토의가 시작되면서 먼저 의제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심인사업방안」을 제의하고 하고 이를 조속히 토의 해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생사여부와 그들의 소재를 확인하는 사업은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은 국제적으로도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는 관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제 제1항과 같은 초보적인 「심인사업」이 잘 실천되면 그 다음에 오는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자유로운 서신거래」 그리고 「가족의 재결합」 등은 연속사업으로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측은 이와 같이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관점에서 어디까지나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쌍방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부터 하나하나 토의,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의제의 실질적 토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른바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이 어떻다는 등의 이유를 앞세워 우리측의 제의를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계속된 여러 차례의 본회담도 귀측의 엉뚱한 「정치적 선결조건」으로 말미암아 계속 공전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우리측은 그 후 스물 다섯 차례의 전 실무회의 과정을 통하여 교착된 회담의 돌파구를 열고 의제의 실질적 토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의 남북교류」를 비롯하여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재회문제」, 그리고 「가족사진 교환」 등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시범적 사업들을 먼저 착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측의 이와 같은 성의있는 노력은 귀측의 호응을 받지 못하므로써 오늘날까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미 다섯 개 항목의 구체적인 사업을 설정해 놓은 우리가 아직도 그들의 생사여부와 소재의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몇 해 동안 회담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귀측은 마치 적십자회담을 정치회담이나 군사회담으로 착각하듯이 체제비방이나 전쟁문제만을 거론하면서 정작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면서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귀측의 이와 같은 회담자세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며 거래앞에 공약한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동포애와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인도주의 회담이 기본사명일진대 이것을 제쳐놓고 더 중요한 선결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거래앞에 약속한 바와 같이 본회담의제속에 담겨있는 인도주의사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빨리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이 서로 주소와 생사를 알고 또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도주의사업은 귀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북간의 이질적인 환경 때문에 장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환경의 차이를 완화하고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회담의제 제1항에서부터 이산가족들의 재회사업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결되어 나갔다면 지금쯤은 벌써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실현되었을 뿐 아니

라 대립과 불신도 사라졌을 것이며 인적, 물질 교류가 확대됨으로써 이 땅에는 이미 확고한 평화가 정착되고 그 만큼 통일도 앞당겨 졌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처럼 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독일은 동서간에 서로 대립되는 정치상황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적, 물질 교류를 촉진하며 민족적 화해를 꾸준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수의 노인들로부터 시범적으로 착수한 이산가족들의 재회사업도 오늘에 와서는 완전히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해마다 수백만의 가족, 친척들이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 고향과 혈육들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귀축도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오래 전부터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문호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이념과 체제를 달리 하는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제 중국과 소련 등 공산국가들을 포함하여 연간 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많은 해외동포들의 모국방문행렬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나날이 좁아져 가는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또 그곳 혈육들과 편지거래를 할 수 있지만 오직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만은 아직도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사회는 지난날의 냉전적 대결이나 배타적 폭력주의를 배격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문호개방과 상호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일체의 분쟁을 오직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발전적 추세와는 달리 우리 겨레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유물인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 강토 안에서 부모, 자식간에 편지 한 장 주고받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서울·평양」 사이를 왕래하는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진행될 때만 해도 우리 겨레는 이 땅의 평화정착과 조국통일의 서광을 내다보면서 한 때 커다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축의 이른바 「8·28성명」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중단되고 「서울·평양」 간의 통로조차 막힌 이후 남북관계는 사실상 7·4남북공동성명 발표이전의 상태로 후퇴하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복지사회건설에 여념이 없는 오늘날 오직 우리만은 아직도 엄청난 민족역량과 경제자원을 동족간의 대결에 낭비하고 있으며 민족번영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격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 번영하는 길은 남북이 서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이 땅에 확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이 서로 사회를 개방하고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쉬운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남북교류를 발전시켜 남북한의 자원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개발과 창조를 통하여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곧 「자주·평화·민족단결」의 바탕위에서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길이며, 거레의 무궁한 발전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1천만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의 정치·경제·군사 등 통일문제를 광범위하게 토의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측이 진정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동족간의 전쟁을 방지하겠다면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대화의 창구를 계속 막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를 정상화함으로써 「서울·평양」간의 대화의 통로를 다시 열어 놓아야 합니다.

북한적십자 대표 여러분!

나는 오늘 제26차 실무회의를 맞이하여 금년이야말로 남북의 5천만 겨레가 소망하는대로 우리의 인도적 대화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단된 본회담을 조속히 정상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제8차 본회담은 쌍방이 합의한대로 당연히 서울에서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측이 서울에 오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므로 우리측은 부득이 합의사항을 유보하고 제8차 본회담을 이곳 관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이와같은 주장은 「서울·평양」간의 통로가 5년째 막혀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본회담 재개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귀측이 서울에도 올 수 없고 또 이곳 관문점에서도 본회담을 할 수 없다면 이번에는 귀측

이 제8차 본회담을 언제 어디서 열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명백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본회담 의제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구체적으로 토의, 해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토의의 순서에 따라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 내며 알리는 문제」를 먼저 토의,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업도 연속적으로 토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제3차 본회담때에 쌍방 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십 인사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귀측이 의제 제1항의 사업을 당장 실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우선 시범적인 사업으로서 「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의 남북교류」, 「노부모와 그 가족들의 상봉」, 「가족사진교환」 등 긴급한 인도주의사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시범적 사업들은 남북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귀측 사정이 이를 허락 하지 않는다면 우리 측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범적 사업들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를 계기로 의제토의는 활기를 띠게 될 것이며 남북의 긴장상태도 차츰 완화되어 갈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난 76년 8월 이후 1년반이 넘도록 그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서울·평양」사이의 직통전화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하루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두가지 연락수단은 우리가 상호 합의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만 5년간 아무런 사고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연락수단은 우리 쌍방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책임을 지고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측은 이 연락수단을 정상화하는데서 부터 먼저 인도주의 회담에 대한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회의에서 이상과 같은 우리측 주장들이 하나하나 진지하게 토의됨으로써 올해 안에는 반드시 본회담이 재개되고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안겨 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 제3부 그밖의 남북관계소식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

#### 단오절 맞아 성묘귀국

우리 민족의 고유의 민속명절인 단오절(6월 10일)을 맞아 재일조총련계 동포 1천3백여명이 6월 4일부터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성묘차 귀국하였다.

이번 모국방문단은 그 동안 고국을 다녀간 조총련계 동포들이 직접 눈으로 본 고향소식과 동포애를 전해 듣고 모국방문을 결심했으나 조총련계의 악랄한 방해공작으로 기회를 놓쳤던 조총련 조직간부, 상공인, 조총련 우하단체 요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조총련계 학교인 조선중고교와 조선대학출신의 30대의 젊은 층과 그들의 2세대로서 대판, 동경, 찰황, 선대, 신호, 경도, 복강, 황변 지방출신 동포들이었다.

이번에 귀국한 이들 재일동포들에 따르면 최근 조총련측은 핵심요원들의 모국방문 숫자가 점차 늘어나자 소위 「중앙열성자 대회」를 열어 「김일성교시」의 무조건 복종, 남북적화전략의 적극 지원을 위한 자체 조직의 강화, 모국방문사업의 저지 등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모국방문 상공인에 대해서는 자금지원도 거부하는 등 광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찾으려는 동포 수는 늘어만 가고 있어 1975년 추석성묘 이래 2만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 “「방문」의사 밝히자 조총련이 납치”

38년만에 조국땅에 돌아왔다는 김승필씨(58세, 일본 애원현동자시 삼방1809)는 마중 나온 아들 김태수씨(38세)와 상봉,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리며 「38년 전 일본으로 공부하러 건너갔다가 그동안 조총련의 핍에 빠져 귀국하지 못했다」며 늦게 온 것을 안타까와하였다. 또한 김씨는 「모국방문 의사를 밝힌 뒤 조총련간부들에게 납치되어 감시를 받다 지난 4일 상호 3시 극적인 탈출을 해 조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며 조총련의 악랄한 방해공작을 폭로했다.

또한 10년 전 조선고교를 졸업했다는 김수길씨(27세)는 재학시 조총련으로부터 「남한은 모두가 험벗고 굶주린데다 밤만되면 살인강도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고 배워왔다면서 먼저 조국을 다녀간 동창생들로부터 이같은 조총련의 선전은 거짓이며 한국은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고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 모국방문 길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도 일본에는 직접 자기의 눈으로 한국을 보지도 않은 채 조총련의 선전에 맹종하는 동포들이 많다」고 말하고 고국의 발전상을 두루 살펴보고 일본에 돌아가 본 그대로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모국방문단원들은 「망향의 동산」을 참배하고 2박 3일간의 울산, 포항 등지의 약진조국의 산업시설을 시찰한 후 귀향하여 정든 가족, 친척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 **남북대화 제18호**

(1978. 7 ~ 1978. 10)

# < 목 차 >

제1부 평화와 번영의 길 .....	3
박대통령, 제33주년 광복절 경축사 .....	3
제2부 남북대화소식 .....	7
<남북조절위원회> .....	7
서울측, 7·4성명 6주년에 즈음하여 성명 발표 .....	7
<남북적십자회담> .....	16
한적, 남북적십자 총재회담을 제의 .....	16
제3부 그밖의 남북관계 소식 .....	26
조절위 서울측, 제2회 학술 「세미나」 개최 .....	26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	27
한적, 이산가족의 한 「망향기」로 출간 .....	40

## 제1부 평화와 번영의 길

박대통령, 제33주년 광복절 경축사

『대화재개·경제협력 호응하라』  
『수락하면 평화정착 적극 조치 강구』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33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를 통해 『북한측이 지금이라도 무력적화통일을 꿈꾸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엄연한 사실을 똑바로 알고 남북대화의 무조건 재개와 남북간 경제협력촉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박대통령은 『북한측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고 진전이 있을 경우 이땅의 평화정착과 평화 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조국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호교류와 협력의 길을 넓혀나가면서 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광복절 제33주년 경축사 전문이다.

-편집자 주-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광복 33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8·15해방,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며 진심으로 경축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대한민국정부수립 30주년이기도 하여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고난과 시련을 뚫고 진진해 온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서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를 느끼게 됩니다.

국토분단의 비극과 북한공산집단의 끊임없는 침략도발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거나 근대적인 산업시설도 없던 처지에서 오로지 우리의 피와 땀으로 지키고 가꾸어 온 조국이기 에 이 보람은 한층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남의 원조에 의지해서 살던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남달리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이룩하였고 5대양, 6대주를 무대로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저력있는 중흥국가입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 국민은 과거처럼 국방을 남에게 의지하고 북한공산집단의 침략위협을 두려워

하는 국민이 아닙니다.

주변정세의 어떤 변화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북한공산집단의 침략도발을 일격에 분쇄할 수 있다는 자신과 용기와 패기에 넘쳐 있는 강한 국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력은 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자주국방과 자립경제의 성취로 이 땅에 평화  
가 정착되고 번영된 복지사회가 실현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내외의 도전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자력경쟁  
의 길을 줄기차게 전진해 온 결과, 오늘날 당당한 근대산업국가로 그 면모가 일신되었습니다.

한편 국제정세도 동서 양진영 대립의 냉전체제로부터 긴장완화를 모색하려는 다원화된 양상으  
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간에도 경제발전과 국가안보 등 실익을 위해서는 상호 문  
호를 개방하고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경쟁적 공존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유독 30년 이상 국토가 양단된 채 한 핏줄을 나눈 동포끼리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  
어 총부리를 겨누며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우기 이북 동포가 우리 고유의 민족전통과는 동떨어진 이질적인 사상과 체제 속에서 동질성을  
잃어가고 있는 사실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간 긴장완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고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민족  
의 대동단결과 자주적 통일을 굳게 다짐했는가 하면 이 땅의 평화정착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선언했으며 또한 상호불가침협정을 맺자고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난 6월 23일에는 우리가 남북간의 교역과 기술 및 자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협이기  
구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각료회의를 갖자고까지 제의했습니다.

우리의 이 꾸준하고 일관된 모든 제의는 오천만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러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제의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우리와는 대화조차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조국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호교류와 협력의 길을 넓혀 나가면서 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

하고 빠른 길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북한측이 지금이라도 무력적화통일을 꿈꾸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엄연한 사실을 똑바로 알고 남북대화의 무조건 재개와 남북간 경제협력촉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한측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고 진전이 있을 경우 이 땅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당면목표는 국력배양을 가속화하여 하루 빨리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국력이 튼튼해야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번영을 누릴 수 있으며 나아가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주도적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자립과 자주국방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건전한 국민정신과 사회기강의 확립입니다.

국민도위가 타락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서지 못한 국가는 한때 경제적 번영을 누린다 해도 사상누각처럼 오래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로 굳게 뭉쳐 부지런히 땀흘려 일할 줄 알며 서로 도와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될 때 참으로 부강한 국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드높이고 서정쇄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고도산업국가의 문턱에 와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경제적 번영과 정신문화 창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알찬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8·15해방 당시 끝없는 감격 속에서 온 겨레가 한결같이 꿈꾸었던 부강한 조국은 지금 우리 손으로 착착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념과 노력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대업완수까지 즐기차게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인한 의지와 단결된 힘이 있고 중단없는 진진이 있으니 영광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 제2부 남북대화소식

###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7·4성명 6주년에 즈음하여 성명 발표

『남북대화 즉각 개최하자』  
서울측, 「경제기구」 수락 촉구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민관식 공동위원장대리는 1978년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6주년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①지난 1973년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를 조속히 정상화 하고 ②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북간에 상호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며 ③남북한 5천만동포의 복리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간 경제협력촉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제의를 수락하라고 북한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민 위원장 대리는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간의 경제협력촉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제의는 오늘날 남북관계에 획기적 전망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남북이 서로 이러한 길을 트는 것이야 말로 같은 피를 나눈 한 민족으로서 사상과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에 접근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북한측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동성명의 전문이다.

- 편집자 주 -

오늘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남북간에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야겠다는 민족의 공동된 염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 쌍방은 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 민족단결을 대전제로 하는 조국의 평화통일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아울러 중상, 비방의 중지, 무장도발 금지, 다방면적인 제반교류와 협력, 남북직통전화의 가설,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남북공동성명의 이러한 기본정신과 제합의사항에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간의 제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 남북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구한 박대통령 각하의 「8·15선언」을 비롯하여 1971년 8월 12일의 남북적십자 회담제의를 7·4남북공동성명을 탄생시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남북대화 기간중에는 남북간 상호 사회개방을 촉구하고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어 1973년에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는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을, 1974년 1월에는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이어 동년 8월에는 남북간의 평화정착과 교류 및 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실현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과 정당하고도 현실적인 평화제안들을 모두 거부하였으며 5천만 민족의 염원이 담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남북간의 유일한 연락수단이던 남북직통전화마저 단절해 버렸습니다.

그 뿐 아니라 대화의 이면에서 그들은 휴전선 일대에 남침용 땅굴을 파는가 하면 군사력을 증강, 전선배치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나아가서는 엉뚱하게도 「대미협상」을 운하면서 동족간의 대화를 마다하고 자주적 민족통일노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조국통일은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훌륭한 재능과 자질을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은 유사 이래 많은 외침과 국난을 슬기롭게 이겨 왔으며 이제라도 남북이 단결하고 지혜를 모아 서로 협력한다면 이 땅에는 평화가 정착되고 민족번영을 향한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지난 6·23 박대통령께서 제의한 「남북간의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제의를 오늘날 남북관계에 획기적 전망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협의기구에서는 남북간의 교역과 기술협력 그리고 자본협력 문제등이 토의될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이러한 길을 트는 것이야 말로 같은 피를 나눈 한민족으로서 사상과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접근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북한측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6주년을 맞는 오늘 북한측에게

- ◎ 지난 1973년 이후 무려 5년 동안이나 중단시켜 놓고 있는 남북대화를 무조건 조속히 정상화하며
- ◎ 전쟁의 공포를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북간에 상호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 ◎ 고립과 폐쇄에서 벗어나 남북한 5천만 동포가 다함께 잘 살수 있는 복리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북한측이 하루속히 이에 호응해 오는 것만이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 민족의 공동번영을 누리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7·4 공동성명 발표 6주년을 맞아 남북대화의 정상화를 위한 북한측의 성의와 노력을 촉구한 주요 일간지의 사설이다.>

-편집자 주-

## 「7·4」 정신으로 돌아가라

- 평화통일의 길은 민족단합과 대화재개뿐이다. -

7·4 남북공동성명은 타율에 의해 이루어진 국토분단을 우리 민족의 주체적 의지로 극복하려는 역사적 문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명은 5천만 온 겨레에 벽찬 기대와 감격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국제적 공인과 적극적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7·4성명이 밝힌 이념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합이란 통일 3대원칙을 통해 우선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부터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민족도 아닌 동족간의 오해와 불신은 대립과 긴장을 첨예화시켜 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설령 개인과 개인의 약점이라 할지라도 신뢰성이 결여 되면 한낱 휴지에 지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7·4성명은 상호 중상·비방과 무장도발의 금지, 다방면의 교류와 대화를 약속했었다. 이 합의성명에 뒤이어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는 남북적십자회담과 조절위가 열렸고, 상설 직통전화까지 설치되기도 했었다.

그뿐만 아니라 4개월 뒤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에서는 대남·대북 방송과 군사분계선상에서의 확성기에 의한 대남·대북방송, 상대방지역에 대한 비라 살포중지를 다짐했다. 이러한 일련의 급격한 발전은 남북관계를 극적으로 전환하는 느낌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공동성명 6돌을 맞는 오늘의 남북관계 실태는 어떤가. 1973년 북한 김영주의 일방적인 성명으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합이란 이념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고, 북한의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는 대화 이전의 긴장상태로 되돌아 가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남북간의 유일한 연락수단인 상설 직통전화마저 북괴측이 일방적으로 끊어 놓고 회복시킬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더 더군다나 인도적 사업으로 추진해온 적십자회담의 중단 역시 풀릴 가능성이 현재로는 엿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북한은 남북공동성명 정신을 그들 자의로 해석하여 「자주」 원칙은 주한미군철수 주장으로, 「평화」 원칙은 남한만의 군비축소로, 「민족적 대단결」 원칙은 반공정책의 포기·왜곡·변질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대통령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에 대하여도 그들은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것이라는 등 꾀변을 늘어 놓으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성없는 대민족회의나 연방제 따위를 들먹이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피하려는 이율배반을 드러내고 있다.

7·4성명이 이처럼 북한의 약속파기로 사문화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속셈과 행동이 성명정신과는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김일성은 남북대화를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관계 조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남 적화혁명을 하기위한 전략수단으로 이용하려했던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대남 기본전략이란 무력과 폭력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전복시키고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혁명 지원역량과 남한내 혁명역량강화를 획책하고 있다. 최근 중공과의 제휴과시라든가,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주장, 국제사회에서 대남 허위선전강화, 그리고 잇단 해상 침투등은 그들의 이러한 전략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은 어리석게도 6·25에서 좌절된 남한 침략야욕을 남북대화라는 민족대단합의 협상과정에서 쟁취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에 의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단 30년의 쓰라린 체험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있다. 그 전제 조건으로서 북한공산집단은 우선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긴장완화에 이바지할 유엔 동시가입, 불가침 협정, 남북간의 실질적인 교류에 아무런 조건없이 호응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거듭 주장하지만, 북한측은 한반도의 통일이 결코 무력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민족적 영원인 대화와 교류를 위해 성의와 노력을 보이기를 바란다.

- 경향신문(1978. 7. 4) -

#### 인도적 배려 변함없다

- 북한도 「7·4정신」을 준수하라 -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밤 서해 백령도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가 아군 해군함정에 의해 침몰한 북한선박 승무원 5명중 4명을 3일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되돌려 보내고 나머지 1명은 자유대만에 남기를 희망,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지난달 5월 19일 거진 앞바다에 침투했던 북괴선박의 승무원 8명을 인도적인 입장에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데 이어 또다시 우리가 구조한 북한선박 승무원들을 계속 되돌려 보낸 것은 역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가치가 있다.

이번에 구조된 승무원 5명은 모두 어부임이 판명됐고 어로작업 중 항로착오로 우리 영해를 침범했음이 그들 승무원 자신에 의해서도 솔직히 잘못이 시인됐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실은 북한이 계속 공해상에서 평화스럽게 조업하던 우리 어부를 3천 4백 88명이나 강제납치, 아직도 4백40여명의 어부를 억류하고 있고 4백49척의 배와 항

공기 3대까지도 되돌려 주지 않는 비인도적 만행에 비추어 남북한 어느쪽이 인도주의적 정신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시킨 것이다.

특히 7·4남북공동성명 6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가 취한 인도적 배려는 시기적으로 갖는 의미도 각별할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충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성실성을 대변해 준 것으로 뜻이 깊다 아니할 수 없다.

7·4 공동성명은 그 내용에도 분명히 강조되었듯이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통일 3대 원칙을 근간으로 남북이 서로 중상, 비방하거나 무장도발을 중지하며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 그리고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성사, 상설 직통전화의 가설, 남북조절위의 구성운영, 합의사항의 이행 등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괴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간첩남파, 휴전선도발, 해상 군사도발등을 서슴없이 자행해 온 것은 거듭 민족적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며 반면에 우리가 계속 제의한 인도적 조치, 즉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재결합, 명절 성묘방문, 노부모의 생사확인, 6·23 특별담화에서 제의된 남북 경제협력 등은 모두 7·4성명 이후에 우리가 취한 평화적, 인도적 배려였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우리의 현실 타당성 있는 제의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 스스로 경제적 약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열등의식과 대화와 교류에서 야기될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동요 내지는 붕괴 위험성을 극히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이러한 북한의 대화거부나 교류기피가 결과적으로 북괴를 고립시키고 경제파탄을 장기적으로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몰라서는 안될 것이고 그로부터 김일성 일인독재체제의 붕괴도 시간 문제임을 망각해서는 안될 줄 안다.

북한이 당장 우리의 인도적 처사에 보답하는 길은 그들도 우리 어부들을 되돌려 보내는 일이고, 민관식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 대리의 촉구대로 남북대화에 조건없이 응하는 일임은 물론이다.

- 신아일보(1978. 7. 4) -

사리에 부합되어야 한다

- 남북공동성명 6주년을 맞이하여 -

오늘은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어언 6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이날을 우리는 드높은 감격과 밝은 전망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숨막히는 긴장과 쓰라린 좌절감 속에서 회고하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후 남북간의 긴장상태는 대화 이전의 원점으로 되돌아 갔음은 물론, 대화실패의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에는 쟁점이 또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이 종말없는 민족적 비극에 종지부를 찍고 이 나라 역사를 새로운 차원에서 전진시켜야 하는 것이 남북의 공통된 사명임에 틀림없지만 지금 불행하게도 사태는 그렇게 진전되고 있지 않다. 그동안 평양측이 1973년 8월 28일 김영주의 일방적 성명을 계기로 남북조절위원회의를 중단시키고, 실무자 회담마저 막을 내려버리고, 심지어는 서울~평양간의 직통전화까지 절단하게 되자 통일의 서광은 암담으로, 희망은 절망으로, 신뢰의 분위기는 불신의 확증으로 바뀌고 말았다.

우리는 평양측이 무엇때문에 일체의 접촉을 거부하고 서울측의 모든 제안들을 반대, 묵살, 비방으로 대하면서 강경자세를 일관하고 있는지 그 진의를 아직 모른다. 표면적 이유로는 서울측이 자주적 통일을 약속하고도 「미제침략군대」를 철거시키려 하지 않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말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민족적 대단결을 하자고 하면서도 남한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합법화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남북한의 동시가입 주장으로 「조국분열의 영구화」를 책동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 나온다.

## 2

이러한 이유가 정당한 이유로 될 수 없음은 평양측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이고 주관주의적인 주장과 요구가 잘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은 「외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군대를 최우선적으로 남한으로부터 철거시킴으로써 자주적 통일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소련과 중공은 외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놓하고 있다.

요컨대 그의 주장은 자기는 중·소의 두 강대국과 당연히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대해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적 주장이 노리는 것이 무엇임은 새삼 논할 필요조차 없다. 동시에 그는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에서 전미군이 철수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 국군은 수를 늘려도 안되며 무기와 장비를 도입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남한을 훨씬 능가하는 군사력 증강은 덮어두고 말하지 않는다.

그 위에 평화통일의 공식으로는, 남조선 혁명을 완성하여 남한에다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란 이름의 공산당정권을 세운 다음 이것과 북한의 사회주의 세력이 평화적으로 단합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만일 서울측이 한·미동맹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소련과 중공은 외세이므로 북한은 이 나라들과 군사적 유대를 우선 끊고, 외부로부터 무기도 반입하지 않는 것이 평화통일의 전제라고 주장한다면 평양측은 이것을 정당한 요구라고 해서 수락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북한에서 혁명을 일으켜 반공정권을 수립한 후 이것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과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서울측이 주장한다면 그들은 이것을 합리적 통일방안이라고 해서 납득할 것인가.

한편 평양측은 민족적 대단결을 위해서는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남한에서 공산당 운동을 합법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만일 서울측이 민족적 대단결을 위해서는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정

당을 허용하고 반공운동을 자유화하라고 요구한다면 김일성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한 당안의 같은 이데올로기의 테두리안에서마저도 우익수정주의자, 교조주의자, 반당반혁명분자, 보수주의자, 관료주의자등등으로 몰아 무수한 당원들을 소탕해 온 김일성이 결코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 3

오늘 남북대화가 과탄의 지경에 이른 것은 평양측이 자기들은 할 수도 없고 할 의사도 없는 일들을 서울측은 일방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평양측의 요구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제도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조치를 서울측이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요구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을 때는 「통일을 반대한다」고 규탄해 왔다.

평양측의 이러한 요구들은 필경은 평화의 명분에서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의 이름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책략이 되는 것이다. 사리는 명백하다. 남북한의 현실에서 민족적 숙원인 통일에 접근하는 방법은 남북쌍방에 다같이 유리하고 쌍방이 다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적 조건들을 하나 하나 탐색해 나가는 것이다. 상대방을 정복하거나 약화시키는 한편, 자기편은 강화하여 패자가 될 수 있게 할 신통력을 가진 평화적 통일방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 틀림없는 사실은, 남북통일은 전쟁으로도, 대내혁명의 유발로도, 평화공세로도, 내외의 선전으로도, 외교적 고립책동으로도, 첩자의 침투로도 달성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음성적 방법으로 상대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의 논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의 기준에서 평양측의 동태를 관망한다. 그들이 계속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남북간의 일체의 접촉과 교류에 반항한다면 그것은 곧 통일을 정면으로 기피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남이 자기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한 절대로 수락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세워 대화에 불응하는 구실로 삼는다면 그것은 곧 북의 내재적 취약점 때문이라는 판단을 국내외적으로 퍼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서울측은 평양측이 받지 못할 제안을 한 일도 없고 앞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 남북공동성명 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평양측이 모든 것에 앞서 사리에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조선일보(1978. 7. 4)-

### 7·4 공동성명 6주년

- 대화거부로 민족을 배신하지 말라 -

7·4성명 여섯돌을 오늘 맞는다. 그 성명의 내용과 정신이 좀더 전진적으로 구현됐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우선 느낀다.

성명은 분명히 이땅의 평화정착을 예약하고 있었다.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분단을 점진적으로 청산하면서 이념과 사상·체제를 초월하여 민족적인 화해와 단결을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그를 위해 적십자 대화를 성사로 이끌게 할 것이 규정돼 있다. 서로간의 중상비방을 안할 것도 다짐되었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충돌을 방지하자는 합의도 찾았었다.

이런 민족적 대과업·대소명을 풀기 위하여 조절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남북조절위원장을 지명하고 아울러 서울~평양사이에 직통전화선을 놓아 그 실행기구 및 장치를 갖추기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쌍방은 이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 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성실한 이행을 온 겨레 앞에 엄숙히 서약한 바 있었다.

오늘 이 훌륭하고 역사적인 약전이 평양집단의 고의적인 위반과 배신으로 빈사상태에 처한 것을 모를 사람은 거의 없다.

이 구실 저 트집을 잡으면서 대화 통로는 모두 단절시켜 버렸다. 부질없는 휴전선 일대의 도발 사건과 무장간첩·공비의 남파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한국에 대한 중상모략을 계속하고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자주적 노력을 마다면서 남의 나라와의 직접협상을 고집하는가 하면 민족적 대 단결의 전제 조건인 사상과 체제를 초극치 못한채 사사건건 우리에게 대한 내정간섭을 하려드는 판이다.

통일과 평화접근의 현실적 지름길인 손쉬운 과제·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교류·합작이나 가장 합리적 방안인 우리의 6·23선언, 불가침협정 제안, 평화통일 3대 원칙을 오래전부터 거부 일변도이며 근자엔 제2의 「6·23성명」으로 일컬어지는 남북한간의 민간경제협력 협의기구 설치 제의마저 또 욱설과 함께 고개를 젓고 말았다.

그 속셈과 사유가 뻔한지는 뻔하다. 결국 그 성명을 간판으로 앞세우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남한 사회를 흔들며 적화혁명 목표를 이뤄 보려던 것이었으나 좀처럼 먹혀들 것 같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들의 취약성이 너무 큰 것임을 발견, 움출하면서 꿈무늬를 뺀게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평양측은 도둑이 제발 저러하는 격으로 성명퇴색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우리를 향한 체제비평만을 하고 있다. 사실 체제시비를 하려들자면 오늘의 김일성 집단처럼 공포적 장기독제와 반민족적 전범집단·반평화적 집단은 세상에 더 없다.

아무리 그들이 7·4성명을 유린한 자기모순과 죄과를 면하려고 무모한 역선전 나팔을 불어댄다 해도, 그리고 그 속에 약조된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으로 기피한다해도 그 배반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멀지 않아 준엄하게 추구될게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 5천만 민족이 대화의 파탄자가 누구며 성명의 파기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세계의 양식자들 또한 이를 목도하며 계속 확인해가는 중이다. 사실의 객체와 신의 엘

범에는 그 속일 수 없는 진위의 분간이 엮어져 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7·4성명은 후일 언젠가 반드시 제빛을 발하리라고 확신된다. 그에 대한 모독과 배신을 평양집단은 일찌감치 단념할 줄 알아야 할 일이다. 대오일번하여 그 정신과 내용 구현에 성실하게 나설 용의는 그래도 없는가.

최고와 경고를 병발해 두고싶다. - 한국일보(1978, 7, 4) -



<남북적십자회담>

한적, 남북적십자 총재회담을 제의

『남북적십자 총재회담 열자』  
『서울·평양·판문점 어디서나』

대한적십자사 이호 총재는 지난 8월 12일 남북 이산가족의 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한 「8.12제의」 7주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판문점이나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라도 쌍방 적십자사 총재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이 호 총재는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난관이 가로 놓여 있더라도 남북 1천만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과 인내를 가지고 계속 노력할 것을 내외에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한적십자사측의 남북적십자 총재회담 제의는 중단상태에 놓인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코자 하는 방안제시이며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적 회담의 성사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지난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15 평화통일 기반조성구상」에 이어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로 막이 올랐던 남북한간의 역사적인 대화는 불과 만 7년이 지난 오늘에는 완전 중단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환영속에 열렸던 남북적십자사회담은 시작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이 평양측 조절위원장인 김영주의 이름으로 남북대화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중단되었고, 남북 직통전화 역시 1976년 8월 30일 북한측에 의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단절되었던 것이다.

또한 북한측은 최근까지 그나마 유일한 대화의 통로로써 명맥을 유지하여 오던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마저 지난 3월 20일 돌연 한미간에 연례행사로 진행되어 오던 「팀·스피리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무기연기를 선언함으로써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측은 1973년 8월 28일 이후에도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인도적 문제는 외면한채 정치선전만을 일삼는 북한적십자회측에게 실현이 용이한 시범적 사업으로써 「남북 이산가족 성묘방문단의 상호교류」와 「노부모 상봉」, 「이산가족의 사진교환」을 제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북한적십자회측은 「조건·환경개선」이니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철폐」, 「6·23선언의 파기」등 얼토 당토 않은 요구만을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대한적십자사측이 남북적십자 총재회담을 제의하고 또한 회담장소도 서울,

평양, 판문점 또는 북한적십자회측이 원하는 어떤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해도 좋다는 극히 융통성 있는 자세를 표한 것은 대화재개에 관한 대한적십자사의 열의와 진지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성실하고도 현실적인 대한적십자사의 제의에 북한적십자회측은 무조건 응하여 조속히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성의를 보임으로써 온 겨레의 염원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의 이호 총재 담화문 전문이다.

<대한적십자사가 남북간의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197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지 어언 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적십자회측과 회담을 진행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들을 찾아주고 아울러 이와 같은 인도적 사업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신념아래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1971년 9월 20일부터 판문점에서 시작된 25차의 예비회담과 16차의 실무회의에 이어 1972년 8월 30일부터는 서울과 평양에서 7차의 본 회담이 개최되었고 1973년 7월 이후 본 회담이 중단된 후에는 7차의 대표회의와 25차의 실무회의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측은 1973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제7차 남북적십자 본 회담 이후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1976년 8월 30일에는 5년간 운영되어 오던 남북직통전화선을 단절시켰고 1978년 3월 20일에는 남북간의 유일한 대화 통로였으며 남북적십자 본 회담을 정상화하려던 실무회의마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남북적십자회담은 완전히 중단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적십자회담의 전과정을 통하여 그 동안 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적십자심인사업의 상호 교환에 의한 소식과 안부의 전달을 비롯하여 성묘방문단의 상호 교류, 60세 이상의 노부모 심인사업의 우선 실시, 이산가족들간의 사진교환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본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제8차 본 회담 개최일자를 여러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의하였을 뿐 아니라 「체네바」에 있는 적십자국제위원회를 통한 본 회담재개 중재요청, 쌍방 수석대표단의 면담제의 등 가능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북한적십자회측에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측은 대한적십자사의 이러한 성의있는 제안들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적십자회측이 동포애와 인도주의정신을 외면하고 1천만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거부하며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파기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국제사회는 사상과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모든 나라들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날이 좁아지는 세계속에서 모든 나라가 서로 이웃처럼 왕래하는 개방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방문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 중공을 비롯한 여러 공산국가들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들도 안부편지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간에 아직도 편지 한 장 서로 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남북의 단절상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은 남북간에 존재하는 이념과 제도의 차이가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회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광복 33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북한 적십자회측은 더 이상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의 애절한 소원과 5천만 겨레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적십자 인도주의회담의 재개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섬으로써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인도적 해결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관문점이나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쌍방 적십자사 총재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북한 적십자회측은 우리의 이같은 진지한 제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난관이 가로놓여 있더라도 남북간의 1천만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과 인내를 가지고 계속 노력할 것을 내외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그간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여 온 남북적십자회담을 여러 방면으로 협조 성원하여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과 관계 당국은 물론 특히 국내외의 언론기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더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의 「8·12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7주년을 맞이하여 적십자회담의 조속재개를 촉구하는 주요일간지의 사설이다>

-편집자 주-

북녘에 띄우는 한

하늘은 같은 한 울타리인데도 강도를 가로지른 단절의 구렁은 너무 깊고 멀기만 하다. 푸른 달빛이 부서져 내리는 휴전선엔 오늘도 이름모를 풀벌레 소리와 이따금씩 스쳐가는 바람에 서걱거리는 갈대소리 뿐, 대화의 실마리조차 끊어진 1백55마일엔 무거운 정적과 팽팽한 긴장만이 감돌고 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정말 언제까지 이토록 숨막히는 정적을 참고 견디어야 하는가.

앞으로 사흘뒤면 어언 광복 33돌. 이민족의 사슬에서 풀려난 환희의 축제도 잠깐, 또 다시 강토는 두동강으로 갈라지고 같은 말, 같은 풍속, 같은 핏줄을 가진 겨레끼리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아온 지 벌써 한 세대가 흘렀다. 몇 달 후, 아니 며칠 후면 되돌아 갈 줄 알고 떠났던 북녘고향을 30년이 넘도록 돌아가지 못하는 실향민의 가슴엔 이제 눈물조차 메말라버렸다. 삼추처럼 긴 하루가 쌓이고 또 쌓여서 3백65일, 그 3백65일이 다시 서른 번을 되풀이하도록 물기 어린 눈망울엔 고향산천만 무지개처럼 어른 거릴 뿐 혈육을 만나고픈 가슴엔 피멍울이 맺혔을 뿐이다.

뗏목이 굽이쳐 흐르던 압록강, 천길만길 낭떠러지 벼랑에 천년이 넘도록 울푸른 절개를 지키고 있던 낙낙장송의 기억이며, 함박눈 퍼부어 내리던 두만강변 온성, 회령 등 변경도시의 겨울풍경, 산적적 으스스 달빛에 피눈물을 토하는 두견새 울음소리가 령을 넘는 삼수갑산,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태고의 원시림 속에 잠자는 개마고원의 추억 등등 두고온 산하에 대한 갈증은 끝간데가 없다.

12일은 대한 적십자사가 1천만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의한지 만 7년이 되는날. 분단의 장벽을 넘나드는 남북적대표들의 모습을 가슴두근거리며 바라보면 감격도 흥분도 이젠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한 핏줄을 나눈 형제끼리 무릎을 맞대고 앉아, 흩어진 혈육들을 만나게 하자던 대화의 탁자를 차던진 저들의 심술은 5년이 지나도록 풀리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기만 한다.

2년전엔 한가닥 대화의 실마리였던 직통전화마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5개월전엔 대화의 재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조차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는 엉뚱한 트집과 어거지로 대화중단의 책임까지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아카시아 꽃이 흡사 눈송이인양 휘날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왜 그리도 몸부림치듯 몹시도 불었던지요. 부는 바람에 꽃들은 모두 지고, 지는 꽃처럼 남편은 그 밤에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어느날 갑자기 어린 아이처럼 해맑은 얼굴이 되더니 무슨말인가를 나직이 중얼 거렸습니다. -엄마. 누구였던가요, 그 이름은. 그것은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 저의 시어머님을 부른 말임에 틀림 없었습니다.』

대한 적십자사가 8·12 이산가족 찾기 제의 7주년 기념으로 공모한 「혈육의 정을 그리는 편지와 수기」 중 편지부문 최우수작으로 뽑힌 어느 주부의 애절한 사연이다. 북녘땅에 두고온 어머니를 그리며 타계한 남편의 애뜻한 마음을 그린 편지가 마디마디 가슴을 저미며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시부모의 얼굴한번 본적없는 며느리가 지아비를 제손으로 묻은 죄인이 되어 북녘땅 시부모님께 한을 띄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모질고도 긴세월을 살며 참아온 오열이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한꺼번에 터져오는 사연이 눈물겹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해마다 명절이면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하는데 「어이!」 하고 소리쳐 부르면 금방 우줄우줄 일어나 다가올 것 같은 지호지간의 북녘산천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망향제로나 달래는 실향민들의 슬픔이 낙엽처럼 쌓여 간다. 서울 삼청동 3층 석조의 남북적회담장은 준공된지 5년이 넘도록 문도 한번 열어보지 못한채 이끼만 끼어가고 있다.

1천5백만 동포를 울타리 속에 가두어 놓은채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저들의 횡포가 언제나 끝날는지 아득하기만 하다.

우선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 마음의 빗장을 열어 놓고 얘거나 실컷 나누어 보자. 같은 핏줄을 타고난 형제끼리 가슴을 터놓고 만나자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썩겨서 자꾸 피하기만 하는가. 7년전의 감격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자. -경향신문(1978. 8. 12)-

#### 북은 회담재개에 응하라

##### -이산가족 찾기 적십자회담제의 일곱돌-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가족 사이에 재회는 고사하고 편지 한장 주고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는 장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장애는 언제 어떻게 제거될 수 있을 것인가.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북한적십자회에 제의한지 일곱돌을 맞아 우리는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되새기면서 이 문제를 다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의 제의에 따라 1971년 9월 20일 남북적 예비회담이 개막되고, 1972년 8월부터 본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가면서 열릴때 이산가족들은 그리운 혈육들과 오래간만에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뻐했고 온 겨레는 남북적회담이 성공하도록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회담은 두터운 정치적 장벽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한채 1973년 7월 제7차 본회담을 마지막으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버렸으며, 본회담의 재개를 위한 남북적 실무회의마저도 지난 3월 20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26차회의에 북한측이 불참함으로써 중단되고 있는 형편이다.

회담의 과정은 누가 이산가족의 재회를 가로막고 있는가를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오로지 적십자적 인도주의 정신에 의해서 이산가족의 문제를 풀어야 하며 여기에 어떠한 정치적 문제도 개재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의 선행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지를 썼던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측은 남북적회담을 이산가족의 비원을 풀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우리측은 우선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기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 북한측은 통일이 되면 남북간의 모든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

는 논리로 남북적회담은 통일문제의 해결에 곧바로 목적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에서 반공교육과 반공언론을 중지해야 한다는 등 엉뚱한 요구를 들고 적십자회담을 정치회담화하려고 꾀했던 것이다. 본말을 전도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회담은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전에라도 시급을 요하는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임을 북한측은 고의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북한측이 이산가족의 비원에는 관심이 없고 남북적회담을 오로지 그들의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이른바 1973년 8·28성명으로 일방적으로 중단시킨데 이어 남북적회담을 역시 일방적으로 무기연기 시킨 소행에서도 드러났다고 하겠다. 요컨대 그들은 공산화 통일의 길을 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남북적회담과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남북대화도 무가치하고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산가족의 비원과 같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성의와 인내로써 남북적회담이 재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이호 총재는 이산가족찾기 일곱들에 즈음하여 중단된 남북적회담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판문점이나 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쌍방 적십자사 총재회담을 열것을 제의했다. 이산가족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는 우리측의 변함없는 입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측은 이산가족이 재회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데 대해서 대내외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남북적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거듭된 제의에 더 늦지 않게 동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울신문(1978. 8. 12)-

#### 「8·12 제의」 7년

12일은 1971년 8월 12일 당시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남북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성명을 발표한지 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북한적십자회측이 이를 수락했고 그해 8월 20일 제1차 남북적십자 파견원이 접촉하는 한편 곧 9월 20일 제1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등으로 발전, 본회담을 성공시키기까지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감격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973년 7월 평양서 개최된 7차 본회담을 끝으로 돌연 북괴는 「8·28 김영주 성명」을 통해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이산가족 찾기를 표방했던 남북적십자회담은 아무 성과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8차 본회담 개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회의를 거쳐 1974년 7월 이후 개최된 실무회의를 25차례나 진행해오면서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8·12제의 7주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거듭 착잡한 느낌을 안겨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괴는 이 실무회의마저 엉뚱한 구실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무기연기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유일한 통로마저 막아 놓고 있는 실정에 있다.

공지된 것처럼 남북대화가 이토록 부진하고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북괴가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반공법을 폐지하라, 반국가사범을 즉각 석

방하라는 등 이른바 「조건환경론」을 내세워 의제의 실질적 토의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북적측의 주장은 순수한 동포애와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일관된 우리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우리측이 제의한 노부모 사업이라든지 남북 이산가족 성묘방문단 상호교류 내지는 가족사진 교환과 같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것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대화에 뜻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남북대화 기간중에도 전쟁준비에 광분한 실증은 많고 술한 휴전선 도발에다 8·18 도끼만행, 남침땅굴 등의 호전성만 노정해온 것이 북한이었다.

이런 전쟁미치광이들과 그대로 대화를 하겠다는 우리의 끈질긴 노력은 솔직이 말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동포애의 발로 그것이었다.

우리가 벌인 조총련계 재일동포에 대한 모국방문사업이 크게 성공을 거둔 것도 그러한 혈육의 정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순수인도주의의 실증인 것이며 이런 인도적 사업을 외면한 북괴의 정치책략이 결과적으로 분단민족의 슬픔만 더해줄 뿐이라는 것을 몰라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끈질긴 대화기피에도 불구하고 1977년 1월 대북 식량원조 제의를 비롯해서 「6·23특별담화」에서 제의된 「남·북한 경제협력」문제 등 우리의 진실된 대화재개의 노력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8·12성명」7주년을 맞으며 우리는 북괴가 다시 한번 7년전 그 당시의 자세로 돌아가 이산가족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숙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성의와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란다. 언제라도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언제든지 북한이 대화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듭 북괴의 호응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동아일보(1978. 8. 12)-

## 새로운 「8·12 제의」

-남북적 총재회담촉구에 담긴 혈육의 한-

### 1

이호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적십자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이면서, 중단된 남·북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판문점이나,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쌍방 적십자사 총재회담을 개최하도록 하자고 북적측에 새롭고도 절실한 제의를 내 놓았다.

우리가 잇을 수 없는 「8월 12일」에 한적총재는 다시 남북으로 찢겨져 있는 이산가족들의 한을 대변하고, 온 민족의 소망을 담은 획기적인 제의를 북녘을 향해 내 놓은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잇을 수 없다. 7년전의 8월 12일을 어찌 우리가 잇을 수 있겠는가. 그날 한적총

제는 적십자정신에 입각, 남북간의 순수한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남북 이산가족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의 소식을 알려주며 재회를 알선하는 가족찾기운동을 전개하자고 북녘 적십자 사람들에게 제의했다.

그로부터 극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남북간의 접촉, 대화, 나아가 분단 4반세기만에 실현을 본 남북동포(회담대표단)의 서울과 평양간의 직접왕래, 7·4남북 공동성명의 발표, 남북조절위원회 탄생 등등의 새로운 남북 관계사를 창조한 1971년 8월 12일, 그날의 제의가 안겨준 감격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을 것인가. 이호 총재의 이번 8·12 제의는 7년전 그날의 감격을 재확인시켜 주고 인위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혈육의 정에 또한번 소망의 불길을 당긴 이산가족의 한의 호소였고 회담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겠고, 어디에서든지 만나겠다고 한 이 제의에 북적측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우리는 5천만 겨레의 마음으로 지켜보고자 한다.

## 2

어느 한 정권도 어느 한 집단도 자의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숙한 민족전체의 염원을 간직한 적십자회담이다. 그것이 어처구니 없이 허망하게 단절돼버렸다. 우리가 그 어떠한 무리스러움을 요구한 일이 있었던가. 다만 적십자회담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통이 있고 관례로 돼 있는 심인방법을 활용해서 우리도 남북간의 가족찾기를 하자고, 세밀히 다듬은 방안을 내놓았을 뿐이었다.

이에 북적 사람들은 난데없는 트집과 억지 핑계를 내세워 하루 아침에 회담을 끊어버렸다. 1973년 8월의 일이다. 북적 사람들은 1976년에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남북직통전화를 끊어버렸고 금년 들어서는 가냘피 이어지고 있던 실무회의마저도 이렇다할 이유를 내놓음도 없이 또한 끊어버렸다. 그로써 남북통로는 1971년 8·12제의 이전 그대로 다시 꽉 막혀버렸다. 그래서 안될 일이다. 그럴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산가족의 한을 대변하는 한적은 이 끊어져버린 대화의 통로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무진한 애를 썼던가.

본회담의 장소도 양보를 했다. 시범사업으로 실마리를 풀기 위해 성묘방문단의 교류를 피하고 우선 급한 노부모들의 소식만이라도 전하도록 하고, 사진만이라도 교환도록 하고, 판문점에서 면회만이라도 시키도록 하자고 얼마나 호소어린 제의를 되풀이 해왔던가. 그것이 바로 이산가족들의 마음이었고, 5천만동포의 심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북적사람들로부터는 아직 진정한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호 총재의 이번 8·12 제의는 북적 사람들이 남북으로 찢겨져 있는 가족들의 아픔 앞에 동포로서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한번의 소중한 기회의 제공이다. 그것은 서로가 민족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손길의 내뻗음이다. 적십자회담이 간직한 뜻과 목적은, 어느 한 정권이나 어느 한 집단도 자의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은 아득히 미치지 못하는 안타깝고 절실한,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민족의 소망인 것이다. -조선일보(1978. 8. 13)-



## 8·12제외의 불빛

- 회담 끊은 평양, 인도앞에 떨고 있다 -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우리 대한적십자사(한적)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자고 제의한지 오늘로 꼭 7돌을 맞는다.

『적십자 정신에 입각, 남북간의 순수한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남북 이산가족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의 소식을 알려주며 면회를 알선하는 가족찾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그에 따라 서로의 특파원접촉, 예비회담진행, 본회의개최(제7차까지)의 고비길을 달리던 중 이른바 김영주의 8·28성명으로 1973년 가을부터 회담이 비틀거리게 된 과정은 널리 내외에 알려진대로이다.

연후 그것을 다시 속개시키고자 적십자 실무회의를 오랫동안 열어왔지만 올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제26차 회의를 평양측이 일방적으로 보이코트, 회담장의 모든 불은 꺼지고 말았다.

적십자회담의 파괴는 그의 의도와 여파가 심상치 않은 면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그 비리를 거듭 규탄치 않을 수 없게 한다. 그것은 단지 남북 이산가족 찾기라는 그 회담 자체의 목적을 배반한데 국한되는 처사가 아니다.

5천만 한 겨레의 숙원과 세계인의 여망을 저버리고 인도주의 본연의 정신 영역을 그들이 벗어나는 소행이다. 그 뒷전에 다시 동족상쟁을 벌이려는 흉악한 계산이 숨었음을 또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회담은 사실상 우리 남북간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안내하는 다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적십자 예비회담이 무르익음에 따라 그 줄기를 타고 1972년 봄엔 남북간에 고위 비밀정치회담이 진행됐고 이어서 7·4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가 생성됐었다.

단절 27년간의 장벽을 한순간에 녹이면서 이처럼 대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유인은 역시 적십자 기구 및 그 사업의 본성이 아니고선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한데 바로 그 적십자간의 실무회의마저 무모하게 마비시킨데서 북괴의 씻지 못할 죄악은 보태진 것이다. 모든 대화를 다 집어치우겠다는 표독한 자태며 망동일시 분명하여 그렇다.

실제 그들은 「남한당국과의 일체 대화를 끊겠다」는 방자한 공언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 사연은 뻔하다. 서울에 와보니 자기들의 발전상이 너무나 뒤져 대화의 입장은 시중 풀리게 되고 대화진전에 따라 조성되는 평화의 분위기와 부각되는 남북의 두 실체성은 평화공존의 도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처방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을 낳게 되고 만다. 박정희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은 바로 그 집약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대남 적화통일과 「남조선혁명」노선을 고집해온 북한집단으로선 이보다 난처한 문제는 더없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은 곧 그들 집단의 목표를 잃게 하고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황급히 대화과탄을 획책한 것이다.

그래서 적십자회담장에서도 합의된 의제나 추진해야할 사업토의는 모조리 거부한채 정치적·군사적 비방, 중상만을 되풀이 하였고 모든 대화채널마다 얼토당토 않은 시비와 조건을 붙이며 회담의 격하·소감·매장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제 그들의 흥계로 확실히 대화의 불은 꺼졌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물리적인 소등에 불과할 따름이다. 1971년 한적축이 점화한 적십자회담의 그 불빛을 비롯하여 여타회의의 그것 역시 남북의 온겨레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서 쓸어(消)지지 않고 있다.

필시 심정숙의 그 불빛은 반영구적으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화를 두절시킨 북한 집단을 압박하면서 그 재점화를 재촉하게 될 것이다. 7년전 8·12제의는 그렇기에 역사적이고 항구적인 조명탑이었다고 할만하다. 그 불빛앞에 평양집단은 반성의 자태를 속히 비칠 줄 알아야 한다. -한국일보(1978. 8. 12)-

### 제3부 그밖의 남북관계 소식

조절위 서울측, 제2회 학술 「세미나」 개최

남북조절위 서울측, 7·4성명 6주년기념  
제2회 학술 「세미나」 개최

4반세기 동안의 분단의 슬픈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그토록 열망하던 통일의 서장이 열린다는 흥분과 감격 속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약속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6주년을 맞게 되었다.

또한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과 함께 온 겨레의 염원을 외면하며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남북대화 중단선언을 한지도 어언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의 「남북경제교류협의기구」 구성 제의를 비롯한 그 동안의 수차례에 걸친 대한민국의 대화재개노력에도 북한측은 계속 이를 거부하며 대남중상, 비방과 위장평화 공세로 국내외의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남북한관계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일층 높임으로써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아울러 민족중흥의 대도를 더욱 힘차게 만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하여 작년에 이어 남북공동성명발표 6주년기념 제2회 학술세미나를 1978년 6월 30일 각계인사 20명이 토론자로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민관식 공동위원장대리는 이날 토론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정신에 따라 대화를 통해 남북한관계를 개선하고 다시는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선의의 경쟁", 다시 말하면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을 통해서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온갖 노력과 성의를 다 하였다』고 밝히고 이와는 달리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평화」 보다는 「폭력」을 「민족」 보다는 「사상」을 더 중시하고 「이데올로기」적 전략전술을 구사하면서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하려 했으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끝내는 대화를 중단하고 대결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약 300여명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룬 「세미나」는 남북공동성명과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 남북한교류와 협력문제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남북한관계에서의 남북공동성명의 위치」(양호민·조선일보논설위원), 「남북대화의 민족적 기여」(황성모·충남대교수), 「평화정착의 가능한 모형탐색」(이상우·서강대교수), 「평화정착의 민족적 기여」(조재권·건국대교수),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승윤·국회의원) 등이 발표되어 진지하게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논문 가운데 이승윤의원의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전문이다.

이승윤  
<국회의원>

## I. 서론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민족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필수적인 전제가 되며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의 지속과 아시아의 발전에 있어서도 관건이 된다. 일찌기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남·북의 대화와 교류를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립과 긴장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 보면,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계제에 있는 것이다.

차제에 본고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남북한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 부분은 (1)통일외교정책의 전환에 대한 보완으로서의 대북한 경제정책면에서의 전환 (2)한반도 경제통합이 가져올 막대한 이익 그리고 (3)경제교류와 협력이 평화통일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갖는 의의 등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다음으로 남북한 경제 현황을 개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북한 경제교류의 여건을 분석한다. 그리고 남북한 경제교류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검토한 후 종합적으로 경제교류가 가능할 것인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에 비추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어떤 방향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 모색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 II. 남북한 경제교류의 필요성

### 1. 주변정세의 변화와 새 시대에의 적응

1960년대 이후 제3세계의 부상 등 세계의 세력 다원화 현상과 동서화해 「무드」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1970년대 초반부터 세계정세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제적 실리의 우위시대로 급진하고 있다. 특히 이런 추세는 월남전 종식과 함께 더욱 급속히 진전되어 오늘날에는 동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적대관계에 있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경제교류가 아무런 국제정치의 도덕적인 비판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후 각국의 급속한 경제재건과 특히 후진지역에서의 수많은 독립국가 탄생 및 이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인식증대 등에 따른 국제 경제면에서의 경쟁격화에 주로 기인한다. 이와 같은 실리위주의 성향은 선진지역과 후진지역에서 그 표현양상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 즉 후진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띄우면서 경제원조나 기술원조 또는 교역관계 등 경제적 실리에 따라 종래의 동서 양대진영간을 유동하면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 특색이다.

이에 비해 구주제국 등 선진국에서는 종래의 식민지 상실과 함께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제적 우위를 보지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정치단위를 초월하는 막강한 대규모의 경제단위 형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즉 조국애의 개념을 배타적이고 관념적인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국민복지의 실질적 향상이라는 차원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구체적으로 EC에서 처럼 자국의 정치적인 통제력의 부분적 희생을 전제로한 경제통합의 선택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양상은 다르더라도 양국 모두 국가실리, 특히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다른 어떤 국가목표보다도 중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태도변화는 새로운 세계질서형성을 선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정세의 변화는 한반도주변의 강대세력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재평가하게 하였고 그 결과 한반도가 남북한을 첨병으로 하는 동서세력의 충돌지점이라는 인식은 크게 퇴색하였다. 특히 월남전 종식 이후 크게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은 주변정세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변세력들은 한반도의 현상유지 및 평화정착을 강력하게 희망하게 되었다.

우리의 대외정책도 이와 같은 주변정세 변화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적응의 노력은 1970년의 8·15선언과 이에 따른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 1973년의 6·23선언 등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은 정부의 새로운 평화통일 정책과 병행하여 오늘날의 세계정세 변화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접근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종전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입장에서 북한의 UN가입을 반대해 왔으며, 여타의 국제기구에의 북한가입을 지지해 왔고 UN총회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될 때마다 남북대표단의 동시 초청안을 봉쇄하는 등 소극적인 통일외교 정책을 추구해왔었다. 그러나 6·23선언을 계기로 이와 같은 종래의 입장을 탈피하고 북한과의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대화와 대결을 통해서 전투없는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새로운 평화통일 외교 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비정치적인 분야에 걸친 다각적인 남북한 교류를 제안한 바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서 남북한 경제인의 상호교류와 상사의 상호 상주문제는 특기할 만한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이 동시에 UN이라든가 기타 국제기구에의 가입을 전제로 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제한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문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교류와 접촉, 경쟁 등의 제문제는 궁극적으로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최근 수년간에 있어서의 동서 화해를 기조로 하는, 국제정치, 경제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남·북한의 관계는 정치 및 군사적인 대립관계에서 점차 경제적 경쟁관계로 전환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또한 남북간의 교역이 가능성을 시사함과 아울러 각기 가지고 있는 대외 경제거래의 경쟁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북

한전략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이다.

## 2. 이상적인 경제단위로서의 한반도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나 민족의 실리를 중시하는 현실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경쟁 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경제적 「내셔널리즘」 및 신보호주의경향의 강화와 함께 공동이해를 갖는 국제간의 지역적 경제통합 내지는 경제협력의 강화 경향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경쟁에 있어서 대규모 경제의 유리성은 너무나 명백히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이론적으로 상품의 교역, 나아가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이 교역의 이익은 국가라는 정치단위에 의한 통제 내지는 저해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었을 때 즉 완전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극대화된다. EC는 바로 이러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경제통합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완전한 경제통합이다. 역내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 경제정책의 통합 및 통화의 통합 등의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실리를 선택하는 한 좋건 싫건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단계적인 정치의 통합은 불가피해지는 것이지만 설사 이것이 개별국가의 정치목표에 상반된다 하더라도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EC회원국들의 기본 입장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서 전통적으로 통합된 경제권을 이룩해 왔던 한반도는 종전 이래 완전히 분단된 상태를 지속해 왔으며, 경제교류의 가장 기본단계인 상품의 교역자체도 완벽하게 단절되고 있다. 30여년의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이 각기 별개의 경제단위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조정 내지는 적응하여 왔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이 합쳐지면 인구 약 5,000만의 이상적인 경제규모를 갖게 된다. 이것은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태리 등 서방 강대국가의 규모와 비슷한 규모이다. 자원이나 지역면에서도 남북은 각기 특징을 갖고 있어 지리적인 조화를 이룬다. 한반도 자체가 비교적 자원이 빈궁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북한지역에는 주요 광물자원과 수력·석탄 등 「에너지」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남한지역에는 수산자원과 농토의 부존이 북한에 비해 유리하다. 지리적인 면에서도 남북한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요충에 있지만 현재와 같은 단절상태하에서는 남한이 아시아 대륙에 접근하거나 북한이 태평양에 진출하는데 거쳐야 할 최적의 경로가 봉쇄당하고 있다.

특히 경제규모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에 남북한의 경제분단이 없었다면 남북한 각기 국내시장의 협소 내지는 기타 소규모 경제가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상론이요 희망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 한반도가 하나의 통합된 경제권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될 때 한반도는 아시아의 요충에 자리잡은 중간규모의 경제로서 막강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현재보다 훨씬 더 능률적인 성장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 3. 평화통일을 위한 과정으로서 남북경제교류의 의의

세계정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왕에 발표된 것과 같은 대북한 외교정책의 전환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대북한정책도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리 정부는 이미 이러한 정책전환의 의사를 명백히 해 놓고 있음은 전술한 바 있다.

또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남북의 경제통합은 지극히 소망스러운 일이며 쌍방에 지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필요성이 역설되는 가장 큰 요인은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으로서 갖는 의의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서독간의 긴장이 현저히 해소되어 우리보다는 훨씬 밝은 통일 전망을 갖게 된데는 무엇보다도 꾸준히 명맥을 유지해 온 양 지역간의 경제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물론, 동서독의 접근과정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독일의 경우 물자의 교류가 정치적 관계에 훨씬 선행하여 왔는데 비하여 남북한은 분단초기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물자교환형식으로 물자의 교환을 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체제면에서 동독도 초기에는 사회주의 경제운동과 중공업부문에 치중하였으나 점차 서방측의 시장경제와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금후 가능할 수 있는 양 분단국의 경제적 통합을 예견할 때 매우 중요한 조건의 비교가 되고 있다. 동서독이 1970년도에 들어와 기본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대화와 교류를 촉진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는 서독경제에 비하여 심히 뒤떨어졌던 동독경제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 세계 10대 공업국으로 부상할 만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서독과의 유리한 조건의 경제교류가 동독에 있어서는 불가결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금후 북한은 당면하고 있는 성장의 제약요인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거해 나가느냐 하는데에 그들 경제발전의 관건이 달려 있으며 만약 이러한 요인이 제거된다면 1980년대 중반기에 가서는 북한도 그 나름대로의 공업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이제까지 고수하여 오던 호전성과 그들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추구해 오던 「정치우선」을 점차 「경제우선」으로 전환하여 그들 경제발전을 극대화한다면 오늘날 동서독의 접근모형이 한반도에서도 어느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이 지난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그들 체제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외부로부터 고립된 가운데 군사력 강화위주의 전쟁경제능력을 배양한다면 금후 북한의 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궁극적으로 국력의 불균형은 확대되어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제거될 가능성은 희박해 진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경제교류는 평화통일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며 경제교류의 확대 자체가 통일에의 접근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교류는 그것이 자생적인 것이든 혹은 외교적 협상에 의한 것이든 대화와 접촉, 나아가서는 평화공존과 선의의 경제적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매체가 될 뿐 아니라 경제통합과 궁극적으로는 정치통합 즉 통일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의 한걸음이라는데 무엇보다도 큰 의의가 있으며, 그 필요성이 강조되는 소이가 있는 것이다.

### III. 경제교류의 현실적 가능성과 그 저해요인

#### 1. 남북한 경제의 현황

지난 10여년 동안 수출지향적인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남한은 자급자족 경제를 지향해 온 북한을 현저히 앞질러 왔다. 노동생산성의 상승, 현대 기술의 도입 및 소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임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북한경제에 대한 남한경제의 강점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해방직후, 북한경제는 남한의 그것을 월등한 차이로 압도하고 있었다. 총량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면에서도 북한이 훨씬 더 유리한 지위조건과 일본패전당시의 산업시설 인수 등으로 월등히 "근대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후 30여년을 지낸 오늘날 비슷한 국토면적에 배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남한이 북한의 1인당 GNP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경공업 뿐 아니라 중화학공업분야에서까지 규모나 기술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1965년 이래 북한의 산업성장은 년 14% 이하였으며 그나마도 기간중 세차레나 부의 성장을 기록한 지극히 불안정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남한은 년 23% 정도의 산업성장을 지속해 왔다. 북한은 주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한 광업과 광산물의 일차가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남한은 중간가공내지 최종가공 등 보다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북한은 기계화된 다시비형 재배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여왔으나 아직도 식량부족이 심각한데 반해 남한은 다시비 뿐 아니라 신품종 등 기술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여 주곡인 쌀의 자급 뿐 아니라 수출까지도 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남한의 경제성장속도가 북한의 그것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데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경제사회체제상의 문제로서 사유재산축적과 다양한 소비기회 등의 「인센티브」가 있고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사회체제가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계획 및 통제중심의 사회체제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원론적인 이유이다. 또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국력의 더 많은 부분을 재생산력이 없는 무력증강에 사용하였다. 실물자원 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생산적인 교육보다 이념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할당하였으며 또 가장 생산적인 연령에 해당하는 병역의무기간이 남한 젊은이의 2~3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경제개발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남한은 일찌기 개방경제체제로의 과감한 이행을 통해서 일찍부터 국내산업을 국제경쟁에 노출시킨데 반해 북한은 자급자족 경제를 표방하여 폐쇄된 소규모경제로서의 여러 가지 비효율을 그대로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투자는 여러 면에서 불합리하게 배분되었고 더구나 무기생산산업에 과도하게 집중투자되어 경제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



졌다.

특히 북한은 1970년대초 남한의 급속한 성장에 자극을 받아 남한식의 경제개발전략도입을 시도한 바 있었다. 즉 과감한 외자도입으로 투자를 급진시켜 획기적인 성장을 해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경쟁부문의 경험부족과 국제신용의 저위로 대부분 악성부채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것조차도 비효율적으로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폐쇄적인 성격과 기술수용능력 부족으로 서방세계의 최신기술도입이 부진하였다. 그 결과 도입된 외채의 상황이 어렵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석유파동 이후 국제 일차상품시장의 경기가 급속히 침체됨에 따라 일차상품수출에 크게 의존해 온 북한의 외환사정은 크게 악화되었다.

이처럼 오늘날의 북한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반해 남한은 석유파동 이래의 세계적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성장을 쉬지 않고 있다. 북한경제의 이와 같은 실패는 세계경제 속에서 북한의 설 땅을 빼앗아 버렸으며, 북한을 세계경제 속의 미아로 전락시켜 버렸다.

## 2.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의 여건

일반적으로 경제교류란 국제수지상에 계상되는 모든 항목을 포괄하고 있는데 우선 상품거래를 위시하여 용역거래, 자본거래, 증여, 기타 인적, 물적인 모든 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나 협의로는 상품거래만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교류의 기본형태라고 할 수 있는 상품교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천연자원의 부존이나 산업구조의 차이 등에 의한 가격차이 이외에도 필연적으로 거래당사국 경제권내의 산업구조 자체가 무역에 적합하도록 변화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만약 이같은 자체의 산업구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류가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교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순수한 경제적 분업형태)가 가능하려면 쌍방이 이같은 산업구조의 변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전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무역은 그들 경제의 계획된 수급균형상의 과부족을 상쇄하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격기능에 의한 조정과정으로 집약될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교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무역정책하에서 이른바 사회주의공업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군수산업과 관련된 중공업부문을 우선적으로 건설해 왔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공작기계류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계공업부문을 최우선 시켜왔다. 따라서 북한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일반경제발전과정과는 반대로 중공업부문으로부터 경공업부문으로의 역행과정을 추구하고 왔다. 뿐만 아니라 폐쇄체제하에서 대외협력이 부진한 가운데 GNP의 35%에 달하는 고율의 강제저축과 GNP의 15%에 달하는 군사비지출을 강행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는 이제껏 극도의 내핍생활을 강요해 왔다.

그 결과 현재 남북한주민들의 소비수준은 커다란 격차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 「패턴」 역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북한이 최근 그들의 사회주의공업화의 추진을 위해서 비공산제국에서 수입을 위한 상담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을 보면, 수력발전시설, 석유정제시설, 합성수지공장, 세제공장, 아크릴릭 공장, 알미늄공장, 선박, 디젤엔진공장, 합성고무공장, 석유화학콤비나트 등이며, 이미 구주제국으로부터 발전소 시설 및 석유화학공장, 데트론공장, 냉간압연공장 등을 수입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산업설비도입에 필요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북한은 철광석, 무연탄 등의 광산물과 선철, 압연강재, 공구류, 시멘트, 금속제품, 수산물 등을 수출해 왔다. 철광석과 무연탄을 제외하면 한국의 수출과 경합하는 품목이 많다.

이와 같이 북한의 무역구조를 검토해 볼 때 그들의 주요수입품은 이른바 사회주의 공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시설이 대부분이며, 경공업분야의 소비재라든가 원자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상품교류는 다음과 같은 가정의 설정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남북한간이 체제와 이념의 대결을 초월하여 각기 산업구조를 통합된 단위의 일부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반도 전체로서 산업구조와 배치의 재편성이라는 각도에서 광범위한 상품 및 기타의 경제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 3.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북한의 상황이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군수산업위주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들이 전술한 근본적인 계획수정요인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 분업원리에 입각한 광범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의 경공업제품을 수입하여 주민들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정치적 전환이 없는 한,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의 거래를 설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경제교류의 범위는 극도로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하에서 상품의 교류가 성립된다면 그것은 쌍방의 경제발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지 못하는 품목의 교환에 국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남북한이 현단계에서 경제교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폭넓은 범위에서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교류와 협력을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교류와 협력의 여건은 경제구조가 상이할 때 상호 보완적이며, 수평적 분업관계의 형식으로 이루어 질 때 마찰요소가 적고 경제적 이익추구의 면에서 정치적 적대관계의 초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념과 체제로서 대립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남북한의 경우 경제교류와 협력여건의 판단 기준으로서 경제역량의 측면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지역간의 경제발전수준이 균등하지 못하고 격차가 있을 때에는 실력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암암리에 혹은 공공연하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같은 경우 경제력이 보다 약한 지역은 무력에 의한 침입이라면 몰

라도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스스로 피지배의 역학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통합으로 접근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 실리추구에 있어서 둔감한 후진지역에서 더욱 그러한데 이런 경우 정치이념이 경제적 실리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분할 독립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기 명분을 고수하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과정에서 한국경제가 북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세할 때 교류와 협력의 접근과정에서 한국의 양보범위의 확대 가능성에 따라 주도적인 통합접근이 가능하며, 만일 북한이 우세하다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의 조성을 위한 무력적화와 전쟁도발이 예상된다.

결국 남북한 쌍방의 경제발전과 공업화 단계, 전체적인 생활수준 등이 비슷할 때 평화공존 및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접근가능성은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

#### 4. 남북한 경제교류는 가능할 것인가?

앞서 검토한 여러가지 여건과 경제교류의 본격적인 추진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여러가지 비경제적 문제들을 생각할 때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대답은 일의적으로 제시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우선 경제구조적으로 보아 자원부존면의 상호 보완성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만큼 강한 것은 아니다. 북한 역시 절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지는 못하며, 특히 공업화가 더욱 추진되고 경제가 고도화하면 북한권내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넉넉치는 못하다. 또한 산업구조면에서도 남북한이 각기 단절된 두 개의 경제로서 독립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해왔고 더구나 전략적인 이유에서 쌍방 모두 중화학공업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기 때문에 공업화의 접근순서는 서로 달랐지만 그 구조는 상당히 유사하여 상호 경쟁적인 성격을 더욱 강하게 갖고 있다.

그러나 쌍방의 거시적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것 때문에 교역이나 기타 경제교류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적인 교역이론에 의하더라도 부존자원이나 산업 및 기술구조, 소비 「패턴」 등의 차이 이외에 지리적인 이유만으로도 교역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구나 현실경제는 지극히 복잡하여, 여건만 허락한다면 쌍방에 이익을 주는 교역기회는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정작으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가로막는 가장 중대한 현실적 요인은 경제적인 것이기 보다는 북한측의 폐쇄적 태도와 적화통일목표에의 집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의 폐쇄적인 태도는 무엇보다도 억압과 빈곤 속에 사는 북한주민들을 자유롭고 생활수준 높은 남한사회에 개방할 때 나타날 여러가지 정치적 위협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경제는 이 이상 자급자족의 폐쇄체제를 고집하기 어려운 처지에 와 있다. 외환위기, 기술의 낙후와 투자배분의 비효율성 등에 따른 성장의 둔화 내지는 파행성 등 산적한 여러가지 문제를 대내적 처방만으로 치료할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부로부터의 물질적인 도움과 다방면에 걸친 기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전환과 단계적인 개방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이나 대외적 신인 등을 감안할 때 선뜻 이와 같은 지원을 담당할 후원자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의 맹방인 소련이나 중공 자신도 여유가 있는 형편이 못된다. 소련에게는 이미 수억불 이상의 부채잔액을 갖고 있으며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향한 중공은 자국내 경제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한국은 외환면에서, 산업기술면에서 경제계획 및 개발전략의 수립면 등에서 북한을 도와줄 능력과 명분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해방 이래 지금까지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고 궁지에 몰린 북한의 편협한 경쟁심리가 정치적, 군사적 도발목표의 포기를 거부하는 한 한국측의 능력과 명분이 북한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이런 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아무리 북한의 경제현실이 어렵더라도 북한의 지배세력이 당장 그들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익과 한민족 전체의 공동번영이라는 명분을 남득해서 경제교류에 응할 것이냐는 미지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요컨대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당장에 남북한에 실리를 줄 뿐 아니라 미래의 통합을 위한 국토의 균형적 개발, 즉 지역적 특화내지 분업화를 위한 공통적 효율성의 증대를 기할 수 있다는 막대한 이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전망이며 인내심있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 IV. 남북한 경제교류의 접근방향

남북한 경제교류의 궁극적 이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 위에 통합된 경제를 이룩하여 민족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이고 가까운 목표는 가난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 입장에서, 그리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이며 교류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공존공영의 새 시대를 이룩할 전기를 찾자는 데 있는 것이다.

경제교류는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 자본협력 등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그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 상품의 교역

상품의 교역은 경제교류 및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남북한간의 적대관계는 한 세대에 걸쳐 극단적인 경제적 단절이 지속되어 왔으나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나 협력을 위한 협의기구가 발족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상품의 교역은 최소한의 양보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극렬한 적대관계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경제적 실리에 바탕을 둔 본격적인 교역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일 첫 단계로는 상징적인 정도의 최소한의 교역에 한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도 소비재나 일차산품 등 비전략적인 재화에 국한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직접

교역이 불가하다면 일본 등 제삼국의 중개로 시작할 수도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갑자기 남한 상표가 붙은 상품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거부하다면 상표를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초기 단계의 교역에서 경제적 실리는 보잘 것 없는 것이겠지만 완전한 단절을 극복했다는 상징적 의미는 큰 것이며 남북대화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역량 자체가 소량일 것이므로 상품선정에 있어서 현재의 무역구조를 크게 감안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교역의 성격은 대체로 관영무역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다음 점진적으로 교역량과 교역품목을 확대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감안한 품목을 선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수출하고 있는 각종 광물제품 내지 원광석은 남한에서 필요하며 우리의 각종 소비재를 북한은 필요로 할 것이다.

교역량 증대에 따라 쌍방간에 신뢰와 공동의 이해에 대한 인식이 두터워지면 쌍방은 서로가 갖고 있는 세계시장을 바탕으로 한 중계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자유세계 시장에 대한 수출입 창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남한은 북한을 「아시아」 대륙시장에 진출하는 중계기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단계가 되면 남북한은 각기 특정한 항구를 상호 개방하거나 남북연결 고속도로 내지는 철도를 개통시킬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며, 판문점 근처에는 상설 무역 전시관 같은 것이 설치 됨직하다. 물론 이 때는 남한측의 민간기업들이 남북교역에 많이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자본교류를 통한 경제협력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경제위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자본의 부족이다. 당장의 외채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 신용이 타락하게 되었으며 신규기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투자 및 성장의 침체가 불가피해 진 것이다.

김일성은 1978년 제2차 7개년계획의 착수에 즈음하여 채취산업의 확충을 통한 자력갱생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것은 자본의 부족 특히 외화의 부족을 무엇보다도 잘 나타낸 것인데, 채취산업은 신규투자나 기술없이도 노동의 투입만으로 생산증대효과를 기할 수 있으며 특히 세계시장에서 일반적인 수요를 갖는다는 점에서 저위기술 국가의 가장 손쉬운 수출산업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외채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나 북한의 능력에 비추어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달했었다. 이미 1975년경에 외채 원리금상환 부담률은 100% 이상에 달하고 있어 마약밀매 등 발악적인 추태를 부리다가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의 명예를 더럽혔던 일은 너무나 기억에 생생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한때 20% 수준에 이르렀던 원리금상환 부담률을 1977년에는 10% 수준으로까지 낮추어 비산유 개도국중 가장 낮은 율을 기록하였으며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높은 신용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 수상 이종옥은 2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부족문제를 자력갱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 라는 구호를 모든 분야에서 철저

히 관찰하여 전력, 연료, 원료,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 한 「키로그람」의 석탄, 한 「키로와트」시의 전력, 한 조각의 철, 한 토막의 목재라도 아껴쓰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벌여야 하겠다』라고 강조한 것을 보면 그들의 경제 정체상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 최후 발악적인 인간힘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북한의 경제적 악순환은 가속될 수 밖에 없으며 남한과의 격차는 누적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이미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기를 맞고 있으며 앞으로 자본수출국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KDI의 장기전망에 의하면 1981년까지는 경상수지 흑자가 약 10억불에 달하고 1986년에는 28억불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흑자, 누적된 외환 등은 어차피 중장기 무역신용, 차관 또는 원조, 직접투자 등으로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 제공될 것이다.

북한은 어느 나라 보다도 이러한 자본을 필요로 하며, 한국은 이왕이면 동족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저축여력을 사용할 명분을 갖고 있다.

교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우리의 수출입은행을 통한 무역 신용 형태로 중장기의 자본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당장에 민간 「베이스」의 직접투자는 어렵다 하더라도 원조형식의 장기저리 차관이나 혹은 무상원조 등은 제공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GNP의 약 0.5%만 북한동포를 위해 사용한다 해도 이것은 현재수준으로 약 1.5억불에 달하며, 1981년에 가면 약 3~4억불선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금액이 된다. 만일에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한국의 신용을 배경으로 북한을 단절된 국제 기체시장에 연결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의 기체에 대해서 그 원리금의 상환을 우리가 보증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본협력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많다. 우선 철두철미 실리추구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간의 자본거래가 북한을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자본제공이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본동기로 해서는 불가능하며 다만 동족을 구하고 평화로운 공동번영의 시대를 구축한다는 보다 차원 높은 목표에 입각할 경우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이와 같은 호의적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 들여지느냐는 미지수로 남는다.

그리고 우리의 자본제공은 호혜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그것이 북한주민들의 생활향상과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나 행동에 미루어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교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협력도 단계적 접근을 불가피하게 한다. 우선은 양국의 무상원조 내지는 장기저리의 대여, 민간 혹은 정부 「레벨」의 주요 생필품 원조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혹은 현재의 북한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조건부 지급보증 등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 상호 이해와 신뢰가 증진됨에 따라 차관 등의 제공과 합작투자 등이 차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의 주요 지하자원, 관광자원 등에 대한 공동 개발투자 등은 유

력한 남북한 합작투자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경제의 안정에 따라 제3국에 대한 남북한 공동진출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3. 기술교류를 통한 경제협력

상품교역 및 자본협력 과정에서 기술교류도 부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협력에 있어서 기술교류가 갖는 독특한 의미는 이것이 인적 교류의 성격을 크게 갖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교류는 인간간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불가피하게 수반하며 여기서 형성되는 우호적 관계는 단순한 경제교류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호 이해의 증진과 적대감정의 해소 등 민족 공동번영의 기반을 다지는데 있어서 기술교류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교류는 현실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교역이나 자본협력을 통하여 상호 신뢰가 어느정도 깊어진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폭은 매우 넓다. 특히 섬유, 음식료품, 합판 등 경공업분야의 기술은 세계첨단 수준이며 이 밖에도 의약품 등 화학분야와 금속, 전자부문 등에 걸쳐 광범한 기술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무역에 있어서와 같이 한국은 북한의 서방기술 도입창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은 북한을 통해 동구 등의 특수기술에 접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술협력은 구체적인 생산기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타당성 검토 등의 기초조사, 이 밖에 보다 학술적인 기초과학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및 연구조사분야의 협력 등이 추진될 수 있다. 특히 기술용역 부문에서의 경험과 지식의 축적은 괄목할 만하여 북한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 우선 쌍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초과학 기술이나 산업기술에 관한 남북공동 「세미나」 등 비교적 접촉의 기간이 짧고 추진이 용이한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단기 기술연수생 등의 파견, 기술고문단의 파견 등은 합작투자, 자본재, 「플랜트」 등의 연불수출 등 자본협력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제개발 계획이나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기술용역단의 파견, 유학생의 교류, 교수 등의 교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요컨대 1978. 6. 23 선언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일관된 통일원칙을 구체화한 현실적 정책 제안이다.

전쟁방지와 선의의 체제경쟁을 해 보자는 1970년의 8·15선언, UN동시가입과 문호개방을 천명한 1973년의 6·23선언, 상호무력불가침, 내정불간섭, 휴전협정존속을 중심으로 한 1974. 1. 18의 불가침협정 제안, 평화정착, 교류와 협력, 총선거를 내용으로 한 1974년 8·15의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선언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금번의 6·23선언은 3대 기본원칙중 교류와 협력을 구체화한 제안

인 것이다.

상품교역과 자본협력 및 기술협력 등 다각적인 경제교류를 위한 남북한 협의기구를 창설하여 교류증진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남북한이 각기 결여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켜, 조성된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민족의 공존과 공동번영을 꾀함으로써 7·4공동성명 정신을 구현시켜 평화통일을 달성하자는 우리의 끈질긴 노력의 소산인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과도적 현실적 정책노력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효율적 개발과 발전이라는 한민족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며, 이것은 또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궁극적 평화통일일의 지름길 임에 틀림없다.

북한은 우리의 이와 같은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구체적 제안을 성의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한적, 이산가족의 한 「망향기」로 출간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한 인도적 남북적십자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8월 12일 오전 10시에 남북적십자회담체의 7주년을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공모했던 혈육의 정을 그리는 편지와 수기의 심사결과 입상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온 국민의 성원과 참여 속에 이산가족 찾기운동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서로 다시 만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기원코자 하는 취지에서 공모된 이산가족의 편지와 수기의 응모작품은 편지부문이 136편, 수기부문이 54편으로 총 190편이었다.

이 가운데 심사결과 편지부문에서 13편, 수기부문에서 8편이 입상되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엮어 단행본 「망향기」를 발간하였다.

이들 응모작품들은 북녘 땅에 있는 부모, 부부, 형제, 친척들에게 띄우는 내용으로써 한결 같이 혈육의 안부를 묻는 사연과 혈육과의 생이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젠가는 재회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한 맺힌 기구를 담고 있었다.

편지부문은 북녘땅에 두고 온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딸과 아들, 오빠와 누나에게 보내는 글, 수기부문은 대부분 공산치하에서 총알의 소나기를 뚫고 극적으로 월남해온 이야기들이다.

또한 이들 이산가족들은 그들의 글속에서 『세월이 바뀌어서 달나라에 까지도 사람의 발길이 닿고 우표 몇장으로 수억만리 이역땅에서도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인데 불과 만나질이면 다녀올 수 있는, 또 소리쳐 부르면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떨어져 있는 고향과 혈육들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통해 했다.

응모작품들 가운데 최우수작으로는 편지부문에서 김혜신씨(서울 강남구 도곡 제2아파트 15동 503호)의 「북녘땅의 시부모님께」와 수기부문에서 권마리아씨(서울 성북구 정릉3동 698의3)의 「피맺힌 기도 30년」이 뽑혔다.

<다음은 편지부문에서 최우수작인 김혜신씨의 「북녘 땅의 시부모님께」와 우수작인 이수영씨의 「어머님 보시옵소서」, 강무송씨의 「엄마께 드립니다」를 게재한다. 우리는 이들 작품을 통하여 이산가족들의 애끓는 한과 망향의 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 북녘 땅의 시부모님께

김 혜 신

아카시아 꽃이 흡사 눈송이인양 휘날리던 날이었습니다.

그 날 따라 바람은 왜 그리도 몸부림치듯 몹시 불었던지요.

부는 바람에 꽃들은 모두 지고, 지는 꽃처럼 남편은 그 밤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닙니다. 눈을 감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승에서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뿐, 눈은 그대로 맑게 뜬 채 방향 모를 허공 어디 쫓인가를 내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이 밤 10시.

임종의 그 시각 역시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끊긴 듯 이어지는 간헐적인 호흡을 아주 긴 간격을 두고 다시 쉬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차라리 우리가 숨을 멈춘 상태로 남편의 숨소리가 다시 들려오기를 한동안 기다렸었던 것입니다.

호흡이 멎은 뒤에도 오랫동안 남편의 손목엔 이승에서의 체온이 따뜻하게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손은 저승 꽃 하나 피어 있지 않은 젊은 손 그대로 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한참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더 어리고 고왔던 시절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피부에서 피부로, 혈관에서 혈관으로 직접 혈액의 정을 교신했을테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김용화. 평안북도 「선천」이 고향. 일찌기 경찰에 투신하여 경기도 양평에서 수사과장으로 정년 퇴임.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금곡의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이 분은 어머니, 아버지 바로 당신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시부모님의 얼굴 한번 뵈지 않고 큰 절 한번 올린 적 없는 못나고 못된 며느리는 이제 다시 지 아버지를 먼저 묻은 죄인이 되어 호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개인적인 잘못만에 연유한 거라든가 슬픔이 아닌 것임은 시부모님 두 분께서 먼저 헤아려 용서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평안북도 선천 땅의 대농 지주로 계셨다는 시부모님께서서는 아들을 남모르게 급히 남으로 내려 보내시면서, 집과 땅이 정리되는 대로 곧 뒤따라 가마 하셨다지요. 그리고는 그것이 마지막.

그날의 짙막한 대화가 생이별의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다고 남편은 이따금씩 넋두리처럼 되풀이해 말하곤 했습니다.

시아버님 존함 자는 김복술. 남편에게서 그렇게 들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고향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남편 눈에 어리던 물기를 번번히 목도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활달하고 강인한 성격이어서 눈물 같은 것은 좀체 보일 것 같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고향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솟는 것이어서 그 단단한 어디에 저 뜨거운 눈물을 숨겨 두고 있었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히기사 고향이란 나이가 들어 갈수록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기차나 버스를 타면 훌쩍 하루만에 얼마든지 고향을 오가곤 하는 사람들도 고향이란 이름 앞에서 언제나 나이를 잊은 감상아가 되던 것을 많이 보아온 터이기도 합니다.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고향에 다녀오곤 하는 이들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지척으로 고향을 두고서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땅에 부모님을 두고, 생존의 안부 조차 알 길 없이 찾아 뵙지 못하는 자식의 마음 그것은 제가 지금 이런 놀변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송구스럽고 새삼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남편의 눈물을 저는 곁에서 지켜 보았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부모님께서 흘리셨을 보이지 않는 눈물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미어집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상의 자잘한 곳은 일에도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자주 흘립니다만 남북으로 갈리워진 혈육의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만큼 한스럽고 쓰라린 것은 다시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거대한 슬픔이며 역사의 피가 맺혀 있는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슬픔, 이 고통으로 맺혀져 있는 피명울은 언제 썸이나 풀어질 수 있을른지요.

우리 집은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이야. 남편은 건강하던 어느 때 제게 말했습니다.

생전에 통일되기를 늘 염원하면서 통일되는 그 날까지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 계실 것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해 오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38선의 장벽은 아직 견고하고 통일은 되지 않은 채, 남편은 그 목숨의 문을 닫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는 5월 20일이 일년이 되는 기일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꼬박 일년간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쓰러질 때 언어감각도 마비되었는지 침묵과 신음만으로 병상에 내내 누워 있었고, 사망 일주일 전부터는 완강한 도리질로 곡기를 끊기 시작 하였습니다.

아마도 꼭기를 꿰고 그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아이처럼 해맑은 얼굴빛이 되더니 오랜만에 밝은 웃음까지 입가에 지어 보이며 무슨 말인가를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가가 귀를 가까이 대며 다시 묻자, 『엄마』라고, 남편은 또렷한 발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의 제 놀라움과 기쁨과 슬픔과 착잡함을 저는 이곳에 다 표현하여 적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누구였던가요, 그 이름은.

아이들의 엄마인 저를 가리켜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은 무의식 속에라도 저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을 낳아 주신 어머니, 저의 시어머님을 부른 말임에 틀림 없었습니다. 성년이 되어서도 부르는 『어머니』가 아니라 유아기에나 불렀음직한 『엄마』, 그 한마디 속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투신하듯 남편은 일년간의 어둡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엄마』를 불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와 낱말 따위가 아니라 영혼의 외침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따뜻함과 그리움과 동심과 향수가 모여 있는 그 말속으로 의식이나 시간 혹은 질병까지를 뛰어 넘어 투신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남편에게는 어쩌면 가장 행복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란 또 얼마나 덧없고 뼈아프고 쓰라린 행복인지요.

숨이 멎은 뒤에도 감지 못한 남편의 맑은 눈 속엔 어릴적 뛰어 놀던 선천읍내 골목이나 부모님의 손을 잡고 찾아가던 주일날의 교회 풍경이 들어 있던 게 아닐런가 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즈음엔 때때로 물기어린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제 고향의 옛 모습을 회상해 보곤 합니다. 세월이 지나 기억 속의 낡은 필름으로 화했을 고향의 옛 풍경이 이상하게도 이즈음들어 더욱 푸르고 새로와져서 바로 어제 다녀 온 곳인양 세세히 떠 오릅니다.

저의 고향은 개성입니다. 그 곳 역시 가볼 수 없는 지척의 땅이지요.

한가지 다행이라면 월남할 때 부모님과 함께 떠나온 것이라고나 할까요. 지금은 두 분 부모님 모두 타계하시어 경기도 원당의 산 기슭에 잠들어 계십니다.

남편이나 저는 실향민인데다가 친척도 형제도 없는 외로운 몸이라 저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딸 아이 하나는 과년하여 이따금씩 혼사 문제가 화제에 오를 때가 있는데 가족 친척 없는 그 쓸쓸한 예식장 풍경을 생각하면 절로 어깨가 움츠러들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시부모님께서 곁에 계시어 제가 의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 든든할런지요.

어머님 아버지님.

그 차가운 북녘 땅에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대농이라든가 지주라든가 하는 말은 옛말이긴 합니다만 또한 그쪽 사회에선 철저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많은 고초를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살아 계시다면 두 분 다 팔십 연세를 넘으셨을 터이고, 만에 하나 돌아가셨다면 그 기일은 언제이며, 산소에 별초는 누가 해 줄까, 여간 걱정되고 궁금한 게 아닙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지내본 일 없어 모든 것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시부모님께 대하는 언사조차 이렇듯 생경하고 서투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이 허물을 부디 용서하시고 서투르나마 정성을 다해 올리는 저의 이 서신을 큰 절로 대신하여 받아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월의 아카시아 꽃 바람이 불 때면 잠시 남녘 하늘을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녘 하늘 아래, 망향의 한을 안은 채 당신 외아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 오래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머님 보시옵소서

이 수 영

고만 고만한 삼형제를 거느린 홀아비 생활이니 하루인들 어머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었겠나며 아버지께서는 웃어 보이셨습니다. 잠시만 어머니의 손에서 벗어나도 탈이 생기는 아이들인데,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남이 모르는 노심초사의 일을 많이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불쑥 재혼이라도 해야 좋을까도 생각이 드셨지만 세 아이를 그늘 밑에 키우게 될까봐 꾀꾀이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지금 출타 중이시고 집에는 저와 큰 아이 현이 있습니다. 현이는 며칠 후 시험이라 시험공부에 여념이 없고, 저는 한가한 일요일이라 마루 끝에 잠시 앉아있다 이 글을 드립니다.

『여지껏 살아 있으면 예순 다섯이 되었을까. 내 보다 두 살이 위였으니까……』

아버님께서는 간간이 북에 홀로 두고 오신 어머님의 말씀을 꺼내십니다. 하기는 지금도 마루를 질러 아버지 방문을 열면 그 맞은 편으로 제일 첫 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머님의 사진입니다.

지금의 저 보다 두어 살 쯤이나 오히려 아래로 보이시는 어머니. 반듯한 앞 가름마를 타시고 환하고 밝은 표정으로 아주 반겨하시는 어머니.

『끝내는 걸 못 보았지. 당신은 막내 딸로 컸으면서도 집안을 화기롭게 이끌 줄도 알고.』 아마도 어머니께서는 만며느리로서 종갓댁의 큰 마나님으로 후덕하신 분이셨던 듯 합니다.

어머님.

지금 클드리고 있는 저는 당신의 막내 아드님의 에미, 세째 며느리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뵙지 못했고,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의 손을 잡아 뵈울 수도 없는 저입니다. 제게 현이 아빠가 중한 분인만큼, 현이 아빠를 낳아주신 중하신 어머니인데도요……

제가 현이를 낳았을 때 아버님께서 어린 것을 들여다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 그 녀석 꼭 제 할미를 빼어 닮았구나』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보기에 현이는 커 갈수록 사진 속의 어머니를 닮아가는 양 합니다.

어머님.

황해도 안악의 안곡이라는 곳에서 어린 삼 형제를 먼저 아버님 손에 이끌리어 피난 내려 보내시고 당신께서는 병환 중이신 시어머님을 구완하신다고 남으셨다가 이내 내려오시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려온 저희보다 그 곳에 남아계셨던 어머니의 안타까움은 어떻게 말로 다 이룰 수 있을지요? 그 피멍이 든 세월을요.

아버님은 줄곧 교사직에 종사하시며 삼 형제분을 다 훌륭히 장성시키셨습니다. 큰 시아주버니는 스물 아홉에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들이 둘이 있고, 제지회사의 부장으로 계시고 작은 시아주버니는 가족과 함께 2년 전에 외국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이와 웅이 그렇게 형제를 두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건강하시고 가끔 기원에 나가셔서 바둑을 두시는 외에 친구분들을 만나고 또 집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늦장가라도 들게나!』

하며 친구분들이 장난 말씀들을 합니다.

어머님, 음력으로 팔월 초 닷새는 해마다 빠지 않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매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당신의 어머니의 생일을 저희는 제일로 하고 있습니다. 시할머님의 제일로요.

제일 많이 어머니에 대한 추억거리를 꺼내 놓기는 아버님 다음으로는 그래도 큰 아주버님입니다.

제일 기억이 가뭇한 현이 아빠도 꿀경단의 기억은 난다고 하니, 어머님께서도 꿀경단을 잘 빚으셨던가 싶습니다. 요즘의 꿀경단이라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며 모두들 입 속에 고인 침을 삼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늘 어머님께서도 듣고 계시는 편이지만 아득한 회상에 잠기는 표정은 지울 수 없지요.

그 곳 사시는 집 뒤로 바로 가파른 산이 이어져 있고, 또 왼편으로는 반마장 쭈 떨어져 무슨 강이던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뒷걸을 돌아서서는 커다란 도르래 우물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두고 터 좋은 자리라 우물 물 맛까지도 달고 시원타고 했다던가요? 정자나무 터로 큰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사슴재 고개를 넘으면 아버님의 단 한 분 누님 댁이 계셨고요. 곁에서 듣는 이야기만으로도 그 곳은 흰히 떠 오릅니다. 그리고 얼핏 아버님의 어깨에도 안 당게 키가 작으신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머님, 모질고도 긴 세월입니다. 술한 하루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한스러움이나 그리움은 외면해 둔 채요. 아마도 어머님께서도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혼자 떨어져 남아 계신 어머님이 피땀이 안타까움을 더욱 마음 아파하셔서 재혼도 마다하신 듯 합니다. 홀로 계신 어머님이 개가라도 하셨으면 좋으련만 못난 사람이라 욕된 세월을 그냥 보내시고 계실거라고도 하셨습니다.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라고 하여 못된 사람들의 시달리움이나 받지 않으셨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머님, 당장 달려갈 수만 있다면 어머님 손을 이끌고 모셔오고 싶습니다. 제 결혼식을 끝내고 폐백절을 드릴 때 아버님의 얼굴 저쪽으로 함께 곁에 계시지 못하는 어머님에 대한 안타까움!

저는 제 친 어머니마저 아니 계셨기에 더욱 더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당신의 무릎 앞에 정성스레 절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상냥하고 알뜰한 당신의 세째 며느리로 부끄러움이 없으리란 것을 꼭이 어머님 앞에서 다져두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한 나절이면 오고 갈 수 있는 곳에 있으면서 서로가 이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해야 할 까닭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아홉 명이나 되는 당신의 손자 손녀들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무엇보다도 순위 누이처럼이나 보살피듯 하셨다던 아버님이 궁금치 않으세요?

어머님!

사진틀 속의 어머님 얼굴을 고요히 올려 봅니다. 세월은 흘렀어도 어머님은 여전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우리 할머니야!』

『그런데, 왜 할머니가 주름살도 없구 머리도 하나 안 세고 까매?』

『그래두 뭐, 할머니는 할머니지!』

일곱 살 짜리 웅이와 이웃 집 웅이의 친구 아이가 주고 받는 말입니다. 그런 싱깡이는 큰 아이 현이와도 치뤘습니다. 번번한 싱깡이 때문에 아이들은 어느 때 할머니를 뵈어도 단숨에 알아 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머님 이 글 적는 동안 마룻방에서는 아버님께서 낚시도구를 챙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낚시 의자가 아마도 그 곳에 있지 않을텐데 그것을 찾으시는 모양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것을 닦아서 말려 다락 위로 올려 놓았으니까요.

어머님 ! 부디 오래 오래 건강하게 계세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꼭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생전에 뵈우고 어머님께 그 동안의 불효를 속죄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꿀경단을 빗으시는 옆에서 손 부지런히 거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게만 계세요! 어머님!

1978년 4월 28일 서울에서  
어머님을 그리는 세째 며느리가 드립니다.

엄마께 드립니다

강 무 송

엄마 !

큰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면 금방이라도 어디에선가 뛰어 나와 나를 덥석 껴안을 것만 같은 엄마의 모습이 눈 앞에 선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다시 또 사계절이 뒤바뀌기 벌써 그 몇 번째입니까?

단 며칠이라도, 그리운 사람을 만나보지 못함이 아쉽고 안타깝거늘, 하물며 그 오랜 세월을 바로 지척에 머무르면서도 떨어져 지내다니…… 그 사무친 그리움이 이제는 가슴에 응어리져 크나 큰 바윗덩이가 되어 이리 마음 깊숙이 잠겨 옵니다.

엄마!

그동안 건강하시고 집안 식구 모두가 평안하십니까?

북녘 하늘 어디엔가 살아계시며, 이 못난 아들을 못내 못 잊으시고 얼마나 애타해 하시는지요?

철부지 어린 중학생이던 제가 벌써 어엿한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아버님께서도 이제 환



갑을 넘으신 할아버지가 되셨을테고, 코흘리개 어린 동생들, 수전이, 수목이, 수옥이도 벌써 30이 넘은 어른이 다 되었을테지요?

1·4후퇴 몇 달 뒤, 집에서 굶주리는 제 모습이 하도 딱하고 애처로워 경기도 장단군 어느 시골 집에 맡기시고는,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되돌아 가시던 길이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이야 어찌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월이 바뀌어, 이제 달나라에까지도 사람의 발길이 닿고, 우표 딱지 몇 장이면 수 억만리 이역 땅에도 소식이 통하거늘 지호시간에 머무르면서도 이처럼 애절한 혈육의 정을 주고 받을 수 조차 없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이 맺히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납은 철조망, 휴전선이 가로 막고 있는 혈육 간의 뜨겁고 정다운 대화가 너무나 아쉽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차단하고 있는 저 엄청난 사상의 장벽이 원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베를린이 분단되던 날, 동서를 가르는 시멘트 블록 담이 채 아물기 전에, 담 사이를 흘러나오는 흰 반죽을 가리키며, 『저것은 눈물입니다』라고 어느 독일인이 소리질렀다더니, 정녕, 155마일 우리의 저주스런 철책이 바로 눈물의 장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 !

열네살 어린 시절에 엄마 품을 벗어난 제가 무작정 남으로 떠나 온 지도 어언 스무 일곱 해가 지나, 이제 중년에 접어든 어엿한 어른이 되었지만, 『어머니』 하고 부르기도 보다는, 『엄마』 하고 마냥 어리광을 피워보고 싶은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1964년, 경북 대구에서 결혼하여 지금은 네 딸을 거느리며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날 굶주림을 이기려고 옷가지, 시계, 그릇 등 손때 묻은 가재 도구들을 얼마 되지 않는 콩과 바꾸시고, 그 콩을 구워서 저희에게 몇 알 몇 알씩 세어서 나눠 주시던 기억은 결코 아득한 전설이 아니건만, 오늘 우리의 호의 호식이 차라리 꿈만 같고, 이 풍요와 행복을 한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없음에 설움과 죄책감이 한없이 북받쳐 옵니다.

끼니를 못 때워서 배가 고플 때는 간장과 된장을 찍어 먹고 냉수를 마시면서 배를 채우던 이야기, 지금 아무런 걱정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즐겁게 뛰 노는 자식들이야 천 만번을 들어도 믿기지 않을 만큼 저희의 생활은 남 부러울 게 없지만, 생활 보장도 없고 심신의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북녘 땅에서의 핍박을 생각하면, 잠자리를 편하게 하기조차 송구스러워짐을 어쩔 수 없습니다.

철이 다 든 자식들이 자주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물어 오고, 삼촌과 고모가 보고 싶다고 할 때는 6첩25 당시의 어린 동생들 생각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얼굴을 적시곤 합니다.

엄마 !

그 어느 날인가, 이웃집 할머니 생신이라고 흰 쌀밥 한 공기를 보내 왔을 때, 오랫동안 구경하는 밥에 미친 듯이 달려들던 동생들을 뿌리치시고 제일 막내에게만 먹이시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때 막내 동생이 먹다 흘린 밥알을 다섯 살짜리 철부지 수옥이가 주워먹자 막내 동생은 제 밥을 주워 먹는다고 막 양탈을 부렸었지요. 이를 보다 못한 엄마는 저희를 끌어 안고 울음을 터뜨리시고 말았지요.

이 곳의 작년도 쌀 생산량이 4천만 섬을 돌파하여 외국 수출까지 할 정도로 쌀이 남아 돌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북한 동포들에게 쌀을 보낼테니 받아달라는 애족적인 배려까지 하셨건만, 그 곳 주민들의 굶주림은 아랑곳 않는 공산당 무리들이 한사코 이 정성을 외면했으니 지난 날의 회억과 함께 뼈저리는 아픔으로 남습니다.

엄마 !

참, 이웃에 살던 원장수의 안부도 묻고 싶습니다. 1궤4후퇴 직전 들어서 돈을 벌어 보겠다고 시장터에 나가 도너츠를 만들어 이북 피난민들에게 팔던 생각이 납니다.

다정했던 이웃들도 제각기 삼지사방으로 흩어져 그 곳에서 조차 만날 길이 없을 걸 생각하면 다시금 삭막한 기운이 마음 한 구석에 몰려 옴을 느낍니다.

엄마 !

지금은 만물이 풍성한 결실을 꿈꾸며 한껏 부풀고 있는 4월, 가로와 나뭇잎이 나날이 생기를 찾으며 그 빛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봄의 은밀한 성장처럼, 엄마와의 막힘도 언젠가는 스르르 그 고삐가 기어이 풀릴테지요 ?

요즘은 말이 다르고 피부 빛이 다르고 생활 양식조차 다른 민족끼리도 피와 살을 맞대고 같이 손 잡고 땀 흘리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사상이 다르고 제도가 다를지언정, 사필귀정이거늘, 같은 말, 똑같은 음식으로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던 동족이 어찌 이 가증스런 비극을 안고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 !

서른 해 가까이, 글 한 줄 드릴 수 없었던 이 불효, 아니 모자지간의 이 부자연스러움이 언젠가는 한 바탕의 유쾌한 웃음 꽃으로 피어나리라 믿습니다.

듣기로는 개성은 특별 구역으로 본래 개성 사람들을 모두 다른 지방으로 분산, 이주시켰다는데 지금 쯤 우리 가족은 어느 하늘 아래 살고 계신지 궁금하기 한량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훈훈한 봄바람이 찾아들고, 정녕코 남과 북이 이어지는 영광된 날이 오리라 염원하며 그 해후의 감격에 제 꿈을 담고 싶습니다.

벽찬 재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까지, 제발 엄마의 그 자상하시고 상냥스런 낯빛 잃지 말으시고 오래 오래 살아 계십시오.

1978년 4월

대한민국 대구에서 불초 소자 올림

# **남북대화 제19호**

(1978. 10 ~ 1978. 12)

# < 목 차 >

제1부 민족적 화해가 통일의 길 .....	3
박 대통령, 불란서 「르·피가로」 지와 회견 .....	3
제2부 남북대화의 중단과 그 요인 .....	7
1. 남북대화 중단의 경위 .....	7
2. 남북대화의 중단요인 .....	9
제3부 대한민국의 대화재개 노력 .....	21
1.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노력 .....	21
2. 대한민국의 남북대화 재개노력 .....	27
제4부 최근의 남북관계 소식 .....	35
1. 대한사격연맹, 북한의 서울대회 참가를 촉구 .....	35
2. 『판문점에서 북한의 제3남침땅굴 발견』 .....	36

## 제1부 민족적 화해가 통일의 길

박 대통령, 불란서 「르·피가로」 지와 회견

『한국과의 관계개선 소·중공에 이익』

『통일위한 대화·민족적 화해 촉구』

박정희대통령은 1978년 10월 25일자 프랑스의 유력지인 「르·피가로」의 「알랭·베르네이」 편집국장대리와의 단독회견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공이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곧장 한반도의 평화가 크게 증진되리라고 내다 본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본과 중공이 체결한 평화우호조약으로 인하여 북한공산주의자들의 호전성 및 폐쇄성이 크게 견제를 받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대통령은 『동북아정세가 전반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소련과 중공은 결국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특히 근대산업국가로 발전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이 서로 대화와 접촉을 통해 불신을 해소하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는 길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계속 북한측이 대화에 응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불란서 「르·피가로」 지와의 회견내용 중 남북관계 및 한반도주변문제에 관한 분야를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문> :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전략적 지역중의 한곳에 위치하고 있는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각하께서는 지난 8월에 조인된 일·중 평화우호조약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각하께서는 이 조약이 더욱 광범위한 동맹관계로 발전되리라고 보시는지요?

<답> : 한반도는 미·일·중·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략적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중 평화우호조약이 동북아지역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당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동조약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아무도 자신있게 예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동 조약이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국가간의 새로운 오해와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제로 지역내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 : 일·중평화우호조약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일본·중공간의 접근으로 최소한 남북간의 공존관계가 방해를 받지 않고 지속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조약이 북한에 대해 견제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요?

<답> : 일본과 중공이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곧장 한반도의 평화가 크게 증진되리라고 내다본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긴장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평화공존만이 평화통일로 가는 첩경이라고 보고, 남북한간의 대화의 지속, 문호개방, 상호교류증진 및 남·북한의 동시유엔가입 등을 촉구했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남북한간의 교역, 기술 및 자본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 또는 정부수준의 남북협의체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의했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이와 같은 제의들을 북한공산집단은 아직까지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현재 그들은 우리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남북한간의 유일한 교신통로였던 관문점의 전화선마저 일방적으로 단절시키고 말았다.

이처럼 호전적이고 폐쇄적인 북한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그들과 군사동맹관계에 있는 중공이나 소련도 지금까지 별로 견제역할을 못해온 것으로 나는 알고있다. 하물며 일본과 중공이 체결한 평화우호조약으로 인하여 북한공산주의자들의 호전성 및 폐쇄성이 크게 견제를 받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우리의 희망과는 별도로 어렵다고 본다.

<문> : 중공내부의 권력투쟁과 미국의 전략상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경과 워싱턴간의 관계개선이 지속되고 더욱 발전하리라고 보십니까?

<답> : 미국과 중공간의 관계개선은 두 나라 사이의 쌍무적인 문제로서 나로서는 논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많은 국제정치 및 국제경제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미·중공간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개선, 발전될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을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1973년에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통하여 우리와 이념 및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정책에 의거하여 우리는 앞으로 소련·중공 그리고 동구라파 국가들과도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상호관계를 증진할 태세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문> : 대부분의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다는 미국의 철군계획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으로부터 철수하지 않겠다는 미국정부의 결의에 전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답> : 원래 주한미군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파견되었으며,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그 수는 점차 축소되었으나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전략적으로 민감한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 있어서의 균형을 유지하고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앞으로도 한·미간의 안보협력이 동북아지역 평화에 계속 긴요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자주국방태세를 토대로 동북아지역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데에 더욱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 : 각하의 생존시에 한반도의 재통일을 보시리라고 기대하십니까?

각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분단상황이 30년, 60년, 아니면 1백년정도 더 지속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답> :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더우기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며 최소한의 합리성마저도 결여하고 있는 북한의 미래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은 더 한층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동질성인 문화와 오랜 역사를 지닌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공산치하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자유와 존엄성마저도 박탈당한채 경제적 빈곤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지역의 우리동포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임무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970년에 남북간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할 것을 제의했던 것이다.

지금도 나는 한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민족적 화해(National Reconciliation)를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북한측이 우리와의 대화에 응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문> : 북한이 중·소 양국간을 이간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종용하는 중·소의 압력이 중화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답> : 북한은 과거 중·소분쟁을 이용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 설령 모스크바나 북경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양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중·소관계를 이용하는데에는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 호전성과 경제적 후진성 때문에 결국 소련이나 중공에 대하여 하나의 불편한 동맹, 즉 경제적 으로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소련과 중공은 북한을 하나의 불편한 동맹으로 생각하면서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에 대하여 견제역할을 하기도 곤란할 줄 안다.

그러나 동북아정세가 전반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소련과 중공은 결국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특히 근대산업국가로 발전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문> : 통일이 북한정권에 대하여 이데올로기 투쟁에서의 패배와 한국의 번영에 점점 더 낙후되고 있는 훨씬 작은 규모의 주민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의미한다면 통일을 위한 어떤 노력이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개발면에 있어서의 한국의 점증하는 우월성이 오히려 통일의 전망을 흐리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까?

<답> :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상대방을 정복하려 들고, 그들이 약세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으레 협상하자고 나오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기본전략·전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공산집단에 대하여 경제발전, 군사력, 정치체제 등 모든 측면에서 확고한 우월성을 보유하게 되면, 그들은 이제는 무력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호응해 올 수 밖에 없게될 것이다.

그런데 귀하도 인정하다시피, 북한공산집단은 한국의 번영에 대비하여 점점 더 낙후되고 있으며, 한국은 발전면에 있어서 점증하는 우월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명백한 현실은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가져올 가능성을 오히려 더욱 증대해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 제2부 남북대화의 중단과 그 요인

### 1. 남북대화 중단의 경위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은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인 김영주의 이름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남북대화를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의 평양측 서명자이면서도 그동안 신병을 이유로 대화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회피해온 김영주는 동 성명에서 돌연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으로써 ①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교체, ② 대한민국의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취소, ③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폐기와 동법의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중지 및 석방, ④ 남북조절위원회를 정당·사회전체 대표 및 각계 각층의 인민들이 참가하도록 광범하게 개편할 것을 요구,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대화중단을 기도한 것이다.

결국 북한측은 평양에서 개최될 제4차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뿐 아니라 서울에서 개최될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까지 중단시키고 서울-평양간의 왕래를 동결시킴으로써 사실상의 남북대화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측은 북한측의 대화중단선언이후에도 계속 끈질기게 대화정상화를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 판문점에서 10차례의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73. 12. 5~75. 3. 14), 7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 대표회의」(73. 11. 28~74. 5. 29) 및 25차의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의」(74. 7. 10~77. 12. 9)의 형태로나마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면서 본회담의 정상화문제를 토의해왔다.

그러나 1975년 4월 17일의 「프놈·펜」 함락과 4월 30일의 「사이공」 함락으로 이어진 인도지나적화사태의 비극적인 종말과 함께 북한측의 태도는 급격히 경화되었으며 끝내는 1975년 5월 30일로 예정된 제11차 조절위 부위원장회의의 「무기연기」를 일방적으로 서울측에 「통고」함으로써 부위원장회의의 진행마저도 무기한 중단시켜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남북대화의 개시와 때를 같이하여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사이에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남북간에 불의의 돌발적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상호의 사소통과 연락수단으로써 긴요한 의의를 지녔던 남북직통전화마저 1976년 8월 30일 돌연 단절시켜 버렸으며 그후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북조절위원회와 적십자사를 통한 수없는 기능정상화 촉구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걸르지 않은 서울측의 시험통화(전화선과 기계점검 호출)송신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만은 계속되어 남북간의 유일한 접촉의 통로로 되어 왔으나 끝내 북한측은 지난 3월 20일 개최 예정이던 제26차 실무회의를 한·미간에 연례행사로 실시되어 오던 한미연합작전훈련인 「티임 스피리트 78」 작전이 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 남북관계를 극도로 침체화시키는 행동』이라고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이런 형편에서의 회담개

최는 적십자정신에 어긋난다』는 구실로 돌연히 회담을 「무기연기」한다고 일방적인 「통고」를 함으로써 실낱같은 희망 속에 재회의 그날만을 손꼽아 오던 이산가족들의 애끓는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이로써 1971년 8월 12일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주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지 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의 두갈래의 남북대화는 아무런 구체적 성과를 내놓지 못한채 중단상태에 빠져 버렸다.

즉 남북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들과 친척들을 찾아주는 사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조절위원회 역시 아무런 사업분야도 개척하지 못한채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것이다.

## 2. 남북대화의 중단요인

남북대화의 전과정을 개관해 보면 남북대화는 1972년말과 1973년초를 분수령으로 하여 그 양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그 전반에서 대화의 진행은 상승곡선을 그렸고 그 후반에는 일로 하강곡선을 그려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한마디로 북한의 태도가 문제의 분수령을 고비로 하여 변화를 일으킨데 기인한다. 즉 북한의 태도는 1972년말까지는 어느 정도 대화긍정적이었으나 1973년에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히 대화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남북대화의 교차이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왜 북한측의 태도가 이처럼 돌변했는가? 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 가. 쌍방기본입장의 차이

남북대화는 궁극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에 임하고 있는 쌍방의 기본입장은 바로 쌍방이 추진하는 각자의 통일정책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이 당초 남북대화를 북한측에 제의한 근본목적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북한은 그들 나름의 통일전략인 「남조선혁명」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아래 대화에 응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대화에 임하는 쌍방의 기본입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 대한민국의 기본입장

대한민국이 대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는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능케 하기 위한 일련의 중간과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재통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면의 과제는 이미 한세대에 이른 분단기간중 남북간에 실재하는 2개의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체제간에 심화되어 있는 차이 즉 역사관의 차이, 가치체계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등을 해소, 동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화해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인 것이다.

한반도 남북관계의 현실은 남북한 사이에 엄청난 불신의 벽이 가로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심화된 불신관계는 상호 사상과 이념의 대립, 6·25라는 엄청난 전화, 휴전후 계속된 북한의 대남 간첩침략행위, 대한민국의 개방체제와 북한의 폐쇄체제의 차이, 그리고 극단적인 상호 부정 및 적대관계 등으로 말미암아 빚어졌다.

남북한간의 화해를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그것은 1차적으로 이러한 불신관계의 해소와 신뢰관계의 회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화해와 동화의 과정은 우선 한반도에 보다 안정된 평화의 정착이 선행되지 않고는 실현 불가능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느 누가 소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운위하면서 그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그러한 「평화통일」은 실체가 없는 한낱 선전용어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1차적 목표는 바로 진정한 평화통일의 실현을 선도하는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우선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대한민국이 대화를 통해 성취하고자 한 것은 북한공산주의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 ① 한반도에서 정규전은 물론 「게리라」 전 등 비정규전과 간첩침투에 의한 간접침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일체의 전쟁요인을 억지하고
- ② 남북한의 두 이질적 체제간에 과도적인 평화공존관계를 확보하며
- ③ 쌍방간에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그 폭을 점진적으로 넓혀감으로써 상호 신뢰의 회복과 민족적 동질성의 복원을 도모하고
- ④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착실하게 축적시켜 나가는 일련의 화해와 동화과정을 확보코자 하였던 것이다.

남북대화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기본입장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수차 천명되었다.

1973년 6월 23일 박대통령에 의해 내외에 선언된 「평화와 통일에 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6·23선언으로 통칭되는 이 정책에서 박대통령은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적 재통일이 대한민국정부가 성취하고자 하는 불변의 지상목표임을 강조하고 이의 성취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경주를 다짐했다.

박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평화적 통일의 달성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예견하고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도적 잠정조치로서

- ① 남북한이 상호 내정을 간섭하지 않고 침략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 ② 남북공동성명정신에 입각한 대화를 성실하게 계속하여 구체적인 대화의 성과를 생산토록 할 것을 제의했으며
- ③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민국의 단독가입은 물론이거니와 남북한의 개별 동시가입에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선언했다.

요컨대 박대통령은 이 선언을 통해 통일까지의 과도적 잠정조치로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북한이 수락하고 국제사회가 공인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한반도상에 안정된 평화를 정착시킬 것을 제창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또한 1974년 1월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지향적인 통일접근정책을 다시 천명했다.

이 회견에서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의 골자를

- ① 남북한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략을 하지 않겠다고 만천하에 약속하고
- ② 서로 절대로 상대방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 ③ 어떠한 경우에도 현존 휴전협정의 효력을 존속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협정을 맺어 놓고 앞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이 서로 평화공존을 해나가면서 그 동안에 서로 대화를 활발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 나가자』고 역설했다.

또한 1974년 8월 15일의 제2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 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이 바탕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3개항을 밝혔으며 1978년 1월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의 기본방침은 『선평화·후통일』임을 천명하고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평화의 바탕위에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책기조를 지금까지 확고하게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관성있게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1978년 6월 23일 「6·23평화통일의교정책선언」 5주년을 맞은 특별담화에서 박대통령은 남북간의 교역, 기술협력, 자본협력의 길을 트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민간경제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획기적으로 제의하고 남북동포의 복리증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북한측의 허심탄회한 수락을 촉구했다.

## (2) 북한의 기본입장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기본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나름의 「통일정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도 남북대화는 북한의 「통일전략」을 추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재통일문제에 관해 북한 역시 표면적으로는 이른바 「평화통일」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사실은 북한이 말하는 북한식 「평화통일」은 이름만 [평화통일]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통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방안은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전혀 일방적인 이른바 「선결조건」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위 「남조선혁명」의 수행이다.

북한이 말하는 「남조선혁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그릇되게 묘사하면서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낸 뒤 북한의 배후 조종하에 폭력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엎고 그대신 공산정권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가르켜 소위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평화통일」방안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이루어진 뒤라야 「평화통일」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식의 「평화통일」의 허구성은 김일성 자신의 공식발언에 의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고 있다.

김일성은 1971년 11월 2일 북한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의 이른바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통일의 전제는 「남조선혁명의 수행」이라고 단정하고 『「남조선혁명」은 「진조선혁명」(즉 「조국통일」)의 구성부분』이며 「남조선혁명」의 임무는 『남조선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북한 「사회과학원」이 출판한 「정치용어사전」(1970년판)에 의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당(공산당)과 노동계급의 영도 밑에 (특정 비공산사회의 기존체제를 폭력으로 타도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여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는 것이며, 「인민정권」아래서는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등을 실시하고 새로운 계급관계가 이루어진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지주·예속자본가·민족반역자들은 청산되고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요컨대 폭력에 의한 「적화혁명」을 말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공산집단의 기본입장은 『북조선을 「조선혁명」의 기지로 만들고 이와함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6페이지)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정권」 그 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즉 「헌정질서」인 것이며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의 선결조건은 대한민국의 「특정정권의 타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체제의 공산화」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이와같은 허구적인 「평화통일」방안의 정체는 남북대화가 시작된 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하루전인 1972년 7월 3일 북한의 「중앙방송」을 통해 발표한 소위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호상관계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정책해설에 그 본색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 정책해설에서 북한은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남조선혁명이 수행되는 조건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단정하고 다시 『통일은 반드시 남한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이룩된다』고 강조하여 「남조선혁명」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다 가공스러운 대목은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가 있지만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는 오직 유일하게 폭력적 방법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남겨지는 통일추구의 유일한 수단은 「비평화적 방도」 즉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인 것이다.

이것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호상관계에 관하여」라는 북한의 정책해설이 내린 결론인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은 이같이 강탈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일문제를 대한민국과의 대화 즉 협상이나 타협 등의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결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북한이 대한민국이 제의한 남북대화에 호응한 것은 결코 북한의 전통적인 평화부정적이고 폭력지향적인 기본입장을 수정하고 대한민국과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와는 반대로 남북대화를 통하여 가급적이면 무력적화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남조선혁명」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화에 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 시작후 대화진전의 조건으로

①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 ② 주한미군의 철수, ③ 군사문제의 선결을 고집했는데 이것은 일



방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의 바탕을 약화시켜 남북간의 군사적 불균형상태를 초래함으로써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시도를 가능케 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며, 대한민국의 반공정책에 시비를 걸어 반공법·국가보안법의 폐지, 반공활동의 금지 등 반공정책의 포기를 대화진전의 조건으로 고집한 것도 그 목적이 대한민국의 대북경각심과 반공체제를 이완시켜 공산당이 대한민국내에서 합법·반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여 「남조선혁명」이라는 이름의 폭력적인 공산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남북대화가 중도에 교착되고 결국은 중단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북한의 근원적으로 대화부정적인 기본입장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 나. 북한의 오관

1971년 북한측이 대한민국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였을때 만약 진정으로 대화에 의한 통일문제의 해결을 바랐다면 북한은 마땅히 이러한 「남조선혁명」노선을 버렸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장차 다가올 자기모순을 극복하는 길도 터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이른바 「남조선혁명」노선에 입각한 폭력적화통일전략을 고수한채 전술적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이용한다는 커다란 「오산」에 입각하여 남북대화 제의를 받아 들었다.

바로 이 「오산」이야말로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진전을 교착시키고 더 나아가 중단으로 몰아가도록 만든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오산은 몇가지의 「오관」에 기인하고 있었다.

첫째로 국제정세에 대한 「오관」이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인지사태의 악화로 미국의 국론이 크게 분열되어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고 잇달아 1972년 2월의 「닉슨」대통령의 북경방문이 예견되자 북한은 하나의 환상적인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

북한은 미국이 인지에서 패배하고, 아울러 인지에서 승리한 「인민해방전쟁」의 여파가 한반도를 포함한 여타의 아시아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며 그 결과로 결국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물러나게 되리라는 희망적인 환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북한은 닉슨대통령의 북경방문을 아시아로부터의 미국의 「불가피한」 퇴장을 상징하는 「패자의 외교」로 보았다.

김일성은 1971년 8월 6일 북경에 망명중인 캄보디아의 「노르돛·시아누크」 공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환영 군중대회를 연 자리에서 미국을 「서산낙일」에 비유하면서 닉슨의 북경방문을 『패배자가 백기를 들고 정복자의 진영을 찾아 가는것』이라고 야유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례없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만나 통일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미국을 안심시킴으로써 미군철수를 촉진해 보겠다는 하나의 「체스처」였다.

김일성의 「남조선혁명」 노선은 어디까지나 주한 미군의 철수를 제1의 선결과제로 삼고 있다. 그로부터 엿새뒤 대한민국이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할 때 북한은 남북대화와 주한미군철수와의 상관관계를 저울질했고 그 결과 남북대화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하는 하나의 촉진제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다는 희망적인 「오산」을 하게 되었다.

둘째는 대한민국 정세에 대한 오판이다.

북한의 「남조선혁명」 노선은 과도적인 투쟁단계로 대한민국 내의 야당 내지 반정부세력과의 이른바 「통일전선」을 추구하는 전술에 바탕을 둔다.

북한의 전술은 대한민국 내의 정부비관 세력에 의한 폭력적인 반정부운동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위장평화통일 공세를 전개하여 이들 반정부운동과의 이른바 「연합전선」 형성을 기도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중국적인 목표는 남한의 적화이나 전술상의 당면목표는 대한민국 정부의 타도에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기도가 제대로 주효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공정신과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워낙 철저했으며 또 북한판 평화통일 공세의 위장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쉽사리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1971년 8월 대한민국의 남북대화 제의가 있자 이른바 「인민 대 인민」의 차원에서만 추구하던 종래의 「통일전선」 전술을 변형시켜 우선 「상층통일전선」으로 「당국 대 당국」의 대화선을 형성하고 통일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선동함으로써 이것을 반정부세력과의 「하층통일전선」으로 유도, 이행시킨다는 전술의 변형을 꾀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상층통일전선」 단계에서 북한이 일차적으로 기도한 것은 대한민국의 반공체제의 이완과 국론의 분열, 그리고 지하공산세력을 위한 합법 또는 반합법적 활동영역의 확보였다. 그 다음 이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이른바 「하층통일전선」 단계에서는 위장평화통일 전선의 강화로 광범한 「반정부 연합세력」을 형성하고 지하 공산계열의 주도하에 반정부 행동의 폭력화를 유도하고 선동하는 것이었다.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은 그들의 빗나간 「오산」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남북대화는 결코 그들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희망했던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진 것이다. 주한미군은 철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력, 전쟁억지력으로서의 역량이 새로이 인식, 평가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반공체제는 이완되기는 커녕 국민 일반의 반공의식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의도하는 바가 명료해 짐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그릇된 오산으로 남북대화에 임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에서 협상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한은 형평과 호혜, 그리고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진행시킨다는 기본정신을 합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전과정을 개관할 때 북한은 이러한 정신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만을 거론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기도로 일관했던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 일반의 반공의식 이완을 조급히 서둘러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철폐, 반공활동의 금지, 반공단체의 해체 등을 내용을 하는 이른바 『남조선에서의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조성』을 남북적십자회담 진행의 「선결조건」으로 고집했다. 북한은 북한 지역내에서 사상 유례없는 폐쇄체제하에 김일성주의에 동화되지 않는 모든 요소들의 박멸을 무자비하게 추진하면서 남북대화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한국민의 반공정책만을 시비하려 들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의 안보태세 약화를 성급히 서둘러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현대화 계획의 중단과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군사 5개항」을 남북조절위원회 진행의 「선결조건」으로 고집했다. 북한은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이나 휴전협정체제의 유지 등 한반도 평화보장 조치는 아랑곳없이 주한미군문제와 한국군 장비현대화 계획만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으려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오산을 스스로 자각한 북한은 남북대화가 그들이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남북대화를 파경시키는 쪽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남북대화 초기단계에서 이미 그들의 기도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이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제고시켜 주고 북한의 기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반대효과를 발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북한의 오산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 및 전쟁억지문제와 밀접히 관련, 신중히 고려됨에 따라 그들의 기대를 빗나가게 만들었으며 더우기 유신체제의 발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안보태세의 강화는 남북대화를 통하여 남한내에서의 「혁명역량」을 강화시키려 했던 북한의 기도에 찬물을 끼얹는 치명타가 되었다.

#### 다. 북한의 내부사정

남북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에서는 북한체제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대두되었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하나의 전기로 해서 본격화된 남북대화는 남북간에 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인사왕래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됨에 따라 회담참가 인원들이 서울과 평양 사이를 왕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72년 8월 남북적십자 본 회담의 개막과 더불어 시작된 이 남북 왕래에 참가한 인원은 남북적십자회담의 경우가 한쪽에서 대표 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보도진 20명 등 도합 54명(제4차 회담 때부터 보도진 5명의 증가로 59명)이었으며 남북조절위원회의 경우가 한쪽에서 조절위원 5명, 수행원 10명, 보도진 10명 등 도합 25명이었다.

이들 회담 참가자들의 남북 왕래로 말미암아 남북한은 6.25동란 이후로는 처음으로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서 비록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기는 하지만 상대측 지역의 발전상은 어떠한가 생활상은 어떠한가를 직접 관찰하고 자기측 지역의 형편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한 왕래의 과정에서 북한은 뼈아픈 진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비하여 격세의 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과 제3차 5개년 계획의 호조로 전세계가 경탄한 지속적인 고도성장 속에서 경제적 번영을 지향하고 있었다.

반면 북한은 휴전성립 후 공산독재체제에 의해 주민들로부터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노력을 강제 동원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전후복구는 했지만 북한체제 특유의 폐쇄성과 국제협력체제의 결여로 인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새로운 산업기술지식을 도입하는데 실패하여 산업구조가 진근대적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들이 고수해 온 무력적화정책에 의거하여 그나마 산업의 중점을 군수산업 및 군수산업과 관련된 중공업에 일변도로 치중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그러한 결과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 소비경제는 거의 외면당한 채 1950년대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의 북한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행복한 사회」인줄로 믿고 있다. 왜냐하면 1945년의 해방과 한반도의 분단 이후 북한공산정권은 북한 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암흑의 폐쇄체제를 구축해 놓고 주위로부터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사회체제의 「절대적 우월성」을 맹목적으로 신앙하도록 철저한 세뇌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은 『불과 500명 내외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들이 지배하는 미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이며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기아와 빈곤과 실업에 허덕이고 있다』고 배우고 있다. 이것이 곧 그들의 저 유명한 사상교육 내용이며 김일성 우상화정책의 논거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선전을 위한 선전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남북간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북한의 선전내용이 전혀 진실과는 상관이 없는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 대화에 참가하여 서울을 방문한 북한측 인원들의 눈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평양」을 방문했던 인사들이 목격한 북한의 어둡고 무기력하며 전근대적인 주민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이질화된 생활방식, 가치체계, 역사관 그리고 언어가 풍기는 거의 이민족적인 분위기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반면 서울을 방문한 북한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된 경제발전상, 발달하고도 활기에 찬 시민 생활, 그리고 문물의 번영함을 보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보다 큰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에서의 이러한 견문결과가 북한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파되어 「김일성의 우상화」와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절대적 우월성」이라는 「신화」가 흔들릴 때 북한의 개인독재는 그 밑바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북한공산체제의 심각한 체제불안요인으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서울·평양 왕래는 바로 그러한 「신화」에 동요를 가져오게 한 계기를 만들었고 그 결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쌍방 사회의 상호개방이 가져올 위협에 대한 예기치 않았던 공포심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더우기 남북대화의 진전이 북한주민의 기강해이와 소비성 물자증대요구를 가져오고 남한을 생지옥이라고 해온 북한선전의 허구성을 노정했던 점들이 남북대화 중단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 라. 평화공존의 거부

내용상의 진전은 없더라도 대화의 계속 그 자체는 북한에게 예상치 않았던 부담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북한은 대화의 계속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기정사실화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싫든 좋든 간에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의 제도화는 불가피하게 남북한 두 체제간의 「체제의 우열」을 평가름하는 평화적 체제경쟁을 수반하게 되며 동시에 만약 북한이 평화공존의 제도화에 동의할 경우, 북한은 당연히 이른바 「남조선 혁명」노선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수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싫든 좋든 간에 남북대화의 계속은 그 자체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질서의 기정사실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남북대화가 「대화」의 단계를 넘어 사업실시의 단계로 넘어갈 경우 그것은 쌍방간의 「사회적 개방」을 가속화시켜 평화공존 질서의 기정사실화를 더욱 촉진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했다.

결국 북한은 남북대화가 사업실시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일단 열어놓았던 남북간의 문을 다시 밀폐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1973년 4월 6일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환영대회에서 김일성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은 민족

분열을 영구화하게 된다』고 단정적으로 평화공존질서의 수락을 거부하고 『남북대화를 남북의 당사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남북의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자』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남북대화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북한측은 김일성의 이같은 공개적인 대화파괴적인 의견표시가 나오기 전인 1973년초부터 사실상, 이미 대화의 진전을 억제하고 교착시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즉 1972년 한해동안 자제했던 무장간첩의 남파를 1973년초부터 재개했고, 한동안 「불륜」을 낮추었던 대남방송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북한의 태도는 급격하게 대화부정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이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하자 이를 대화중단의 결정적인 계기로 삼았다.

왜냐하면 6·23선언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두 개의 조건을 수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기본전제로서 우선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북한이 동의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명백한 전망이 설 때까지 하나의 과도적 잠정조치로서 남북한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침략을 하지 않는 평화공존관계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이 그동안 강탈적인 적화통일정책의 수단으로 추진해 온 소위 「남조선혁명」 즉 대남폭력혁명 기도를 명실검전하게 포기하라는 것이다.

6·23선언의 기본정신을 형성하는 이 두 가지의 요구는 한반도의 안정된 평화와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요구가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이 제도화되면 두 체제간의 우열의 격차를 북한쪽에 더욱 더 불리하게 심화시킬 것이고 평화공존 속에서 예상되는 평화적 체제경쟁은 북한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며 소위 「남조선혁명」기도의 포기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적화통일에 그 정권의 총체적인 적법성을 유지해온 북한에 있어서는 「남조선혁명」의 포기는 바로 적화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말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공존의 수락과 「조선혁명」의 포기는 김일성 우상화정책의 명분을 없애는 것이기도 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고민 때문에 6·23선언을 수락할 수 없었으며 또한 국제사회가 6·23선언을 공인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북한은 남북한의 개별, 동시 유엔가입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남북한의 평화공존관계가 국제정치사회에서 제도화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6·23선언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미 1973년초부터 남북대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왔고 따라서 남북대화를 중단시킬 명분을 찾던 중이라 6·23선언에 접하자 이를 비난, 1973년 8월 28일을 기해 남북대화의 일방적인 중단조치를 취한 것이다.

북한은 6.23선언을 「분열정책」으로 왜곡시키고 「분열주의자」들과는 『통일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없다』고 하며 이를 남북대화중단의 구실로 내세웠다.

### 제3부 대한민국의 대화재개 노력

#### 1.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노력

분단국가의 재통일에서 분단의 상태를 종식시키고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다음 두가지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 하나는 무력수단에 의하여 상대방을 타도하고 흡수하는 무력통일이며 다른 하나는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의 저해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감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성숙시켜가는 평화통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기본목표는 평화적인 방법과 수단에 의하여 통일, 독립된 조국을 건설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래 일관하여 5천만 민족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남북한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독립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한민국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외 정세의 성숙과 더불어 평화통일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취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 8월 15일 박정희대통령의 「평화통일구상선언」으로부터 출발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노력은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로 본격적인 남북대화의 시작으로 발전되었으며 끝내는 1972년 7월 4일 조국의 통일을 자주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며 또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3대 통일원칙에 남북쌍방이 합의를 봄으로써 남북공동성명을 발표케 되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남북간에는 두 갈래의 대화통로가 열려 4반세기동안의 단절로 빚어진 서로의 달라진 사회체제와 가치관을 눈으로 익히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얘기함으로써 통일의 초석을 다져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1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에는 또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가 마련되었으니 바로 1973년 6월 23일 박대통령이 선언한 7개 항목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이었다.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침략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박대통령의 이 같은 『평화통일외교정책』은 한반도상의 객관적인 정세를 현실로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항구적인 평화를 한반도상에 구축하며 나아가서 진정한 평화속에서 분단조국의 통일을 추구하려는 슬기로운 영단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1973년 8월 28일 소위 「김영주성명」으로 일방적인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통일의 희망은 좌초케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의 대화중단선언 이후에도 남북대화의 테이블에서 떠나버린 북한측에게 계속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있는 제의를 제시하여 왔다.

가.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1974. 1. 18)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실력으로 공략하려 하거나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려 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1974년 1월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박대통령이 남북한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으로 상호 무력침략의 포기, 상호 내정불간섭, 휴전협정의 효력존속을 골자로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점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할 것』이라는 내용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측은 『총이 있으니까 총격사건이 나고 서로 무력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요인이 증대되며 긴장상태가 조장된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서로 군비를 축소하고 병력을 감축하는 등 무력을 줄이는 노력이 앞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이말은 이치에 닿지 않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식의 논리를 전개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기는 물론, 인명을 살해할 수 있는 일체의 기구는 다 없애야 하며 병력화 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관등도 모두 없애야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현재의 군비를 대폭 감축한다든지 병력을 10만명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불식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쟁발발 여부는 병력이나 군비의 다소 보다는 무력침범을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약 남북이 서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굳게 약속하고 그를 만천하에 공포해서 서로가 절대로 상대방을 무력침범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한다면 한반도에는 우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보장이 섰을 때는 비로소 군비를 감축한다든지 병력을 줄인다든지 상호간의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무력을 감축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측이 주장하는 군비축소, 병력감축은 그보다 앞서서 『남북이 서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상호불가침의 약속을 굳게 다짐하는 일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오늘날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일로서 우리는 여기서 불가침협정 제의의 현실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남북은 서로 내정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서로 상대방의 존재권을 자기측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제의로서 필요한 요건이다.

비록 무력에 의해서 직접 침범하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존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언젠가는 병합 또는 흡수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념이나 체제 또는 제반 시책과 사회상황등을 간섭하고 비방하면서 시비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곧 새로운 분쟁요인을 증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가침협정은 직접침략이나 간접침략이나 간에 모든 침략적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상호 무력침범의 포기로 직접적인 전쟁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상호 내정불간섭원칙의 약속으로 분쟁과 긴장조성요인인 간접침략의 위험성을 아울러 제거하는 것은 오늘날 남북간의 불신과 긴장을 완화하는데 가장 긴요한 일이며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길이므로 불가침협정의 체결이야말로 오늘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세째, 『여하한 경우라도 현행 휴정협정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남북 상호간의 적대관계의 포기와 무력증강의 중지 및 침략적 도발행위의 금지등으로 상호충돌의 요인을 제거하고 전쟁재발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남북은 휴전협정에 의하여 열전상태를 잠시 중단하고 있는 셈이므로 만약 어느 일방이 휴전협정을 파기 한다거나 또는 그 협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휴전협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나 법적인 면에 있어서 다시 열전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상호 무력침범의 금지나 내정간섭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휴전협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가 없다. 현재의 남북분계선인 휴전선은 휴전협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경계선이다. 만약 휴전협정이 효력을 상실한다면 먼저 경계선에 대한 시비부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서해 백령도 등 휴전 후 20년이상 한국 수역으로 공인되어 왔던 지역에 대해 최근 북한측은 이를 자기측 영해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무력침범을 자행한 사실이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비의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휴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무려 43,000여건에 달하는 휴전협정위반사건을 저질러 왔고 심지어는 비무장지대에 까지 공격용 요새와 병기 및 정예병력을 투입 설치하기까지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휴전협정의 위반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로서 이제부터라도 이 휴전협정은 철저하게 준수되어야만 한반도의 평화는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휴전협정의 준수를 촉구하고 그 효력의 계속을 인정할 것을 다짐하는 불가침협정은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시급하고도 긴요한 일로서 박대통령이 그를 제의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정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박대통령의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제의는 그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고 정당한 것으로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이 평화공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잠정적인 방편이며

기본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1977년 1월 12일에 가진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측에게 또 다시 불가침협정체결을 촉구했다.

박대통령은 『남북불가침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대통령은 또 『만약 서울이 회담장소로 부적당하다면 중간지점인 판문점이나 쌍방이 합의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까지 제의했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불가침협정체결 촉구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 장기영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는 1977년 1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의 추진절차 등 제반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측은 끝내 회답을 보내오지 않았다.

#### 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발표(1974. 8. 15)

1974년 8월 15일 박정희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조국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선언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에 평화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본입장을 명백히 집약 제시하였다.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이어서 박대통령은 『만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6·23평화통일 외교정책과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외치는 통일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력통일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더 살펴보자.

첫째, 평화정착이다.

민족의 이질화를 막고 대화를 통한 교류와 협력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의 표현이며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이 「북침위협」 때문이라고 적반하장격인 허위선전을 일삼으며 남북간의 긴장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이 「상호불가침제의」를 수락하면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제의를 북한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미군철수를 운운한 것이 기만선전을 위한 전략에 불과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평화정착이 구현되면 북한의 무모한 무력도발의 가능성은 배제되고 전쟁의 위험성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 쌍방은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국민복지, 민족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투자를 돌림으로써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자립경제의 기반을 토대로 경제성장은 더욱 눈부시게 촉진될 것이다.

둘째, 문호개방과 민족적 신뢰의 회복이다.

평화정착과 마찬가지로 남북간의 상호 문호개방과 민족적 신뢰의 회복은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길이다.

남북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를 통하여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여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동질성을 되찾는 일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요건인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의 신뢰와 동질성 회복이 구현된다는 것은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간에 문호를 개방하여 이산가족들의 상호왕래는 물론 비정치적인 영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류를 확대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여건들이 조성된다면 남북 상호간의 불신은 해소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비정치적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것이며,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증진된다면 그동안 잃었던 민족동질성은 점차 회복될 것이며, 남북평화통일의 기반은 성숙될 것이다.

셋째,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이다.

평화가 정착되고 문호가 개방되어 서로 대화하고 거래하며 적대감정이 사라지고 민족적 신뢰와 동질성이 회복되어 민족공동체 의식이 남과 북에 팽배할 때 온 민족은 통일정부가 수립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통일정부와 통일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5천만 민족이 선택하는 통일정부를 수립,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평화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이 참가하고 아울러 민족의 영예를 세계사의 진운속에서 찬연히 드높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된 5천만 우리 민족은 평화선린의 대외관계를 유지, 통일된 조국의 지위를 높이 선양하게 될 것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국제질서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다. 남북한 민간경제협력기구 구성제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1978년 6월 23일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5주년에 즈음해서 다시 한번 6·23선언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킨 제의를 내놓았다.

남북간에 교역 기술협력, 자본협력의 길을 트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민간경제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간 경제협력촉진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과 「관계각료회의」의 제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6·23선언 5주년을 맞아 박정희대통령이 북한측에게 새로운 제의를 한 것은 7.4남북공동성명등 기존의 남북간 합의사항의 구현과 대화의 정상화를 위하여 그동안 대한민국이 꾸준히 제의해 온 여러 가지 평화통일노력을 현실에 맞게 보다 발전적으로 구체화시킨 적극적인 노력의 표현인 것이다.

이같은 제의의 배경은 거시적으로 볼 때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단일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상호대립에 의한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며 민족적으로 정치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남북한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을 통한 5천만 민족전체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 제의 역시 거부하므로써 그들의 평화부정, 통일부정적 태도를 노출시켰으며 그들이야말로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민족분열주의자」로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 2. 대한민국의 남북대화 재개노력

### <남북조절위원회>

#### 가. 남북한 고미술품 교환 또는 공동전시 제의

대한민국정부는 1976년 2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본의 교토, 후쿠오카, 도쿄 등지에서 「한국미술 5천년전」을 개최했다. 5천년의 역사를 관류한 한민족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술적 창조성이 담긴 이들 고미술품의 해외나들이는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켜 전시회는 곳곳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한국미술 5천년전」에 즈음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장기영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는 4월 12일 김영주 평양측공동위원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고 남북에 흩어진 고미술품의 교환 또는 공동전시회 개최를 제의했다.

우리의 훌륭한 조상들은 5천년의 유구한 민족 역사를 통하여 자랑스런 민족문화유산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물려 주었다. 이들 문화유산들은 서울을 비롯한 나주, 김해, 공주, 부여 등 옛 도읍지 여러 곳에서 계속 출토되고 발굴되어 민족문화에 대한 우리의 긍지를 나날이 새롭게 해주고 있으며 박물관을 찾아 이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찬란했던 우리에게 옛 문화에 모두 찬탄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인 것은 국토분단으로 말미암아 한 조상이 물려준 우리의 문화유산을 다같이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남북이 각각 따로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함께 볼 수 있게 한다면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해외에 빛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전래의 민족정신에 근거한 통일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조절위원회 서울측은 우리 민족의 긍지를 후대에 심어주고 그 슬기를 해외에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주선에 의하여 「남북 고미술품 및 고고학 자료」의 「교환전시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아울러 「공동전시회」도 쌍방이 합의하는 해외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평양측은 이러한 서울측 제의에 대해 공식적인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고 오히려 4월 18일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대변인 명의의 장문의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측의 동 제의가 『마치도 대화에 성의라도 있는 듯이 위장함으로써 대화파탄의 책임을 모면하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내외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보려는 어리석은 기만극이며, 가소로운 선전술책』이라고 악랄하게 이를 비방함으로써 이를 거부해 버리고 말았다.

#### 나. 7·4남북공동성명 4주년에 즈음한 서울측 성명

남북공동성명 발표 4주년을 맞아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1976년 7월 3일 북한측이 남북공동성명 본래의 정신과 취지로 되돌아가 그들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놓고 있는 남북대화를 즉각 무조건 재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 ① 북한측은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적 불행을 또다시 초래하게 될 긴장 조성

과 무력도발 및 각종 민족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호응해 나서야 한다.

② 북한측은 남북간의 대화 주무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의 무조건 정상화에 조속히 호응해나서야 한다. 이는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간의 제반문제는 그 어느 것이나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해결의 방도가 없으며 또한 대화와 합의는 그것을 준수하고 실천을 책임질 수 있는 당국간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그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북조절위원회를 발족시켰던 때문이다.

③ 북한측은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정상화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제기하고 토의하며 합의하는 성실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기회 합의된 대화기구를 부정하는 것은 남북간의 문제를 자의적,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북한측은 7월 3일 이른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성명의 「연합성명」을 「중앙방송」을 통해 발표했다. 북한측은 동 「연합성명」에서 북한은 『통일을 원하는』 반면 대한민국 「당국자」들은 『영구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독단적인 강변을 하면서 『이러한 근본입장과 자세의 차이 때문에』 쌍방간에는 『대화가 계속될래야 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태도가 여전히 대화재개에 대해서 부정적임을 명백히 했다. 동 「연합성명」에서 북측은 현안중인 남북조절위원회 재개문제에는 언급조차 없이 이른바 「대민족회의」 소집주장만을 되풀이 했는 바 북한이 주장하는 「대민족회의」는 그 「선행조건」으로 대한민국의 「공산화」 또는 「준공산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그들의 관심이 남북간의 대화가 아니라 이른바 「남조선혁명」, 즉 남한의 적화에 있음을 웅변해주는 것이었다.

#### 다.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 절차 토의제의

남북조절위원회 서울 측은 1977년 1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의 추진절차 등 제반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앞서 박대통령은 1월 12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간의 보다 안정된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상호불가침협정의 체결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만약 북한측이 이를 수락, 불가침협정이 정식 체결된다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새 제안을 내놓은바 있었다.

이에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1974년 1월 18일 박대통령이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처음 제의했을 때 남북공산주의자들이 동 제의가 주한미군철수문제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금반 남북 상호불가침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 이상 이제는 북한측이 대한민국의 불가침협정 체결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측에게 남북직통전화선을 조속히 재개통시킬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라. 7·4남북공동성명 5주년에 즈음한 서울측 성명

1977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 5주년에 즈음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단된 남북대화를 하루속히 정상화시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당면과제임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의 추진절차 등 제반문제를 토의할 것을 거듭 제의한다.

둘째로, 우리는 이를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세째로, 우리는 작년 8월 이후 평양 측이 두절시키고 있는 남북 직통전화를 조속히 재개통 시킬 것을 또다시 촉구한다.

마. 서울측, 「2백 해리」 토의를 위한 조절위 개최 촉구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1977년 7월 22일 평양 측이 이른바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키로 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의견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평양측에 촉구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앞서 평양측이 1977년 7월 1일 이른바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키로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민들의 조업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남북한간에 새로운 분규를 야기시킬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1953년 휴전이래 한반도에서 유지되어 온 현상에 변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휴전선에 인접한 동해와 서해상에서의 고의적인 도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어민의 안전조업이 방해받을 때는 대한민국의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었다.

이에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7·4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남북간의 의견차이를 해소하고 이들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절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였다.

첫째, 이들 문제와 관련한 남북간의 의견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둘째, 남북조절위원회 개최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부위원장회의를 판문점에서 늦어도 7월말 이전에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세째, 평양측에 의해 운용이 중단되고 있는 남북직통전화를 즉시 개통시켜 원활한 절차 협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이와 같은 제의에 대하여 평양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며 만약 평양측이 평화적이며 건설적인 이 제의를 외면하고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분규를 야기시킬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할 것임을 명백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서울측의 제의에 대하여 평양측은 7월 25일자 「평양방송」을 통하여 그들의 일방적인 「2백 해리 경제수역」 설정이 민족자주권의 정당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이견차이의 해소를 위한 조절위원회 개최는 괴이한 행위 운운하며 오히려 「6·23선언 철회」, 「전쟁정책 중지」, 「반국가사범의 석방」 등 종래의 상투적인 비난으로 일관함으로써 거부태도를 명백히 했다.

더욱이 북한의 당시 「정무원 총리」 박성철은 1977년 8월 9일 평양을 방문한 「사용투메 프린 시페」 정부사절단을 위한 환영연에서 남한의 영세어민들이 그들의 이른바 경제수역 안에 들어와서 평화로이 어로하는 것을 「동포애적 입장」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 『지난 시기에 남한어민들이 북한 수역에 와서 어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가증스러운 기만선전을 늘어 놓았다.

더욱이 북한측은 동서해 휴전선 부근 뿐만 아니라 그 남쪽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과 어부들까지 마구 납치했으며 1954년부터 지금까지 납북해 간 어선과 어부는 모두 4백48척, 3천4백87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32척, 4백25명이 아직도 북한에 억류된 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보다 인도적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한국의 영세어민들의 심리적 동요를 유발코자하는 간계를 부렸다.

바. 서울측,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의 전환 촉구성명

남북조절위원회 민관식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는 1978년 3월 3일 평양측 공동위원장인 김영주에게 보내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은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래 금일에 이르기까지 무려 5년이 다 되어가도록 대한민국의 대화정상화 촉구를 외면함으로써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한 남북간의 제 합의사항을 저버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외교적, 군사적 대결정책을 강행하여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모든 선전매체들을 동원, 투쟁과 폭력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의 분열과 이질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고 밝혔다.

돌이켜 보건대 만일 북한측이 남북대화를 중단시키지 않고 그동안 공존공영의 민족적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을 우리와 함께 해왔다면 오늘 한반도에는 이미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관계는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을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지난 5년 동안의 남북대화의 중단은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그만큼 뒤로 미루어 놓은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비록 지금은 조국분단의 비극에 처해 있으나 남북대화가 정상화

되고 평화가 정착되며 교류와 협력관계가 증진된다면 유구한 역사와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지혜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무궁한 민족번영의 앞날을 기약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그만큼 앞당겨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첫째,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평화문제를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교류 등 당면문제들을 토의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무조건 조속히 재개할 것.

둘째,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직통전화를 즉각 개통시키고 곧 부위원장회의를 소집할 것.

이상과 같은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의 제의는 남북대화의 즉각적인 재개추구와 그 대화의 테두리 안에서 추구되어야 할 새로운 차원의 방향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즉 남북관계를 「교류와 협력시대」로 전환시킬 것을 제의함으로써 지금까지 남북한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이라는 현실적 제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한 상호간의 실리추구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오늘날 세계각국이 사상이나 이념, 체제를 초월하여 서로 평화를 존중하고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대화를 통하여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장기적 안목에서 「쌍방의 자원, 기술, 지혜의 공동활용」을 제기하여 남북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이고도 적극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와 같은 서울측의 현실적 제의를 여전히 묵살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사. 7·4남북공동성명발표 6주년 맞아 서울측 성명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1978년 7월 4일, 7·4남북공동성명 발표 6주년에 즈음하여 북한측은 대한민국이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제 합의사항에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간에 제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울인 꾸준한 노력과 정당하고도 현실적인 평화제안들을 모두 거부하였으며 또한 5천만 민족의 염원이 담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남북간의 유일한 연락수단이던 남북직통전화마저 단절시켜 버렸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남북조절위 서울측은 1978년 6월 23일 박대통령이 제의한 「남북간의 경제협력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제의는 오늘날 남북관계에 획기적 전망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남북이 서로 이러한 길을 트는 것이야말로 같은 피를 나눈 한 민족으로서 사상과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에 접근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북한측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락을 촉구했다.

첫째, 지난 73년 이후 무려 5년 동안이나 중단시켜놓고 있는 남북대화를 무조건 조속히 정상화하

며,

둘째, 전쟁의 공포를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북간에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셋째, 고립과 폐쇄에서 벗어나 남북한 5천만 동포가 다함께 잘살 수 있는 복리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제의를 수락할 것.

그러나 1973년 8월 28일 북한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후 이와 같은 수 차례의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의 대화정상화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계속 중상·비방으로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남북적십자회담>

##### 가. 한적, 남북적십자 수석대표 면담제시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재대사로 임명된 이범석 부총재의 한적 측 수석대표직에 1976년 3월 9일자로 지연태 한적 부총재를 임명함을 계기로 정지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에 새로운 전기를 모색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한적십자사 지연태 신임 수석대표는 1976년 3월 31일 남북적십자회담의 대한적십자대표단 수석대표로서 남북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어야하는 막중한 책무를 통감하고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던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와는 별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적십자 쌍방 수석대표들이 직접 면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또한 이러한 면담이 진행 중이던 실무회의에서 의제토의를 촉진시키고 아울러 남북간의 인도적 회담을 조속히 정상화하는데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바라며 면담장소는 판문점이나 서울, 평양 또는 그 밖의 어느 곳에서든지 쌍방이 합의하는 곳으로 정할 수 있음도 아울러 제의했다.

그러나 북적측은 4월 7일 한적측에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그들이 1973년 여름에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근본원인」은 『남조선에서 인도주의회담의 근본사명과는 배치되게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면서 범죄적인 전쟁정책과 팃쇼화 정책을 감행하고 있는데 있다』고 영똥한 비난을 하면서 남적측이 쌍방 수석대표 면담제의를 거부했다.

또한 북적은 이 전화통지문에서 한적이 『그릇된 자세를 바로잡지 않는 한』 쌍방 수석대표들이 만난다고 해서 『문제는 풀릴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혼동하고 적십자회담에 대해서는 인도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만을 부여하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 나. 한적, 대한민국의 식량원조제의 수락을 촉구

대한적십자사 이호 총재는 1977년 1월 31일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동포

들을 위해 식량원조를 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내외에 천명하는데 대한 회담을 발표했다.

이호 총재는 적십자의 기본사명이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여 인류를 재난으로부터 구호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인도주의의 구현에 있으므로 적십자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적 견지에서 박대통령의 북한동포들을 위한 식량원조 제의를 충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이호 총재는 북한측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우리 정부의 제의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아울러 북한측이 우리 정부의 제의를 받아 들인다면 대한적십자사는 우리 정부의 위임을 받아 북한동포들을 위한 식량원조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데 최대한으로 봉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북한측은 이러한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인도적 입장에서의 식량원조 수락촉구」 담화에 회답을 보내오지 않았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식량원조 용의표명과 관련하여 2월 1일 「평양방송」을 통해 『이는 반공소동의 일환인 동시에 남한의 심각한 식량위기를 은폐하며 군량미 비축을 위한 인민수탈을 강화하자는 책동의 산물』이라고 모략을 하며 또한 『지금 남한에서는 문전걸식하는 사람들의 대열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굶어죽는 참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등 허무맹랑하고 악랄한 욕설과 함께 오히려 대한민국의 식량사정을 왜곡·헛뜯음으로써 이에 대한 거부상태를 분명히 하였다.

다. 한적, 「8·12적십자회담」 제의 6주년 맞아 담화 발표

대한적십자사 이호 총재는 1977년 8월 12일 「8·12남북적십자회담 제의」 6주년을 맞아 남북적십자 본 회담의 조속한 정상화를 거듭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1973년 7월 이래 본 회담이 중단된 채로 있으며 그후 4년 동안 관문점에서 6차례의 대표회의와 23차례의 실무회의를 거듭하면서 대화정상화를 위한 적지 않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제토의의 실질적 진전은 물론 본 회담 정상화마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이는 실로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남북적십자 본 회담 재개문제에 있어서 북한적십자회측이 서울에서의 제8차 본 회담 개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관문점이나 기타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장소에서라도 남북적십자 본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1974년 7월 이후 관문점에서 3년 이상 남북적십자 실무회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그동안 남북이산가족 찾기 사업에서 아무런 구체적 진전도 없었음을 상기하면서 남북적십자 본 회담의 조속한 재개야말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남북대화의 정상화의 첩경임을 강조하고,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6주년을 맞아 북한적십자회측이 동포애와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적십자 본 회담의 조속한 정상화에 호응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1천만 남북이산가족들을 찾아주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인내와 성실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5천만 민족 앞에 다짐하였다.

라. 한적, 남북적십자 총재회담 제의

1978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이호 총재는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적십자 총재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북한측에 대해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한 「8·12제의」 7주년을 맞아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코자 판문점이나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쌍방 적십자사 총재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이와 같은 진지한 제의에 대하여 북한적십자 회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촉구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난관이 가로 놓여 있더라도 남북간의 1천만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과 인내를 가지고 계속 노력할 것을 내외에 다짐하였다.

이와 같은 대한적십자사측의 남북적십자총재회담 제의는 중단상태에 놓인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코자 하는 방안제시이며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적 회담의 성사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측은 대한적십자사의 이러한 성의있는 제안들을 모두 거부하였다.

#### 제4부 최근의 남북관계 소식

##### 1. 대한사격연맹, 북한의 서울대회 참가를 촉구

###### 『관문점 통해 오도록 편의제공 용의』

대한사격연맹 박종규 회장은 지난 9월 9일 상오 10시 태능 국제사격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한측의 참가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북한측이 선수를 파견한다면 북한측 선수단을 관문점을 통해 직접 서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비롯한 모든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이 사격대회에 북한측이 참가한다면 남북한이 다같이 훌륭한 사격실력을 발휘하여 우리 민족 전체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또한 동족의식을 회복하고 남북간의 평화적 문화교류의 전진적 신호가 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끝내 불참하고 말았다. 대한사격연맹회장의 담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사격연맹회장 담화문

본인은 오는 9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될 제42차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아세아, 대양주, 유럽, 미주, 중동 및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로부터 70여 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번 사격선수권대회에 아직까지 참가의사를 통보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북한측이 이제라도 대회개시 일주일 이전까지 참가의사를 밝혀 온다면 이를 환영하여 참가신청을 접수할 것임은 물론, 참가절차에 있어서도 관문점을 통하여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비롯한 일련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남북한간에 "스포츠"분야에서부터 우선 교류가 실현됨으로써 동족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히는 바이며 북한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 2. 『관문점에서 북한의 제3남침땅굴 발견』

『지하 73m, 높이 2m, 폭 2m』  
『서울까지는 불과 1시간 거리』

1978년 10월 27일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 유엔군측 지역에서 또 하나의 북한 땅굴이 발견 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엔군사령부 대변인 「로버트·씨·리드」 대령은 관문점 제3땅굴의 발견을 발표하면서 『이 땅굴은 군사분계선 서쪽 약 1,200m 지점의 북한측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믿어지며, 대한민국 쪽으로는 군사분계선 동쪽 435m까지 연장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는 정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이며 더욱이 공격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을 북한측이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리드」 대변인은 『1974년과 1975년 2개의 북한 땅굴을 발견한 뒤 또 다른 땅굴들을 찾기 위해 광범한 노력을 경주하던 중 월남 귀순한 김부성씨가 관문점 부근에서 땅굴작업을 했었다는 말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탐사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리드」 대변인은 『1978년 6월 9일까지 탐사작업에 별 성과가 없었으나 6월 10일 이 지역에서 지하폭발이 있었고 그 압력으로 대한민국 육군이 박아놓은 탐사공 파이프가 물과 함께 튀어 올라 땅굴 징조가 드러났다』고 발견 경위를 설명했다.

1974년과 1975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견된 이 땅굴은 관문점 남쪽 4km, 군사정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군측 전방기지인 「키티호크」 기지 서남쪽 2km지점까지 파 내려와 있었으며, 서울에서 불과 44km 떨어져 있었다.

유엔군 측은 1978년 6월 10일 이 땅굴의 결정적인 징조를 발견하고 차단터널공사에 착수했으며, 1978년 10월 17일 지하 73m에서 북한 땅굴과 관통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북한이 파내려 온 세 번째 땅굴을 확인한 것이다.

화강암층을 아치형으로 파 내려온 이 땅굴은 높이 2m, 폭 2m 규모로써 중무장한 병력이 3~4명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써 총 길이는 1,635m로 추정되었다.

1975년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노동당원 김부성과 북한군 소위 류대운은 1975년 3월 21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전방군단들이 1971년 9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휴전선 전역에서 군단별로 몇 개씩 책임을 맡아 비무장지대 지하에 남쪽으로 땅굴 굴착공사를 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었다.

관문점 제3땅굴은 북한이 무력남침의 기본전략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입증해 주었다.

특히 이번 땅굴은 서울로부터 불과 44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의 제1목표로 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보다 더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군사적인 면에서 볼 때 문산~서울로 통하는 접근로는 북한이 남침시 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단공격의 회랑임은 물론, 자유의 다리까지는 불과 4km로써 북한이 이 땅굴을 이용, 대부대를 은밀히 침투시켜 임진강지역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습적으로 문산~서울회랑을 단숨에 장악하여 서울공략을 기도할 것임을 쉽게 짐작케 하였다.

또한 이 제3땅굴은 남북대화의 현장인 판문점지역을 파 내려온 것이란 점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판문점은 1971년 9월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부각되었으며 1972년 8월부터는 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회담 대표단이 서울과 평양을 왕래까지 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판문점지역 지하에서는 북한군의 남침땅굴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판문점 제3땅굴의 규모는 1975년 3월 중부전선에서 발견된 철원 제2땅굴과 같은 것으로서 국방당국과 군사전문가들은 이 땅굴을 통해 시간당 중무장한 사단규모의 정규군과 야포 차량 등 각종 장비를 일시에 통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 2, 3호 땅굴 비교>

	1호	2호	3호
발견일시	74년 11월 15일	75년 3월 19일	78년 10월 17일(확인)
위 치	고랑포 동북방 8km	철원 북방 13km	판문점 남방 4km
깊 이	지하 45m	지하 50~160m	지하 약 73m
크 기	높이 120cm, 폭 90cm 콘크리트	높이 2m 폭 2m	
구 조	슬라브	압석층 굴진, 아치형	
총 길 이	약 3.5km	약 3.5km	약 2km
침투길이	약 1km	약 1.1km	435m
특 징	운반차량 사용, 수면장 소, 배수로, 전기가설	출구를 여러 개 만들어 유사시 병력을 수개지 역으로 침투시킬 수 있도록 설계	
능 력	단시간내 대규모 정규 및 비정규전 병력침투	단시간내 대규모 정규 및 비정규전 병력 침투 중화기로 무장한 전투병력 3~4열로 통과가능	
기습방향	→고랑포→의정부→서울(65km)	→철원→포천→서울(101km)	→문산→서울(44km)

이 같은 땅굴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에 모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군사적 공격행위인 것이다.

특히 판문점 제3땅굴은 그동안 땅굴굴착공사를 중단했던 북한이 이를 재개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어서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즉 북한은 1974년과 1975년에 제1땅굴 및 제2땅굴이 발각되어 국제적으로 규탄을 받자 땅굴작업을 중단했었는데 이렇게 땅굴작업을 재개했다는 사실은 땅굴공사를 계획대로 완성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판문점 제3땅굴의 발견으로 북한이 휴전선 전역에 걸쳐 여러 개의 땅굴을 파 내려오고 있다는 유엔군 당국의 판단이 더욱 명백한 사실로 입증되었다.

유엔군측은 1978년 10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제391차 군사정전위 본 회의에서 판문점 제3땅굴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공산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유엔군측 수석대표 「햄」 소장은 공산측 대표 「한주경」에게 북한이 판 제3땅굴은 「침략의 의도를 드러낸 뚜렷한 증거」라고 통박했다.

「햄」 소장은 판문점 제3땅굴의 상세한 사진과 도표, 비데오테이프 등을 통해 땅굴의 발견 경위를 설명하고 『이는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는 평화를 부르짖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침을 노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평화의 기만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햄」 소장은 『이같은 침략적 행위를 중지하고 평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평화는 오지 않는다』고 밝히고 『차량을 대기해 놓았으니 함께 현장에 가서 조사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공산측은 현장공동조사 제의를 거부하고 「날조된 것」이라고 생떼를 부렸다.

한편 노재현 국방장관은 10월 27일 제3의 땅굴발견에 따라 북한의 호전적 망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고담화문을 발표했다.

#### 경 고 담 화 문

본인은 오늘 북한의 남침땅굴을 새로 발견한 사실을 국민여러분에게 보고하고, 이와같은 북한의 호전적 망동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최근 판문점남방 4km 지점인 우리쪽 비무장지대내에서 북한이 휴전선 밑으로 파내려 온 또하나의 대형땅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땅굴은 지하 73m 깊이의 암석층을 뚫어서 만든 것으로 그 규모는 높이와 폭이 각각 2m나 되어 중화기로 무장한 전투병력이 3~4열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땅굴은 다음 두가지 면에서 우리의 각별한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첫째, 이 땅굴이 발견된 지점은 우리의 수도권을 막바로 위협하는 최근거리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땅굴은 판문점남방 4km 지점인 비무장지대내에서 군사중양분계선을 넘어 우리 쪽으로 435m까지 침범했으며 임진각으로부터 서북방 4km, 통일촌민가로부터 3.5km 떨어진 곳으로서 이 지점은 바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인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땅굴공사를 중단했던 것으로 보이던 북한이 금년들어 또다시 땅굴작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지난 74년, 이 땅굴에서 작업했던 김부성이 귀순함에 따라 그후 공사를 중단한 것 같았으나 금년들어 땅굴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이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비무장지대안에 불법으로 병력을 투입, 진지를 요새화하고 중화기를 반입하므로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여러차례 이를 철수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불응할 뿐 아니라 1972년부터는 남침땅굴까지 파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974년 11월 고량포북방에서 제1땅굴이 발견되고, 이어 1975년 3월에는 철원부근에서 제2땅굴이 발견됨으로써, 북한의 호전성은 이미 온 세계에 폭로된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발견된 관문점 제3땅굴은 북한이 아직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북한땅굴을 군사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북한은 이 땅굴을 통해 기습공격을 위한 대규모 병력을 단시간내에 우리 주방어진지 바로 후방으로 침투시켜서, 군사요충지를 조기에 점령하고 주요 지휘시설을 파괴하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비정규전병력을 은밀하게 잠입시키는 침투로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밖으로는 온갖 간교한 수법으로 위장평화선전을 하면서, 실제로는 현대적 무기를 도입 생산하여 공세적 군사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해·공군전진기지를 요새화하여 항공기 및 함정 등을 추진배치하는 등, 기습공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관문점의 제3땅굴 이외에도 서울 진입로와 연결되는 중서부전선과 동부전선 산악지대에서 여러개의 또다른 남침용 땅굴을 파고있는 확실한 정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합동으로 최신장비를 동원하여 과학적인 탐색활동을 계속하여 적의 기도를 사전에 봉쇄할 것이며 만일 북한이 이러한 땅굴을 이용하여 침입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거부섬멸할 수 있는 만반의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방부장관으로서 북한에 대해 땅굴작업은 물론, 모든 전쟁준비를 즉시 중지하고 부질없는 남침도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군은 그들의 어떠한 군사적 모험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만약 북한이 중진과 같은 침략행위를 되풀이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멸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 스스로가 저야함을, 명백히 해두는 바입니다.

『이제야 자유에 보은』

관문점의 제3땅굴의 발견에는 귀순용사 김부성씨(38세)의 공이 컸다.

북한노동당연락부 제53연락소 대남간첩호송안내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1974년 9월 자유를 찾아 남하하여 북한이 이 지역에서 남침땅굴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던 것이다.

다음에 김씨가 남침땅굴작업의 설계를 맡았던 장본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내게 베풀어준 호의를 이제 갚은 것 같아 후련한 기분』이라며 경향신문기자에게 털어 놓은 북한의 땅굴작업의 전말을 전제한다. -편집자 주-

<문> 제3땅굴 공사는 언제 착수했는가?

<답> 『1972년 2월 노동당연락부가 공사를 관장, 땅굴작업을 개시했다. 53연락소 참모장 정중훈(부과장급)이 현장 총책임자로 작업을 지휘했다. 연락부에 전문기술자가 없어 초기에는 애를 먹었다.

광산이나 건축기술자가 필요했으나 보안유지를 위해 이들을 차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자신은 언제부터 땅굴공사에 동원됐는가?

<답> 함흥화학공업대 기계제작과를 졸업한 경력 때문에 1972년 9월 동원됐다. 처음에는 땅굴작업에 필요한 기계부속품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일에 배치됐고 나중에는 땅굴측량과 설계에까지 참여했다. 또 외국에서 도입한 굴착기계의 안내서를 번역, 조작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나는 광산부 기사장인 김정희와 함께 측량을 했는데 이 작업은 오차가 1백분의 2도 이상이면 안됐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다.

<문> 공사착수 당시의 상황은?

<답> 처음엔 곡괭이와 삽으로 땅굴을 파들어갔으나 곧 암석층에 다다르자 3천3백V의 고압전기를 끌어들이 2백마력짜리 콤프레서로 작업했다. 땅굴이 점점 깊어질수록 작업이 어려워지자 외국제 최신장비가 도입 됐다.

<문> 어떤 장비들인가?

<답> 7만달러짜리 스웨덴제 파열기와 수십만달러의 자동굴착기, 프랑스제 콤프레서와 발동기 등이다. 자동굴착기는 소음이 적고 직경 13cm의 구멍을 20m 깊이로 파는 고성능 장비였다. 김일성은 『조국통일 대사변을 위한 대통로를 만드는 이 작업에 금덩어리인들 아끼지 말라』 했다.

<문> 작업 진척 상황은?

<답> 입구공사가 끝나고 본 궤도에 접어들자 암벽 전면에 20~25개의 구멍을 뚫고 2백~4백g의 폭약을 구멍마다 충전, 폭발시켰다. 하루의 진도는 4~5m였고 착암기, 적제기, 환차, 권양기 등 기계에 13명이 달라붙어 공사를 해나갔다.

발파음이 국군에 청취될까봐 땅굴속에서 발파할 때마다 지상의 고지뒤편에서 1kg의 다이너마이트를 동시 터뜨리는 「위장발파」를 계속했다. 또 땅굴이 국군초소에 가까이 가면서부터는 소리가 잘 전파되는 야간에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문> 작업중 사고가 많았다는데?

<답> 워낙 위험한 작업이라 사고투성이었다. 폭약이 뒤늦게 터지는 바람에 작업하러 들어갔던 인부 2명이 눈이 멀었고 발파할 때 대피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고막이 터지기도 했다. 또 지하수가 권 물주머니를 터뜨려 물을 빼느라 공사가 1주일간 중지된 적도 있었다.

인부들은 위장병과 관절염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나 보안유지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아 모두들 『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죽겠다』고 불안해 했다.

<문> 이번 땅굴발견에 대한 소감은?

<답> 사실 나는 누구보다 이날을 기다렸다. 틀림없이 파들어왔는데도 얼른 발견되지 않아 초조했다. 그쪽에서 측량까지 직접 했으나 막상 이쪽에서 보니 정확한 위치를 지적하기가 어려웠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인지 북한의 악랄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들은 우리와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음에 판문점지역의 지하로 파내려온 북한의 제3남침땅굴을 발견함에 따라 이같은 북한의 그칠줄 모르는 도발을 경계하며 그들의 남침적화야욕을 규탄하는 국내 주요일간지의 사설을 전재한다.> -편집자 주-

### 제3 땅굴의 충격

한반도는 맨스필드 전 미상원의원의 표현대로 과연 「뇌관이 제거되지 않은 시한폭탄」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휴전의 산실이며 남북대화의 현장인 판문점근방, 우리측 감시초소의 발밑으로 북한이 새로 뚫어 놓은 제3땅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어찌 변하든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이라는 대남기본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표로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제3의 땅굴은 지난 1974년 11월 고랑포북방에서 발견된 제1땅굴과 1975년 3월 철원북방에서 발견된 제2땅굴과는 전술·전략상의 개념부터 크게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산~서울의 1번국도를 따라 서울까지의 직선거리는 불과 44km 북한이 수도권을 유린하는데 필요한 최단공격회랑인 셈이다. 3열중대로 통과가 가능한 이 화강암터널로 북한이 어느날 중무장한 대병력을 투입하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하자.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칠 일이다. 한밤에 완전무장한 수개사단병력을 침투시킬 수 있는 이 땅굴을 이용, 임진강지역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습적인 도하작전으로 통일로로 연결되는 회랑을 장악, 전격작전으로 서울을 공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 가공할 제2의 상정은 국군복장으로 위장한 북한의 게릴라 대부대가 이 땅굴속으로 기어들어 마치 국군이 먼저 도발을 한 양 대북위장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정당한 남침의 구실을 삼으려는

음모를 꾸밀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것이다. 이래도 김일성은 여전히 입으로 평화통일을 부르짖을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남침의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계속 잡아뭇 것이며 오히려 남한에서 북침하려한다는 터무니없는 호들갑을 떨 것인가.

이번 제3의 남침용 터널을 발견하는데 수훈을 세운 사람은 바로 그 땅굴 공사에 직접 참여하다 지난 1974년 자유대한의 품에 귀순한 전 북한군 김부성씨였다. 김씨의 제보에 따라 우리 육군이 시추한 탐사공에서 공교롭게도 지하폭발이 있어 계속 탐색한 결과 마침내 이달 17일 지하 73m 지점에서 북한의 땅굴과 만났던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 끝없는 침략야욕은 그 마각을 백일하에 드러낸 셈이다.

1974, 1975년에 각각 들통난 제1, 제2의 땅굴은 『서로 일체의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자주적인 역량으로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7·4공동성명에 엄숙한 표정으로 서명까지한 같은 시기에 뒷구멍으로 판 역사적 배신행위였다.

이번 세 번째의 땅굴은 제1, 제2땅굴의 노출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규탄의 소리가 높아지자 일단 중단했던 것을 작년부터 다시 손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할 것 같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미·일·중공의 상호접근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세력간에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때이다. 이러한 때에 기습침공용 땅굴을 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광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완화의 무드를 역으로 이용, 결정적인 시기에 적화음모를 획책하려했다면 그들의 음흉한 간계는 가히 짐작할만 하다.

이같은 김일성집단의 흉중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언제 있을지 모를 북한의 전면 무력도발에 대비, 우리의 철통같은 총력안보의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다져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는 북한의 어리석은 적화망상을 깨기위해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으로 공고히 결속하면서 항재전장적 임전태세를 더욱 다져야 할 때라고 본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 무모한 전쟁모험을 시도하더라도 도발에는 오직 자멸이 있을뿐이라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와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뜻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노재현국방부장관의 대북한 경고는 믿음직한 한마디가 아닐 수 없다.

-경 향 신 문 (1978. 10. 28)-

#### 또다시 발견된 북한땅굴

관문점 남서쪽 4km, 서울북쪽 44km지점의 비무장지대 「유엔」 근처 지역에서 또다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27일 군사정전위원회를 열어 공산측의 휴전협정 위반을 엄중 항의하고 공동감시소조로 하여금 즉시 현장을 조사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상투적인 억지와 생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고 국제여론의 조소(嘲笑)거리가 되고 있다.

역사적인 7·4공동성명과 함께 남북대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지난 1972년 북한은 남침용 땅굴을 파기 시작하였는데 그중 맨처음 발견된 것이 1974년 11월의 고랑포땅굴이었다.

이듬해 3월에는 중부전선 철원북쪽에서 제2의 땅굴이 발견됨으로써 평화를 위장한 북한의 호전성이 국제적으로 크게 규탄을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75년 1월, 당시의 한미 제1군단 사령관 「홀링스워드」 장군이 이미 『발견된 땅굴 이외에도 10여개의 땅굴이 더 있다』고 인명하바 있는데 그말이 차례로 입증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력적 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다시금 경각심을 높이고 대책을 가다듬지 않을 수 없다. 지표하 73m에서 발견된 이 제3땅굴은 높이와 폭이 각각 2m로 규모와 구조는 철원땅굴과 비슷하며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으로 4백35m 침투한 지점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땅굴은 중무장한 사단병력이 한시간내에 통과할 수 있고 야포, 차량등 중장비도 운반할 수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발견된 3개의 땅굴가운데 서울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에 일거에 침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6·25당시도 그러했지마는 문산~서울간 1번국도는 북한이 남침시 으레 택할 것으로 상정되는 공격회랑(廻廊)으로서 제3땅굴이 이것을 노린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만약 이 땅굴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군 주방어진지의 후방이 위태로움은 물론이고 1968년 1·21사태나 울진, 삼척사건 당시와 같이 무장게릴라에 의한 후방교란의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문제의 제3땅굴을 고랑포, 철원땅굴과 같은 시기에 파기 시작했으나 74년에 제1땅굴이 발견되자 한동안 이를 중단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파기 시작한 것이라 한다.

이는 곧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평화통일선전이 사기극에 불과하고 그들의 대남전략은 시종일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 기본이며 60년대부터 추진중인 이른바 4대군사노선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최근 주한미지상군의 철수논의를 비롯하여 미 중공접근 일·중공 평화조약체결등으로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일련의 긴장완화 추세에 있음을 역이용하여 이같은 그들의 기도를 더욱 촉진하려고 광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며칠전 박대통령이 프랑스 「피가로」 지와의 회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호전성, 흉악성은 세계를 통틀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또 이 땅굴의 발견은 최근 「후쿠다」(복진) 일본수상과의 회담에서 중공부수상 등소평이 『한반도에 긴장이 없다』고 운운한 것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우리는 냉혹한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여 투철한 안보의식과 방위태세를 한층 굳혀야 할 것이며 북한은 부질없는 무력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우리의 평화정착노력에 응해야 할 것이다.

-동 아 일 보 (1978. 10. 28)-

### 제3의 북한땅굴

#### 안보태세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판 새땅굴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는 국내외를 놀라게 했으며 우리의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땅굴은 1974년 11월 고랑포북방, 1975년 3월 철원부근에 이어 세 번째로 발견된 것이며, 판문점남쪽 4km, 임진각으로부터 서북쪽 4km의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제3의 땅굴은 제1, 2땅굴과 비슷한 시기에 파기 시작 지난 1974년에 중단했다가 금년부터 다시 팠다고 한다.

노재현 국방부장관은 27일 북한에 대한 경고담화문 가운데서 북한의 땅굴이 노린 군사적 목적에 대해서 기습공격을 위한 대규모 병력을 단시간에 우리 주방어진지 바로 후방으로 침투시켜 군사요충지를 조기에 점령, 주요군사시설을 파괴하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게릴라부대같은 비정규전병력을 은밀하게 잠입시키는 침투로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듯 북한의 땅굴이 남침용임에는 틀림없고 제3의 땅굴은 우리의 수도권을 곧바로 위협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이 보다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한동안 중단했던 땅굴공사를 어찌서 올들어 다시 시작했겠는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속전속결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은 1960년대이래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배합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역설해 왔으며 10만의 비정규병력을 특공대로 기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다. 그들이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파고 있는 땅굴이 이러한 계략과 관련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북한의 땅굴작업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그에 따른 남북대화를 전후해서 개시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항상 위장이며 그 막후에서는 무력과 폭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의 흥계를 꾸미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최근 그들은 평화적 남북관계를 원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통일을 반대하는 「분열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을 빨리 철수하고 한국에서 유신체제를 철폐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이라는 선전을 강화하고 있는 동시에 이에 외교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제3의 땅굴 발견으로 북한의 그러한 주장은 오로지 남침을 겨냥한 것일뿐 평화에는 하등의 관심도 없음이 다시 대내외에 밝혀지고 말았다고 하겠다.

북한은 오랜 전쟁준비와 그에 따른 군사비 과중부담의 당연한 결과로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들은 평화적 남북관계로 활로를 찾으려하는 대신 그 돌파구를 재남침에서 찾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호전적인 김일성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승산이 없는 전쟁은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은 북한이 승산이 서지 않는 한 전면전쟁을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정치·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에 비정규전적 형태로 개입하려고 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은 남한의 정세가 요구하면 수수방관 하지 않고 북한은 모든 힘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거듭 공언한바 있는 것이다. 북한의 땅굴이 이같은 목적과 유관하다는 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정규전의 시도는 전면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측의 반격이 불가피할 것이고, 결국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 끝에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변함 없이 무력과 또한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방식에 의한 공산화통일의 기회를 포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앞에서 군사면에서 뿐만아니라 정치·사회면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보태세를 새로이 점검함으로써 어떠한 허점도 없도록 총력안보를 굳게 다져 나가야 하겠다.

-서 울 신 문 (1978. 10. 28)-

## 북한의 지하남침 도발

### 제3땅굴의 발견과 북한의 호전성

북한의 남침땅굴이 또 발견됐다. 크기도 어마어마해서 유엔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1974년에 발견된 고랑포 제1땅굴 보다는 2배에 가깝고 1975년 철원서 발견된 제2땅굴과 맞먹는 폭 2미터, 높이 2미터이고 전장은 1천6백35미터로 추산되고 있다.

군사분계선 서쪽 약 1천2백미터 지점의 북한측 비무장 지대안에 입구를 둔 것으로 믿어지는 이 땅굴은 한국쪽으로 군사분계선 동쪽 4백35미터 지점까지 파내려온 것으로 측정됐다. 지하 73미터의 화강암층에 위치하고 있는 이 땅굴은 착암기와 같은 굴착기로 집요하게 파내려온 것으로 북한의 끈질긴 무력 남침전략이 어느 정도인가를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군사전문가의 분석으로는 철원 제2땅굴 규모와 맞먹는 이 땅굴은 단시간안에 대규모 정규 및 비정규병력 침투가 가능하며 중화기로 무장한 전투병력이 3~4열로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울로부터 불과 44킬로미터밖에 안되는 지근거리에 위치, 북한이 남침시 택할 것으로 예상돼온 문산~서울의 최단공격로를 겨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습남침을 위한 진술적 남침공사였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 정도의 남침땅굴은 기습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지하 통로로 능히 그 구실을 다할 수 있을만큼 규모가 크고 그 노리는 바가 가증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두말할 여지도 없이 이런 남침용 땅굴은 북한이 아직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전략을 고수하고 있음을 실증해 준 것이며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을 스스로 자행한 남침 위협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겉으로는 평화를 부르짖고 위장 평화선전을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적화통일의 망상을 한시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며 계획적이고 집요한 지하남침 도발에 격분을 금치 못하게 한다. 게다가 휴전후 불법으로 병력과 장비를 계속 투입해 오면서 비무장지대의 진지화에 광분해온 북한이 땅굴까지 파면서 남침 준비를 자행해 왔다는 점에서 실로 그 반민족적, 반평화적 망동에 치를 떨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이용을 제의하고 남북경제협력 문제를 거론해 온 우리였으니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다. 당국의 정보에 의하면 아직도 남침 땅굴이 10여개 더 있는 것으로 확증을 잡고 있다니 휴전이후 계속 북한이 땅굴만 파기에 혈안이 돼 왔음은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

그러나 남침용 땅굴은 그 자체가 무모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발달된 전술무기의 확보로 갈수록 명백해진 것이다. 미사일체제로 돌입한 막강한 자주국방 체제가 그러한 전근대적인 침략전술을 용납할리도 없거니와 반석같이 다져진 국민의 반공정신이 북한의 기습남침을 허용하리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파탄에다 김일성독재 체제불안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으로 북한이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을 들볶지 않고는 이를 무마하기 어렵기 때문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남침땅굴작업과 같은 무모한 불장난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력낭비와 인적, 물적 손실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도 분명한 것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그러한 남침도발에 광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정착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냉철히 깨닫고 노재현국방장관의 촉구대로 부질없는 땅굴작업을 즉각 중지함은 물론 더 이상 이런 침략행위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자멸을 자초할 뿐임을 몰라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끈질긴 무력적화통일야욕을 엄중경계하고 또 나타날지도 모르는 제4, 제5의 땅굴에 대비 북한을 계속 압도하는 국력배양에 총력을 경주해 마땅할줄 안다.

-신 아 일 보 (1978. 10. 28)-

### 북한의 제3땅굴

#### <1>

북한이 판 땅굴이 판문점남방 4km지점에서 또 하나 발견됐다. 휴전선일대에 북한이 파내려오던 땅굴중, 우리가 확인한 제3의 땅굴이 된다.

유엔군사령부는 27일, 지난 17일 발견된 이 땅굴의 전모를 중서부전선 현장에서 내외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제3의 땅굴은, 임진강하구에서 판문점을 향해 남북으로 그어진 군사분계선의 서쪽 1천2백m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산측지역 입구로부터, 분계선을 넘어 동쪽 4백35지점까지 파들어 왔다. 길이는 약 1천6백35m, 지표로부터 73m 깊이의 화강암지층을 통과하고 있으며, 폭 2m, 높이 2m로 1975년 3월 철원지구에서 발견된 제2땅굴과 같은 구조와 규모의 것이다.

유엔군 당국은 ① 북한은 지난 1975년부터 중단했던 땅굴공사를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개한 정보를 입수했고, ② 1974년 9월 월남한 귀순자가 이 지역 땅굴에서 작업했다는 진술에 따라 탐사작업을 펴왔고, ③ 6월 10일 북한의 지하발파 작업으로 인한 압력으로 3년전 탐사를 위해 파놓은 직경 3인치의 시추공속의 파이프와 물이 지상으로 치솟자, 이는 북한의 땅굴공사가 탐사시추공과 마주쳐 일어난 것으로 단정하고, ④ 이 지점으로 차단터널을 파고 들어가 제3땅굴을 확인했다고 발견 경위를 밝혔다.

제3땅굴을 확인한 유엔군 당국은 이를 발표한 날인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위 본회의를 통해 불법땅굴에 관한 부수적인 자료와 북한의 범죄행위의 기타 증거물을 제시하고, 이 땅굴이 정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이며 더우기 이는 공격군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을 북한이 계속 찾고 있다는 증거라고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

한편 노재현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제3땅굴에 대한 경고담화문을 발표하여 ① 이 땅굴이 우리의 수도권을 막바로 위협하는 최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② 공사를 중단했던 것으로 보이던 북한이 금년들어 또다시 땅굴작업을 개시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각별한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으며, ③ 제3땅굴 이외에도 서울 진입로와 연결되는 중서부전선과 동부전선 산악지대에서 여러개의 또다른 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④ 만일 북한이 땅굴을 이용, 침입할 경우에 대비, 이를 거부 섬멸할 수 있는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 〈2〉

우리는 제3땅굴 발견에 즈음한 우리 국방책임자의 단호한 결의표명을 심분 신뢰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율스럽고도 부단한 도발앞에 있는 현실을 재삼 재확인하게 된다.

1974년 11월에 발견된 북한의 제1땅굴과 1975년 3월에 발견된 제2땅굴은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민족적 대단합」을 통해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자고 서약한 7·4남북공동성명발표와 전후해서 뚫기 시작한 것이었다.

제1땅굴은 지표로 깊이 피어 오르는 것을 군수색대가 포착, 발견하였고, 제2땅굴은 그것이 준경각심에서 지표에 귀를 대고 듣는 원시적 방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서 발견했다.

이번 제3땅굴은 탐색을 중단해버린 시추공부위를 우연스럽게도 그러나 천만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뚫은데서 발견이 되었다. 실로 아슬아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시추공을 피하고 그리고 끝내 발견되지 않은채 뚫렸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제2땅굴의 규모는 폭, 높이 모두 2m, 지하 50m의 화강암층을 골라 뚫은 것이었다. 지하 73m까지의 화강암층을 골라 뚫은 제3땅굴도 이와같은 규모다. 이 규모면 시간당 사단병력을 배출할 수 있으며, 차량, 야포까지 동원할 수 있는 군사구조물이다. 그위에 제3땅굴은 바로 서울을 노린 기습용땅굴이다.

북한은 제3땅굴을 이용하여, 기습공격용 대규모 병력이나, 비정규병력을 우리의 후방에 침투시켜, 군사시설을 점령 또는 파괴하거나, 내란을 선동 유발해서 이른바 적화통일의 결정적 시기와 조건을 조작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판문점을 왕래하는 요인납치등도 기도했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잖아도 북한집단은 우리와의 비교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낙차가 심해진 경제적 파탄과, 주변정세의 평화공존질서 추구에의 흐름과, 자리가 뒤바뀌어가는 군사역량의 낙후, 그리고 그들 집단 내부의 심각한 권력투쟁등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모험주의적인 대남도발을 감행할 많은 소

지속에 있어왔다.

중단했던 남침땅굴을 다시 파고, 그것도 휴전협정을 상징하고, 이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남북대화의 현장이던 바로 판문점 땅 밑에 그것을 뚫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생생하게 그와같은 그들의 본색을 입증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위 평화전선이 얼마나 허구와 기만에 찬 것인가를 웅변으로 설명해 주는 제3땅굴이기도 하다.

지겹도록 보아온 북한의 호전적 도발성앞에 우리의 결의가 새삼 달라질 것은 없다. 남은 것은 오직 총력안보체제에 의한 물샐틈없는 방비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월등한 국력신장으로 그들의 야욕을 차단하고 대화를 통해 이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유일한 방도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우리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일이다. 제3땅굴의 발견은 우리의 그와같은 절실한 당위를 다시한번 촉구해 주는 계기가 됐다.

-조 선 일 보 (1978. 10. 28)-

### 제3의 북한 남침땅굴

서부전선 판문점 남쪽4km지점에서 제3의 북한 공격용 땅굴이 발견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땅굴의 규모는 지난 1975년 중부전선에서 발견된 제2의 땅굴과 비슷하다. 높이와 폭이 각각 2m로 군사전문가들의 설명으로는 중화기로 무장한 전투병력이 3~4열로 통과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러한 땅굴은 정규·비정규전에 모두 이용될 수 있으며, 적의 사단병력이나 경비병여단 병력을 우리의 경계부대 후방에 침투시키기에 족한 것이다.

북한의 남침땅굴공사는 이미 지난 197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3개뿐 아니라 10개 정도의 땅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군단별로 공격용 땅굴을 파는 속셈으로는 대개 세가지가 지적된다.

우선 전면전을 일으킬 때 남침통로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남쪽 끝에 만들어 놓은 여러개의 출구를 통해 많은 병력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전후방을 차단함으로써 속도전을 전개할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 우리후방에 혼란이 있을 때 특수 8군단·경보병부대등 비정규전 병력을 우리 후방에 침투시켜 「게릴라」 전을 전개하기 위한 침투로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그밖에 대남간첩의 침투로와 불순세력에 대한 무기공급로로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북한의 남침땅굴이 이러한 복합적 목적을 지니고 있겠으나, 특히 이의 제3땅굴은 몇가지 점에서 우리의 큰 관심을 끈다.

한반도정세에 대한 국외자들의 견해가 어떠하든, 북한이 남침 적화야욕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 되었다.

제3땅굴굴착작업은 지난 1974년에 귀순한 김부성씨의 폭로이후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6월 재개된 지하 발파작업에 의해 우리측이 탐사공에 넣어둔 「파이프」가 빠져나옴으로써 땅굴의 위치와 굴착재개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는 북한이 1974년에 중단했던 땅굴 굴착작업을 금년들어 다시 시작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다.

동시에 북한이 남침야욕을 버리기는 커녕 더욱 굳혀가고 있다는 산증거이기도 하다.

더구나 제3의 땅굴이 발견된 곳은 서울로부터 44km밖에 안되는 가까운 지점이다. 군사적인 면에서 문산~서울로 통하는 접근로는 북한이 남침때 서울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단 공격회랑이다. 이로서 저들의 서울 공략기도 또한 분명히 확인된 셈이다.

저들이 올들어 서울을 향한 지하공격로 굴착작업을 재개했다는 이 뚜렷한 증거는 그동안 북한의 평화선전이 얼마나 거짓 투성이었던가를 웅변해 준다.

이러한 북한의 변함없는 남침야욕과 땅굴전술에 맞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수 밖에 없다.

우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북한의 남침땅굴의 탐색활동을 강화해야겠다. 또 북한의 땅굴전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응전술도 개발해 나가야겠다.

원래 침략야욕이란 상대방의 대비태세에 따라 저지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자극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떠한 북한의 도발도 물리칠 확고한 안보태세를 다져나가겠다는 국민적 다짐이 재확인 되어야 할 시점이다.

-중 앙 일 보 (1978. 10. 28)-

### 수도 겨냥한 제3땅굴

그것은 사실상의 무력남침행위다

북한은 남침용 제3땅굴이 백일하에 또 드러났다. 이제 서울의 유엔군사령부는 그 정체를 내외에 공식 발표함과 동시에 판문점에서 소집된 군사정전위 제391차 본회의에서 이 땅굴에 부수된 온갖자료와 북한측의 범죄행위증거를 제시하고 근래에 드물게 강경한 항의를 하였다.

동 사령부발표에 따르면 제3땅굴은 바로 군사정전위를 지원하는 유엔군측 전진기지(캠프·키티

호크)서남방 2km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입구는 비무장지대(DMZ)군사분계선 서쪽 약 1.2km지점 공산측 관할지역에 있으며 분계선 동쪽 우리 지역쪽으로 4백35m까지 연장 침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미 1974년 9월 월남귀순자 김부성씨가 그 제3땅굴작업에 관한 제보발설을 한 후 우리 육군이 시추한 탐사공 및 그 근처에서 지난 6월 10일 북한측의 지하폭발이 있어 계속 탐색한 결과 드러났고 이달 17일 마침내 유엔군측의 차단터널이 지표 73m 지점에서 그 땅굴로 관통됨으로써 완전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현장답사·조사결과로는 그 땅굴의 규모와 군사상의 효용이 대체로 1975년 3월에 발견,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철원동쪽 제2땅굴과 비슷하며 유엔군사령부로서는 그 터널이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을 북한측이 찾고 있는 증거』라는 공식견해를 밝히는 한편 설명과정에서도 이는 단지 「침투」가 아닌 침공·침략(Invasion)용임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별항 보도처럼 북한이 뚫어내린 위치가 평평잡한 지형내 한국군의 중요최전방 고지 바로 앞턱인데다 임진강 인접 북쪽지점이라는 점 등을 보태 생각하면 유엔군사의 그와 같은 판단은 매우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서울공격의 최단거리, 방해물없이 내려다 보이는 루트를 찾으려한 것에 틀림없다. 물론 그들의 땅굴은 이미 1974년 11월 고량포 동북쪽 8km 부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 세 번째이지만 이번 것은 그 어느 굴보다도 위치로 보아 이처럼 우리 서울을 겨냥한 특성이 뚜렷하다는 데서 우선 심각한 경계성이 엿보인다.

누구에게든 그것은 수도권전면에 대한 기습공격에 있어 대규모적인 병력과 장비 또는 비정규병력을 우리 주방어진지 후방으로 침입시켜 군사시설을 점령, 파괴하거나 내란을 선동, 유발하여 무력적화통일의 결정적 시기와 여건을 조장하고 특공 또는 침공작전을 전개하려는 것임을 얼른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땅굴속으로 기어들어 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로 나타나 마치 국군이 군사도발을 한양 대북위장공격을 하면서 전쟁을 폭발시키는 장치로 써먹고자 했을 법도 하다.

바로 이와같은 침략용·전쟁유발용 두더지통로를 군사휴전의 센터인 판문점 곁에다 뚫었다는 사실 또한 중시치 않을 수 없다. 비무장지대나 분계선 남쪽으로 지하침투를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는 휴협위반행위며 그 부인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들의 온갖 평화선전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를 표증하고도 남는다.

줄여 말하면 위장평화의 나팔뒤에서 전쟁의 칼날을 갈고 그 폭발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격이다. 그뿐 아니다. 1974년 가을이후 계속됐던 이 제3땅굴에 대한 탐색경과를 헤아리면 북한집단이 한때 1,2호 땅굴의 발각으로 중단했던 발굴공사를 근자에 다시 시작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그들의 대남기본전략목표와 전쟁전선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실증했다 할 것이다. 동시에 요즘 특히 일·중공평화우호조약 체결이후 내외일부에서 『한반도에 긴장이 없다』느니 또는 북한의 『무력·폭력노선이 완화된다』느니 하는 식의 견해가 너무도 지나친 낙관으로 경시한 것임을 판별케도 해 준다.

우리는 이런 무책임한 소견에 말려드는 일이 서로 없어야겠다. 표리부동한 적의 흉계에 한치라도 틈새를 보일 수는 없다. 오직 예리한 경계와 유비무환의 총력안보태세를 뭉쳐 다지면서 국력·자위력증진을 가속화시켜야 할 따름이라 하겠다.

정부는 북한집단의 변함없는 침공흉계를 규탄함과 더불어 그 대비책을 내외로 더 강화해야 할 일이다.

국제사회는 세계적인 긴장완화속에서도 유독 이땅의 북한공산집단만은 전쟁도발을 꿈꾸는 이 현실을 깊이 헤아려주기 바란다.

끝으로 평양집단에 경고하느니 그따위 무모한 남침 또는 도발시도는 오직 그대들의 자멸을 초래하는 이외에 다른 결과가 없을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땅굴파기를 비롯한 전쟁준비를 냉큼 중지하고 대화의 광장에서 민족의 평화로운 장래문제를 협의할 일, 이것이 남아있는 그들의 길임을 속히 깨달아야 한다.

-한 국 일 보 (1978. 10. 28)-

# 남북대화 제20호

(1978. 12 ~ 1979. 6)



# < 목 차 >

제1부 대한민국의 대화재개 노력 .....	3
1. 「1.19」 대북제의 .....	3
2. 대한민국의 대화촉구와 북한측의 반응 .....	4
3. 남북대화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입장 .....	9
제2부 남북간의 판문점 변칙접촉 .....	11
1. 「변칙대화」의 성립 .....	11
2. [변칙대화]의 경과 .....	16
가. 「2. 17」 변칙대화 .....	16
나. 「3. 7」 변칙대화 .....	19
다. 「3. 14」 변칙대화 .....	21
3. 남북당국 실무대표회담의 유산 .....	25
4. 「조국전선」·「전민족대회」의 정체 .....	28
제3부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 .....	32
1.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의 성립 .....	32
2.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의 경과 .....	34
3. 북한측 「단일팀」 구성주장의 허구성 .....	46
제4부 남북대화 주요일지 .....	48

## 제1부 대한민국의 대화재개 노력

### 1. 「1.19」 대북제의

1979년 1월 19일 박정희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중단되어 온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하여 어떤 시기, 장소, 수준에서든 남북한 당국간의 무조건 대화를 갖자는 적극적인 새로운 제의를 북한측에 내놓았다. 박대통령의 대북제의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으며 미연에 막아야 합니다.

분단된 국토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재통일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장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측이 제시한 일련의 방안들은 5천만 민족의 번영과 염원을 추구하는데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이러한 방안은 북한측에 의해서 모조리 거부당하고 한때 잠깐 계속되었던 남북대화마저 북한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분단된 이 국토를 다시 우리가 재통합하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을 다시 재결합하는 일은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민족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도 없고 또한 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북한측에 대해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어떠한 시기나, 어떠한 장소에서나, 또는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한 당국이 서로 만나서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을 막고 5천만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제반 문제,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남북한이 제시해온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서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한 당국은 나의 이 제의를 민족적 염원에 부응하여 수락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나는 이상과 같은 제의를 다시 한 번 북한측에 보내고자 합니다.}

## 2. 대한민국의 대화촉구와 북한측의 반응

박대통령의 이상과 같은 획기적 제의에 대하여 북한측의 책임있는 당국은 계속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4일뒤인 1월 23일 북한의 소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라는 한낱 사회단체가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첫 반응을 보였다.

동 성명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 동포들, 남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우선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첫째로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의 본래의 이념과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쌍방 당국이 각각 7·4 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을 재확인하며 그를 엄숙히 준수할데 대한 태도를 공식으로 성명할 것을 제의한다.

둘째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시 그만 두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취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하면서 쌍방이 7·4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관영·민영을 막론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에 의한 비방·중상을 그만둔다면 그것은 남과 북의 대화와 민족적 단합을 위하여 매우 귀중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될 것이다.

셋째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무조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우선 쌍방 군사당국이 3월 1일 10시를 기하여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전선일대에서 무력증강, 군사작전, 군사시설물의 구축같은 적대적 군사행동을 정지하며 어떠한 군사연습도 무조건 중지할 것을 주장한다.

넷째로 남과 북의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민족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한다.

…이 대회에는 북의 각 정당·사회단체들과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남조선의 모든 정당·단체들의 대표들 및 각계 각층의 애국적 인사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의 조직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대회를 올해 9월초 평양이나 서울에서 열며 대회의 성과적인 준비를 위하여 6월초순에 평양에서 국내와 해외에 있는 각 정당·단체들의 실무급 대표들이 쌍무적 또는 다무적 예비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대한민국의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이와 같은 동문서답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북한측은 책임있는 당국자가 회담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대표권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실제조차도

모호한 [조국전선]의 성명으로써 내보인 북한측의 반응은 공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 제의에 [조국전선]을 내세우고 노동당을 비롯한 정당·사회단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1월 25일 북한 노동당중앙위 정치위원이며 정무원 부주석인 박성철의 담화를 비롯하여 북한의 이른바 각종 단체 명의로 [조국전선]의 성명을 지지하며 이의 실현을 촉구한다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월 26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대화는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이루어질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제의에 대해 직접 책임있는 북한 당국의 회답을 촉구했다.

동 성명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대화 문제와 관련하여 1월 23일과 1월 25일 북한측 방송이 보도한 성명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 및 합의사항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관하게 견지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측의 의사표시는 남북한 당국이 7·4 남북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을 재확인하고 상호 중상 비방하는 행위의 중지와 무장도발 및 군사충돌사건 방지문제 등 이미 동 성명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북한측이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평가하고자 한다.

7·4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그간 남북간에 합의된 모든 사항들이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듯이 앞으로의 남북대화도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이루어질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까지 남북한이 제시한 모든 문제들을 조속히 협의하기 위하여 구태여 1979년 6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서울이나 평양에서 남북한 당국간의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위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직접 책임있는 북한 당국의 성의있는 회답을 기대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이 [남북한 당국간]의 예비회담을 6월 이전이라도 개최할 것을 제시한데 대하여 북한측은 1월 27일 오전 10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서기국의 성명을 또다시 발표하고 1월 23일 「조국전선 중앙위」 성명에서 6월초로 제의했던 [실무급 예비회담]을 4월초로 앞당길 것을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의에 선전적으로 응수하고 나섰다. 동 성명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측이 성명에서 실무급 대표들의 회담을 6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가지자고 한데 대하여 우리도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간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실무급 대표들의 회담을 가능한 한 오는 4월 초순으로 앞당겨 소집할 것을 제의한다.

실무급 대표들의 회담참가자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명에서 국내와 해외에 있는 모든 당국·단체 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은 물론 남과 북의 당국자들도 참가할 것을 예견하였다.

이러한 실무회담이 마련된다면 전민족대회의 소집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각 당·각 과·각계 인사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쌍무적 다무적 협상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실무급 대표들의 회담을 위한 초청장을 남과 북의 모든 정당·단체들과 각계 인사들, 해외의 모든 조직 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 그리고 쌍방 당국에 발송할 것이다』

북한측은 끝내 책임있는 당국이 나서지 않는 가운데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그들이 임의로 정한 의제를 가지고 그들이 선정한 인물들로 남북대화를 진행시켜 보자는 속셈을 드러내었으며 2월 10일에는 「조국전선」 명의로 대한민국의 각계 지도급 인사와 단체에 소위 1월 23일자 「조국전선」 중앙위 성명을 담은 우편물을 보냄으로써 남북대화에 관련한 제의를 선전에 이용하여 이제까지의 각종 제의가 위장평화 공세였음을 드러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또다시 1월 29일 문화공보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의 제의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한낱 사회단체가 실현성 없는 정치선전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성명은 『대한민국의 기본입장은 이미 천명된 바와 같이 금년 6월 이전 어느 때든지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예비회담을 열고 여기에서 그동안 쌍방간에 제의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자는 것이며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제의가 있는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당국의 성의있는 회답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직접 책임있는 북한 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촉구했다.

이와 같이 문화공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의 성의있는 회담을 촉구하자 북한측은 책임있는 당국의 회담을 계속 회피한 채 1월 31일 오전 8시 소위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월 23일자 「조국전선」 중앙위 성명에서 제의한 내용에 따라 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대남비방·증상 중지를 일방적으로 선언, 선전효과를 노리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희대통령의 [1.19 대북제의]를 기점으로 하여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북한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이 계속 [조국전선]을 앞세우고 [7·4 공동성명] 이행 운운하며 이를 회피하고 오직 접촉시기를 앞당기자는 대한민국측의 제의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측이 7·4 공동성명에 관한 이행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측은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이 7·4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이행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했던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고 남북직통전화를 개통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성명전을 종식시킬 필요에 유의하게 되었다.

이에 1979년 1월 31일 민관식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에게 남북조절위원회를 재개하여 말로서가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남북공동성명의 이행을 다짐할 것을 촉구했다. 동 성명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7·4 남북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 및 합의사항에 따라 남북대화를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은 우리가 일관하게 견지해온 기본입장이다.

최근 북한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재확인한다고 하고 있는 바, 본인은 이것이 북한측의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성의의 표시로 구체화될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를 위한 남북공동성명 각 조항의 총체적인 이행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쌍방이

- ① 조국통일 원칙

- ② 상호 중상·비방의 중지와 무장도발의 지양 및 군사적 충돌사건의 방지

- ③ 다방면적인 제반교류

- ④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 성사의 적극 협조

- ⑤ 서울~평양간 상설 직통전화 가설 등에 합의하는 한편

- ⑥ 이러한 합의사항의 추진과 남북 사이의 제반 문제의 개선 해결 및 통일문제의 해결을 기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본인은 남북공동성명의 이념 및 원칙의 재확인과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정당한 길은 그것을 주관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재개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인은 그동안 중단되어온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는데 동의할 것을 평양측에 촉구한다.

4. 남북간의 문제를 포함한 쌍무적인 사안이나 문제는 일방적인 통고나 주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또한 평양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바 있는 서울~평양간의 직통전화선을 즉각 재개하여 남북간의 의사 소통이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5. 본인은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책임자로서 이러한 본인의 촉구에 대해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의 성의있는 회답을 기대한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 당국과 조절위 서울측의 성명에 대한 일련의 북한측의 반응은 책임있는 당국이 나서지 않으면서 {남북 쌍방 당국이 7·4 남북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을 재확인하며 엄숙히 준수할 것}만을 공식 표명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 및 합의사항은 전반적, 총체적으로 실천되고 이행되어야지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7·4 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문제를 들고 나와 마치 그들이 7·4 성명 정신에 투철하고 있는듯 선전하고 있으나 남북조절위원회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그리고 남북적십자회담과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의 실시 등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므로써 실질적인 문제를 기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약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공동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남북공동성명이 명시하고 있는대로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노력에 접근해 와야 할 것이다.

남북 쌍방은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는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음을 명문화시켜 놓고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모든 문제는 남북조절위원회에서의 토의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가운데 어느 특정문제가 남북조절위원회 정상 운영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남북조절위원회를 재개하여 모든 문제를 그 안에서 거론하고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한편으로는 남북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한 대남 비방·중상 중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2월 1일 당일 대남 흑색방송인소위 [통혁명 목소리방송]을 통해 1월 31일자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의 제의에 대해 격렬한 비방을 전개함으로써 그들의 성명이 위장된 정치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 3. 남북대화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입장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재연을 막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남북한 5천만 민족의 공존공영을, 나아가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남북한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책임있는 북한 당국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같은 대한민국의 성실한 제의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은 고사하고 그와는 반대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한낱 사회단체에 불과한 [조국전선]을 내세워 「전민족대회」 소집을 주장함으로써 모처럼 계기를 갖기 시작한 남북간 대화를 또다시 정치선전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불성실한 자세를 보였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간의 대화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대화는 종전과 같이 무책임한 대화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점과 기왕에 대화를 가질 바에는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실효성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던 것이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정정착을 이룩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하겠다는 일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대화재개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남북 쌍방이 이미 합의하여 발족시켜 놓은 대화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 정상화를 추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지난 1979년 2월 17일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남북 쌍방 부위원장 접촉을 갖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표단을 판문점에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 접촉의 자리에 통일문제를 비롯한 남북간의 제반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결코 대화상대로 될 수 없는 [조국전선]이란 일개 사회단체 대표를 내보냄으로써 남북한간에는 변칙적인 접촉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당초 북한측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입장을 도외시키고 소위 [민족통일준비위]의 구성을 위한 「조국전선」 연락대표 접촉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남북접촉이 [변칙대화]가 되리라는 것을 예상했으나 남북조절위원회 대표단을 판문점에 보냈던 것은 판문점 접촉에 나오는 평양측 인사들을 통해 남북한 당국간회담의 개최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재개에 의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남북대화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참뜻이 책임있는 북한 당국자에게 성실히 전달되고 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 정상적이고 실효성있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 몇 차례 접촉을 가졌던 것이었다.

에써 남북간 접촉계기를 마련한 대한민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남북 쌍방에 합의 서명되어 엄연히 살아있는 합의문서의 명문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재마저 시비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남북관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비생산적인 접촉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에 도



달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대신 남북 쌍방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당국의 실무대표 회의를 새로이 제의하고 이들 대표를 1979년 3월 28일 판문점에 파견했다.

이에 북한측은 대한민국의 제의를 거부하고 종래와 같이 [전민족대회]라는 군중집회를 소집해야 하며 당국간 대화는 불필요하다고까지 했다.

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은 결국 남북대화를 이룬바 [남조선 혁명]을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으로만 다루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 쌍방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분단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 노력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되 이를 위하여 우선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 쌍방간에 합의된 이같은 통일원칙을 포함한 [7·4 남북공동성명]의 모든 항목에 담겨진 합의사항이 성실히 준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시종 견지해온 일관된 입장이다.

현재 남북 쌍방은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긴장을 완화해야 하며 상호 교류와 협력 및 사회적 개방을 통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쌍방간에는 합의가 필요하며 이같은 합의는 각기 자기측 지역내에서 합의사항을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는 남북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의 사리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민족적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성의와 인내를 다하고 있으며 북한측이 허심탄회한 자세로 돌아와 남북 5천만 민족의 지상과제인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에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제2부 남북간의 판문점 변칙접촉

### 1. 「변칙대화」의 성립

박대통령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수준에 구애받지 않는 책임있는 남북당국간의 대화제의」나 이와 다른 차원에서의 기존 대화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화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2월 5일 소위 「조국전선」 중앙위서기국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월 31일부 조절위 서울측의 성명에 대하여 {조절위원회와 같은 극히 제한된 기구를 가지고서는 민족앞에 나선 거족적인 위업을 온 겨레의 의사에 맞게 실현할 수 없으며 그것은 이미 불합리한 것으로 되었다. 실제에 있어서 조절위원회는 민족의 충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온 민족의 기대에 맞게 활동하지 못하였으며 결국은 그 존속의 의의를 상실하고 말았다}고 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대신 전민족적인 대화와 협상을 위한 예비적 협의기구로서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제의했다. 동 성명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조절위원회 대신 전민족적인 대화와 협상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 협의기구로서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제의한다.

민족통일준비위원회에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내외 해외의 정당·단체대표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적은 인원들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통일준비위원회에서는 전민족대회의 소집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궁극적 통일을 준비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 조절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제한성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의 지향을 반영한 7·4 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에 부합되게 온 민족의 의사와 이익을 훌륭히 반영하여 통일문제를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2월 20일 낮 12시에 판문점에서 북측 연락대표와 남측 연락대표가 만날 것을 제의한다.』

이어 북한측은 2월 12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서기국의 [보도]라는 형식으로 2월 5일부 그들의 성명에서 제의한 [민족통일준비위원회]의 결성 협의를 위한 북한측 연락대표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우리는 지난 2월 5일부 성명에서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월 20일 낮 12시 판문점에서 북측 연락대표와 남측 연락대표가 만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예정된 시일과 장소에 다음과 같은 성원들을 우리측 연락대표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대표하여 조선노동당 대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권민준
2.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장 이창선
3.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대표하여 조선민주당 대표 조선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석준
4.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백준혁』

이처럼 북한측은 이들 4명의 대표 전원이 모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대표하고 있으며 각기 북한 [노동당], [정무원], [조선민주당], [조국전선서기국] 등에서 선발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이같은 결정이 여전히 북한측의 [전민족대회] 소집 주장과 이의 예비협상기구로 들고 나온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결성 등의 관철을 위한 단계적 조치에 불과한 것임을 명백히 드러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는 2월 12일 정부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1·19 대북제의]에서의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당국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만나 모든 문제를 협의한다)는 대방침은 불변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측이 7·4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한 쌍방간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주관하고 있는 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에 대해 거론하고 있으므로 동 기구의 기능을 발동하는 것은 필연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즉 [1·19 대북제의]에 의한 대화의 문호는 계속 열려져 있으며 7·4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한 쌍방간의 기 합의사항에 근거한 남북조절위원회는 별도로 계속 존재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도 이날 이동복 대변인의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무조건 개최하여 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2월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자유 의 집]에서 쌍방 부위원장의 접촉을 갖고 제4차 본회의 개최를 위한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에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1979년 2월 5일 북한측 방송이 보도한 성명에서 남북조절위원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뜻하는 바 의미의 심각성에 주목하면서 이에 관한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북한측은 문제의 성명에서 일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그 존속의 의의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북한측의 주장은 단순히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 시키는데 부응하겠다는 차원을 벗어나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속을 거부하여 7·4 남북공동성명에 명문화된 합의사항의 핵심부분을 일방적으로 파기, 백지화하겠다는 태도를 공언한 것이며 따라서 이는 7·4 남북공동성명의 준수와 이행을 운운해 온 북한측이 최근 발언을 스스로 식언하는 것임을 지적, 그들의 진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7·4 남북공동성명은 쌍방 대표가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 중요 합의문서이다. 동 공동성명 제6항은 남북쌍방이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간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곧 남북쌍방이 남북공동성명의 실천과 이행을 주관하는 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음을 명백히 말하거나와 우리는 이같은 명문화된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속의의 상실을 주장한다는 것은 곧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이 그 핵심이 되어 있는 남북공동성명의 일방적인 파기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북한측은 동 성명에서 남북조절위원회는 {극히 제한된 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72년 11월 4일 남북 쌍방이 합의, 서명한 [남북조절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 ①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 ②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및 개인사들 사이에 광범위한 정치적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
- ③ 남북간에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 문제
- ④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며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
- ⑤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문제 등을 {협의를, 해결하며 그 실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조절위원회가 북한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극히 제한된 기구}가 아니라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도록 되어 있는 폭넓은 대화기구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3. 북한측은 또한 동 성명에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그만두고 {그 대신 이른바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자}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오늘날 남북 쌍방이 남북간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나아가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전개함에 있어서 쌍방간에 대두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호신뢰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쌍방간의 신뢰는 쌍방이 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함께 신뢰를 지킬 때에 비로소 돈독해질 수 있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합의사항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어느 일방이 합의사항의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의 정도인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미 서로 합의하여 발족시킨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속을 거부하고 새로이 일방적

인 주장을 제시, 이의 수락을 요구하는 북한측 태도는 7·4 남북공동성명 정신 자체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앞에서 강조한 바와같이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재가 어느 일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정될 수 없는 것이며 또 남북간에 엄숙히 합의, 서명된 합의문서에 명시되고 있는 바와같이 남북조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최근 북한의 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모든 문제가 이 대화기구안에서 효과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이 이제라도 민관식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의 1월 31일자 성명에 호응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남북직통전화의 운용을 지체 없이 재개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전민족이 염원하는 남북대화 재개에 성실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 주기를 촉구한다.
5. 우리는 남북대화재개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1973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본회의에 이어 평양에서 열릴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평양측의 거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제4차 본회의를 무조건 개최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하여 1979년 2월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쌍방 부위원장이 접촉을 갖고 제4차 본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하여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책임자의 성의있는 회답을 촉구하는 바이다. 』

이에 대하여 북한측은 2월 1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측이 [민족통일준비위원회]의 결성 협의를 위해 이미 일방적으로 선정 통고한 4명의 대표를 2월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성명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는 2월 20일 판문점에서 북측 연락대표와 남측 연락대표가 만날데 대한 2월 5일부 우리측 성명과 관련하여 남조선측에서는 2월 17일에 만날 의향을 표시하였다.

우리는 이에 유의하면서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마련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이미 발표된 우리측 연락대표들을 2월 17일 낮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파견할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측에서 어떤 명의로 어떤 사람들이 나오든지 그들을 우리가 이미 제의한 북과 남의 연락대표접촉을 위한 남측 연락대표로 간주하고 그와 우선 만날 것이다.』

이처럼 북한측이 아전인수격 성명을 발표하자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이동복 대변인은 2월 15일 또다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2·17」 판문점 접촉에 나갈 조절위 서울측의 4명의 명단을 밝혔다.

『1.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1979년 2월 12일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본회의문제 토의를 위한

쌍방 부위원장간의 접촉을 1979년 2월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평양측은 수명의 인사를 2월 17일 오전 10시 판문점내의 중립국 감독위원회회의실로 파견할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는 같은 판문점 지역이 니만큼 접촉 장소에 구애하지 않을 것이다.

2. 작금 우리의 남북대화 재개노력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원칙과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는 당연히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2월 17일 판문점 접촉에서 평양측 인사들을 통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우리의 뜻을 평양측에 알리고자 한다.
3. 우리는 2월 17일 판문점 접촉을 계기로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이 정상화되어 남북대화의 재개를 갈망하는 5천만 민족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4.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에서는 2월 17일의 판문점 접촉에 다음의 인원이 나갈 것이다.

민관식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부위원장  
함병춘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위원  
정홍진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간사위원  
이동복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변인』

[함병춘 위원은 1979년 2월 8일 일신상 사정으로 사임한 김동조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됨]

이로써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이 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를 2월 17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북한측이 같은 날 4명의 이른바 「민족통일준비위원회」연락대표의 판문점 파견을 발표함에 따라 판문점에서 남북 쌍방간에는 대표의 성격과 자격이 서로 다른 변칙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2. [변칙대좌]의 경과

조절위원회 제4차 본회의 개최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쌍방 조절위 부위원장간의 접촉을 요구한 조절위 서울측과 소위 [전민족대회]를 전제로 한 「민족통일준비위원회」소집을 위한 「연락대표」 성격의 접촉을 고집하고 맞서는 북한측의 「조국전선」 대표간에는 세차례의 「변칙대좌」(2월 17일, 3월 7일, 3월 14일)가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같은 남북간의 판문점 변칙접촉은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에서 민관식 부위원장과 함병춘 위원, 정홍진 간사위원, 이동복 대변인이 북한측에서는 소위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협의키 위한 「조국전선」 연락대표자격으로 권민준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과 이창선 「정무원」 문화예술부장, 김석준 「조선민주당」 중앙위 부위원장, 백준혁 「조국전선」 서기국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의 남북접촉은 1월 19일의 박대통령의 획기적인 대북제의에 의해 1975년 5월 30일로 예정되었던 남북조절위 제11차 부위원장 회의와 1978년 3월 20일로 예정되었던 남북적십자 제26차 실무회의가 북한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기연기된 이래 처음 이루어졌다는 데에 내외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에 실효성있는 대화를 갖거나 아니면 기존 대화기구로서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재개하자는 대한민국의 주장과 [민족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연락대표회의」를 요구하는 북한측간의 평행선을 걷는 쌍방 입장 때문에 끝내 아무런 성과없이 「변칙적대좌」 그대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와같은 일시의 남북간의 접촉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원칙과 정신, 그리고 합의사항의 테두리 안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그동안 북한측의 일방적인 거부와 불응으로 중단상태가 계속되고 있던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을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이라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측은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반면, 북한측에서는 소위 [조국전선]이라는 일개 사회단체를 대표한 인사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엇갈린 입장과 견해를 밝힘으로써 변칙적인 성격을 떨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북 쌍방은 상대방의 자격인정에 있어서도 북한측은 조절위 서울측 대표들을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락대표]로 간주한다는 것이었으며 남북조절위 서울측은 북한측의 「조국전선」 대표들을 조절위 평양측의 [멧신저]로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이토록 평행선상의 변칙대좌이었지만 금반 남북간의 접촉은 중단됐던 대화가 잠시나마 재개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하겠다. 세 차례의 변칙대좌의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 17」 변칙대좌

남북간의 첫번째 접촉은 1979년 2월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4명의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표와 평양측의 4명의 소위 [조국전선]의 연락대표 자격의 대표들 사이

에 이루어졌다.

남북쌍방은 이날 1시간 34분동안 남북대화 재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남북간의 첫 변칙대화에서 우리측은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호응하여 북한측이 접촉에 나왔음을 환영하고 남북대화재개에 관한 조절위 서울측의 기본입장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평양측의 긍정적 검토와 호응을 촉구했다.

또한 1973년 6월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4차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으며 조절위 운영정상화를 위한 부위원장회의도 1975년 3월 제10차 회의 이후 평양측의 회피로 중단되고 있으며 평양측은 1976년 8월 30일 이래 서울~평양간의 남북직통전화의 운용마저도 중단시켜 놓고 있음을 지적하고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절위 평양측에 제의했다.

『첫째,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4월 3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

둘째, 남북 쌍방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1979년 2월 20일 오전 9시를 기해 남북조절위원회의 남북직통전화를 개통시킬 것.

셋째, 남북조절위원회 재개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 관계자의 접촉을 1979년 3월 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가질 것.』

또한 조절위 서울측은 조절위를 그 규모와 구성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위한 협의에도 응할 용의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973년 12월 19일의 제2차 부위원장회의에서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쌍방 위원수를 각기 10명 내외로 늘리고 여기에 정당인과 사회인사도 참여시키도록 하자는 확대·개편안을 제의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지금도 합리성과 능률성의 테두리 안에서 언제든지 남북조절위원회의 확대·개편을 위한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확실히 한다.}고 밝혔다. 민관식 조절위 서울측 부위원장은 또한 남북간의 평화 정착문제와 상호 신뢰회복문제는 남북 쌍방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같은 합의는 각기 자기측 지역내에서 합의사항의 실천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남북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이루어질 때라야 비로소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같은 자명한 사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항상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주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 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평양측이 책임있는 당국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대화상대가 될 수 없는 이른바 [조국전선]의 이름으로 응수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논박했다.

한편 북한측은 {지금 시기로 말하면 북과 남 사이에 대화가 처음으로 시작되던 때와 같이 남북 관계를 단순히 조절이나 할 때가 아니고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새로 구성하고 실무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민족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위한 실무절차 협의를 제의했다.



- 『 ① 연락대표접촉에 참가할 대표자수는 쌍방에서 각각 4명으로, 수행원은 각각 3명으로 구성하고
- ② 회담장소는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합의에 따라서 [관문점]이나 [자유집]에서 교대로 하며
- ③ 접촉은 1주일에 한번 정도
- ④ 회담기록은 녹음을 하건 속기를 하건 각기 자기측의 편리대로 하고
- ⑤ 접촉은 공개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고
- ⑥ 보도는 서로 단결과 신뢰를 두터이 하는 방향에서 쌍방이 조정하되 제각기 해도 무방하며
- ⑦ 합의된 문건들은 공동보도하고
- ⑧ 회담장에서의 취재기자는 각각 10명 내외로 하고 비공개회의를 할 때는 회의가 시작될 무렵에 사진이나 찍는 정도로 하자.』

또한 북한측은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측 연락대표와 북측 연락대표들 사이에 앞으로 연계를 가질 목적으로 『쌍방 연락대표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직통전화를 2월 18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이어놓을 것』을 제의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실무자들에게 일임하여 협의토록 하자고 했다.

남북쌍방은 3월 7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 날의 접촉을 끝냈다.

한편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조절위 서울측의 이동복 대변인과 북한측의 「조국전선」 서기국 부국장 백준혁은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1시간 30분 동안 남북직통전화의 재개와 관련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비공개 접촉을 가졌으나 북한측이 남북조절위 전용전화의 재개통을 거부하므로써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

이 실무접촉이 끝난 뒤 이동복 대변인은 접촉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북 직통전화의 재개통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 직통전화를 재개통하자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조국전선]이 통화의 상대방이 되겠다고 했다.

우리는 [조국전선]을 대화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 남북간에 설치되어 있는 직통전화는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용 직통전화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남북조절위원회 직통전화를 재개통해서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북측에서는 [조국전선]이 나올테니까 받으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함으로써 합의가 안된 상태로 끝났다.』

한편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은 2월 18일과 2월 19일 오전 10시에 내외보도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상 해온대로 남북조절위원회 직통전화로 평양측을 부르는 시험통화를 시도했으나 2월 18일 직통전화를 개통시키자던 평양측은 이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 나. 「3. 7」 변칙대화

남북쌍방은 지난 「2. 17」 대화 때와 같이 각기 4명의 대표들이 3월 7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두번째로 대화하여 서로의 기본입장을 밝히고 남북 대화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을 한치도 접근시키지 못했다.

조절위 서울측은 「2. 17」 대화시 조절위 평양측 책임자에게 제의한 3개항목에 대하여 {조절위 평양측 관계자로부터 가부간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을 뿐 아니라 남북조절위원회 쌍방 관계자들간의 접촉의 자리로 마련된 이 접촉장소에도 평양측은 2월 17일의 접촉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절위 서울측은 북한의 1973년판 [정치사전]을 인용, [조국전선]을 대화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그러한 입장이 불변함을 강조했다.

『우리가 이른바 [조국전선]을 대화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첫번째 이유는 동 [전선조직]의 목적이 소위 [통일전선]의 개념에 근거하여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추구함으로써 적화통일을 달성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평양에 있는 「사회과학출판사」가 발행한 1973년판 「정치사전」을 보면 이른바 「조국전선」은 『북반부의 사회주의역량과 남반부의 모든 반제애국역량을 단합시킴으로써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른 바 [조국전선]을 대화상대방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동 [전선조직]의 구성내용으로 보아 이를 북한측의 책임있는 당국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3개정당, 14개 단체의 [연합체]라고 하는 동 [전선조직]에 참가하고 있다는 정당·단체들의 정체와 성격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오늘날 북한지역에는 불교와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북한측의 문헌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측은 이른바 [조국전선]에 소위 [조선기독교연맹]과 [조선불교도연맹]이 가입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정치사전]에 의하면 불교는 {역대통치배들이 인민들을 기만하며 억압·착취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로 이용해온 종교로 오늘날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미 없어졌으나 남조선에서는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반동관료배들의 비호 밑에 반미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데 적지 않은 해독작용을 놓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기독교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억압, 침략과 전쟁정책을 정당화하며 식민, 약탈의 길 안내자}이기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미

국에 대한 환상을 뿌리 뽑고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숭미사대주의사상을 유포시키고 있는 기독교의 반동적 본질과 비과학적, 허황성을 폭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른바 [조국전선]을 상대하지 않으려 하는 세번째 이유는 지금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지난 1950년 6월 7일 이른바 「조국전선」은 소위 「호소문」을 발표하여 동년 6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소위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성이나 해주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로부터 불과 18일 뒤인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6·25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른바 「조국전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고도 단호하다.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결코 북한측의 내부사정이나 내부문제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지역내에서 이른바 「조국전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할 생각이 없다.

그것은 북한측의 내부사정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조국전선」은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동의 입장인 것이다」

민관식 조절위 서울측 부위원장은 그 동안의 남북대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합의 사항이 생산되고 또 축적되어 있는 바 7·4남북공동성명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중한 합의문서이며 그 밖에도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조절위원회의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남북적십자 중앙기관간의 직통전화 운용절차에 관한 합의문」,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 실무자회의 합의문」, 「적십자 관문점 상설 회담연락 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문」 등 남북간에 이루어진 이들 합의문서는 그 하나 하나가 남북쌍방의 관계 책임자들이 엄숙하게 합의·서명한 귀중한 문서들이며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룩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절위 서울측은 북한측의 「조절위 존재시비」를 비난하고 상호 신뢰에 토대를 둔 남북대화 재개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정상 운영을 무조건 재개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남북대화의 정도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남북조절위원회의 존재는 곧 7·4남북공동성명의 사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7·4남북공동성명은 그 제6항에서 남북 쌍방은 동 성명에 열거된 모든 합의사항의 추진과 남북간의 제반 문제의 개선·해결 및 합의된 통일원칙에 기초한 통일문제의 해결을 주관하는 남북간의 대화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조절위원회의 부인된다면 그것은 곧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북공동성명의 사문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조절위원회는 평양측의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관계를 조절이나 하는 기구가 아니다.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남북조절위원회는 ① 분단 조국

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② 남북의 정당·사회단체·개별인사들 사이의 정치적 교류 문제 ③ 남북간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교류 및 협력문제 ④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사 사고방지 및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문제 ⑤ 대외 활동에서의 공동보조문제를 「협의·결정」 할 뿐 아니라 「그의 실행을 보장」 하는 실로 방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또 제한된 기구가 아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그 안에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거니와 이들 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각 분야별로 관계인사들의 광범한 참여를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2월 17일의 접촉 때에도 말한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남북조절위원회의 문을 정당·사회단체 인사들에게도 개방하여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확대·개편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이 정상화 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남북쌍방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이 정상화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남북대화는 자동적으로 재개되어 남북관계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결실을 지향하는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측은 『조절위원회는 통일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에서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였으며 서로 논쟁만을 거듭하던 끝에 결국에는 결렬되고 말았다』고 주장하고 『5년전에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조절위원회에 계속 집착한다면 결국 지난날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다』며 「민족통일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민의를 반영하고 통일을 위한 민족 단결을 도모할 필요성 등 대해서 강변했다.

또한 북한측은 『당국자간의 적은 인원과 좁은 범위로는 통일의 길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소위 「민족통일준비위원회」는 「전민족대회」소집을 위한 예비적인 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통일문제 해결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도 협의할 수 있으며 그 구성에는 남북의 당국자들과 국내외의 각 정당·단체들간의 대표들을 망라하되 그 범위는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측의 남북조절위 재개 요구를 거부한 채 그 존재를 시비하며 「민족통일 준비위원회」의 구성만을 계속 고집했다.

이날 접촉은 조절위 서울측이 조절위 재개에 관한 협의를 위해 동 위원회 쌍방 관계자들의 접촉을 1979년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은 소위 「연락대표」접촉을 주장, 별 성과없이 끝났다.

다. 「3. 14」 변칙대화

남북간의 세 번째 접촉은 1979년 3월 14일 조절위 서울측에서 민관식, 함병춘, 정홍진, 이동복, 북측의 「조국전선」측에서 권민준, 이창선, 김석준, 백준혁이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원회 회의실에서 역시 「변칙적인 대좌」로서 진행되었다.

이 접촉에서도 북한측은 계속 「조국전선」대표의 이름으로 참석함으로써 남북조절위원회 관계자나 책임있는 북한당국의 대표가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측의 주장을 외면했으며 조절위 서울측은 이같은 북한측의 무성의한 자세를 공박하고 「조국전선」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명백히 밝혔다.

이날의 접촉에서 조절위 서울측은 지난 3월 7일의 남북간 변칙대좌에 참가한 평양측 인사들이 「조절위 부재론」을 발언한 사실에 대하여 1972년 11월 4일 이후락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과 김영주 평양측 공동위원장을 대리한 박성철 당시 북한 제2부수상이 직접 합의·서명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그 제5항에서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같은 명문규정을 놓고 볼 때 동 합의서에 담겨진 모든 합의사항들은 남북조절위원회 내에서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수정, 보충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이며 남북쌍방은 계속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음은 자명한 사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절위 서울측은 7·4남북공동성명의 명문조항에 의거하여 남북조절위원회는 남북공동성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공동성명은 그 제6항에서 쌍방은 『이상의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아울러 남북간에 제기되는 제반문제를 개선·해결하고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음을 명기해 놓고 있는 다시 말해서 남북조절위원회는 남북공동성명의 이행을 주관하는 남북한 간의 유일한 합의된 기구이기 때문에 이 기구의 소멸은 남북공동성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절위 서울측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존폐문제에 관하여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평양측의 일부인사들이 남북조절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입장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남북공동성명은 서로 『상부』 즉 쌍방최고당국자의 『뜻을 받든』 쌍방 대표에 의해 합의·서명되었으며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서울측 공동위원장과 평양측 공동위원장을 대리한 북한측 고위 당국자의 한사람에 의해 합의·서명된바 있으므로 남북조절위원회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평양측 관계자 또는 당국자만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절위 서울측은 그 동안 두차례의 변칙적인 남북접촉을 통해 ① 조절위 제4차 본회의를 4월 3일 평양에서 열고 조절위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제의했고 ② 조절위가 남북관계를 조절이나 하는 제한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논의했으며 ③ 조절위를 확대·개편하여 당국자 외로 정당·사회단체 인사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고 위원회의 5개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과정에서 각 해당분야별로 보다 광범한 인사들의 참여를 도모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세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남북간의 비생산적인 변칙접촉을 지양하고 그 대신 정상적인 남북대화를 마련키 위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실무대표들 사이의 접촉을 가질 것을 내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 『1. 이 접촉에는 쌍방에서 각기 3명의 실무대표가 참가한다.
2. 접촉장소는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한다.
3. 첫 접촉일시는 1979년 3월 28일 오전 10시로 한다.
4. 이 접촉에서는
  - 가. 남북조절위원회 문제
  - 나. 남북 당국간 회담문제
  - 다. 기타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이상과 같은 제의에 대하여 평양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측에서는 3명의 실무대표가 3월 28일 이 장소에 나올 것이다』

한편 북한측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접촉의 명칭으로 이른바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 연락대표단」의 구성을 제의하고 나섰다.

『첫째, 조절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남측 연락대표가 조절위원회를 대표함을 취소하는 조건에서 우리 북측도 연락대표 명칭에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둘째, 쌍방 연락대표의 명칭은 각각 북측 또는 남측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연락 대표단으로 한다.

셋째, 새로운 연락대표 명칭에 맞게 북측 연락대표단에는 현재의 조선노동당대표·조선민주당대표·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대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참가하며 남측에서도 연락대표들의 명칭과 구성을 이에 상응하게 한다.

넷째, 이상의 조치들이 이미 이루어진 연락대표 접촉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1979년 1월 23일 이후 우리측에서 내놓은 모든 제안들과 취한 조치들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쌍방은 이미 출발한 연락대표 접촉을 정당화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연락대표 접촉이 민족통일 준비위원회 구성문제를 협의, 해결한다는 본래의 사명을 확인한다.』

북한측은 이처럼 일견 새로운 듯 보이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비록 조건이 붙어 있지만 「조국전선」이라는 「모자」를 벗으라는 대한민국측의 제의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주목될 뿐 종래의 정당·단체의 대표로 대응하겠다는 그들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즉 북한측이 남북조절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조절위 서울측이 조절위 대표를 취소하는 조건 운운하는 「남북조절위의 존재문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처리할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있다」·「없다」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북한 측이 「조국전선」이라는 「모자」를 벗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조절위 「모자」를 벗어야 된다는 등식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쌍방간의 접촉은 조철위 서울측이 실무 대표회의를 3월 28일 개최하자는 제의에 북한측은 4월 5일 종전과 같은 명칭의 네번째 접촉을 갖고 그들의 제안을 토의하자는 주장을 고집하는 가운데 세 차례의 남북간의 「변칙대좌」는 끝을 맺었다.

### 3. 남북당국 실무대표회담의 유산

1979년 3월 26일 대한민국 정부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3월 14일의 접촉에서 조절위원회 서울측이 그 동안의 남북간의 비정상적인 접촉을 그만두고 그 대신 남북쌍방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당국의 실무대표 접촉을 3월 28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 바 있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3월 28일 판문점에 나갈 대한민국 당국 실무대표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 동안 세 차례의 판문점 접촉의 경과를 통해, 정상적이고 실효성있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이 직접 성의를 가지고 서로 만나 얘기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절실히 요청된다는 사실이 명백해 졌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3월 28일 3명의 실무대표를 판문점으로 보내기로 했으며 북한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무대표를 판문점에 보내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이루어지는 남북한 실무대표 접촉에서 필요하다면 비공개리에 그 동안 쌍방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3월 28일 판문점에 나갈 우리측 실무대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석대표: 동     운(국토통일원 차관)  
대     표: 노   창   희 (외무부 공사)  
대     표: 이   강   식(문화공보부 부대변인)』

또한 김성진 정부대변인은 성명에 이어 『실무대표간의 접촉으로 남북조절위원회의 접촉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기자질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가 대전제이고 만일 북한측에서 당국간 대화를 가질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이미 합의된 대화 「채널」인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 이번 대한민국정부가 실무대표자회의를 제의했지만 조절위가 없어졌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조절위는 조절위대로 살아 있고 앞으로도 움직여야 한다. 그와는 별도로 당국간의 대표회담을 갖기 앞서 실무대표회의를 갖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관례로나 동 · 서독간의 경우를 보더라도 모든 대화가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는 실무자회의가 현실적인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정부는 선전 목적이 아닌 진지한 대화를 갖기 위해 쌍방 실무대표회의를 제의했으며 필요하다면 비공개회의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측은 다음날 3월 27일 소위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연락대표단」 성명이란 것을 발표하고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4명의 대표단을 전원 교체하지 않은 채 4월 2일 판문점에서 제4차 접촉을 갖자고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연락대표접촉을 계속하기 위한 우리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우리측은 제4차 연락대표접촉을 오는 4월 2일 낮 10시에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



2. 우리측은 제4차 연락대표접촉에 이미 알려진 성원들이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 연락대표단의 이름으로 참가할 것이다.
3. 우리는 남측에서 누가 어떤 이름으로 나오던 상관없이 그들을 남측 연락대표로 인정하고 우선 만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당국 실무대표단은 3월 28일 예정대로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로 나가 북한측의 실무대표단을 기다렸으나 북한측 대표가 끝내 나오지 않아 실무대표회담은 결국 유산되고 말았다.

동훈 대한민국 당국실무대표단 수석대표는 실무대표 접촉의 유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판문점에서 발표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지난 3월 14일 이곳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접촉석상에서의 민관식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부위원장의 제의와 3월 26일자 대한민국 정부대변인 성명에 의거하여 북한당국의 상응하는 대표들과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정상적이고 실효성 있는 남북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분도 직접 보신 바와 같이 북한당국은 오늘 이 자리에 그들의 대표를 보내지 않았으며 그 결과 오늘의 실무대표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를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리측은 지난 1월 19일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제의로 남북한 쌍방 당국이 시기·장소·수준에 구애됨이 없이 직접 회담 할 것을 제의한 바 있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 일행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이 당국간 대화의 문호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열려있다.

또 우리는 남북한 쌍방간의 합의의 소산인 남북조절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부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 운영 정상화에 의한 남북대화 재개의 문호 역시 항상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해 둔다.

우리는 북한측이 5천만 민족의 염원과 내외의 희망을 올바르게 깨달아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당국간 대화의 자리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

대한민국 당국실무대표단의 동훈 수석대표는 북한측이 이른바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연락대표」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4월 2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의 대화를 가져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불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 수석대표는 대한민국 당국실무대표단은 평양당국이 임명하는 대표가 나온다면 언제라도 이들과 만나서 남북간에 제기될 어떤 문제라도 즉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문제와 남북쌍방이 제

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상의할 작정이라고 밝히고 정상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이 직접 성의를 가지고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남북 당국간 대화 및 남북조절위원회 정상화에 의한 남북대화 재개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측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제의한 4월 2일 「제4차 판문점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날 오전 11시경 개성에서 또 다시 소위 「정당 사회단체 및 당국연락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4월 10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연락대표 접촉을 갖자고 제의를 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실무대표단의 이강식 대변인은 1979년 4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의 책임있는 당국의 성의있는 대화참여를 촉구했다. 동 성명내용은 전문 다음과 같다.

『우리는 5천만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의 대화를 통해서 실현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 당국이 하루 빨리 남북대화에 응해 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진실로 남북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3월 26일 정부대변인을 통해 남북 당국 실무대표회의를 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실무대표단은 3월 28일 판문점 회담장에 나갔으나 북한측 대표의 불참으로 남북간의 접촉은 유산되고 말았다.

우리 대표단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은 책임있는 당국 실무대표이며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이 임명하는 대표들과 하루 빨리 만나 남북간의 제반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하고자 한다.

북한측은 대표단의 명칭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부르고 있으나 대표단의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이 임명하는 대표가 회담에 나와야 한다는 것임을 명백히 해 두는 바이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정치적 목적이나 선진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에 동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북 당국간 대화와 남북조절위원회 재개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북한측의 책임있는 당국이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에 대해 공식적인 회답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남북 당국간 대화 및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에 의한 남북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측의 성의있는 반응을 기대하면서 북한 측이 긍정적인 자세로 회담장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4. 「조국전선」 · 「전민족대회」의 정체

##### <북한 「조국전선」의 정체>

최근 북한측이 내세우고 있는 소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북한 「노동당」의 지도아래 북한의 혁명노선과 통일정책을 적극 옹호 지지하고 통일전선의 명목으로 소위 전체 「인민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의 허수아비 단체에 불과하다.

약칭 「조국전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단체에는 북한노동당을 비롯하여 북한내에 있는 이른바 모든 정당·사회단체(3개 정당·14개 사회단체)가 총 망라되어 있다고 북한측은 주장하고 있으며, 그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이 북한의 사회과학 출판사가 발행한 「정치사전」(1973년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북한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며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는 것이다.

『「조국전선」은 1949년 6월 25일 결성되었다. …… 「조국전선」에서 「조선노동당」은 지도적 역량이다…… 「조국전선」은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워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성공적 수행과 남북한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했다. 오늘 「조국전선」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반부의 모든 반제애국 역량을 단합시킴으로써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1973년판 「정치사전」 771~772페이지)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과거 이 단체를 이용하여 각종 대남제의를 해 왔던 제반 사례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 북한은 「6·25전쟁」도발 불과 19일전인 1950년 6월 7일 「조국전선」명의로 이른바 「평화통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남북간의 통일된 「최고입법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같은 해 8월 5일 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하고 「평화통일 문제협약」을 위해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협의회」를 동년 6월 15일~17일 해주나 개성에서 소집하자고 제의했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조국전선」 호소문은 임박한 6·25전쟁 도발준비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 제의였으며 북한은 그로부터 18일 뒤인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를 골라 38도선 전역에서 무력남침을 감행했던 것이다.
- 그후 북한은 「4·19」의 사회혼란기와 「5·16혁명」이래 대한민국의 민정이양을 겨냥해 1963년 12월 1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위원회」와 「조국전선 중앙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앙위」 연석회의를 열고 이른바 평화적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 지난 1973년 7월 24일에는 「조국전선 중앙위」 제59차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당·신민당·통일당과 소위 「통혁명」 등의 정당·사회단체와 해외교포 단체를 포함한

「대민족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남북대화를 이용한 소위 「남조선혁명」 여건을 조성해 보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조국전선」은 그 실제유무를 떠나 그들의 「정치사건」의 정의가 말해주는 것처럼 「노동당」의 강령중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 노선인 「남조선혁명」의 수행을 위임받고 있는 전위조직인 것이다.

더욱 중요시 되는 것은 「조국전선」에 가입해 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정당·사회단체는 「노동당」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의미로도 진정한 뜻에서의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정당·단체들이란 대부분이 당초부터 간판만 있을 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이며 그나마 대부분이 지금은 사실상 소멸되었고, 현재까지 북한에 실재하고 있다는 정당인 「천도교 청우당」과 「조선민주당」은 이미 오래전에 실질적으로 노동당에 의해 접수되어 이름만이 남겨진 채 「노동당」이 파견한 수명의 위장당원에 의해 간판만이 유지되고 있는 유명정당인 것이다.

[북한은 「조국전선」에 조선노동당, 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조선농업 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문학예술동맹, 조선기독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기자동맹,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학생위원회,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성위원회, 조선·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조선평화옹호민족위원회 등 3개 정당과 14개 사회단체가 가입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이름뿐인 정당은 물론 그 밖의 모든 사회단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소위 「정치사건」은 사회단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로서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며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73년판 「정치사건」 529페이지)

북한 「노동당」에 의해 조종되는 유명 정당과 「외곽단체」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국전선」의 허구성 또한 북한의 문헌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스스로 오늘날 북한지역에는 기독교와 불교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전선」에 소위 「조선기독교연맹」과 「조선불교도연맹」이 가입하고 있다는 모순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 「정치사건」은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는 피착취 근로대중의 해방투쟁을 말살하고 착취제도를 영구화하기 위한 착취계급의 정신적 도구이다……. 자본가 놈들의 착취를 정당화하며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에 반대하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억압, 침략과 전쟁정책을 정당화하며 식민약탈의 길 안내자로 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을 뿌리 뽑고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동시에 ……기독교의 반동적 본질과 그 비과학성·허황성을 폭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1973년판 「정치사전」 122페이지)

『불교는 역대 통치배들이 인민들을 기만하며 억압·착취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로 이용해온 종교로…… 오늘 불교는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미 없어졌으나 남조선에서는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반동관료배들의 비호 밑에 인민들의 반미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데 적지 않은 해독적 작용을 놓고 있다.』

(1973년판 「정치사전」 502페이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내세우고 소위 「조국전선」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북한공산당으로부터 이른바 「남조선혁명」이란 「적화통일」의 수행을 하청 받은 「전선조직」이며, 그 구성내용에 있어서도 실체가 없는 하나의 기만적 위장조직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조국전선」이란 일개 허수아비 단체를 상대로 하여 조국통일이란 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다.

#### < 「전민족대회」의 정체 >

북한 측은 1979년 1월 23일자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성명을 통하여 『북과 남의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민족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한다. 이 대회에는 북의 각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민주공화당의 총재를 포함한 남조선의 모든 정당·단체들의 대표들 및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사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조직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참가해야 한다. 우리는 이 대회를 올해 9월초 평양이나 서울에서 열며 대회의 성과적인 준비를 위하여 6월초에 평양에서 국내와 해외에 있는 각정당·단체들의 실무급대표들이 쌍무적·다무적 예비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하는 한편 1979년 1월 27일에는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성명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실무급대표들의 회담 참가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국내와 해외에 있는 모든 정당·단체들의 대표들과 별개적 인사들은 물론 북과 남의 당국자들도 참가할 것을 예견했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실무급 대표들의 회담을 위한 초청장을 북과 남의 모든 정당·단체들과 각계인사들, 해외의 모든 조직 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 그리고 쌍방당국에 발송할 것이다. 실무급대표들의 회담이 열리고 다각적 접촉과 대화를 진행한다면 「전민족대회」의 소집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이같이 북한이 말하는 「전민족대회」는 남북한과 해외의 모든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개별인사들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남북의 당국자가 참가하는 일종의 군중 집회를 말하고 있다. 이같은 군중 집회에서 어떻게 남북관계에 관한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북한사회처럼 북한 노동당의 일당독제가 철저히 구축되어 그 누구도 김일성의 주장에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반동적 반혁명분자로 처단해 온 체제라면 모를까, 한국과 같은 복합사회에서 수많은 정당·사회단체가 개별적 접견이나 이해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자유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일진대 한국적 현실에서 본다면 상당한 의문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그렇게 많은 정당·사회단체가 각기 대표를 보낸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남북한 대표를 선정할 것이며 또한 해외교포 조직단체란 거주지역 중심의 이익집단이라고 볼 때 서로 이해가 다른 그러한 조직을 어떻게 선정 포함시키며, 남북한 전체 인구가 5천만 이상인데 그 중에 어떠한 인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도대체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책임을 지는 대화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위 「전민족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들을 누가 누구와 마주 앉아 어떻게 선정한다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전민족대회」는 종래 그들이 말하던 「대민족회의」, 「남북 정치협상회의」,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이름만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른바 「전민족대회」의 규모에 관한 윤곽은 1974년 1월 30일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부위원장회의에서 평양측 유장식 부위원장의 남북조절위원회 확대·개편주장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즉 그 규모는 한쪽에서 최소 350명 이상 최대 1,500명 이상의 군중집회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북한의 「전민족대회」발상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은 「회담참가자」들에 대한 「초청장」을 북한이 「발송하겠다」고 공언하는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 측은 물론 상대편 대표도 북한이 선정하겠다는 발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애국적」인사를 운운함으로써 상대편의 참가대표 자격에도 일방적 제약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1974년 1월 30일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부위원장 회의에서 유장식은 대한민국의 경우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정당·단체·개인은 남북회담에 참가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북한 측의 논리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민족의 단결에 반대하는 것이며, 민족의 단결에 반대하는 것은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반공은 곧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반공주의자는 통일을 논하는 좌석에 끼어 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정당·사회단체로 둔갑한 북한 노동당원 350명 내지 1,500명과 한국 측의 정견이 상이한 정당·단체 개별인사 350명 내지 1,500명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종의 쫓겨나고 회의를 열자는 것으로 북한 측이 1973년 6월 남북대화를 결렬시키기 위해 내세웠던 「대민족회의」 등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이름만 바꾼 북사관으로서 원래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적화교리로 삼는 통일 전선술책의 일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제3부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

#### 1.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의 성립

박정희 대통령의 획기적인 「1. 19대북제외」로 남북간에 변칙적이긴 하나 남북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은 2월 20일 공연히 북한 체육지도 위원회 위원장 김유순과 북한탁구협회 회장 김득준을 발신인으로 대한체육회 박종규 회장과 대한탁구협회 채영철회장 앞으로 방송을 통한 서한을 발송하고, 4월 25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이 단일 팀을 구성하여 출전할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서울 대한체육회 박종규 회장앞  
대한탁구협회 채영철 회장앞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서 제35차 세계탁구 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된다.

지금 우리 겨레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회가 열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우리 민족의 단결된 위력을 내외에 과시하고 북과 남의 민족적 화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훌륭한 계기로 된다.

이번 대회를 공동의 민족적 염원에 맞게 의의있는 대회로 되게 하자면 여기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별개의 「팀」으로서가 아니라 서로의 힘을 합쳐 통일 「팀」으로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정한다.

북과 남이 통일 「팀」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단결된 힘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고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더욱 자랑 떨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북과 남이 합작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서로 긍정적인 작용을 늘 것이며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희망으로부터 이미 오래전에 국제경기에 북과 남이 통일 「팀」으로 나갈 것을 제의한 바 있었다.

우리는 이번 제35차 세계탁구 선수권대회가 평양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북과 남이 통일 「팀」을 만들어 출전할 것을 다시 한번 귀측에 제의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는 2월 27일 낮 10시에 쌍방 탁구 협회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만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귀측에서도 거래의 염원에 맞는 우리의 이 발기에 견해를 같이 하리라고 믿으면서 귀하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기를 바란다.』

이에 대한체육회와 대한탁구협회는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의 증대로 남북상호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첩경이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교류와 협력방안을 대한민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측에게 제의해 왔음을 상기시키고 2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 4명의 대표를 보내 북한측 대표들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를 위한 남북한 탁구 단일팀 구성문제에 대하여 협력을 갖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남북한 탁구회의에 관한 대북방송통고문을 2월 24일 오후에 발표했다.

『우리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35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이 단일 선수단을 만들어 출전할 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요지의 1979년 2월 20일 17시 평양방송을 들었다.

남북한의 모든 체육인들이 분단의 장벽을 넘어 서로 교류하는 것은 남북의 5천만 겨레가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문제일 뿐 아니라 평화적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체육교류를 포함한 남북간의 제반 교류를 하루빨리 실현시킬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고 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늦게나마 북한측이 우리측의 제의에 호응해 온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선수단은 평양에서 열리는 제35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국제탁구연맹을 통하여 「비자」 신청을 해두고 있다.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의 위임에 따라 오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아래와 같은 우리측 대표들이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로 나갈 것을 통고하는 바이다.

대한탁구협회 대표단

- 대 표 채 영 철 대한탁구협회 회장
- ” 이 종 하 대한체육회 부회장
- ” 천 영 석 대한탁구협회 전무이사
- ” 정 주 년 대한탁구협회 이사(대변인)』

한편 북한탁구협회측은 2월 24일 동 협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를 협의키 위해 김득준 북한탁구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박무성 북한탁구협회 부회장, 김덕기 북한 탁구협회 서기장, 김선일 북한탁구협회 위원을 북한측 대표로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남북한 탁구협회간의 첫 회의가 1979년 2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었다.



## 2.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의 경과

남북간의 변칙대좌가 진행되는 한편, 평양에서 4월 25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개최되는 제35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가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들 사이에 네차례(2월 27일, 3월 5일, 3월 9일, 3월 12일)진행되었다.

동 회의는 대한탁구협회측에서 채영철 대한탁구협회 회장, 이종하 대한체육회 부회장, 천영석 대한탁구협회 전무이사, 정주년 대한탁구협회 이사 4명과 북한탁구협회측에서, 김득준 북한탁구협회 회장, 박무성 북한탁구협회 부회장, 김덕기 북한탁구협회 서기장, 김선일 북한탁구협회 위원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가. 「2. 27」 회의

1979년 2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한 탁구협회의 각기 4명의 대표들은 제35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한 남북한 단일 선수단 구성문제를 놓고 1시간 46분동안 첫 모임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 대한탁구협회 대표단은 남북한간에 탁구 단일선수단 구성문제의 협의를 계기로 남북한간에 모든 종목에 걸쳐 체육교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대한민국측이 남북한간의 체육교류와 국제경기에 있어서 단일선수단의 출전문제를 여러번 제의한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에 관한 기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문제는 우선 국제탁구연맹 규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동 규약의 조항에 합치되어야 하며,

둘째,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탁구협회 채영철 회장은 제35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대진표 추첨 일정이 3월 14일과 3월 15일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또한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의 선수선발 및 훈련을 비롯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될 제반문제를 고려하여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문제는 늦어도 3월 12일까지 합의되어야 하며 만일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문제에 관한 쌍방간의 이견조정 지연으로 한국 탁구선수단의 제35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참가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에 관한 합의가 3월12일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탁구협회측이 한국탁구선수단의 제35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참가를 보장하고 한국탁구선수단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동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탁구협회 대표단은 이와 같은 입장에 입각하여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을 위한 대한탁구협회 제안>

남북한 탁구협회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남북한 탁구협회는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을 1979년 3월 12일까지 합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2. 남북한 탁구협회는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이 국제탁구연맹 규약의 정신과 조항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각각 국제탁구연맹에 조회하기로 한다.
3. 1979년 3월 12일까지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탁구협회는 한국탁구선수단이 제35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보장하기로 한다.

또한 대한탁구협회는 이 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문제에 대해 ① 회의장소는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하며 ② 쌍방의 대표단은 각기 4명의 대표로 구성하고 수행원은 각기 3명 이내로 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기록은 명기한다. ⑤ 보도는 각기 한다. 등 내용을 제의하고 다음 회의를 3월 5일 오전 10시에 가질 것을 아울러 제의했다.

한편 북한측은 처음부터 단일팀구성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요구함과 동시에 절차문제에 관한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단일팀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과시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을 위해 『① 선수선발은 가장 우수한 선수 선발원칙으로 국제탁구연맹의 순위 사정위원회가 발기한 개인등급 사정에 들어 있는 우수 선수를 우선적으로 뽑고 나머지는 양측에서 절반씩 같은 수로 하여 모두 18명의 선수를 선발한다. ② 대회출전에 앞서 평양에서 공동 훈련을 하며 한국측 선수들에게 평양에서의 모든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③ 선수단 단장은 양측에서 다 함께 1명씩으로 하여 공동단장제를 채택한다. ④ 단일선수단의 명칭은 종래 어느측도 쓰지 않던 「고려」라고 한다』 등 일견 구체성을 띤 것 같으나 실제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기업적 내용의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이를 정치선전에 이용하려는 저의를 보였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대한탁구협회 대표단의 정주년 대변인은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한탁구협회는 남북한 탁구선수단 구성을 위해서는 국제탁구연맹 규약의 정신 및 조항과 관련하여 이에 합치한다는 국제연맹체의 유권적 해석을 우선 공식적으로 통보받아야 하겠다는 기본입장과 그리고 평양에서 개최될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위한 대진추첨일이 3월 14일과 3월 15일에 있을 예정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늦어도 3월 12일까지는 단일선수단 구성을 위한 선수선발, 훈련, 기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술적인 제반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관하여 협회가 이루어져야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탁구협회측은 오늘 회의에 임하는 기본입장과 태도로 보아서 남북한 단일탁구선수단 구성을 위한 원칙적이고 전반적인 구체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한탁구협회가 북측의 입장과 견해를 분석하여 볼 때

북한 탁구협회측이 부분적인 안만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원칙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래서 다음 3월 5일에 있을 예정인 제2차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에서는 북한측이 좀더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을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 안, 특히 법률적인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할 국제탁구연맹 규약의 정신과 조항에 대한 국제탁구연맹측의 공식적인 유권적 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탁구협회가 국제탁구연맹에 조회를 우선 해야 한다.

또한 다음 회의에서 북한탁구협회측은 좀 더 원칙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하며 대한탁구협회의 제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회답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날 첫 번째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는 쌍방이 기본입장과 제안만을 교환한후 구체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 토의키로 하고 대한탁구협회측의 제의대로 3월 5일 재회합을 갖기로 하고 끝났다.

나. 「3. 5」 회의

1979년 3월 5일 오전 10시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두 번째의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회의벽두부터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거듭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탁구협회 채영철 회장은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들이 관문점에서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남북간의 체육교류가 이미 실현되고 있었다면 국제경기에서의 단일선수단 출전문제는 더욱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볼 때 남북간의 체육교류의 일환으로 단일선수단 구성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탁구협회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동 대표단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거듭 밝혔다.

『첫째,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문제에 관한 쌍방간의 협의가 한국탁구선수단이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기득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금반 대회 주최측인 북한탁구협회는 한국탁구선수단의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대진표 추첨 일정이 3월 14일과 3월 15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또한 남북한 단일탁구선수단의 선수선발 및 훈련을 비롯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될 제반문제를 고려하여 남북한 단일탁구선수단 구성문제는 늦어도 3월 12일까지 합의되어야 한다.』

이어 대한탁구협회 대표단은 이상과 같은 입장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대한탁구협회 제안>

북한탁구협회는 대한탁구협회가 국제탁구연맹 회원으로 마땅히 누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한국탁구선수단의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를 보장하는 성명을 차기 회의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탁구협회 대표단은 한국선수단이 국제탁구연맹의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대표참가기득권을 북한측이 보장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들어내 보이자 북한측의 단일팀구성 제의가 한국선수단의 개별출전을 저지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선수단의 개별출전 기득권을 우선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대한탁구협회 대표단의 제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다만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는 원칙에 먼저 합의할 것만을 되풀이 고집함으로써 한국선수단의 개별출전을 거부하겠다는 그들의 본래의 입장을 사실상 명백히 하고 1차 회의 때와 대동소이한 내용의 제안을 되풀이 했다.

즉 ① 단일선수단의 공동훈련은 평양에서 하고 훈련장소는 대회개최장소인 평양체육관으로 한다 ② 공동훈련기간중 대한민국측의 선수, 임원에 대한 생활조건을 무료로 제공하며 숙소는 「보통강여관」으로 한다. ③ 선수단단장은 양측에 1명씩 공동단장제로 하며 국제탁구연맹총회에 참가하는 대표는 양측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여 공동대표단을 구성한다. ④ 선수단의 표식은 한반도지도에 「고려」라는 우리 글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하고 훈련복에 「고려」라 새긴다. ⑤ 기념회장은 국기를 넣지않은 순수한 탁구경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각각 세가지를 만들어 함께 사용한다. ⑥ 단체복·훈련복·경기복은 민족적 풍습과 현대적 감각에 맞게 한벌씩 만들어 쌍방 합의에 따라 번갈아 입는다. ⑦ 출전선수 기용과 활동 등 기타문제는 공동단장 합의에 따라 운영한다는 등 북한탁구협회측은 훈련단 구성에 관한 문제만을 들고 나와 무조건 단일팀 구성을 합의하고 넘어가자며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가하면 소위 「통일팀」제이의 의의만을 강조하는데 열중함으로써 한국선수단의 대회참가를 봉쇄하려는 그들의 저의를 가리우고 그들이 통일지향적이라는 선전적 효과를 올리는데 부심했다.

다. 「3. 9」 회의

남북한 탁구협회의 세 번째 회의가 1979년 3월 9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1시간 40분동안 개최되었다.

대한탁구협회 채영철회장은 남북한 탁구단일팀 구성은 전반적인 남북한 체육교류원칙에서 이뤄져야 하며 북한측은 그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가를 우선 보장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북한측의 김득준 단장은 지난 두 차례의 회의 때와 같이 단일팀 구성에 따른 제반절차문제의 토의를 되풀이 주장함으로써 북한측의 단일팀구성 제의가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참가를 저지하려는 의도였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한 단일 구성을 위한 회의는 진전없이 벽에 부닥치고 말았다.

채영철 대한탁구협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는 전반적인 남북한 체육교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그동안 세계의 모든 체육인들이 발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타고 서로 개방하고 이웃처럼 교류하고 있지만 남북한의 체육인들끼리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아무런 접촉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우리 회의는 단절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남북한 체육교류를 실현하는 계기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회의가 단 한번의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일시적 목적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 계기에 우선 남북한의 체육인들이 남북을 왕래하면서 모든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선수단 구성 문제가 어디까지나 남북간의 체육교류의 일환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현재의 단절된 남북관계에서 볼 때에, 남북간의 체육교류문제와 단일선수단 구성문제는 결코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의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경기에 단일선수단을 구성하여 출전시키는 문제와 남북간의 체육교류 문제가 동시에 보장되고 추진되어야만 이 두 가지가 다 원만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단일선수단 구성을 남북한의 체육교류문제와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 회의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남북간의 전반적인 체육교류를 기대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소망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일의 선후를 말한다면, 남북한의 체육인들이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남북을 왕래할 수 있고, 또 각종 경기에 다같이 참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체육교류가 실현된다면 국제대회에 내보낼 남북한 단일선수단을 구성하는 문제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측이 뚜렷하게 느끼는 점은 귀측이 이러한 초보적인 남북체육교류를 전혀 도외시하고 다만 평양대회라는 한정된 행사에 국한해서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으며, 더우기 「남북한단일선수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한국선수단의 대회참가를 고려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이다.

우리측은 귀측의 그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대해서 결코 의견을 같이 할 수가 없다.』

이어 대한탁구협회 대표단은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가를 위한 기득권을 북한측이 보장한다는 명백한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만일 북한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제의한 이번 회의가 한국선수단의 개별출전을 막기 위한 위장전술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가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하나의 선수단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미 국제탁구연맹에 가입된 두개의 단체가 남과 북에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우리측은 단일선수단 구성문제 이전에, 한국선수단이 평양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기득권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선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귀측의 단일선수단 구성제외가 진정으로 남북한 단일선수단을 구성하려고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선수단의 대회출진을 막으려 내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귀측의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제외가 순수한 것이라면 우리측의 기득권 선보장요구에 마땅히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한편 북한측은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남과 북의 대화가 새롭게 시작된 사실은 민족통일팀을 구성함으로써 체육분야에서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탁구협회측은 『첫 회담에서 국제탁구연맹규약, 규정의 유권적 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을 곤란하게 만들고 2차회담에서는 통일팀 구성문제와는 전혀 다른 기득권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의 진보에 음영을 던졌다』고 비난했다.

또한 북한측은 『3월 12일까지 통일팀의 구성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평양대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통일팀 구성 문제를 그때까지 질질 끌다가 기어코 개별팀의 참가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합의서 초안에 즉시 동의하라고 생떼를 썼다.

이에 대한탁구협회 대표단은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참가에의 기득권보장을 선행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 첫째의 이유는, 한국탁구선수단의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의 참가 기득권은 귀 협회가 동 대회를 평양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주최권을 얻은 1977년 3월에 이미 인정한 기정사실로서 이것은 귀측이 최근에 제기한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문제에 앞서 마땅히 재확인되어야 할 선결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 둘째의 이유로서, 귀측이 세계선수권대회 개최권을 지금으로부터 2년전인 1977년 3월에 얻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일정 불과 2개월 전인 오늘에 와서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문제를 불쑥 내놓기만 하고 마땅히 전제되어야 할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가 보장, 기득권보장에 관한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는 계속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에서 오는 다시말해서 계속 동의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데에서 오는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어야만 된다는 이러한 얘기인 것이다.

다시말해 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 귀측의 진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 대표들은 이 점을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귀측이 남북한 단일선수단을 구성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가맹협회의 기득권인 한국탁구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가를 즉시 보장한 연후에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을 위한 제안 절차문제 토의에 임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종료후 정주년 대한탁구협회 대표단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회의내용을 설명했다.

『대한탁구협회는 지금까지의 세 차례 회의를 통해서 본 북측의 태도로 보아 북한탁구협회가 한국선수단의 제35회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의 기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회담제도가 단일선수단 구성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선수권의 대회 참가를 막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대한탁구협회는 남북한간의 단일탁구선수단 구성문제는 남북한 체육교류의 테두리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대한탁구협회는 북한탁구협회가 한국선수단의 대회참가의 기득권을 선보장한다면, 우리는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을 위한 실질적 토의에 곧 들어 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를 불과 2개월 앞두고 북한탁구협회가 남북한 단일탁구선수단구성 제안을 갑자기 내놓은 저의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대한탁구협회는 북한탁구협회가 한국선수단의 대회 출전을 선보장 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이날 회의는 대한탁구협회측이 남북한 탁구협회제도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남북체육교류를 실현하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반면 북측은 남북한 체육교류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취하면서 평양대회를 위한 단일선수단 구성만을 주장하는 비현실성을 들어내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라. 「3. 12」 회의

1979년 3월 12일 제4차 남북한 탁구협회회의가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3시간 29분동안 탁구단일팀 구성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끝이 남으로써 남북한 탁구협회간의 회의는 막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탁구협회측은 지난 2월 27일 첫 회의에서 평양대회의 대진표 추첨 일정이 3월 14일과 3월 15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점과 또한 단일선수단의 선수선발 및 훈련을 비롯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문제들을 고려하여 단일선수단 구성문제는 늦어도 3월 12일까지 합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국제탁구연맹 회원국인 한국선수단의 대회 참가 기득권에 대한 선보장 요구를 북측이 거부함으로써 단일선수단 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চেয়চল ডাহনতাকুখেলী হীজাং বুকহনচুই হানকুশনুদান ডাহীচুলন গীতুকুন মূজুচন বজাংচী ঞন শং

황에서 『단일선수단 구성을 위한 쌍방간의 협의는 더 이상 불필요하며, 남북한 체육인들의 대화를 새로운 차원에서 출발시키는 것이 체육인들과 온 국민들의 소망에 부합된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대한탁구협회의 입장을 천명했다.

『첫째,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남북한 탁구협회가 남북단일선수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해온 것은 이미 국제탁구연맹에 가입된 두개의 단체가 남과 북에 다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며, 금번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한국선수단이 평양대회에 참가하는 기득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북한탁구협회는 한국탁구선수단에게 「비자」 발급 등 대회조직위원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함으로써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가가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국탁구선수단의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는 남북체육교류의 출발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에 남북한 단일선수단 출전과 똑같은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남북한 체육인들은 한국탁구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가를 시발점으로 하여 남북한의 전반적인 체육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대화를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이어서 대한탁구협회 대표단은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남북한 탁구협회회의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 이에 대한 북한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 <대한탁구협회 제안>

1. 남북한 탁구협회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마치고 금년 6월과 7월중에 서울과 평양에서, 한차례씩 남북한 친선탁구경기대회를 개최한다.
2. 남북한 탁구협회는 동 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문제를 서로 협의하기 위하여 금년 5월중에 판문점에서 쌍방 대표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북한측은 2차회의시 그들이 제의한 「합의서」 초안에 대한탁구협회가 국제탁구연맹회원으로서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 하겠으나 이 기득권을 단일팀 구성에 배치되는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며, 이러한 기득권 인정은 쌍방이 단일팀 구성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하며 회의결렬책임을 대한탁구협회측에 전가시키기 위해 북한측이 종래주장하던 무조건 「선 원칙적 합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위장제안을 내놓고 회의를 지연시키려 했다.

이에대해 대한탁구협회측은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가 어디까지나 민족적 숙원인 전반적인 남북한 체육교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북한측이 이 회의를 평양대회의 행사에만 한정시키는 일방적인 자세는 그릇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선수단이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득권을 먼저 보장한다는 공동성명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으나 북한측은 끝내 이를 거부함으로써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남북한탁구협회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북한탁구협회는 한국탁구선수단이 1979년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기득권을 인정하고 동 대회의 참가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보장하는 성명서를 1979년 3월 ○일에 발표한다.

1979년 3월 일

대한탁구협회 회장 채영철

북한탁구협회 회장 김득준

한편 채영철 대한탁구협회 회장은 회의가 끝난후 대한탁구협회의 정당한 제의를 북한측이 거부하는 것은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참가를 거부하기 위한 부당한 저의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남북한체육교류의 실현을 북한측에 촉구했다.

『1. 남북한탁구협회 회의는 4차례 회의를 통하여 1979년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남북한 단일탁구선수단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나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2. 대한탁구협회는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아래와 같이 천명하였다.

첫째, 대한탁구협회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 탁구협회가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개최를 불과 2개월을 앞두고 남북한 단일탁구선수단 구성제안을 갑자기 내놓은 저의가 석연치 않음을 상기시키고 북한탁구협회측의 진의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대한탁구협회는 대한탁구협회가 세계탁구연맹회원국으로서 가지는 기득권에 의거하여 한국선수단이 제35회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북한탁구협회가 「비자」 발급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하는 성명을 발표하라고 제의하였다.

셋째,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대진표 추첨 일정이 3월 14일과 3월 15일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또한 남북한 단일탁구선수단의 선수 선발 및 훈련을 비롯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될 제반문제를 고려하여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문제는 늦어도 3월 12일까지 합의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네째, 대한탁구협회는 북한탁구협회가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참가를 보장하는 성명을 발표하면 우리는 남북한 단일탁구선수단구성을 위한 실질적 토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다섯째, 대한탁구협회는 남북한간의 단일 탁구선수단 구성문제는 남북한 체육교류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북의 체육인들이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남북을

양래할 수 있고 각종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체육경기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국제경기에 참가할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이 자연스럽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탁구협회는 우리의 정당한 제안과 요구를 거부하였다. 4차례에 걸쳐 보여준 북한탁구협회의 태도는 북한탁구협회가 제35회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개최를 불과 2개월 앞두고 남북한 단일탁구선수단구성을 제의한 것이 당초부터 한국선수단의 세계대회 참가를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다.

대한탁구협회는 북한탁구협회의 이와 같은 부당한 입장 때문에 남북한단일탁구선수단 구성에 관한 실질적 토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남북한 체육교류를 위한 현실적 제안을 제의하였다.

#### <대한탁구협회 제안>

- (1) 남북한 탁구협회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마치고 금년 6월과 7월중에 서울과 평양에서 한차례씩 남북한 친선 탁구경기대회를 개최한다.
- (2) 남북한 탁구협회는 동 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문제를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금년 5월중에 판문점에서 쌍방 대표회의를 개최한다.

대한탁구협회는 남북한 탁구협회 쌍방이 남북한 단일 탁구선수단구성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탁구협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북한탁구협회가 한국선수단이 제35회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기득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대한탁구협회는 북한탁구협회가 체육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한국선수단이 제35회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장성명을 발표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대한탁구협회는 북한탁구협회가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남북한간의 체육교류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 친선탁구경기에 관한 우리의 새롭고 현실적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한다.

대한탁구협회는 한국선수단의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탁구연맹측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그 동안의 탁구단일팀 구성문제와 관련한 4차례의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가 아무런 결론 없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3월 24일 이른바 북한체육지도위원회와 탁구협회 공동명의로 또다시 성명을 발표하고 3월 2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회의를 속개하여 탁구단일팀 구성문제를 재협의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측은 동 성명에서 4월 25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세계탁구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측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며 한국측이 종래의 「단독팀 참가주장을 철회, 그들의 이같은 회담재개 제의에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끝까지 한국선수단의 참가저지를 위한 그들의 저의를 은폐하려 했다.

이에 대하여 채영철 대한탁구협회 회장은 3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의 기만적 처사를 논박하면서 다시한번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참가기득권을 먼저 보장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했다. 동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탁구협회는 앞으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을 위한 쌍방 탁구협회간의 회담을 다시 갖자고 주장한 3월 24일자 북한탁구협회 명의의 성명이 평양방송으로 보도된 사실에 유의하면서 이에 대한 본협회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이 문제에 대한 본협회의 기본입장은 이미 그동안의 네차례의 판문점회의를 통해 명백히 한 바 있다.

즉, 우리는 만약 앞으로 대회까지 남은 시일 안에 남북한 단일선수단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한국탁구선수단이 국제탁구연맹의 회원단체로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의하여 개별선수단으로 금번의 평양대회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 선수단이 입북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성명을 북한탁구협회가 발표해야 하며, 북한탁구협회가 이를 이행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들과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을 협의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본협회의 기본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북한탁구협회측이 대한탁구협회가 누차 요구한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가기득권 보장성명의 공개발표를 오늘까지 거부하면서 또다시 단일선수단 구성을 위한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를 재개하자고 한 것은 한국탁구선수단의 평양대회참가를 끝내 저지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북한탁구협회는 한국탁구선수단의 대회참가저지의 책임을 모면하고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연극을 더 이상 그만두고 「비자」 발급 등 대회조직위원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 함으로써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가가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탁구협회가 진심으로 남북단일탁구선수단의 구성을 원한다면, 그리고 남북단일탁구선수단 구성 제의가 한국탁구선수단의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를 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위장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북한탁구협회는 한국탁구선수단의 기득권인 평양대회참가를 보장하는 성명을 지체없이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탁구협회 김득준은 3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4월 3일 남북한탁구협회 회의를 다시 갖자고 제의했으나 4월 2일 대한탁구협회 채영철 회장은 이같은 『북한측의 제의는 그들의 부당

한 처사에 대해서 국제탁구연맹 회원국간에 일고 있는 비난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저의를 위장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로써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참가를 저지하려던 북한측의 단일구성논의는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유린하고 정치선전 목적에 이용했다는 오점만을 남긴채 종결되었다.

### 3. 북한측 「단일팀」 구성주장의 허구성

1979년 2월 20일 북한탁구협회의 제의로 비롯된 남북한 탁구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한 탁구협회간의 회의는 3월 12일까지 네차례 계속되었으나 북한측의 한국선수단 참가 저지 술책으로 아무런 결론없이 끝이 나고 말았다.

이와같은 북한측의 남북한 탁구단일팀 구성제의를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단일팀 구성문제는 쌍방간에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실천에 이르는 과정에서 쉽게 합의할 수 없는 방대한 절차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것이다.

즉 ① 선수단 인원 및 선발문제 ② 선수의 공동훈련문제 ③ 숙식 및 신변안전보장문제 ④ 선수단 호칭문제 ⑤ 국기 및 국가문제 ⑥ 지원인원 구성문제 ⑦ 보도기자 인원, 활동, 안전보장문제 ⑧ 관문점 통과문제 ⑨ 평양 체재기간 문제 ⑩ 평양 체재기간중 개인활동문제 등 관련된 절차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진표 확정시한인 3월 14일을 불과 3주 앞두고 단일팀 구성 운운한 것은 북한측이 단일팀 구성의 절차협약에 필요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단축시켜 사실상 문제해결에 난관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국제탁구연맹(ITTF)은 1개지역협회·1개선수단 참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일팀 구성문제는 ITTF의 사전 유권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나 북한측은 이를 반대하고 무조건 단일팀 구성을 합의해 놓고 보자는 식의 억지 주장만 반복했던 것이다.

[※ 국제탁구연맹규약

규약 11 : 지역사회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영토만의 대표

규약 12 : 2개 이상의 협회가 단일회원자격을 신청할 경우는 총회에서 검토승인]

셋째, 북한측은 탁구단일팀 구성이 통일문제 해결을 쉽게 하는 첫걸음인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남북간의 전반적인 체육교류 및 협력 문제를 반대하고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가보장을 거부한 채 동 문제를 통일문제와 직결시켜 북한측 주장에 한국측이 동조하지 않는 것은 통일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시켜 선전에 급급했던 것이다.

넷째, 한국측이 과거 수 차례 걸쳐 제의한 남북간의 체육교류에 대해 북한측이 침묵으로 일관해 옴으로써 남북간에 어떠한 체육교류도 가져보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개최된 1973년 8월 세계 사격선수권대회, 1979년 4월의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참가초청에 불응했던 북한측이 유독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단일팀 구성을 들고 나온 것은 처음부터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의도가 정치적 선전목적에 있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였다.

더구나 탁구단일팀 구성제외와 대조적으로 북한측은 대회개최 시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다른 국제경기 종목(청소년 축구와 세계 대학생 「스포츠」 경기)의 출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일  
절 거론함이 없이 오히려 단독출전을 신청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1970년 3월 13일~18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휘규어」 스케이팅 선  
수권대회에 남북한이 각각 출전

1979년 8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2회 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이 각각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어 단일팀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참가하기 위해 대진  
표 추첨에 단독으로 응한 바 있음.

1979년 9월 2일~13일 멕시코 개최 「1979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남북한이 개별팀으로  
신청중임.]

다섯째,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회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탁구단일  
팀 구성문제를 제기하여 한국선수단의 대회참가를 저지함으로써 남북간에 순수한 체육문제를 정  
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새로운 또 하나의 쟁점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이와같은 북한측의 탁구단일팀 구성제외에 감추어진 그들의 속셈은 한국선수단에 대한 입북  
「비자」의 발급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드러나고 말았다.

한국선수단은 판문점에서의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무위  
로 끝나게 되자 4월 17일 당초 예정했던 대로 다른 회원국 선수들과 함께 평양행 「비자」를 발  
급받아 대회에 참가하고자 「제네바」로 향할하였다.

그리고 평양행 전세계가 떠나는 최종순간까지 평양대회 참가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  
하였으나 북한측은 계속 단일팀 구성만을 운운하며 끝내 한국선수단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단일  
팀 구성을 제의한 그들의 저의가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가를 저지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만천  
하에 스스로 사실로써 나타내고 말았다.

## 제4부 남북대화 주요일지

### 남북대화 주요일지(1979. 1~5)

1979. 1.19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남북한 당국이 어떤 시기, 어떤 장소, 어떤 수준에서든 전체 조건 없이 만나 모든 분야의 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을 제의
1979. 1.23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 성명:  
○ 2월 1일 10:00기해 「7.4남북공동성명」 준수를 남북쌍방이 공식표명  
○ 3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 「전민족대회」를 9월초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  
○ 6월초 평양에서 실무급 예비회담 개최
1979. 1.25 북한, 박성철: 「조국전선」 성명 지지담화 발표
1979. 1.26 정부대변인(문공부장관)성명: 책임있는 남북한 당국간 대화촉구
1979. 1.27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 성명: 4월초 「전민족대회」 실무급 예비회담 개최
1979. 1.29 문공부 대변인 성명: 북한당국의 책임있는 회담을 거듭 촉구
1979. 1.31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성명:  
○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의 조속 재개  
○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즉각 개통
1979. 1.31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 1. 23 「조국전선」 성명 지지  
○ 1979. 2. 1 10:00기해 북한전역에서 비방증상행위 중지
1979. 2. 5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 성명: 남북조절위원회 대신, 「민족통일준비위원회」 발족제의
1979. 2. 8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김동조위원을 함병춘위원으로 교체발표
1979. 2.12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 보도:  
○ 「민족통일준비위」 결성을 위한 북한측 연락대표 임명  
○ 동 대표를 2.20 12:00에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 파견
1979. 2.12 정부대변인 기자회견: 북한의 「조국전선」을 책임있는 당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당국간 대화」를 요구하는 입장은 불변임을 강조

1979. 2.12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변인 성명: 지연되어 온 남북조절위 제4차 본회의의 개최 협의를 위해 2. 17 10:00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쌍방 부위원장 접촉을 제의
1979. 2.13 북한, 「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 대변인 성명:  
 ○ 「민족통일준비위」 협의를 위해 2.17 10:00 판문점에 「조국전선」 대표 파견  
 ○ 남측에서 「어떤명의」의 대표가 나오던 「민통」 연락대표로 간주
1979. 2.15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변인 성명: 2.17판문점에 대표파견
1979. 2.17 남북간 변칙대화 (제1차)
1979. 2.20 북한 체육지도위 위원장 김유순, 탁구협회 회장 김득준 명의서한 : 남북한 탁구단일 「팀」 구성 문제 제의
1979. 2.24 대한체육회, 대한탁구협회 대북 방송회답문:  
 ○ 남북조절위 서울측 위임에 따라 2. 27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 대표 파견
1979. 2.27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제1차)
1979. 2.28 북한, 인민무력부 대변인 성명 : 1. 23 「조국전선」 성명중 3. 1 0시를 기한 적대행위중지 항목을 3. 1 시작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보류한다고 주장
1979. 3. 5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제2차)
1979. 3. 7 남북간 변칙대화(제2차)
1979. 3. 9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제3차)
1979. 3.12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제4차)
1979. 3.14 남북간 변칙대화(제3차)
1979. 3.24 북한, 체육지도위 탁구협회 성명 : 제5차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를 3. 27 가질 것을 제의
1979. 3.26 북한, 탁구협회 대변인 성명 : 예정대로 3. 27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로 대표를 파견할 것임.
1979. 3.26 정부대변인 성명:  
 ○ 3.28 10:00 동훈 통일원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실무대표를 판문점에 파견함.



- 남북한 실무대표접촉을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진행함.
- 1979. 3.27 북한,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 연락대표단」 성명 : 제4차 연락대표접촉을 4. 2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
- 1979. 3.27 북한, 탁구협회대표 판문점 출현 : 4. 3 10:00 판문점 회의실에서 쌍방탁구협회 대표접촉 제의
- 1979. 3.28 「대한민국 당국 실무대표단」 성명 : (판문점 : 실무대표접촉 유산)
  - 북한측이 더이상 지체함이 없이 당국간 대화의 자리로 나오기를 촉구함.
  - 또한 남북조절위 운영정상화에 의한 남북대화재개의 문호 역시 항상 열려 있음.
- 1979. 4. 1 북한,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 연락대표단」 성명 : 남측은 회담참가여부를 방송으로 통지하여 주기를 기대함.
- 1979. 4. 2 「대한민국 당국 실무대표단」 수석대표 기자회견 : 평양당국이 임명하는 정당·사회단체대표와 만날 용의 표명
- 1979. 4. 2 북한,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 연락대표단」 성명 : 쌍방 대표 명칭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4. 10 10:00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쌍방 연락대표접촉을 제의
- 1979. 4. 2 북한, 탁구협회 대변인 성명: 회담재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개별적 접촉을 희망, 이를 위해 4. 3 10:00 대표 1명, 수원1명을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 파견할 것임.
- 1979. 4. 3 대한탁구협회 회장 기자회견 : 단일 「팀」 문제와 한국선수단의 세계대회 참가문제는 개별의 것으로 북한측은 한국선수단의 대회참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할 뿐임.
- 1979. 4. 3 북한, 탁구협회 대변인 성명: 「통일팀」 구성을 위한 시간이 남아 있는 한 회담을 재개해야 함.
- 1979. 4. 7 「대한민국 당국 실무대표단」 대변인 성명:
  - 책임있는 북한당국이 임명하는 대표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자 함.
  - 남북당국간 대화와 남북조절위원회 재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음.
- 1979. 4.10 북한, 「정당·사회단체 및 당국 연락대표단」 성명 : 연락대표 접촉의 진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음. 대화가 계속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는 남측의 태도에 달려 있음.
- 1979. 5. 1 한적, 지연태 수석대표가 소상영씨로 교체되었음을 발표.